

연구보고서

2005-11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 이념의 과잉과 소통의 빈곤 -

유 범 상

책머리에 부쳐

본 연구원은 ‘노사관계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재 박사의 책임하에 ‘노동운동이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단위노조의 현장조직 및 총연합조직의 이념과 외국의 노동운동이념(독일) 등 세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본 연구서와 더불어 『독일노동운동의 자기정체성과 현실적 딜레마』(이상호(2005), 한국노동연구원 발간), 『노동운동이념과 조직: 자동차 3사 현장조직을 중심으로』(진숙경, 한국노동연구원 근간) 등의 연구서가 발간되었거나 발간될 예정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민주화 이후 폭발적 성장과 동시에 위기를 경험하는 기이한 구조에 처해 있다.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조직화와 민주노동당으로 상징되는 정치세력화가 성장의 증표였다면, 1992년 위기논쟁 이후 뇌물수수와 대기업 중심의 귀족노조라는 사회적 비판과 고립화 현상은 위기의 징후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노동운동의 위기를 취약한 이념에서 찾고자 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들 중의 하나로서 한국 노동운동이념을 당시의 정치적 지형과 각 정파들 간의 논쟁에 초점을 맞추어 통시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현재 이념지형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그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동운동이념은 그동안 상이한 이념이 경합하는 가운데서 상호 진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념들로 분화했으며 결국은 현재 혼란과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이념사를 통해 볼 때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다양한 이념이 경합했다는 점에서 이념의 과잉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들이 상호 논쟁하지 못함으로써 이념들 간의 소통의 빈곤, 각 이념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이념과 정책 간의 소통의 빈곤, 그리고 각 이념들이 자신의 조합원들에게 체화되거나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념과 대중의 소통의 빈곤 등의 빈곤증에 빠져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보고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소통의 풍요를 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논쟁을 통해 차이를 확인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념을 확립하는 정체성의 정치를 주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다른 연구서들과 더불어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을 논의하는 데 풍부한 자료와 통찰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우선 해방 이후 지금까지 노동운동이념사를 통시적으로 정리했다는 점과 질적 방법에 의한 인터뷰에 의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생생한 이념논쟁과 위기의 현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이념빈곤의 기원과 대안을 나름대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정파들뿐만 아니라 이념빈곤만큼 취약한 학술적 영역에서 노동운동이념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 주신 관계자들과 애정어린 비판을 해준 본원 연구위원들과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함을 드린다. 특히 방대한 양의 원고를 수차례 꼼꼼히 읽고 논평해 준 박찬영 전문위원과 출판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리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실수나 오류도 저자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2005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최영기

목 차

책머리에 부처	
요 약	i
제1장 논점과 접근법	1
제1절 논 점	1
1. 이념사: 이념의 과잉과 소통의 빈곤	1
2. 이념: 물질성과 자기 현시	12
3. 정치: 정체성의 정치와 소통의 미학	15
제2절 접근법	22
1. 범 주	22
2. 방 법	24
제3절 주 제	30
제2장 생존게임을 통한 이념지형 형성(1945~53년)	35
제1절 자유민주주의의 비극적 탄생: 생존게임과 레드콤플렉스	35
제2절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44
1. 사회주의와의 만남	44
2. 내용과 정의	52
3. 조직과 실천	64
제3절 반공적 노동조합주의	76
1. 반공주의와 만남	76

2. 내용과 정의	85
3. 조직과 실천	88
제4절 승자독식과 기형적인 이념지형의 형성	92
제3장 이익과 인간(1970년대)	95
제1절 한국적 민주주의: 반공주의와 근대화	95
제2절 민주노조와 인간적 노동조합주의	102
1. 기독교와 휴머니즘과의 만남	102
2. 내용과 정의	110
3. 조직과 실천	120
제3절 협조적 노동조합주의	124
1. 근대화 담론과 한국노총의 만남	124
2. 내용과 정의	133
3. 조직과 실천	138
제4절 독주와 저항	141
제4장 변혁과 개혁(1980년대)	145
제1절 광주의 발견: 계급과 사회주의	145
제2절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157
1. 마르크스주의와의 만남	157
2. 정의와 내용	177
3. 논쟁과 위기	182
4. 조직과 실천	233
제3절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262
1. 자유민주주의와의 만남	262
2. 내용과 정의	266

3. 조직과 실천	272
제4절 경합과 이념지형의 변형	279
제5장 도전과 모색(1990년대 이후)	284
제1절 이념의 혼란, 혼동, 그리고 분화	284
제2절 민주노총의 도전과 모색	294
1. 조직과 실천: 이견그룹의 등장과 정치적 성장	294
2. 논쟁과 분화: 사회주의와 사민주주의	348
3. 분화와 경쟁: 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	466
제3절 한국노총의 도전과 모색	469
1. 새로운 실천과 노동운동노선의 점검	470
2. 정치세력화의 도전과 좌절	482
3. 분화와 경쟁: 자유주의 혹은 사민주의?	507
제4절 이념분화와 정체성의 딜레마	510
제6장 평가와 전망	515
제1절 경합, 진화, 분화, 그리고 딜레마	515
제2절 이념빈곤의 기원	523
제3절 소통의 풍요와 정체성의 정치를 향하여	532
참고문헌	540

표 목 차

<표 1-1> 서술의 범주	23
<표 1-2> 면접 대상자	27
<표 1-3> 시기 구분과 노동조합주의	32
<표 2-1> 전평의 전략과 전술 변화	68
<표 4-1> 의식화 프로그램	161
<표 4-2> 학생운동의 준비론과 투쟁론	163
<표 4-3> 변혁운동노선의 구조와 내용	173
<표 4-4> 1980년대 주요 논쟁	183
<표 4-5> 소그룹운동론과 지역노동운동론의 비교	185
<표 4-6> 조합주의적 노동운동과 정치적 노동운동 비교	187
<표 4-7> 민주연합당론과 독자정당론 비교	207
<표 4-8> 노동운동위기론에 대한 쟁점	232
<표 5-1> 민주노총 임원단	301
<표 5-2> 민주노동당의 선거 참여와 결과	334
<표 5-3> 민주노조진영의 내부 논쟁	349
<표 5-4> 사회적 조합주의 제기배경과 조직 및 교섭 방향	389
<표 5-5> 좌파블록 비교	415
<표 5-6> 국민파와 좌파블록 비교	421
<표 6-1> 노동운동이념 요약	516

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과도할 정도로 많은 이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들 간, 이념과 정책들 간, 이념과 조합원들 간의 소통의 빈곤으로 인해 이념의 빈곤증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노동운동이념사를 통해 이념빈곤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념이란 (정치)세계에 대한 체계화된 태도, 전망, 비전으로서 특정주체의 자신에 대한 이해방식이자 세계에 대한 해석과 실천이다. 이런 점에서 이념은 각 세력의 정치세계에 대한 세계관 및 실천지침일 뿐만 아니라 상이한 세력들 간의 가치분배 및 정치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들의 조직과 정책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노동운동이념을 정치 및 이데올로기 지형, 이데올로기와 노동운동이념의 관계, 노동운동의 조직과 실천이라는 범주에서 서술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가 주로 사용한 자료는 각 행위자들에 의한 일차 텍스트와 이차 텍스트인 기존의 관련 연구물뿐만 아니라, 질적 방법에 의한 관계자 인터뷰 등이다. 특히 인터뷰는 각 시대와 정파를 대변하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case selection)과 이상적·전형적 지도자 사례선택(ideal-typical-bellwether-case selection)의 방법을 혼합하여 선정되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정치주체, 정치상황, 그리고 국가수준의 정치경제 및 이데올로기 등에 따른 노동조합이념 유형의 변화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해방 직후 3년 동안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와 반공적 노동조합주의가 경합했다. 이 당시 이데올로기

지형은 사회주의와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각축장이었으며, 양 이데올로기의 생존게임 결과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러한 승자독식 방식의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일방적인 승리는 레드콤플렉스에 기반한 기형적인 이데올로기 지형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기형적인 이데올로기 지형은 노동조합운동이념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전평 주도의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와 대한노총 주도의 반공적 노동조합주의가 경합했고 그 결과 대한노총이 일방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승자독식의 원칙에 의해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세력이 무대에서 완전히 추방되었다. 결국 노동운동이념도 기형적인 이념지형을 자신의 특징으로 했다. 따라서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지형의 변형과 발전은 기형적인 이념지형의 변형, 즉 민주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노동운동이념 요약

시기	행위주체	노동조합 이념유형	이데올로기	이념지형의 특징
1 해방 8년 (1945~ 53년)	전평	혁명적 노조주의	사회주의	기형적인 이념지형의 형성
	대한노총	반공적 노조주의	자유민주주의	
2 1970년대	민주노조	인간적 노조주의	기독교 휴머니즘	한국노총의 독주와 이에 대한 저항
	한국노총	협조적 노조주의	자유민주주의	
3 1980년대	전노협	변혁적 노조주의	사회주의	양대노총의 경합과 이 념지형의 변형
	한국노총	실리적 노조주의	자유민주주의	
4 1990년대 이후	민주노총	변혁적 노조주의	사회주의	이념의 분화와 정체 성의 혼동
	한국노총	사회개혁적 노조주의 실리적 노조주의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1970년대 근대화 시기에는 인간적 노동조합주의와 협조적 노동조합주의가 대립했다. 이 당시 국가수준의 이데올로기는 한국적 민주주의로 보다 세련되게 정립되었는데, 이것은 반공주의에다가 근대화, 즉 경제성장이데올로기가 첨가된 독재정권의 개발모델로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비교하여 독특한 내용을 담보하고 있었다.

노동운동진영은 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받았는데,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는 어용적 노동조합을 이끌면서 국가 코포라티즘적 성격의 노동체제 형성과 유지에 공헌했다. 즉 이들은 권위주의적 국가에 협조하고 종속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고자 했다. 한편 민주노동운동은 기독교 휴머니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를 발전시켰다. 민주노동운동은 정부의 병영적 노동통제 속에 신음하는 일반노동자를 외면한 어용적 노조에 대항하여 작업장에서 인간을 발견할 것을 외쳤는데, 이것은 기독교 휴머니즘과 이들 세력에 영향을 받은 바가 컸다. 민주노동운동은 기형적인 이념지형에 새로운 이데올로기, 즉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를 가지고 밑으로부터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노동운동이념의 역사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노동자 중심의 소수의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자기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인간적 노조주의를 가지고 공고화된 기존의 이념지형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이념지형은 변형의 계기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광주민주항쟁에서의 계급과 사회주의의 발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로 외화된 전노협이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광주’와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흡수하면서 민주노동운동의 지평을 보다 세련화·과학화시켰다. 한편, 한국노총은 반공적·협조적 노동조합주의에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로 자기변신을 모색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민주노조의 조직화와 세력화에 대한 강제된 자기진화에 따른 것이었다.

1990년대를 경유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의 조직과 헤게모니 경쟁은 강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의 양대 진영은 혼란과 혼동, 그리고 분화와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다. 혼란은 소련과 동구 등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었다. 자신들의 이념에 대한 진위와 실효성이 의심되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시작되고, 혼란은 곧바로 노동조합운동을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착각의 상태, 즉 혼동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는 이런 혼란과 혼동을 사회주의와 사민주의로 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노동운동이념은 대체적으로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그리고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로 정착되고 경합하고 있는 중이다.

본 보고서는 이상의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의 역사를 경합, 진화, 분화 그리고 딜레마라는 네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전체적으로 친정부적이고 실리적 경향을 갖는 노동조합운동인 한국노총과 정부에 저항적이고 변혁적 경향을 갖는 노동조합운동인 민주노총 흐름 간의 경합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각각의 내부에서 상이한 흐름들이 경합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합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념은 진화해 왔다. 조악한 형태의 반공적·협조적 노동조합주의가 실리적·경제적 노동조합주의로 진화해 왔다면,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변혁이론과 만나면서 전투적 또는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또는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로 진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특히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그리고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로 분화되어 왔다.

현재 노동조합주의 각각은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입장이 현실의 상황에서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의 경우 점차 조합원들과 사회로부터 고립화되는 경향이 있다면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흐름의 경우 불균형적인 권력관계로 인해 자신들의 실천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한 한국노총의 경우 조직에 대한 불신과 이탈, 그리고 정당정치에 대한 실패와 혼란으로 비전과 이념 정립에 있어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각 이념이 자신을 명확히 하면 할수록 현실의 대지 위에서 생존이 불명확해지는 상황, 그렇다고 자신을 실용주의나 대중들의 요구 뒤로 숨기면 노동운동 정체성

이 의심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이데올로기와 이념은, 좋은 지도를 만들지도 못했고 지도에 따라 세상을 그리려는 시도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결과 이념은 정치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정치세계의 지평을 넓히는 데 실패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양적 측면에서 이념과잉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사회의 이념빈곤은 어디로부터 기원하는가?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빈곤은 구조적 수준의 원인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의 활동조건과 조직 방식, 그리고 토론문화와 기록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서 기원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본 논문은 내부요인인 이념집단간 소통, 이념과 정책의 소통, 그리고 이념과 대중의 소통 등 소통의 빈곤현상에 주목했다. 이것은 소통의 빈곤이 한국노동운동 이념 빈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대안을 모색하는 데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통의 결핍현상은 이념을 동의와 설득의 기제, 실천의 구체적 지침서, 조직과 공동체의 비전의 제시 등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과도한 분과활동을 양산하고 실천을 제약하는 천덕꾸러기로 취급받게 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빈곤의 원인은 소통의 빈곤에 있다. 소통의 빈곤은 정체성의 정치 through 극복될 수 있는데, 정체성의 정치는 우선 인맥, 정서, 지역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념의 정체성을 문제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타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과 자신의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보다 풍부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인정은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체성의 정치는 타자와의 공적 경쟁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다른 이념과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념은 정책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 즉 이념이 상대를 낙인찍고 검열하는 과정에서 자기 종파를 과시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경유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 즉 정책에

녹아들어간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차이를 통해 이념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정치는 현장의 토론에 기반해서 지도부나 분파의 정체성이 아니라 조직과 정파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체성의 정치가 현장민주주의 또는 내부민주주의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체화된 이념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정체성의 정치는 빈곤한 한국노동운동이념에 대해 첫째, 이념 일반을 버릴 것이 아니라 ‘무기의 이념’ 또는 ‘빈곤의 이념’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즉 정체성의 정치는 상대방을 낙인찍고 검열하는 무기로 사용해 온 그런 이념과 다른 이념과 논쟁·경쟁하지 않고 정책과 소통하지 않는, 그리고 더욱이 특정 분파와 그 활동가들만의 정체성으로 기능해 온 빈곤의 이념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즉 정체성의 정치는 소통에 자기 기반을 두고 정립된 이념, 다시 말해 현실의 이해지평과 이 지평을 관찰하는 정책과 실천이 담긴 그리고 이것이 대중적 토론과 동의를 통해 조직의 정체성으로 기능하는 그런 이념을 각 정파와 노동운동이 정치세계에 불러낼 것을 요구한다. 둘째, 정체성의 정치는 이념 논쟁을 소모적인 것으로 보고 실용주의나 냉소주의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이제 소통적 태도에 기반한 각자의 이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념논쟁을 본격적으로 할 것을 권유한다. 즉 각 정파의 현실세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지도가 다른 조직의 그것들과 논쟁하고 경쟁할 것을 주문한다. 다시 말해 검증받고 수정함으로써 정치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실천의 무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제1장

논점과 접근법

제1절 논 점

1. 이념사: 이념의 과잉과 소통의 빈곤

흔히 한국정치의 문제점은 정당들이 이념과 정책을 통해 정치세계에 개입하지 않고 지연과 학연 및 혈연에 기반해서 공동체를 운영하려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은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본 논문은 한국의 노동운동도 이 비판에 그렇게 당당한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본 글은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이 다양한 이념이 과도할 정도로 혼재했던 것에서 보듯이 과잉에도 불구하고 이념들 간, 이념과 정책들 간, 이념과 조합원들 간의 소통의 빈곤으로 인해 현실세계를 운영하는 철학이자 실천적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전제하에 본 글은 노동운동이념 빈곤¹⁾, 즉 그 취약성의 기원과 이로 인해

1) '노동운동이념 빈곤(The poverty of ideology in labour movement)'이란 개념은 노동운동, 이념, 빈곤이라는 세 단어의 조합이다. 우선, 노동운동이란 정치경제학의 세 가지 범주, 즉 노동, 자본, 국가 중 한 주체인 '노동'이 자신의 의지와 이념을 실현하려는 일련의 '실천적 행위'를 의미한다. 즉 노동운동은 특정한 주체(또는 조직)와 구체적 실천에 연관된 개념이다. 한편, 이념은 특정 주체(또는 조직)의 세계에

나타난 한국정치와 노동정치의 풍경을 노동운동이념의 역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이처럼 본 논문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이념빈곤증을 앓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노동운동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한다.²⁾ 그런데 한국노동운동이념이 이념의 과소증과 저발전에 처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념의 ‘과잉’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한국노동운동이념은 다양한 이념의 등장으로 인한 매우 풍부한 외양과 이념의 일반적인 발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본 논문이 주장하는 이념빈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특정이념이 다른 이념과 논쟁과 경쟁을 통해 통합되지 못하고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구체적인 정책을 담지 못해 정치세계에 대한 현실적 지침이 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자신의 조합원들에게 지적·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한 마디로 한국의 노동

대한 일련의 태도와 철학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를 관찰하는 일련의 실천의지를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빈곤이란 부족, 취약, 결여 등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것의 부족상태, 결여상태, 취약한 처지를 일컫는 말로서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결여의 사이에 위치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동운동의 이념빈곤’이란 노동(조직)이 또는 그 조직의 실천이 정합적·논리적·체계적인 자신의 신념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 또는 이러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 논문은 특정 노동운동의 이념은 조직과 실천의 연관성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조직, 이념, 실천의 세 가지 차원에서 한국노동운동의 이념빈곤을 논의하고자 한다.

- 2) 위기의 표면적인 현상은 노동운동이 집단적 이기주의자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고 고립되어가는 데 있다: “이익집단으로 머무르는 건 답답하다. 현재는 집단이기주의로서 사회적으로 노조가 정치적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복지 등의 정책에는 산별에선 관심이 없고, 노동시간 단축에만 관심이 있다”(인터뷰 J, 2003. 7. 23).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다. 개별적으로 자기회사 문제만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 하지 연대해서 그럴듯하게 하려 하지만 잘 안 된다. 개별적 해결방식을 대개 취하고 있다. 직종범위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기에 틈새를 찾아 해결하려고 한다. 개별적 방식, 대개 비공식적이고 편법적으로 영역이 좁아져가는 해결방식이 있기 때문에 연대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인터뷰 J, 2003. 7. 23). 이상의 언급에서 보듯이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은 자기 정체성(예를 들면 계급적 노동운동인지 일개 이익집단인지)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노동운동이 모호한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자기정립을 요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운동이념이 소통의 빈곤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소통의 빈곤이란, 이념들간의 소통, 이념과 정책 간의 소통, 이념과 조합원과의 소통에 결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소통의 빈곤’이 한국노동운동이념의 취약성을 만들어 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치와 노동운동은 짧은 시간성에도 불구하고 이념의 과잉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역동적인 자기발전을 경험했다. 즉 본 연구는 연구과정에서 한국노동운동이념의 다양성과 때론 논의의 깊이에 감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풍부하게 존재했다. 멀게는 1920년대 초부터 대략 1980년 사이, 가깝게는 1980년대 초 이후 20여년 사이의 짧은 시간에 한국의 정치와 노동운동은 다양한 이론을 접할 수 있는 ‘후발자의 이점’과 복합적 모순³⁾을 내장한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이념과 논쟁을 압축적으로 제시해 왔다.

실제 1985년 후반기부터 1987년 7, 8월 대투쟁 이전까지 정치노선을 둘러싼 논쟁은 과도할 정도로 다양한 입장을 양산하면서 진행된 감이 적지 않다. 팜플렛의 홍수 시대라고 할 만큼 수많은 비밀 문건들이 회람되었고 그 대부분은 바로 이 정치노선과 변혁론 일반, 그리고 조직노선 논쟁에 집중되어 있었다(조희연, 1989: 256).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와 노동운동이념은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지적·실천적 세례를 받았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한국적’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등), 사회주의(‘스탈린식’ 사회주의, ‘북한식’ 사회주의인 주체사상, 트로츠키주의 등),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 생디칼리즘 등 가히 이념의 전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념이 생겨났다.

현재 이러한 이념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3) “그동안 노동운동판에서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빠른 속도로 다양한 이념들이 들어왔다가 소멸하는 등 급변을 하게 되었다. 레닌이 들어왔다가 주체사상까지...” (인터뷰 D, 2004. 2. 25). 이러한 풍성한 이념은 한국사회가 제국주의, 계급, 민족, 군부독재상황, 재벌체제 등의 다양한 모순에 답해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유석춘 등은 이것을 “정치적 차원에서 남북대립의 구조, 경제적 차원에서 절대빈곤의 문제, 국제적 차원에서 냉전구조” 등의 세 가지 구조적 조건의 중첩으로 보고 있다(유석춘·박병영, 2002: 188~190 참조).

등의 세 가지 경향으로 정리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의 경향성은 한국의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쳐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그리고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실리적 또는 경제적 노동조합주의로 명명되는 경향은 주로 한국 노총을 중심으로 개진되는 입장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이념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고 본다. 물론 여러 가지 악세사리를 달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본다... 이념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념이 노동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특히 한국노총운동은 이념을 근간으로 하기보다는 실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운동단체라고 본다... (연구자: 이익이라면, 조합원들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가? 사회적 이익이라든가, 민주주의와는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가?) 그런 가치와 상당히 멀다고 본다. 노동자의 의식문제, 국민들의 의식문제, 대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대개 그렇다. 국민들의 의식은 먹고 살기 바쁘기에 지식인들을 제외하곤 대체로 남을 생각하는 연대의식이 약하다(인터뷰 J, 2003. 7. 23).

이러한 관점은 노동조합을 이익단체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 관점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자신들의 이익결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한국노총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 입장은 실리적 노동조합주의처럼 자본주의적 질서 내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되 상대적으로 사회정책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표현한다. 즉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하여 평등의 가치를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corporatism) 전략을 통해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내 생각에도 남북한이 통일하면 자본주의에 흡수통일되는가, 아니면

적화통일도 될 것인지에 대한 접점이 사민주의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후는 사민주의다. 22일에 중앙정치 당을 만들어 사민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에 일부에서 노무현 당과 통합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형체도 없는데, 남의 당과 합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을 일정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정립했다(인터뷰 K, 2003. 8. 14).

지나고 보니 사민주의와 사회적 조합주의가 연결이 되는 거 같다. 당 시 글이 나간 후 논쟁이 될 때 좌파진영이 사민주의로 규정하면서 사민주의로서 실체를 밝히려는 글들이 많이 나왔었다. 그 때는 왜 연결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는지 뭔가 이념적 근거하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연계는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다(인터뷰 D, 2004. 4. 25); (설문조사에서) 조합원들도 스웨덴식 사민주의를 선호하는데, 사민주의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상태보다 한 걸음 앞선 것이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인터뷰 D, 2004. 4. 25).

한국노총은 녹색사민당을 통해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이것은 한국노총내 주류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국노총 내부의 일부 개혁세력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틀린 판단이 아닌 듯이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출범 전후에서부터 일정하게 사회적 조합주의의 경향을 보였으며, 현재 민주노총 내부의 국민파가 이러한 입장에서 있는 대표적인 정파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는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것은 노동운동 내 좌파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며 민주노동당 내의 사정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현 민노당에서 사회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개량주의로 매도당하고 있다’(인터뷰 K, 2003. 8. 14).

세 번째 경향은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라고 할 수 있다.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질서 자체를 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입장과 질적으로 다른 입장과 실천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조합주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노동조합운동이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질서를 전복하는 데서 자기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가 억압되지 않는, 대중이 주체가 되는 운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서 투쟁 시기에 조직되었던 소비에트를 일상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현재는 선진활동가를 매개로 한 일상적인 현장활동, 노조를 통해 전체를 급진화시켜 내는 활동이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와는 별개로 현장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인터뷰 C, 2004. 2. 4).

현재 민주노총 내부의 좌파 그룹, 특히 현장파가 비교적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좌파 내부에서 전략과 전술, 더 나아가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내부 분화를 보임으로써 특정 정파를 이 입장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념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이 상당한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났고 논의 과정을 통해 세 가지의 일정한 경향들로 수렴됨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왜 한국노동운동이념이 빈곤하다고 주장하는가?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답은 우선 한국의 이데올로기가 성장해 온 특수한 역사적 경로와 토양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주의 이념이 절대주의와 봉건제에 대항한 진보적 부르주아계급의 지휘하에 형성된 서구와는 달리, 냉전자유주의의 엄호하에 군부독제가 앞장서고 일제시대의 지배계급인 지주들, 미군정과 군부의 절대적 지원을 받은 신흥부르주아지들이 군부의 뒤를 바짝 따르면서 한국의 자본주의를 이끌었다. 이러한 ‘한국적’ 자본주의(혹자는 이를 ‘천민자본주의’라고 칭한다)의 정당화의 기제로서 ‘한국적’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만들어졌다. 사회주의 이념 또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과정에서 계급정당의 지휘하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한국적’ 자유주의의 감시하에 ‘골방’에서 소수 활동가들의 제한된 토론과 논쟁, 그리고 스탈린주의 또는 북한의 주체사상의 영향하에 조직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1980년대 이후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남한의 사회민주주의는 정상적인 경로를 밟았는가? 사회민주주의 역시 좌파로부터 개량주의와 기회주의, 우파로부터 급진주의

라는 이중의 비난을 받으면서 ‘뿌리 없는 사생아’로서 외롭게 성장했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자신의 토론장을 갖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아무도 자신을 사민주의자로 자임하는 이가 없는 가운데 실체가 모호한 상태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왜곡된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등장과 성장에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성립된 냉전체제와 일체의 이데올로기 논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던 남북한 분단 및 남한의 권위주의 정치의 시대적 상황이라는 토양이 존재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특히 해방 직후 형성되어 1980년대 이전까지 지속된 반공주의 또는 근대화의 성장이데올로기, 그리고 이 둘의 ‘묘합(妙合)’에 기반한 한국적 자유민주주의라는 지배세력의 통치이데올로기가 승자독식의 원칙하에 여타 이념들과 세력을 검열과 압제를 통해 불허하자 어떤 이념적 논의와 사회과학적 상상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른 이념들의 정상적 발아와 성장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자체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이상의 이념적·정치적 토양과 이 토양 위에 자라난 기형적인 이데올로기들로 인해 한국의 정치이념들은 소통의 빈곤이라는 ‘지병(持病)’을 갖게 되었다. 즉 이데올로기들은 다른 이데올로기들과 경합과 경쟁을 통해 성찰되면서 풍부화되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제압하는 무기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이용되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들은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에 개입할 때 매우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다. 이처럼 한국의 이데올로기들은 정치적 관계에서 나와 남을 가르치는 기준을 제시하고 상대방을 매도하는 데는 ‘유능’했으나 정책적 영역에서 일상의 삶과 관련된 방향성과 구체적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는 ‘무능’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들은 어떤 정책을 앞에 놓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허송세월하는 동안 국민들은 이데올로기들을 무서운 괴물 또는 무용지물의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들은 자기와 다른 이데올로기들을 가진 사람들을 검열하여 가혹한 형벌을 주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외에 어떤 생산성을 담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정 이데올로기와 일반대중들 간의 소통이 단절되었음을 보여준다.

노동운동의 경우도 국가수준의 이데올로기가 처한 위치와 비슷한 자기 성장경로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념들간의 대화와 논쟁이 취약했음은 물론 이념과 정책의 연계도 취약했다. 즉, 노동운동 또한 이념적 차이가 실천적 차이를 만들어 냈다고 말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 노동운동이념은 사회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 내는 데 무능성을 드러냈다. 노동운동이 사회정책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후의 일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운동은 정부와 자본의 '비우호적인' 태도와 자신들의 정책입안과 힘의 한계로 인해 정책의 주변에 있거나 이념과 정책의 일관된 연결 지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노동운동은 기업별노조 체제와 저성장된 정치세력화 등으로 인해 임금인상정치에 묶여 있는 동안 '이기주의자'라는 치유하기 힘든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 이처럼 이념들은 자신의 대중, 즉 국민과 조합원들과 소통하지 못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자발적 동의와 지지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이것은 이념그룹과 조합원들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동조합과 이념그룹의 엘리트들이 이념논의에 몰입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의 대중들은 이념에 대한 염증을 토로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현상이 된 지 오래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데올로기의 빈곤현상은 한국의 이데올로기가 정치경제와 사회를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타당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영토를 가르고 민중을 억압하거나 이분법적인 관점을 장착하여 '편'을 가르느 괴물로서 냉전과 독재를 합리화하는 데, 또는 저항의 권력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구호' 또는 '선전물'로 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소통 자체가 위험한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대적전선에서 사치스러운 행위였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원활한 소통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이데올로기라는 프리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권력화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감시당하거나 타자와 구별짓는 데 이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레드콤플렉스와 역레드콤플렉스⁴⁾

4) 역레드콤플렉스란, 레드콤플렉스와 반대로 자신이 사회주의자로 불리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는 좌파 내의 세 경향을 의미한다: "우리가 판단키로는 노동운동 하는 사람의 80%는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것(그렇게 주장하는 것-연구자)까지는 같다고 본다"(인터뷰 C, 2004. 2. 4).

리는 사회적 상처(social trauma)가 생겨났고,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본래의 기능, 즉 역사와 인간 이해를 통한 실천지평의 확장이라는 모습과 동떨어진 왜곡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었다. 노동운동도 물론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덫'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노동운동은 남북이라는 영토 분단만큼이나 소통할 수 없는 양 극단으로 분리되었고, 토론과 성찰을 통한 삶의 지도를 만들기보다는 상대방을 '딱지붙이기' 위한 '깃발'로 이념을 '이용'해 왔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이데올로기와 이념은 좋은 지도를 만들지도 못했고 지도에 따라 세상을 그리려는 시도도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이데올로기와 이념은 정치세계에 대한 이해와 지평, 그리고 실천의 방향과 방법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정치세계는 이데올로기와 이념과 무관하게 작동하였고 그 자리를 전쟁의 승자와 지역주의가 차지하였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이념에 대한 좋지 않은 집단적 기억 때문에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와 이념과 그 논쟁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갖고 있다. 이들은 이전에도 그렇지만 특히 현재도 이데올로기와 이념논쟁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연구자에게 이메일(2004. 11. 5)을 보낸 다음의 상급단체 노동조합 중견간부의 언급은 매우 시사적이다.

저는 이런 논쟁(이념논쟁-연구자 주)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라 함은 자연인 ○○○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연맹에서 일하는 중견간부입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도 이런 논쟁에 대해 깊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논쟁에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제 이런 이름 붙이기 갖고는 부족하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뭐라 하든 별로 관심 없고 구체적인 정책 10개를 들고 와라, 그러면 그걸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념 과다와 정책 부재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이제는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개발에 몰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입장은 '말의 성찬'에 불과한 이념논의가 이제 '밥의 성찬'을 위한 실용주의에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

다. 실제로 정부 여당은 현재 실용주의를 모토로 이데올로기 지형을 장악 하려는 야심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냉전 종식 이후 실용주의의 시대로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난은 더욱더 실용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운동의 경우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 중심의 집단 이익을 중심으로 노동정치에 개입하는 경향이 있고 요구사항도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 매우 협소한 공장정치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념논의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의 중견간부의 입장은 그의 본래적 생각⁵⁾과는 달리 실용주의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

실용주의는 사실 기존의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대치하는 만병통치의 묘약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실용주의에 근거해서 만들어 냈다고 하는 모든 정책과 실천은 최종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이념적 리트머스(litmus) 용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실용주의는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데올로기적·이념적 잣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회피하면 할수록, 그리고 우회로를 만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길은 더욱 더디 갈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데올로기와 이념과 맞닥뜨리는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와 이념은 없애버릴 유물, 더 나아가 없애버릴 수 있는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끄집어내어 적극적으로 공론의 장에 올려놓고 제대로 된 논쟁을 해야 할 삶의 지평이자 실천지침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도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논자들의 희망과는 반대로 이데올로기와 이념논쟁은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정체성 논쟁’과 ‘색깔 논쟁’은 그 하나의 단적인 사례들이다. 노동운동의 경우도 이념 문제와 무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⁶⁾ 1980년대 말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

5) 일상적인 그와의 토론을 통해 볼 때 그는 기존이념의 해악, 즉 생산적이지 않은 논쟁과 이념이 정책과 대중과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지만 이념 그 자체의 의의를 부인하지 않는다.

6) “내가 민주노총 나와서 이념에 대해 정리를 하게 된 것은 더 이상 (이념 문제를) 피해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든 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

이론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었고,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폭력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이념에 대한 비판 또는 반성과 대안 이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는데, 노동운동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주체이다.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대기업 정규직 중심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비판,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내부 이견 등의 상황은 자기정체성에 대한 정립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 논의와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에 대한 현재의 논의와 현실화는 이념 문제를 논쟁의 중심으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민주노동당도 조만간 마감을 드러낼 것이라고 본다. 국회의원 몇몇 나오고 그러면 대중들이 ‘당신들 빨갱이 맞냐’고 물었을 때, ‘민노당인데 요’(회피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연구자 주). 대중과의 접점이 형성되면 나타날 것이고, 노자간의 긴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좀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우리 운동의 진전이 덜 된 것이고, 거의 ‘준골방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다(인터뷰 C, 2004. 2. 4).

이런 맥락에서 “이념에 대한 고민이 공허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상과 방향에 대한 갈지자 행보는 더욱더 문제라고 생각한다”(인터뷰 N, 2003. 6. 30)라는 언급은 새겨볼 만하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이념의 과잉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념의 빈곤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것은 소통의 빈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념빈곤이 노동운동 위기의 주범이라는 본 논문의 논점(argument)을 입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한국노동운동이념의 역사를 경합, 진화, 분화, 그리고 딜레마라는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노동운동의 다양한 이념들을 드러내고, 분류하고, 부분적으로는 평가함으로써 이념빈곤의 기원과 이념빈곤으로 인해 나타난 한국정치의 풍경을 드러내고 현재의 이념지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본 논문은 현재의 한국

고 생각해서...” (인터뷰 D, 2004. 2. 25).

의 정치와 노동운동이 이데올로기와 이념논쟁을 보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 한국노동운동이 자신의 이념빈곤의 극복을 위한 토론과 논쟁의 단초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2. 이념: 물질성과 자기 현시

이념은 (정치)세계에 대한 특정 주체들의 체계화된 태도, 전망, 비전을 의미한다. 이것은 첫째, 나(또는 특정 세력 또는 계급, 인종, 젠더 등)에 대한 이해와 규정의 태도이자 방식이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문제삼는다. 둘째, 이념은 내가 이해하는 세계에 대한 해석과 실천의 지침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이고 이를 통한 개입이다.

이런 점에서 이념을 일종의 관념의 덩어리로만 보는 것은 넌센스이다. 이념이 문제삼는 나란 존재는 항상 특정 정치경제와 가치분배 갈등의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해서 서 있고 언제나 특정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호명된다. 따라서 이념이 문제삼는 전망과 비전은 항상 상이한 전망을 가진 타자들의 질서와 반대 속에서,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념은 천상의 얘기이거나, 고독한 존재자가 만들어 낸 발명품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재판관의 교본서가 아니다. 이와는 달리 이념은 특정세력의 자기규정이자 이를 통한 현실개입의 무기라는 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전사의 칼이다. 다시 말해 이념은 현실에 발 딛고 있는 특정한 담론 체계, 이데올로기,⁷⁾ 또는 일종의 헤게모니적 지적 체계이다. 또

7) 이데올로기(또는 이념)라는 개념은 “지배 정치권력의 정당화를 도와주는 허위이념들이라는 좁은 의미에서부터 모든 관념 체계라는 넓은 의미에 이르기까지 통용되고 있는 것만도 10여 가지에 이르고, 국내만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상당히 다양한 용법들이 공존”한다(손호철, 2003: 155). 이데올로기의 다의성에 비추어 볼 때 이데올로기는 이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사회주의, 자유주의, 시민주의 등을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경제적 또는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등의 노동운동이념과 구별하기 위해서 전자를 이데올로기로, 후자를 이념으로 '편의상' 사용하기로 한다.

한 이념은 자기를 타자와 구별하는 준거점임과 동시에 현실 비판 또는 개혁·변혁의 무기 또는 현실 옹호와 보수의 논리이고 구체적인 정책방향 까지도 점지하는 실천의 무기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념은 단순히 나와 세계를 설명·해석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세계를 바꾸려는 또는 세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열정, 힘, 그리고 구체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다.⁸⁾ 이제 우리는 이념이 물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⁹⁾

이념의 물질성과 더불어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념에 내장된 관계성, 즉 응축된 세력관계를 통해 이념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념은 알튀세르(Louis Althusser, 1918~90)의 ‘호명테제¹⁰⁾’에서 보듯이 항상 상이한 주체들 간의 관계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제습(Bob Jessop)의 전략관계적 국가론¹¹⁾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특정하게 구조화된 전략 및 권력관계를 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념의 속살은 포이어바흐의 ‘신학의 비밀’¹²⁾처럼 특정 세력관계 분석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

-
- 8) 정치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세계를 구성하는 ‘상징의 세계’—신념, 기대, 목적, 의미 등—를 이해하여야 한다. 정치이념은 정치세계를 구성하는 관점 및 가정들로서 정치행위에 대한 의미 부여와 정책 수립의 정당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삶의 상징적 기초이다. 정치이념은 집단적 정체성 형성과 정치공동체의 통합 기능을 담당하며, 정치적 과제를 설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치이념은 권력 현상과 연결되어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는다(유홍림, 2002: 1~2).
- 9) 포이어바흐(Ludwig Feuerbach, 1804~72)에 대한 마르크스의 테제 중 11번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철학자들은 세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오직 해석해 왔을 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다”(Marx, 1945).
- 10)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서 그의 유명한 ‘호명테제’를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주체는 이데올로기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체는 존재를 통해 책임있고 행위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가상의 정체성에 얽매이게 된다. 즉 개인은 이데올로기 장치 안에서 개인에게 생각하도록 주어진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특수한 개인이 된다(Althusser, 1997 참조).
- 11) 제습은 폴란차스의 “세력관계의 물질적 응축으로서의 국가” (Poulantzas, 1994) 관념을 받아들여 국가를 “형태결정된 사회적 관계”로 파악한다. 이것은 국가가 행위자들 간의 구조와 전략의 변증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특수한 제도라는 것을 암시한다(Jessop, 2000 참조).
- 12) 포이어바흐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현존하는 종교적 교의는 참다운 인간적 가치의 표현, 즉 종교는 인간의 자기숭배의 근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신학의 비밀이 인간학에 있다고 주장한다(Feuerbach, 1992 참조).

그렇다면 이념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가? 이념은 현실에 대한 해석 입과 동시에 실천적 지침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다양한 담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현시하려고 한다. 즉 이념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특정 정치주체의 조직론과 실천론, 그리고 ‘정치적 담론’을 통해 자신을 현시한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들은 각기 다른 특정한 국가형태, 당정관계, 의회조직 등의 조직체계와 상이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실천을 통해 구조화된다. 이런 점에서 인류가 만들어 낸 다양한 이념은 언제나 중립적이지 않았으며 박물관에 박제품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다. 현실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으며 항상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했다. 이 투쟁은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나타났다. 때론 정책으로, 때론 정당성의 기제로, 때론 혁명조직으로 자신을 현시했다.

다른 한편 이념은 다양한 담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담론이란 “주체, 이슈, 상호전략(또는 실천)과 관련된 것으로서 말, 언어, 상징,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자 의사소통의 방식을 담고 있다”(유범상, 2000: 34). 담론은 그것이 형성되는 제도와 사회적 실천의 종류에 의해,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말을 하는 상대의 위치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다(Macdonell, 1992: 11). 무페(Mouffe)는 이러한 논의를 계급사회에 적용하여 “담론은 적대가 형성되는 방식에 좌우되며, 적은 존재하는 담론들에 의해 규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담론정치는 집권세력을 비롯한 지배블럭이 자신들의 이해를 통합하고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상징과 가치체계를 생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중과 반대세력의 대응을 포괄하는 동태적 과정 전체를 가리킨다(강명구·박상훈, 1997: 125).

한 가지 더 지적할 점은 이념의 자기모습(자기현시)은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념은 특정 사회구성체 또는 정치경제적 상황, 그리고 특정 전략관계적 상황에서 자기정체성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는 항상 진보적이거나 항상 보수적이거나 할 수 없다. 자유주의는 중세에 봉건적 착취와 저급한 생산력에 대응하고 절대군주로부터 자유를 옹호하는 진보적인 이념이었지만, 이후에는 복지와 평등의 문제를 소홀히 하는

계급 억압의 이데올로기로 비판받는다. 한 사람의 이념 지평도 마찬가지로 관계적이고 전략적이다. 예를 들어 박정희 군부독재하에서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매우 진보적일 수 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이들은 자신의 입장이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들과 개혁적인 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때론 반동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 이념의 모습과 역할은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관계성과 함께 이해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상의 관점에서 한국노동운동의 이념에 관한 이야기, ‘○○노동조합주의’로 표현되는 이념의 주체, 이념주체들의 조직과 실천, 이들 이념의 역할과 효과 등에 관한 서술이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이념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노동현장에 들어간 이데올로기로서 ‘○○노동조합주의’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념이 특정 집단과 세력의 세계관이자 실천지침이라면 노동운동이념은 노동운동의 특정 세계관이자 실천지침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이념은 조직론 및 실천론, 그리고 정치적 담론의 총체이며 특정 정치주체와 이들 간의 권력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념의 요소는 노동운동주체(노동자, 노동조합), 특정 이데올로기와의 만남,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론)과 실천(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도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고 이것을 변화시키려는 과정에서 특정 이념과 특정 전략·전술을 형성했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조직론과 실천론, 정치적 담론을 이념의 또 다른 자기조직화로 보고 이를 통해 다양한 노동운동이념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다.

3. 정치: 정체성의 정치와 소통의 미학

정치세계는 특정 집단들, 이념들, 그리고 정치적 행위들로 구성된다. 이념이 특정 집단의 삶의 지도라면 정치는 특정 집단들이 자신들의 삶의 지도를 관철하려고 공적 세계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¹³⁾ 따라서

13) 김홍우는 “사적으로 태어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공공성을 지향하도록 할 것인가”라고 묻고, 정치가 굴절되는 원인은 “사적으로 태어난 사람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지향해야 하는 정치의 역설적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소통

이념과 정치는 동전의 양면처럼 깊은 내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즉 우리는 공적 세계에서 삶의 지도가 없는 정치집단을 상상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행위자 없는 이념 또한 넌센스이다. 이처럼 이념은 행위자를 가졌을 때만이 생존할 수 있으며, 특정 집단 또한 이념을 가졌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정치적 실천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념의 빈곤은 정치의 빈곤과 깊은 연관이 있다. 우선 정치가 빈곤하면 이념도 왜소해진다. 권위주의 또는 권력정치는 정치 빈곤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것은 힘이나 카리스마에 의존하여 정치세계를 유지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이념의 풍부화와 세련화에 별로 관심이 없다. 즉 이런 유형의 사회에서 지배집단은 적자생존논리나 소비니즘 등의 단순한 이념만으로도 권력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념 개발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세련된 이념 등장을 방해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보존하려고 한다. 반면에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에서는 권력자원이 동의와 설득에서 나오기 때문에 동의의 기제가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념도 자기합리성과 정합성을 갖고 있다. 즉 이들 사회의 정치는 자신들의 행위규범을 정당화하는 보다 완결적인 이념체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와 여론 등 사회적 대화기구를 발전시켜 왔다.

한편 이념이 빈곤하면 정치도 빈곤해진다. 이념빈곤의 사회에서는 인종주의, 지역주의, 혈연주의 등의 일차적이고 단순한 논리가 정치세계를 이끈다. 예를 들어 나찌즘은 인종주의를 이용하여 야만적 학살을 정당화

이 소유를 지배하는 '참된 정치(true politics)' 또는 공공의 정치와, 소유가 소통을 지배하는 '현실정치(real politics)' 또는 '폐거리 정치'라는 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정치로 구분한다. 그에 의하면 '현실정치'에서 정치는 '사적인 것을 공식상에서 선전하고 공적인 것을 사사화하는 행태', 즉 '전리품' 획득을 위한 하나의 소유활동이다. 여기에서 정치의 장은 '플레나'(Plena, 욕망 등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일 뿐만 아니라 '아레나'(Arena, 격투장을 의미한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표현되는 의견은 정치를 가장한 '소유지향성'으로 인해 굴절된다. 김홍우는 현실 정치를 소통의 우선성, 공동세계의 중심성, 가계(Oikos)와의 이질성을 가진 공적 영역의 창출과 활성화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그는 소통의 '우선성'이 소유의 '우월성'에 의해 항상 위협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 즉 '소유의 우월성'으로부터 '소통의 우선성'을 지키려는, 따라서 공적 영역을 활성화하고, 확보하고, 확장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참된 정치라고 주장한다(김홍우, 1997; 1999).

했으며, 지역주의 이데올로기는 취약한 이념지형이 있었기에 오랫동안 한국의 정치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념의 빈곤은 정치세계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방해한다. 예를 들어 이념의 빈곤은 정치세계를 경제적 가치 또는 적자생존의 담론을 통해서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념지평은 파시스트와 시장주의자들에게 정당성을 제공한다. 그 결과 이 같은 빈곤한 이념지평에서는 권력정치와 금권정치가 정치세계의 보편적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정치는 이념과 같은 운명을 타고 태어난 쌍생아다.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는 이념과 정치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다.¹⁴⁾ 왜냐하면 이념이 존재의 의미를 묻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정체성에 기반하여 자기조직화와 실천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정체성의 정치는 이념의 문제 설정을 실천을 매개로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체성의 정치는 이념의 첫 번째 질문,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대답하려고 한다.¹⁵⁾ 그동안 근대정치는 ‘진리의 정치’ 개념¹⁶⁾을 발전시키고 이 입장에

14) 정체성의 개념은 “불분명한 것인 만큼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였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다층적이고, 정의하기 어렵고, 많은 일반적인 측정 방법을 벗어난다 (Huntington, 2004: 39). 이 같은 정체성의 정의에서 보듯이 정체성의 정치 개념 또한 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논자들은 정체성의 정치 개념을 진리의 정치와 비슷한 용어로 사용한다. 여기에서 진리의 정치는 자신이 다른 정치세력에 비해 절대적 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자기확신과 연관된 개념이다. 한편 또 다른 논자는 정체성의 정치 개념을 차이의 정치 개념과 연관시켜 이해하려고 한다. 즉 정체성의 정치는 타자와의 차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편 현재 정체성의 정치는 특정 영역, 즉 여성학과 문화운동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대어 본 논문은 정체성의 정치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첫째는 정체성의 정치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에 기반한 현실에 대한 개입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진리의 정치와 닮았으면서, 둘째는 동시에 그런 자기 정체성의 주체들이 타자에 대한 인정(나와 같이 일정한 이념과 일정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일정한 정치적 규범과 제도를 통해 경쟁하는 정치세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의 정치와 친화적이라고 본다.

15) 이런 맥락에서 헨팅턴은 국가정체성을 문제삼고 있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거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통점과 독자성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논의하고, 재규정해 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리,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아시아에 속하는지, 아니면 경제, 정치, 현대적 측면에서 서구에 속하는지 고민한다”(Huntington, 2004: 28).

서 이 문제에 대답해 왔다. 즉 근대 진리의 정치에서의 ‘나’라는 특정 존재는 유일한 그리고 의심할 수 없는 이성을 가진 진리의 체현자로서의 주체이다. 데카르트(Descartes)에게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흠결 없는 생각하는 존재였고, 헤겔(Hegel)에게 이것은 곧 자기발현을 통해 세계에 모습을 드러낼 절대정신이었으며 마르크스(Marx)에게 이것은 역사적 진리를 체현한 노동자 계급이었다. 이처럼 진리의 정치에서 ‘나’라는 주체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정치적 행위자이고 모든 것을 가르고 평가하는 준거점이다.

반면 정체성의 정치에서 ‘나’라는 존재는 차이를 갖고 있는 다수의 존재자들을 전체로 한다. 정체성의 정치에서 발견된 다양한 존재들 각각은 모두 자신의 신념과 이념을 갖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진리의 정치와는 달리 상대방이 나와 같이 자신들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논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점을 ‘인정’(절대로 ‘동의’는 아니다)해 줌으로써 타자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려고 한다.¹⁶⁾ 이런 점에서 정체성의 정치는 차이의 정치세계를 긍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체성의 정치가 차이의 정치를 내포

16)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진리의 정치’라는 개념은 다른 것은 모두 허위인 반면 자신만이 진리를 체현했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철학, 집단, 행위 등을 의미한다. 푸코는 진리의 정치라는 개념을 통해 근대철학과 정치의 특징을 드러내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즉 그는 근대철학이 국가, 주권, 또는 계급 등을 진리의 중심 또는 진리의 심판관으로 상정하고 다른 모든 것을 억압하고 배제해 왔다면서 진리의 정치에서의 그 대문자 진리(Truth)인 “왕”의 “목을 자를 것”을 주문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권이나 법률, 금지라는 주체에 얽매어 있는 정치철학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머리를 잘라 버려야 합니다”(Foucault, 1984: 121).

17) 만약 정체성의 정치가 차이의 정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진리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정체성의 정치에서 주체들의 자기인식과 확신을 강조하게 되면 진리의 정치와 비슷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체성의 정치는 매우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체성의 정치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립과 차이의 인정이라는 언뜻 보기에 양립 불가능한 이중적인 속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근대의 전통으로 볼 때 ‘정체성의 정치’란 자기 완결적 개인과 합리적 사회계약에 정초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이념적 보편성을 가리키지만, ‘또 다른 근대’의 전통에서 볼 때 ‘정체성의 정치’란 문화적 ‘차이’ 또는 ‘실천’, 그리고 ‘열정’에 의해 자각되고 명시화된 사회의 ‘반권위적’ 갈등과 ‘토의적’ 유대를 가리킨다”(이성화, 2003: 181).

함으로써 근대정치와 철학적 태도(특히 진리관)를 근본적으로 달리한다. 즉 정체성의 정치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타자를 자신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변화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갖고 있다.

정체성은 (압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정도의 압력, 유인, 그리고 자유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든다. 자주 인용되는 어떤 구절에서, 베네딕트 앤더슨은 국가를 ‘상상의 공동체’라고 얘기했다. 정체성은 상상에 의한 자아이다. 정체성은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과 (정도는 덜하지만) 집단은 다수의 정체성을 갖는다. 이를테면 귀족, 영토, 경제, 문화, 정치, 사회, 국가 정체성 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정체성들이 개인이나 집단에 갖는 상대적 중요성은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Huntington, 2004: 42).

이처럼 특정 주체의 “정체성은 자신이 규정하지만 자신과 타인이 하는 상호교류의 산물”(Huntington, 2004: 42)이다. 따라서 정체성의 정치에서 정치적 태도와 실천 행위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을 하는 가운데,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자신을 세련화시킨다는 점에서 근대의 진리의 정치관과 차별적이다.

정체성의 정치는 이념의 두 번째 질문, 즉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앞서 보았듯이 정체성의 정치는 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한 욕구를 당연시한다. 그리고 정체성의 정치는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선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역사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것이며 가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체성의 정치가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정치적 전략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정체성의 정치는 소통과 토론의 지원을 받아야만 자신들의 원래의 의미, 즉 다양한 행위자들의 정체성과 자기현시 과정을 통해 공적인 정치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체성의 정치가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와 “정체성의 정치적 소통”에 기반했을 때 원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이성화, 2003: 185).¹⁸⁾

소통은 토론을 통해 타자뿐만 아니라 나에게 대한 이해, 더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려는 일종의 전략이다.¹⁸⁾ 이런 점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이 전제되지 않는 토론은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토론과 소통을 가장한 자기과시, 홍보, 그리고 상대방의 개종 전략에 불과할 뿐이다. 사회적 합의주의 또한 크게 보아 충분하지 않은 소통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공적 토론의 중요성을 논의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목표가 ‘합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합의를 우선시하는 것은 단지 ‘합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합의가 우선시되면, 토론의 전 과정은 합의의 산출을 위한 단순한 도구나 요식절차에 불과해지고, 이에 따라 예컨대 ‘본회의’

18) 이런 맥락에서 이성화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말하기와 듣기, 쓰기와 읽기 사이의 해석과 의사소통을 근대적 정체성을 대체하는 소통적 정체성이라 본 필자는 ‘인정의 정치’ 또는 토의적 ‘공론 정치’를 ‘정체성의 정치’라 보았다”(이성화, 2003: 184).

19) 이런 점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또한 일종의 전략적 정치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공론장은 상이한 주체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여론 또는 공공성을 생산하는 장으로서 현실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질적인 상이한 정치주체들이 상이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토론, 협상, 또는 합의하고 또 이러한 사회적 대화 과정을 통해 공공성을 생산하는 특정하게 제도화된 전략적·관계적 영역이다. 공론장이 본질적으로 이익추구를 위한 전략적인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공론장의 이중성 때문이다. 즉 공론장에서의 정치는 사적(특정) 이익을 공적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첫째, 공론장은 특정 주체들이 공개적인 토론과 협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장이지만, 여론의 압력으로 인해 공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공론장이라는 정치형태는 정치적 대표들이 특정한 의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협상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 추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많다. 둘째, 불균형적인 힘관계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에서 주체들은 토론자로서 또는 협상자로서 평등한 대우가 보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직력이 약하다고 해서 공론장에서 말할 자유가 제한된다거나 소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해서 협상자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여론은 약자의 주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론장에서의 힘관계는 물리적으로 환산되지 않으며 상황적이고 가변적이다. 하지만, 공론장에서의 공론의 정치 자체는 반드시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론장은 특정한 정치주체의 힘이 강력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을 때 또는 위기 등의 정치적 상황에서 특정한 정치세력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당화의 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론장에서 정치를 규정하는 힘은 여전히 특정한 구조, 세력관계, 그리고 전략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유범상, 2000 참조).

보다는 ‘위원회’가, 그리고 ‘위원회’보다는 ‘중진’ 또는 ‘영수회담’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김홍우, 2004, <문화일보>, 2004. 4. 26).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노사정위원회도 진정한 토론과 소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노사정위원회는 토론의 장이었다기보다는 흥정을 확인하는 장, 또는 상대방에 대한 탐색의 공간으로 기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²⁰⁾

이상에서 보듯이 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이들 간의 차이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홍우는 소통과 토론의 중요한 목적이 내적 성찰에 있다고 보았다.

‘토론’이 민주적 참여의 의미를 살려내는 과정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 초점을 ‘합의’가 아닌 ‘공동성찰’에 맞추어야 한다. 사실 ‘공동성찰’은 ‘공동체 만들기’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참여’ 그 자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참여’에 수반되는 ‘공동성찰’이다(김홍우, 2004, <문화일보>, 2004. 4. 26).

이런 점에서 소통이 없는 정체성의 정치와 소통에 기반한 정체성의 정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소통이 없는 정체성의 정치는 다시 진리의 정치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 만약 특정 집단이 자기 정체성만을 강조하여 내부 결속에 보다 집중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진리의 정치일 수 있다.²¹⁾ 따라서 정체성의 정치는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차이를 존중하고

20) 노사정위원회의 대부분의 합의는 노사정위 밖에서 음모적으로 행해졌고 노사정위는 고무 도장 역할을 한 측면도 있다. 노사정위를 둘러싸고 두 개의 전략관계, 즉, 노사정위 내의 정부-재계-한국노총의 사회적 합의의 전략관계와 노사정위 밖의 정부-민주노총의 갈등적 전략관계가 존재했다. 이로 인해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정부 및 재계와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합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민주노총과 어떤 협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노총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이중의 전략관계로 인해 노사정위가 지속될수록 노동정치 내의 사회적 불신이 증폭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했다(유범상, 2003 참조).

21) 이와 관련하여 카치아피카스는 “확실히 정체성 정치는 자신의 고유한 내적 모순”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정체성 정치가 취하는 모든 형식 속에는 보편주의적 약속과 특수주의적 쇼비니즘 양자”(Katsiaficas, 2000: 433)가 있다고 했는데

인정하며 성찰과 자기 정정을 해나가야 한다. 정체성의 정치와 이념이 소통에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이처럼 이념과 정체성의 정치는 소통을 전제로 하여 끊임없는 성찰과 실천 과정을 통해 자기 정정을 해갈 때 우리는 정치 본래의 목표와 정치 과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2절 접근법

1. 범 주

본 논문은 해방 이후 존재했던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유형을 다음의 일곱 가지로 범주화한다: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인간적 노동조합주의,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반공적 노동조합주의, 협조적 노동조합주의.²²⁾

이상의 각각의 노동운동이념은 3가지 범주에서 서술된다(표 1-1 참조).

여기에서 그가 들고 있는 보편성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젠더평등은 보편적인 목적이며 우리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다. 인종적 다양성의 존중과 우리의 인간성에 대한 상호 인정은 모두에게 이익이다. 성억압을 해소하는 것도, 리비도를 배타적인 이성애로만 강제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을 끝장내는 것도 모두에게 이익이다”(Katsiaficas, 2000).

22) 노동조합이념 유형의 각 명칭은 아직 학술적으로 합의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각 시기의 운동이념에 대한 명칭은 모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존재했던 상이한 유형들에 대한 구분을 위해 상이한 명칭을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제 구분되는 이념적 경향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본 논문이 이상의 용어들로 개념화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첫째,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명칭들은 각 시기의 노동운동이념을 다룰 때 일반적으로 통용된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즉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각각의 개념들은 운동가들 또는 연구자들이 당시의 노동조합주의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 주로 사용해 온 여러 용어들 중에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용어들이다. 둘째, 이 용어들이 가장 그 시대의 상황과 노동조합의 성격과 실천의 특징에 잘 부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상의 일상적 용어들이 보다 세련화되고 과학적인 개념이 되어 향후 우리의 이념 연구가 보다 풍부한 개념을 갖기를 희망한다.

<표 1-1> 서술의 범주

노동조합 이념 유형	이데올로기와 만남	노동조합이념의 내용과 정의	노동조합의 조직과 실천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인간적 노동조합주의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반공적 노동조합주의 협조적 노동조합주의	- 이데올로기 지형 - 노동조합과 이데올로기 만남: 만남의 계기와 경로	- 변혁론: 사회구성체, 변혁과제(정치노선), 계급(또는 계층)문제, 국가와 노동조합의 지위 등 -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 노조와 기타 조직(정치조직, 정당, 의회, 국가)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조직화 과정 - 실천: 파업과 연대, 사회적 협의의 참여, 정책을 둘러싼 논의

우선, 각 이념이 서 있는 이데올로기의 지형을 서술하고 이념과 그 이념의 기반이 된 이데올로기의 만남을 서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독교휴머니즘 등 네 가지이다.

다음으로, 각 이념의 내용을 각각의 특징과 핵심적인 주장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핵심 내용을 다른 노동운동이념과 비교하면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주로 논의된 범주는 각 이념이 내포하고 있는 변혁론,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노동조합과 기타 조직과의 관계, 그리고 이 이념이 근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등의 차원이다.

그리고 나서 노동조합의 실천을 조직화와 정책참여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화의 측면에서는 우선, 특정 노동조합의 조직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그런 다음, 노동조합과 기타 조직, 예를 들면 정치조직²³⁾, 정당, 의회 또는 국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서술하고자 한

23) 여기에서 정치조직은 정당은 물론 정치세력화를 지향하지만 아직 제도권 정당으로 전화하지 못한 조직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치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거 같다. 이전에 있었던 정당으로 발전하기 전에 노동운동단체, 서클 등 노조가 아닌 조직은 다 정치조직이라고 얘기해 왔다. 정치조직은 전통적으로 정당의 조직을 그렇게 얘기해 왔다... 지금 상태로는 노동운동 발전에서 존재 기반이 약해질 것이다. 노조가 발전하면서 단체들이 쇠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정치조직이) 정당으로 못 가면 역할이 없어질 것이라

다. 실천은 대체로 네 가지 차원에서 서술될 것이다. 우선 노동조합의 파업전술과 사회적 연대에 대한 인식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에 대한 인식과 양자 중에서 각 조직이 어디에 우선성을 두고 있는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특히 각 조직이 사회적 협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참여했는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시기에 특정 이념집단이 주로 집중했던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본문의 각 이념은 이데올로기, 변혁론 및 조직론,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과 실천 등의 복합적 차원에서 서술될 것이다. 이것은 이념이 특정 집단의 정체성이자 동시에 실천의 지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복합적 차원의 서술은 한국의 이념 서술의 경우 보다 유용한데,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논쟁이 빈곤하기 때문에 조직론과 실천론이 이들 이념에 근접할 수 있는 단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서술 태도는 이념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특정 이념이 특정 정책 및 실천과 깊은 상관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 즉 이념이 정책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드러낼 것이다.

2. 방법

본 논문은 세 가지 텍스트를 참조하면서 진행된다. 첫째는 1차 텍스트이다. 여기에서 1차 텍스트는 각 행위자들이 현장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기록한 문건들을 의미한다. 1차 텍스트는 그 당시의 주체가 개입했던 정치세계에 대한 생생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내재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보고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것은 자료 보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한편으로는 특정 행위자의 일방적인 관점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²⁴⁾

고 본다”(인터뷰 E, 2004. 2. 10).

24) 1차 자료 중에서 본 논문이 참고한 내부 문건은 저자와 출간 연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저자의 경우 ‘저자 미상’으로, 출간 연도의 경우 ‘연도 미상’으로 표

본 논문의 두 번째 텍스트는 기존 연구이다. 기존 연구결과는 1차 텍스트에 비해 정치세계에 대한 외부적 개입 또는 2차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1차 자료에 비해 보다 통시적이고 객관적·체계적이다. 이것은 정치세계를 일관되게 묘사하고 그 속에서 핵심적인 논리와 함의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연구자 자신의 주관에 개입하여 생략, 왜곡, 편견 등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연구자는 자신의 논점을 가지고 글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사실 자체를, 자료가 부족하거나 연구자의 관점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과정에서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이념 연구와 관련하여 볼 때 2차 자료의 큰 문제는 기존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그 시대에 이념 논의가 자유롭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념의 역사가 짧고 이념과 관련된 행위자들이 현존한다는 점에서 객관화시켜 논의를 전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관계자들 면접을 통해 이념사와 논쟁을 재구성하려고 했다.²⁵⁾ 관계자 면접은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그리고 그 현장과 호흡했던 행위자들의 말을 듣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을 재구성하고 그 당시의 느낌과 감동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1차 자료 중의 1차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면접자의 주관성과 기억력의 한계라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하게 경계해야 할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텍스트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텍스트라고

시하였다. 이것은 활동가들의 부주의나 자료 보존에 대한 취약성과도 연관이 있지만, 많은 부분 군사독재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활동가들의 보안상의 필요성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었다.

- 25) 면접은 질적 사례연구 방법의 한 유형이다. 질적 사례연구 방법은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측보다는 서술과 설명을 구할 때, 행동을 야기시키는 잠재적 요인들을 조작할 수 없거나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 때, 그리고 변수들이 쉽게 밝혀지지 않거나 연구를 위해 추출해 내기에는 현상 속에 너무 깊이 묻혀 있을 때 실행된다(허미화 역, 1994). 노동운동이념 연구의 경우 기존 연구가 부족하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공식적인 언명과 실제 간에 차이가 있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이 필요한 경우이다. 특히 이념 연구는 각 집단과 행위자의 세계관과 인생관 등의 추상적인 수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질적 사례연구는 매우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터뷰에 많이 기대고 있다. 왜냐하면 우선 기존 연구와 1차 텍스트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진술이 가장 현장에 접근해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생생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편 연구자는 각 면접자의 주관성을 상이한 입장과 조직에서 활동한 다른 면접자의 진술을 상호교차시키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결국 세 가지 텍스트는 모두 중요하면서 동시에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²⁶⁾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즉 각 텍스트의 의미를 살리고 한계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상이한 주장을 상호 대비시키는 것이다. 이 연구 전략은 각 자료와 진술이 담고 있는 일치점과 차이점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판단을 보다 사실에 가깝도록 이끌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가능한 상이한 인물 또는 집단 간의 이견을 논쟁의 형식으로 드러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고민과 객관적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함으로써 정치세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본 논문은 1, 2차 텍스트 및 면접 자료를 가지고 논쟁의 형식을 통해 한국노동운동 이념사와 그 쟁점을 정리하고자 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면접의 경우 <표 1-2>에서 보듯이 노동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1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내용을 녹음하고 채록하여 연구에 반영했다. 면접 대상자는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case selection)과 이상적-전형적 지도자 사례선택(ideal-typical-bellwether-case selection)의 방법을 혼합²⁷⁾하여 선정하였다. 면접 방법은 연구자들이 우선 인터뷰 방향, 내용,

26) 본 연구는 세 가지 텍스트들과 보다 근본적으로 조성재(노동연구원), 이상호(민노당 정책연구원), 진숙경(고려대 박사과정) 등의 관련연구자들과의 토론의 산물임을 밝힌다. 조성재 박사는 '노동운동과 이념'이라는 주제의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이의 진행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과 『독일노동운동의 자기정체성 모색과 현실적 딜레마』(이상호, 2005, 한국노동연구원), 그리고 『노동운동이념과 현장조직』(가제)(진숙경, 근간) 등이 발간되거나 될 예정이다. 한편, 정경원 연구위원(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또한 토론을 통해 본 연구가 진전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밝힌다.

-
- 27) ‘세평적 사례선택’은 조사 지역의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추천에 의거하여 조사 대상자들이 선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박사들과 각 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타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대상자 선택에서 ‘이상적-전형적 지도자 사례선택’을 병행하였는데, 이 방법은 연구자가 어떤 모집단의 가장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이거나 바람직한 것에 대한 프로 필을 개발하고 나서, 그 프로필에 가장 근접하게 어울리는 실제 사례를 찾는 경우 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택은 각 시기 또는 각 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가를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

<표 1-2> 면접 대상자

자료번호	연구 참여자	성별	참여활동(단체)	면접 일시
1	A	남	민주노총 국민과 관계자	2003. 8. 29
2	B	여	민주노총 중앙과 관계자	2003. 5. 30
3	C	남	민주노총 현장과 관계자	2004. 2. 4
4	D	남	민주노총 국민과 관계자	2004. 2. 25
5	E	남	민주노총 현장과 관계자	2004. 2. 10
6	F	남	전노협 관계자	2003. 8. 4
7	G	남	1970년대 활동가	2003. 6. 13
8	H	남	민주노동당 관계자	2003. 7. 18
9	I	남	한국노총 관계자	2003. 7. 2
10	J	남	한국노총 관계자	2003. 7. 23
11	K	남	한국노총 관계자	2003. 8. 14
12	L	남	1980년대 활동가	2003. 8. 14
13	M	여	전노협 관계자	2004. 9
14	N	남	단위노조 활동가	2003. 6. 30
15	O	남	단위노조 활동가	2003. 8. 26
16	P	남	단위노조 활동가	2003. 8. 18

진행방법을 토의한 후 여기에 준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우선 대 단위 질문(grand-tour question)을 하여 피면접자의 이야기 흐름을 끊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들은 후 소단위 질문(mini-tour question)을 추가 하였다. 인터뷰는 주로 한국노동연구원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자의 장소(근무처 또는 집),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졌 으며, 대체적으로 매번 약 2시간 이상 지속된 면접과 저녁식사로 구성되 었다. 면접에서 다룬 내용은 연구자와 활동 내용에 따라 달랐는데, 대체 적으로 개인사, 노동운동이념의 관점에서 본 조직 또는 활동의 내용, 한 국의 노동운동이념의 현황과 전망 등이었다(유범상 외, 2001 참조).

한편, 본 논문의 서술은 면접을 통한 사실과 의견을 드러낸 것 외에도 직접인용을 많이 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직접인용이 많이 들어간 것 은 “현장에 뛰어들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그것이 바로 사회과학 의 진실한 자료이다”²⁸⁾라는 생각에 기인한다. 즉 현장의 목소리와 연구

28) 이것은 친구로부터 받은 이메일의 일부이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이것

자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방법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하는 태도라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²⁹⁾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론은 너무 주관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학문에서 주관성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때론 사회과학 자체가 정치세계와 사회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견에 도달하기까지 다양한 행위자들과 연구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듣고 이를 바탕으로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동일한 쟁점과 사건에 대해 상이한 의견과 주장을 논쟁적 방식으로 제시하여 상호비교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것은 각자의 입장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입장의 차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즉 이러한 비교의 방식은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평을 넓혀 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견그룹 간의 상이한 견해를 논쟁의 형식을 빌려 서술하고자 했다.³⁰⁾ 실제로 정파들은 각각의 쟁점을 둘러싸고 토론과 논쟁을 지속해 왔다. 이 경우 이 방식의 서술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때로는 서로 상이한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했던 행위자들은 비록 상이한 이견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직접 논쟁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 에딘버러대학(박사과정에서-연구자 주)에서 배운 제가 가장 기쁘고 자랑스러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 수치 자료와 계량분석에 둘러 있던 체계 현장조사와 질적 분석방법을 익힐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새 세상을 만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 29) 여기에서 이용과 인용은 남의 말과 생각을 차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이용은 자신의 주장을 위해 상대방의 의도와 맥락을 생략한 채 의도적으로 단어나 문장만을 차용하는 측면이 있다면, 인용은 상대방의 의도와 맥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글과 말을 활용하려는 태도와 연관된다.
- 30) 본 논문에 대해 어떤 논평자는 특히 정파들 간의 논쟁을 다루고 있는 제4장 제2절의 3과 제5장 제2절의 2를 보론으로 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물론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양이 많고 논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독자에 따라서는 지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견을 일정 정도 수긍하여 고민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나, 여전히 이 논쟁 부분이 본 논문의 본론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 이 논쟁 부분이, 본 논문이 핵심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정파들간의 이념적 지평과 분화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에도 이 논문은 본 논문의 지면 속으로 그 이견들을 끌어내어 논쟁을 붙이고자 했다. 이것은 연구자 자신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상이한 견해와 쟁점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³¹⁾ 한편 논쟁의 방식으로 글을 서술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노동운동의 이념사가 단순히 일방통행이 아니라 이념 논쟁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함에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사는 특히 1980년대 이후 이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견그룹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거나 공적 토론의 장에서 논쟁을 하는 데 인색해서 마치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이 초보적인 수준에 있는 것처럼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이 때론 과잉일 정도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념의 대부분이 거론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로 성찰의 계기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서술의 방식에서도 드러내고자 한다.

31) 이런 점에서 논쟁은 세계에 대한 상이한 견해와 실천관을 갖고 있는 행위자들의 차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호 비판하고 자신을 무장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결과 현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논쟁을 드러내는 작업은 단일하게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 또는 견해에 개입하여 상이한 입장과 사물을 대입시킴으로써 논쟁을 붙이거나 논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작업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논쟁의 방식은 비난이나 약점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상호 이해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는 일종의 창조적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비판과 논쟁에 기반하는 서술은 창조와 지적 성찰을 매개함으로써 사회과학적 통찰에 도달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연구자의 견해이다.

제3절 주 제

본 논문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들은 상이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제1장이 논점(argument), 접근법(approach), 그리고 각 장의 주제(topic)를 다룬다면 마지막 장인 제6장은 이념사에서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고 이념빈곤의 원인과 전망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2~5장은 본 논문의 본론격으로서 각기 다른 특정 시기의 노동운동이념을 다룬다. 본 논문이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의 역사를 4시기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제2~5장은 각기 다른 주제의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3 참조).

우선 각 시기는 정치주체, 정치상황, 그리고 국가수준의 정치경제 및 이데올로기 등의 변화에 따라 구분되었다. 정치주체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조진영이 주요한 행위자이고, 이들에 의해 파생되거나 연관되어 있는 정당들, 활동가들, 그리고 이념집단들 또한 본 논문이 주목하는 정치행위자들이다. 이들 중에 민주노조진영은 단연 이념사의 최고의 주인공이다. 민주노조진영의 등장과 성장이 이념지형의 성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국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1970년대 민주노조가 인간적 노동조합주의, 1980년대 전노협이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그리고 민주노총이 변혁적 또는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등으로 자기 목표와 내용을 달리하면서 성장함으로 인해 국가의 전략이 변경되었고 한국노총 또한 내부 개혁을 시도하는 등의 변화를 강제받았다. 물론 국가가 핵심적 주인공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국가정치가 노동정치에 미친 영향력은 심대했지만 국가는 항상 자유민주주의의 테두리(때론 한국적 민주주의, 때론 신자유주의, 때론 잔여적 복지국가론 등)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민주노조진영은 다양한 진폭의 이념지평을 보여주었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노총이 자기 변화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민주노조의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노사관계 전

략이 끊임없이 수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념 변화를 이끈 것은 민주노조진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사 서술에서 또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정치경제상황과 이를 기반으로 해서 존재하는 국가수준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노동정치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강력한 구조이자 전략적 지형이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노동정치는 국가정치와 이데올로기에 오랫동안 종속되어 왔다. 특히 국가수준의 정치공간은 상이한 정치행위자들과 이념들이 숨쉴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억압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항상 주요 변수로 취급되어야 한다. 민주노조진영의 이데올로기적 진폭과 영향력의 정도도 사실 이 구조와 전략적 지형에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본 논문은 각 장들에서 국가수준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이데올로기를 비교적 길게 다루었다.

국가수준의 이데올로기는 냉전적·반공적 자유민주주의에서 한국적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로 변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응전과 적응의 전략적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조진영은 이러한 국가이데올로기에 대해 때론 소극적 저항으로, 때론 전면적으로, 그리고 때론 공존과 비판적 태도로 역시 자기 전략과 지평을 변경시켜 왔다. 한국노총 또한 국가이데올로기의 충실한 대변인으로, 때론 민주노조진영의 억압자 또는 경쟁자로 상황과 시대에 따라 자기 변신을 거듭했고, 이에 맞는 자기정체성의 정교화를 모색해 왔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념은 정치행위자들이 정치세계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지평이자 특정 정치경제적 구조와 전략관계적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전략을 구체화하는 전략적 지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념에 대한 접근은 철학적 접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론 현실과 밀착되어 있는 정책, 조직, 실천 등과 연관해서 관찰되어야 한다. 이것의 총체가 한 조직과 개인의 정체성과 이념적 지평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상의 변수와 서술의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해방 이후 한국노동운동이념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각 시기의 핵심적인 주제(topic)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인 한국노동운동이념의 첫 번째 장면은 혁명적 노동조

<표 1-3> 시기 구분과 노동조합주의

	행위주체	노동조합 이념유형	이데올로기	정치적 담론	
1	해방 8년 (1945~ 53년)	전평	혁명적 노조주의	사회주의	계급, 혁명
		대한노총	반공적 노조주의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
2	1970년대	민주노조	인간적 노조주의	기독교 휴머니즘	인간, 인권, 평등
		한국노총	협조적 노조주의	자유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근대화, 반공주의
3	1980년대	전노협	변혁적 노조주의	사회주의	노동해방, 계급
		한국노총	실리적 노조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화, 정책참가
4	1990년대 이후	민주노총	변혁적 노조주의	사회주의	노동해방, 계급
		한국노총	사회개혁적 노조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적 합의주의
		한국노총	실리적 노조주의	자유민주주의	생산적 복지, 사회 적 합의

합주의와 반공적 노동조합주의가 경합하던 시기로서, 해방 이후 8년(1945~53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이념지형이 만들어지는 시기였다. 냉전과 미군정의 한반도 진주는 이 시기의 정치를 규정하는 견고한 구조였고, 한국의 이데올로기와 노동운동의 이념은 이러한 정치적 배경 위에 주도되었다. 따라서 제2장의 주제는 기형적인 이념지형의 형성 과정과 그것의 효과에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이라는 정치 상황과 냉전이라는 국제정치 상황 속에서 반공적 자유주의로 자기 변신을 했으며, 이것은 일체의 이견자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한국의 이념지형은 승자 독식으로 귀결되어 기형적인 이념지형을 만들어 냈다. 이 지형은 레드콤플렉스라는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았던 사회적 병리현상의 원인을 제공했다.

제3장인 두 번째 단계의 주요 주제는 인간적 조합주의와 이것의 저항의 근거, 그리고 이념사적 위치에 대한 것이다. 인간적 조합주의는 냉전적 자유주의에서 한국적 자유주의로 자기 변신을 한 보다 강력한 이념 및 정치세력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인간적 조합주의는 너무도 취약한 자기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일부 종교인들

의 지원을 받는 경공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로 구성된 소수의 민주노조운동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적 노동조합주의의 이념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지배이념에 대해 자기 정립을 통해 무장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의 폭력적·비인간적 노동통제에 대한 일부 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 저항에 대한 기독교 휴머니즘의 측은지심에 기반하고 있다. 즉 노동자조직 내부의 자기 고민에 기반하지 않은 인간적 노조주의는 취약한 이념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노동조합주의의 역사적 공헌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국가권력과 이념에 대해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제4장인 세 번째 시기는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와 실리적 노동조합주의가 격렬한 전투를 치렀던 1980~90년대 초까지를 다룬다. 이 시기의 주요 주제는 일차적으로 변혁적 노동조합주의가 발견한 계급과 사회주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있다. 즉 제4장은 이 사회주의와 계급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갖는 정치적·이념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다룬다. 이 시기에 이르러 드디어 한국적 자유민주주의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며 더 이상 유효한 정치적 전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이것을 계급과 마르크스주의 이념으로 대체하고자 했으며, 민주화와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자기 조직화에 성공함으로써 어느 정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에 한국노총도 생존을 위한 변신에 들어가서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를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로 진화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이 시기에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지형은 기형적인 이념지형이 밑으로부터 변형되기 시작했다.

노동운동이념사의 마지막 장면인 1990년대 이후의 시기를 다루는 제5장은 양대 노총의 새로운 모색에 대한 서술이다. 여기에서의 주제는 한국의 노동운동진영과 그 이념이 경합, 진화, 분화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 원인과 딜레마, 그리고 이로 인한 각 정파들의 새로운 모색에 대한 노력 등이다. 199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은 실로 눈부셨다. 전국적인 합법 조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합법 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에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의 위기가 거론되고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

것을 어떻게 민주노조진영은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편 한국 노총은 상당히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기간 동안에 노동운동진영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를 민주노총에게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 건설의 좌절을 맞보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노총은 또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새로운 이념을 모색하고 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제5장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서술로 채워질 것이다.

제2장

생존게임을 통한 이념지형 형성(1945~53년)

제1절 자유민주주의의 비극적 탄생: 생존게임과 레드콤플렉스

한반도의 이념지형은 해방공간,³²⁾ 즉 1945~48년에 걸쳐 형성되었으며, 이것은 한국전쟁(1950~53년)을 거치면서 공고화되었다. 이 시기에 각 정치세력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게임을 전개했고, 결국 ‘분단체제’라는 미봉책에서 타협점이 만들어졌다. 이 체제는 이후 한반도를 이념적 불구 상태로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한국정치의 기형적인 이념지형의 형성 과정과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의 좌우익간, 그리고 미소간의 생존을 놓고 벌인 한반도 ‘전투’³³⁾

32) 해방공간은 두 가지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는 “일종의 힘의 공백이라는 객관적 조건”이었고, 둘째는 “우리 민족이 자율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의 정치영역”이었다(최장집, 2003: 41).

33) 한국‘전쟁’은 1950년 이전의 ‘전투’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남한에서 빨치산 활동이 본격화된 것은 여순사건 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순사건을 처음 일으킨 사람들은 여수에 주둔했던 14연대 정규군이었고, 그들이 진압에 쫓겨 바로 지리산 일대로 입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전략이었다기보다는 상황에 이끌려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빨치산투쟁은 가장 치열한 정치투쟁 형태입니다. 내전 상황이기 때문이죠. 한

는 한국전쟁 직후까지 지속되었으나 1948년 남한 단독정부인 대한민국과 북한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수립으로 일단락되었고, 이 시기를 경유하면서 분단체제와 이념지형이 형성되었다. 이후 3년의 ‘한국전쟁’은 이 지형을 확인하고 공고화하는 장이었다. 이처럼 해방 이후 8년은 반제와 반봉건의 과제³⁴⁾를 해결함으로써 19세기 말에 좌절되었던 근대국가 형성을 위한 열린 시공간이 되지 못했다. 사실 해방이 조선민족의 자체 힘으로 달성되었다기보다는 외세에 의해 이루어졌고,³⁵⁾ 식민지세력이 여전히 강력한 세력으로 잔존했으며 미·소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냉진체제가 공고화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해방 직후 근대국가 건설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는지도 모른다.³⁶⁾ 특히, 소련과 미군은 한반도를 ‘전리품’ 또는 ‘이념의 전진기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한반도의 모든

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 제주, 여수, 순천 등지에서 거의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남한의 이승만·한민당 세력과 북의 사회주의정권과의 갈등이 어느 한쪽을 몰락시키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말인데요. 이런 점에서 한국전쟁은 1950년 6월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김득중 외, 2001).

- 34) 8·15 직후 당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해결과제는 자주적 민족독립국가의 건설, 철저한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한 반봉건적 제 관계의 타파, 식민지적 통치기구의 해체 등 이른바 반제, 반봉건의 과제로 요약된다(여현덕, 1989: 23).
- 35) 민족독립운동은 만주사변을 분수령으로 해서 쇠퇴하여 해방 직전에 국제사회로부터 자신의 발언권을 갖지 못했다. 즉 “국내 문화민족주의자들의 상당수가 친일파로 변절하였으며, 사회주의와 급진 민족주의 계열은 일제의 탄압으로 소멸하였다. 만주, 노령에서의 무장투쟁도 일제의 서북 간도 장악으로 그 기지를 상실함으로써 크게 약화되었다. 태평양전쟁 발발 후인 1939년 장개석의 주선으로 한국국민당의 김구와 민족혁명당의 김원봉이 전국연합전선협회를 결성하여 운동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1940년 9월 광복군이 편성되었으나 일제의 전쟁 수행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하였다. 만주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던 김일성을 위시한 공산주의 무장세력도 일제의 토벌에 밀려 1940년대 초반 궤멸되어 일부만이 소련령 연해주로 도피하였다”(김영명, 2003: 35~36). 이것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통합된 대안정부를 발전시키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과 비교된다(최장집, 2003: 42).
- 36) 이런 맥락에서 김낙중은 1945년 8월 15일을 “해방된 날”이 아니라 “일본이 패망한 날”이라고 규정한다: “1945년 8월 15일은 결코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이 아니다. 그 날은 오직 우리 민족을 식민지로 하고 있던 일본 제국주의가 연합군에 패망하여 항복을 선언한 날일 뿐이다”(김낙중, 1982: 44). 더 나아가 그는 분단 상태임을 들어,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은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김낙중, 1982: 45).

세력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싶어했으며, 더 나아가 어떤 측면에서는 점령군으로서의 지향을 분명히 했다. 미군정의 경우 한반도에 진주하기 전날 선포한 포고 제1호, 즉 ‘조선인민에게 고함’(1945. 9. 7)은 미국이 자신을 점령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관(맥아더-연구자 주)은 태평양 방면 미육군총사령관으로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 모든 주민은… 일체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다음날 “인천에서 환영 나온 군중에 대해 일본군이 총격을 가해 다수가 사망했는데 이것은 미군정에 의해 허가된 행위였다”(한국노총, 2002: 223). 이러한 미국의 인식과 태도는 조선민족의 통치능력과 자치권 부여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었고, 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알타회담(1945. 2. 4~11)에서의 신탁통치 구상과 맞닿아 있었다.

한편, 트루만 독트린으로 냉전이 본격화되자, 양국은 한반도를 공산주의의 저지선(미국) 또는 ‘혁명 수출의 교두보’(소련)로 삼으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게 되었다. 이제 한반도는 더 이상 해방된 여러 식민지 국가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거나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³⁷⁾ 결국, 미소 양국은 근대국가 건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냉전체제를 유지하는, 즉 이념억제의 마지노선 또는 이데올로기 전파의 교두보로서 한반도를 상정하기 시작했다. 한반도는 청일전쟁과 마찬가지로 다시 강대국들의 전쟁, 즉 남의 싸움에 ‘몸’을 빌려 주는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남한내 정치세력들이 국가건설에 대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갖고 있지 않았고, 대외적 또는 국민으로부터의 공적 권위를 갖는 정치세력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민족국가 건설에 심각한 장애였다. 물론 해방 이후 공산주의자들과 중도파들이 우파에 비해 조직화되었고 정당성을 갖고

37) 태평양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과 소련에게 한반도는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미국에게 조선은 일제시대 이후 잊혀진 변방이었고, 소련에게도 극동의 약소민족의 하나로 기억되었다. 그 결과 조선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종전이 임박해지고 연합국의 이해관계가 뚜렷해지자, 미국과 소련 모두 한반도에서 자신의 지정학적 이해를 관철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김영명, 2003: 44, 45).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국내에 남아 있었던 ‘민족주의자’들은 3·1 운동 이후 일본의 문화정책 시기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의 민족지들을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하였다. 이들은 “직접적인 독립운동보다는 실력배양론, 독립준비론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하지만 상당수는 “일제의 탄압과 전시동원이 가중된 식민통치의 말기에 친일파, 혹은 부일협력자로 전락”함으로써 “해방 후 민족지도세력으로서의 자격을 크게 훼손하였다”(김영명, 2003: 26).³⁸⁾ 이에 비해 국내의 좌익과 중도파들은 일제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저항을 전개해 왔으므로 해방 이후 다른 세력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즉 이들은 (특히 상해 임시정부와 비교하여) 국내에 남아 투쟁했고, 대중들로부터 일제의 저항 경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해방 이후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조직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남한내 좌익은 신속하게 조선공산당을 재건했지만 초기에는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통해 활동했다. 한편 건준은 미군정의 국내 입성 전에 서둘러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을 선포함으로써(1945. 9. 6) 미군정으로부터 독립된 세력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하지만, 미군정은 조선을 소련의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반공기지로 만드려고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진주하는 즉시 국내의 어떤 세력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실제로는 인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군정은 공산주의 세력도 불법화했으며, 전평의 9월 총파업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미군정은 우파세력만큼은 확실하게 후견함으로써 반공기지건설 계획을 구체화했다.³⁹⁾ 따라서 미군정의 철수(1948. 8. 15)는 우

38) 한편, 민족자본의 사회적 영향력 또한 미미한 위치에 있었다.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는 1931년 일본의 만주사변 이후 본격화되었다. 일본은 대륙 침략을 계기로 조선을 일본을 위한 식량과 원료 공급지에서 병참기지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조선은 ‘강요된 근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결과 한편으로는 농촌의 파괴와 농민의 노동자화 또는 이민, 노동계급의 등장, 그리고 민족자본이 성장했다. 하지만, “일본인 기업이 전체 기업 수효의 60%를 장악하고 있었고 전 자본 투자의 90%를 차지”했다. 이처럼 “조선인들이 소유한 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자본력이 미미”하였는데, “1940년의 경우 당시 100만 엔 이상의 자본금을 지닌 기업 중 6%만이 조선이 소유였다”(김영명, 2003: 21).

과가 헤게모니를 쥐었을 때에야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이처럼 해방 직후 남한의 정치지형은 헤게모니를 둘러싼 좌우파 간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구조화되었다. 이 지형과 갈등은 세 가지 점에서 한국정치에 불행이었다. 첫째, 갈등이 극단적인 이념적 대립으로 나타났고 결국 특정 이데올로기만을 후견하는 미군정의 주도하에 해소되었다는 점, 둘째, 타협과 협상이 아니라 전투 또는 전쟁(결국 한국전쟁으로 확전된다)이라는 수단을 통해 갈등이 조정된 것이 아니라 ‘소멸’되었다는 점, 셋째, 이 과정에서 레드콤플렉스라는 치유되기 쉽지 않은 사회적 상처(trauma)가 생겼다는 점이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정치세계에서 이념적 대립은 매우 당연할 뿐만 아니라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⁴⁰⁾ 하지만, ‘그때’ ‘그곳’의 극단적인 남한의 이념 대립은 당시의 시대적 과제인 반제와 반봉건의 문제를 덮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외부자의 일방적 개입과 후견하에 해결점이 찾아졌다는 데 그 비극이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친일파와 지주세력은 당당하게 사회중심세력으로 복귀했다. 즉 미군정의 강력한 후원으로 인해 친일관료 및 지주, 자본가세력은 해방 이후 가장 취약한 지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위치로 급속하게 재진입했고 성장했다. 미군정은 “김성수를 비롯한 대지주로 구성된 11명의 군정청 고문단을 조직”하고 반공주의를 표방한 “이승만을 불러들여 군정청의 자문기구이며 경찰, 사법, 행정을 위임한 남조선민주주의원을 조직”(1946. 2)했다(한국노총, 2002: 224).⁴¹⁾ 이처럼 구지배세력은 정치권력

39) 미군정은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지도자 이승만과 김성수,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국내 토착 세력이자 보수적 민족주의운동 지도자들과 연대를 강화해 나갔다. 조선공산당과 같은 극좌파는 물론 사회민주주의적 혹은 중도적인 온건 좌파라 할 수 있는 여운형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룹들은 미군정에 의해 정치적으로 탄압받거나 배제되었다(최장집, 2003: 44).

40) 갈등은 인간 또는 사회의 존재론적 본성(homo conflictus)이다. 갈등은 상이한 물질적 기반과 이견, 그리고 지향이 다른 인간 또는 집단이 존재하는 한 필연적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갈등의 소멸이 아니라 어떻게 갈등을 과국이 아니라 순기능, 즉 창조적 에너지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갈등이 사회적 협의의 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는 데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최영기·유범상, 2001 참조).

41) 미군정은 크게 나누어 두 그룹의 조선인 집단과 동맹관계를 이루어 나갔다. 하나

의 중심으로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적산불하와 형식적인 토지개혁을 통해 근대적 자본가로 탈바꿈해 갔다. 결국 한반도 이남의 민족국가 건설은 미국의 후원하에 친일세력(이들은 대부분 친미세력으로 '전향'했다)과 친미세력에 맡겨졌는데, 이것은 반제반봉건의 과제가 미해결되었음을 의미했다.

봉건지주와 친일세력의 화려한 등장을 도운 것은 좌파의 전략적 실수

는 한민당과 이승만 주도의 독립촉성회 등으로 대표되는 조선인 구래의 지주계급과 지주·자본가계급이다. 이 집단은 직접적인 친일파와 간접적 친일파로 주로 구성되었다. 다른 하나는 식민지 관료 집단이다. 이 집단은 거의 전부가 직접적인 친일파 집단이다. 이들 직간접적인 친일파 집단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군정은 식민지 잔재의 철저한 청산과 친일파의 숙청을 제창하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급진세력과 민중세력을 제압하여 남한을 반소·반공의 보루로 삼고 자본주의를 강요했다.··· 가장 먼저 동맹관계가 맺어진 곳은 미군이 1945년 9월 인천에 상륙하여 조선을 본격적으로 점령한 직후인 10월에 임명한 11인의 행정고문 임명에서이다. 조선인 행정고문 11명 가운데 보수세력이 10명, 급진세력이 1명으로 당시 조선사회의 실질적인 이데올로기 지형과는 전혀 상반된 10:1 비율로 구래의 지배계급 집단을 행정고문으로 선정했다. 실제로 남쪽에 있는 고문 10명 가운데 6명이 주로 친일파와 구지배계급으로 구성된 정당인 한민당 당원으로 충원되었다. 또한 1946년 미군정에 의해 생긴 민주대표회에서도 그 구성비율이 45:4로 구래의 지배계급과의 동맹을 유지했다. 1946년 12월 개원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구성 또한 구지배계급의 보수세력이 압도했다. 민선의원 45명은 선거 명분 및 절차 등이 한민당과 독축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 우익세력의 당선을 보장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거의 전부 우익세력이 장악했고, 이 때문에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관선의원 45명 가운데 중도계나 급진세력을 포함시켰지만 전체 구성원 중 최소한 50/90은 친일 우익으로 채워졌다. 이러한 한민당 중심의 친일우익 편향의 인적 동맹관계는 미군정의 집행부에서 정책결정의 고위직(주로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 곧 정책결정의 직위임) 임명에서 두드러진다. 1946년 1월에 임명된 중요 정책결정직의 조선인 구성에서 친일파 편향은 가장 중요한 국가억압기구 분야에 확연히 드러난다. 경무부장 조병옥, 수도경찰청장 장택상, 대법원장 김용무, 사법부장 김병로, 검찰총장 이인 등으로 전부 한민당으로 선정되었다.··· 경찰 간부직만을 본다면 약 80%가 일본경찰 또는 일본군대 출신으로서 일본 식민지의 첩병으로서 민족반역행위, 친일행위 및 범죄행위를 자행한 인물들이었다.··· 남한군대 또한 경찰 못지않게 친일 숙성을 띤다. 군사영어학교 출신으로 임관된 110명이 남한군의 중추를 이루었는데, 이 가운데 이용준이 추천한 일본군 출신이 87명, 원용덕이 추천한 만주군 출신이 21명, 중국군 출신이 2명으로 군대는 친일파 일색이었다.··· 이들 국가억압기구의 첩병인 군대나 경찰 외에도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이법석의 조선민족청년단, 백의사와 같은 비밀테러조직 등 극우 사조직 청년단체가 미군정, 이승만과 김구 등 우익 정치세력 및 경찰의 하수인 노릇을 수행해 왔었다(강정구, 2002).

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신탁통치문제에 대한 좌파들의 미숙한 대응은 향후 대중들에 대한 헤게모니를 상실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나는 1945년 10월에 월남했다. 그 신탁통치 때문에 공산당 세력이 극히 약화됐다. 민족청년이 다 반탁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 찬탁으로 변하게 되니 시민들이 느끼길 ‘공산당이 이상하다’고 여기게 되면서 부터 공산당 세력이 많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영·소 모스크바 3상회담을 열어 5년 신탁통치를 하겠다는 합의를 봤다. 한국 국민들이 반대를 하였다. 그 중에 공산당 책임비서 당수 박헌영도 반대 성명을 냈었으나, 울분을 토하면서 평양에 갔다왔는데, 스탈린이 박헌영을 불러 다음날 가니, ‘찬탁을 지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내려온 후 지시를 따르게 되었다. 1월 3일 서울운동장(구동대문운동장)에서 ‘반탁궐기대회’를 열었는데, 이와 반대로 박헌영은 전평노조에게 ‘찬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평은 ‘찬탁 플래카드’를 만들어 10만 명 이상 동원되었었다... 많은 사람이 반탁을 외쳤지만 이들은 조직화되어 있는 청년단체에 당하지 못해, 일반시민들은 뒤로 빠지게 되면서, 찬탁 플래카드를 들고 시가행진을 동대문 → 종로 → 광화문까지 했다. 당시 시민들이 볼 때 불만이 많았다. 반탁이라 하더니 어느 순간 찬탁이라 하면서 돌아섰다고 말이 많았다(인터뷰 I, 2003. 7. 2).

한편, 전쟁은 흔히 대화의 또 다른 방식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승자독식에 의해 끝이 났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쟁을 통한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갈등의 봉합으로 끝이 났다는 점에서 비극적인 것이었다. 승자독식 방식의 전쟁은 양자택일을 강요했기 때문에 적대적인 진영은 물론 중도파의 몰락을 가져왔다. 따라서 한반도는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중도파가 생존할 수 없는 척박한 토양이 되었다.⁴²⁾

42) 중도파의 몰락은 냉전 구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해방 직후 중도좌파(특히 인민당)의 ‘좌우합작노선’ 내지 ‘민족통일전선’이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바람직한 길’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정영태, 2000: 264~265), 한반도에서 “미소간의 대립이 첨예화할수록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가능성만이 열려 있었다”(김익진, 1985: 99). 즉 조선공산당의 계급노선 또는 친소노선, 한민당의 반공노선 또는 친미노선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었다. 한편, 일제시대 좌파의 민족해방운동도

냉전반공주의적 조건에서는 이념과 지지 기반이 서로 다른 정당들이 나타나기 어렵다. 분단국가 건설의 주역이었던 두 중심적인 정치세력, 즉 이승만과 한민당같이 보수적인 이념적 지향을 갖는 여야당을 제외하고는 제3의 다른 종류의 정당은 유지될 수 없었다. 설령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경우에도 빨갱이 혹은 친북세력으로 정의하는 순간 쉽게 배제될 수 있었다... 단일 정당체제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최장집, 2003: 48).

한편, 전쟁 이후의 공고화된 분단체제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동전의 양면인 ‘반북 이데올로기’를 끝없이 양산했고, 이것은 우리의 이념적 상상력을 앗아가 버렸다. 이후 지식인들조차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단지 ‘상상’만 하는 데도 30년 이상이 걸렸다. 일반국민은 여전히 레드콤플렉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형성된 이념빈곤은 이후 한국정치를 심하게 비틀었다. 친일파가 지배세력으로 온존함으로써 반제(反帝)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중도파는 여전히 기회주의자 또는 빨갱이로 오인받았기 때문에 정치세계에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특히 이념에 기댈 수 없었던 정치인과 국민들은 지역주의와 혈연 및 학연에 자신을 의지하였고, 그 결과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지연되고 왜곡되었다.

마지막으로, 해방기 정치 과정을 경유하면서 심각한 ‘내상’을 가진 이분법적인 이념지형이 고착화되었다는 데 한국정치의 비극이 있다. 1948년에 이르러 좌우익 간의 전투는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우익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이르러 북한도 정파간의 치열한 전투를 통해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완전한 승자의 자리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중도파의 입지를 협소하게 만들었다. “민족해방운동에서 민족부르주아층이나 소부르주아상층의 민족주의계열은 탈락했고, 노동자·농민(특히 빈농) 그리고 ‘민족혁명적인’ 학생만이 믿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공산주의자들은 보았다. 이들은 신간회에 참여한 노동자·농민·청년층을 신간회에서 분리해 계급별로 재편해 각각 혁명적 노동조합·농민조합, 그리고 (학생)반제동맹(反帝同盟)에 결집시키려 했다. 민족통일전선은 필요에 따라 이러한 조직들이 일시적으로 공동 투쟁하고 다시 해체되는 임시투쟁위원회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이로써 1920년대 중반 이후 민족통일전선의 기본 노선이었던 공산주의와 민족주의계열의 단일정당론은 붕괴했다”(박한용, 2000).

남북한 내 이데올로기 지형은 승자독식의 원칙이 관철되었고, 이 승리와 기쁨에 바탕하여 양대 세력은 ‘전투’를 ‘전쟁’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하지만, 1950~53년까지의 한국전쟁은 휴전이라는 미봉책으로 귀결되었고, 이후 남북한은 전쟁 의지에 기반한 냉전적 적대체제를 내화시키는 작업에 돌입했다. ‘전시체제’는 특히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승자독식 체제를 강화했다. 즉 “이데올로기 지형의 극우경향과 지형의 축소 불구화”(손호철, 2003: 129)를 가져왔고, 이에 따른 보복의 정치와 검열의 정치는 남한 내 좌파의 소멸과 레드콤플렉스라는 집단 의식을 형성했다.

남한에서 ‘빨갱이’, 북한에서 ‘미제간첩’ 혹은 ‘반동’이라는 말은 단순히 적을 지칭하는 개념을 넘어, 사회의 지배구조와 사고의 틀을 이분법적이고 단순도식적인 구조로 바꾸고 이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담론적 기능을 갖는다. 바꿔 말하면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는 이제 각자의 사회 내에서 재생산되었다(최장집, 2003: 47~48).

이로 인해 한국의 이념적 스펙트럼(지형)은 협소화되었고 이념의 기준축을 극우파가 설정했다. 그 결과 남한의 근대국가는 반제와 반봉건의 과제와 정면으로 대결하지 못했고, 자유민주주의는 레드콤플렉스라는 집단적 최면 상태에서 최종적인 승자인 극우파에 의해 비극적인 탄생을 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비극적인 이유는 첫째, 그것이 최소한의 진보성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봉건제에 저항해서 자유, 정의, 진보를 부르짖었던 서구의 부르주아지들과는 달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일체에 협력했거나 독재정권의 엄호를 받은 지주계급 또는 신흥부르주아지들이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일체의 진보성을 소멸시켜야만 했다. 따라서 이들은 진보운동을 억압, 질식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완전무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세력들은 애초부터 진보성과 친화적이지 않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비극적인 위치에 있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비극적인 두 번째 이유는 최소한의 합리성도 가지기 힘들었다는 점에 있다. 이들은 자신들과 다른 이념적 입장을 가진 일체의 세력을 ‘빨갱이’로 딱지 붙이고 모든 대화를 거부했다. ‘아’와 ‘적’

을 구분하는 검열의 언어와 이분법의 정치가 대화와 협상의 자리를 대신 했고 이러한 가운데 중도파들조차 자기 자리를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 또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해방 공간에서 어떤 매개자 또는 비평가도 없는 가운데 비합리성에 기반하여 슬픔에 찬 비극적 탄생을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비극적인 이유는, 진보진영이 ‘자유민주주의 = 독재정권의 장식품’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무조건적인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일체의 진보성과 합리성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저항과 동일시되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억울한 처사였다. 자유민주주의는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비극적으로 남한땅에서 탄생했다.

제2절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1. 사회주의와의 만남

전평은 조선공산당(조공)의 대중조직이다. 전평은 조공의 기본 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에 이념적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조공의 전략 및 전술과 보조를 맞추었다. 따라서 전평과 사회주의의 만남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의 만남의 계기와 경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은 이미 1920년대부터 사회주의와 깊은 만남을 가졌고 이 만남의 성격은 해방정국에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제시대 사회주의자들과 조선 또는 사회주의와 노동조합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조선과 사회주의의 만남은 1920년대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의 강점과 1919년 3·1운동은 조선을 사회주의 사상이 성장할 수 있는 옥토로 변모시켰다. 조선인들은 자연스럽게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민족해방에 대한 대안사상과 대안세력을 찾았고, 3·1운동을 통해 자신감과 동시에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다.⁴³⁾ 이러한 상황에서, 1917년 새로운 세계관에 기 반해 혁명을 통해 성립된 소련은 조선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⁴⁴⁾ 이제 문제는 소련의 1917년과 조선의 1919년을 누가 연결할 것인가에 있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성장할 조건을 갖춘 비옥한 땅에 사회주의라는 씨앗을 뿌린 이들은 지식인들, 특히 해외에서 마르크시즘을 접했던 젊은 사람들이었다.⁴⁵⁾

-
- 43) 3·1운동은 조선인들에게 정치에 대한 자각을 가져다 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소설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이것이 나로서는 처음으로 정치의식에 눈을 뜨게 된 계기였다. 대중운동의 힘이 내 존재를 뿌리로부터 뒤흔들어 놓았다. 나는 하루종일 거리를 뛰어다녔고 아무 시위에나 가담하여 목이 터져라 외쳐댔다. … 나는 힘의 의미와 무저항의 공허함을 깨달았다. … 전국에서 도합 20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재산도, 농삿일도, 일신상의 안전도 애국열의 물결 속에서 모조리 잊어버렸다. 이것은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특이한 운동이었을 것이다.”(님 웨일즈, 조우화 옮김, 『아리랑』, 동녘, 1992: 63~65. 전명혁, 1999 재인용). 한편, 조선인들은 3·1운동 이후에도 기존의 민족주의 운동의 한계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3·1운동 이후, 조선 각지에서 청년 단체가 속속 결성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종교적 또는 민족개량주의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부르주아 민족주의자 33인이 모두 종교가이고 3·1운동 후 대부분이 민족개량주의로 전락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 때문이었다”(이재화, 1986: 80~81).
- 44) 러시아 혁명이 조선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다음의 언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주의가 기본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방 아닙니까? 억압과 착취가 없는 평등사회를 실현한다는 사회주의의 이상이 일제 식민지 지배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 아래 신음하면서 해방을 꿈꾸던 조선 민중에게 일종의 복음처럼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고 코민테른이 성립되고 국제 사회주의운동이 식민지 피압박 민족에 대한 지원을 표방하면서 현실적으로도 사회주의와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1920년대 초에 급격하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주의가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이준식·김득중 외, 2001). 이 밖에도 조선에서 사회주의가 보다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원인은 1차 세계대전에 따른 국제적 수준의 혁명과 민족해방의 분위기,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일제의 수탈적 탄압에도 있었다.
- 45) “먼저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지식인 출신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기 사회주의자 70여 명을 놓고 조사해 보니까 학력을 알 수 없는 20여 명을 뺀 50여 명 가운데 35명 정도가 전문학교 출신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체 인구 가운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감안할 때 초기 사회주의운동이 지식인 운동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이준식·김득중 외, 2001).

우리 일제시대 때는 일본 유학을 가면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돌아왔다. 한국 민족의 설움과 일본의 식민주의 등을 공부하다 보면 합리적인 공산주의에 매력을 느끼고, 자본주의 폐단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인터뷰 I, 2003. 7. 2).

이처럼 일본 유학생과 해외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근거로 해서 활동했던 한인사회주의단체들⁴⁶⁾이 사회주의를 국내에 소개했고 이것은 국내활동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 우선, 3·1운동 직후 국내의 언론매체는 광범위하게 사회주의 사상을 소개했다. 예를 들어, <동아일보>는 “1921년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려 73회에 걸쳐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표제하에 그의 일생, 활동, 볼셰비키혁명 등을 연재하였다.” 한편, “1920~22년 무렵 국내에서 발간된 <개벽>, <공제>, <아성>, <신생활> 등의 잡지에는 크로포트킨 등 무정부주의에 대한 글이 빈번하게 소개”되었다. “‘민중문화의 제창, 자유사상의 고취’를 내걸고 1922년 3월 창간된 <신생활> 6호에서 정백은 『노농로서아의 문화시설』이란 글을 통해 1917년 10월 혁명 이후 건설된 노농정부는 미술, 연극, 문학, 교육, 정치경제학, 사회과학 등 각 부문에서 새로운 민중적 문화를 성장시키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전명혁, 1999).

46) 1919년 국내에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도입·수용되기 이전 러시아 지역에 이주해 간 조선인들은 러시아혁명을 직접 경험하고 참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되었다. 1919년 3·1운동의 정치적 세례와 1920~21년 내전 시기에 조선인 공산주의 그룹은 활발히 출현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은 전위당 창립에 노력하여 1918년 4월 이동휘 등이 중심이 되어 한인사회당을 결성했다. 이후 한인사회당은 이동휘가 상해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부임하면서 활동무대를 상해로 옮기게 된다. 이들은 1921년 5월 고려공산당(상해파)을 창립하였다. 한편, 1920년 1월 러시아의 이르쿠츠크에서 러시아공산당 이르쿠츠크 현 위원회 산하에 한인공산당이 창립되었고, 이들도 1921년 5월 고려공산당을 창립하였다.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라는 두 개의 고려공산당이 동시에 결성된 것이다. 이들은 국내의 정세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국내에 전위정당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20년 말에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에 16개 이상의 조선인 당 조직이 존재하고 당원 및 후보자수는 2,305인이었다.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은 각지에서 대규모 선전활동과 군사, 조직활동을 수행했다. 조선인 전단과 소책자가 발행되고, 조선인 적군 부대가 편성되어 일본 점령군과 백위군에 항거하여 투쟁했다(전명혁, 1999 참조).

한편, 1920년대 국내 지식인들과 활동가들도 합법·비합법의 다양한 사회주의 서클을 조직했다. 즉 “서울, 평양, 부산, 함흥, 원산, 인천 등의 주요 산업 중심지나 농촌에서도 선진적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인텔리 속에서 비합법적 마르크스주의 서클이 수없이 조직되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론적 학습의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 속으로 침투하여 마르크스주의를 실천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서울의 무산자동맹, 북풍회, 노동당, 평양의 독서회, 대구의 상미회(尙美會), 신의주의 신인동맹(新人同盟), 원산의 사회과학연구회 및 기타의 사상단체 들은 사상강연회와 문화선전활동 등 각종의 합법적 방법을 이용하여 노동자, 농민, 근로대중 속에 마르크스주의를 해설, 선전하였다”(이재화, 1986: 77, 78).

1920년대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독해와 서클활동은 점차 체계화되었고, 결국 화요회계를 주축으로 한 조선공산당이 결성되었다(1925. 4. 17).⁴⁷⁾ 조선공산당과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국제공산당인 코민테른의 승인을 얻었지만, 공산당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내부의 분과활동에 대한 코민테른의 해체 명령⁴⁸⁾으로 인해 지리멸렬해졌고, 결국 이후 별다른 활동 없이

47) 창립대회에는 金在鳳, 金洛俊(金燦), 金若水, 朱鍾建, 尹德炳, 陳秉基, 趙東祐, 曹奉岩, 宋奉瑀, 金尙珠, 俞鎮熙, 獨孤侏, 鄭雲海, 崔元澤, 李鳳洙, 金基洙, 申東浩, 朴憲永, 洪憲裕 등 19명이 참석하였다. 19인 가운데 김약수·송봉우·정운해 등 3인은 북풍파, 이봉수·유진희·주종건 등 3인은 상해파였고 나머지 13인은 모두 화요파 출신이었다. 이들 19명 중 김재봉·김약수·김찬·유진희·조동호·주종건·정운해 등 7인으로 이루어진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되었다. 7인의 중앙위원들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비서부, 감사부, 조직부, 조사부, 정치경제부, 선전부, 노동부 등 7개 부서를 설치했다. 1차 당 창당 시기에 전체 당원수는 120명이었다. 이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그룹 20명, 북성회(일본) 7명, 이르쿠츠크 그룹 5명, 상해 그룹 2명, 중립 그룹 86명 등이었다(전명혁, 1999).

48) 코민테른은 12월 테제를 통해 당의 해체와 재건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첫째, 지도부가 거의 지식계급과 학생만으로 구성돼 있으며, 둘째, 계급적 혁명당이 아니라 소부르주아 정당이고, 셋째, 과벌 싸움이 중요한 해당적 요소이다(김남식, 1984: 22). 즉 ‘12월 테제’는 “과거 조선공산당은 지식인 중심의 당이었고 소부르주아적 과벌 투쟁만 거듭했으니, 앞으로는 당을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더 나아가 이 테제는 “민족부르주아지(부르주아민족주의자)는 이미 민족해방운동에서 탈락했으며, 소부르주아민족주의자 또한 이들의 뿌리가 지주계급과 닿아 있기 때문에 토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토지혁명의 요구가 나올 경우 반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 “신간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에 대해 의혹

지하에서 해방을 맞게 되었다.

한편, 사회주의는 자신들의 세계관을 실현시켜 줄 노동운동을 찾아 나섰다. 사회주의는 1920년대 노동운동에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노동운동이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조직화되고 실천된 것은 1930년대라고 할 수 있다.⁴⁹⁾ 1930년대 노동운동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운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1920), 조선노동총동맹(1924. 4), 조선노동총동맹(1927) 등이 조직화된 토대 위에서 출발했다. 1920년대 후반의 노동운동은 조선노동총동맹에서 조선노동총동맹이 분리되면서 조직적 성격을 강화하고 계급적 역량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노동운동이 특히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하게 된 것은 코민테른의 산하단체인 프로핀테른(노동조합 인터내셔널)의 “조선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임무에 관한 테제”(소위 『9월 테제』, 1930. 9. 18)에 따른 것이었다.

공황의 결과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민족해방투쟁... 특히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이 격화하고 있다... 조선에서의 혁명 물결의 고조, 중국과 인도의 혁명, 그리고 소비에트연방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를 보고 겁에 질린 민족개량주의적 부르주아지와 그들 단체인 <조선일보>

과 불신”을 제기했다(박한용, 2000).

49) 물론 3·1운동 이후 열린 공간에서 밑으로부터 조직 결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20년대에 이미 노동조합의 전국조직이 나타났다: “1920년 전국조직인 조선노동공제회가 결성되었으나 운동의 내용이 문자 그대로 공제회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 1924년에는 노동조합 24개 단체, 농민조합 82개 단체가 조선노동총동맹을 결성하여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 강령을 갖춘 합법적 노동조합운동을 벌였으나 노동운동이 농민운동과 미분화된 상태에서 운동도 소작쟁의에 집중되었다. 1927년에는 농민조직과 분리되어 조선노동총동맹으로 개편되어 비로소 임금노동자의 전국조직이 결성되었다”(이일재, 연도 미상). 하지만 1920년대의 노동조합운동은 사회주의 혁명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 성격을 띠었다기보다는 실리적 경향이 강했다는 점에서 1930년대 노동운동과 비교된다: “1930년 제5차 국제적색노동조합대회에서 조선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채택하고 『9월테제』, 1931년 범태평양노동조합회의에서 조선노동운동의 지도노선이 확립됨으로써 강력한 정치노선을 견지한 정치적 조합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범태평양노동조합회의의 지도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하조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섬유노동조합, 출판노동조합, 금속노동조합, 인천을 중심으로 금속노동조합, 항만노동조합, 원산의 항만노동조합 등의 산별노동조합 형태로 형성되어 정치적이고 전투적인 조합운동이 전개되었다”(이일재, 연도 미상).

<동아일보> 그리고 천도교의 일부는 장개석과 중국의 반(反)혁명을 하나의 선례로 모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신간회도 마찬가지로 민족개량주의적 단체이다... 조선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원산총파업에 대한 조선의 모든 프롤레타리아트의 지지는 이 나라 혁명적 노동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전환점을 이루었다... 한편 조선 노동자운동의 큰 약점과 결함도 드러났다. 노동조합운동의 주요 약점은 조선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무런 독자의 혁명적 노동조합을 갖지 않았다는 데 있다. 조선노동총동맹은 약 4만 7천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소부르주아적·민족개량주의적 지도자를 지도부로부터 추방하는 데 성공했던 곳은 몇몇 지방 조직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인터내셔널 지지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총동맹의 내부에서 좌익을 결집시켜 조직하는 것이다... 투쟁의 과정에서 좌익은 개량주의적 지도자의 기회주의적이며 배반자적인 전술을 계통적으로 폭로하여 노동자 대중을 노동조합 속으로 획득해야만 한다(『9월 테제』, 박한용, 2000 재인용).

이 테제는 유럽 사민주의자들에 대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파시즘 전쟁을 혁명으로 전화해야 한다는 코민테른의 입장에 기반하고 있었다. 즉 『9월테제』는 코민테른이 지시한 “유럽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조선판”이라고 할 수 있다(박한용, 2000).⁵⁰⁾ 하지만, 조선의 노동운동은 식민지시대 극복이라는 민족해방운동과 1928년에 사실상 붕괴된 공산당 재건활동과 연관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었다. 결국 노동조합운동은 공산당 재건의 매개고리 또는 경로로서 위치되었다. 이것은 코민테른의 지시사항이기도 했는데, 이 방침은 “신간회를 해소하고 계급별 대중조직을 결성하며, 대중조직을 지도할 전위조직(조선공산당)은 계급별 대중조직이 튼튼하게 자리잡은 후 별도의 경로를 통해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한용, 2000). 따라서 이 시기 노동운동은 혁명적 노동조합주의가 될 개연성을 갖고 있었다.

50) 동일한 맥락에서 “프로핀테른범태평양비서부의 『10월서신』(1931. 10)과 국제공산청년회(KIM)나 코민테른의 지령은 조선의 공산주의자에게 혁명적 노동조합·농민조합 등 계급적·대중적 기반을 구축한 후 공산당을 재건하라”고 지시했다(박한용, 2000).

한편, 이러한 코민테른의 지침과 상관없이 원산총파업을 기점으로 삼아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자발적으로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1929년 2월 3천 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100일간의 원산총파업은 몇 년에 걸친 혁명적 정세의 서막이었다. 1930년 부산 조선방직공장 동맹파업, 신흥탄광노동자 폭동, 평양고무공장 노동자파업, 1931년 평양면옥(麵屋) 노동자파업, 1932년 청진 부두노동자파업, 1933년 부산고무공장 노동자 동맹파업 등 크고 작은 노동운동이 터져 나왔다. 1930년에는 160건의 파업에 18,972명이, 1931년에는 201건의 파업에 17,114명이 참여해 일제 식민지 시기 통틀어 가장 높은 파업 수치를 기록했다. 농민운동도 발맞추어 일어났으며, 광주 학생운동은 3·1운동 이래 가장 크고 격렬한 대중투쟁으로 발전했다. 노동자·농민·학생층의 폭력시위가 잦아지고 ‘소비에트 러시아 만세’와 같은 사회주의 구호도 등장했다”(박한용, 2000).⁵¹⁾

이처럼 일제시대에 이미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지적 세례를 받고 공산당의 창당과 노동조합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노동조합운동은 사회주의와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혁명주의자들이 공산당의 무력화 이후 공산당의 재건을 대중운동 특히 노동운동에서부터 찾음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은 정치화되고 혁명적인 지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는 경제투쟁에 국한되지 않고 전위정당 건설의 거점과 반제투쟁의 선봉으로 자신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런 점에서, 1930년대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재건될 공산당이 다양한 대중조직 또는 대중투쟁 공간으로 나아가는 파이프라인이자 예비당원의 ‘저

51) 대체로 1931년부터 공산주의자들은 공장·농촌·학교 내에서 혁명적 노동조합·농민조합 또는 반제동맹을 결성해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산업별협의회, 나아가 전국적 대중조직(예를 들어 산업별노동조합, 조선반제동맹)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핵심 활동가를 양성해 지역 단위의 공산주의그룹을 만들고 이들의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전국 단위의 조선공산당을 만들려고 했다. 서울상해파가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조선좌익노동조합전국평의회준비위원회를 조직한 사실, ML파가 공산당과 공산청년회를 먼저 결성하려던 방식에서 혁명적 노농조합 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 그리고 화요회계의 김단야가 조선공산당조직준비위원회가 붕괴된 후 1931년 이후부터 혁명적 노조·농조 결성에 중점을 둔 것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박한용, 2000).

수지'이며, 당의 대중적 토대를 구성하는 등 복합적인 성격”(박한용·김득중 외, 2001)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당 재건운동과 혁명적 노동운동은 거의 구별할 수 없었다”(안태정·김득중 외, 2001). 하지만, 일제시대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전투적이고 비타협적인 노동운동은 일제의 점증하는 탄압 앞에 초기 단계 또는 과업 과정에서 대부분 붕괴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일제시대 유산 때문에 해방 공간에서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보다 자연스런 만남이 가능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에 비해 일제투쟁 경력에서 도덕적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합법 활동이 가능했으므로 이 만남은 보다 용이한 듯이 보였다. 우선, 해방공간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을 급속하게 조직화했다.⁵²⁾ 대체로 이들은 ML계, 서울계, 화요회계, 콤그룹계 등의 4 분파로 집결했는데, 이것은 1920년대의 계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먼저 해방 당일 화요회계의 일부와 서울계, 상해파 등이 모여 장안빌딩에서 공산당을 조직했다(일명, 장안파). 같은 날 ML계도 공산당 서울시당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공산당을 조직하고자 했다. 하지만, 남한 공산주의자들의 최종 헤게모니는 박헌영 그룹에게 돌아갔다.⁵³⁾ 박헌영은 장안파 공산당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콤그룹과 화요회계를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일명 ‘재건파’)를 결성했다(1945. 8. 20). 같은 날 재건파는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라는 소위 『8월테제』를 잠정적인 정치노선으로 채택했다. 결국 남한내 공산주의자들은 열성자대회(1945. 9. 8)를 거쳐서 ML계 주도로 조선공산당

52) 해방 직후 공산주의자들은 열린 공간으로 뛰어나왔다. 이들은 매우 다양했는데, “친일협력자, 전향자, 투쟁을 포기한 유희자(遊休者), 지하에 숨어살던 자, 형무소나 유치장에서 1945년 16, 17일께 출옥한 자들이 끼어 있었다. 이들은 지난날 자기가 속했던 계보를 중심으로 서울로 모여들었다”(김남식, 1984: 13).

53) 박헌영 중심의 재건그룹은 전체 공산주의 운동은 대표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 전국적 수준에서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자 서클이었으며, 장안파와 대비되는 조직과 투쟁 경력, 그리고 『8월테제』라는 운동방침, 투쟁 경력에 따른 명망성과 권위 등을 갖고 있었다. 곧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 재건파 계열은 다른 공산주의 그룹에 비해 상대적인 차별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김무용, 2001). 반면 장안파 공산당은 대중운동과 결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에 협력 또는 전향으로 인해 정당성에 있어서도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조공)을 재건하고 박헌영을 책임비서로 선출했다(1945. 9. 11).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공으로 조직화됨으로써 조공과 노동조합, 즉 전평의 만남도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일제시대 이미 조선공산당과 노동운동 간의 만남을 경험했고, 조공의 대중전술이 노동조합을 주요 대중조직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과, 공장관리운동을 통해 이미 밑으로부터 조직화된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조직을 필요로 했다는 점에서 이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해방 공간의 노동조합은 처음부터 강한 이념성과 정치성을 갖게 될 운명을 갖고 있었다.

2. 내용과 정의

해방정국에서 조선공산당(특히 박헌영 그룹)은 좌파의 중심세력이었고, 노동조합의 전국조직인 전평은 이념과 실천의 측면에서 조공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⁵⁴⁾ 따라서 조선공산당이 해방 직후 중앙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정세 인식과 전략·전술의 교본으로 삼은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일명 『8월 테제』, 1945. 9. 20)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전평의 전략·전술을 이해하는 데 타당하다.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 집단들은 대체적으로 일제하 조선의 사회구성체를 식민지반(半)봉건사회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일본 제국주의하에서 조선은 한편으로는 식민지적 공업 발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주, 소작관계에 기반한 봉건적 생산관계 및 사회관계가 여전히 사회적 주요 기반을 이루고 있었다.⁵⁵⁾ 따라서 해방 이후 대부분의 정파들은 반제·반봉건을 주요 변혁과

54) 전평과 조공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전평 결성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준비위원회의 일부가 조공 당원이었던 점, 전평 결성대회에서 긴급 계의로 조공의 민족통일전선 노선을 지지했던 점, 전평의 조합원들 특히 집행위원장 허성택과 부집행위원장 박세영 등이 각각 조공의 서기국원과 당원이었던 점, 그리고 일제시대 때부터 노조운동과 조공운동이 함께 민족해방투쟁과 민주주의운동을 전개했던 점 등에서 전평과 조공은 조직적·정치적·역사적으로 긴밀한 상호 유대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양자간에는 서로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내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김태정b).

55) 해방 직후인 1945년 말에 당시 전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 중에

제로 상정했다. 여기에서 반제는 ‘일제의 잔재에 대한 투쟁’을 의미한다. 따라서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의 숙청은 절실한 민족적 과제로 제기되었고 일제가 소유했던 산업시설”을 국유화하고자 했다. 반봉건의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봉건적 반봉건적 토지소유제, 즉 농촌의 소작제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정치적 측면에서는 장구한 봉건적 인습과 신분차별에 시달려 온 여성들을 이 모든 질곡에서 해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여현덕, 1989: 47). 해방정국에서 조선공산당도 조선의 사회구성체를 식민지반봉건사회로 이해했다. 따라서 『8월테제』는 당시 조선혁명의 단계를 부르주아 민주혁명으로 규정하면서 권력의 기반과 혁명의 경로를 밝히고 있다.⁵⁶⁾ 우선 이 테제는 세계의 사람들이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나, “우리에게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이나, 반동적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이나”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조선의 객관적 정세(경제·정치·사회적)는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제 과업의 수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요, 조선에서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단계는 아직 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테제는,

서 1정보도 안 되는 토지를 소유한 영세농민들이 70%를 넘었다(여현덕, 1989: 31 참조). 이에 대해 권태섭은 “농촌에서 반예농적(半隸農的) 농업관계를 그 기저로 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독점자본을 침입시켜서 조선사회 경제구조를 반봉건적 식민지의 구조로 생성 발전시켰다”고 파악한다(권태섭, 『조선농촌의 계급구성』, 『조선경제』, 1권 2호, 1946. 여현덕, 1989: 34 재인용).

- 56) 한편 공산주의자들의 또 다른 분파인 장안파는 박헌영의 『8월테제』에 맞서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자의 긴급 임무”, “현단계의 정세와 우리 임무”(1945. 9. 15)를 발표했다. 이 문건은 현단계를 식민지 반봉건사회에 기반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단계로 보는 박헌영과는 달리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보고 있다: “조선에 있어서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단계적·서열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혁명이 동시에 수행되면서 특히 전자가 후자의 일부으로서 그 중에 포함된 형태에서 전개되어 나가야 할 제(諸) 조건을 갖추고 있다”(『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자의 긴급 임무』).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장안파는 박헌영파를 우경기회주의자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헌영파는 장안파를 ‘좌경기회주의자’로 비판했다(김남식, 1984: 35~36 참조). 하지만 여기에서는 조공이 해방정국에서 좌파의 중심세력이었고 다른 정파와 비교하여 노동운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조공을 중심으로 전평의 이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일 조선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나니, 민족적 완전독립과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이 가장 중요하고 중심되는 과업으로서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일본의 세력을 완전히 조선으로부터 축출하는 동시에 모든 외래 자본에 의한 세력권 결성과 식민지화 정책을 절대 반대하고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혁명적 민주주의 정권을 내세우는 문제와 동시에 토지문제의 해결이다.(『8월테제』)

라면서 민주혁명의 구체적 실천에 대해 논하고 있다. 즉 『8월테제』는 부르주아(진보적) 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반제·반봉건의 과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조선 사회제도로부터 자본주의적·봉건적 잔재를 깨끗이 쓸어버리고 자유발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우리는 토지문제를 혁명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조선의 전 토지는 국유화한다는 것이요, 국유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농민위원회, 인민위원회가 이것을 관리한다.” 이 밖에 『8월테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가두행진, 파업의 자유, 8시간 노동의 실시, 선거권 보장 등의 일반민주주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에 기반하여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전략을 추구하기보다는 우선 부르주아 민주혁명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전술 수립에 골몰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조공은 전략적 차원에서 건국준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⁵⁷⁾

조선공산당의 민주혁명론은 ‘반동적’ 민족자본가, 친일파(친미파), 민족반역자, 파쇼분자 등을 제외한 노동자, 농민, 소부르주아지, ‘양심적’ 민족자본가 등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고자 했다. 이것은 전쟁의 실천요강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조선의 완전독립 즉 친일파, 민족반역

57) 물론 조선공산당이 부르주아 민주혁명을 중착점으로 상정한 것은 아니었다. 즉 조선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과 반제·반봉건 투쟁은 “조선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조속히 넘어가게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공은 궁극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추구하는 ‘혁명적 전위’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고 주장했다(『8월테제』). 이러한 원칙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조선공산당은 미군정과 파국적인 단계가 되기 직전까지 부르주아지 혁명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조선공산당은 노동자들의 공장 접수와 강력한 저항운동을 오히려 억제하기도 했다.

자를 제외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족통일전선 정권의 수립에 적극 참여한다. 둘째, 민족자본의 양심적 부분과 협력하여 산업건설을 함으로써 공황, 악성 인플레이션을 극복한다.”⁵⁸⁾ 이처럼 조선공산당은 민족통일전선을 구상했고, 여기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해계모니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르주아 민주혁명은 반제반봉건 과제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해계모니가 관철되는 데는 상당한 제약적인 내용을 갖고 있었다.

이상의 민족통일전선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민족모순을 계급모순의 반열에 올려놓고 적극적으로 사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⁵⁹⁾ 즉 해방정국에서 조공은 일제시대의 연장선상에서 민족 문제와 계급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⁶⁰⁾ 조공은 기본적으로 계급중심성을 견지했으나 2단계 혁명

58) 민주혁명론의 반파쇼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론은 1935년 제7차 코민테른의 반파쇼인민전선론과 그것을 식민지 국가에 적용한 반제민족통일전선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즉 “코민테른 7차대회 노선은 국제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영국, 소련 등이 연합하고, 대전 뒤에는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삼상(미·영·소)회의’와 이것에 따라 조선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한 것 등으로 구체화되었지요. 그리고 1930년대 후반기부터 조선 사회주의자들도 국내외에서 반제민족통일전선론에 입각해서 운동했다고 봐요. 일제시대의 경우 ‘이재유 그룹’, ‘경성 콤파그룹’, 만주의 조국광복회 운동, 8·15 이후에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과 ‘미소공동위원회’ 사업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지지 등이 바로 제7차 대회의 반파쇼인민전선론과 반제민족통일전선론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인민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 나아가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조차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김무용, 2001).

59) 최장집은 해방 직후 정치의 “갈등축 혹은 대립축이 일본제국주의 세력 대 민족독립운동”이라고 규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일제하 사회주의자들을 좌파민족주의로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식민통치하에서 민족독립운동은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한 혁명적 민족독립운동 세력과 문화교육운동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운동 세력”으로 나뉜다(최장집, 2003: 42).

60)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1920년대에 민족과 계급 모두 주요 모순이고 따라서 동시에 해결해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식민지 상황은 사회주의운동과 반제운동을 긴밀하게 연결해 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제식민지 조선의 공업은 그 자본금의 94%가 일본인의 소유였으며, 광업은 가행광산(稼行鑛山)의 95% 이상이 일본인 소유 광산이었던 만큼 이러한 조건에서 노사협조니 수정자본주의적 노동운동이니 하는 것은 곧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입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일제하 조선의 노동운동은 일제의 타도를 요구하는 반제 민족해방투쟁과 자본가의 타도를 요구하는 사회주의운동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김낙중, 1982: 78).

론(반제반봉건의 과제를 해결할 임무를 부여받은 민주혁명단계와 궁극적으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혁명 단계라는 혁명의 성장전화론 또는 단계론)을 제시함으로써 계급 문제에 대한 보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전술상 후퇴했다. 이 관점에 의하면 현단계는 부르주아지 혁명단계이기 때문에 민족문제와 민족국가 건설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두어야 했다.⁶¹⁾

해방 후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사회주의자들은 민족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조공의 일차적인 혁명과제가 반제·반봉건이었듯이 반제, 곧 친일파 문제는 당시 사회주의 정치의 기준이었습니다. 국가건설이나 정부수립 방식도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하고 광범한 계층 계급을 망라하는 민족통일전선이었고, 이것이 대중운동 방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방 후 공산주의자들이 계급지상주의자라는 일부의 견해와는 달리,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사회주의운동의 노선과 이념을 민족·민족주의에 지나치게 융합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이 현실을 비판하고 대중을 동원할 때 일반적으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호소했습니다. 이는 해방 후 사회주의 세력이 정치의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또 사회주의운동이 민족주의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고 어떤 점에서는 거기에 제한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김무용, 2001).

이상에서 보듯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동일하게 주요 모순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반제 과제 또는 민족해방 문제가 목전에 있고, 이중혁명론 즉 부르주아지 민주변혁을 당면과제로 상정했기

61) 공산주의자들의 민족과 계급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일제시대로부터 기원하고 있다. 식민지하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민족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반제·반봉건을 계급모순 해결과 동일시했다. 물론, 1920대 말 코민테른의 계급주의 노선 이후 일시적으로 계급모순을 주요 모순으로 상정하기는 하였으나 현실적인 실천운동은 민족해방투쟁에 있었다.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실 민족해방 문제였습니다. 식민지 상황에서 민족해방이 전제되지 않으면, 계급해방의 문제란 추상적인 선언이었기 때문이지요. 1920년대 초 사회주의자들은 대체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동시에 사고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1925년 창립된 조선공산당도 당면 과제로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을 내걸었죠”(전명혁, 1999).

때문에 해방정국의 현실정치에서는 민족모순이 계급모순에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해방정국에서 미군정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였기 때문에 미군정에 대한 태도는 좌파의 실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해방 직후 좌익은 미군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앞에서 보았듯이 해방정국에서 조공은 부르주아 민주혁명의 단계로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있었고, 이 관점에서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로서 ‘식민지 해방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조공은 조선의 해방이 “우리 민족의 주관적 투쟁적인 힘에 의해서보다도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인 소·영·미·중 등 연합국 세력에 의하여 실현”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로의 일단계 혁명, 즉 부르주아 민주혁명을 제안했다(『8월 테제』). 이것은 조공이 미군정과 협조해서 부르주아 민족국가 건설을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신전술’이 나오기 이전까지 미군정에 대한 협조전술로 구체화되었다.

이상에서 조선공산당의 해방정국에서의 입장을 사회구성체론, 정세관, 전략 및 전술관, 미군정에 대한 관점, 통일전선론 등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것에 의하면 조선공산당의 전략은 “민족통일전선에 의한 인민정권 수립이라는 목표 아래 정치적으로는 미군정에 협조하고, 경제적으로는 양심적 지주나 민족자본가와의 협력을 중시하는 우경적 경향”을 내포하고 있었다(김무용, 2001).

그렇다면 이러한 조공의 입장이 바로 전평의 입장과 등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는 않다. 한편으로는 조공과 전평의 인적자원이 중복되었고 전평이 분명 조공의 대중조직으로 기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공과 전평 간에는 정치조직과 대중조직의 차이, 또는 전위들과 대중들과의 차이, 실천강령과 과제의 차이 등이 엄연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후자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념적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전평이 조공에 의존했다고 본다. 이것은 몇 가지 점에서 논거가 제시될 수 있는데, 우선 전평이 극단적인 대립적 이념지형에서 자신의 독자성을 가지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와 소, 국내의 우파와 좌파, 그리고 남과 북이라는 극단적인 양 진영의 대립은 전평이 노동조합으로서 자신의 공간을 가질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조직인 조공의 지시에 전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 속에 있었고, 이것은 전평이 조공의 정치적 대중조직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이것은 전평의 조직구성원들을 보면 명확해진다. “전평 간부의 대다수가 조공의 간부를 껌”하고 있었기 때문에(김익진, 1985: 105) “전평 결성 이후에 조공과 전평은 조직원 구성에서 이중멤버십”(전국노동단체연합 정책실, 연도 미상)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공산당(1946년 후로는 남로당)의 가장 기본조직인 세포가 각 공장, 사업장, 직장에 있었고, 각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지금의 단위노조)에서 지부, 지역평의회, 산업별 노동조합 중앙, 전평 중앙 등 모든 기관에 당원으로 구성된 프락션 조직이 있어서 그 기관을 장악하고 있었다. 전평의 정치적 방침은 이 당의 프락션 세포를 통해 당의 방침이 실천되는 것이며, 러시아 볼셰비키의 조직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일재, 연도 미상).

더 나아가 전평은 조공의 지도, 특히 특정 정파에 종속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영등포지역 노동운동에서 보여지듯이, 조공 중앙이 ‘자기 사람’을 내려 보내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양자의 관계 속에서 조공 중앙에게 전평은 ‘자기 세력’이라는 생각이 강조되기 마련이고, 전평은 조공 중앙의 노선을 대중조직 차원에서 수행하는 수동적 조직으로 전략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김무용, 2001).⁶²⁾

62) “전평은 조선공산당 중앙, 특히 조선공산당 내 박헌영 세력의 지지기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영등포 사회주의 그룹은 전평을 경성콤그룹의 아성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전평 집행부는 대부분 조선공산당 중앙 재건파인 경성콤그룹과 정치적·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해방 직후 노동운동에 관계하던 전평 집행부는 대부분 경성콤그룹의 핵심인 김삼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김삼룡은 조선공산당 중앙의 정치국원이자 서울시당부 책임자로서 해방후 노동운동, 전평의 조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김삼룡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인물은 전평 위원장 허성택, 전평 부위원장 박세영, 전평 조직부장 현훈 등이었다. 이들과 함께 전평 서기부장 한철, 전평 조사부장 문

셋째, 정치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한 전평의 입장도 전평이 조공의 정치 활동을 충실하게 반영했다는 점을 입증한다. 전평은 노동자의 당면 이익 외에 민주정부 수립을 운동의 기본 방침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 활동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는데, 전평의 결성대회 강령에 의하면 정치 활동의 비중이 경제투쟁 이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조직활동은 각 공장 내의 노동자의 당면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부절(不絶) 투쟁을 전개시켜 그 투쟁 과정을 통하여 더 높은 정치투쟁에까지 양양시킴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만일 노동조합운동이 당면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투쟁만으로 만족시켜 정치투쟁을 무시, 억제한다면 이는 곧 조합주의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그와 반대로 노동자의 일상 이익을 위한 투쟁을 무시하고 정치투쟁으로만 지도하려는 대중과 유리된 좌익 소아병적 경향과도 싸워야 될 것이다... 즉 노동자의 당면 일상 이익을 위한 투쟁을 지도 조직하며 이 투쟁을 조선의 자주독립 문제와 결부시켜... (김익진, 1985: 104 재인용).

이상에서 보듯이 전평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균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경제투쟁의 기관이다라는 등의 경제주의적·조합주의적 경향은 현 순간과 같이 정권의 문제가 중대화되고 있는 때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무자비한 비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견지에서 우리는 당면의 정권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정권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전면적으로 참가하고 그 선

은종 등도 경성콤그룹 계열로 분류되고 있었다”(김무용, 2001). 한편, 전평의 조공에의 종속성에 대해 안태정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전평은 당의 이러한 입장을 승인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전평은 “조합은 당의 부속물이 아니다”, “당은 중(重)하고 조합은 경(輕)하다는 견해는 철저히 청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당은 당으로서 조합은 조합으로서 각기 독자적 임무와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활동도 각기 독자적으로 전개되는 것이지 조합은 당의 지령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거든요(안태정·김득중 외, 2001). 이에 대해 김무용은, “해방 후 조공과 전평은 서로 상대적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 언술이나 표방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적인 조공과 전평의 관계, 특히 이것이 당운동과 대중운동의 관계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언표와 실체는 다르다고 반박한다(김무용, 2002).

두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안태정, 2002)는 데서 보듯이 투쟁의 중심성이 항상 정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전평은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민주혁명을 위해 노동조합이 출선수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르면 정치투쟁이 경제투쟁보다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전평 노동자들은 과거에 생활의 쓰라린 체험 속에서 나라 없는 고통을 골수 깊숙이 맛보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노동자·농민 등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하는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정치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민주주의 정권’은, 1947년 6월 30일의 미소공동위원회 자문에 대한 ‘전평’ 및 산업별 전국적 노동조합 답신서에 의하면, 정권 형태로는 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한 인민의 자치기구인 인민위원회였고, 국호로는 조선인민공화국이었다. 그리고 국내외의 친일파·민족반역자·친파쇼분자, 모리배·대자본가·대지주 등 비(非)인민들을 인민공동정권 담당세력에서 배제하고,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한 소시민·중간층, ‘양심적’ 민족자본가 등의 인민들을 민족통일전선정권=인민공동정권을 담당하는 주체로 생각했다(안태정, 2002).

넷째, 조공이 전평에 매우 집착하고 있었고 실제로 자기 사람과 자기 조직을 심는 데 성공하고 있었다는 점도 전평이 조공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조직과 관련하여 볼 때 당과 대중조직 특히 노동조직의 관계와 관련하여 조선공산당은 전형적으로 지도와 피지도 또는 의식성과 자생성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있었다: “조선공산당의 『8월테제』 등을 보면, 노동조합을 조공의 ‘보조조직’으로 보거나, 앞에서 말했듯이 노동자들에게 ‘계급의식’을 주입한다고 하여 당과 대중조직의 관계,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들의 관계를 ‘위계서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당은 대중조직의 ‘상위’에,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대중의 ‘상위’에 있다는 것이지요”(안태정·김득중 외, 2001). 『8월테제』는 이 언급을 확증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의 전위는 불세비키당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당은 노동계급의 한 부분이며 한 부대이지마는 그것은 보통부대가 아니고 특별한 정예부대이다.… 당의 과업은 근로대중을 당의 수준에까지 올리며 자기

전당원으로 하여금 의무적 군대식 규율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당은 최고지도자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모든 단체를 지도하며 수백만의 근로 대중과 연결되어야 한다(『8월테제』).

‘당의 무오류성’을 확신하는 듯한 입장에 서 있는 위의 관점에서 8월테제는 당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런 입장에서 ‘근로대중’과 그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은 당의 지도를 받아하고 따라서 노동조합은 피지도의 대상이다.

매개의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근로대중 특히 노동자와 농민대중에 접근하여 새로운 군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당과 당의 보조단체에 끌어들이며, 민족개량주의의 영향으로부터 일반대중을 우리의 편으로 전취하고 토지와 완전독립을 위한 전국적 투쟁에 전인민을 동원하여야 한다(『8월테제』).

이처럼 조공은 해방정국 당시 노동자들을 아직 계급의식을 각성하지 못한 ‘즉자적 계급’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위정당은 노동자를 계급의식으로 무장하고 혁명에 복무하는 ‘대자적 계급’으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⁶³⁾

마지막으로 전평이 조공의 실제적인 지도를 받고 있었다는 증거는 전평의 실천 과정이 이를 입증한다. 전평은 조공의 해방정국에서의 인식과 실천 방침에 따라 산업건설 전술에서 총파업 전술로, 미군정에 대한 협조에서 반대로, 반탁에서 찬탁으로 자신의 실천 방향을 바꾸었고 투쟁의 요구 또한 민주정부 수립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전평은 조공의 실천 의지를 노동운동 영역에서 발현시키려 했던 조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전평은 조공의 지휘하에 정치투쟁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고 사회주의를 자기

63) 이에 대해 안태정(2002)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조선 사회주의자들은 1945년 후반기 이후에도 식민지시대에 ‘산전수전’ 다 겪은 조선 노동자대중을 여전히 1902년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노동자대중의 의식상태가 전진하기도 하고 후진하기도 하는 등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지만, 1945년 8월 15일 ‘해방 공간’에서 상당수 노동자대중의 의식상태는 진보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8월테제』에서는 이 점을 무시했다는 것이지요.”

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평의 노선을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로 규정한다.⁶⁴⁾

본 논문이 전평을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로 규정하는 이유는, 우선 전평이 미군정에 협조했을지라도 미군정과 결탁하거나 종속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즉 재정과 정치적 견해에서 전평은 미군정으로부터 독립적이었다. 이처럼 ‘전평’은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 예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 대중조직이었다. 예컨대 1945년 11월에서 1946년 3월까지의 ‘전평’ 조직의 운영자금을 보면 1,600여 만 원 가운데서 90%가 조합비와 조합의 의연금이었고 8.6%가 부채였다(안태정, 연도 미상 참조).

둘째, 전평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정치조직으로서 기능했다는 점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를 자신의 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평의 운동 방침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노동자의 당면 이익을 옹호하고 그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

64) 이에 대한 반론도 가능한데, 이 주장은 전평이 혁명적이기보다는 개량적이었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한다.

전평의 존재 목적은 결성대회에서 결정한 ‘일반행동강령’과 ‘대회의 결의사항’ 등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강령’ 등은 자본-임노동 관계를 근본적으로 지양(止揚)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최대한의 민주화를 지향했다. 즉 ‘강령’ 등은 당시의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열망인 ‘인간적 생존권과 생활권의 보장’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 전반기의 조공 재건운동세력이나 혁명적 노조운동의 ‘사유재산 철폐나 노농소비에트 건설’ 등의 최대 강령은 계승하지 않았고, 1920년대와 1930년대 후반기 이후의 조공과 공산당 재건운동 세력과 혁명적 노조운동의 인민공화국 수립노선이나 ‘반파쇼인민전선 또는 반제민족통일전선’ 노선을 최대 강령으로 계승한 것이었다. 그리고 8·15 직후의 다양한 노동자 공장관리 유형 중에서 노자(勞資) 공동관리를 중심으로 수립했다. 그리하여 전평은 무조건 ‘모든 자본’이나 ‘미군정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적대관계를 설정하지는 않았다(안태정, 연도 미상).

전평의 강령은 결성대회 강령 이후에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신전술이 있기 전까지 산업건설과 타협전술을 구사했다는 점에서, 특히 신전술 이후에도 여전히 부르주아 민주혁명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타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는 그들의 당면의 전략과 전술이 혁명이나 아니냐의 차원 이상의 것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해 노력하는 것(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건 개선, 실업방지 등). 둘째, 조선경제 부흥과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며, 건국운동에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 셋째, 일제 잔재세력, 친일파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기초 위에서 민족통일전선 결성에 참가하여 진보적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인민공화국을 세우는 사업(전국노동단체연합 정책실, 연도 미상).

이러한 기본운동방침은 물론 “조공의 당면 혁명전략에 근거하는 것”이었고 전평은 당시의 정세 속에서 “자신의 임무를 노동자의 일상이익 옹호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민공화국 수립을 자신의 목표로 내세워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를 자신의 과제로 떠안았다.⁶⁵⁾ 이로써 전평은 변혁적·정치적 노동조합운동임을 명확히 천명했다”(전국노동단체연합 정책실, 연도 미상). 이런 맥락에서 전평의 총파업은 정치파업이었다.⁶⁶⁾ 이처럼 전평이 정치적 노동조합운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가 만들어 낸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측면도 있다.

더 나아가 전평은 분명히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었고, 변혁전략으로서 협조전술 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전략과 전술의 차원에서 수립된 것이었다. 이처럼 전평과 조공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정세 분석에 기반한 전략적 목표에 다름 아니었다. 실제로 전평은 전투적이고 계급적인 입장에 선 노동자 대중조직

65) 전평의 정치노선은 반제·반봉건·인민민주주의로 요약된다. 이 정치노선은 그 당시의 한국 노동자계급의 최대 강령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그리고 일반 행동강령으로서 언론·출판·집회·결사·파업·시위의 절대 자유, 18세 이상 남녀 선거권의 부여, 농민운동의 절대지지, 조선의 자주독립, 세계 노동자계급의 단결 등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강령과 최저임금제 실시, 8시간 노동제 실시, 단체협약권 확립,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제 실시, 사회보장제도 확립 등 일반적인 강령을 걸고 그의 실천을 위해 싸웠다(이일재, 연도 미상).

66) 당시 대한노총에서 노조활동을 했던 한 면접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1946년 9월 21일 전국철도총파업을 했다. 철도를 장악한 운수부장에게 대한노총과 전평은 합의를 해서, 식량배급 이휴 반을 달라고 파업을 하기로 했다. 후에 노총은 파업을 반대했다. 그 이유는 용산역 광장에서 전야제 날 노동자에 관한 요구는 하나도 없이 박헌영 체포령 취소 요구만 요구를 했다”(인터뷰 I, 2003. 7. 2).

의 이론과 실천을 갖추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전제로 활동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전평은 미군정에 대해 협조전술을 취했다는 점에서 협조주의와 다르고 전략과 전술의 차원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와 다르고, 조공의 대중조직으로 정치활동에 강조점을 두고 실천했다는 점에서 경제주의와 다르다. 이처럼 전평은 궁극적으로 이념집단으로서 혁명(부르주아 민주혁명, 궁극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조공의 정치적 대중조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보다 궁극적으로는 전평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를 자신의 이념으로 삼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조직과 실천

전국단일노동조합인 '전평'은 1945년 11월 5일 결성되었다. 전평 결성식에는 남북의 16개 산별노조와 1,194개의 노동조합분회, 조합원을 대표하여 505인⁶⁷⁾이 참가하였다(장명국, 1985: 117). 전평의 조직구성원은 결성 당시에 남북 조선을 통틀어 21만여 명이었으나 1946년 2월에는 57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북조선노동총동맹이 전평으로부터 분리 독립(1946. 4. 29)⁶⁸⁾했을 때, 남한의 전평 산하 노동조합원들은 59만여 명이였다. 9월 총파업투쟁 이후인 1946년 11월 미군정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전평 산하 분회가 1,111개, 조합원수는 24만 6,777명이였다. 1947년 3월 22일 24시간 총파업 이후인 4월 15일자 <전국노동자신문>에서 당시 전평 부집행위원장 이인동은 26만여 명의 조합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948년판 『조선년감』에 의하면 1947년 4월 말 현재 전평 조합원은 35만 4,417명이였고, 9월 말 현재는 52만 825명이였다(안태정, 2002).⁶⁹⁾

67) 대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 안태정(연도 미상)은 515명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일재(연도 미상)는 615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68) 전평의 결성 당시에는 남북을 종합한 조직이었다. 그러나 당시 38선이라는 지리적인 장벽과 제반 정치조건 차이로 말미암아 북한에는 전평북조선총국을 두고 있었다. 이후 분단체제가 공고화되자 전평북조선총국은 1946년 5월 북조선 직업총동맹으로 독립했다.

전평의 조직 노선은 두 가지 원칙하에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기초 조직에 대한 강조와, 다른 하나는 산업별 조직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전평은 한편에서는 ‘공장’에 뿌리박은 기초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평은 노동운동의 중심이 주요 산업의 공장과 기업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공장·기업소 단위로 산별 단일노동조합의 하층 기본 조직인 ‘분회’를 결성하였다. 다른 한편에서 전평은 강력한 ‘산업별 조직화’ 원칙에 따라 조직한 결과 금속·화학·섬유 등 16개 산별조직이 만들어졌다. 이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은 경성, 인천, 삼척, 부산 등 11개 지역에 각 산별 노동조합의 지부를 두었고, 이 지부가 각 지역의 지역평의회를 구성하였다. 지역지부는 산별 중앙의 지시를 받았고, 지역평의회는 전평 중앙의 지시를 받았다. 이처럼 각 산업별 노동조합은 중요 각 산업 지대에는 지부를, 공장·기업소 내에는 분회를 설치하였다. 그 결과 전평은 16개 산별 노동조합이 지부수 235개, 분회수(지금의 단위노동조합에 해당) 1,676개, 총조합원 574,475명(1946년 2월 15일 현재)의 규모를 갖추었고, 도식적이라 할 만큼 거의 완결적인 산별 조직과 그 연합체인 중앙조직을 갖추었다. 이 같은 조직화의 원칙에 따라 전평은 전국의 주요 산업과 산업 지대를 거의 포괄했으며, 광범한 실업자층까지 조직원으로 조직하였다. 전평은 16개 산업별 노동조합을 갖추고 있었다(전국노동단체연합, 연도 미상; 이일재, 연도 미상 참조).

이상에서 보듯이 전평은 단기간 내에 거의 완벽한 조직 형태와 조직화를 이루어 내었다. 그렇다면, 전평이 급속히 노동자 조직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개별 단위의 공장노동자들이 일제가

69) 그러나 1947년 9월 현재 미군정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전평’ 조합원은 2,400여 명에 불과했다. 이때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결렬시키는 등 미국의 국제적 냉전정책이 조선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되던 시기였다. 그리하여 미군정은 그동안 일정하게 가지고 있었던 반파쇼민주주의적 성격을 완전히 벗어 버리고 ‘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파쇼적인 탄압정책을 강화하여 전평 조직을 지하로 밀어 넣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 노동부가 조사한 전평 조합원수가 사실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전평 등에 의해서 전개된 1948년 2·7 구국투쟁에 다양한 투쟁형태로 참가했던 약 150만 명의 인민 중에서 파업투쟁에만 8만여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는 점, 그리고 5·8 단선단정 반대 총파업투쟁도 전평 노동자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년감』에 나온 전평 조합원수가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많다(안태정, 2002).

물러간 공장 권력의 공백을 자발적으로 메워 나가려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시 자주관리운동으로 명명되었다. 즉 “미군정이 실시되기는 했지만 법제로써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막을 수 없음은 물론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하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본가계급이 부재하였으므로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의지대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었다”(이일재, 연도 미상). 이처럼 공장노동자들은 “전평 지도부의 방침을 앞질러 노동계급 스스로가 공장자주관리운동을 전개”했다(김익진, 1985: 102).⁷⁰⁾

둘째, 전평의 급속한 조직화의 원인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상태에 있었다. 일본의 패망은 자본주의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조선자본주의는 90% 이상의 일본 자본과 기술자로 채워져 있었다. 특히 이들이 패망과 동시에 통화를 남발했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이 나타났고 실업이 만연했다. 이 상황에서 해외동포들이 속속 귀환하였다. 특히 미군정의 미곡의 자유거래정책은 투기와 매점매석을 낳았다. 즉 노동자들은 실업, 인플레이션, 식량문제 등에 방치되어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항복 후 조선노동계급의 형편은 정치적으로 보면 자유와 민족해방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으나, 전후 경제적 혼란과 공장폐쇄로 인한 전반적 실업화와 인플레이션 악화에 의한 물가상등과 물자결핍 등의 현상은 노동계급의 물질적 생활조건의 큰 변화를 가져오고 말았다. 따라서 실업자는 전 산업노동자의 과반수나 되는 조선 프롤레타리아의 근간부대인 공장노동자이다. 이런 정세하에서 노동자의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임무를 가진 조직, 그것은 곧 노동조합이다(『전평의 결성대회 강령』, 김익진, 1985: 103~104 재인용).

70) 이에 대해 공산당 지도부와 전평은 초기에 노동자들의 자주관리운동을 극좌적이라고 평가했다. 즉 이들은 미군정과 “협조전술을 채택하면서, 노동자 투쟁이 전투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협조전술을 유지하려면, 노동운동은 미군정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조절되어야 했다. 전평은 이러한 차원에서 공장관리운동을 현실적으로 포기하고, 산업건설운동을 공식적인 운동노선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노동자 공장관리는 인민정권 수립 뒤에 가능하다고 보고, 공장관리운동을 산업건설과 경제부흥, 나아가 인민정권 수립에 종속시키는 지점에서 구체화되었다”(김무용, 2001).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적으로 임금을 동결했다. 따라서 공장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조직을 중심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에게 전평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었다.

셋째, “일제 식민지의 혹독한 탄압 아래에서도 끈질기게 추구되어 온 1930년대 비합법 노동운동의 대중적 기초”가 있었기 때문이다(김익진, 1985: 101). 비록 1940년대 이후부터 해방 직후까지 노동조합운동이 꺾일 되었을지라도 1930년대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는 노동조합의 풍부한 경험과 지도부를 갖고 있었다. 특히 일제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일제에 투항하지 않고 저항했기 때문에 대중적 신뢰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당시의 남한 땅에는 1920년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노동운동을 전개해 온 자기부정적이고 헌신성을 지닌, 경험이 풍부한 직업적 노동운동가들이 많았다(이일재, 연도 미상). 이들 활동가들과 조선공산당은 “인적·정치적으로 노동운동과 결합되어 있었다. 조선공산당의 활동가들은 전평 결성을 주도하였고, 전평은 결성대회에서 박현영·김일성 등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했다(김무용, 2001).⁷¹⁾

이상에서 보듯이 전평의 조직화는 밑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노동자의 요구를 공산당이 위에서부터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해방 공간에서 조선의 노동자들은 퇴직금 요구 등의 생존권보장운동과 공장관리운동을 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이에 조공은 대중노선에 따라 위에서부터 노동자들을 조직하고자 했다. 이런 양자간의 만남은 전평이 급속히 조직화될 수 있는 동시에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를 자기 성격으로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전평은 극단적인 갈등과 이념의 시대 위에서 존재했

71) 전평의 이러한 측면은 노동조합을 급속히 조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의 특수성을 해치는 결과도 초래했다고 평가받았다. 즉 정치적으로도 전평은 “조선공산당의 정세 인식과 혁명론에 따른 운동방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일찍부터 전평은 조선공산당의 외곽 조직으로 이해되거나, 노동조합의 중립성을 고려치 않고 좌익내 특정집단의 충실한 지지자로 선언함으로써 분파투쟁을 일으키고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을 방해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김무용, 2001).

고 조공이 전평의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했다는 점에서 실천 또한 정치적 상황과 조공의 방침에 많은 부분 종속되었다. 전평의 생존 기간 동안에 두 가지 대별되는 실천 양식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미군정에 대한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타협주의 운동기와 저항적 운동기라고 할 수 있다. 타협주의 운동기는 전평의 창립부터 신전술이 나오기까지의 기간(1946. 7)으로서 전평이 『8월테제』에 의거하여 합법주의 또는 타협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시기를 지칭한다. 이 기간에 전평은 미국을 해방자로서 인식하고 있었고, 반제·반봉건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군정과 선린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때 실천방침은 공장자주관리운동을 자제하면서 산업건설을 위한 협력을 추구하고자 했다. 한편 저항적 운동기에는 이와는 다른 실천 방침을 갖게 되는데, 우선 혁명전략 자체는 여전히 반제·반봉건 민주혁명을 추구하지만 미군정을 제국주의로 지목하면서 다양한 전술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 미군정은 조공과 전평을 불법 집단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게 되면서 전평은 총파업으로 맞섰던 시기로서 비평화적 방식의 혁명전술이 거론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표 2-1 참조).

이상의 실천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이 시기를 관통하는 조공의 변혁전략은 “반제·반봉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으로 조선의 완전한 자주독립, 일제 잔재의 소탕과 친일파 처단, 반봉건적 토지혁명, 대산업 국유화를 실현하는 ‘인민공화국’ 수립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이일재, 연도 미상). 문제는 이런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에 존재하는 지형지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 정세 판단의 핵심적

<표 2-1> 전평의 전략과 전술 변화

	타협주의 운동기	저항적 운동기
핵심문건	『8월테제』(1945. 8. 20)	신전술(1946. 7. 26)
미군정에 대한 태도	민주주의 국가	제국주의
혁명전략	반제반봉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	
혁명전술	평화적 정권 수립	비평화적 가능성
실천방침	산업건설운동	총파업

인 변수는 미군정에 대한 평가에 있었다. 조공은 초기에 미군정과 협력을 통한 부르주아 민주혁명을 꿈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전평의 산업건설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전평의 산업건설운동은 ‘산업건설협력방침’으로 제시되었는데, 운동의 목표로 “자주독립을 위한 건실한 통일전선의 결성과 민중생활 확보를 위한 산업부흥의 필요”가 주장되었다. 그 핵심 내용은 양심적 건전한 생산에 대해서는 파업을 자제하고 생산에 적극 협조하는 것, 자주독립을 원조하는 미·소 양군에 협력하는 것, 양심적 민족자본과 협력하는 것이다. 전평은 미군정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민대중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건국의 경제적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이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이일재, 연도 미상).

한편, 해방 직후의 시기에 현장의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공장관리운동⁷²⁾을 전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장관리운동은 미군정의 방침과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공의 산업건설 협력방침과도 차별적인 것이었다. 결국 조공은 공장관리운동을 좌편향적인 실천으로 규정함으로써 미군정과와의 충돌을 피하고 평화적인 민주혁명을 추구하고자 하였다.⁷³⁾ 조

72) 공장관리운동은 노동자들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작업장정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각 기업체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고 있던 일본인 적산과 친일파의 재산을 접수, 관리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1945년 8월에서 10월 사이 경성전기주식회사의 5,300명 근로자의 투쟁, 조선연탄의 700여 명 노동자의 노조 결성과 노동조합관리위원회의 구성, 조선해륙운수회사의 1,000여 명의 노조 결성과 관리위원회의 구성, 일제하 한국인 양대 기업인 경성방직과 화신백화점, 조선비행기에서의 노동자 투쟁은 모두 자발적인 노동자의 공장관리운동으로 미군정과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전개되어 갔다”(장명국, 1985: 116). 대표적인 공장관리운동의 유형은 노동자들의 독점적 공장관리와 노동자들과 ‘양심적’ 민족자본의 공동관리라고 볼 수 있다. 공장관리위원회에 의한 공장과 사업장의 운영은 인민 공동의 소유권 행사를 의미했다. 그리고 공동소유권 행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기능에 따른 상호 의존관계였다. 즉 ‘양심적’ 민족자본가·기술자·노동자 간의 관계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1946년 메이데이 슬로건 중에서 “자본가는 돈을, 기술자는 기술을, 노동자는 노력을 산업부흥에 바치자”가 함의하는 것처럼 각자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돈·기술·노력 등)에 의거한 기능적 상호의존 관계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노동자 중심성을 지향했다(안태정, 2002).

73) 이에 대해 안태정은 두 운동이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이라는 해

공의 입장에서 볼 때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미소공위가 개최되고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전망 속에서 미군정의 통치방침에 대립할 이유가 없었다. 조선공산당이나 전평은 노동운동의 목표를 인민정권 수립에 두었기 때문에, 미군정과 마찰할 가능성이 있는 공장관리운동보다는 산업건설운동이 현실적인 방안이었다”(이일재, 연도 미상).

이처럼 산업건설운동으로의 전술 변화는 미군정의 태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 조공은 산업건설운동의 방침 아래 미군정과 선린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려고 했다. 따라서 이 시기를 ‘합법주의’ 또는 ‘타협주의’ 운동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대체로 전평 결성부터 1946년 9월 총파업 이전까지의 시기를 지칭한다. 이 시기에는 미소 공동위원회에 의해 조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었고, 전평은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것은 1946년 6월과 7월의 지시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군정당국으로부터 전평을 노동자의 이익 대표기관으로 인정한다는 언명을 받고 앞으로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군정협력상 긴급히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은 태업, 파업, 시위운동, 기타 정치운동은 직장 내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파업은 적에게 대타격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의 정책에 이용되는 위험성이 있다. 대부분의 산업에 있어서는 파업투쟁에서 큰 효과를 얻지

석을 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평’의 ‘운동노선’이 ‘공장관리운동’ → ‘산업건설운동’ → ‘총파업투쟁’ 등으로 순차적이고 일원적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대립적인 운동으로 변화했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공장관리운동과 산업건설운동 그리고 파업투쟁 등은 서로 대립적이고 순차적인 발생관계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서로 호응적이고 동시적인 발생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자본은 자신의 목적인 ‘가치증식’이 난관에 부딪히자 ‘공장폐쇄와 조업단축’,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감원’ 등을 통해 가치증식의 난관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스스로 공장을 관리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사용가치를 생산하여 ‘생존’과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건설운동’을 전개했다.··· 요컨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파업투쟁은 산업건설운동의 하나이고, 산업건설운동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익, 즉 ‘생존권’과 ‘생활권’ 획득운동의 하나인 것이다. 그리하여 ‘전평’ 노동자들은 예컨대 1946년 9월 총파업투쟁, 1947년 3월 22일 24시간 총파업투쟁 등을 벌였다(안태정, 2002). 이러한 해석은 운동노선을 일관되게 해석하는 데는 유리할지 몰라도 권력관계와 정세에 따른 전술과 전략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못하는 형세이므로 파업 이외의 투쟁방법을 충분히 이용하였다(김익진, 1985: 106 재인용).

산업건설운동으로 전평의 상임집행체계도 변화했는데, 1946년 초 기존 부서 중 쟁의부, 조사부, 재정부를 ‘산업안전부’로 개편했다. 쟁의부의 폐지는 산업건설운동이 ‘투쟁 자제-생산 협조’ 노선에 다름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산업건설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산운동’ 또는 ‘생산능률증가운동’으로 되어 갔다(전국노동단체연합 정책실, 연도 미상). 이처럼 전평은 이 당시에 “싸울 자본도 없고, 싸울 정부도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오직 건설의 주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전평은 결성 당시에는 있었던 쟁의부를 없애고 산업건설부를 만들었다”(이일재, 연도 미상).

이상의 전술의 가장 큰 결함은 미군정과의 현격한 시각 차이에 있었다. 미군정은 당시 소련의 사회주의를 저지하기 위해 남한에 진주했을 뿐만 아니라 조공은 물론이고 건준이나 인공조차 사회주의 세력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공이나 전평과 일체의 협력을 구상하지 않았다. 다음의 평가는 이런 점에서 타당하다: “평화혁명론과 협조전술은 미군정의 정치 질서와 객관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좌파운동이 반제·반미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억제하면서 운동의 흐름을 왜곡하는 역할을 하였다”(김무용, 2001).

이러한 전평과 조공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것을 전후해서였다. 1946년 하반기에 들어 미군정은 전평과 조공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46년 6월엔 정판사 위조지폐사건을 계기로 조선공산당을 불법화하고 지도자인 박헌영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다. 또한 1946년 7월 23일 법령 제97호 ‘노동문제에 관한 공공정책’은 전평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⁷⁴⁾ 한편으로 미군정은

74) 사실 미군정의 전평에 대한 태도는 조공의 협조전술과는 달리 1946년부터 소극적이었다. “1946년 들어 미군정의 좌익 탄압정책이 중앙과 지방 수준에서 전면화되면서 어려움에 빠졌다. 특히 1946년 5월 정판사 위조지폐사건을 계기로 조선공산당과 미군정의 대립이 전면화되고, 미소공위도 휴회되면서 미소협력을 전제로 한 협조전술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조선공산당은 1946

“민주주의적 노동조합” 육성의 방침을 천명하면서 “정치운동을 하는 단체나 연합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전평을 겨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익 노동조합을 만드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 밀려 조선공산당은 신전술(1946. 7. 26)을 채택했는데⁷⁵⁾, 이것은 기존의 노선과 근본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가) 2개월 동안 취한 수세에서 적극적 공세로 또는 작년 8·15 이후 전면적으로 전개하였던 합작노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될 것. (나) 미국의 트루먼 정책이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적 반동적 노선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중국공산당, 일본공산당과 긴밀히 연결하여 극동에 있어서의 반미운동을 적극화할 것. (라) 미제국주의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해부하여 폭로하고 공위 휴회의 원인도 국내 반동진영에만 돌리지 말고 미국측 대표의 국제적 모략과 반동성을 결부하여 민중에게 폭로하고 군중을 조직화하고… 대중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 (사) 남한의 모든 파탄은… 정치적 권력이 군정과 군정하에 있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에게 있는 까닭이니 정권을 군정으로부터 인민위원회에 넘기라는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신전술, 1946. 7).

신전술은 변혁과제를 여전히 부르주아 민주혁명으로 명시한 가운데 미

년 중반까지 미군정의 정치질서 구축에 따른 좌익탄압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협조전술을 계속 유지하였다. 조선공산당은 협조전술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조선공산당의 협조전술은 당과 대중운동 영역에서 합법성을 고수하면서 현실과 괴리되어 나갔고,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협조전술이 당운동과 대중운동의 전술로서 기능하지 못하면서 협조전술에서 이탈하는 흐름도 조직되고 있었다. 이는 당과 대중운동을 분리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김무용, 2001).

- 75) 하지만, 신전술은 위에서부터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강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었다: “무장투쟁으로 이행한 것이 대중정치투쟁의 발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강제된 전술이고 대안 없는 전술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남로당의 무장투쟁전술은 무장투쟁이 갖는 조건과 그에 따른 미래의 전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단선단정 반대투쟁의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용되었던 것이죠. 또 미군정의 계속된 탄압으로 분노는 높아지고 있지만, 좌익세력의 역량이 악화된 조건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어찌 되었건 무장투쟁으로의 이행이 해방 공간 사회주의활동의 결산이라고 전제한다면, 이러한 이행이 불가피한 선택인가 하는 점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김무용·김득중 외, 2001).

군정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철회했음은 물론 이로 인해 새로운 실천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조공은 “미국·미군정을 제국주의로 규정함으로써 협조전술하에서 억제되었던 반제반미운동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조선공산당의 신전술 채택에 따라 대중운동은 미군정과의 대결 국면을 창출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다. 또한 신전술은 『8월테제』에 근거한 평화적 정권 수립 노선을 수정하여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권력장악 전망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음으로 신전술은 공세전술·대중동원전술과 결합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 협조전술의 수세적인 대응을 철회하고 미군정·우익에 적극 대응하는 방침이었다. 특히 공세전술은 대중동원 방식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비록 자위적인 수준이라 하더라도, 미군정과의 대결로 발전하여 비합법 운동을 창출할 가능성을 지녔다. 조선공산당은 공세적인 신전술의 무게 중심이 합법 영역을 벗어나 비합법적인 지하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김무용, 2001).

신전술은 9월 총파업으로 구체화되었다. 9월 총파업은 변화된 전술이 대중운동과 결합했다는 점에서 향후 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9월 총파업의 직접적인 발단은 군정청이 경성철도공장 종업원들에게 9월 1일부터 일급제를 실시한다는 데 있었다.⁷⁶⁾ 이 파업에

76)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것이었다. 당시 미군정은 지방인민위원회와 그 중앙조직인 조선인민공화국을 강제적으로 해체하였고, 전평에 대해서도 파괴 공작에 나섰다. 우선 미군정은 철도노조 파괴에 나섰다. 철도노조는 4만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평 내의 가장 강력한 공공부문 단위노조였기 때문이다. 미군정은 ‘운수부 노동자 25% 감원, 월급제의 일급제로의 전환’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산업합리화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분노한 철도국 서울공장 노동자 3,700명은 1946년 9월 14일 ‘노동자대회’를 열어 ‘가족수당과 물가수당 인상, 일급제 반대, 식량배급 증대, 해고 반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였다. 부산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시작으로 24일에는 전국 철도노동자 4만여 명이 파업에 동참해 남한의 전 철도를 완전 마비시켰다. 같은 날 전평은 철도총파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남조선 총파업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쌀을 달라, 임금인상, 공장폐쇄와 해고 반대, 노동운동의 절대자유 보장, 검거 투옥 중인 민주주의 운동가 석방과 지명수배 및 체포 철회” 등의 8개 요구를 내걸었다. 철도노조의 투쟁은 10월 초까지 전평 산하 각 산별노조로 확대되었다. 전평 산하 조직노동자 25만 명 이상(전평 조합원의 50% 이상)과 미조직 노동자 5만여 명을 포함한 총 30여 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미군정은 9월 30일 기관총으로 무장한 3천여 명의

서 노동자들은 경제적인 목표 외에 신탁통치 지지, 박헌영 체포령 철회 요구, 인민위원회로 정권 이양 등의 정치적 슬로건을 내걸었다.⁷⁷⁾ 이에 따라 전평은 총파업으로 대응하였지만, 경찰 및 우익청년과 계엄령을 앞세운 미군정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전평은 1947년 3월 22일의 하루 총파업, 1948년 ‘2·7 구국총파업’, ‘5·8 단독선거 반대 총파업’ 등을 조직했다. 이 파업들은 정치파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3월 총파업의 경우 전평이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연합하여 일으킨 대규모 정치총파업으로 성격 규정될 수 있다. 이것은 “삼상회의 결정을 즉시 실시하라,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기라, 좌익지도자를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가 전면에서 등장했다는 점, 검거자가 2천 명을 넘었다는 점, 미군정에 대한 비판적인 방침을 확고히 했다는 점 등에서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파업들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입국할 예정이었던 UN한국위원단 입국 반대투쟁,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거 반대투쟁 등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전평은 1947년 3월의 총파업 실패 및 탄압으로 비합법화되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편 전평 결성 후 반년 정도 경과한 1946년 8월, 해방

경찰과 대한노총, 극우청년단체(대한민청, 대한독청)를 동원해 용산 철도공장에서 농성 중인 철도노동자 총파업본부를 습격하여 간부 16명과 1,200명이 넘는 노동자를 검거하고 2명 이상을 사살했다. 남조선 총파업본부가 있던 영등포 조선파혁공장도 습격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9월 총파업은 막을 내렸다.

77) 9월 총파업은 조선공산당의 전술이 변화되는 국면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조선공산당의 새로운 정세 인식과 노동운동 전망이 결합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처음의 목적과는 다르게, 조선공산당은 총파업 과정에서 그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박헌영을 비롯한 조선공산당 중앙지도부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진 가운데 총파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선공산당은 당 운동의 중심으로서 노동자 파업운동과 효율적으로 결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9월 총파업은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수준에서 투쟁을 조절하면서 파업역량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각 지역별 산업별 노동운동의 역량에 의존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9월 총파업이 10월 들어 노동자만이 아니라 일반대중이 참여하는 인민항쟁으로 발전해 나간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래로부터 자연발생적인 대중투쟁의 폭발성이 작용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조선공산당과 전평 중앙 수준의 통제력 이완을 드러낸 일이었다. 특히 9월 총파업은 3당 합당 문제를 둘러싼 조선공산당 중앙과 반대파 사이의 분파투쟁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지 못했다(김무용, 2001).

이후 전평조직의 가장 강력한 사업장 중의 하나였던 인천의 동양방적 노동자들이 전평을 탈퇴하고 대한노총에 가입하였다. 종업원 자주관리운동의 대표적 모범 사례 가운데 하나였던 조선피혁 전평분회도 1946년 7월 대한노총 조선피혁분회로 바뀌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48년 중반경에는 전체 조직노동자의 대부분이 대한노총 조직에 잠식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순경 외, 1995: 254~255). 이로써 남한 사회의 좌익 노동조합은 1980년대가 오기 전까지 깊고 긴 동면에 들어갔다.

이상에서 보듯이 좌익 노동조합은 1930년대에 좌경노선으로 붕괴한 이후 해방기에 전평으로 부활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미군정에 의해 다시 침몰되었다. 그렇다면 전투에서 왜 진 것이었을까? 일단 그 이유는 명백해 보인다. 이분법을 강요한 냉전과 냉전세력에 비해 볼 때 현저한 물리력의 차이가 그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전략전술의 실패도 몰락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민족적 감정을 무시한 찬탁노선, 과도한 협조전술 또는 그 반대의 과업전술에서 보듯이 정세를 무시한 기계적·도식적 전술⁷⁸⁾ 등이 거론될 수 있다.

하지만, 몰락의 원인보다도 그 결과와 효과에 한국정치의 비극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우선, 전평은 너무나도 짧은 기간 동안 짧은 실천과 몰락을 경험했다. 전평은 탄생의 순간부터 정치세력들의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즉 전평은 조공으로부터, 그리고 미군정과 우익으로부터 견제를 받음으로써 자생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을 정리하고 경험하고 축적할 여유도 없이 극단적 정치지형에 갇혀 있다가 비명횡사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평의 비극성과 과란만장했던 짧은 삶은 우익으로 하여금

78) 조선공산당이 해방 후의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도식적이었다. 조선공산당은 해방 후 『8월테제』라는 정치 프로그램 아래 반자본주의·사회주의로의 이행 전망을 제시하였지만, 자신들의 정세 인식과 혁명노선에 따른 공식에 갇혀 있었다. 조선공산당이 당운동의 수준에서 대중운동과 결합하는 방식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발전시키는 형태가 아니었다. 조선공산당은 해방 직후 다양한 대중운동을 자신들의 정세 인식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노선이라는 틀 안에 묶어 두고 규격화하려고 하였다. 조선공산당 중앙은 대중운동의 가능성을 발전시키거나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찾지 못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공식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해방 직후 아래로부터 조직되는 다양한 운동의 가능성과 창의를 틀에 박힌 교훈에 종속시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김무용, 2001).

노동조합과 공산주의를 연결시킴으로써 이후 자생적 노동조합이 남한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하게 만들었고, 좌익에게는 또한 전평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평가를 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비극성과 승자독식의 결과로 인해 전평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남한의 노동정치에 풍부한 정치적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 즉 좌익노조운동은 이후 호사가들(지식인)의 입에서만 맴돌 뿐 노동정치의 화두가 되지 못했다. 따라서 남한의 노동운동은 전평이 아니라 전태일에서, 그리고 1970년대 노동운동에서 지혜를 구해 왔다. 향후 전평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전평의 경험이 노동정치의 공론장에 올려져 한국의 노동운동이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 보다 풍부한 자료로 삼았으면 한다.

제3절 반공적 노동조합주의

1. 반공주의와 만남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해방정국에서 우파는 전평에 대항할 노동조합을 필요로 했고 대한노총은 이런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시대가 만든 새로운 발명품이었다. 따라서 대한노총의 이념도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로부터 주입당한 것이었다. 그것은 “반공주의+미국식 자유민주주의”(한지수, 1989: 206)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냉전과 친일세력에 기반한 남한 내 우익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대신 냉전적 자유주의의 토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대한노총은 실질적으로는 이 시기 지배적인 정치적 담론인 반공주의와의 만남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는 당시의 우익, 즉 한민당과 이승만의 반공주의를 대한노총이 수용한 경로를 중심으로 대한노총의 이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노총은 반공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호명’하여 조직된 전형적인 정치집단이었다. 이 말은 노동조합이 정치상황과 정치적 논쟁을 통해 반공주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반공이념이 자신의 실천 의지에 따라 공장

내에 자신의 조직을 침투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반공주의와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반공주의를 자신의 이념으로 급속하게 받아들이고 조직할 수 있었는가?

우선, 해방정국에서 우익 노동조합과 반공주의의 만남이 가능했던 것은 냉전이라는 국제정치 질서와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우익이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했던 데 그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미군정은 당시의 정치경제 상황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한국은 이데올로기의 전쟁터입니다... 민주주의가 소련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 때 미국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다른 무엇보다도 언론, 출판 및 집회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소련적 의미는 민중의 복지란 용어로 표현됩니다. 한국인들에게 대한 소련의 선전효과를 고려할 때 2천 7백만 국민 가운데 약 70%가 소농이거나 어민이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및 4대 기본 자유권을 보급시키기 위해 한국 내에서 선전 및 계몽운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운동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들은 소련이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라고 찬양하고 있는바 공산주의에 대해서만 광범위하게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폴리 대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내는 비망록』, 1946. 6. 22).⁷⁹⁾

실제로 해방정국에서의 이데올로기의 지형은 “일제 식민지하에 누적된 반제·반봉건적 혁명 과제의 심각성,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에 있어서의 개량주의적 민족주의운동의 변질과 ‘혁명적’ 좌파운동의 주도적 역할 등으로 인해 상당히 좌경화”되어 있었다(손호철, 2003: 130).⁸⁰⁾

79) 이러한 미군정의 우려는 엄살이 아니었다. “미군정이 당시 1만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중 어느 체제를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 자본주의로 응답한 사람은 13%에 불과하고 사회주의로 답한 사람이 70%, 공산주의로 답한 사람이 10%에 이르고 있다”(손호철, 2003: 132).

80) 남로당, 북로당 등이나 흔히 중도우파, 중도파라고 불리는 여러 세력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임협이나 한국민주당과 같은 세칭 극우세력들까지도 소유형태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공유 내지 국유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방산업의 경우 국유를, 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유를 주장하고 경제운영방식에 있어서는 통제경제를 주장하는 등 ‘좌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손호철, 2003: 130).

따라서 미군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좌측으로 기울고 있는 ‘한국호’를 구해 내고자 노력했다. 첫 번째로 미군정은 경제정책을 통해 우익을 엄호하고자 했다. 반제·반봉건을 실현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과제였고, 해방과 더불어 일부 지역에서 일제하의 국공유재산 및 일본인 사유재산이 자연발생적으로 노동자와 농민들의 손에 의해 접수되어 가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군정은 먼저 조선식량영단, 중요물자영단 등 일제강점기 경제기구를 온존, 활용하면서 법령 제2호와 법령 제33호를 공포하여 그 재산을 미군정 소유하의 ‘귀속재산’으로 장악해 나갔다.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휴회로 경제정책의 수정이 모색되던 1945년 5월, 미군정은 법령 제90호를 발표해 경제 전반을 통제하고자 의도했다. 하지만 1946년의 미군정 경제정책은 사실상 식량 및 생필품, 무역 등 몇 가지 분야에 한정되어 실시되었으며 그 효과도 부분적인 범위에 그치고 있었다.

제2조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정부, 기(其)의 기관 또는 기 국민, 회사, 단체, 조합, 기 정부의 기타 기관 혹은 기 정부가 조직 또는 취체한 단체가 직접 간접으로 혹은 정부 우(又)는 일부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은행감정(銀行勘定), 채권, 유가증권 또 본 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 종류의 재산급 기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기 재산 전부를 소유함. 누구를 불문하고 군정청 허가없이 기 재산에 침입 또는 점유하고 기 재산의 이전 또는 기 재산의 가치, 효용을 훼손...(법령 제33호 『조선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 1945. 12. 6).

이러한 미군정의 조치는 당시 추락하는 우익을 기사회생시키는 데 확실하게 기여했다. 친일파와 우익인사들은 미군정이 남한정국을 장악해 나감과 비례하여 국가권력과 경제권력 핵심으로 화려하게 재진입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작업이었다. 보통선거제는 미군정에 의해 이식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했다. 이 밖에 미군정은 3권분립, 의회제 민주주의 등 근대국가 건설의 기본 모

텔을 한반도에도 적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것은 냉전이라는 상황과 당시의 권력관계에서 허구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최장집은 해방 이후 도입된 한국의 민주주의를 ‘조숙한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이것은 “한국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최초 도입이 국내 정치세력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이 개념은 “민주주의가 토착적 기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 제도적 형식만을 들여온 필연적 결과, 그 내용을 채울 역사적·정신적·이념적 면을 결여”한 한국적 자유민주주의를 설명하고 있다(최장집, 2003: 58).

한편, 미군정은 우익정당의 창당을 도와줌으로써 우익의 정치세력화를 확실하게 엄호해 주었다. 한민당은 미군정의 지지 속에서 인민공화국 타도를 선언하며 창당되었다(1945. 9. 16). 한민당은 보수·친일세력의 집결체가 되었고, 기본적으로 이승만의 반탁·단정노선에 동의했다. 한민당은 미군정과 밀착하여 군정청의 요직과 검찰·경찰을 장악하여 중도 및 좌익세력의 탄압에 앞장섰다. 이들은 친일과 처단을 반대했고 근본적인 토지개혁도 반대했다. 따라서 한민당의 존재 근거는 좌파에 대한 대립물, 즉 인공에 대한 반대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찾고 있었다.

소수인이 당파를 지어 건국이니 ‘인민공화국 정부’니를 참칭하니 기미(己未) 이래의 독립운동의 결정이요, 국제적으로 승인된 재외 우리 임시 정부를 부인하는 도배(徒輩)가 있다면 어찌 3천만 민중이 용허할 바이다. 지난 8월 15일... 여운형은... 소위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혹은 신문사를 접수하며 혹은 방송국을 점령하여 국가건설에 착수한 뜻을 천하에 공포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서 재판소 내지 은행 회사까지 접수하려다가 실패하였다. 그들은 이제 반역적인 소위 인민대회란 것을 개최하고 ‘조선인민공화국’ 정부란 것을 조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3천만 민중이여 재군은 이 같은 도배들의 반역적 언동에 현혹치 말고 민중의 진정한 의사를 대표한 오등의 주의에 공명하여 민족적 일대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려는가(한국민주당 발기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에 소위 정권을 참칭하는 일체의 단체 및 그 행위를 배격하는 결의와 성명서를 발표하다』(전단, 1945. 9. 8).

한편, 이승만은 일제 강점기 이래 철저한 반소·반공주의자로 일관했

다. 그는 미소간의 냉전이 심화되고 미소공위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 무산될 것을 확신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제1차 미소공위가 실패한 후 이승만은 누구보다도 단호하게 단정론을 폈는데, 그의 단정론은 모스크바회담의 일방적 폐기와 반탁운동, 그리고 자신이 주도하는 정권 수립을 의미했다. 트루먼 독트린(1947. 3)으로 미소 대결구도가 최종적으로 자리잡음으로써 이승만의 단정노선은 남한의 현실정치를 장악하게 되었다(김인걸 외, 2003: 47).

이상의 정치상황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은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를 통해 헌법을 제정했고, 간선제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역사상 최초로 보통선거를 통해 수립된 대한민국은 이념적 기반을 보통선거와 이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여러 정치세력 중에 이승만 그룹과 한민당만이 분단국가를 제도화하는 선거경쟁에 참여했다. 이들은 분단국가 건설에서 두 중심축을 이루는 세력이었다. 그리고 해방 공간에서 활동했던 광범위한 비극우 잔존그룹은 무소속 형태로 1950년 5·30 선거, 즉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두 차례 선거경쟁에 참여했다. 이후 이들은 대부분 한국전쟁을 거치며 소멸되었고, 그 결과 자유당 대 한민당의 양당제적 틀을 갖추었다. … 결국 한국의 정당체제는 분단국가를 만들었던 두 중심세력인 이승만 그룹과 한민당(뒤에 민국당, 민주당으로 변화)이 공화국 수립 이후 서로 대리적인 경쟁자가 되는, 즉 노동분업을 통해 경쟁관계로 들어가는 것에 그 기원을 갖는다”(최장집, 2003: 51~52). 이처럼 미군정이 강조한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체제와 공산주의체제의 대결이라는 이데올로기 대립의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후 대한민국 정치체제의 기초가 되었다.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한민당과 이승만 계열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이승만 정권은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 정치적으로 김구, 김규식은 물론 남한 내부의 좌익진영과 북한의 도전을 극복해야 했다. 제헌국회 내 소장파들은 주한미군 철수, 반민법, 농지개혁,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이승만 정부와 대립했다. 권력 분점을 요구하는 한민당과의 불화도 정권의 내부적 취약성으로 작용했다. 이승만은 억압적 정치체제와 극우 반공체제로 이를 돌파하고자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승만은 국가보안법

을 채택하는 등 극우반공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이런 현실에서 서구 민주주의 토양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헌법은 현실을 규정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은 현실정치세계에서 헌법을 대신했다. “1948년 12월, 법률 10호로 소장과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국가보안법”은 “권위주의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까지도 모든 법을 압도한 상위 규범”으로서 한국사회의 정언명령으로 군림했다(최장집, 2003: 63).

1949년 6월은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자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분수령이었다. 반민특위 습격(1949. 6. 6)과 친일파 득세, 국회프락치 사건(1949. 6)과 소장과 몰락, 김구 암살(1949. 6. 26)로 이어진 6월의 일련의 사태는 국가보안법체제로 대표되는 극우반공체제가 전면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 사건의 와중에서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되고 언론통제와 인권유린이 심화되었다. 하지만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국민당과 이승만 계열이 패배한 반면,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진출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은 위기상황에 빠졌다. 이승만은 위기를 반공주의에 기대어 극복하고자 했다:

나는 현재가 우리들이 공격조치를 취하고 평양에 있는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절호의 시기라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김일성파의 인간들을 산악지대로 축출하고 그자들이 거기에서 점차로 굶어 죽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방어선은 두만강과 압록강 연안에 걸쳐 증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방금이라도 그들을 쫓아내기를 바라고 있으나 우리들은 온갖 방도를 다하여 그들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외다. ... 끝으면 끝을수록 일은 어렵게 될 것이외다. 한국인들은 쫓기하여 그자들을 영원히 소탕하여 버리려 할진대 지금이 가장 절호의 시기인 것입니다(『이승만으로부터 로버트 티 올리버에게』, 1949. 9. 30).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쟁은 우파가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남한의 이념적 지형은 급격하게 우경화되었다. 즉 “한국전쟁은 그 전까지 이승만, 한민당 등 ‘극우세력’과 지배계급에 국한되어 있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수동적 동

의' 내지 '능동적 동의'로까지 유도해 낼 정도로 확산시키는 한편, 분단 의식을 내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손호철, 2003: 133).

전쟁을 통해 안정적인 승자독식체제가 형성되자 이승만은 반공주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예를 들어 “충성스런 야당의 범위를 벗어날 때 그것은 야당이 아니라 휴전선을 가로질러 친북적인 어떤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채색되었다. 이것이 반대파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메커니즘이다.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다. 1949년 ‘국회프락치 사건’과 1958년 ‘진보당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1952년 이른바 ‘발취개헌’이나, 1954년 이른바 ‘4사5입개헌’ 등도 모두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동원을 통해 정당화하려 했다”(최광집, 2003: 55~56). 더 나아가 이승만은 “1950년대 중반 미소 양대 진영 간의 평화공존 움직임에 대해서까지도 신경질적이고 맹목적인 반공주의로 반응”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공산당의 위성국가가 되거나 괴뢰정부는 되지 않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싸워 오고 있는 중이며... 미국이 공존주의를 주장하게 될지라도 우리로서는 자유독립의 권리를 위하여 싸워 죽기로 결심이니... 우리 국민들이 원조물자나 원조재정을 못 받아서 자동차도 탈 수 없고 휘발유를 구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이라도 먹고 싸워 나갈 것... (공보실, 『이승만 박사 담화집』, 제2집, 1956: 53 ~54. 손호철, 2003 재인용).

그렇다면 노동조합과 반공주의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민족주의자들과 우익진영은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기반과 헤게모니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일제하에서 우익 민족주의자들이란 노동운동에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독립운동도 국내의 대중들 속에서보다는 해외동포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8·15 해방 이후 민족주의진영은 국내 일반대중 특히 노동자대중 속에서는 별로 조직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민주당을 결성한 김병로, 송진우, 장덕수, 백관수, 허정, 김도연 등 우익진영 인사들도 노동운동에는 아무런 조예나 기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김낙중, 1982: 78).

이런 상황에서 좌익 노동조합의 대중성과 기동성은 우익에게 위협적인 것이었다.⁸¹⁾ 따라서 우익은 애초부터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전술을 선택했다. 이것은 상당부분 미군정의 노동 정책에 힘입었다. 당시 미군정은 물리력과 행정권을 쥐고 있었다는 점에서 노동정치에 핵심적인 행위자였다. 미군정은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로 표방된 ‘건전한’ 노동조합을 육성하고자 했다:

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 운영되는 노동조합, 즉 개인의 독단이나 강압으로 조직되지 않고 조합원의 총의로 조직되어 조합원 전체의 지지를 받는 조합원 전체를 위한 조합이다... 노동조합이란 본래 노동자가 노동조건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을 말하고, 정치운동을 하는 단체나 그 연합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조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남조선 과도정부 노동부 편, 『노동관계법령집』, 한국노총, 2002: 241 재인용).

이상의 언급에서 볼 때, 미국이 생각하는 노동조합의 건전성은 조합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즉 단체협상과 단체교섭을 주로 하는 기업 울타리 내의 이익집단활동을 의미했다. 따라서 국가정치에 관여하는 정치조직은 건전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군정에게 전평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정치부대에 불과했다.

미군정은 건전한 노동조합을 우익세력에서 찾았고 그것은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하 대한노총)을 의미했다. 대한노총은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이하 독청)에 기반하고 있었다.⁸²⁾ 독청은 이승만의 지원하에

81) “청년단체 조직 중 가장 강한 것이 노동조합이었고, 민족진영회도 노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공산당 국가의 노동조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조가 아닌 공산당 혁명노선의 전위대 역할과 감독하는 조직으로... 이론적으로 전평은 공산당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노동자로서 추구하였던 것이 영등포공장, 서울공장, 옛날 조선전력(전차) 즉 경성전기주식회사,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사람들과 노총을 만들었었다”(인터뷰 I, 2003. 7. 2).

82) 독청의 주요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승만(총재), 김구(부총재), 전진한(위원장), 이찬우, 백석기, 유진산(이상 부위원장), 한민홍(총무부장), 한국동(조직부장), 신균(선전부장), 김구(金龜, 청년부장), 장두관(훈련부장).

있었던 우익 청년조직이었다. 이들은 전평의 파업을 접하면서 이에 대응할 조직을 만들기로 결의하고 독청 내에 노동부를 신설하고 노동조합에 침투한 결과 탄생한 것이 대한노총이었다(1946. 3. 10). 이렇게 볼 때 대한노총이야말로 노동자들이 작업터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정치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정치조직이었다. 이런 점에서 미군정의 노동정책은 실리적 노동조합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고도로 정치화된 우익세력을 통한 적색노조에 대한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미군정은 노동조합에 대한 자신들의 선호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평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미군정은 법령 제19호를 통해 파업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비상시기’의 노동정책을 표방했다. 이러한 정책은 1946년 7월을 전후해서 전환되었는데, 미군정은 노동조합을 용인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했지만 파업을 억압하는 정책을 취했다:

개인 또는 개인집단이 직업을 구하고 방해 없이 근무하는 권리는 차(此)를 존중하고 보호함. 차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조선군정청은 공장의 생산, 민중생활상 필요한 것을 선언하고 기 정지 우는 저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건에 관한 분쟁은 조선군정청이 설치한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함. 해 위원회의 결정은 확정적 구속력을 유함. 문제가 노동조정위원회에 제출되어 기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생산을 계속할 것 (법령 제19호 제2조 『노동자의 보호』, 1945. 10. 30).

이상에서처럼 우익정치인과 미군정이 깔아 준 명석에서 대한노총은 성장했다. 따라서 그들의 목표와 이념은 우익정치인이나 미군정과 일치할 수밖에 없었다. 즉 대한노총은 “해방 직후 좌익 노동조직 전평의 확대강화를 저지하고, 반공투쟁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조직된 것으로서, “우익민족청년단체 및 정당관계 인사들에 의해 상층 지도부 중심으로 조직”되었다(한국노총, 2002: 287). 이처럼 대한노총과 반공주의와의 만남은 당시의 정치상황에서 ‘자연사적인’ 과정이었고 이들 노동조합은 신탁통치에 대한 전평의 찬탁 선언과 총파업 전술이라는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념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더욱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2. 내용과 정의

반공주의는 당시의 시대적 과제를 반봉건이나 반제의 과제와 연결시키지 않았다. 우익 정치인들이 바로 반봉건과 반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식민지 반봉건사회는 오히려 온존되어야 할 사회구성체였다. 이와는 달리 이들의 시대적 고민과 과제는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조국의 위기에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반제·반봉건을 주장하는 좌파를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는 것을 즐겨했다. 그리고 이들은 오로지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야 할 ‘조국’ 또는 ‘민족’이라는 개념에 몰입했다. 여기에서 조국은 민족이라는 감정에 기반한 모호한 실체였다:

민족광복의 정기를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견골열혈(堅骨熱血)로 우리 노동자들은 해방된 단일민족으로서의 공존동생권을 갈망하며 회천(回天)의 위업을 달성코자 총력기하여 자주독립을 지향하면서 환희작약하였다. 이에 우리는 모든 번잡한 이론을 타파하고 민주정치하에 만민이 갈망하는 사회를 건설코자 전국적으로 이를 발휘토록 대한노총을 결성하여 일로 매진할 것을 선언한다(창립선언문, 1946. 3. 10); -우리는 완전독립을 기하고자 자유노동과 총력발휘로서 건국에 헌신함. -우리는 혈한불석(血汗不惜)으로 노자간 친선을 기함(『강령 중에서』, 1946. 3. 10); 적색분자의 지하운동에 대한 과감한 조직적 투쟁방침을 수립할 것(『대한노총 전국혁신위원회 혁신요강 중에서』, 1948. 8. 26~27).

오늘날 조국의 통일과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과업은 반공전선의 승리적 진군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의 승리를 확보함에는 튼튼한 국방력이 요청되고 이 국방력의 중핵적 세력인 공군 건설은 초미의 급무이다. 우리 전국 대한노총 맹원은 공휴일을 근로봉사일로, 1일 임금을 12월 15일 내에 대한노총에 완납하여 애국기를 헌납하기로 결정하고 일대 애국운동을 전개하였다(대한노총 산하 애국기헌납위원회 담화문, <경향신문>, 1949. 11. 23).

이처럼 대한노총의 절대적 이념적 기반은 반공주의였는데, 더 있다면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의미 모호한 민족주의가 있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계급의식은 물론이고 실리적 노동조합주의조차도 없었다. 예를 들어 “대한노총 최초의 지구연맹인 영등포지구 연맹 결성식(1946. 5. 26)에서는 ‘스스로 계급의식을 버리고 만민공사의 이념을 견지하며 사대주의와 파괴적 행동을 배격하고 건설적인 사상과 행동을 견지할 것’을 결의하였다”(한국노총, 2002: 302).

대한노총의 발생 동기가 사실상, 처음의 중요한 원인이 노동자 권익만 위한다고 해서 생겼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의 건국 절대적 민족사적 사명에서 우리나라로서 동기가 되었고, 공산당은 용납이 안 된다고 해서 자유진영의 노동조합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인터뷰 I, 2003, 7, 2).

한편, 대한노총은 노동조합도 정치의 하위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대한노총은 노동조합이 아니었다. 고용주, 관리인의 조직 또는 정치인 집단의 조직으로서의 대한노총은 전평의 조직적 기반의 급속한 약화와 동시에 노동조합이라는 이름 아래 전평의 조직적 공백을 메우어 나간 것일 뿐이었다. 대한노총의 조직적 목표나 노동조합 조직, 결성의 목표는 경제주의적 조합주의 운동을 통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권익향상 등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좌익계열 노동조직인 전평을 파괴하고 우익 정치집단 내로 노동자들을 흡수하는 데 있었다”(조순경 외, 1995: 255). 다음의 언급은 대한노총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전평이 없어진 이후, 대한노총과 공산당과의 싸움도 자연스레 없어지게 되면서, 본래의 노동조합의 위치로 되돌아가, 근로자 복지후생사업에 매진하게 되었다(인터뷰 I, 2003. 7. 2).

이처럼 대한노총은 반공주의라는 맹목적인 신념 이외에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다른 어떤 기준이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들도 기록하고 있듯이 노동조합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경제적 노동조합주의

에도 기반하지 않았다.

대한노총은 노동조합의 일반적 필수요건인 노동자 경제투쟁의 인식 기반 위에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그 실제적 이해관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조차도, 예컨대 노동조합주의조차도 내세우지 않았다(한국노총, 2002: 302).

이상에서 보듯이 첫째, 대한노총의 반공적 노동조합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와 견주어 보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한노총은 전평과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반공적 노동조합주의는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와 정반대되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정반대'라는 표현은 이념적 거리보다는 정치적 거리에 따른 표현이다. 따라서 반공적 노동조합주의는 이념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공적 노동조합주의는 사회주의에 반대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일체의 정치세력화에 반대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반공적 노동조합주의는 어떤 이념을 체계화하고 있다기보다는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반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편이 보다 확실한 개념 정의일 수 있다.

둘째, 반공적 노동조합주의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노동조합주의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우선 반공적 노동조합주의는 경제적 노동조합주의처럼 임단협을 통한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실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이들의 관심은 노동조합 내 공산주의자들의 확산에 대한 저지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다. 또한 경제적 노동조합주의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시장질서를 옹호하고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을 요구하면서 이익집단으로 활동하고자 했다면, 반공적 노동조합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자유민주주의가 반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냉전적 자유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노사자치주의를 주장하면서 최소국가를 요구한 서구의 실리적 노동조합주의와는 달리, 국가권력 수호를 위한 충실한 '군대'로서 스스로를 자처했다. 결국 반공주의적 노동조합주의는 '노사관계 영역에서 냉전적 자유주의'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했

다. 따라서 경제적 노동조합주의에서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활동인 임단협과 노동자복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노동조합 내부의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고 제거하는 데 관심을 가진 준정치부대였다.

결론적으로 반공적 노동조합주의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반혁명, 즉 반공주의의 민간부대였던 대한노총이 내건 정치적 입장이자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한노총이 정치권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평과는 대조적으로 “대한노총의 1946년 4월에서 7월까지의 운영자금은 ‘전평’보다 3.5배 이상이 많은 5,700여 만 원이었지만 그 전부가 이승만, 안재홍 등의 기부금이었고 조합원과 노동자들의 부담은 한 푼도 없었다. 즉 대한노총은 부르주아 정치세력에게 매수당한 ‘노동자단체’”(안태정, 2002)였고 반공적 노동조합주의는 이들의 성격, 목적, 지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3. 조직과 실천

대한노총은 애초에 현장의 조직기반을 전혀 갖지 않은 우익 청년단체인 독청의 하부조직에 불과했다. 하지만, “용산제작용, 조선피혁회사를 비롯한 영등포의 각 공장과 경전 전차직장 등에 조직적 침투를 전개”한 결과, “1945년 말에 공장 내의 김재희, 김제성 등이 독청의 배창우, 김구(金龜) 등과 연결되어 독청 용산공작소 지부연맹을 조직”할 수 있었으며, “1946년 초에 영등포 일대의 각 공장에도 침투”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노총은 용산공작소, 경성철도공장, 경성전기회사 등 15개 직장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가졌다(1946. 3. 10). 창립대회에 참석한 48명은 “노동조합대표가 아니었으며, 사실상 노동자가 참석했다기보다는 청년운동하던 사람들(우익 청년단체 회원-연구자)”이 대부분이었고, 참석 내빈도 “김구(金九), 안재홍, 조소앙, 엄항섭 등 우익계” 인사들이었다.

이처럼 대한노총은 일반 노동조합과 매우 다른 경로를 밟아 조직화되었다. 즉 좌익노조에 대항해야 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우익 청년단체 및 인사들에 의해 위로부터 조직화되었다. 따라서 대한노총은 “총조직이 먼

저 결성되어 지구연맹을 결성하고, 그 지구연맹이 단위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조직화되었다(한국노총, 2002: 290).

한편, 대한노총은 전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획득한 영토만큼 자신의 세를 확장했다. 즉 대한노총의 조직화는 “이미 산별 조직에 뿌리를 박고 있었던 전평 산하 노조를 분쇄, 축출하는 반공투쟁과정과 일치”했다(한국노총, 2002: 287). 전평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대한노총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 총선(1945. 5. 10)과 정부 수립(1948. 8. 15)까지 반공 정치단체로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이처럼 대한노총의 성장사는 전평의 몰락사와 일치한다. 즉 대한노총은 1947년 9월 전평의 총파업과 그 실패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이 시기를 경유하면서 대한노총은 노동조합의 헤게모니를 완전하게 장악했다. 하지만 적이 사라진 이후 대한노총은 조직내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내분에 휩싸이는데, 이것은 대한노총의 기반에서부터 연원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노총의 지도부는 대부분 우익 진영의 반공청년들이었는데, 이들 간의 “알력과 파벌은 이후 조직을 끝없는 싸움으로 몰고 갔다.” 결국 “파벌싸움은 정치권력의 뜻에 따라 마무리되었고 이것은 정권과의 밀착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였다”(한국노총, 2002: 305).

이처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유일한 합법적 전국 조직이 된 대한노총은, 그 활동의 대상인 전평이 소멸하자 분열되는 한편 여전히 정치적 어용화의 길을 걸어갔다. 예를 들어 대한노총은 1949년 제4회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이른바 3월 대회파(혁신파)와 4월 대회파(보수파)로 분열되었고, 그후 이들 양파는 이승만 대통령의 조정에 의해 통합되었으나 대한노총 내 분파 작용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장명국, 1985: 119~120).

한편, 미군정은 대한노총의 조직화와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후견자였다. 남한의 우익은 미군정으로부터 대한노총의 설립을 인준받았다. 즉 “독청의 청년부장 김구(金龜)는 미군정의 노동부 차장인 박택을 찾아가 전평에 대항할 노동조합운동을 일으킬 의사를 표시하여 그 자리에서 합의하고, 즉시로 노동조합 조직 결성에 착수했다”(한국노총, 2002: 288). 한편, 미군정은 대한노총의 성장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예를 들어 9월

총파업 수습 과정에서 전평을 배제하고 대한노총 운수부 경성공장 지부 연맹을 교섭단체로 인정하여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개선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대한노총을 공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파업 가담자 1,400여 명 중에 대한노총 수습위원회에서 신원을 보장하는 600여 명을 석방시켰다(한국노총, 2002: 289 참조). 특히 미군정은 두 번에 걸친 전평의 총파업(1946년 9월 총파업과 1947년 3월 총파업) 이후 전평을 비합법화함으로써 대한노총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미군정과 정치권의 후견을 통해 성장한 대한노총은 미군정의 후견을 받는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었다. 이것은 대한노총의 파벌투쟁 중 이승만의 지시에 의해 전진한 위원장이 제거(1952. 11)된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대한노총의 최고위원 중의 한 사람이 자유당의 중앙위원에 임명됨에 따라 자유당의 기간단체로서 정치도구화되었다”(한국노총, 2002: 308). 이승만이 대한노총 통합대회(1952. 11. 8~9)에 보낸 메시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내가 우리나라의 대다수 노동자 농민을 위주로 하여 자유당을 조직한 것도 기왕에 천대받던 이 노동대중이 정치상으로 민족 대다수를 모아 한덩어리를 만들어서 큰 세력을 이루어 가지고 외적을 방어하자는 것이요... 단결을 이룬 후에는 자유로 투표해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 중에서 3인을 뽑아 천거하면 그 중에서 1인을 천거하여 1년 동안 자유당 중앙위원의 책임으로 시무케 할 것이니 투표하여 천거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동아일보>, 1952. 11. 10).

결론적으로 대한노총은 실천의 측면에서 볼 때,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유당의 정치외곽부대에 지나지 않았다. 즉 대한노총은 공산주의 세력을 노동조합과 남한 사회에서 몰아내는 데 집중했는데, 창립 이후 “주로 신탁통치 반대를 모토로 이승만, 김구, 안재홍 등 우익정치인을 조직에 끌어 들이면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전평 타도를 위한 대오를 형성”하는 데 골몰했다(한국노총, 2002: 289).

이처럼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노총은 파업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파업 파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 또한 대한노총의 활동은

정치투쟁에 집중되었는데,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나 현실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개혁 또는 변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하기 위해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전평이 사라진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사회부 노동국 통계에 따르면, 1948년에 “전평 산하 노조는 하나도 없는 반면, 대한노총의 산하 노조수는 683개, 조합원 127,618명이었다. 그러나 683개 노조 중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는 겨우 2개에 불과했다”(한국노총, 2002: 303).

한편,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대한노총의 이상과 같은 정치적 행보가 당시 노동운동이 처한 상황에서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대한노총이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대한노총을 평가할 것을 주문한다.

정치적의식이라는 것은 정부여당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스처로서(포장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전술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했다. 그렇게 해야 노동조합이 생존 할 수 있었다... 자유당이 반공주의를 표방하면서 존립을 해왔다. 처음부터 이념으로부터 노동운동이 출발된 것이 아니었고, 그 가운데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있었지만 노동조합이 그것에 의해 움직여진 것 또한 아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심이었지 이념은 하나의 치장이라고 본다. 조합주의로부터 추적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입은 옷을 보고 평가를 하고, 그것으로 재단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정치적인 사례로 본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그 당시 노동문제가 처한 조건이었을 것이다(인터뷰 J, 2003. 7. 23).

이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언급 또한 당시의 대한노총이 자신의 의도야 어떻든 간에 반공주의의 하나의 보루로서 활동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앞의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제4절 승자독식과 기형적인 이념지형의 형성

한국의 노동정치는 초기부터 고도로 정치화되었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고유의 노동정치 영역의 문제에 집중했다기보다는 국가정치적 어젠다에 보다 긴박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정치의 하부조직으로 위치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노동운동의 과잉정치화는 노동조합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밑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상황 속에서 외부 정치세력들에 의해 위로부터 구조화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노동운동이 식민지적 상황과 냉전과 분단의 정치상황에서 성장한 데서 기인한다.⁸³⁾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반제민족해방운동 또는 헤게모니 획득을 위한 정치세력의 전투와 경쟁에 전위부대로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한국의 노동조합은 정초활동부터 국가정치와 이념의 대리전에 동원되었다.

한국정치에서 노동정치의 비극은 전쟁의 결과가 우파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는 데 있다. 우파만의 승자독식의 체제가 공고화되자, 노동조합은 한편으로는 냉전체제의 구조에 갇혀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 국가의 정당화 도구로서 기능하였다. 이것은 한국에서 기형적인 이념지형이 형성되었고 자유민주주의가 합리성과 진보성을 결여한 채 비극적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형적인 이념지형은 특정 이념 중심의 배타적 이념체제 및 정치체제가 형성되었고 ‘냉전적 이

83) 한편 한국의 이념지형이 초기부터 국제주의를 갖고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좌파의 경우, 코민테른의 지시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사회주의 사상은 러시아혁명의 직접적 세례를 받은 이동휘 등의 한인 사회당, 고려공산당 등 국외에서 당 조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도입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국내 사회주의운동은 발생 초기부터 직접 코민테른의 노선을 수용하게 되었다. 또한 고려공산당과 코민테른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국내 사회주의운동의 분화가 초래되었다”(전명혁, 1999). 우파 또한 냉전체제라는 국제정치적 영향력하에서 노동조합 건설에 착수함으로써 국제정치 상황이 그대로 노동조합의 지형에 반영되었다.

념체제'의 형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냉전의 유산을 자신의 토양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했다. 이 토양 위에서는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만이 허용되었고, 모든 실천규범과 행위규범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와 '빨갱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만이 허용되었다.

협소하고 배타적인 '기형적인 이념지형'은 세 가지 점에서 한국정치의 나쁜 유산을 남겨주었다. 우선, 좌파는 물론 중도파의 몰락을 가져왔고 이후 반대파의 어떤 형태의 생존도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중도파와 좌파세력이 생존 불가능한 토양에서는 매카시즘과 독재권력만이 생존할 수 있을 뿐인데 이후 한국의 정치사가 이를 증명했다.

또한 한국사회는 기형적인 이념지형에서 레드콤플렉스라는 집단적인 광기상태에 빠져들었다. '빨갱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상징되는 레드콤플렉스는 반대파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상호 감시하도록 규율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통치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적 광기는 노동운동의 큰 장애로 다가왔다. 단적인 예로 다음의 인터뷰는 노동운동이 레드콤플렉스에 얼마나 고통받아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86년 지나고 나서 조직을 키워 놓으니까 직감으로 '87년 올해가 엄청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올해는 대공장에서 조직적인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직적으로 성공하면 큰 불씨를 줄 것이다... 공세적으로 한 것들 중 하나가 유인물을 임금인상에 대해서,... (그당시) 노조는 어용노조였는데 유인물이 배포되면서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담벼락에 페인트로 구호를 썼는데, '빨갱이가 나타났다'는 등의 (동요가 일어났다) (인터뷰 O, 2003. 8. 26).

마지막으로, 기형적인 이념지형은 이후 한국정치에 나타난 토론의 부재, 비판의 부재, 상상력의 부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기형적인 이념지형, 다시 말해 "냉전반공주의를 헤게모니로 한 정치경쟁의 지형은 광범위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는 정치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협애한 흑백논리적 양자택일로 정치를 축소"시켰다(최장집, 2003: 64~65). 토론은 차이성과 다양성에 대한 상호인정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기형적인 이념지형은 흑백논리와 진위 구별에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 이념지형은 토론은 물론이고 어떠한 비판도 목숨을 내걸고 시도해야 할 만큼 집단적 침

목을 강요했다. 또한 이러한 이념지형이 정치적 상상력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정치적 상상력은 우선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사고와 토론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기형적인 냉전적 사고체계는 오로지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주의를 중심에 놓고 정치와 정책을 사고한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상상력은 사회과학적 상상력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기형적인 이념지형은 예를 들어 사회과학적 담론을 협애하게 한다. 즉 “한국사회의 정치현실에서 보편적인 정치언어로서 좌와 우라든가, 또는 영어의 people, 프랑스의 peuple, 이탈리아의 popolo 등에 해당하는 적절한 말을 사용하기 어렵게 한다”(최장집, 2003: 65).

이상에서 보듯이 기형적인 이념체계는 토론, 비판, 상상력, 근대민족형성을, 국가의 수립을 저지했다. 이념에 따른 구별과 정치세계의 구성이 불가능해지자 정치가들과 사람들은 다른 기준을 찾게 되었고 지역주의와 학연·혈연 등의 전근대적인 정치적 자원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결국 한국정치의 비극은 기형적인 이념지형이라는 원죄로부터 예비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원죄 때문에 발생한 한국정치의 비극성은 노동정치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국가정치의 대리전에 동원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잉정치화되었다. 전평과 대한노총은 국가정치 영역의 이념과 전쟁에 이끌려서 자신의 고유한 정치 영역을 사고할 시간적·성찰적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 전평의 혁명적 노동조합주의가 신탁통치에 대한 지지에서 보듯이 조선공산당의 전략과 전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면, 대한노총의 반공적 노동조합주의는 우파의 노동조합에 대한 전략과 전술로서 상정된 것이었다. 결국 국가정치에서 우파가 승리했듯이 노동정치 영역에서 대한노총이 승리했다. 대한노총은 승자독식의 기형적인 노동정치지형의 유일한 거주자로서 정부가 제공하는 온갖 혜택을 향유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전투의 결과 형성된 기형적인 이념지형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공고화되었고, 이후 한국정치와 노동운동의 이념논쟁과 이념지평을 협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상력과 실천을 불가능하게 하는 ‘동토(凍土)’로 기능했다.

제3장

이익과 인간(1970년대)

제1절 한국적 민주주의: 반공주의와 근대화

반공이념은 ‘내부의 적’이 소멸되자 단독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 그도 그럴 것이, 반공은 공격과 살상의 무기이지 방어나 진지 구축의 연장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근대화 이데올로기⁸⁴⁾이다. 반공주의는 근대화 담론에 자신의 일부 자리를 내주었지만 근대화 담론과의 기묘한 조화를 통해 자신을 더욱 풍부화할 수 있었다.⁸⁵⁾ 이후 박정희 정부는 유신을 정당화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제창하는데, 그것은 반공주의와 근대화 담론을 합성시킨 정치적 담론이었다. 여기에서는 우선 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그런 다음

84) 근대화 담론은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보다 세련된 통치이데올로기였다. 이것은 “1950년대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서 “‘경제개발’이라는 최고 목표에 모든 사회적·정치적 가치를 복속시킴으로써 경제개발의 견인차로 규정된 국가권력의 통제력을 극대화”시킨 이데올로기이다. 근대화 담론은 “경제개발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은 물론이고 독재정치 조차 용인될 수 있다는 사고”를 갖게 했으며, 따라서 사회적 비판과 저항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김인걸 외, 2003: 285~286).

85) 한지수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지배이데올로기를 구분하고 있다. 즉 1960년대가 “반공+근대화(발전) 이데올로기” 시기였다면, 1970년대는 “반공+발전이데올로기+한국적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시기였다(한지수, 1989: 206).

근대화 담론과 반공주의의 만남을 서술하고자 한다.

1961년 5월 16일 이른 새벽, 서울 한강 인도교 부근에서 올린 요란한 총성과 함께 박정희 육군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쿠데타가 발생했다. 곧 군사혁명위원회로 조직된 군부는 전국에 계엄을 선포하고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의(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이다. 둘째,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덕과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이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다섯째,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할 것이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다(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육군중장 장도영, 1961. 5. 16).

혁명공약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반공주의를 천명한 것이며,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은 근대화 지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두 번째 항의 ‘자유우방’이 반공주의 국가와의 연대를 의미한 것이라면, 다섯 번째 항의 실력배양은 경제건설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담론은 여섯 번째 항의 민정이양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지속적으로 정당화되고 재생산되었다.

5·16혁명은 4·19의거의 연장이며, 조국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멸공과 민주수호로써 국가를 재생하기 위한 긴급한 비상조치였던 것입니다. 도덕과 경제의 재건은 바로 여러분들의 4월 의거 때 품었던 염원이었으며, 우리는 지금 이것을 계승실천하자는 것입니다(대통령 비서실, 1973. 김인걸 외, 2003: 261 재인용).

근대화 담론은 당시의 빈곤한 경제적 대지가 있었기에 피어날 수 있었

다. 당시 한국 사회는 심각한 ‘밥’의 결핍 상태에 있었다. 1950년대 한국경제는 무상원조 경제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는데, 이나마도 1950년대 말에 이르러 유상차관 방식으로 바뀌었다.⁸⁶⁾ 한편, 적산불하와 농지개혁은 철저하게 민중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졌다. 4·19 이후 한국의 정치 또한 혼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밥’의 해결은 요원한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세력은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 혼란을 명분으로 권력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고 이후 근대화 담론은 박정희 정권과 운명을 같이했다.

한편, 근대화 담론은 반공주의와 상호 보완관계를 통해 정치권력을 더욱 공고화하는 데 기여했다. 다음의 신년사와 취임사는 경제건설과 반공주의가 어떻게 상호 보완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일사불란한 반공국민의 기백은 “내 나라는 내가 지키며 내가 세운다”는 일면 국방, 일면 건설에의 의욕을 더 한층 굳게 다짐했습니다. 마을마다 고장마다 팽이를 들었던 손에 총칼을 들고 일어난 향토예비군은 물샴 틈 없는 우리의 반공태세를 과시하고 나섰습니다(『해외동포에 보내는 메시지』, 1969. 1. 2. 김정훈 외 2003: 150 재인용).

우리는 공산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절대적인 방위력이 필요하거나 그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 또한 경제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자주적인 정신과 자조의 노력, 자율적인 행동과 자립경제의 기반 없이는 형식상의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혼란과 파멸의 길만을 약속한 지난날의 경험... (『신년사』, 1962. 1. 1. 조현연, 2003: 314 재인용).

경제건설 없이는 빈곤의 추방이란 없을 뿐 아니라 경제건설 없이는

86)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1950년대 말에 이르러 급속히 동요하기 시작했다. 무모한 대외팽창정책에 따른 군사비, 경제원조 등에 의한 재정적자의 누적, 제3세계의 혁명발발에 의한 자본주의권의 위기, 사회주의권의 제3세계에 대한 경제공세의 강화 등으로 미국의 국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되어 갔다. 이에 미국은 자국의 군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58년 무상원조에서 유상차관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고, 동북아에서는 일본을 자신의 하위동맹자로 삼아 대소방위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특히 ‘경제근대화론’은 제3세계의 민족주의를 희석시키고 사회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는 주요한 전략이 되었다(김인걸 외, 2003).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실업과 무직을 추방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 그것 없이는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 즉 자유의 힘이 넘쳐흘러 북한의 동포를 해방하고 통일을 이룩할 수 없는 것… (『6대 대통령 취임사』, 1967. 7. 1. 조현연, 2003: 315 재인용).

이처럼 박정희 정권은 반공 및 반북이라는 국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근대화를 상징함으로써 정당성 없는 정권을 합리화하고자 했다. 따라서 경제건설에 대한 일체의 비판은 반공주의에 대한 거부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경제개발은 재벌이라는 소수 독점자본의 지원과 민중들에 대한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시장정책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차관과 수출주도형 산업화정책은 독점 강화와 종속 심화로 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군부, 관료, 재벌 간의 지배연합이 형성되었다.

이 같은 정치적 담론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었다. 우선, 법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을 들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은 헌법과 하위법, 특히 국가보안법과 노동법 개정을 통해 반공주의와 경제건설을 끊임없이 주지시켰다. 예를 들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 12)과 『유신헌법』(1972. 10)은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주어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했는데, 그 명분은 반공주의와 평화통일이었다.

나는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진영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면서 오늘의 이 역사적 과업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는 일대 민족주체세력의 형성을 축성하는 대전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 2개월간의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조치를 국민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계엄포고』 제1호, 1972. 10. 17).

다른 한편 박정희 정권은 군부, 정보기관, 관료기구 등을 재편하고 절대권력을 중앙정보부에 부여함으로써 반대파의 제거와 정치적 담론의 확산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을 만들어 경제개발을 진두 지휘하게 만들었다.

박정희 정권은 또한 이데올로기 장치를 통한 정치적 담론의 확산을 꾀하였다. 즉 “박정희 정권은 국민윤리와 교련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하고 ‘한국적 민주주의’와 ‘충효사상’을 보급하면서 반공주의와 민족주의를 국

민적 이데올로기로 세뇌시키고, 주민등록제도를 신설하여 예비군을 창설 하면서 전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안승천, 2002: 31). 한편,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노총도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기능했다는 점이다. 박정희 정권은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재조직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자 했는데, 특히 노동단체 결성에 공을 들였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한국노총이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노총은 대표적인 정부의 이데올로기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박정희 정권은 동의와 설득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고자 했는데, “1980년이 되면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GNP가 1,000달러가 넘어 마이카시대가 오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자”며 장밋빛 꿈을 펼쳐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강요했다(안승천, 2002: 31). 또한 유신선포 이후에는 ‘국민총화론’ 담론을 통해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자 했다. 즉 국민총화론은 “국가를 위해 국민들은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개인이나 국가를 국가라는 유기체의 부분으로 간주하면서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추구가 유보되고 개인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국가주의”의 전형이었다(김인걸 외, 2003: 260).

국가가 잘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잘되는 것이며 민족이 잘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잘되는 것이며,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크게 따지면 내 개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 자손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은 미덕이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대통령 연초기자회견』, 1970. 1. 9. 김인걸 외, 2003: 261 재인용).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이후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잡았다: “그 당시, 전두환 정권(노동운동의 암흑기) 시절 관제데모 분위기에서 활동가들과 소그룹 노동자들과 함께 ‘공장 일을 내 일처럼, 근로자를 가족 처럼’, 그리고 ‘충효’ 입간판을 추가하였었다. 다시 말하면 사장은 아버지이며, 이러한 군신관계·부모관계(공장장-노동자)의 이데올로기가 일상화되었다. 당시, 나는 노동자들이 접하는 슬로건 등을 가지고 토론을 많

이 했다”(인터뷰 B, 2003. 5. 30).

이러한 근대화 이념과 반공주의 담론은 강력한 국가의 성장, 일체의 저항행위의 불허, 재벌의 성장과 민중들의 절대적인 궁핍화를 잉태했다. 우선, 식민지 유산인 과대성장국가⁸⁷⁾가 박정희 정권을 통해 보다 강화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이데올로기적·경제적 통치 기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히 축소시켰다. 과대성장국은 특히 비판적 조직노동을 억제함으로써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었다. 즉 “한국에서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촉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강력한 조직노동이 없었다”는 데 기인한다(구혜근, 2001: 49).

또한 근대화 담론과 반공주의는 일체의 저항을 억압하는 정치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중앙정보부와 국가보안법은 일체의 반대자를 색출하고 격리시키는 주요 도구로 기능하였는데, 이것은 반공주의를 주요 무기로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1979년 대통령의 특별명령으로 『산업체에 대한 외부세력 침투실태 특별조사반』의 보고서(1979. 9. 14)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도시산업선교회의 의식화 운동이란 계급의식을 조장하고, 계급투쟁 의식을 근로자들에게 심어주는 운동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의식화 과정에서 계급투쟁 의식으로 무장된 이른바 ‘의식화’된 핵심요원들이 근로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현행 노동관계 법규는 물론 나아가서는 우리의 현장질서까지 부인, 파괴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산업선교회의 의식화 활동은 노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이를 공안적 차원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사태를 만들게 될 것이다

87) 시민사회에 비해 과대 성장된 국가는 일본식민지 통치모델로부터 연원한다. 식민지조선은 총독을 정점으로 위계질서를 형성하였는데, 총독은 “모두 현역 장성 혹은 그 출신”이었고, “경찰력에 바탕을 두고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까지도 장악한 절대군주”로 군림하였다. 한편, 경찰은 주요한 통치기구였는데, “1911년 당시 6,000여 명에 불과하던 경찰의 숫자가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1941년에는 그 열 배인 6만 명”에 달했다. “이 숫자는 그 당시 조선 인구 400명당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김영명, 2003: 28).

(『진노협백서』 1, 1997: 16~21 재인용).

이런 맥락에서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위한 3선개헌을 추진하였다. 이때의 명분도 ‘국가안보의 강화와 경제개발의 가속화’에 있었다.

한편, 반공주의와 근대화 담론은 경제성장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기시켰다. 이처럼 압축적인 고도의 경제성장은 건전한 경제적 인프라 구축과 정치발전을 희생해서 세워진 것이었다. 국민경제의 대외종속성의 심화, 부문간·계급간 소득불균형, 산업간 불균형 등은 이 과정에서 생겨났다. 특히 재벌구조의 심화와 지배연합의 형성은 향후 한국의 정치경제를 규정하는 지형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산업화는 서로 연관된 농민의 몰락과 노동자의 궁핍화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

공업화 중시의 경제정책은 농민층을 급속히 몰락시킨다. 농사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빈농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든다. 특히 1968년 대가뭄으로 농민들의 도시로의 이주가 가속화된다. 이들은 도시 변두리 판자촌(‘달동네’)에서 단칸방에 세들어 살거나 움막을 짓고 살면서 대규모의 실업자군을 형성한다. 아버지는 막노동(‘노가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고 그나마도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다. 어머니는 머리에 김밥이나 튀밥이 든 대야를 이고 행상을 다닌다. 부모는 자녀들을 교육시킬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돈을 벌기 위해 보세공장, 신발공장, 인쇄소 등에 취직한다. 신문배달, 구두닦이, 껌팔이로 나서는 아이들도 생긴다(안승천, 2002: 12).

이상에서 보듯이 박정희 군부독재정권은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근대화 담론을 통해 정치세계를 운영했다. 이것은 일체의 비판과 일체의 반대자를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통치이데올로기로 점차 발전했다. 유신 직후에 나온 한국적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은 도리어 안정을 방해하고 비능률과 낭비만을 일삼아 왔으며, 파쟁과 정략의 갈등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남의 민주주의를 미숙하게 그대로 모방만 하려했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또한 현행 헌법하에서의 정치체제가

가져다 준 국력의 분산과 낭비를 지양하고 이를 조직화하여 능률의 극대화를 기하며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를 가능케 하는 유신적 개혁을 단행하는 것만이 국가의 안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기하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합니다(『헌법개정안 공고에 대한 대통령 담화 및 동 제안이유서』, 박정희, 1972. 10. 27).

이처럼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⁸⁸⁾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자 했다. 박정희 정부는 “서구식 대의민주정치를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보문제와 경제개발의 추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민족의 역사 전통 위에 뿌리박고 현실 여건에 부합되는”, 즉 경제개발과 반공주의에 기반한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인걸 외, 2003: 329). 이것은 반대파들의 민주주의 요구에 대한 반격이며, 기존의 자신의 정치적 담론을 세련화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담론과 이데올로기는 내부로부터 저항군과 저항 담론을 생성시키고 있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식인과 중산층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주장한 반면, 궁핍한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성장 신화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재벌 신화에 근거한 근대화와 민주주의 억압의 도구인 반공주의의 정치 담론이 만든 한국사회의 유산은 이후 한국정치와 경제를 심각하게 비틀어버리는 ‘원죄’로 기능했다.

제2절 민주노조와 인간적 노동조합주의

1. 기독교와 휴머니즘과의 만남

1970년대에 인간적 노동조합주의에 씨앗을 뿌린 사람들은 주로 도시산

88) 이러한 언급은 초기의 민주주의에 대한 박정희 자신의 입장과 배치된다. 즉 박정희는 기존에 “수구에서 물려받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하에 중국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경제개발계획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아세아에 있어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패와 장래를 결정하게 될 유일한 관건”이라고 언급했었다(박정희, 1962: 227).

업선교회나 가톨릭노동청년회 등의 종교단체, 크리스찬 아카데미 등의 기독교 교육단체, 고려대학교와 서강대학교 등의 대학 산하 노동문제연구단체,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야학단체와 민간단체 등이었다.⁸⁹⁾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는 1966년에,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는 1967년에 개설되어 학술조사, 연구활동, 출판과 더불어 노동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학의 노동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사회가 산업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로 수립하는 데 일조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대학 프로그램은 성격상 노동문제에 대한 중립성을 표방하였고 교육 대상자들도 기업의 노무관리자나 정부의 노동정책 관련자까지 포함하였다. 프로그램들은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노조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은 노동조합 간부의 노조 운영에 기술적인 도움을 주고 지적 욕구를 채우는데 기여하기도 했으나 당시 노동운동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정연순, 1998: 13). 또한 이들 대학 연구소들은 정부로부터 견제를 받으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았는데, 고대 노동문제연구소의 경우 1973년 연구소의 주요 멤버들이 반공법으로 구속되고 연구소 관련 교수들이 해임되면서 활동이 침체되었다.

한편 1970년대 노동야학은 검정고시 야학에 대한 반성과 함께 대학생들이 지식인으로서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뿌리를 내리

89) 1970년대의 노동교육은 이전의 교육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노동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의 노동조합 교육이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학에서의 교육은 1950년대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나 1960년대 말 이후 대학과 종교단체들이 노동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노동교육의 주체는 매우 다양해졌다. 또한 이것은 내용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질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노총이 “노사협조이념의 전파나 노동조합 실무에 관한 것”이었다면 야학은 검정고시 야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육 이수 또는 이를 위한 자격증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반면 1970년대 노동교육은 “노동문제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는 것과 이의 해결을 위해 노동자 조직을 만들고 활동할 것을 권하고 있었다.” 한편 교육의 방식도 매우 달랐는데, “노동자들의 소모임이 중심이 되어 토론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런 교육 형식은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이나 생활에서 부딪치는 비인간적인 대우나 고립감들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동질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정연순, 1998: 2~3).

게 되었다. 1970년대 초반 노동자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대학생들의 활동으로 야학은 급증하였다. 그러나 초기에 이들이 실시했던 야학에서의 교육은 제도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빈곤이 교육 부족에 있다고 생각하고 노동자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쳐 검정고시에 합격시키기 위해 활동하였고 이것이 노동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 야학 학생들의 검정고시 합격률은 극히 저조하여 30%에도 미치지 못했고 합격해도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진학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야학활동은 점차 그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반 야학의 교육 목적은 노동자들이 처한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두어졌으며 따라서 교육 내용도 노동문제, 노동법, 사회과학 이론 등으로 바뀌었다(정연순, 1998: 14~15 참조).

이상에서 보듯이 학생운동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노동현장에 조직적·의식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1970년대 중반까지의 노동야학은 ‘검정고시 야학’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노동야학’으로 서서히 전환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검정고시 야학’이 “현장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른바 ‘노동자의 대학생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신정권의 탄압과 그로 인한 지원세력의 약화로 퇴조”하게 되었다(한국노총, 2002: 518).

재단법인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경우 1965년 ‘한국기독교학술원’(같은 해에 한국 크리스찬 아카데미로 개칭)이라는 명칭으로 창립되었다. 당시 경동교회 목사였던 강원용은 교회가 역사적·사회적 임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꾸준히 기독교의 사회참여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회는 기독교가 사회문제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목사, 신학자, 사회과학자 등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 결과물이었다. 다음의 설립 목적은 연구회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법인은 한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모든 문제를 조사·연구하고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협의회를 가지며, 모든 분야에 봉사할 일꾼을 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정관). 조사·연구, 대화운동, 교육훈련이라는 과제

를 통해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추구한 목표는 한국사회를 이끌 이념 형성과 이를 담지한 집단의 양성이라는 두 가지였다.⁹⁰⁾ 이들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간화'를 한국사회가 추구할 이념으로 설정했다. 즉 이들은 인간의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존중받는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를 모델로 삼았는데 이것은 '개방된 미래를 향하여 부단히 추구해 가는' 이상적인 개념인 인간화된 사회의 현실 모델이었다. 이들은 이것을 담지할 집단을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자 했다. 이들은 이 집단을 '중간집단'이라고 개념화했고 중간집단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하고자 했다. 여기에서 중간집단은 화해나 이해가 단절된 양극화를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한 완충적·매개적 기능과 역할을 하는 민주적 압력 집단을 의미했다(정연순, 1998: 19~23 참조).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사회개혁 참여의 방식으로 '대화운동'을 선택하였다. 이는 어느 한 집단이 힘의 우위로써 자신의 논리를 타집단에게 강요하지 않고 개방적인 논의의 장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교육에서도 지식이나 메시지 전달보다는 참가자들이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경험한 것을 교류하고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중요시되었다. 이런 점에서 고대 노동문제연구소와는 달리 강의뿐만 아니라 노동가 부르기, 연극, 촛불의식 등을 통해 실천적 의식을 불어넣으려고 하였다. 여기에는 조합간부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참가하였으며, 교육 수료자들의 후속 모임도 추진, 이들이 '노동사례연구회'를 결성하여 상호연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크리스찬 아카데미 역시 1978년 말 실무간사들이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중단되었다(정연순, 1998: 19~23; 양승조, 1991: 55~56; 한국노총, 2002: 518 참조).⁹¹⁾

90) 크리스찬 아카데미 재단의 설립자 강원용을 비롯하여 여기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인사들은 기독교 지식인들이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유학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다양한 사회계층이 권력을 분점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다(정연순, 1998: 21).

91) 당시 중앙정보부 발표에 따르면 구속된 아카데미 간사들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실현한다는 목적 아래 비밀서클을 결성하여 북한방송을 청취하는 한편, 북한에서 발행된 책자를 비롯하여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하고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활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크리스찬 아카데미 중간집단 교육은 이 사건을 계기로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기독교 단체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외에도 가톨릭노동청년회(JOC)⁹²⁾와 도시산업선교회 등이 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교육활동에 치중하였다면, 공장에 들어가 노동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교활동을 한 단체는 도시산업선교회와 JOC였다.

1950년대 말에 조직된 도시산업선교회(1957)와 JOC(1958)는 처음에는 교회 전도의 연장선상에서 노동자들과 만나기 시작했으나 1970년대부터는 노동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기 시작했다.⁹³⁾ 한국의 JOC는 1958년에 JOC 창설자 요셉 까르디인 추기경의 내환을 계기로 결성되었으며 처음에는 사회에서 소외된 종이 굶는 소년들과 구두담이 소년들, 그리고 윤락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봉사적인 차원의 구호나 봉사활동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 JOC는 점차 이 과정에서 스스로 의식화되었다(박세현, 1996: 84~86 참조).

한편 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는 1957년부터 활동했다. 도시산업선교회를 시작한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1957), 기독교대한감리회(1961), 대한성공회(1962), 한국기독교장로회(1963), 구세군(1963) 등이며 1964년에는 한국도시산업전도협의회(U.M.I.)라는 연합조직이 생겼다. 초기의 산업선교 활동은 각 교회가 중심이 되어 교회 전도(Church Evangelism)의 연장선으로 산업사회 속에서 예배를 보고 성서 연구를 하며 평신도 그룹활동 등을 하는 예배 중심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전도 대상도 관리자와 노동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말에 이르러 현실 노동자의 실태와 산업사회의 문제점에 접하면서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기독교

1979년에 중단되었다(정연순, 1998: 27~28).

92) JOC는 불어로 Jeunesse Ouvriere Chrietinne의 약자이며 영어로는 Y.C.W. (Young Christian Workers)이다. JOC는 흔히 '지오쎬'로 발음(호칭)되었다(박세현, 1996: 84).

93) JOC는 분당 혹은 직장단위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사회 안의 노동자를 그리스도화 하자는 목적으로 노동자들 안에 파고들어가 생활하며 성경 연구와 교회의 사회론을 토대로 관찰(노동실태의 조사), 판단(조사된 실태와 성경과 교회의 사회론을 비교), 실천(그릇된 점을 고치고 좋은 면을 조장, 발전시킴)의 3단계적인 방법으로 노동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모셔 가는 의도로 조직된 특수 가톨릭 운동이었다(박세현, 1996: 84).

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방법으로라도 인간화를 추구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강조점을 두게 되었다. 즉 복음주의(Evangelism)에서 선교(Mission) 입장이 바뀌었고 그 명칭도 산업 전도(Industrial Evangelism)에서 도시산업선교(Urban Industrial Mission)로 바뀌었다(박세현, 1996: 34~37 참조).

이상에서 보듯이 JOC와 도시산업선교는 1970년대를 경유하면서 노동자를 의식화하고 노조 결성과 근로조건 개선투쟁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문제를 사회문제화하는 데 앞장섰다. 유신정권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원풍모방, 반도상사, 동일방직, 콘트롤데이타노조 등 1970년대 민주노조들 중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들 종교단체와 노동자들의 만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기독교 단체와 노동자들의 만남의 단초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톨릭과 기독교의 산업선교는 강화도 ‘십도직물 사건’으로 부상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이러한 흐름은 공업화의 진전과 함께 기층노동자에 대한 선교를 통하여 활발히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한국노총 서울특별시 지역본부, 1998: 45). 기독교 단체는 초기에 노동자, 그리고 조직노동을 인간, 그리고 고난을 받는 가난한 자로만 이해했다. 따라서 초기 활동은 이들의 영적인 구원을 전제로 한 선교에 두어졌다. 하지만, 이들은 점차 노동자들이 서 있는 지형을 구조적 모순이 중첩된 영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자들이 조직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지식을 빌려주고 조직화 활동을 하고자 했다. 이러한 활동은 대략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중반에 이루어졌으며 JOC와 산업선교는 “주로 미조직 노동자들의 의식화 및 조직화에 주력하여 그들이 조직화되면 조직노동운동에 넘겨주는 활동을 전개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254). 따라서 이 시기에는 기독교 단체와 한국노총이 밀월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유신체제의 성립과 이에 대한 한국노총의 지지, 한국노총 상층부에 대한 실망,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태동에 따라 한국노총과 기독교 단체는 적대관계로 돌아섰다.

그렇다면 도시산업선교회와 노동자들의 만남은 어떤 계기에서 이루어

졌는가? 그것은 기독교의 이념과 당시 노동자의 상태에 있다. 즉 가난한 자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소명 의식과 빈곤 및 비인간적 대우로 신음하던 노동자들의 상태가 이들간의 자연스런 만남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전태일 분신 사건은 양자간 만남을 매개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전태일 사건 이후 대학생, 지식인,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노동문제에 비로소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종교계는 전태일 사건 훨씬 이전부터 노동자들과 접촉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종교계와 노동자들의 초기 만남은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진도해야 한다는 종교계의 소박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종교계는 이 만남의 과정에서 점차 사회구조와 노동자들의 처지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들이 노동현장에서 발견한 것은 인권을 박탈당한, 소외되고 억눌린 민중이었기 때문이다:

산업선교는 억압받는 이들의 곁으로 가야 합니다. 선교하는 목사들은 억압받는 민중의 편에 확실히 서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의 속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어야 하고 그들이 장시간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자리에서 해방시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산업선교의 할 일입니다(『정진동 목사 향소이유서』, 1977. 8. 2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456 재인용).

따라서 이들은 종교적 사명감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노동자들을 도와주고자 했다. 이들의 소명 의식은 당시의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앞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휴일이 없이 일을 시켜도(4월에는 휴일이 한 번도 없었음), 봉급을 며칠씩 늦게 주어도 속수무책이다. 적자 운영이라는 명목하에 통근차가 있던 것도 없어지고, 1주일에 한 번은 멀찍한 고깃국을 주던 것도 없어졌다. 3교대 노동(06~14시, 14~22시, 22~06시)에서 밤일(22~06시)을 하면 수당이 50% 붙는다. 이것이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근로자측에서는 보고 있다. (건강을 생각하기 전에) 그러나 이것도 5월 1일부터 밤일을 없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많은 사표를 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회사측이 편하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보아주는 기관인 것 같다(도시산업선교회 활동실무자 정양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111~112 재인용).

이 당시 노동자들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관심과 도움을 받지 못했던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산업선교회의 관심과 도움은 노동자들에게 있어 하나님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었던 매우 놀라운 ‘맛나’와 ‘단비’ 같은 것이었다.

우리들은 모두 산업선교회로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이제 지쳐 양심의 소리도 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산업선교회는 참삶을, 참그리스도인의 삶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눈뜬 봉사, 귀먹고 말 못하는 노동자에게 밝은 빛을, 그리스도의 진리를 외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뛰어다니는 목사님과 실무자들을 볼 때 우리의 고통을 나누어 지고자 애쓰는 그분들을 볼 때 우리의 가슴속에서 끓어오른 뜨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가난하고 약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 말겠다”고 외치는 작은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기계처럼 스위치만 누르면 움직이고 돌아가던 노동자의 머리도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저항할 줄도 그리고 뺏긴 권리를 찾기 위해 기업주와 맞서기도 하였습니다(『어느 노동자의 수기』, 1978. 3. 1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453 재인용).

이상의 진술에서 이제 우리는 “노동자들은 왜 교회에 도움을 청했을까? 그 답은 간단하다. 노동자들이 다른 어느 곳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구해근, 2002: 121)라는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양자간의 만남 이후 기독교 단체는 민주노조운동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 당시 대부분의 노조활동가들이 이들이 주관하는 소그룹 활동과 교육을 통해 배출되었고 대부분의 민주노조가 이들의 지원에 의해 결성되었다. 이들은 심포지엄이나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노동자의 처지를 사회에 알리고 자본가나 관련 정부기관에 압력을 넣어 개별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즉 기독교 단체의 활동은 현장체험과 함께 실

태조사, 소그룹활동, 노동자교육, 노조 설립과 활동지원 등 매우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기독교 단체의 활동은 노동자 밀집 지역인 서울 영등포와 인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한국모방에서는 두 단체 사이의 분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편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조화순 목사 처럼 동일방직에서 직접 실무간사로 일하기도 하는 등 이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안승천, 2002: 48).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자들은 양자간의 만남에서 의식화의 계기를 갖게 되었다. “진근대적·반봉건적·가부장적 노사관계 상황하에서는 노동관계법과 노동조합에 대해 알려준다는 사실 자체가 노동자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다. 이들을 통해 접한 근로기준법은 신기한 ‘보물지도’였다. 근로기준법을 알면서 노동자들의 의식은 급격히 변해 갔으며 도시산업선교회는 온갖 진보의 상징이 되었다”(민중석, 1989: 50~51; 김동춘, 1995: 363). 이러한 자각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대화 담론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당시 “노동자들의 사회적 이름은 근력을 소진할 때까지 힘써 일하라는 ‘근로자’였다. 사장은 이들을 ‘종업원’이라고 불렀다. 주위에서 멸시의 눈초리를 보내며 부를 때 그들의 이름은 ‘공돌이’와 ‘공순이’였다”(안승천, 2002: 11).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러한 천대, 억압, 멸시에 대해 비로소 비판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국노총에 대한 비판과 민주노조의 건설로 귀결되었다. 결국 이 만남은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이 역사적 경향이 되도록 이끌었다.

2. 내용과 정의

민주노조운동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 그리고 이 분노에 공감하는 기독교 단체와의 만남에서 그 이념적 성격을 찾을 수 있다. 즉 민주노조는 앞서 보았듯이 기독교 단체로부터 실무적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적 자양분과 정당성의 무기를 제공받아 조직화되었고, 열악한 현실로부터 자신들의 저항의 정당성과 조직화의 자원을 확보했다. 따라서 민주노조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단체의 이념과 당시 노동자들의 저항의 계기, 목적, 결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기독교 단체는 어떤 목적과 이념을 가지고 노동자들에게 접근했고 조직화하려고 했는가? 한 마디로 산업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노동자들의 생활상태에 대한 기독교 소명의 관점, 즉 윤리적·도덕적·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했다.⁹⁴⁾ 우선, 도시산업선교회

94) 기독교 이념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기독교가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신학적 배경은 ‘인간화의 신학’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고 할 수 있다. 인간화의 신학은 어떤 새로운 신학사상이나 어느 신학자에 의해 정리된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살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여러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나타난 것으로서 신학사상의 공통 요인들을 인간화의 신학이라는 명칭으로 묶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라가츠(Leonhard Ragaz)는 진정한 사회주의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보았으며 이런 맥락에서 라우센부슈(Walter Rauschenbusch)도 자본주의를 비인간적이라는 이유로 사회주의의 인간다움의 요소를 받아들인다. 한편 쉘(Richard Shaull)은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맞서서 낡은 사회를 개혁함으로써 인간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몰트만(Jurgen Moltman)은 “인간화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공동체를 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참여하여 개혁하고 변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크리스찬들이 인류의 인간화를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신학이 인간화의 신학인데, 이것은 산업화의 등장과 함께 인간을 더욱 비인간화시키는 사회구조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참모습을 되찾기 위해 나타난 신학사상들의 공통 요인을 묶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이 남미나 한국에서 구체화된 형태가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다.

한편, 하나님의 선교라는 신학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역사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타난 선교신학의 개념으로 1952년 국제선교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신학은 교회가 인간 개인의 영혼의 구원과 교회 자체의 신장으로만 생각되었던 사고에서 탈피하여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띠고 있으며 그 선교는 또한 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고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는 과거 하나님-교회-세계라는 구조 속에서 인식되었던 교회관이 하나님-세계-교회라는 구조에 근거한 교회관으로 변화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세상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며 이 관심(선교)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학이다. 이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활동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 놓는 동시에 인간을 불의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세력에서 해방시키고 물질적 빈곤과 정신적 고뇌에서 구출한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내용은 인간해방이며 그 구체적인 대상은 억압받는 무리인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선교신학은 한국에서 1960년대 이후 받아들여졌으며, 이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일부는 복음의 사회성 내지 역사성에 보다 큰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사회 변화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자유, 안전 및 평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에 진보적 교회들의 신학적 입장은 ‘하나님 선교’의 구체화에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교 차원에서 오늘의 구원이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에서의 해방과 인간소외에서 공

의 경우 현존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현대 도시산업사회는 과거 우리 교회가 성장해 온 시대적 배경과는 달리 많은 발전적 변화를 이룩한 반면, 온갖 사회적 역기능도 위협선에 다다르고 있음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경제발전과 빈부격차, 고층빌딩과 판자촌, 기계문명과 인간소외, 공업화와 공해문제 등등, 수많은 부조리 현상이 각계각층에 만연하여 사회와 교회를 질식시키고 있다.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향해 해방을 선포함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도시산업선교회의 기본자세에 관하여』, 1975.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273 재인용).

이상에서 보듯이 이들은 “노동자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발견하고 이들 고통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나 하는 데 강조를 두어 활동”하고자 했다(박세현, 1996: 40). 즉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성서적 입장에 바탕하여 노동자들이 부당한 핍박을 받을 때는 실정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과감하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용기”를 보였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254). 가톨릭과 개신교의 노동운동 단체들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1977. 3. 10) 신구교 연합특별미사를 보고 선포한 ‘노동자 인권선언서’는 이들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의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며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서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인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서도 침해할 수 없는 존엄한 것이다(『1977년 노동자인권선언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454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단체는 노동자의 인권보장 실현방법으로 노동 3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과 8시간 노동제, 근로기준법 준수, 어용노조 탄압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활동을 했다고 해서 당시 정부의

동유대의 창조라고 보았다(박세현, 1996 참조).

기독교 단체에 대한 시각처럼 유물론적 사고나 공산주의에 경도되었다고 보는 것은 낡스다.⁹⁵⁾ 이것은 이들이 믿고 있는 내세론과 반공주의에 대한 태도만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우선 기독교 단체 담당자들은 내세에 대한 믿음과 종교적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나는 기독교 목사로서 분명히 내세를 믿는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런 억울함을 당해서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 날이 올 것을 나는 확신한다. 살인자가 정말 살인자로, 도둑놈이 정말 도둑놈으로 밝혀질 그런 날이 오고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날이 분명히 온다(『인명진 목사 설교』, 1978. 4. 1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456 재인용).

도시산업선교야말로 지금은 일하시는 하나님(요한복음 5장 20절)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도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주께서 나를 보내심은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눈뜨임을 선포하며 눌린 자들은 놓아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누가복음 4장 18~19절)하는 교회의 선교활동이란 확신과 감격을 갖게 된 것이다(조승혁, 『도시산업선교의 인식』, 민중사, 198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107 재인용).

이상의 언급에서 보듯이 이들의 노동현장에서의 활동은 기독교 유일신의 정언명령에 따라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시도된 ‘봉사’활동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유물론과 공산주의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었다. 이것은 홍지영의 『산업선교 무엇을 노리나』

95) 이것은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경우에도 명백한데, 이들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교육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실천으로 중간집단을 양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화해와 통합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권력자에 의한 부와 정치권력의 독점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어느 한 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적 사회 변화도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간집단의 교육 목표도 ‘민중의식의 고취’나 ‘계급의식의 고취’를 통한 사회 변혁의 전위집단의 양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들이 원했던 중간집단은 계층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회운동의 지도자였다(정연순, 1998: 22 참조).

(1978)와 교회 장로이자 서울시경 제2부국장인 김재국이 편저한 『한국기독교의 이해』(1976)에 대한 도시산업선교회의 대응에서 나타난다. 이 책들은 도시산업선교를 용공주의자 내지 반공주의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실천이 계급투쟁적 혁명활동이라고 공격했다:

반공의 최선봉에 선 성직자들을 공산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자인 듯 날조하여 국론을 분열하고 반공전선을 흐트러트리는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 교회가 막대한 예산과 심혈을 기울여 주의 종들이 기도로서 감당하는 선교사업과 그 기관을 그렇게 엉뚱하게 그릇 비판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우고 교계 내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과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지 귀하의 애국심과 신앙양심에 묻고 싶다(한국도시산업연합선교회, 1976. 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279 재인용).

이에 대해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즉 『한국기독교의 이해』에 대한 반비판의 의도로 작성된 『문공부장관께 드리는 건의문』(1976. 10)은 도시산업선교회가 반공주의에서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공산주의로부터 가장 강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도전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이 항쟁하여 얻은 결실이 말씀의 신학, 인간화 신학, 해방의 신학, 희망의 신학, 민중의 신학 등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의 신학들은 현대 공산주의 가치관에 대항하고 있는 기독교의 시대적 사명과 본질을 규명하려고 노력한 결과 얻어진 결실입니다. 가난하고 놀리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기독교 선교단체들은 이러한 신학의 이론에서 새로운 선교방법을 배워서 유물론적이며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마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저지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공산주의를 이기는 첩경이라면 바로 우리들은 그런 일에 신앙적인 열성을 지금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한국특수지역선교위원회, 1976. 1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278~279 재인용).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적인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도시산업선교회는 순수 신앙 차원에서 노동운동에 간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도

시산업선교회의 실천가인 고애심 전도사의 고백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한 여전도사의 한 사람이다. 아버지는 현직 장로이고 어머니는 권사이며 오빠도 장로로 시무하고 있고 신학대학을 다니는 동생도 있다. 총회전도부 산업선교훈련원에서 산업선교훈련을 받고 나서 경서노회 산업선교위원회의 초청으로 구미를 선교지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교사업을 착수했다. 연약한 여성 근로자들을 교회적 입장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도와 보겠다는 행위가 왜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신앙, 양심을 통해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세력에 굴할 수 없으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맘으로 섬기며 근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갖도록 하는 데 내 영혼을 바칠 결심이다(고애심, 1978. 1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463 재인용).

그러면서 고 전도사는 다음의 성경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이사야, 6장 8절).

이상에서 보듯이 기독교 단체의 태도는 애초부터 사회주의 이념과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지적 세례를 받고 노동조합활동을 전개한 민주노조는 적어도 계급적 담론과 사회주의에 대한 정보와 영향을 이들로부터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민주노조운동의 또 다른 배경은 당시의 열악한 노동자들의 상태에 있다. 즉 당시 “노동자들은 경제개발과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허리띠를 한 없이 졸라매도록 강요받았으며,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양승조, 1991: 48). 당시의 임금수준은 최저생계비의 40~50%에도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 또한 갈수록 낮아졌다. 즉 1970년 최저생계비가 29,005원인 데 비해 임금수준은 15,032원으로 51.8%이던 것이 1975년에는 생계비 86,315원에 임금은 40,020원으로 그 비율이 46.4%로 낮아짐으로써 오히려 줄어드는 기막힌 추세를 보이게 된

다. 노동시간도 주당 50시간이 넘었다. 1970년 주당 노동시간이 51.6시간, 1975년 50.5시간, 1980년 51.6시간으로 이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이었다. 이러한 장시간노동은 노동자의 생활을 무기력과 질병,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되는데, 장시간노동이 그대로 지속된 이유는 저임금으로 인해 생계비 보충을 위해서는 연장, 휴일노동이 불가피했던 것도 원인이었지만, 노동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허용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저임금 장시간노동 외에도 늘어나는 산업재해, 직업병, 외국폐기물사업 수입에 의한 유해 작업환경, 높은 강도의 노동으로 당시 노동자의 생활이란 너무도 열악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양승조, 1991: 49).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사용자와 관리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비인간적 모욕을 당해야 했다: “바른 말 했다 하면 상사의 말을 듣지 않는 건 방진 공순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욕지거리와 구타를 감수해야 했고 그나마 귀찮아지면 회사 밖으로 내쫓겨야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알팍한 월급봉투에 매달려 있는 늙은 어머니와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노동자는 태어날 때부터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바보로 길들여졌을 뿐입니다”(『어느 노동자의 글』, 1978. 3. 1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453 재인용).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와 기업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그리고 어용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분노와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라는 대항 권력을 발견했다. YH무역 최순영 노조지부장의 메모는 이것을 잘 보여준다.

임금인상에 따른 몇 가지 요구를 공장장에게 제시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어 다시 말하자 “건방지다”는 한 마디 답변뿐이었다. 2백여 명이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을 하면서 우리의 행동 이유를 공장장에게 설명하자 “너희같이 무식한 놈들과는 상대도 하기 싫으니 그만두자”고 말했다.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처음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말을 들었다. 조합이 결성되면 사용자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렇게 된다면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성하겠다”고 결심했다(최순영·민중석, 1989: 48~49 재인용).

이상에서 보듯이 민주노조는 개별 공장에서의 비인간적 대우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즉자적 또는 생존권적 저항에서 비롯되었다. 이 말은 민주노조가 특정 이념과 서클에 의해 조직되고 개별 공장을 넘어선 노동자들간의 연대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민주노조는 기독교 휴머니즘에서 지적·물적 도움을 받아 당시의 열악한 노동의 상황에 대응한 노동자들의 저항의 산물이었다. 즉 민주노조의 주체는 대개가 도시산업선교회 등에서 교육받은 노동자들로서 노동자들의 비인간적 삶에 대한 저항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들 사업장이 대부분 1960년대에 광범하게 형성된 경공업분야이고 이 사업장의 주요 구성원은 단순기능공인 여성노동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은 경공업 중심의 여성노동자이면서 동시에 기독교로부터 지적 세례를 받은 노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민주노조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비인간적 대우에 대해 싸웠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적 의식으로 무장했다기보다는 앞에서 보았듯이 한편으로는 기독교적 인간주의, 즉 작업장에서의 인권 억압에 대한 저항⁹⁶⁾과 열악한 경제적 처우의 개선, 즉 경제적 개선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이건 너무 회사가 지나치게 노동자들을 그야말로, 요새말로 머슴 취급하고 혹사시킨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로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또 법도 모르고 하다보니까 위반이다 그러니까 감옥 가게 된 것이지 특별한 의식이 있어서 노동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었죠... 아마 칠십년대 초반은 대부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지현태, 1988: 81 재인용).

그리고 민주노조는 두 가지 점에서 '민주'노조에 상응했는데, 첫째는 노조운영방식 자체가 민주적이었다. 노조지도부는 꾸준한 일상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조합원들과 토론을 통해 대부분의 안건을 결정하였다.⁹⁷⁾ 이러

96) 연구자: '도시산업선교회'와 같은 기독교와 연계된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인터뷰 B: 인권운동이다(인터뷰 B, 2003. 5. 30).

97) 이에 대해 전순옥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당시의 민주노조는 상당히 민주적이었습니다. 지도부는 밑으로부터 선출되었고 중요한 안건은 조합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토론의 과정은 투명했습니다. 따라서 노조원들은 이 과정

한 민주적 방식의 노조 운영은 대중투쟁을 가능하게 했다. 이 당시 민주 노조가 벌인 투쟁들 대부분은 간부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대중투쟁이었다:

막판에 싸움에 가 가지고 싸움을 할 때도 그 토론들, 한 이삼백 명 한 거를 의견을 다 받았어 그 토론을...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건 근본적으로 강의를 다 하고, 이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노동조합이 왜 이런 상황이 됐고 어떻게 될 거라는 그것만 짚 설명을 조합원들한테 며칠 돌아가면서 강의식으로 한 거야. 하고 나서 그 답에 분반토의를 다 들어가는 거지. 그렇다면 이거를 싸움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스스로 다 결정하도록 그거를 다 했어요. 그래서 딱 되니까 한 사람도 이탈을 안 해. 그래서 나중에 조사받을 때 지독한 년이라고. 세뇌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되게 혼났잖아. 하하하... 다들 시킨 게 아니고 내가 했다 그랬으니까(백은숙·정연순, 1988: 79~80 재인용).

또한 1970년대 당시의 민주노조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의 대변자였고 당시의 권력관계에 대한 비판자였다는 점에서 ‘민주’노조라 불릴 만했다. 즉 이들은 기존의 노사, 노정, 그리고 노노관계(노동조합과 한국노총)를 부정했다. 이런 점에서 당시의 민주노조는 국가, 어용노조, 기업으로부터 자율적이었다. 민주노조의 요구와 활동은 당시의 독재정권과 어용노조, 그리고 기업주와 타협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민주노조는 이들의 탄압과 회유에도 노사협조주의를 거부하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다.

그렇다면 민주노조운동의 지도부들이 서 있었던 이념적 위치는 어디였을까? 민주노조운동 지도부들이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지적·이념적 세례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단서는 우선 기독교 지식인들이 가졌던 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기독교 지식인들은 ‘인간화의 신학’과 ‘하나님의 선교’(각주 91 참조)에 입각해서 ‘산업화로 인한 비인간화’, 특히 ‘신식민주의와 독재주의의 비인간화로부터 참자유와 해방’을 찾으려 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을 모두 알았고 자신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알았으며 조합원들은 또한 교섭의 내용과 과정을 모두 알았습니다. 지도부가 회사와 협상할 때 바깥에서 지원투쟁을 하는 등 지도부와 조합원이 하나였습니다.”

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구체적인 사명'이라고 보았다(박세현, 1996: 26). 이처럼 이들의 기본적인 이념적 좌표는 기독교 휴머니즘이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간화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있었다. 예를 들어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추구해 온 이념상 여기서 사회문제의 해결방식이란 급진적 변혁이 아니라 ‘압력’을 통한 점진적 개혁이었으며 각 사회계층간의 화해였다. 실제로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이념의 신봉자인 크리스찬 아카데미 주체들은 한국사회의 지나친 양극화와 경직화가 오히려 급진적 변혁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다. 이들은 독재정권이 지배하는 사회의 경직화나 혁명세력에 의한 급진적 변혁이라는 두 극단을 피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의 양극화에 완충역할’을 할 중간집단을 육성함으로써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였다. 즉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담지한 시민계급의 육성만이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 것이었다”(정연순, 1998: 24~25).⁹⁸⁾

이상에서 보듯이 1970년대 민주노조는 기독교 휴머니즘의 영향을 받았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의미의 인간(또는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했던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정권에 의해 급진적인 노동운동으로 채색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민주노조는 노동자들의 인간(또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상식에 기반하여 자신들의 기본적 권리를 요구했다. 민주노조가 운동의 방식을 취했던 이유는 기존의 어용노조와 차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동정책 및 산업정책과 배치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조는 반자본주의에 입각해 있었거나 심지어 반정부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와 달랐다. 또한 정부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기반한 산업정책과 노동통제에 대해 일련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협조적 노동조합주의와 달랐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도 않았

98)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인명선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며는 노동조합은 단체교섭한다는 기능 자체가 중간집단 기능을 가진 거지. 근데 이게 다 어용조합으로 타락해 있으니 법이 가진 원리를 다 반영하지 못한 상합니다. 그것을 제 기능을 하도록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자고 그 중간집단 교육이 있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고 난 참여한 거지”(인명선·정연순, 1998: 31 재인용).

고 사회적 협의를 통한 노사관계의 개혁을 추구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와도 거리가 멀었다. 이와는 달리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병영적 노동통제에 대한 거부와 동시에 작업장에서 신음받고 있는 인간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이념적 기반이 기독교의 휴머니즘에 있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3. 조직과 실천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두 갈래로 나타났는데, 첫째가 신규노조 건설이다. '1970년 청계피복노조 결성, 1971년 신진자동차(현재의 대우자동차), 삼원섬유(1973), 반도상사(1974), 콘트롤데이타(1974), YH(1975) 등에서 신규노조가 건설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어용노조의 민주화이다. '한국모방(원풍모방)(1972), 동일방직(1972, 1976)'이 대표적인 노조민주화투쟁 사례이다(양승조, 1991: 55).

1970년대 최초의 민주노조인 '청계피복노동조합'의 경우 전태일 분신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1970. 11. 27). 이 사건은 한국사회의 지식인들과 사회운동의 관심을 노동문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태일 분신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지식인들과 기독교 단체의 관심과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다. 동일방직노동조합의 경우 1972년 5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주길자가 '어용' 지부장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길자 노조위원장은 한국 최초로 여성지부장이었고 노조 민주화가 선거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였다. 이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1966년부터 진행한 소그룹 활동의 결실이었다. 한국모방(1974년부터 원풍모방)에서는 기독교 단체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은 노조원들이 1972년 4월에 퇴직금받기 투쟁위원회를 결성했고, 7월에는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에서 한국모방노조정화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청계피복 노동자들의 청계천변 투쟁, 한국화이자 노동자들의 투쟁, 반도상사·한국모방·동일방직 투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YH무역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투쟁은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한 계기가 되었다(홍승태, 1994: 113~118 참조; 전노협백서 1, 1997: 22~44, 96~102 참조). 한편, 언론노동자들도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1971년 동아일보를 시발로 전국 14개 언론기관의 언론자유수호운동과 1979년의 신동아, 조선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등의 언론노동자들은 독재정권에 맞섰다(전노협백서 1, 1997: 12~13).

이상과 같은 1970년대 국가권력에 대항한 민주노조운동은 한국노동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수의 단위노조들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1970년대 대표적인 민주노조였던 청계피복노조가 1981년 1월 서울시의 해산명령으로 강제 해산되었고 반도상사노조 역시 같은 해 3월 해산되었으며, 한국콘트롤데이타노조도 1982년 7월, 6개월 이상 장기분규 끝에 미국계 자본의 철수 결정으로 소멸되었다. 그리고 1982년에는 민주노조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원풍모방노조마저 붕괴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1970년대를 거치면서 성장해 오던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기반은 결국 1983년 무렵 거의 와해되었다.

민주노조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대응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다. 우선 산업선교회와 가톨릭 신자에 대한 박해가 나타났는데, JOC와 산업선교회원들의 경우 회사가 선제해고를 하거나 블랙 리스트에 올려져 고용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1977~78년의 경우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밝혀진 숫자만도 38명에 이르렀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458 참조). 한편, 산업선교회 목회자도 교회로부터 ‘뺄박’을 받기도 했다. 산업선교를 했던 고애심 전도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우리 구미영락교회는 한국기독교 모체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파 교회로서 전국 어느 교회 교파보다 가장 건전하고 정통보수적 신앙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본 교회는 구미지구 산업선교회와 관련이 없으며 산업선교 실무자인 고애심 전도사가 틈틈이 본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것 때문에 오해의 원인이 되었다 하므로 앞으로 고 전도사의 출석을 금지조치했습니다(대한예수교장로회 구미영락교회 목사 오명근, 1978. 5.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459. 재인용).⁹⁹⁾

또한 정부와 회사는 “도산이 개입하면 회사가 도산한다”거나 “산업선교 활동은 공산당 활동과 같으며 그런 활동을 하는 목사들은 빨갱이다”라고 악선전하면서 이들의 민주노조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려 했다. 이로 인해 도시산업선교회는 1970년 의식적인 노동자운동의 대명사가 되었고, 1970년대 말에는 조화순 목사와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 인명진 목사가 구속되는 등의 탄압을 받았다(안승천, 2002: 49).

한편, 노동정책은 국가정치 수준의 공안적·치안적 관점과 노동시장 관리의 관점에서 수립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권위주의적 노동통제를 통해 노동정책을 관철시켰으며, 이는 다양한 방식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안기부와 경찰을 동원하여 치안과 안보의 차원에서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노동대책회의(1981. 2)는 전형적인 노동통제 기구였다. 이 기구는 국가 차원의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중앙 및 각 시도에 설치되었으며,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기구(안전기획부 및 보안사령부)의 요원들이 참여하였다(장홍근, 1999: 44; 전노협백서 1, 1997: 42~43). 다른 한편으로 이 당시에도 정부는 노사정 협의의 장을 통해 노동통제전략을 시도했다. 1974년부터 구체적 형태를 갖춘 노사협의회제와 1975년 제도화된 노사간담회, 그리고 1973년에 발족된 공장 새마을운동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¹⁰⁰⁾ 한편, 정부는 제도적인 통제

99) 고애심 전도사는 이 밖에도 종업원을 가장한 정체불명의 단체로부터 협박편지와 테러의 위협에 시달렸다: 너는 “허울 좋은 간판을 앞세우고 암여우가 교활한 사냥을 하듯 선량한 근로청소녀를 감언이설로 설득 유혹하는 너의 악랄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친우들은 다 같이 분노를 참을 길 없다... 솔한 선량한 사람을 괴롭혀 왔고 현재도 계속 중이며 이제는 최후 발악적인 너희들의 행위도 잘 듣고 있어 너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부화뇌동하여 유신총화단결을 해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어디인가 숨겨져 있을 양심을 되찾아 올바른 이성으로 판단해 보아라”(중화실업 종업원 일동, 1978. 7. 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460 재인용). 이에 대해 고애심 전도사는 “이런 편지들이 근로자들의 이름으로 왔지만 사실은 회사간부들이 근로자에게 편지를 쓰도록 강요하여 썼다는 것이 나중에 확인되었다”(고애심, 1978. 1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465 재인용).

100) 중앙노사간담회는 1975년 9월 경제장관회의에 보고된 후 10월에 공식적으로 발족된 기구이다. 이 간담회는 정부대표로 노동청장, 근로자대표로 한국노총 위원장과 그가 추천하는 5명, 재계 대표로 경총 회장과 그가 추천하는 5명 등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1963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제도 도입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당시에 노사협회가 단체교섭의 사전 단계로 쟁의행위로

외에도 노동법 개악을 통한 법적인 통제¹⁰¹⁾를 행했다.

그리고 작업장 수준에서의 억압정치도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1987년 이전까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정부가 공권력에 의해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기업의 노무관리는 고용관리·임금관리 등 기초적인 노무관리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착취의 고도화를 위한 생산관리의 측면에서만 노무관리를 수립했다. 이 시기의 대부분의 독점자본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노조결성 시도에 대해 가혹한 탄압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대부분의 기업내 노무관리는 전적으로 기업주의 전일적인 지배에 기초한 가부장적이고 단순한 노동통제의 양상을 띠었으며, 심지어는 병영적인 군대식 규율에 기초하여 노무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한국사회연구소, 1989: 157~159 참조). 한편, 재벌의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무관리는 1960년대 말부터 노동쟁의의 대형화 및 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재계는 1970년 노무관리·노사관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나갈 경영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창설했다(경총, 1990: 104).¹⁰²⁾ 그 결과 점차 정부로부

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아 기업에서는 이것의 설치를 꺼렸다. 이러한 이유로 유명무실화되었던 노사협의회는 1971년 노사간의 대화기구 마련이 필요해져서 1973년 노동조합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다시 논의되었다. 공장 새마을운동은 1973년 상공부의 주관하에 시작되었다. 상공부가 1974년 중앙추진회를 구성하여 500개 공장을 시범업체로 지정함으로써 공장 새마을운동은 본격적인 확산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 운동은 당초에는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운동의 구호 아래 추진되었으나 1977년부터는 ‘공장을 가정처럼, 종업원을 가족처럼’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였다(경총, 1990: 117~118).

101) 법적인 통제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노동악법과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외국인 투자업체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1970. 1. 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 12. 27), ‘국가비상사태하의 단체교섭권 등 조정업무 처리요령’(1972. 3. 3), 유신헌법(1972. 12. 27)에서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제한(제29조1),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개정(1973. 3. 13)에서 ‘노동조합의 산업별 조직체계 지양, 노사협의제의 구체화, 노동쟁의조정법상 공익사업의 규정범위 확대, 노동쟁의에 대한 규제 강화, 국가에 의한 노동행정의 강화’, 노사관계법 개정(1974. 12. 24)(전노협백서 1, 1997: 3~4; 양승조, 1991, 50~51).

102) 1970년 창립 당시 한국경영자총협의회에서 1974년 한국경영자협회로 개칭되었고 1981년 한국경영자총협회로 명칭이 바뀌었다(경총, 1990: 100). 경총의 설립 동기는 다음과 같다. 그 당시 임금인상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격화되고 있

터 자율적인 노동정치的主체가 되어 갔다(유범상, 2001: 59~67 참조).

제3절 협조적 노동조합주의

1. 근대화 담론과 한국노총의 만남

한국노총은 정부의 정치적 담론을 완전히 체화하고 이를 실천한 대표적인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노총은 정부의 정치적 담론을 수용했을까? 그것은 조직의 기원에 그 해답이 있다.

한국노총은 국가와 자본의 대항자였다기보다는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의 협조자 또는 전형적인 도구였다. 한국노총은 태생부터 권위주의적 정권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그 성장 또한 정부의 후원하에서 가능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모든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고 ‘국가재건최고위원회 포고령 제6호’를 발령하여 ‘한국노동단체재건위원회’를 조직하였다(전노협백서 1, 1997: 7~8). 한국노총의 운영은 “중앙정보부가 손수 뽑은, 9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집행부가 맡았다. 그 9명은 중앙정보부가 마련한 2주간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했다”(전순옥, 2003: 220). 이러한 기조는 1987년 민주화 대투쟁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1970년대 말(유신 말기) 그 당시 상당히 어려웠다. 안기부에 이력서와 관련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노총에 책상을 갖다놓고 앉아 있을 정도였다. 일상적으로 통제를 받던 시절이었다... 신규조직 대상에 개입한 경우가 많았고, 분규는 참 어려웠다. 분규는 상당히 힘들었다. 1970년대

는 반면, 기업인은 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비태세가 미흡하였으며, 특히 1969년도 섬유업계의 파업으로 노사협조기구의 창립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구가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구성·설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당국으로부터도 설립을 요청받아 왔고 한국노총에서도 상대역이 될 사용자단체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경영자기구 창립의 필요성과 동기가 강조되었다(경총, 1990: 104~105).

는 긴급조치시대였다. 정부에서는 교섭을 조정하고, 그 조정을 합의를 해서 넘겼다. 당시 다 강제조정을 했다. 정부가 후견인이 되었고, 노동자를 봐준 것도 있었다. 정부가 조정을 해줘 좋았다고 한다. 1980년대 간부들이 그때가 좋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분규는 통계건수로 나올 수 없었고, 긴급조치로 조정을 했다(인터뷰 J, 2003. 7. 23).

이처럼 한국노총 지도부는 정부기관의 검열에 의해 친정부적인 인사들로 선출되었고, 더 나아가 산별위원장 이하 지도부들 또한 정부와 친정부적 지도부에 의해 '지명'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의 영향력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점도 정부의 정치적 담론을 수용하는 원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선거에 상층지도부가 개입하거나 정부가 개입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위원장 또는 산별위원장¹⁰³을 선출하는 데 간여했다. 다음의 몇 가지 사례는 이것을 잘 보여준다.

1973년 10월의 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노조의 단합된 힘을 과시한다는 명분으로 17개 산별노조위원장이 단일후보 추대를 위한 전형위원회를 구성, 배상호를 단일후보로 뽑아 가부인준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이미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던 김말룡과 당시 광산노조위원장 한기수 두 후보가 입후보할 길이 막혔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236).

1973년 12월 22일의 관광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열세인 강제철을 재선시킬 목적으로 대회 수일 전부터 노총위원장 배상호와 상임부위원장 윤영제가 합세하여 관광노조의 유력한 각급 지부장을 노총으로 호출하여 강제철의 지지를 강요하였으며, 또한 낙선된 강제철측의 대회무효 이의신청을 적극 지원하여 대회를 두 번 개최하는 조직적인 혼란을 조장하였다. ... 1974년 외기노조 서울지부대회에서 지부장 이호승이 낙선되고

103) 중앙정보부가 17개 전국 규모 노조의 지도부를 구성할 30명의 남자를 추천하면, 이들은 한국노총 집행부 9명과 함께 중앙정보부 본부에서 1주일 동안 사상심화 교육을 받았다. 박 정권은 노동자들의 대표를 선택하고 교육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매달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었다(전순욱, 2003: 221). 한편, 한국노총은 현장에 따라 17개 전국규모 노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국규모 노조가 다시 지역지부나 기업별 지부를 통제하는 것도 합법적이었다. 엄청난 숫자와 상이한 조직들로 구성된 전국의 노동력은 체계적인 법적 합리화를 통해 하나로 통합되어 준정부기구처럼 변모했다(전순욱, 2003: 223).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임원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지부로 처리하도록 하여 외기노조 전체의 조직분열을 초래하였으며 이 같은 조처가 대내외적으로 큰 물의를 빚게 되자 개편된 서울지부를 정상화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외기노조대회에 불참하도록 강압하여 전체조직 의사에 배반되는 대회 결과를 조작하였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237).

이러한 조직 과정과 인적 구성 때문에 한국노총의 상층부는 체제와 정권의 이념을 수용하고 이를 조직내화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노총 간부의 국가이념 조직내화의 사례는 대한방직기지부장 정중협이 해고근로자 안양진의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발신: 수원시 세류동 236 정중협

수신: 충북 영동군 매곡면 옥천리 794 안치복

무오년을 맞이하여 댁내 존체 금안하심을 양축하나이다. ... 온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100억 불 수출은 무난히 달성되었으며 이제 우리들도 선진국 대열에서 강국과 더불어 국력을 과시할 그 날도 머지않았음을 확신하면서 온 국민과 더불어 기뻐마지않는 바입니다. 이것은 오직 온 국민 전체가 총화단결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의 초석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시라도 방심할 수 없는 자세임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휴전선 북방에는 김일성 도당들이 남침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간접침략을 무수히 꾀하고 있음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더욱이 우리 국민들의 작은 허점이나마 그것을 이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침략을 일삼는 그들의 목전에서 행여 우리 국민들은 정신적이나마 해이해진 일면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1978.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449 재인용).

이상에서 보듯이 조합원의 해고통지와 자식을 관리해 줄 것을 그 부모에게 알리는 통지문임에도 불구하고 본론에 앞서 장황하게 반공주의와 근대화를 찬양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유신 후기로 갈수록 이러한 모습도 더욱 강화되었는데, 즉 “더욱 무기력해진 가운데 일부 조직은 그 조직 자

체가 유신화되면서 반노동운동적 기구로 전략”해 버렸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451).

한편, 정부는 한국노총 간부들에게 정당과 정부의 고위직, 예를 들면 국회의원, 기관장 등의 자리를 직접적 또는 암묵적으로 보장하면서 한국노총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 한국노총의 자료들은 정부의 정치담론이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우선 한국노총은 결성 초기부터 경제성장 제일주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백척간두에 놓인 국가의 운명을 바로잡고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족 대약진의 여명은 밝았다. 군사혁명의 성스러운 봉화를 선두로 우리들 노동자는 민주주의의 원칙하에 산업부흥의 주도성을 확보하고 국가재건에 전력을 다하여 복지사회 건설을 이룩하고자 한다(『한국노총 결성 강령』, 한국노총, 『사업보고』, 1979: 573 재인용).

또한 한국노총은 ‘반공주의적 노동운동’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정부의 공안적 관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한국노총 위원장 배상호는 1974년 1월 19일 노총 산별위원장 및 시도협의회 연석회의 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회사를 했다.

도시산업선교회를 비롯한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조직에 침투하여 극렬한 책동을 계속함으로써 노사분규와 조직의 분열 등 여러 가지 혼선과 부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심상치 않은 사태를 빚어내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불순분자의 조직침투 행위에 대해서 전체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지난날 전평을 타도한 그 기개로써 단호히 분쇄할 것을 이 자리에 모인 동지들은 물론 60만 조직노동자와 함께 굳건히 다짐한다(민중석, 1989: 46 재인용).¹⁰⁴⁾

104) 이러한 입장은 현재까지도 한국노총 일각에서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것은 1999년판 한국노총 서울시 지역본부 백서의 1970년대 국내 정치정세 서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격변하는 아시아 정세하에서 북한은 전례없는 활발한 외교 전략을 펴고 있는 등 외면에서 급전환을 보이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땅굴작전을 비롯 무력통일을 위한 남침 준비를 강화하고 있었다. 남북회담이 거부되고 UN 동시가입에 대한 우리측의 제의를 묵살하는 등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었다. 이

이처럼 한국노총은 정부의 정치담론에 종속되었고 이후 정부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냈다. 한국노총은 1960~70년대 정부의 절대적인 지지자 중의 하나였다. 즉 5·16 쿠데타는 물론이고 “1971년 말의 국가비상사태선언 및 국가보위법 발동, 1972년의 10월 유신 이후 가해진 노동관계법 개정 등에 대해 순응하고 지지했고 유신체제가 표방한 노사협조주의를 그대로 수행하여 경제투쟁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되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233). 한국노총은 국가비상사태선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비상사태하의 우리 노동자의 자세를 밝힌다”)를 발표하여 중요한 고비 때마다 정권의 충실한 지지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반공에 빛나는 전통을 지녀온 우리 노총은 날로 긴장의 도를 더해 가는 최근의 국제정세와 무력통일을 공언하면서 전쟁준비에 더욱 광분하고 있는 북괴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중시하고 벌써부터 자유국가군의 집단안전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범국민적 안보태세의 강화를 줄기차게 호소해 왔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이와 같은 사태를 외면한 채 태평무드에 젖어 있어 국민의 일대 각성이 요청되고 있는 차제에 12월 6일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대하여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하며 우선 국가가 있고서야 노동운동도 발전할 수 있다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안으로는 ‘일면건설, 일면방위’의 확고한 태세를 더욱 알차게 갖추는 동시에 밖으로는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숙과 방위태세 확립에 협동할 것을 호소하면서….

더 나아가 한국노총 산별노조는 유신을 적극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¹⁰⁵⁾

렇게 긴박한 정세를 보고 정계와 언론계, 종교계 및 학계에서는 총화단결로써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결속하게 되었다. 국력배양을 가속화하여 자주방위력을 확보함으로써 평화정착과 번영된 민족사회의 건설을 추진하려는 박 대통령의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 선행론에 국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한편, 민방위법, 교육법, 사회안전법, 방위세법 등 국가안정에 관한 4대 기본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국민의 총력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 때 “우리의 우호국인 미국에 카터 신정부가 들어섰고…”(한국노총 서울특별시 지역본부, 1998: 51~52).

105) 한국노총은 ‘10월유신’(1972)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 성명서(“구국통일을 위한 영단을 적극 지지한다”)를 발표했다: “우리는 긴박한 국내외 정세와 남북대화를 둘러싼 초긴장 상태에서 국민총화와 총력안보로써 국권을 수호하고 경제

이를 홍보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했다. “금속노조의 경우 홍보활동반을 편성하여 11월 3일~11월 20일까지 전국 33개지부 및 분회의 조합원 및 간부 4,980명을 대상으로 순회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화학노조의 경우 “10월 25일 10월유신 중앙계몽유세반을 구성하고 전국의 지부, 분회를 순방하면서 유신체제의 지지와 유신헌법제정투표에 적극 참여하자는 계몽과 유세활동을 전개하였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235).

조국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유신과업의 성취를 위해 전국의 화학산업분야 전체근로자들의 집결체인 전국화학노동조합은 유신체제 확립을 위한 방침을 세우고 비능률과 부조리, 병폐와 낭비를 불식하고 합리화와 능률, 성심과 근면의 조직 기강을 확립하여 일치 단결로 총화된 조직력을 발휘하여 유신과업 완수에 앞장서서 행동화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화학노조 10차 중앙위원회』, 1973. 1. 1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235~236 재인용).

이런 맥락에서 한국노총은 1973년 “국가이익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계급투쟁적인 극렬한 운동방향을 배제하고 임금인상 일변도의 활동노선을 지양하고 생산성 향상운동을 통한 분배 원천의 증대라는 노사공동이익의 영역을 찾아 서로 협력”하기로 운동방침을 정했다(안승천, 2002: 32).

한편, 권위주의 정권이 일체의 노동자들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노총 상층부는 또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냉담했다. 따라서 한국노총 상층부는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오히려 억압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다.¹⁰⁶⁾ 다음의 해고

발진을 촉진하여 평화적인 민주통일을 이룩해야만 할 현 시점에서 일체의 혼란과 무질서를 과감히 제거하고 민족사의 새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능동적인 새 체제를 지향하여 유신적인 비상개혁의 영단을 내린 박 대통령 각하의 10월유신을 지지하면서 50만 조직노동자의 굳은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1972. 10).

106) 1987년 이전에 한국노총이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움직임에 억압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민주노조의 탄생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왜냐하면 한국노총 간부들은 자기 조직기반 확대와 재원 확보를 위해 일정정도 신규노조 결성에 성의를 가지고 있었고, 신규노조는 ‘자기의’ 노조로 생각하였으며 한국노총 내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한편, 한국노총 내부에 조직적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개혁적 간부들이 존재했었다. 이들은 민주노조 건설에 일정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의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것을 잘 보여준다.

금번 귀택의 사랑스런 자녀 안남진 양이 본의 아니게 저희 노동조합을 쟁취하려는 그들의 선동에 현혹되어 동조하였음은 물론이고 그들을 지지 찬동하며 옥내에서 불순한 유인물을 살포하여 크게 물의를 조성하였으나 노동조합 간부들은 그들의 일시적인 망각에서 온 행동이라 간주하고 저희 노동조합 기본방침을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며 순화하여 전과 다름없이 손잡고 웃으며 생활하기를 수차례 걸쳐 종용하였으나 끝내는 이를 거절하고 본인들의 뜻이 옳음을 주장하며 개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더욱이 600여 명의 조합원들은 그들과 같이 직장인으로서의 행동일체를 할 수 없다는 서명날인 및 결의서가 속속 노동조합에 접수되었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본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제명처분되었으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자동적으로 직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택의 귀중한 자녀 안남진 양이 이웃으로 전전하면서 방황하고 있사오니 위와 같은 사실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귀향조처하시어... (『대한방직지부장 정중협이 해고근로자 안양진의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 1978.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450 재인용).

이러한 태도는 동일방직에 대한 한국노총 산하 전국섬유노조 행태에서도 나타났다. 1976년 11월 5일 동일방직 문제해결을 내세운 김영태가 전국섬유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그는 동일방직을 사고 지부로 처리하고 전국섬유노조 이풍우 기획실장을 수습대책위원장으로 삼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풍우는 조합원 몰래 노조에 불리한 단체협약을 회사측과 체결했다. 또한 1977년에는 동일방직의 대의원선거에서 전국섬유노조 우종환 조직국장 등은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인분을 뿌리고

이런 이유들에서 “한국노총 간부들은 노조결성을 도와주었고 회사의 노조 파괴 책동에 함께 싸워 주기도 했으며, 노조활동을 지도해 주었다. 노조의 필요성만 인식하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한국노총 간부의 지도는 백만대군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민중석, 1989: 52). 예를 들면 “한국노총 서울시 지역본부의 조직 임원의 노력에 힘입어 노조가 결성된 대표적인 사례도 있었다. 그것은 대표적인 외국인 업체인 시그네틱스노조와 콘트롤데이터노조였다”(한국노총 서울특별시 지역본부, 1998: 59 참조).

먹었다. 더 나아가 전국섬유노조는 1977년 3월 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총각 지부장 등을 반조직 행위자로 제명하였고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124명에 대해 ‘업무집행에 관한 참조사항’(1979. 4. 10)이라는 김영태 전국섬유노조 위원장 명의의 블랙리스트를 산하 각 분회에 발송했다(전노협 백서 1, 1997: 31~33 참조).

이처럼 한국노총은 정부의 충실한 동반자였으며 개별 기업은 노동자들의 상태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계피복노조 출신의 정인숙 씨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당시 민주노조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 어용노조, 기업이 그것입니다. 특히 어용적인 상급단체 노조는 민주노조를 만들면 와서 다시 이것을 어용노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노총은 자본가들과도 노사협조라는 명목하에 한패가 되어 움직였다. 단위사업장에 분규가 일어나면 지부장에게 자제, 타협해 줄 것을 촉구하는가 하면, 조합원들의 투쟁이 거세지면 ‘불순분자 난동’ 운운하면서 투쟁을 깨뜨리는 일도 있었다(양승조, 1991: 52~53). 한편 한국노총은 종교계가 점차 노동자들의 요구에 민감해지자 이들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양자가 대립각을 세운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까지는 한국노총과 종교계(기독교) 간은 상호 우호적이었다. 종교계는 전도 대상인 노동자들의 조직인 한국노총과의 협조가 긴요했고, 반면 노총도 노동자 복지를 위해 애쓰는 종교계와 대립할 이유가 없었다. 이 당시 종교계는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동자 교육과 노동조합 조직화를 지원했다. 이를테면 산업선교회측에서는 1970~74년 말까지 5년간 4만여 명을 노동조합에 가입시켰으며, 1974년도에 한국노총 산하에 새로 조직된 노동자 2만 명 가운데 산업선교회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 조직한 노동자가 1만 6천 명이나 되었다고 주장했다. 교육에 있어서도 1963~72년까지는 한국노총 교육에 산업선교회 실무자와 JOC 회원이 참석했다”(한국노총, 2002: 519).

하지만, 유신에 대한 한국노총의 지지와 종교계의 민주노조 지원으로 인해 점차 둘 사이엔 골이 깊어졌다. 특히 “산업선교회와 JOC와 연계된 노동조합들이 한국노총과 산별노조의 무기력을 비판하고 나섰으며, 종교

계는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연합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한국노총을 비판하였다. 종교계는 1974년 한국모방지부장 구타 사건¹⁰⁷⁾을 계기로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격렬히 비난하였고 계속해서 노동기본권의 회복과 노동탄압의 중단을 정권에 요구했으며 1975년에는 ‘한국노동운동자율화추진위원회’를 조직했다”(한국노총, 2002: 519).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1, 2호를 통해 산업선교 활동에 대해 경고하고 관련자들을 구속하는 상황에서 기독교 노동단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는 우리 노동단체에 침투하여 선량한 노동자들을 선동함으로써 건전한 노동운동의 방향을 흐리게 하고 조직의 분열과 노사간의 분규를 야기시키고 있는 지각없는 일부 종교인들의 맹성을 촉구하면서 만일 그들이 끝까지 그와 같은 행동을 계속할 때에는 우리의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단호히 응징할 것을 전국의 60만 조직노동자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한국노총 성명서』, 1974. 1. 1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272 재인용).

이 밖에도 한국노총의 과도한 노사협조주의는 통계의 왜곡 또는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이 연례로 발행하는 『사업보고』에서 각종 통계 내용이 변화했다. 즉 “연대별 쟁의현황과 연도별 쟁의행위 현황의 연도별 통계는 1973년부터 집계가 중단되고 있는데 이것은 1973년부터 발효된 국가보위법이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240). 그리고 한국노총은 자발적으로 “1974년부터는 체불임금 통계의 집계를 중단했고, 1975년부터는 단체협약 체결상황과 노사분규 발생상황의 집계를 중단했다.” 한국노총이 이러한 집계를 강압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은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노사협조주의에 배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구체적 사건마다 될

107) 이 사건은 한국모방 백승빈 사장이 지동진 지부장을 구타한 사건(1973. 12. 31)으로서, 이 사건 직후 개신교와 가톨릭 19개 단체는 신구교 노동문제공동협의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동안의 광범위한 인권탄압에 대한 조사 및 인권탄압의 금지와 백승빈 사장의 구속을 요구했다. 결국 백승빈 사장은 구속되었다가 한국모방에서 풀려났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403~408 참조).

수록 대화를 통해 은밀히 해결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1984: 240, 241).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노총은 1970년대 정부의 근대화와 반공이라는 정치적 담론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 결과 1970년대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으로서 정부와 자본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적 태도는 고사하고 정부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 즉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억압자가 되었으며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기본 입장조차 견지하지 못했다. 특히 이 시기에도 한국노총은 여전히 반공주의의 기반 위에 있었으며 따라서 근대화에 대항하는 일체의 행위를 반공주의에 입각해서 다스렸다.

2. 내용과 정의

한국노총은 1960년대 초 군사정부에 의해 재정립된 이후 1968년에 운동기조와 방침이 비로소 체계화되고 1970년대에 부분적으로 수정된다. 여기서는 1961년 기본강령, 1968년 운동방침과 기조, 그리고 1970년대의 운동기조와 방침을 중심으로 한국노총의 협조주의적 노동조합주의, 반공주의, 경제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노총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인정과 계급투쟁에 대한 부정을 내용으로 하는 자신의 노동조합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주식의 고도한 분산을 통하여 사회화되고 있기 때문에 독점자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본화되어 가고 있다는 숙명적인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과 경영은 분리되어 가고 있고 노동조합은 주식을 소유하는 국민대중이나 그 대중의 대행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자의 타도를 위하여 투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변모는 투쟁 대상을 독점자본가로부터 국민대중에게 옮겨 놓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인 국민대중을 투쟁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투쟁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같은 모순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한국노총, 『사업

보고』, 1968: 184).

이러한 자본주의관은 한국노총이 계급투쟁을 거부하고 노사협조를 강조하는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를 해야 할 정당성의 토대를 만들고 있다.

현대의 사회계급의 추세는 자본의 고도한 축적에 의해 독점자본가들은 스스로 정비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는 오직 사용자 또는 경영자가 있을 따름이며 이들의 사명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는 것으로서 자본가의 수익성 추구와는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노사협조의 근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대상이 없는 계급투쟁주의가 포기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거나 현실에 부응하는 노동조합주의로서 노동조건 개선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므로 계급투쟁주의에 가까운 2단계투쟁(단체교섭 → 파업투쟁)으로부터 보다 신중한 3단계투쟁(사전협의를 → 단체교섭 → 파업투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것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는 것이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67: 193~194).

이런 맥락에서 한국노총은 공상적인 “공산주의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보다 노동자 자신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임금인상 투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이 보다 한층 더 현실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68: 184). 이처럼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주의를 “반공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인정한 토대 위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어 가고 독점자본이 사회자본으로 전화하고 있다는 점을 노사협조 근거로” 노사협조주의, 즉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를 제창한다(한국노총, 2002: 419). 결론적으로 이 시기의 한국노총의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는 “대한노총 출범 이후 표방되어 온 반공이데올로기와 노사협조주의, 그리고 경제주의를 견지하는 것”이었다(한국노총, 2002: 420).

한국노총의 협조적 노동조합주의의 기본 기조는 앞에서 보았듯이 박정희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즉 1960년대 운동기조는 박정희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한국노총의 결성대회 선언과 강령(1961. 8. 30)에 따르고 있다.

결성대회 선언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국가 민족의 번영을 기약하는 성스러운 혁명으로 규정하고 국가재건의 선두에서 사회정의 구현의 역사적 제일보를 내디디며 정치적·경제적 민주화 실천을 기하고 영원한 국가번영과 노동조합 발전에 매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강령에서는 첫째 반공체제 강화와 자주경제 확립을 통한 민주적 국토 통일, 둘째 노동자의 기본권 수호와 생활수준 향상, 셋째 정치적 중립과 조합재정의 확립, 넷째 노동자의 교육과 문화향상, 다섯째 건전한 근로정신으로 국가산업의 발전 등이다(한국노총, 2002: 414~415).

이것은 한국노총도 인정하고 있듯이 “당시 군사정권의 지배하에서 군사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한국노총, 2002: 415).

이상의 1960년대 운동관은 1968년에 들어서 재정비되면서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1970년대도 그대로 이어졌다. 1976년 10월 한국노총 전국대의원대회는 임기 만료된 배상호 위원장 후임에 정동호 화학노조 위원장을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한국노총의 기본운동방향을 밝혔다:

우리는 백만 조직화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총화와 복지사회 건설을 주도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간부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시키며 우리의 의식수준과 지도력을 함양, 평준화하기 위하여 새마을교육을 비롯한 노동교육을 강화한다.

이러한 한국노총의 ‘결의문’은 정부의 ‘국민총화론’과 근대화론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격동하는 1970년대를 맞이하여 조국의 안정, 번영, 통일을 위한 유신과업 수행에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을 다짐한 우리 노총은 먼저 우리 스스로의 체질을 개선하고 내실을 기함으로써 국력조직화의 일익을 담당하여 국가시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남북대화와 평화통일에 있어 북한의 직업동맹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조직력과 대응태세를 시급히 갖출 필요가 있음을 통감한다”(‘1973년 운동방침’, 한국노총, 『사업보고』, 1973: 11~19). 한국노총은 “비상시국하의 우리 노동자의 자세를 밝힌다”라는 성명서에서 “우선 국가가 있고야 노동조합도 있다”(양승조, 1991: 52)는 언급을 통해 유기체적 국가론을 수용한다. 이러

한 국가관은 국가에 저항하는 일체의 세력에 대한 거부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국노총의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한국노총은 정부의 안보주의와 경제성장의 기본 입장 위에서 노동조합주의에 입각한 노동자들의 경제적 조건의 개선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협조주의적 노사관계를 표방하였다. 한국노총의 기본 인식은 영미식의 ‘노사관계론’의 입장에서 노사관계를 기능상의 차이와 역할 분담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친화와 협력관계로서 부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 관계라고 파악하고 있었다(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1990: 17).

우리는 국가이익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계급투쟁적인 극렬한 운동방향을 배제하고 건전한 노동조합주의를 지향하면서 국민경제 발전의 기반 위에서 노동자의 복지생활을 증진시켜 나가려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임금인상 일변도의 활동노선을 지양하고 생산성향상운동을 통한 분배원천의 증대라는 노사 공동이익의 영역을 찾아 서로 협력하는, 보다 건전한 기업풍토를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우리는 복지균점정책에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더욱 왕성한 유신정신과 새마을운동으로 개인소득의 증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는 한편 각종 공적부조 내지 사회보험제도를 신설 또는 확충시키는 동시에 임금, 노동조건의 개선 이외에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정부나 사용자의 책임하에 확충하도록 작용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자체 복지후생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보다 폭넓고 다원적인 권익향상운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조용한 가운데 빈곤 없고 비리 없는 정의의 사회, 복된 나라로 건설해 나가는 유신적 개혁의 기수가 되려는 것이다(1973년 운동방침, 한국노총, 『사업보고』, 1973: 11~19).

이 시기의 한국노총의 노동조합주의에 대해 이중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우선 한국노총의 ‘운동기조는 크게 노동조합주의, 국가안보 및 반공주의적 운동노선, 노사협조주의, 경제주의, 합법주의로 규정’지을 수 있다(한국사회연구소, 1989: 314~316 참조).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한국노총은 해방 직후의 반공적 노동조합주의에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민주노조진영은 한국노총의 운동노선을 서구의 노동조합주의와 비교해 볼 때 ‘노동조합주의’라고 할 수 없

으며 ‘투항주의’, ‘방관주의’로 보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한국 노총의 “자주성의 상실은 단순히 노동조합 활동의 부실, 비적극성에 머무르지 않고 반노동자적 역기능을 수행하는 데까지 왜곡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없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혹평한다(임삼진, 1988: 671). 이 평가는 한국노총이 정권의 시녀로서 어용노조로 기능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노총의 어용성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독재정권에 대한 대외적 지지성명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경제적 노동조합주의로 규정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한국노총은 해방 직후의 반공적 노동조합주의를 넘어서서 근대화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과 정책참여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의지와 천명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노총은 상충지도부에 의해 그 방침이 좌지우지되었고 상충지도부는 정부로부터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이 시기의 한국노총을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라고 규정한다.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으로 흔히 ‘어용노조’으로 표현되는 정부 종속적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국노총의 태생에서부터 규정지어진 것이다. 한국노총은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기존의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새롭게 구성된 조직이었다. 따라서 박정희가 한국노총에 기대한 것은 ‘박정권의 산업, 노동정책을 무조건 지지하는 포괄적인 조직’이며 ‘낮은 비용으로 높은 생산성을 내는, 수동적인 노동력 유지’의 기구였다(진순옥, 2003: 219). 한국노총은 정부의 의도대로 어용노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시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지점, 즉 국가의 전면적 통제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으려 했다는 점에서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는 경제적 노동조합주의와 비견된다.

다른 한편으로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는 자신들이 스스로 규정한 내용성

에서 그 성격을 알 수 있다. 한국노총은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고 독점자본이 사회자본화되었다는 인식에 따라 동 시대의 새로운 이념을 노사협조주의라고 주창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는 친정부뿐만 아니라 노사협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의 개발은 분명 한국노총이 이념적으로 진전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군부독재이고 대표적인 기업이 재벌이었다는 점에서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는 여전히 자본주의에 대한 합리적 비판에 근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협조의 대가로 이익을 보장받으려는 어용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3. 조직과 실천

한국노총은 1970년 49만 명, 1975년 71만 명에서 1979년에는 100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처럼 1970년대의 유일한 노동자 전국조직이었던 한국노총은 사회단체로는 가장 규모가 큰 조직으로 성장했다(양승조, 1991: 52). 이처럼 한국노총은 1980년에 이르기까지 16개 산별노조의 연합체로서 전국 노동조합의 유일한 대표체로 자리잡아 왔다.¹⁰⁸⁾ 하지만, 한국노총은 1961년 8월 16일에서 25일 사이의 불과 9일 동안에 중앙정보부의 지휘하에 12개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됨과 함께 급조된 노동조합 정상 조직(peak organization)으로서 정통성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상 통일된 조직체계와 동원능력 그리고 대자

108) 한국노총의 조직은 우선, 그 결성 목적과 규약에 찬동하는 산업별 및 연합노동조합연맹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조합으로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규약 제5조). 여기에서 산업별 노련으로는 섬유, 광산, 외국기관, 통신, 항운, 해운, 금융, 화학, 금속, 출판, 자동차, 관광, 보험, 택시, 고무산업 등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직 관할로 하는 전국적 연합단체가 있다.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조합은 전력, 전매, 체신, 철도 노동조합이 있다. 연합노동조합연맹은 이러한 산업별 조직 관할에 속하지 않는 노동자로서 조직된다. 한편, 한국노총은 각 지역에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위노조로 구성되는 시도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과 시도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특정지역에 지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규약상의 규정 11조). 이러한 시도 지역협의회는 6개시 9개도의 15개를 두고 있으며 25개의 지구협의회를 두고 있다(한국사회연구소, 1989: 309).

본 협상능력을 갖춘 산별조직으로의 자기 위상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아 왔다(임영일, 1998: 76~80 참조).

노정협조 또는 노사협조를 선언한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을 포기하고 정부와 기업에 건의하거나 진정하는 방식으로 1970년대를 일관한다. 뿐만 아니라 유령노조 설립, 민주노조에 대한 사고지부 처리, 노조 파괴 등으로 자본가에게 적극 협력했다(안승천, 2002: 33).¹⁰⁹⁾

한국노총의 활동은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입법 및 정책건의 활동이다. 한국노총의 입법 활동은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 개정 요구와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그간 진폐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소득세법 개정,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청원하고 노동법원, 노동금고법 제정 등에 관한 청원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관계법 개정 활동은 개정시안에 대한 내부 토론과 정당 관계자와의 간담회, 서명운동, 또는 시내 집회 등에 한정했다. 정책건의 활동은 관계장관 등에게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거나 1980년도에 구속·정화된 노동자의 사면, 복권, 복직, 명예회복과 삭감된 퇴직금누진제 환원에 관해 건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목적의식적 노력을 통해 동원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활동이다. 한국노총은 임금인상 활동의 주요 목표로 1일 8시간 노동으로 최저생계비 확보, 임금구조 개선, 최저임금인상 활동, 노동시간 단축 활동 추진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인상 활동은 1980년대 초반까지 정부의 임금인상 동결정책에 묶여 그 추진을 자제해 왔다(한국사회연구소, 1989: 317~318).

109) 하지만, 한국노총이 전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기한 것만은 아니었다. 다음의 언급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을 이루기도 했었다. 산별노조 중 화학노조가 활발했는데, 미조직 사업장 앞에서 직접 조직사업을 했고, 미풍사건은 당시 화학노조 여직원이 들어가서 조직했던 것이었다. 아무리 어용이라도 노조간판을 일단 내걸면 조합원들의 요구를 대변하려고 하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거보다는 낫다... 1987년 이전까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제대로 역할은 못했지만 그나마 노조를 유지해 온 측면에서는 한국노총이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인터뷰 D, 2004. 2. 25).

노동자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낮았다. 노동조합을 하긴 하지만 지금 정도의 의식이 없었다. 월급 잘 받고 임금인상하면 되었지... 박정희 죽을 때까지 있었다. 예를 들어 노총 차원에서 대처한다고 했지만 결국 단일 노조에서는 조정이라는 것이 있었다. 우리가 지방사무소에 조정신청을 내면 임금인상 몇 %로 국가비상상태하에 딱 떨어졌다. 투쟁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였다. 그 당시에 쟁의조정법이 쟁의금지법이였다. 쟁의조정법으로 파업을 할 수가 없었다. 물론 그 속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과인이 아니었다. 임금인상 요구하면 노동부 지방서에 조정이 떨어졌다. 조합원들에게 할 일이 다 했다고 생각했다(인터뷰 K, 2003. 8. 14).

정부는 정치적 변화의 시기마다 법적 조치, 혹은 그보다 더욱 빈번하게는 행정적 조치들을 통해 한국노총의 활동과 조직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그리고 1980년 국가보위 입법회의는 형해화되어 있던 산별 조직체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법개정을 단행했다(임영일, 1998: 80). 즉 신군부 세력은 노동운동 정화조치의 명목으로 탄압을 강행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체계를 기업별 노동조합 조직체계로 변화시키는 노동조합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산하 106개 노동조합 지역지부는 해산되었고 노조 상급단체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전노협, 1997: 53).

이상에서 볼 때 1987년 이전 한국노총 주도의 노동운동은 '주어진 법적 인 틀' 속에서,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국가 정보기관의 직접적인 개입과 중재를 통해서 임금과 같은 대단히 초보적인 경제적 요구의 관철에 신경을 쓰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제도 혹은 조직적 차원에서 볼 때 한국노총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는 한국노총 내부의(그리고 각 단위 조합 내부의) 노동귀족적인 보수적 상층지도부의 폐쇄적 지배블럭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즉 국가의 통제가 강화될수록 한국노총 지도부들은 점점 더 조합원들로부터 '자립화'되어 갔다(임영일, 1998: 76~80).

제4절 독주와 저항

1970년대의 노동운동이념은 협조적 노동조합주의와 인간적 노동조합주의의 공존 시기였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1970년대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강력한 물리력과 이데올로기의 지원을 받는 협조적 노동조합주의의 ‘독주’에 대한 인간적 노동조합주의의 미약하지만 처절한 ‘저항’의 시기였다. 인간적 노동조합주의가 ‘미약’했던 것은 종교적 사랑과 헌신으로 무장한 소수의 성직자들을 외곽 단체로 하고, ‘공순이’로 천대받던 여성노동자들을 추축으로 삼은 소수의 민주노조를 자신의 권력 자원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는 국가 이익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즉 ‘이익’이라는 담론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보장받고자 했다. 여기에서 국가 이익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수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자본주의를 방어해 내야 한다는 반공주의와,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을 통해 체제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근대화 담론에 기반하고 있었다. 조합원의 이익이란 주로 임금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서 임단협과 사회정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의 확보를 의미했다. 그런데 조합원의 이익을 국가 이익에 우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국가 이익의 한정된 틀 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한국노총의 노동조합주의는 ‘협조적’ 노동조합주의가 되었다. 즉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는 정권의 담론인 반공주의와 근대화에 압도되어 국가 이익을 위해 조합원의 이익을 희생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노총은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 정치투쟁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경제투쟁마저도 방기했다. 또한 노동기본권이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사협조주의에 매달린 채 국가 권력과 자본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노동자들로부터 외면당해 왔다”(장홍근, 1999: 60). 결국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 담론으로 인식되면서 노동자들

내부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했다.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협조적 노동조합주의의 한계, 즉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치할 수밖에 없는 본성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서 시작되었다.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자신의 기본 담론인 ‘인간’과 ‘인권’을 내세워 저항의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했다.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는 종교단체들의 외부로부터의 문제제기와 여성노동자들의 내부로부터의 문제제기가 작업장에서 만나면서 일정한 흐름을 형성했다.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국가 이익을 넘어서서 조합원의 이익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익’이라는 지평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작업장 속에 있는 ‘인간’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였다. 이처럼 인간적 노동조합주의가 인간과 인권이라는 보편성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약한 소수자들일지라도 강한 권력에 지속적인 저항을 조직할 수 있었다.

이후에 나타날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민주노조를 발견하고 협조적 노동조합주의의 어용성을 뛰어넘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노동자 중심적이지 않았고 체제안주적인 노동운동이었다. 즉 이익보다는 인간을 발견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경제적 이익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인간을 넘어서서 스스로의 발로 걸을 수 있는 ‘계급’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두 가지 평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 단체는 1970년대의 민주노조운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성과 위주로 일일이 개입함으로써 노조활동가들이 내부역량을 기르기보다는 외부에 의존하게 만드는 경향을 초래하기도 했다(안승천, 2002: 48).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내용에 있어서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조운동은 ‘경제주의적’인 것에 간혀 있었고, 실천적으로는 기업 틀에 간혀 있었다. 그래서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운동은 중심운동”이라는 원칙을 세웠다(인터뷰 B, 2003. 5. 30).

하지만 인간적 노동조합주의와 이것의 담지체인 민주노조는 보다 거시

적이고 역사적이며 권력관계적인 맥락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 우선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한국의 정치에 새로운 담론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근대화와 반공주의가 경제성장과 체제 유지의 미명하에 삭제해 버렸던 인간과 인권이라는 담론을 화두로 제기했다.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근대화와 반공주의라는 국가 담론의 폭력성과 허구성을 폭로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국민의 이익이라는 도식을 폐기하고 분노에 저항할 줄 아는 꿈틀대는 인간을 복원해 내었다. 이런 점에서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전태일 개인의 정신과 몸부림을 일정한 경향과 이념으로 체계화하고 지속시켰다.

다음으로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협조적 노동조합주의가 국가와 자본과 맺은 '신성동맹'에 정면으로, 그리고 밑으로부터 반기를 들으로써 전태일의 처절한 저항을 사회적·집단적 저항으로 승화시켰다. 인간적 노동조합주의의 '무모한' 저항은 비판자들에게 저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과 밑으로부터 저항이 터져나옴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은 규모와 성과 면에서 미약했을지 모르나 성찰의 깊이와 미래 전망의 측면에서 깊은 인상을 주었다. 결국 "비록 몇 안 되는 민주노조였으나 자주적인 노동운동의 혈통을 잇는 이 용감한 투쟁 사례들은 이후 노동운동 발전의 커다란 발판으로 훌륭한 모범으로 되고 있다"(양승조, 1991: 49).

마지막으로 민주노조운동과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해방 이후 기형적인 이념지형에 흠집을 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70년대의 민주노조의 저항의 과정에서 해방 이후 냉전체제에서 견고하게 정착된 '기형적인 이념지형'의 불구성(폭력성, 비인간성)이 드러났으며, 이 흠집을 비집고 이것에 대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비판을 가능하게 했다.¹¹⁰⁾

결국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이념적·담론적 상상력을 제공했고, 밑으

110) YH무역 노동조합의 신민당사 농성투쟁(1979. 8)은 박정희 정권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투쟁의 차원은 비록 직장폐쇄에 항의하는 경제적 차원이었지만, 그 성과는 유신체제의 몰락에 대한 커다란 기여로 나타났다. 즉 YH무역노조의 신민당사 농성투쟁은 기회주의적 입장에서 반독재투쟁을 하던 신민당을 강력한 투쟁대열의 선두에 서게 하였고,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제명, 부마 민주항쟁을 거쳐 유신독재정권을 붕괴시키게까지 하였다"(박세현, 1986: 29).

로부터의 저항을 발견하고 견고한 기형적인 이념지형에 흠집을 냄으로써 ‘기괴한 괴물’의 정체성과 균열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이었다. 이후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입증했다. 하지만 그 최종 결실이 기독교 단체의 의도와는 달리 인간이 아니라 ‘계급’과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점에서 역사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불확실성과 우발성의 세계라는 것도 입증했다.

제4장

변혁과 개혁(1980년대)

제1절 광주와 발견: 계급과 사회주의

어떤 논자는 5·18 광주민주항쟁, 1987년의 6·10 민주화대투쟁과 7, 8, 9월 노동자대투쟁을 근거로 1980년대를 ‘혁명의 시대’라고 규정한다.¹¹¹⁾ 그렇다면, 세 사건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목표를 내걸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자본주의를 전복했기 때문인가? 단연코 그렇지 않다. 세 사건은 군 부독재정권의 연장 반대, 직선제 개헌쟁취, 그리고 산업민주주의를 목표로 한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향하고 있었다. 또한 세 사건은 성과의 측면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불충분한 도입에 머물렀다. 이런 점에서 혁명을 목표로 한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¹¹²⁾

111) 이런 맥락에서 조희연도 1980년대를 ‘논쟁의 시대’, ‘운동의 시대이자 혁명적 고양의 시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조희연, 2003: 125). 즉 그는 “1960년대 사회운동의 인식을 ‘소시민적’ 인식의 단계, 1970년대를 ‘민중주의’적 인식의 단계, 1980년대를 민중적·혁명적 인식의 단계로 구분”한다. 그리고 계급 관념을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조희연, 2003: 105~106 참조).

112) 1980년대 사건들에 대해 좌파들의 기본 시각은 다음과 같은 언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멀게는 4·19로부터, 가깝게는 5·18로부터 이어져 온 민중의 민주 변혁적 열망은 6·10에서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전까지의 혁명적 저항은 모두 폭압적인 지배세력으로부터 직접적인 탄압에 의해 좌절되었지만 6·10에서 제기한 민주적 의제와 대중의 분노는 지배세력이 만든 우회로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시대를 혁명의 시대 또는 질풍노도의 시대로 호칭하는가? 그것은 세 사건이 자유민주주의 실현의 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이념과 주체가 출현하는 계기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즉 사건들의 전개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의 전일적인 균립’과 다른 한편에서는 이 이념에 걸맞는 ‘조직’과 ‘계급’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는 ‘혁명의 시대’였다. 사회진보세력은 이전의 군부독재 타도란 제한된 틀을 넘어서서 사회개혁의 목표를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척결하려는 체제변혁으로까지 확대, 심화시키면서 이 ‘혁명의 시대’의 불을 지피 나갔다. 그리고 사회진보세력이 체제변혁적 운동을 정향해 가는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진보적 사회이론의 중심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성백, 2000).

따라서 여기에서는 1980년 광주항쟁 이후 제기된 화두, 즉 마르크시즘과 계급의 출현,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1987년 민주화 대투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결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1980년 광주에서의 ‘야만적 학살’은 민주화와 반민주화 세력이 충돌함으로써 생겨난 비극이었다. 민주화 세력은 “민주화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 학살로 보복되는 ‘불의’에 대한 도덕적 분노”, 즉 “계엄군의 시민살상”과 “신군부의 등장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부정”에 대해 저항을 조직했으며(오유석, 2003: 85), 민주주의의 제단에 자신들의 숭고한 피를 기꺼이 바치고자 했다.

친애하는 애국국민이여! 3천5백만 동포여! 민주제단에 흘뿌린 광주시민의 피를 헛되이 하지 마소서!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끝끝내 싸워 저 원한의 살인마 전두환을, 흉악한 국민의 배반자 유신잔당 놈

속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6월항쟁은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에 이르기까지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한국정치사에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성공은 6월항쟁이 낳은 대중의 민주적 열망을 제도적으로 완성했음을 의미한다”(송석현(2004), 『6·10 항쟁의 현재적 의미: 지배권력의 새로운 이름, ‘민주’와 ‘개혁’을 낳다!』, 『기관지 노힘』, 제55호).

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 피로 하여 죽어간 우리 아들딸들의 한을 풀어주소서! 이 땅에서 영원히 독재를 추방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기 위해 우리 80만 광주시민들은 핏빛 물들은 아스팔트 위에, 무참히 죽어간 시체더미 위에 죽음으로써 함께 모여 외칩니다. 일어서라! 쫓겨하라! 승리하라!(『이제는 빼앗길 수 없는 찬란한 민주의 꽃을 피우자』, 1980. 5. 24. 80만 광주시민 일동).

한편, 반민주세력은 이들의 저항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즉 반민주세력은 여전히 반공주의와 성장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한국적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절대선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저항세력을 ‘폭도’와 ‘빨갱이’로 규정하고 철저히 대중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사태를 해결하고자 했다.

지난 18일 수백 명의 대학생들에 의해 재개된 평화적 시위가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상당수의 타지역 불순인물 및 고첩(고정간첩-연구자 주)들이 사태를 극한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의 파괴 방화, 장비 및 재산 약탈 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선동하고 난동행위를 선도한 데 기인된 것이다(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답화문, 1980. 5. 24).¹¹³⁾

이처럼 광주는 기본적으로 민주 대 반민주세력 간의 목숨을 건 일대 혈전이였다. 그 당시 광주에서는 과학으로 무장된 조직과 계급의식으로 무장된 민중이 존재하지는 않았다.¹¹⁴⁾ 하지만, 광주가 이후 지식인들에

113) 신군부는 배후세력으로 불순분자와 간첩 이외에 김대중을 지목하고 있다: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소요사태를 배후 조종해 온 김대중이 광주시의 전남대와 조선대 내 추종세력(주로 복학생 중심)들을 조종·선동하여 온 것이 소요사태의 발단이 되었고 사태의 악화와 폭동의 과정에서 광주 시내 골수 추종분자들이 단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를 격화시킨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계속 판명되고 있다”(최정운, 1999: 48). 이런 점에서 범민주세력은 자신들의 정권의 대항자인 자유민주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아직 본격적으로 출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체제에 대항할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4) 지식인들은 1970년 전태일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들을 발견했지만, 이때의 노동

의해 민주 대 반민주라는 인식지평을 넘어서는 대사건으로 해석되었고 현존의 질서를 넘어서는 대안적 사건으로 규정됨으로써 광주에 이념사의 분수령이 되었다.¹¹⁵⁾ 이런 점에서 역설적으로 광주의 저항은 치열함과 처절함에도 불구하고 이념의 빈곤과 전망의 빈곤 때문에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¹¹⁶⁾ 그 빈곤이 정치세계에 대한 새로운 실천적·이념적 무기, 즉 ‘계급’과 ‘마르크시즘’이라는 ‘유령’을 불러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한 땅에서 마르크시즘은 ‘광주의 유혈의 광장’ 그 자체가 아니라 ‘광주

자는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1980년 광주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특별했다. ‘광주의 노동자’는 변혁의 주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노동자, 즉 아직도 즉자적 계급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변혁적 지식인들은 역사유물론에서 변혁의 주체로서 노동자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기층민중에 섞여 광범위하게 항쟁에 참여한 노동자를 발견했고 이들의 가능성을 신뢰했다: “처음에는 학생, 이후 분노한 시민, 이어서 노점상인 등 기동타격대원들의 대부분이 노동자로 이루어지고 운수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차량투쟁이 광주를 해방시킨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영웅적으로 투쟁했던 항쟁지도부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여 분열하기 시작했다. 주요한 원인은 해결방식상의 문제였다. 투항할 것인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것인가?... 여기에 중대한 차이점이 보인다. 당시 노동자, 빈민, 룬펜 등은 끝까지 싸우길 원했고, 시민, 목사, 변호사 등 지식인들은 총을 회수해 투항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정봉희, 1989: 190). 하지만 광주의 노동자들은 아직 자신을 계급으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광주는 대부분이 천 명 미만의 영세기업이었고 낮은 의식화와 조직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노동운동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들불야학이 진행되었으나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노동조합도 고작 로케트, 남해어망, 삼양제사 정도가 민주노조라 할 수 있었다”(정봉희, 1989: 190).

115) 1980년 광주는 민주화운동세력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기했다: “첫째로,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과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변혁주체는 누구인가? 셋째로, 사회변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저자 미상, 1996: 47).

116) 실제로 기층민중이 광범위하게 투쟁적으로 참여했지만 계급적 의식으로 무장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 대한 인식도 5월 26일에 ‘광주시민 일동’ 명의로 나온 유인물에서 보면 “...각 외신들은 광주시민의거를 사실 그대로 보도하고...미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2척이 부산에 정박하여 전두환 일파의 더 이상의 무모한 만행을 견제하고...”로 나타나고 있어서 항쟁 과정 속에서는 미국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항쟁기간 내내 나온 구호는 주로 군부의 책동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한정되었고 투쟁의 촉발도 폭력적 진압에 대한 분개였다(이준수, 1989: 187).

의 깊은 좌절'로부터, 그리고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인들의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자기 표현의 자유를 얻었다.

지식인들은 광주에 대살육 앞에서 '죽음의 공포'와 동시에 '철학의 빈곤'을 절감했다. 그동안 지식인들에게 '소박한' 저항의 철학¹¹⁷⁾이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철학으로는 광주점령군을 대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광주로부터 시작된 성찰은 마르크시즘을 발견함으로써 완성되었다.

(마르크시즘이) 박대통령의 군사독재가 발악할 때 긴급조치시대부터 고민해 오다가 흐름으로 시작된 것은 5·18이었다. 군사독재, 미국이 있는 조건들, 결국은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않고는 안 되지 않았는가? 그런 모색들이 공개·반공개적으로 나타난 것은 1980년대 중반이라고 보면 된다. ... 1980년대 중반 즈음 되어 노동운동이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골방 수준에서만 이야기했지, 공개적으로 논쟁을 하지 않았다. 실제 체계적으로 무장되지 않았지만 마르크시즘에 기초한 사람들이 많았다(인터뷰 A, 2003. 8. 29).

더 나아가 광주는 '정치적 빈곤'을 깨닫는 계기도 제공했다. 정치의 빈곤은 정치세계에 대한 순진한 생각을 의미한다. 즉 정치세계는 기본적으로 힘을 바탕으로 상이한 이해관계에 있는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갈등하고 타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정치적 무관심 또는 정치를 윤리적인 잣대로만 재단하려고 하는 태도 등을 정치적 빈곤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일단 현장에 들어간다고 마음먹은 뒤부터는 정치적인 문제는 아예 일체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정치는 돈 있는 사람이나 학생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오로지 현장에만 충실해야겠다는 정노(政勞) 분리의 잘못된 사고가 내 의식을 꼭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동자는 밥도 못 먹고

117) 광주는 국가권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기했다. 1980년대 초반까지 견지되었던 “소시민적 시각” 즉 “근본 변혁에 대한 전망이 부재한 채로 당면 민주화 과정을 ‘군사독재정권의 억압 완화’나 ‘민간정부로의 전환’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른바 시민민주주의 경향)이 지배적이었으나 이 시기에는 바로 그러한 비변혁적 민주화관이 비판, 극복”되었다(조희연, 1998: 270~271).

자기 육신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지경인데 정치는 무슨 얼어죽을 정치냐, 정치 얘기하는 사람은 거기 빠져서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에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표피적인 사고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긴급조치가 나고 그래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했으니깐요... 이 같은 생각을 철저히 깨부순 게 다름아닌 5·17이었습니다. 5·17 이후 나는 다시 태어난 것이나 진배없다는 생각이 듭니다(김문수 인터뷰. 현장편집부, 1986: 148 재인용).

이처럼 광주에는 모든 권력과 저항이 국가권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었다.¹¹⁸⁾ 더 나아가 광주의 좌절은 저항군들의 군부독재에 대한 절대적 힘의 열세, 즉 군부독재가 결코 ‘만만한’ 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로부터 지식인들은 이에 대적할 과학적이고 강력한 대안적 권력주체, 즉 민중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에서 마르크시즘은 민중의 실체가 ‘계급’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¹¹⁹⁾ 지식인들은 생산의 현장에 숨어살고 있었던 계급으로서의 노동자

118) 1970년대 전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1980년 봄의 임금인상, 신규 노조결성, 노조 민주화 투쟁에서도 정치권력과 직접적인 관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애써 회피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역설적으로 5·17은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충격적으로 눈뜨게 만든 귀중한 사건이었다. 한국노동운동은 그것이 노동조합이든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차원의 조직이든 이제 온정주의나 허구적인 노동조합주의와는 결별하고 정치권력과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를 설정해야만 한다는 참으로 간단하면서도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5·17은 이 교훈을 이혼서류에 찍힌 도장처럼 노동자들의 가슴속에 각인시켜 놓았던 것이다(김승욱 외, 1989: 14).

119)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민중항쟁이라고 성격 규정하거나 저항주체를 민중이라고 판정하는 데는 자유민주주의 패러다임을 따르는 사람이라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한 가지 여기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민중에 대한 이해문제이다. 민중 개념은 크게 두 개의 역사적 단계를 거치면서 규정되곤 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조 말에서 3·1독립운동까지 피지배층은 백성, 평민, 그리고 민중으로 변해 왔다고 한다. 특히 3·1독립운동이 전개되고 난 뒤에는 민족주의 역사학자에 의하여 민족독립혁명의 본영(本營)이자 주력 동력으로서 민중을 설정하고 민중을 민족과 동일시하였다. 이러한 민족적 민중의 개념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민족’ 내지 ‘민중’이라는 단어와 개념은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금기시되었다. 1960년 4월혁명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민중이 다시 등장하였고, 그 뒤 1980년대 학계에서는 그간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의 상황을 고려하여 민중의 개념에 계급 개념을 도입하여 주로 노동자계급과 농민 및 빈민을 그 구성요소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적극적으로 민중을 계급연대 및 계급동맹의 맥락에서

를 발견했다.

지식인들의 노동운동 참여는 1980년대 그 전 1960~70년대에도 있었다. 그때는 사실 부채의식이 있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선택받은 인간이었으며, '죄스러운'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본다. 자기 자신을 노동자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광주민주항쟁의 좌절은 달랐다. 실제 사회를 바꾸자. 주요 노동자를 바꾸자. 광민항(광주민주항쟁) 좌절 이후 노동운동에 투신한 지식인은 사회를 바꾸는 주체의식으로의 노동자로서 이념적인 측면에서 생김 출발이라고 본다(인터뷰 A, 2003. 8. 29).¹²⁰⁾

이상에서 보듯이 목적의식적인 조직과 계급, 그리고 이념은 광주가 가져다준 성찰의 결과물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변혁운동의 주체가 “노동계급을 지도계급으로 하는 민중이 되어야 하며 민중에 대한 자본주의적 수탈구조의 극복이 사회운동의 목표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은 노동계급을 주력군으로 하는 민중주체의 ‘계급해방운동’으로서 성격을 갖는다는 인식이 또한 이 시기에 정착되었다”(조희연, 1998: 271).

한 가지 더 지적되어야 할 중요한 광주의 통찰은 새로운 미국의 발견에 있다는 점이다. 즉 “광주항쟁에서 군부세력에 대한 미국의 협조, 지원”

검토할 수 있었다(김진균, 2003: 55~56). 이처럼 1970년대 후반 등장하였던 민중론, 그 일부로서 민중사회학에서 민중은 개발독재정권하에서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존재, 경제적으로 착취받는 존재, 문화적으로 소외된 존재로서 특징지어지는데, 이 민중은 개발독재의 착취, 억압, 소외에 의해 고통받는 대중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민중론은 계급분석이나 혁명적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 일종의 ‘민중주의’적 시각을 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조희연, 2003: 105).

120) 5·17이 나자 한계가 금방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에서 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데도 대부분의 조합활동가들은 이거 나는 안 당해야지, 나한테 후불똥은 안 떨어질까, 도망을 가야 할까 가만히 있어야 할까... 이런 한심한 생각에만 매달려 있었을 뿐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조직적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조차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때 조직의 힘이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조합원들이 무조건 일사불란하게 따라오는 것이 힘이 아니다, 개개인이 노동운동의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싸워야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고 전 민중적 과제를 자기 과제로 확실히 받아들이면서 헌신적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조직의 힘은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김문수 인터뷰. 현장 편집부, 1986: 152~153 재인용).

은 “1970년대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친미적 세계관’의 ‘붕괴’를 가져왔다(조희연, 1998: 266). 이들은 광주를 통해 “전두환 정권의 성립이 오로지 미국의 지원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지원이 그 반대급부로서 전 정권의 미국에의 종속성을 심화시키는 한편 미국의 이익을 그대로 한반도에 관철”시킨다는 것을 깨달았다(조희연, 1998: 266)¹²¹⁾ 이처럼 광주는 “미국에 대한 환상”(저자 미상, 1996: 47)을 깨고 반미자주화의 태도를 갖게 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했으며, 이후 ‘민족해방그룹(NLPDR)’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현실적 근거를 제공했다.

광주라는 ‘사건’과 이에 대한 ‘성찰’에 기반한 이후의 역사는 광주의 통찰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으로 지식인들에게 이해되었다. 즉 마르크시즘과 현존하는 계급 간의 역사적 만남이 지식인들을 통해 시도되었다. 지식인들은 마르크시즘을 대중에게 학습시킴으로써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추상화된 계급을 현실의 주체로 창출해야 할 임무에 충실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식인들은 자신부터 마르크시즘에 대해 집중적인 학습을 시작했다. 또한 일부는 출판운동을 운동의 일환으로 보아 사회과학출판사들을 만들어 다양한 사회과학 서적들을 발간했다. 변혁이론의 세례를 받은 지식인들은 혁명의 보물창고, 즉 노동현장으로 자청해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처럼 1980년대 들어 노동운동은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노동현장에 투신하기 시작한 활동가들에 의해 자양분을 제공받았다.¹²²⁾ 이들

121) 미국은 12·12 쿠데타를 조종, 지원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를 묵인하거나 사후에 인정해 주었다. 또 1980년 5월 22일 “광주사태를 진압할 목적으로 4개 대대의 한국 군인을 미국의 통제하에 풀어 주었다”는 미 국무성 대변인의 발언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전두환 정치군부세력의 광주시민학살을 도와주었다. 광주... 학살 직후인 1980년 6월 1일, 카터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맹방이나 우방 또는 무역상대국이 단지 우리의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소련의 예속하에 내줄 수는 없다”고 말함으로써 전두환 정치군부세력이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적극 수행할 의지를 보이면 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1980년 8월 초, ... 주한미군사령관 위컴은 “전두환 지지”를 분명하게 표현하여 전두환체제에 대한 미국의 비호를 분명히 하였다. ... 레이건은 1981년 1월에 취임후 최초로 전두환을 초청, 전두환의 이러한 요구(정당성-연구자 주)에 응해 주었다(저자 미상, 1996: 44~45).

122) 학출 활동가들 중 대부분은 학력을 낮추거나 입사서류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제

은 계급의식으로 무장하고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목적으로 공장 깊숙이 스며들었다. “1986년 10월 말 위장취업자는 전국적으로 373개 업체에서 699명이 적발되었을 정도로 사업장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다(부천상공회의소 편, 1987: 41).¹²³⁾ 이들의 노력에 힘입어 점차 의식화된 선진적 노동자들과 민주노조라고 불리는 조직이 작업장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광주의 성찰과 실천은 1987년 6월항쟁과 7, 8, 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결실한다. 앞서 보았듯이 광주는 “저항세력들에게 역사적 부채의식, 도덕적 부채의식을 갖게 하였고 이것은 19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저항운동의 가장 큰 동력을 형성”했다(오유석, 2003: 86). 하지만 6월항쟁의 저항과 그 과실은 사회주의자들의 ‘광주의 발견’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었다. 6월의 광장은 ‘호헌철폐, 독재타도’ 합성으로 가득 찼고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29 선언은 이 합성에 대한 메아리였다. 이런 점에서 6월의 ‘합성과 메아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지극히 제한된 범위, 즉 찻잔 속에서의 저항이자 결실에 불과했다.

곧 시작된 대통령 선거는 ‘의회주의’ 세력과 ‘의회전술’ 세력으로 민주화세력을 분열시켰다.¹²⁴⁾ 의회주의세력은 야당을 필두로 하는 자유민주

조업 사업장에 취업하였기 때문에 ‘위장 취업자’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들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영향을 크게 받아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노동현장에 투신하였는데,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지향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1970년 전태일의 분신 이후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차원에서의 개인적 결단에 의해 노동현장에 투신한 ‘제1세대 학출 활동가’와 구분되는 ‘제2세대 학출 활동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박동, 2000: 60).

123) 활동가들은 1984년 유화국면 속에서 노동조합 결성투쟁, 임금인상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1984년 구로공단의 협진양행, 유니진, 대우어패럴 등지에서, 1985년 상반기에 세화상사, 화남전자, 성원제강, 한국음향 등지에서 노조 결성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1985년 4월 중화학 대규모 사업장인 인천의 대우자동차에서 장기간의 임금인상을 위한 과업투쟁을 주도하기도 했다(최규업, 1990: 186).

124) 6월 민주항쟁은 혁명주의적 지향이 지배적이었던 급진주의적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정점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비혁명주의적 세력과 인식이 독립적으로 출현, 확산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비혁명주의적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자유주의적·온건진보주의적 인식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노동자계급 중심주의, 노동적대 중심주의

주의자들로서 의회를 통한 의회민주주의를 전적으로 신봉한 반면, 의회 전술세력은 사회주의자들로서 선거와 의회를 사회주의의 선전·선동을 위한 활용 단위로 제한적으로만 이해했다.¹²⁵⁾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세력들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사회주의세력은 선거를 전술적으로 이해했고 전술의 차이에 따라 비판적 지지론, 후보단일화론, 민중후보론으로 균열했다.¹²⁶⁾ 하지만 야권 통합에 실패함으로써 선거 결과는 민주화세력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기존 지배세력의 재등장으로 귀결되었다. 결국 사회주의자들의 의회전술은 중도에 후보를 사퇴한 민중후보전술을 비롯하여 모두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자들에게 6·10은 무엇이었는가? 우선 대중적 저항을 조직함으로써 열린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폭력적 군부독재의 탄압으로부터 일정한 정치적 영역

적 혁명주의와는 다른 급진주의적·진보주의적 인식과 실천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조희연, 2003: 108). 1987년의 사건 속에는 (목표, 주체, 이념 등의 측면에서) 두 가지 층위가 협력 또는 경쟁하고 있었다. 하나는 군부독재 타도와 직선제 개헌을 목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계급질서의 철폐와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전복을 최종 목표로 한 사회주의 흐름이다. 양자는 민주화 세력이라는 우산 아래 1980년대에 상호 협력했다. 하지만,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선거 경쟁에 뛰어들 자유민주주의적 경향의 민주화 세력과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사회주의 세력은 서서히 균열되기 시작했다.

125) 선거는 정치투쟁을 보다 힘차게 진군시키는 밑받침으로 활용되어야 할 성과물의 의미를 가지며, 그동안의 투쟁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는 민중의 자생적 정치의식을 계급적 정치의식으로 전화시켜 나가는 유력한 공간이 될 수 있다(『선봉』, 3호, 일송정 편집부, 1988: 158 재인용).

126) 여기에서 비판적 지지론과 후보단일화론은 NL 계열의 선거전술인 반면, 민중(독자)후보론은 CA(Constituent Assembly)의 대통령선거전술이었다. NL노선은 '과도정부론'을 주장했는데, 거국중립내각에 대한 견해차, 즉 '공정선거 보장하는 거국중립내각'과 선퇴진 후선거의 '전노퇴진-거국중립내각'으로 다르게 인식하면서 분열될 조짐을 보이다가 결국 각각 비판적 지지론과 후보단일화론을 전개한다. 다수파인 비판적 지지론은 자주·민주·통일의 실현방안과 이것을 실천할 결의를 기준으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한 반면, 소수파인 후보단일화론은 반군부독재 전선에 총집결하여 군부독재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CA는 '임시혁명정부론'을 주장하면서 국민투표를 거부할 것을 주장하다가 민중후보론을 펴며 독자출마를 준비한다. 이들은 백기완 후보를 내세우고 정치적 선동의 장을 확보하고자 했다(일송정 편집부, 1988: 152~165 참조).

을 확보할 가능성과 사회주의자들이 좀더 다양한 전술 구사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노동자들의 발견이다. 즉 노동자들이 6월항쟁에서부터 저항군에 가담했고¹²⁷⁾ 정치적으로 각성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장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6·10은 사회주의자들에게 매우 미흡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었다. 여전히 권력의 빈곤과 전략의 빈곤이 확인된 자리였기 때문이다. 6·10과 대선이 의회민주주의의 요구이자 실천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저

127) 노동자들은 6월항쟁 초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는 못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참여에 대한 정부와 기업주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동자들의 비조직적이고 의식화되지 못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항쟁 후기로 갈수록 노동자들의 가두투쟁 참여가 두드러졌고 일부의 공업 지역에서는 지식인, 해고자 출신의 활동가들이 투쟁의 일선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6월투쟁 과정에서 울산, 부산, 마산, 인천, 성남, 안양 등지에서는 생산직노동자들이 시위에 대거 참여하였으며 운수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전하는 데 주된 동력이 되었다(신금호, 1987). 성남시청의 『6. 20~6. 21 가두시위 종합보고서』(성남시청, 『말』, 12호 재인용)는 이것을 잘 보여준다: “연행자수: 근로자 34명(42.5%), 대학생 8명(10%), 고교생 4명(5%), 재수생 4명(5%), 막노동자 6명(7.5%), 상업 9명(11.3%), 무직 11명(13.7%), 기타 4명(5%), 총 80명(남자 79명, 여자 1명). 시위대 분석: 6월 18일까지는 대학생이 주도. 6월 19일에는 근로자, 막노동자, 무직 및 유흥가 등의 전과자들이 다수 가담, 시위 극렬, 방화, 기물파괴. 6월 20일에는 근로자가 주동이 됨(55명). 시민여론: 택시기사들이 시위대를 무료로 이동해 주고 시위대간의 연락, 제보 등 적극 가담.” 이것은 성남시의 특수성(공단 지역으로서 저소득계층이 밀집)이 반영된 것이지만, 이처럼 공장노동자들과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모든 지역에서 6월투쟁이 장기화될수록 투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노동자들의 참여도 확대되어 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천 지역에서는 6월투쟁의 막바지에 이르러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이 가두시위 중 창립대회(6. 26)를 가졌고 노동자들을 지도하고자 했다(신금호, 1987: 589~590).

*) 투쟁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투쟁했기 때문에 부상자, 연행자도 많았다. 중경상자, 구속자, 연행자 등을 분류하면 학생 이외의 일반인들 중 노동자의 비중은 4분의 1에서 반수에 이르고 있다(『기사연 리포트』, 제2호: 88~90). 노동자들은 6월항쟁 초기에도 참여했다. 6월 11일 시위대가 부평공단으로 진출하자 퇴근하던 공단 근로자가 합세하는 등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참여가 나타났다(<조선일보>, 1987. 6. 11). 하지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혹은 소모임 형태의 참가였다. 그러다가 차츰 통근버스에서 유인물도 나눠주고 선동도 하게 되자 노동자들은 아예 퇴근하는 버스에서 한꺼번에 내려 집단적으로 참여하였고 나중에는 회사측이 시위 참여를 막기 위해 잔업을 시킬 정도로 참여노동자 수는 늘어갔다(김하경, 1999: 38).

들의 축제'에 불과했다.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들은 항쟁 기간 내내 주변적인 지위에 머물렀다. 축제의 수혜자는 중산층과 야당이었고 '계급'이 아닌 '국민'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영향력 있는 권력 위치에 있지 않았다. 권력의 빈곤은 전략의 빈곤으로 연결되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선거전술을 '의회전술'이라고 강변했지만 실제 정치 과정에서 이것은 '의회주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6월항쟁이 7, 8, 9월 노동자대투쟁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7, 8, 9월 노동자대투쟁은 광주가 발견한 계급의 대진출이 목격되었던 공간이었는데, 이것은 6·10으로 인해 생긴 권력의 공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6월의 광장은 7~9월의 공장으로 대체되었고 국민은 노동자로 대체되었다.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자기선언인 노동자대투쟁의 토대가 지식인들의 마르크시즘에 근거한 현장활동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노동자대투쟁은 사회주의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막상 7, 8, 9월의 공간에 사회주의적 지식인들과 6월항쟁 지도부는 관망자에 머물러 있었고,¹²⁸⁾ 노동자들의 요구가 인권적·경제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노동자대투쟁은 자연발생적인 노동자들의 인권선언이었다(유범상, 2001 참조).

그렇다면 7, 8, 9월 노동자대투쟁은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무엇이었던가? '광주의 발견'이 계급과 마르크시즘이라는 인식지평의 확장이었다면 '노동자대투쟁에서의 발견'은 남한 땅에도 마르크시즘이 지목한 정치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노동자대투쟁은 그동안 공장 깊숙이 숨어 있었던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뛰어나온 사건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시즘에서 발견된 계급이 남한 땅에서 현재화되었고 이들이 보통 노동자들이 아니라 제조업의 대기업 남성노동자들이었다는 점을 목도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노동자대투쟁은

128) 국민운동본부는 노동자대투쟁을 “노동계급의 생존권투쟁이라는 차원에서만 인식할 뿐 민족민주운동의 전진의 일환으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지도 지원하지도 못했다”(신금호, 1987: 590).

노동자들을 민주노조로 조직화하고 있었다.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조직과 실천과는 상이한 것이 될 수 있는데, 더 이상 소그룹 또는 반합법성의 ‘음모론적인’ 조직론과 실천론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에게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 노동자 대투쟁을 주도적으로 견인했던 요인이 지식인들의 의식화와 조직화 노력에 있었다기보다는 6월의 자유민주주의적 열린 공간이었다는 점,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온 노동자들이 계급적 선언이 아니라 인간적·인권적 선언을 했다 점, 지배질서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낙관도 과학적 근거를 가질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광주의 좌절과 발견이 제시한 통찰은 민주화대투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도 어떤 사회주의적 전망과 연결되어 있지는 못했다. 오히려 확실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확보되어 가고 있었다는 점뿐이었다.

제2절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1. 마르크스주의와의 만남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민주노조’(특히 전노협)의 이념이자 실천지침인데, 마르크시즘을 이념적 기반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조와 마르크시즘의 만남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만남은 지식인¹²⁹⁾들이 매개(또는 헌신)함으로써 가능했다. 당시 학술 활동가

129) 김문수의 경우 이러한 지식인을 실천적 지식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천적 지식인이란 당당하게 자기의 과제, 우리 사회의 과제를 민중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민중들에게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게끔 실천하는 지식인입니다. 노동자들이 바로 이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주력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게끔 안내해야 되는 것이 실천적 지식인의 임무인 것입니다”(김문수 인터뷰. 현장 편집부, 1986: 159 재인용). 본 논문이 언급하는 지식인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학생출신 노동자 또는 노동운동가를 의미한다.

들은 노동자의 의식 형성에 지식인의 결정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는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노동자는 교육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내가 보기엔 노동자는 타고났다고 보지 않는다. 지식인에 의해 창조되었다(인터뷰 A, 2003. 8. 29).

따라서 당시의 마르크시즘으로 무장한 지식인들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즉 ‘대자적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를 만들려는 전략과 실천에 골몰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음의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지식인들은 어떻게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학습했는가? 둘째, 왜 노동자들을 의식화시키고자 했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 어떤 경로를 통해 사회주의를 노동자들에게 전파했는가? 셋째, 그 결과 이들이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특히 노동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이 되었는가?

우선, 지식인들은 언제 어떻게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그 사회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해 보자. 지식인들은 원래부터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노동운동에 뛰어든 것도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휴머니즘과 자유민주주의 사고틀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실천하고 있었다.

나는 사회교과서 책을 차근차근 정독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내 행동은 옳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읽은 유교적 경전의 영향과 우리 마을에 뿌리박힌 꼼꼼한 전통의 분위기 때문인지 나는 지사적 성향이 무척 강한 편이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하면 해야만 하는 것이 나의 윤리였습니다(김문수 대담. 현장 편집부, 1986: 131 재인용).

전태일 육필일기를 우연히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전태일의 일기 중에서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있었다면...” 하는 구절이 특히 가슴에 와 닿았다. 하지만 당시는 어디까지나 “이런 죽음도 있구나”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 살고 싶다” “선택된 계층으로 산다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막연한 생각들뿐이었지 구체적 결심을 하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했다(문성현 인터뷰. 황의봉, 1985: 15 참조).

이상에서 보듯이 마르크시즘의 세례를 받기 이전에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주로 도덕적·윤리적·자유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 기반하에 현장진입과 현장활동을 전개했다.¹³⁰⁾ 즉 학생운동권은 대체적으로 전태일 분신 직후인 1970년대 초부터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들에게 노동문제는 중심문제가 아니었다: “1971년 여름 방학 때 서울대생 일부가 구로공단에서 1개월간 공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노동현장을 체험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만 해도 교련반대 열기가 캠퍼스를 뒤덮던 때여서 학생운동의 본류와는 관련이 희박했다”(황의봉, 1985: 20).

이처럼 1980년대 이전까지는 노동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우연한 동기 또는 개인의 결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1980년의 광주민주항쟁을 분수령으로 지식인들은 마르크시즘과 계급을 만났고 노동현장 투신을 조직적으로 전개했다. 즉 1970년대 인간주의에 근거한 양심과 노동자 상태에 대한 자각에서 노동자들과의 만남을 시도했던 지식인들은 광주의 좌절 이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현실 분석과 전망을 마르크시즘에서 찾았다. 따라서 이때부터 지식인들과 노동자의 만남은 마르크시즘의 정언명령에 따른 의식적이고 과학적인 실천의 결과였고, 현장 투신은 운동권이 학생운동 이후 진학해야 할 정규 코스로 인식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에서 마르크시즘을 학습했는가? 지식인들은 대부분 대학 내 서클에서 의식화 학습을 받았다. 마르크시즘 학습서클인 ‘의식화 조직’은 유신체제하에서 197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며 1980년대에 활성화되었다. 모든 집회는 대부분 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130) 내가 노동운동에 뛰어 들었던 것은 요새 노동운동에 몸 담고 있는 젊은 후배들처럼 철저하게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해서가 아니고 지극히 소박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했다는 것, 누나가 공장에 다녔기 때문에 노동자 생활이 낯설지 않았다는 것, 대학에 들어와 사회활동을 하면서 내 열등감을 극복하고 가난은 수치스런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노동자가 숫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이 사회발전의 핵심이라는 초보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것,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며, 그것을 위해 전태일 동지는 분신까지 했는데 나도 조그만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결단이 섰다는 것, 이것이 그 당시 내가 노동자의 삶을 택한 이유의 전부였습니다(김문수 인터뷰, 현장 편집부, 1986: 148 재인용).

단체 또는 학과별로 다르긴 했지만 사회대나 인문대의 경우 1학년생의 90% 이상이 한 번 이상 시위에 참여하였고 이들의 70~80% 정도가 의식화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또 모든 시위가 이들 의식화 조직 성원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획되었고 1984년의 경우 1회 집회에 최고 만여 명이 모인 경우도 있었다(서울대 1980년대 초반 학번 0씨 인터뷰. 은수미, 2003: 207 재인용).

의식화 단위는 1970년대의 언더서클(대표자회의)¹³¹⁾ 중심에서 점차 학생대중조직, 즉 학생회로 옮겨갔다. 예를 들어 의식화 학습그룹은 1983년경 Po-System¹³²⁾을 구축했는데, 여기에서 중앙 Po는 학생운동을 넘어서는 전위지향적 조직(민추위)의 성원으로서 전위운동조직과 결합되어 있었다(은수미, 2003 참조). Po그룹은 1984년 상반기 활동을 비합법적인 투쟁일변도로 인한 학생대중과의 괴리라고 평가하면서 공개적인 대중조직, 즉 학생회를 건설하고자 했다.¹³³⁾ 그 결과 1984년 2학기 이후 학생회와 학회는 학생들의 일반화된 조직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내용을 학습했는가? <표 4-1>의 의식화 프로그램에서도 보듯이 당시 운동권들은 마르크시즘의 역사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 그리고 혁명론과 실천론을 중심으로 학습했다. 여기에서 특

131) 학생운동 내에서는 이를 Team, Family라고 불렀다. 이것은 1960년대 각 단과대학별로 형성됐던 학회가 1970년대 긴급조치하에서 분화되고 비합법화되면서 발전한 이념서클을 의미한다(일송정 편집부, 1988: 77).

132) Po-System에서 “Po란 기둥이라는 뜻을 지닌 영어의 Post의 약어로서 각 단과대학별로 그 단과대학의 대중활동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칭한다. Po의 연합체가 학생운동의 지도부였기 때문에 Po-System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일송정 편집부, 1988: 77).

133) 1984년 초 81학번으로 구성된 Po그룹은 1983년 12월 21일 구속학생 석방과 체적생의 복교조치로 형성된 유화 국면의 원인을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미국의 의도에서 찾고 이에 대응하여 단기적 투쟁위원회인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를 통한 학원자율화투쟁 → 경찰 학내진입과 학자추 붕괴 → 사회민주화 투쟁이라는 투쟁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유화국면으로 인해 학교로 돌아온 복학생들 중 일부는 Po그룹의 이러한 입장을 『깃발』(깃발그룹, 이에 대해 Po그룹은 반깃발로 지칭)이라는 소책자를 통해 비판하는데, 이들은 유화 국면의 원인을 군부독재정권의 전략적 판단으로 보고 이 기회에 Po그룹의 단계적 투쟁론과는 다른 사회민주화 투쟁이라는 전면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송정 편집부, 1988: 77~78 참조).

<표 4-1> 의식화 프로그램

	기간	의식화 목적	비고
1. 현실인식단계1	1학년 1학기	기존 가치관 비판, 현실 인식	- 1, 2회 정도 시위참여 - 입문을 위한 MT
2. 현실인식단계2	1학년 여름방학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민족경제론 숙지	농활과 합숙을 통해 자립적 민족경제의 필요성 고취
3. 역사인식단계	1학년 2학기	역사유물론적 관점 확립	일어강독 시작
4. 세계관 정립단계	2학년 1학기	변증법적 유물론 숙지	우수인자 선별 및 개별교육
5. 혁명론 정립단계	2학년 2학기	혁명이론 숙지	- 부각된 리더에 대한 교육 - 역할분담
6. 집중학습 단계	2학년 겨울방학	자기 견해 정립	공활
7. 실천 단계	3학년	혁명가로서의 훈련	실질적으로 의식화 종료

자료: 은수미(2003), 213쪽 참조.

이할 점은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일본어가 의식화 학습의 필수과목이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본어로 된 마르크시즘 서적을 읽기 위함이었다.

선배들은 일본어를 다 했지. 책을 읽으려면 그래야 됐으니까. 84학번부터는 공부 좀 하려는데 번역판이 다 나왔어. 합법출판물로 다 읽었지(전 노협 상근활동가 서○○ 자기 소개서. 정경원, 2003: 187 재인용).

이처럼 학생들이 주로 공부한 것은 마르크시즘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통 마르크시즘과 북한의 주체사상이 중심적인 학습 대상이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저작을 중심으로 유물론과 정치경제학, 그리고 혁명론과 국가론을 학습했지만,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해설서들이 주로 소련의 교과서들이었기 때문에 이들 지식의 많은 부분은 스탈린주의와 소련식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다른 한편,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미국을 제국주의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갖게 된 학생운동권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주체사상이 북한이라는 실체의 권력기관을 전제로 해서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운동권들은 북한체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따라서 남한의 마르크시즘은 스탈린주의와 주체사상, 소련의 사회주의체제와 북

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염두에 두고 발전했다. 두 가지 사상적 경향, 즉 정통 마르크시즘과 주체사상을 학습한 학생운동그룹은 1986년을 거치면서 PD과 NL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분화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학생회라는 당시의 ‘사회주의 학교’¹³⁴⁾를 거치면서 이론가 또는 혁명전사(또는 전위)로 성장했다. 전위의식으로 무장한 학생운동권은 노동현장으로 관심을 돌렸다. 그것은 앞서 보았듯이 광주의 좌절 이후 노동자들을 변혁의 주요한 주체이자 무기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 초중반의 논쟁은 노동자들과의 만남 또는 조직화의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준비론과 투쟁론의 두 가지 입장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일송정 편집부, 1988 참조). 양 입장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초반 무림과 학림의 논쟁, 그리고 깃발-반깃발의 논쟁으로 이어졌는데, 이제 이 논쟁의 흐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970년대 중반 학생운동 내부에서는 정치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치투쟁우위론’의 입장과 민중운동 활성화를 강조하는 ‘현장론’이 생겨났다. 정치투쟁우위론은 학생운동이 투쟁의 선두에서 정치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의 특수성에서 학생운동이 정치투쟁의 선두에 설 수밖에 없으며 민중운동은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반면 현장론은 야학운동그룹들이 취했던 입장으로서, 학생운동권의 시위 만능이 가져온 폐해를 지적하면서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의식화를 강조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생운동권은 1980년 12월 이후 소위 무·학 논쟁¹³⁵⁾ 전개했고, 1984년 이후 소위 깃발-반깃발 논쟁까지 이견을 지속적

134) 당시 운동권 사이에는 대학에는 야간대학과 주간대학이 존재한다는 말이 떠돌았다. 여기에서 주간대학은 대학의 정규과정을 의미했고, 야간대학은 운동권들의 서클, 학회 등을 의미했다. 야간대학은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사상과 조직론 및 실천론을 학습시켰으며 실제 가두투쟁을 통해 현장실습까지도 책임졌다.

135) 무림과 학림이라는 용어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명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무림사건은 1980년 12월 11일 서울대의 시위와 그 시위 때 뿌려진 ‘반제반과 쇼투쟁선언’이라는 유인물이 발단이 되어 당국이 학생운동 핵심멤버에 대한 검거선봉을 일으킨 사건이며, 학림사건은 1981년 ‘전민학련·전민노련’ 사건을 지칭한다(일송정 편집부, 1988: 29).

으로 표출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의 좌절이 주체역량의 취약성에 있었다고 보았지만 주체역량 강화 방법에 대한 관점은 상이했다. 무림은 민중운동세력의 조직화된 역량 성숙의 방법으로 학생운동이 '민중전체운동의 주도체'로서 전체 운동을 이끌어야 하며 민중운동에로의 집단적·체계적 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학림진영은 광주의 좌절 원인을 전위조직의 부재에서 찾고 조직운동을 시도하고자 했다. 이런 맥락에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주운동의 전국적 조직체가 구성되어야

<표 4-2> 학생운동의 준비론과 투쟁론

		야비	전망
계보		준비론적 경향: 현장론-무림-야학비판 이후 깃발그룹(혹은 MT)으로 계승	투쟁론적 경향: 정치투쟁우위론-학림(진민학련)-학생운동의 전망 이후 반깃발그룹(혹은 MC)으로 계승
내용	전위	학생운동이 자신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대중운동 속으로의 침투와 대중투쟁의 확보가 전위 형성의 선결요건	학생운동이 선도체로서 시위선봉-민중합세-민중봉기-연속적 도시봉기로 나아가야 함. 이 과정에서 전위 형성
	정치적시위	정치적 시위는 부차적인 것, 민중과의 결합이 직접적 민중지원	가두시위는 학생운동의 최고 형태로서 정치투쟁으로 발전함
	일상투쟁	일상적 요구에 대한 투쟁이 중요	일상투쟁은 정치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할 때 붕괴
	현장으로 존재이전	존재 이전은 필연적	존재 이전은 당면투쟁을 회피할 우려
	조직	전위 형성의 정책적 노선 요구	대중조직기반의 조직건설이 중요 과제
커리큘럼	변증법-사회과학 먼저 학습 변증법-정치경제학-경제사-민중운동사-조직론-전략·전술론 순	정치경제학에 치우친 학습 비판 운동사와 각종 현실문제에 대한 구체적 문제를 공부해야 함.	
노학연대		깃발: 장기적인 관점, 당장은 불가능	반깃발: 노학연대투쟁 지지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중운동의 선도체’인 학생운동은 간단없는 투쟁을 벌여 민중운동을 활성화하는 보조집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무림은 시위를 지양하고 민중운동의 내적 준비라는 준비론적 입장을 견지한 반면, 학림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조직화를 하는 한편 학생운동은 계속 시위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학 논쟁은 1982년 들어서면서 팜플렛 형식의 소책자를 통해 한층 심화된 논쟁으로 발전한다. 무림진영의 논리를 계승한 그룹이 『야학비판』이라는 소책자를 통해 무림의 논리를 보다 체계화하자, 학림진영의 논리를 계승한 그룹이 『학생운동의 전망』이라는 소책자를 통해 이들의 논리를 비판했다(표 4-2 참조).

여기에서는 노동현장과 연관된 존재 이전의 문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만 서술하고자 한다. ‘야비’의 경우 ‘학생’은 필연적으로 ‘존재의 이전’을 요구받는 소부르주아적 지식인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그 존재를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은 공상일 수 있지만 학생이 학생이라는 존재를 벗어나는 것은 곧 현재화될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비’의 입장에서 볼 때 전위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존재의 이전’이라는 문제가 실천되어야 하며 따라서 학생운동은 현장으로 존재 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망’은 ‘야비’의 존재 이전의 논리는 준비론을 내세워 당면투쟁을 회피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특히 학생운동 지도부가 그대로 사회운동으로 이전하여 전위를 형성한다는 논리는 전체 운동의 지도적 현실과 학생운동의 당면 현실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존재 이전에 당면한 현실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84년 상반기부터 1985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학생운동 내부에서는 학생운동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지속되는데, 학생운동권에서는 이것을 깃발-반깃발(Flag-Anti Flag) 논쟁 혹은 MT-MC(특히 1985년 상반기) 논쟁이라고 불렀다. 이 논쟁은 무림-학림 논쟁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조직관, 투쟁관, 대중관, 학생운동의 위상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토론함으로써 앞선 논의를 심화시켰다(이후 학생운동의 논쟁과 분화는 [보론] 참조). 여기에서는 이 논쟁들 중에 노학연대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84년 이후 학생들은 민중과의 실천적 연계를 지향하는 민중지원투쟁이라는 새로운 투쟁 범주를 설정하고 ‘노학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변혁운동의 주력군은 노동계급이며 학생운동은 보조역량이라는 인식에 일치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노동운동은 극히 맹아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었는데 반해 학생운동은 그 조직의 정도 및 실제적인 힘의 행사, 역량에 있어서 타부분에 비해 압도적이었던 현실에 있다”(일송정 편집부, 1988: 85). MC 입장은 현재의 노동운동역량과 계급의식이 극히 취약하여 당장 노학연대투쟁을 위한 학생대중의 민중지원투쟁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단발적 지원투쟁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친 노력과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들은 노학연대 전략이 시기상조라고 보았다. 반면 MT 입장은 노동자 계급이 이미 존재론적으로 노동자 의식과 투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운동의 민중지원투쟁이 지속된다면 급격히 계급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MT는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자투쟁위원회’라는 독립적인 투쟁기구를 형성하고 1984년 하반기 이후 가리봉·구로 등지에서 독자적으로 노학연대투쟁을 전개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준비론과 실천론은 일종의 실천론을 둘러싼 논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후 본격적인 이론투쟁의 준비였다.

이러한 논쟁의 와중에서도 학생들은 꾸준히 노동자로 존재 이전을 하고 있었다. 초기의 현장 진입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으며¹³⁶⁾ 계급의식을 갖고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연민, 동정, 양심 등의 윤리적·도덕적 가치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을 조직하기보다는 노동자와 같은 삶을 사는 데 충실하고자 했다.¹³⁷⁾ 하지만 점차 현장활동이 학생운동권의 하나의 커

136) 그 해(1970년) 여름... 지금도 그렇듯 대학에서는 여름에 대부분 농촌활동을 가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나를 비롯한 친구 세 명은 노동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공장을 택했던 것입니다(김문수 인터뷰. 현장 편집부, 1986: 134)... 공장생활의 경험은 내게 새로운 고민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걸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의무감이 들면서도 노동자생활을 생각하면 그냥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전태일 동지의 분신자살은 내게도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김문수 인터뷰. 현장 편집부, 1986: 135 재인용).

137) 현장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내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과 사귀면서 생활하다

리컬럼이 되었으며 학생들은 특정 준비 과정을 통해 광범위하게 현장으로 들어갔다. 그 대표적인 준비가 공장활동(공활)이었다. “농활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대규모적으로 공개리에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공활은 주로 겨울방학에 개인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졌다. 조양익(연대 사회학과 4년, 민중권익쟁취위원회 위원장) 군에 의하면 공활계획이 당국에 알려지면 방해로 받는 것이 보통이므로 혼자서 혹은 극소수끼리 사전에 치밀한 답사를 거쳐 현장에 들어갔다. 연세대의 경우 겨울방학 동안 약 2~3백여명의 학생들이 공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노동현장을 경험하고 있었다”(황의봉, 1985: 16~17 참조). 이처럼 방학기간 중 공장활동이 학생운동 이념서클의 훈련 과정으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노동현장으로의 투신은 1980년대 초·중반 학생운동을 한 사람에게는 한 번쯤 당연히 고민해 보아야 할 진로가 되었다(정경원, 2003: 186). 다른 한편, 1980년대에 노학연대투쟁도 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노학연대투쟁은 “노동자와 학생이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공동으로 집회를 갖거나 시위농성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노학연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청계피복노조 합법성쟁취대회”를 들 수 있다(황의봉, 1985: 17~18).

하지만 이 당시에 학생들의 현장 이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당시 대학 출신이 노동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취업’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했는데, 회사 또는 경찰에서 지식인들의 공장 취업에 대해 엄격히 검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³⁸⁾ 따라서 이른바 위장취업¹³⁹⁾이 보편적인

보면 노동자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게 있겠지 하는 지극히 소박한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한참 뒤에 그 수준을 극복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목회를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그것도 서로 돈 모아서 놀러가고 막걸리한 잔씩 하는 정도였지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김문수 인터뷰. 현장 편집부, 1986: 138~139 재인용).

138) 따라서 1980년대 중반 이후 활동가들은 노동시장에의 진입장벽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수도권 중소사업장에 대거 취업하였다. 활동가들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권력자원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박동, 2000: 60). 한편 이것은 지식인들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 대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다.

139) 다음은 노조탄압으로 ‘유명한’ 제임스 리의 위장취업에 대한 언급이다: “혁명적 노동운동가들이 작성하는 취업이력서를 살펴보자! 이들의 이력서에는 두말할

현장진입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었다.

현장에 가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상에 빨간 줄이 그어지면 현장활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운동 주동을 하지 않았다. 마지막 준비하는 과정으로 공장활동을 4학년, 군대 갔다오고,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 학적부를 화이트로 지워 중졸로 조작했다(인터뷰 N, 2003. 6. 3).

지식인들은 이와 같이 어려운 취업 관문을 통과하면 “현장을 배우고’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무엇보다도 일 자체가 몸에 익어야 하는데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지식인의 틀에서 벗어나 기술도 배우고 말투나 몸짓·사고방식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황의봉, 1985: 15)¹⁴⁰⁾.

이렇게 노동환경에 적응이 되면, 즉 공장조건이라든가 노동조건, 근로자들의 의식 등을 파악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뜻이 맞는 동료들과의 소모임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정상적인 순서였다. 이들은 주도적으로 노동자들과 친목을 통해 인간적인 신뢰감을 쌓고 근로조건 개선방향을 토론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황의봉, 1985: 15 참조). 더 나아가 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민주화하거나 설립하는 데로 나아갔

나위없이 대학입학 또는 학력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들의 이력서에는 공통점이 여러 곳에 발견된다. 즉 대학 학력을 숨기기 위해 그 기간만큼 다른 경력사항을 채우게 된다. 이들은 보통 대학 2~3학년 과정에서 학생 신분을 뺀 채 운동권 대열에 뛰어들었다. 따라서 이들이 작성한 이력서에는 2년 이상의 대학생 신분을 은폐하기 위한 가짜 경력을 기재하게 된다... 남자 대학생 출신은 농업종사, 여관종업원, 서비스업체 종사 등도 있고, 여자는 슈퍼마켓이나 식품점 종사, 미장원 실습의 경력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영세제조업체 경력을 즐겨 사용하는데 이때 이들은 회사명만 기입하고 소재지는 적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소재지 불명으로 한국물산, 대한실업 등이다. 한편 도산한 중소기업을 용케 알아내어 이력서에 기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업의 조회를 통해 위장신분이 탄로날 것을 염려한 수법이다”(이윤섭, 1993: 192).

140) 이에 대해 제임스 리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위장취업자는 취업 초기 3개월간은 대단히 모범적으로 근무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취업노동자가 결격사유나 하자가 있으면 노조나 본인의 동의 없이도 근로계약을 취소하거나 면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이윤섭, 1993: 198).

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들은 “신분문제가 계속 걸려 있어서 조합활동의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조합지도부를 도와서 밑으로부터 조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투쟁에 참가”하는 경향이 있었다(정경원, 2003: 186 참조).¹⁴¹⁾ 다른 한편, 지식인들은 상담소나 연구소를 통해 노동조합 건설을 지원하거나 이론적인 기여를 하기도 했다. 사업장 밖의 활동가들은 주로 사업장 투쟁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소수의 경우 이 지원이 지도에까지 이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의 역량들이 사전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한정되었고 ‘지도’라기보다는 ‘지원’의 성격이 강했으며 그것도 투쟁돌입 이전까지로 한정되었다. 이 역할은 지역서클의 현장지원부서, 여러 노동상담소나 노동단체들이 담당했다(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1987: 415~416).

지식인들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노동자들은 노동자에서 조합원으로, 조합원에서 활동가로 점차 성장해 갔다. 특히 민주노조 깃발을 사수하기 위해서 벌이는 투쟁은 자본과 정권의 본질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학교’였으며, 이러한 투쟁을 경험하면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지역노조협의회와 전국조직의 활동가로 성장해 갔다(정경원, 2003: 189 참조).

해고를 계기로 그는 지역운동을 하게 되었다. 1987년도에 가톨릭노동상담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경남노동자협의회 건설에 참여하는 것도 이때다. 그러면서 박성철, 허재우 등과 공부도 제법 했다. 한편으로는 현장내 학습모임을 만들고 신문도 만들었다. 그 사이 효성, 금성사 제3자개입건으로 22개월간 감방살이를 다시 겪기도 했다(정경원, 2003: 186 재인용).

이러한 만남의 효과는 19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다양한 지역과 공간

141)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신규노조 건설에 있어 대학 출신들이 가장 크게 기능하는 부분은 조직 분야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불온시되는 풍토에서 제3자개입금지 등으로 모두가 움츠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 과감히 나서서 노조결성을 주도하고 회사측 몰래 30명 이상의 동조자를 끌어모으는 일은 전문지식과 조직능력을 갖춘 열성적인 대학 출신들 아니면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노조결성에 수반되는 제반 수속절차를 감당하는 데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겹겹이 가로막고 있는 ‘노조결성의 벽’을 ‘돌파’하는 데는 이들의 직간접적인 참여가 거의 ‘필연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황의봉, 1985: 15).

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민주노조 건설의 현장에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존재했으며, 구로동맹파업과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같은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주도하거나 이들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지식인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는 다소 논쟁적이다. 우선 이들의 노력이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사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한다.

학생운동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활동가들은 노동현장에 바로 이러한 주체적 역량 형성의 기회를 창출해 내는 크나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자신 노동현장에 부족한 활동가들의 수를 메워 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의 활동가로서의 잠재적 역량을 현실화시키는 성장호르몬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입니다(김문수 인터뷰, 현장 편집부, 1986: 155 재인용).

학생운동이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운동의 조직적 참여가 없었다면 이른바 경제주의에 매몰되고 조합주의에 매몰되고 경제투쟁만 하는 등의 이런 운동에서 빨리 지평을 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어려운 조건하에서 구속, 고문, 죽음을 과소평가하면 절대로 안 된다(인터뷰 A, 2003. 8. 29).

위의 언급처럼 이들은 때론 ‘조직원’으로 노동조합을 지켰고, 때론 ‘선지자’로서 마르크시즘을 발견하여 노동자에게 알려주었으며, 때론 ‘순교자’로 개인적인 편안함을 마다하고 노동해방을 위해 헌신했다. 하지만 그동안 활동가들이 노동운동에 끼친 영향의 이면에는 부작용도 있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대학생 출신 노동자들을 정부나 기업주들이 위장취업자, 불순분자로 몰아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은 차치하고 같은 활동가 내부에서도 ‘학빠리’, ‘먹물’, ‘빠리’ 등과 같은 다분히 경멸조로 지칭하며 별종의 무리로 여겨 거리를 두려고 하는 습관들은 비판받아야 한다... ‘먹물’이니 ‘빠리’니 하는 말은 1970년대 후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지식인들의 관념성, 기회주의, 실천 결여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현장 편집부, 1986: 126).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근로자들과 충분히 동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사리 지도하려는 자세를 보여 호응을 못 얻기도 한다(황의봉, 1985: 16).¹⁴²⁾

이상의 언급에서 보듯이 부정적인 평가는 지식인들의 이념적 편향에 따른 관념성과 변혁에 대한 조급성 그리고 이로 인한 대중과의 괴리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따르면, 지식인들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자생성과 의식성의 이분법적 정세관을 통해 당시의 노동운동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많은 편향을 노정했다. 즉 1987년 이전 활동가들은 한국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의식을 ‘개량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정치조직(MPO: Mass Political Organization)’이 노동운동을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한 ‘혁명적 노동조합(Revolutionary Trade Union)’ 모델을 한국의 노동운동에 적용해 보고자 했다(김동춘, 1995: 106. 이에 대해서는 김현상, 1987; 김종오, 1988: 269~279 참조). 이처럼 경제주의적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인해 이들은 경제적 선전활동이나 당시의 노동자들의 이해 및 요구와 올바르게 결합해 내지 못했다(최규엽, 1990: 186~187).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지식인들의 조급증과 정치주의적 편향은 노동운동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현장노동자들로부터 소외되는 사태로 발전하는 곳도 있었다.

실제로 1985년 5·3 인천투쟁 이후에는 지식인 노동자들은 노동자들과 거의 결합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러한 운동방식은 1987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대중적인 파업투쟁이 한 건도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된다. 1987년 3월 서울 성수 지역의 제일피복 사업장에서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의 지도하에 노조결성투쟁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도 이들은 노조결성투쟁과 임금투쟁을 개량주의자의 행위라 하여 비난했다(최규엽, 1990: 186~187). 이와 같이 활동가들의 존재론적 한계와 투쟁방법 및 투쟁목표에 대한 상이함으로 인해 활동가들과 민주노조 간부들 사이에는 분열과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노동자 출신의 민주노조 간부들

142)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현장근로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의 이기적인 속성이나 소시민적 무사안일주의에 실망을 한 나머지 노동운동에 회의를 느껴 중도에서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간혹 눈에 띈다. 말하자면 이론을 통해 느껴 왔던 근로자들에 대한 관념적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이다(황의봉, 1985: 16).

은 현실성 있는 투쟁방식을 선호한 반면, 활동가들은 사회변혁운동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민주노조운동에 강요하였기 때문이다(민중석, 1989: 59~60).

19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 이전에 활동가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곳에서 오히려 파업이 미미하게 일어났던 것도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즉 기존에 노조활동이 별로 활발하지 않았거나 학생 출신 노동운동가들의 현장 투신이 비교적 덜 빈번했던 사업장 및 지역, 특히 울산·마산·창원 지역 등 남성 중심의 중공업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반면 1986년까지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서울의 구로공단 지역이나 인천 지역에서는 저항이 오히려 소극적이었다. 특히 1985년 ‘구로연대파업’ 및 1986년 임금인상운동 당시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경인 지역의 사업장은 ‘대투쟁’ 기간 동안에는 아예 침묵으로 일관한 곳이 대부분이었다(김동춘, 1995: 113; 박승욱, 1990: 371).¹⁴³⁾

하지만, 지식인들에 대한 평가는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에 대한 영향력만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또 다른 기여들이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지식인들이 뿌린 씨앗, 예를 들어 선진노동자들의 형성, 변혁이론을 둘러싼 논쟁과 이념적 지평 확장이라는 유산 등은 앞으로 보다 신중하게 연구·평가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지식인들이 1987년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속했는데, 이것도 이후 새롭게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노협외의 경우,

사무총국에는 늘 30여 명 정도가 상근하였다. 짧은 기간 활동했던 사람까지 합하면 6년 동안 전노협 사무총국 상근활동가 수는 총 90여 명이 넘는다(정경원, 2003: 178) 전노협 간부 4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 중 46명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노동현장에 투신하여 노동자의 길을 걸은 ‘의식적인’ 사람들이다. 학생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노협 사무총국 상근자로 활동하게 된 경로를 몇 가지로 유형화하면, 우선 현장에 투

143) 물론 이러한 평가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구로동맹파업 등 이전에 활동가들의 영향을 받아 파업을 감행한 사업장들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 운동역량이 괴멸되었기 때문이다.

신하여 노동조합 활동 혹은 위장취업 등으로 해고된 후 전노협 혹은 노동 단체를 거쳐 전노협 중앙 상근자가 된 경우(26명), 둘째 학생운동을 하고 졸업 후 상담소나 투쟁단체 등에서 활동하다가 전노협에서 상근한 경우(8명), 셋째 비합법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검거되거나 운동지형의 변화로 조건상 활동을 그만두게 되어 이후 단체활동을 하다가 전노협에서 상근하게 된 경우(3명)가 있으며, 넷째 학생운동을 경험한 후 곧바로 전노협에서 활동하게 된 경우(2명)가 있다(정경원, 2003: 178~179).

이처럼 전노협을 전후해서 지식인들은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는데, 예를 들어 노동운동에 남거나, 정당운동 또는 시민운동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학술 영역에서 활동하는 등의 다양한 선택을 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여전히 한국사회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다 통시적이고 상황맥락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이루어지고 판단이 내려짐으로써 20세기 하반기의 한국의 진보운동에 대한 해석이 보다 풍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운동은 현장에 들어온 지식인들을 매개로 해서 사회주의와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노조를 만들어 나갔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지식인들이 들고 온 사회주의를 온전히 학습하고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전노협으로 외화된 노동조직이 사회주의로 무장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의 지표였던 사회주의는 지식인들이 여전히 노동운동 내에 남음으로써 이론과 실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보론】 NLPDR 대 PDR

1980년대 활동가들에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노동운동을 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근거였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사회구성체와 변혁론을 둘러싸고 논쟁이 발생했는데, 이 논쟁은 1986년을 경유하고 1987년 민주화투쟁을 경험하면서 NL론과 PD론으로 정리되었다. 노동운동은 이러한 입장에 기반해서 어떻게 노동자를 계급으로 조직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즉 조직론을 둘러싸고 심각한 논쟁이 이어졌다. 여기에서는 NL과

PD의 형성과정과 주요 입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표 4-3> 변혁운동노선의 구조와 내용

논쟁 단계	분과	사회성격	변혁운동 성격	주요 모순구조	변혁 역량	특징
CNP 논쟁 (84~85)	CD	주변부 자본주의	시민 민주주의	(외세)·군부독재 ↔민중 일반	<주도> 소시민·학생·진보적 지식인·정치인 등 중간계층 <보조> 노동자·농민·빈민	반과슈투쟁→반외세투쟁·중간계층 중시
	ND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	민족 민주주의	제국주의·과소 ↔민중 일반	<주도> 노동자·농민·빈민 <선도> 진보적 청년학생 <연대> 중소부르주아 등 중간계층·자유주의 정치인	반외세·반과슈투쟁 동시전개
	PD	국가독점 자본주의	민중 민주주의	(제국주의)·과소·보수적 부르주아↔기층 민중·혁명적 인텔리	<주도> 노동자·농민·빈민	반과슈투쟁 중간계층 무시
NL-CA 논쟁 (86~87)	NL	식민지 반봉건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주요 모순> 미 제국주의↔한국 민중 <부차적 모순> 매관 자본가·친미 지주·반동 관료 ↔민중	<주도>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보조> 지식인·소자산계급·애국적 민족 자본가·양심적 종교인	반미투쟁 선도 광범한 통일전선 강조
	CA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	민족민주혁명	제국주의·반동부르주아↔혁명적 민중	<주도> 노동계급 <보조> 농민·소 부르주아	혁명적 정세규정 자유주의부르주아 타격
NL-PD 논쟁 (88~90)	NL	식민지 반(半)자본주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주요 모순> 위 NL과 동일 <부차적 모순> 독재권력·국내독점자본↔민중	<주도> 노동자 <보조> 농민·소자산계급·진보적 지식인	반미·통일 운동 선도
	PD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	제국주의·독점자본과소↔노동자·농민·소 부르주아	<주도> 노동계급 <보조> 농민·소 부르주아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중시

자료: 김인걸 외 편저(2003), 427쪽.

이념노선은 학생운동권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양대 노선인 NL(NLPDR)과 PD(PDR)는 CNP 논쟁 → NDR → NL 대 CA의 논쟁을 거쳐 1980년대 후반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이하 유석춘·박병영, 2002; 일송정 편집부, 1988 참조). 1985년 하반기 ‘깃발’로 대변되는 민족민주혁명(NDR)론으로 수렴되는 학생운동에서 이념 논쟁이 본격화된 것은 1986년 초반기에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론(NLPDR: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이 반제직접투쟁·반전반핵투쟁을 선언하고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광주의 좌절에서 발견된 반제국주의적 인식은 1985년 말경에 AIPDR(반제민주주의혁명)론을 소개한 ‘반제 민족해방의 기수로 부활하자’라는 문건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 글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용하여 반제국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 의하면, 한반도의 근대사 100년의 역사가 제국주의 침략과 약탈의 역사이며, 특히 한국현대사는 미제국주의와 한국 민중 간의 투쟁의 역사이다. 따라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이고 독점자본 또한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매판자본이다. 결국 투쟁의 직접적인 대상은 미제국주의가 되어야 한다. 1986년 1, 2월경 AIPDR론을 가다듬은 NL진영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3월 말에 들어서면서부터 반제(AI) 직접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당시 제도정치권에서 신민당 개헌 현판식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한미안보연례회의와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 문무대·전방입소 등을 계기로 하여 반전반핵, 미제의 용병교육 거부 등을 주요 이슈로 이재호, 김세진 등의 죽음을 불사하는 투쟁을 벌여나갔다. 이러한 주장은 선진적인 학생 조직인 구국학생연맹(구학련)과 대중조직인 반미자주화반과소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로 조직화되었고 기관지 『해방선언』을 발간하면서 NL 이념은 급속히 확대되어 나갔다. 이 활동은 1986년 건대사태를 유발한 전국반외세반독점에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결성식(1986. 10. 28)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애학투련은 당시 CA(Constituent Assembly)진영과는 다르게 ‘헌법문제’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은 채 ‘직선제’를 ‘민주적 제 권리쟁취투쟁’의 일환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들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이념인 반공이데올로기 분쇄투쟁, 조국

통일촉진투쟁을 중심적 이슈로 제기했다.

한편, 민민투는 MT의 파쇼헌법철폐투쟁론의 맥락에서 출발 초기부터 헌법을 매개로 한 정치투쟁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헌법제정민중의회’ 소집투쟁을 주장했다. 그런데, CA그룹의 지도와 연결되면서 CA그룹 산하 학생조직으로 위치지어졌다. 민민투 계열은 투쟁위원회 연합체인 전민학련(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투쟁위원회)을 결성(1986. 5)하였으나 연대활동은 미미했다. 하지만 1986년 하기방학을 전후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민당사 농성투쟁, 성남공단지역 선진작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CA는 한국사회 구성체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했다. 즉 CA는 NL의 식민지론을 반박하면서 구식민지와 신식민지와 차별성을 강조하고 제국주의의 신식민지 간접통치방식으로의 전환 및 이로 인한 정치적 독립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종속성을 특수성으로 하면서 자본주의의 압축적 발전의 길을 걸어온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한 한국사회 성격을 규정하였다. CA는 당시의 국면이 민중과 파쇼권력 사이의 첨예한 투쟁의 시기로서 혁명적 정세가 예견된다고 판단했으며, 민중의 권력획득 의지(국가권력주체의식으로 무장)를 적극적으로 선전·선동해 낼 수 있는 제헌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보기에 헌법문제는 단지 보다 포괄적인 ‘제도개선투쟁’(민주적 체 권리투쟁)이 아니라 ‘권력투쟁의 매개물’이며 따라서 당시의 시기는 ‘헌법투쟁기’였다. 그러므로 헌법문제의 해결은 권력을 통해 가능하며 바로 그것이 제헌의회를 소집하는 것이었다. CA는 신민당의 직선제 개헌론이 기회주의적이며 6·29 선언 또한 부분적 개량을 허용한 기만책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부르주아지의 개량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적 폭로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여 임시혁명정부 수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무장봉기의 사회심리적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태진, 1989 참조).

1987년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학생운동은 조국통일촉진투쟁을 NL계열 주도로 전개했다. 이들은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대투쟁을 평가하면서 노학연대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개 출판물이 대규모로 발간되어 새로운 사상이 대대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CA진

영 내부에서 격렬한 이론투쟁을 통해 사실상 NL과 PD로의 분화작업이 시작되었다. 즉 CA는 1988년 4, 5월경 이후 매우 급격한 노선상의 변화를 겪었는데, 결국 1년여의 내부이론투쟁으로 1989년 4, 5월경 양분된다.¹⁴⁴⁾ 일부는 NL 흐름에 흡수·합류되고, 일부는 이와 구분되는 보다 뚜렷한 모습으로 정착되었는데 이 흐름이 PD를 형성했다.

NL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역사가 자주성 실현의 역사이며, 민족의 자주성을 가로막고 있는 미제국주의와 이에 저항하는 민족 구성원이 기본 모순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정권의 소유관계를 생산관계보다 우위에 두는데, 이에 따르면 남한은 정치권력을 소유한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이며 따라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의 괴뢰정권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들이 남한의 사회구성체를 식민지 반(半)봉건사회(또는 식민지반자본주의)로 설정하는 데서부터 기인한다. 따라서 남한은 식민지 예속경제이며 국내 자본은 매판자본일 수밖에 없다. 결국 친미반공세력에 대항하는 제 세력과의 통일전선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민족자주정권의 수립과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거쳐 완전한 조국의 자주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PD는 남한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 사회로 보고 민족모순보다 계급모순을 근본 모순으로 간주했다. 즉 제국주의 지배하의 자본주의의 진전 및 그에 따른 자본-임노동 관계의 발전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역할을 일차적인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남한의 혁명은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하에서 반제독점통일전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국주의 지배하의 자본주의의 진전은 항상적으로 제국주의에 의한 착취를 동반하기 때문에 식민지에서의 자본주의 국가는 파시즘이라는 극단적인 반동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변혁론에 있어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반파쇼통일전선을 형성하고(반제반독점) 민중민주주의혁명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추구

144) 우선 이들의 확고한 이념적·이론적 원칙이 되어 왔던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폐기하고 NL진영의 사상적 입장까지 적극 검토해 들어가는 진영과, 과거 입장의 기본적 핵심을 옹호하면서 그 '절충적 견해'를 보다 뚜렷이 하여 반NL적 입장으로 정리해 들어가는 또 다른 진영이다.

했다. 한편, 이들에게 있어 한반도 통일은 남한사회혁명 이후에 고려될 수 있는 과제였다.¹⁴⁵⁾

이 두 흐름은 1980년대 이후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변혁운동의 일반적 경향이 되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노동운동에서 학생운동권과 같이 격렬한 논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노동운동의 조직노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대중성을 강조하는 NL의 경우 대중조직의 활성화를 주장한 반면, 의식성을 강조한 PD의 경우 정치조직을 강조했다. 한편, 이것은 투쟁의 목표와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NL의 경우 PD보다 상대적으로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투쟁을 보다 강조한 반면에 PD는 NL에 비해 정치투쟁을 강조했다.

2. 정의와 내용

1980년대 ‘민주노조(특히 전노협)’는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자기 이념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민주노조 및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정의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서술하고자 한다. 민주노조는 1970년대부터 존재했지만, 담론과 존재의 차원에서 볼 때 보편적인 현상이 된 것은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조를 정의하는 데 있어 민주노조 비판론부터 시작하는 것도 흥미있을 듯하다. 민주노조를 공산주의 전위 부대로 인식하고 극도로 혐오해서 민주노조 파괴에 골몰했던 제임스 리(본명 이윤섭)는 민주노조를 다음과 같이 ‘악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노조’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하는 노조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노동자가 스스로

145) 먼저 1985년 초반에 제기된 독점자본주의론은 자본주의 사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계급 모순만을 강조한 나머지 한국사회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민족모순을 소홀히 취급하였다. 다음 1985년 후반부터 제기된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은 한국사회가 외세의 지배하에 있다는 민족 모순을 주요하게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을 경시한 나머지 노자간의 계급 모순을 부차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CA그룹은 활동가의 목적의식성을 강조하면서 지도조직의 즉각적인 결성을 강조한 반면, NL그룹은 대중성을 강조하면서 지도조직 결성을 위한 대중적인 토대를 강조했다(홍승태, 1994: 152~153).

노조를 만들고 조합원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참되고 순수한 노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노조란 용어가 어용노조를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좋은 말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민주노조’ 조합원이 주인이고 따라서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노조이다. 그리고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양심적이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민주노조란 혁명적 노동운동이 지어낸 선전·선동 구호이고 혁명운동의 전위조직을 뜻하는 것이다. 계급의식을 갖고 정치사상투쟁을 하도록 만드는 혁명의 최일선 부대란 것이다(이운섭, 1993: 216).

이상과 같이 제임스 리의 언급에서 유추할 때 민주노조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노조이자 어용노조와 차별적인 노조, 둘째는 노조 내 민주주의가 실현된 노조, 셋째는 혁명적(정치적) 노동조합주의. 하지만 보다 진전된 언급에서 제임스 리는 민주노조가 세 번째 정의에 국한된 존재라고 규정하고 싶어했는데 그의 민주노조에 대한 ‘놀라운 통찰’은 이 지점에서 잘못된 길로 접어든다. 왜냐하면 민주노조는 세 가지 특징의 ‘종합’으로 이해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세 번째 정의와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다시 제임스 리의 말을 인용해 보자. 제임스 리는 한국의 노동운동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형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틀 속에서 활동하는 노동운동”인 “체제유지적 노동운동”과 “두 번째 형태는 지금까지 생활가치 기준의 근간을 이루어 온 기존의 정치·사회체제를 다른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하고 이를 바꾸려 하는 노동운동”인 “체제부정적 노동운동”이 그것이다¹⁴⁶⁾ (이운섭, 1993: 175).

146) 그는 체제부정적 노동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체제부정적 노동운동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이념과 사상을 전파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노동자에게 계급의식을 심어주고 투쟁만을 주장한다. 따라서 대화를 통한 타협과 양보를 배척하고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를 대적전선으로 설정, 과격한 투쟁관계로 몰아 놓아 노동자혁명을 추구한다. 체제부정적 노동운동은 혁명의 필수수단으로 노동조합을 활용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이운섭, 1993: 175).

이상의 민주노조에 대한 제임스 리의 언급은 ‘민주노조 설계자들’에게 상당부분 사실로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노조 활동가들의 “노동해방”을 주창했던 “일반적 흐름은 대부분 사회주의자”(인터뷰 A, 2003. 8. 29)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전노협 상근자들은 자신을 ‘변혁운동에 복무하고 노동해방을 이루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활동가로 정의”했고, “전노협의 투쟁성, 대중성, 민주성은 활동가들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정경원, 2003: 194).¹⁴⁷⁾ 동일한 맥락에서 전노협 설계자들은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계급적 대중운동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게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추상적인 수준이지만 노동해방이라는 변혁지향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전국노운협, 1990: 2).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조의 결집체인 전노협은 자신들의 이념을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로 표현되는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에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첫째, 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인가? 둘째,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와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이 질문을 중심으로 민주노조가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았다: “전투적 노조주의는... 주객관적인 조건에 따른 투쟁의 양상의 문제지 이념이라고 보기 어렵다”(인터뷰 D, 2004. 2. 25). 이러한 비판에 대해 민주노조는 전투성은 변혁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반박한다. 우선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노선을 나타내는 ‘변혁적 노동운동’이라는 말을 즐겨 쓰고 있는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47) “전노협 결성 시기에 많은 활동가들이 속해 있던 단체는 주로 전국노운협이었다. 전국회의 규정에 상근자 추천 기관으로 전국노운협을 명시한 것을 보더라도 전국조직 건설 당시 노동단체에 속해 있는 활동가들의 역량과 역할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케 한다. 실무자들의 절대다수가 학생운동 출신의 노동자인데 비해 임원, 국·실장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전국조직에서 활동하게 된 경우가 많다... 전국조직 건설 초기 상근인력이 구성된 경로를 볼 때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계급의 형성을 통해 사회변혁을 피하고자 하는 자들의 결합이 컸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이후 전노협의 이념과 투쟁성을 구현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경원, 2003: 181).

변혁적 노동운동이란, 근본 변혁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과 더불어 남한 자본주의 현실이 독점의 강화와 종속의 심화로 나아가면서 민족민주변혁을 필연화하고 있다는 과학적 인식에 근거하는 노동운동을 말한다(전국노운협, 1990: 12, 42).

따라서 이들은 실천에서 “변혁적 입장과 관점을 견지하여 변혁노선의 정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본다. 즉 “독점자본의 대공장에서 전투적 대중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공장이 개량화되어 전투적 대중투쟁이 곤란하다는 등의 노사협조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또한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명분으로 합법적 의회정치를 정치투쟁의 무게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의회주의 역시 대중적 정치투쟁을 위력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배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적 모범을 세우는 가운데 변혁적 노동운동, 전투적 대중투쟁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동요하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전국노운협, 1990: 12, 42~43). 이런 점에서 이들에게 있어 전투성은 변혁성과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전투성은 개량주의와 노사협조주의를 배격하는 실천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개량적 실천’에 대한 ‘변혁적 실천’인 것이다. 다시 말해 전투성이란 “공공연히 변혁운동을 적대시하고 개량을 옹호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전국노운협, 1990: 12, 43). 결국 전노협의 “변혁적 노동운동 대오들은 단지 논의구조가 아니라 ‘투쟁의 대오’로서 묶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노운협, 1990: 12, 44).

지금까지 전노협에 대해 가장 많이 얘기되었던 수식어는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전투성은 전노협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념을 표현하는 데 부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원래적 의미의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로 표현되는 것이 보다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1980년대 민주노조 이념을 민주노조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변혁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라고 명명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를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라고 불러도 무

방향에도 불구하고 굳이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라는 담론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변혁적’과 ‘혁명적’이라는 담론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그러한가?

당시 활동가들은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를 명확하게 개념 정의 하지는 않았지만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라는 말 대신에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용어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혁명적’과 ‘변혁적’이라는 수식어 사이에는 어떤 거리가 있는가? 우선 양자가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즉 두 이념 모두 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약간의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는데, 우선 변화의 속도와 과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는 체제 이행의 속도와 과제에 있어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보다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변혁적 노동조합주의가 혁명을 긴급한 과제로 상정하기보다는 사회민주화와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를 현안의 과제로 상정한다. 이런 점에서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김세균의 “투쟁성과 정치성을 강하게 띤 변혁지향적 사회개혁노선”과 유사하다.¹⁴⁸⁾

둘째, 양자의 차이는 진위정당의 존재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 같은 맥

148) 김금수는 전노협 강령을 분석하면서 전노협의 운동이념은 “투쟁성과 정치성을 강하게 띤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다(김금수, 『한국노동운동의 과제와 전망』, 사단법인 덕산종합연구원, 1994). 이에 대해 김세균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출하고 있다: ‘노동조합주의’라는 용어는, 엄밀하게 말한다면, 노동조합운동만을 특권화시키는 노동운동에 대한 특정한 견해와 입장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런데 전노협 운동의 내부에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와 같은 특정 형태의 노동조합주의적 흐름이 강하게 흐르고 있었던 것은 부인될 수 없다. 그러나 전노협이 노동자계급의 정당으로의 조직화 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백한데, 이 점에서 전노협의 운동이념을 ‘조합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전노협의 운동노선을 오직 강령 분석에만 의거해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라고 규정하는 것 역시 전노협 운동의 총체를 옳게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객관적 조건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인해 강령에는 표현되지 못했지만—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지만, 그간 한국사회의 운동은 자신의 이념을 ‘노예적 언어’로써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 속에서 운동해야만 했다—실천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이념적 지향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전노협 노선 내지 운동이념을, 위의 규정을 빌려 표현한다면, ‘투쟁성과 정치성을 강하게 띤 변혁지향적 사회개혁 노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김세균, 1999: 3).

락에서 김동춘(1995: 25)은 한국의 학생운동을 혁명운동이라기보다는 변혁운동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혁명운동은 전위정당의 지도하에 계급대립의 관계를 급격하게 바꾸어 놓으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유석준·박병영, 2002: 186). 같은 맥락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주의가 전위정당을 전제로 해서 성립한다면,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전위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있는 노동조합주의를 의미한다.¹⁴⁹⁾

한편,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와도 차별적이다.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가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민주적인 사회적 협의들을 통해 사회개혁을 지향한다면,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사회적 협의들에 참여할 때조차 이것은 전술적 차원에서 고려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그람시(Antonio Gramsci, 1891~1937)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면 ‘진지전’을 추구하는데 그 진지전의 목적이 국가권력을 전복함으로써 체제 자체를 변혁하는 ‘기동전’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자본주의 사회 내에 개혁적 노동조합주의와 같은 실천의 양태를 떨지라도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노선을 자체 내에 담고 있는 노동조합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논쟁과 위기

1980년대는 논쟁의 시대였다. 논쟁의 화두는 “사회주의를 어떻게 실현

149) 전노협은 생디칼리즘에 기반한 노동조합주의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그렇게(전노협을 생디칼리즘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전노협 문화국장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 투쟁가를 자랑스럽게 불렀더니 외국 애들이 1910년대 노래풍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미국 노동운동사를 보면 이 시기는 IWW류의 생디칼리즘하고 맞물릴 수 있겠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전노협은 다른 돌파구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양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와 더불어서 그 같은 양상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인터뷰 D, 2004. 2. 25).

시킬 것인가”라는 것이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조직론 영역에서 모색되었다. 따라서 어떤 조직을 통해 사회주의적 실천, 즉 변혁에 이를 것인가에 이 당시의 논쟁의 핵심이 있다. 조직론 논쟁은 두 가지 범주와 두 개의 시기를 갖고 전개되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범주는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이었고 두 가지 시기는 1987년 이전과 이후이다. 대중조직은 주로 노동조합이었다면 정치조직은 정당이었다(표 4-4 참조). 한편 1987년 이전과 1987년 이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1987년이 민주화와 노동자대투쟁이라는 대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기 이후는 이전에 비해 조직론에 대한 쟁점 또한 다를 수밖에 없었다.

<표 4-4> 1980년대 주요 논쟁

범주	세부 범주	주요 쟁점
1. 초기 논쟁	1. 소그룹운동론 대 지역운동론	활동 단위가 소그룹인가 지역운동인가?
	2. 조합주의 대 정치적 노동운동	정치적 노동운동인가, 경제적 노동운동인가?
2. 1987년 이전의 조직 논쟁	1. 대중조직 건설론	노동조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혁명적 노동조합인가, 투쟁위원회인가 또는 민주노조인가?
	2. 전위조직 건설론	정치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즉각적 전위조직 건설인가 또는 전위조직 건설조건 형성인가?
	3. 정치적 대중조직(PMO)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정치적 대중조직인가, 아니면 전위조직과 대중조직의 분리건설인가?
3. 1987년 이후의 조직 논쟁 I	대중조직노선과 노동법 개정	복수노조허용-제2노총건설론 대 복수노조허용금지-한국노총민주화론
4. 1987년 이후의 조직 논쟁 II	1. 민주연합정당론 대 독자정당론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야당과의 민주연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중 주도의 독자정당을 만들 것인가?
	2. 혁명적 계급정당론 대 진보적 대중정당론	혁명적 계급정당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진보적 대중정당을 만들 것인가?
6. 노동운동 위기론 I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평가	전노협의 전투적 노조주의가 노동운동 위기의 주범인가?

가. 초기 논쟁: 소그룹운동론 대 지역노동운동론, 조합주의 대 정치적 노동운동

1) 소그룹운동론 대 지역노동운동론

소그룹운동론은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의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즉 이 당시 활동가들은 민중 속에서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조직이 무자비한 독재정권의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운동의 당면과제를 운동역량의 축적으로 설정했으며 전국적인 조직 구축이 아닌 소그룹활동을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소그룹운동론의 기본적인 관점은 노동조합을 만들 정도로 역량이 확보되었을 때 노조 결성이나 노조 민주화를 시도해야 하고, 이전에는 노조 이외에 다양한 조직형태를 시도하면서 소그룹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소그룹운동론은 소그룹이 친목적 소그룹에서 경제투쟁적 소그룹, 그리고 정치투쟁적 소그룹으로 질적 발전을 하고 이러한 소그룹이 확산될 때 자연스럽게 지역단위의 소그룹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홍승태, 1994: 121~122 참조).

실제 이 당시 활동은 거의 대부분이 소그룹활동이었다. “청계노조는 해산된 뒤에도 청계모임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갔고, 해고자들은 해고자들끼리, 순화교육자는 순화교육자들끼리,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 현장에서 소그룹을 만들어 조금씩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었다. 사실 이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1984년, 1985년의 왕성한 신규노조 결성투쟁과 임금인상투쟁이 가능했고 이후 구로연대투쟁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김승욱 외, 1989: 16).

한편, 지역노동운동론은 1980년대 중반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구로지역노조민주화추진연합,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등의 공개단체 및 지역투쟁위원회의 경험 속에서 소그룹과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인식 속에서 제기되었다. 이들이 보기에 소그룹운동론은 구태의연한 학습활동으로 개별노동자들을 인텔리적 노동자로 변모시키는 데 머물렀고, 소그룹조직과 학습을 우선시하고 조직보존논리에 빠져 투쟁을 회피하는 폐쇄적 소그룹주의에 빠졌다(홍승태, 1994: 122 참조). 즉 지역운동

론은 소그룹운동론을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고립 분산되어 있는 채 수공업적인 활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홍승태, 1994: 136). 실제로 소그룹운동론은 1983년 말 전개된 유화 국면과 노동운동의 성장·발전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가로막는 질곡이 되었다고 평가받는 경향이 있다(홍승태, 1994: 123 참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지역운동론은 투쟁의 성장을 위해서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개별사업자와의 일회적 싸움에 그치지 않고 그 투쟁 과정에서 올라오는 역량을 유실하지 않도록 조직화하면서 지속적이고 통일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지역조직(지역차원의 협의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홍승태, 1994: 136).

하지만 소그룹운동론과 지역운동론의 양 입장은 상황인식과 전략의 측면 등 상호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립되는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지역운동론도 초기 단계에서는 소그룹에 기초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소그룹운동론 또한 장기적으로 지역단위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운동론의 등장이 곧바로 소그룹운동론의 폐기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표 4-5> 소그룹운동론과 지역노동운동론의 비교

	소그룹운동론	지역노동운동론
상황인식(84~85: 유화국면)	탄압에 시각을 맞춘. 즉 부정적 측면을 중시	대중의 열기가 고양된 측면에 초점
운동역량 평가	아직 초기단계, 일상적인 활동형태는 소그룹활동	지역단위 활동가 그룹들이 협의체를 구성할만한 수준임
투쟁방법	투쟁의 사전준비역량의 축적 강조(노조결성투쟁시 이를 기준으로 평가)	사전준비부족으로 피해를 입는다 해도 고양된 분위기를 놓쳐서는 안 됨. 투쟁역량의 재생, 지속을 강조하면서 지역적 조직들 모색
지역단위노동운동	노동운동의 외연. 소그룹의 양적·질적 발전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남	노동운동의 외연이지만 소그룹에서 지역단위의 운동으로 옮겨가는 의식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됨

자료: 김종오(1988), 243~244쪽 참조.

소그룹운동론과 지역운동론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었다(홍승태, 1994: 136~137 참조).

2) 조합주의 대 정치적 노동운동

조합주의적 노동운동과 정치적 노동운동 간의 논쟁은 1985년 구로연대 투쟁(구로연투)에 대한 상이한 평가에서 기인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입장은 구로연투가 조합주의·경제주의를 넘어 정치적 노동운동의 전망과 지평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데 서로 동의하고 있었다.¹⁵⁰⁾ 즉 서노련과 인노련이 전형적인 경제주의·조합주의적 관점이라고 비판했던 ‘6월 노동자연대투쟁의 의의와 과제’(저자 미상, 연도 미상a, 이하 ‘의의와 과제’)라는 문건도, 구로연투의 의의를 “첫째, 선도적 정치투쟁에 의해 노동운동의 방향을 실천적으로 제시했고, 둘째,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적 틀이 제도적으로 극히 제약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적 역량의 성장에 의해 강력한 투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a: 201~202).

하지만 두 입장은 당시 노동조합의 역량과 역할에 대한 평가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의와 과제’는 “현재의 노동운동 역량으로는 아직까지 제도 밖의 대중운동 ‘틀’을 제대로 활용한 경험이 없고 당분간 새로운 운동들의 주요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여전히 노동조합은 대중운동의 주요한 틀”이라는 관점에서 서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구로연투가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적 틀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그보다는 대중적 틀을 충분히 활용할 만한 주체적 역량이 부족했다

150) 하지만 정치적 노동운동론자들은 조합주의적 노동운동론자들이 다음과 같은 의심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현 단계에서 그와 같은 정치적 스트라이크와 시위는 노동대중의 의식수준과 조직역량을 훨씬 뛰어넘는 것은 아닌가? 노동대중의 의식수준은 스스로의 경제적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만 대중적인 투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저급한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경제적 투쟁과 노동조합의 경시는 노동운동의 대중적 기초를 상실하게 하지 않았는가? 구로공단 노동자의 투쟁은 활동가의 관념적 급진성과 조급함, 그리고 성과주의적 오류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구속, 해고, 조직의 파괴 속에서 노동운동 내부에 패배주의와 좌절감을 심어 준 것은 아닌가?(김성훈, 연도 미상: 206).

<표 4-6> 조합주의적 노동운동과 정치적 노동운동 비교

	조합주의적 노동운동	정치적 노동운동
목표	근로조건 개선	민중의 해방, 정치권력의 민주화
역사관	상식적 역사관	변증법적 역사관
의식	시민적 권리의식	계급적 정치의식
학습	노동관계법을 학습	과학적 세계관 학습
투쟁	일상투쟁, 경제투쟁, 준법투쟁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
선전·폭로	법률위반사항, 노동력의 정당한 대가	경제적 폭로와 정치적 폭로 병행
조직	합법적 노동조합	합법, 범의노조, 지역조직, 지역서클 등(계급적 역관계에 따라)
연대	직업적 권익에 관련된 한에서 연대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

자료: 저자 미상, 연도 미상b: 237.

는 점”을 아쉬워했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a: 204). 이어서 ‘의의와 과제’는 이후 “노동조합을 중요한 대중적 틀로 삼아 대중운동을 전개해 나가야만 할 뿐 아니라 제도권 내의 노동조합 체계 밖에 준노동조합적인 새로운 대중운동 틀을 기업단위를 벗어나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a: 204).

이에 대해 ‘정치적 노동운동론자’들은 구로연투를 “정치적 과업과 시위”로 규정하면서 “노동자에 의한 사회발전의 필연성을 확신하며 그러한 사회발전의 역사적 대의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동운동에서의 정치적 투쟁문제가 핵심”이라 주장했다(김성훈, 연도 미상: 211~212). 더 나아가 이들은 구로연투가 “지역의 노동운동을 통합할 수 있는 정치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의 모든 역량이 이러한 조직을 준비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한 조직이 막연한 장래의 일로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모든 활동도 이러한 조직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할 수 있도록 분명한 목적의식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김성훈, 연도 미상: 211~212).

이처럼 양자의 차이는 정치조직에 대한 준비론적 경향(조합주의자)과 즉각적인 조직화(정치적 노동운동론자)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입장은 이 기회에 정치적 노동운동과 조합주의적·경제적 노동운

동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했다. 그들은 우선 준비론적 경향을 “노동자들을 단순한 경제적 동물로만 보는, 대중에 대한 잘못된 견해”(김문수, 연도 미상: 190), “물귀신”(저자 미상, 연도 미상: 231) 등으로 폄하하면서 적대감을 드러냈다.

한국 노동운동의 하늘을 뒤덮고 있는 조합주의의 검은 구름은 여전히 짓궂게 깔려 있고, 대다수 노동대중은 그 검은 구름 밑에서 찬란한 태양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오늘의 현실이다. 수많은 선의의 활동가를 오도된 길로 인도하는 조합주의적 노동운동의 환상에 대한 무자비한 폭로, 철저한 부정, 본의 아니게 대세에 휩쓸려 발들여 놓았다가는 발을 빼기 힘들게 만드는 이 조합주의 물귀신과의 피나는 투쟁, 이른바 한국의 노동운동이 수행해야 할 내부투쟁은 바로 이 조합주의의 청산투쟁이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 231).

이 입장은 조합주의를 앞의 <표 4-6>에서 보듯이 계급과 변혁을 거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의 세 경향으로 묘사하고 있다.

정치적 노동운동론자들은 이상의 평가에 근거하여 구로연투 이후 서노련(서울노동운동연합)을 조직했다. 즉 서노련은 스스로를 구로연투의 산물로서 대중정치조직임을 자처하면서 각종의 ‘가두투쟁, 점거투쟁, 지역연대투쟁’을 조직화했다. 그러나 서노련은 작업장 수준에서의 일체의 경제투쟁을 경제주의로 비판한 급진적인 선도적 정치투쟁을 전개했고, 결국 1986년 5·3 인천사태로 인한 정부의 탄압으로 해체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서노련의 와해는 “지도부의 대량구속과 수배라는 공권력의 탄압 때문이라기보다 선도투쟁으로 일관한 가운데 현장으로부터 철저히 유리된 선진활동가 중심의 조직활동 때문이라고 평가받았다”(임영일, 1989: 231 참조).

이상에서 보듯이 초기 논쟁은 경제주의적 노동운동인가 또는 정치적 노동운동인가라는 쟁점을 둘러싼 노동운동 조직 및 방향 모색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노조결성 또는 정치적 노동운동에 대한) 준비론적 경향을 갖는다면, 후자는 즉각적인 선도적 정치투쟁을 주장했다. 각각의

주장은 상대방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는데, 준비론적 경향은 조합주의·경제주의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고, 정치적 노동운동은 모험주의 또는 정치주의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 두 개의 경향은 다음에서 논의될 1987년 전후의 조직논쟁을 통해 보다 진전되었다.

나. 1987년 이전의 조직논쟁: 대중조직건설론과 전위조직건설론

1) 대중조직건설론

1987년 이전의 본격적인 논쟁은 대중조직노선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노동자 대중조직이 노동조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논쟁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또는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1985년 6월 구로지역 공동투쟁 이후 민주노조가 파괴된 후인 198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 건설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대별되는데, 첫째 노동조합이 비공개노조를 통해 합법노조로 가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이와 비슷한 맥락에 서 있는 혁명적 노동조합론, 둘째 전자의 입장에 가깝지만 대중조직의 형태를 반(半)합법·반공개 경제투쟁을 전담할 기구로 보는 투쟁위원회론, 그리고 셋째 노동조합이 대중적 정당성과 공개성을 얻어 명실상부한 대중 자신의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을 쟁취해야 한다는 민주노조론 등이 그것이다.

혁명적 노동조합론은 대중조직 논쟁의 시발점이 된 ‘지금 시기 우리들의 전술적 임무에 대하여’(전술적 임무)라는 문건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전술적 임무’는 처음으로 서노련과 인노련을 비판했는데, 당시 서노련과 인노련은 1985년 구로동맹파업 이후 동맹파업이 가능할 수 있었던 조직적 기초를 노동조합이 아닌 소위 ‘지역소조’의 존재에서 찾으면서 대중정치조직(MPO) 노선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술적 임무’는 노동운동에 있어서 대중조직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것의 출발점을 합법화를 지향하는 비공개 노조로 제시했다. 이처럼 ‘전술적 임무’는 합법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하면서도 정권의 탄압을 이유로 비공개 노조를 현실적인 틀로서 제시했다. 이 논의는 비공개 산별노조

론→혁명적 노동조합→자주적 노동조합론으로 제시되었다.

혁명적 노동조합론은 대중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이 입장은 대중이 근본적으로 혁명적이며 혁명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지도성과 대중성이 결합된 노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것은 개량주의 노조와 싸워 나가는 혁명적 지향을 가진 혁명적 노조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보기에 혁명적 노동조합은 민주적 제 권리를 쟁취할 뿐만 아니라 반제·반파쇼 정치투쟁을 지향해야 하고, 비합법, 반(半)합법조직, 개별사업장을 기초로 하고 지역수준에서 조직의 골간을 담보하는 조직형태를 가져야 한다. 이들은 구체적 건설방법으로 서클을 해체하고 활동가들로 혁명적 노조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투쟁위원회론(투위론)은 일상적 경제투쟁조차 합법성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반(半)합법 경제투쟁이 주요 투쟁형태로 되어야 하며 현재의 합법적 노조로는 투쟁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이들은 전투적 경제투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조직체계로 '투위'를 설정하고 그때그때 요구에 따른 '임시투위'가 단위사업장 내 적극적 대중투쟁의 반복된 수행속에서 '상설투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투위론은 이들 상설투위의 지역적 산별연합체인 지역노동자투쟁연맹을 구상했다.

혁명적 노조론은 노동자 스스로가 혁명적 노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해 활동가들이 노조를 만들어 줌으로써 노조는 활동가들의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민주노조론은 혁명적 노조론이 비공개 노조가 합법노조의 예비조직인지, 상당기간 지속될 대중조직의 한 형태인지 확실히 규정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합법노조를 건설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당면한 경제투쟁의 광범위한 수행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민주노조론은 혁명적 대중조직론이 정치투쟁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면서 그것을 노동자대중의 노동조합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노조를 좌경적으로 보는데, 이것은 오히려 당면한 정치투쟁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혁명적 노동조합론을 비판했다. 왜냐하면 현재의 대중의 요구 수준과 역량 정도에 비추어볼 때, 민주적 제 권리 이상을 뛰어넘는 정치투쟁을 조직화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어

서 이들은 혁명적 노동조합론의 비합법노조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공개적인 노조운동이 가능하지 않다는 그들의 판단은 잘못이며 역량 부족이라는 생각도 그러하다. 그 역량은 노조운동의 전체, 민중운동의 전체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민주노조론은 투위론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외세와 군사독재가 있는 속에서는 자주민주노조가 불가능하니까 치고 빠지는 강고한 의식으로 무장한 이런 활동가 조직이 필요하며, 대중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은 안 된다는 것(상설투쟁위원회론)에 대해 나는 ‘민주노조 가능’을 주장했다”(인터뷰 F, 2003. 8. 4). “선배가 투쟁이론을 들고 나왔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특수성 안에 보편성이 있다. 남의 나라에서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되는 것이고, 남의 나라도 안 되는 것은 우리도 안 되는 것이다. 노조는 가장 대중적인 형태다. 당시의 언어로 표현하는 대중의 신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군사독재 탄압을 너무 엄혹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지...”(인터뷰 A, 2003. 8. 29).

이러한 비판의 관점에서 민주노조론은 공장대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과 공장대중의 자주성을 높이는 것을 모든 공장 활동 속에서 통일적으로 관철되어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대중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는 대중적 공개성과 정당성, 이를 노조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법적 정당성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법이 바로 공개성과 정당성의 쟁취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혁명적 노조론자들은 민주노조론이 대중추수적인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즉 이들은 민주노조론이 노동자 대중조직을 노조라는 경제적 대중조직과 PMO라는 정치적 대중조직으로 분리함으로써 대중을 우경적 또는 좌경적으로 파악하여 대상화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대중조직 건설 논쟁은 노동조합의 역할(특히 정치투쟁의 수행 여부와 내용) 및 형태(비합법과 합법 또는 반(半)합법 여부)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상의 논쟁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인한 민주노조의 광범위한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종결되었다.

2) 전위조직건설론

1987년 이전에 전위조직건설론은 즉각적인 전위조직건설론과 전위조직의 형성조건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양자의 이러한 상이한 입장은 의식성과 자생성에 대한 관점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전위들이 지도할 것인가, 아니면 대중활동가들이 지도할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대충 이○○류의 대중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이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반면, 김○○류의 전위정당을 만들려던 사람들은 전위가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인터뷰 A, 2003. 8. 29).

두 개의 흐름은 또다시 각각 다른 입장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즉각적 전위조직건설론은 다시 전국적인 전위조직건설론과 지역적 전위조직건설론으로 대별되었으며, 전위조직의 형성조건을 강조하는 입장은 다시 ‘결의의 입장’과 ‘산개전’으로 나누어졌다.

즉각적인 전위조직건설론은 “러시아사회민주당 결성 방식의 소개에 영향을 받아 즉각적인 전위조직 결성”을 시도했다(홍승태, 1994: 151). 이들은 기본적으로 전위조직이란 항상적인 조직이며 전체 운동의 통일적 지도를 위하여 즉각 건설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위조직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은 제현의회소집론(CA)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당시의 시기를 ‘혁명을 예고하는’ 상황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전위의 형성조건을 강조하는 입장을 기회주의 또는 대기주의로 비판했다. 즉 전위역량의 성장·강화는 전위의 양성·강화를 목적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집단이 있을 때만 배출될 수 있으며, 전위조직이 자기를 확대시키는 ‘목적의식적’ 노력 속에서 하향식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전국적 정치신문을 통하여 당조직을 건설하고 당대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전국적 정치신문은 매우 중요한 실천방법이었다. 왜냐하면 전국적 정치신문은 실천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운동의 사상통일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배포망 자체가 전위조직의 건설망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의식성을 강조함으로써 혁명적 의식의 외부 주입에 매몰되었다고 비판받았다. 즉 대자적 계급이 될 수 있는 내적 조건을 무시

하고 전위의 선전·선동을 강조함으로써 목적의식적 활동과 자연발생적 대중투쟁의 상호침투 및 상호결합이라는 진리를 무시했다고 비판받았다. 실제로 이들은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즉각 건설론의 또 다른 주장으로서 지역적 전위조직건설론은 지역적 차원에서 전위건설(지역노동동맹)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민족민중혁명(NPR)론이 대표적으로 이 입장을 견지했다. 이 입장은 CA와 마찬가지로 일관된 공정시스템 속의 의식적·조직적 작업 속에서 전위조직이 건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단계의 역량에서는 전국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선진적 노동자와 강고하게 결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현재의 조직들은 지역 차원의 조직인 ‘지역노동자동맹’을 구축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들은 CA의 입장을 대중과 분리되고 역량에 대한 고려 없이 전위조직을 건설하려 했다는 점에서 교조주의적이고 소아병적인 급진주의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위조직의 형성조건을 강조하는 입장에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준비기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들은 “즉각적인 전위조직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한 그룹”으로서 당시를 “대체로 전위조직 건설의 사상적·조직적 기초를 닦는 준비기로 설정하고 대중노선과 대중조직을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홍승태, 1994: 151). 첫 번째 입장은 기존의 그룹들이 독자적 실천을 하면서 투쟁 속에서 선진적 그룹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점차 전위체를 향한 더 큰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이 입장은 지역 차원의 대중활동 지도체계와 정치사상의 지도를 임무로 하는 전위지도역량(지도핵심)을 처음부터 분리해서 사고(思考)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대중활동체계를 중심으로 놓고 노동조합의 경제투쟁과 지역 차원의 정치투쟁 및 선전·선동을 결합시킴으로써 전위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당면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위조직 건설의 모든 조건이 마련되면 분리되었던 양 조직체계를 결합하여 당 조직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준비론의 두 번째 입장은 흔히 산개전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NL 주사과가 주로 견지했던 입장이다. 이것은 당시 모든 서클을 부정했기 때문에

모든 서클이 해소되어 ‘정치소조’로 산개하여 기층대중조직 건설에 우선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금은 ‘혁명적 시기’를 대비하여 힘을 축적시켜 나가야 할 ‘준비기’임을 명심하자. 혁명의 참모부를 준비하고 광범한 노·농 대중을 그 주위로 결집시키며 각계각층의 애국민주역량들을 하나의 정치역량으로 조직하고 반혁명세력들을 고립, 약화시키며 대중투쟁 속에서 주체역량을 더욱 단련시키고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홍승태, 1994: 151).

이러한 준비기 속에서 전위조직 건설을 위해서는 사상적·조직적 기초를 닦는 것이 과제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 사회가 사상적 기초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회라고 평가했다. 즉 한국 혁명의 전통 속에서 한국의 혁명운동에 대한 지도사상과 혁명정신, 대중지도방법, 전략·전술 방침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이것은 분단된 나라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행운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사람이었다. 즉 이들이 보기에 대중과 호흡할 전위가 부족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개전은 서클주의를 부정하고 정치소조로 산개하여 대중 속에서 활동함으로써 진정한 전위인자로 성장하는, 즉 당조직의 골간을 아래로부터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개전은 “서노련 및 인노련의 정치주의적 경향을 비판한 나머지 대중추수주의적 경향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즉 이들은 “목적의식적 전위조직의 전망을 오히려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홍승태, 1994: 151).

3) 정치적 대중조직노선(PMO)

1986년 이후 노동조합의 정치투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직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크게 정치적 대중조직(PMO)이라는 독특한 조직을 내세워 해결하려는 입장과 전위조직-대중조직, 즉 당-노조라는 원칙적인 틀 속에서 해결하려는 입장으로 나누어졌다.

정치적 대중조직은 6월투쟁 속에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

런, 1987. 6. 26)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이것은 서노련과 인노련이라는 대중정치조직론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되었다. PMO론을 가장 먼저 제기한 ‘현 정세와 우리의 제 임무’(제 임무)에서는 서노련 및 인노련 등의 대중정치조직 노선의 오류를 전위적 지도의 배제와 대중조직과의 결합의 배제, 즉 ‘대중정치조직 만능주의’라고 보았다:

대중정치조직 만능주의는 두 방향으로 잘못을 범했다. 그 하나는 전위적 지도의 배제이다. 이들은 대중적 정치투쟁의 현실적 수행과 그것을 위한 대중정치조직의 확대발전 자체가 전위적 지도역량을 성숙시키고 노급대중을 혁명의 대열로 결집시킬 수 있다고 판단내림으로써, 전위적 지도역량을 성숙시킬 어떠한 의식적인 노력도 행하지 않고 경험주의로만 열심히 치달려 갔다.··· 또 하나의 오류는 조합적 대중조직과의 결합의 배제이다. 노급운동 전체의 발전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의 결여로 인해 그 시야가 대중정치조직 자체에만 머물러 조합적 대중조직과의 결합의 중요성은 철저히 간과되었다(저자 미상, 1986: 260).

나는 정치적 대중조직(1986년 RMO, PMO 등)에 반대하지 않았다. 인민노련, 서노련 등의 정책은 결국 자신들 역량을 소진하고 대중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기에 반대했다. 정치적 대중조직의 중요임무는 노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었다(인터뷰 A, 2003. 8. 29).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 임무’는 전위적 지도가 관철되고 대중조직과 긴밀히 결합된 ‘지역노동자정치투쟁위원회(정투위)’를 제시했다. 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아니 가장 가까운 장래에 대중조직-전위조직이라는 원칙을 현실화시켜 내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는 정투위로의 선진역량을 결집”하는 것을 의미했다(저자 미상, 1986: 261). 이를 위해 정투위는 정치선동, 대중투쟁(정치투쟁)의 조직화, 통일전선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표를 자기 역할로 상정했다.

이러한 정투위론은 ‘정치적 대중조직에 대하여’(이하 ‘대하여’)라는 문건으로 보다 구체화되었는데, 이 문건은 정투위 성격을 ‘투위’라는 일시적 조직이 아닌 지속적이고 완결적인 조직체로 보아야 하므로 ‘정치적 대중조직’이라고 부를 것을 주장했다. 이 문건도 서노련과 인노련에 대한 비

판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들 조직들의 구성원들이 조직 위상과 성격에 대한 합의(전위조직인가, 대중조직인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전위조직으로 자신을 규정했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관을 정치적 대중조직으로 제시했다.

‘대하여’에 의하면 정치적 대중조직은 운동상황과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조직의 보위력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우선, ‘대하여’는 운동의 발전으로 서클적 차원의 운동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선진 노동자의 양질의 발전, 학생 출신의 단련된 활동가, 모든 지역의 서클의 존재 등에서 보듯이 한국의 운동은 발전했으며 따라서 지역 차원의 통일적인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할 조직체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공개성을 가진 조직이 보위력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대중의 정치활동을 지도할 주체로서, 전위조직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반(半)합법 공간, PMO를 제시한다. 이것은 파쇼체제가 동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결집된 힘으로 정치투쟁을 수행할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현재의 역량과 상황의 특수성의 산물인 PMO는 영구적인 조직이 아니다. 즉 노동조합으로의 해소나 노동자계급의 합법적 정당으로 발전, 또는 통일전선과 전위조직으로의 해소, 분화 등 다양한 전망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보듯이 PMO는 애매한 조직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PMO는 정치적 결사에 불과하고 이것 역시 비과학적 허구적 개념이라고 비판받았다. 비판론자들은 우선 노동운동의 현 단계에 대한 견해를 달리 했다. 즉 활동가는 많으나 진정으로 혁명가적 덕성과 열정으로 무장한 활동가는 드물며, 소위 인텔리 활동가들이 집합된 각종 종파주의 서클로 운동이 사분오열되어 있으며, 이들로써 PMO를 만들 때 그것은 정치편향적이고 계급대중과 유리된 가두분자의 조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1987년 직전의 논쟁은 변혁을 위한 조직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그것은 노동조합과 정치조직(정당)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전자의 경우 노동조합의 위상과 관련하여 혁명적 노조, 투쟁위원회 또는 민주노조가 제시되었다면, 후자의 경우 건설시기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전위조직 건설과 전위조직의 형성조건 간의

입장이 대립되었다. 그리고 건설방법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조직 건설, 지역적 전위조직 건설, 산개전 등의 입장들이 대립되었다. 한편,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을 위한 독특한 정치조직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지역 노동자정치투쟁위원회와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의 미분화의 일시적인 조직형태인 PMO였다. 이상의 논쟁은 이후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현실에 의해 새롭게 규정되었고 구체적인 조직 건설을 둘러싸고 분화, 발전했다.

다. 1987년 이후의 조직논쟁(1): 대중조직노선과 노동법 개정

대중조직을 둘러싼 논쟁의 경우, 노동법 개정과 한국노총에 대한 상이한 태도에서 촉발되었다. 노동조합법의 복수노조금지조항(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의 개정과 제2노총 건설론은 서로 연관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두 논쟁은 모두 노동조합의 전국조직 건설에 대한 이견을 둘러싸고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논쟁은 복수노조 허용-제2노총 건설론과 복수노조 허용금지-한국노총 민주화론으로 대별될 수 있다.

우선,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의 복수노조금지조항¹⁵¹⁾의 철폐 여부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쟁은 일개 법조문 하나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성격을 보는 관점 및 그 토대 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전망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각 정파들의 논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이목희, 1989: 74). 논쟁의 기본적인 구도는 우선,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허용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허용할 것인가, 즉 상급단체만인가 아니면 단위노조를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따라서 세 가지 입장이 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복수노조허용, 허용 반대, 허용하되 상급단체만 허용.¹⁵²⁾

151)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 “노동조합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것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52) 마지막 입장은 소수설로서, 단위사업장은 단일노조, 상급단체는 복수노조로 하는 입장이었다. 이 입장은 특정한 단체나 정파의 입장이었다기보다는 첫째의

복수노조금지조항 유지론(유지론)의 경우, 오히려 1987년 노동법의 복수노조금지조항의 강화를 지지했다.¹⁵³⁾ 그렇다면 왜 유지론은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유지하려고 했을까?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들의 고민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가령 기업 차원에까지 복수노조체제가 허용된다면 한 기업 안에도 여러 개의 노조가 성립될 것이고 회사가 조종하는 노조도 생기게 될 것이다. 현재 노자간 역관계를 보았을 때 강한 단결력의 노조가 뿌리박혀 있지 못한 한 회사 조종의 노조가 득세할 가능성이 크게 된다. 특히 새로 조직되는 노조의 경우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또한 단위 노조든 상급노조든 복수노조체제에서는 분열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합당한 분열도 있겠지만 헤게모니를 둘러싼 분열이 보수·진보 양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게 될 것이다(한중구, 1989: 693).

이처럼 유지론의 논거는 복수노조가 노동자들을 분열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하나이듯 노동조합도 하나이어야 하는데, 둘이 된다면 분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컨대 유럽의 경우 다양한 이념별로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단일화시켜야 하며 차이를 수렴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인터뷰 L, 2003. 8. 14). 달리 표현해서 유지론은 노동조합이 “일국에 일중앙조직, 일산업에 일산업별 노조조직, 일기업에 일노동조합의 체계로 정비”되어야 하며 이것만이 “노동조합의 통일원칙”을 고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한중구, 1989: 693).

입장을 공유하면서도 단위사업장의 구체적 실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현장활동가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입장을 검토하지 않는다. 참고로, 이 입장은 이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주요 안으로 검토되었고 1997년 노동법 개정에서 채택되었다.

153)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조항을 둘러싸고 제2노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87년 법개정에서는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개정하였다(한중구, 1989: 692). 이는 복수노조 설립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2노총론자들은 이 조항을 노동법 개악의 대표적인 징표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 유지론은 기본적으로 한국노총에 대한 입장과 대중에 대한 믿음 때문에 복수노조금지를 지지하는 듯이 보인다: “한국노총의 태동이 전평을 통해 만든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만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어용노조든 민주노조든 좋은 노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노조가 있다는 것은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인터뷰 L, 2003. 8. 14). 이런 맥락에서 유지론이 보기에, 한국노총과 그 산하 노동조합의 경우 “어용노조가 아니라 어용집행부가 장악한 노조”이며 따라서 조합원들이 어용집행부를 교체한다면 이것은 “민주노조”가 될 수 있는데 조합원들은 그만큼의 의식과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합원은... 어용조합원이 아니라 분노와 한이 가슴속에 이글거리는 진취적인 노동자이므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거의 대부분 어용노조가 아니라 몇 명의 극소수 간부가 어용성을 갖고 있는 어용 집행부가 존재하는 노조라고 하겠다(강상호, 1988: 688)... 노동대중은 지금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어용집행부를 몰아내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진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강상호, 1988¹⁵⁴): 689).

따라서 유지론은 “어용집행부를 민주집행부로 변화시키는 내적 싸움”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수노조금지조항보다도 노동조합법 제26조 ‘총회소집권자’에 관한 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 그리고 총회와 대의원회의를 통한 민주적 노조 운영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았다(강상호, 1988: 690).¹⁵⁵⁾

이상의 유지론에 대해 복수노조금지조항 폐지론(폐지론)은 우선 복수노조가 노동자의 통일성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비판한다.

154) 강상호의 글 즉, 『복수노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글은 원래 『노워크 노페이, 노조대표권 시비, 그리고 복수노조 문제에 대하여』(『새벽』, 제2호, 석탑, 1988. 7)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것을 김용기·박승욱(1989)이 제목을 바꾸어 수록한 것이다.

155) 노동자들의 힘을 집약·집중시킬 수 있는 총회의 소집을 위원장과 행정관청에만 의존하게 만든(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에 의해 총회소집권자를 자주적으로 지명하도록 한다면 바로 합법총회를 개최하여 전 조합원의 뜻에 따라 집행부의 신임을 묻고 민주적으로 조합을 운영할 수 있다(강상호, 1988: 690).

‘하나의 틀’ 안에 있다고 해서 통일은 아니며, 둘·셋으로 나뉘어 있다고 해서 분열은 아닌 것이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본래의 목적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는가의 내용에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내부적으로 분열을 조장하며 외부적으로는 분열을 은폐하는 ‘하나의 틀’이 얼마나 취약하고 또 위험한 것인가를 알고 있다(임삼진, 1988: 674).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의 틀’은 “단일노조주의”를 유지하려는 한국노총을 가리킨다. 이들은 단일노조주의가 한국노총이라는 어용노조 타도에만 매달리게 하고, 결국 “대자본 및 대국가권력에 쏠아야 할 노동조합운동 역량을 대노동자 투쟁에 쏟도록 만들며 투쟁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도록 만든다”고 보고 있다(임삼진, 1988: 672~673). 이처럼 폐지론과 유지론의 결정적인 대립점은 한국노총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즉 폐지론은 한국노총의 역사성에 대해 불신하고 한국노총의 개혁가능성에 대해 회의하는 데 기초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그동안 ‘하나로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해온 일이 무엇이고 묻고 싶다. 분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4·13 호헌선언을 지지했던가. 그 뛰어난 단결력 덕분에 유신때는 유정회로, 5공화국에는 민정당으로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권익신장(?)이 가능했던가. 수많은 어용노조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산업재해로 수천, 수만의 고귀한 생명이 쓰러져 가고, 최저생계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이 판을 치고 있는가(임삼진, 1988: 672 ~673).

외세와 독재정권에 철저히 장악되어 있는 어용노조, 노동대중의 정치의식강화·정치투쟁역량 배양에는 등을 돌리면서 노사협조주의·반공주의의 선전장이 된 어용노조하의 통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통일을 위하여 잠시 동안 분열(?)하자는 것일 뿐이다(이목희, 1988: 664).

더 나아가 폐지론은 단일노조주의에 대한 ‘검열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즉 현행법에서는 “상급단체의 인준증을 구실로 기존 조직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직의 합법성 자체도 국가권력의 통제”에 있다. 예를 들어 사실상의 노동조합 허가제인

신고증의 교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임원개선 변경 신고, 규약 및 각종 결의 취소명령 등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¹⁵⁶⁾(임삼진, 1988: 669~670 참조). 결론적으로 폐지론자들은 유지론을 다음과 같이 조롱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단결력이 약화된다’는 말은 ‘지금까지 누려 온 유일 기득권이 도전을 받을까 걱정된다’는 의미이며, ‘산별노조의 난립을 가져온다’는 것¹⁵⁷⁾은 ‘권력과 자본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주적 산별조직이 만들어져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까 두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위선 대신에 솔직하고 당당하게 두려움을 표현하면 미움을 덜 살 것이라고 귀뜸해 주고 싶다(임삼진, 1988: 679).

이상의 논의 과정을 통해 폐지론자들은 기업별노조체계를 넘어서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산별 단일노조와 전국적 연합”을 추구하고자 했다(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1988: 683).

이상에서 보듯이 복수노조조향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복수노조에 국한되지 않았다. 즉 복수노조 문제는 다른 노동법 조항들과 연동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단위사업장 노조의 대표권 문제,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결성금지조항, 방위산업체 지정을 통한 노동운동 제한의 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이 당시의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했던 한국노총과 다른 지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노동정치의 구조와도 관련된 쟁점이었다. 하지만, 이 논쟁은 1년도 채 안 되어서 노동운동의 실천 속에서 저절로 종식되었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의 실천

156) 그동안 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싼 투쟁은 자본측과의 투쟁도 과제였으나 대부분 국가권력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기 위한 투쟁이었으며 합법성 쟁취는 곧 신고증 교부였었다. 청계피복노동조합 등의 지역노조와 사무금융노련의 투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최근의 삼성중공업 예에서 드러났듯이 노동조합이 여러 개 동시에 신고되었을 경우 사실상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지명할 권리가 행정관청에 부여된다(임삼진, 1988: 670).

157) 이들은 복수노조 난립에 대한 대책도 제시한다. 즉 “단위사업장에서 제2노조는 조직대상 노동자의 1/2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설립되며 조직대상 노동자의 3/4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유일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이복희, 1988: 664).

과정에서 진노협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조직이 성장해 가고 있었고, “제3조 5호는 철폐되어야 하며 단위사업장, 지역·업종 나아가 전국 차원에서 복수노조 건설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었기 때문이다(이목희, 1989: 74).¹⁵⁸⁾

이상에서 보듯이 복수노조 존재 문제는 노동조합의 조직화 논쟁과 연동되어 있었고, ‘노총민주화론’, ‘제2노총론’, ‘노총붕괴론’ 등으로 정형화되었다. 노총붕괴론 또는 노총외해론은 노총민주화론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노총민주화론과 제2노총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노총민주화론자(민주화론)들은 한국노총의 민주화가 허구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논의를 전개한다. 이들은 우선 제2노총 건설론의 입장, 즉 “한국노총이 미제와 파쇼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고 노동대중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통제조직인 이상 노총을 민주화한다는 발상 자체가 허구적”이라는 입장을 비판한다. 민주화론은 한국노총을 “반공연맹이나 경찰조직과 같은 파쇼적 통치기관의 하나로 보는 것은 근본적인 오류”라면서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사실 군부독재의 통제로 말한다면 반민족민주세력의 독재가 행하여져 왔던 그동안 합법적인 단체치고 군부독재의 통제를 일정 정도 받지 않았던 조직이 어디 있는가?”

이들에 의하면, 한국노총과 그 산하 연맹은 “반공단체나 경찰조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노동조합조직”으로서 “기업 및 산업을 단위로 조직된 노동자대중에 기초한 대중조직이며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조직”이다. 그리고 “임원이 노동조합의 내부 규약에 의해 하부 단위 조직으로부터 선정된 대의원에 의해 선출된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아직 미약하여 노동조합(특히 그 상층부인 노총·연맹)에 대한 군부독재

158) 한편, 이상의 논쟁들은 각 논자들의 이념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당시 노총민주화론을 고수했던 사람들은 주로 NL계열의 활동가들이었다. 이들은 서울에 밀집해 있었던 사무직노조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초창기 사무직노조들에 대한 교육을 주로 담당했던 단체들을 보면 석탑노동연구원, 한국노동교육협회, 우리노동교육연구소 등이었고, ‘주간전국노동자신문’의 영향도 컸다고 지적된다(김승호, 2004 참조). 반면 제2노총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PD계열의 활동가들로서 이들은 비타협적이고 독자적인 조직화를 주장했다.

의 지배·간섭”을 받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준비 정도가 높아지고 노동계급의 의식적·조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노총·연맹의 성격도 변화가 초래되고 군부독재나 독점재벌의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력 역시 이완·후퇴”하게 될 것이다(한종구, 1989: 694).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노총민주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제2노총론은 민주화론과 달리 한국노총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한국노총의 어용성은 그 생성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층부가 노동귀족으로 채워져 있다는 따위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외세와 독재정권의 지배와 조정 아래 존재하는 정치경제적 구조의 문제이다”(이목희, 1988). 이러한 구조하에 한국노총은 국가권력기관에 의해서 통제되는 허수아비일 뿐이며 넓은 의미의 국가권력의 일부이고, 운동노선은 조합주의이나 노사협조주의가 아닌 투항주의, 즉 노동자들을 팔아먹는 조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노총의 존립 근거인 단일노조주의에 대한 철폐투쟁에 집중하고 한국노총 타도의 대안으로 한국노총에 대항하는 새로운 전국조직체의 건설을 제기했다.

노총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제2노총의 건설을 반대하는 주장은 사실상 ‘꿈’에 불과하다.… 문제는 민주화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그들과 결별하는가 하는 것이다(물론 결별 후에 ‘제2노총’이 될 필요는 없다. ‘민주노총’과 ‘어용노총’이 있을 뿐이다)(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1988: 682).

이상의 노총민주화론이나 제2노총론이나 의 논쟁에서 ‘새로운 조직 건설’ 쪽으로 결론이 나고부터는 ‘협의체나 연맹체나’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전되었다. 협의체론은 새로운 전국중앙조직을 어떻게 건설하여야 ‘어용 한국노총’에 소속하지 않고 있는 광범위한 신규노조들과 앞으로 건설될 노조들이 전부 모일 수 있겠느냐에 초점을 두었다면, 연맹체론은 전투성과 자주성을 견고하게 담보할 연맹체를 건설하여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양자는 모두 당시의 권력과 자본에 의하여 가해지고 있었던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극심한 탄압 상황에 어떤 조직을 갖고 대응할 것인가를 핵심

논점으로 삼고 있었다. 그 점에서 협의체론은 연맹체 건설을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었고, 연맹체론은 협의체로서는 허약하다고 보았다(산별노조운동 연구팀, 1999). 결국 이 논쟁은 ‘협의체’인 전노협 건설로 수렴되었다.

라. 1987년 이후의 조직논쟁(II): 합법정당 건설 논쟁

민주화대투쟁 이후 민중운동진영에서 정치운동은 합법적 정당 건설로 나타났다. 민중의당, 한겨레민주당, 민중당, 한국노동당 창준위, 통합민중당 등은 진보진영의 이러한 실천의 표현이었다. 기존의 민중운동이 노동현장의 진입이나 서클 수준의 비합법 정치운동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분명 민중진영의 새로운 시도였다. 여기에서는 민중당을 둘러싼 두 가지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민중당은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중당은 분단 이후 수없이 명멸한 또 하나의 야당이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민중이 직접 건설하는 최초의 진보정당이다... 민중당의 주인은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어민, 도시서민, 여성, 중간계층, 중소기업인 등 민중 자신이다... 민중당은 야합과 부정으로 더럽혀진 정치사를 바로잡아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위력적인 대체세력으로 성장할 것이며, 민중당의 앞날을 방해하려는 국내외의 반민중적 세력의 탄압을 뚫고 찬란한 노동해방, 민중해방의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 민중과 함께 나아가고 투쟁할 것이다(민중당 창당선언문, 1990. 11. 10; 강조는 연구자).

이상의 선언에서 보듯이 민중당은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민중들의 대변기관으로서 제도권 보수정당을 ‘대체’하는 대안 세력임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민주연합정당론과 독자적 진보정당론 간의 논쟁”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계급정당(또는 혁신정당)이 아닌 진보정당, 노동자계급이 아닌 민중,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노동해방, 민중해방” 등의 개념은 민중당의 성격을 모호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또 다른 논쟁, 즉 “민중당과 한국노동당 창준위 간의 논쟁과 이들간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이들의 표현처럼 “한국전쟁 이후 민중이 건설하는 최초의 진보정당”이라는 이와 같은 생소한 시도는 다양한 논쟁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논쟁, 즉 민주연합정당론 대 독자정당론과 혁명적 계급정당론 대 진보적 대중정당론의 논쟁에서 잘 드러난다.

1) 민주연합정당론 대 독자정당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표출되었던 민중진영 내의 이견은 정당건설문제를 둘러싸고 1990년대에 재연되었다. 이 논쟁의 장은 전민련이었는데¹⁵⁹⁾, 정당운동 추진론자들이 논쟁을 주도했지만 표결에서는 패배했다. 결국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전민련을 탈퇴하여 정당 건설 작업에 착수했다.

첫 번째 논쟁은 전민련 제2차 정기중앙위원회(1989. 9. 15)에서 있었다. 이때 상이한 의견의 두 가지 문건이 제출되었는데, ‘전민련과 합법정치전술’과 ‘현 시기 정치정세와 합법정당 결성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전자는 현 시기 합법정당 건설을 시기상조라고 보고 전민련의 조직적 강화를 주장한 반면, 후자는 합법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당 건설을 촉구했다.

159) 정당 건설에 대한 전민련 내부이견은 다양하게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향후 정당 건설의 방법과 경로 및 목표 설정, 통일전선운동에 대한 이해 및 통일전선운동의 발전 전망과 전민련의 임무 등을 둘러싸고 크게 4가지 입장이 존재했는데, 전민련 내의 내부토론(1990. 2. 19)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1안-전민련, 즉 통일전선체 내에 ‘(가칭) 정치위원회(=민주연합정당추진위원회)’를 두고, 민족민주운동 내의 정치지향역량을 결집시켜 내야 한다. 이를 통해 반민자당 진영 내에 단일 야당(민주연합당)을 구축해 내야 한다. 제2안-전민련에 민족민주정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급 기본계급 대중단체 및 진보적 지식인 중간층 조직에 민족민주정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보적 대중정당 준비모임과 민주적 개별 인사를 포괄하여 공개 정당의 추진 주체를 꾸린다(각급 조직의 정당추진역량을 결집한다). 제3안-전민련은 진보적 대중정당 준비모임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당 건설을 적극 지원, 지지한다. 제4안-전민련, 즉 통일전선체에 민족민주운동권의 단일 혹은 유일정당을 추동해서는 안 되고, 전민련을 구성하는 각 계급과 정파에게는 각각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정당적 진출(합법/반합법/비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족민주운동권의 일부가 어떤 정당을 결성하든 반대하지 않으나 동시에 전민련 혹은 민족민주운동은 전체의 이름으로 그 결성을 결의하거나 지지해서는 안 된다(『민족민주운동의 정당운동에 대한 전망과 방침-전민련 내의 토론 요약』, 일송정 편집부, 1990: 122~129).

이 입장에 있었던 논자들(이우재, 장기표, 조춘구 등)은 자신들의 안전이 부결되자 전민련을 탈퇴하여(1989. 9. 26) ‘진보정당준비모임’을 결성하였다.

두 번째 논쟁은 집권여당과 야당의 3당 합당(1990. 1) 이후 정당사업의 승인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제20차 전민련 중앙집행위원회(1990. 2. 20)는 내부토론과 표결을 통해 정당활동을 긍정하는 동의안(『민족민주운동의 정당사업에 대한 전민련의 입장』, 1990. 2. 20)을 제2기 대의원대회(1990. 3. 3)에 제출했지만 이 안 또한 부결되었다. 이것은 민중정당 건설론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였고, 결국 전민련이 정당 건설의 기지가 될 수 없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우리는 합법정당 창당 과정에서, 아니 우리 운동의 전반적인 발전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987년 10월 13일 민통련의 ‘김대중의 비판적 지지선언’과 함께 민중운동의 2대 최악으로 남을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이후 합법정당 건설운동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후 민중운동의 분열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제 갈 길을 가라, 남이야 뭐라든”(유건하, 1990: 211~212).

이 안을 지지해 온 정당활동추진 활동가들(이부영, 이재오, 이익구 등)은 전민련을 탈퇴했으며, ‘진보정당준비모임’ 등과 함께 ‘민중의 정당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연추, 1990. 4. 13)를 결성했다.

그렇다면 논쟁의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민중진영이 “독자정당”을 “지금, 당장”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상이한 판단에 있었다. 이견그룹은 “민주연합당론”(또는 정당운동불요론)과 “민중정당론”(또는 독자정당론)으로 범주화되었는데,¹⁶⁰⁾ 전자는 야당과의 연합을 통해 민주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했다면, 후자는 민중세력이 주체가 되어 즉각적인 독자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이견은 상이한 철학, 정세분석, 실

160) 민주연합당론과 민중당론이라는 용어는 『조직노선 3』(일송정 편집부 엮음, 1990)을 따랐다. 이 책에는 두 논쟁에 대한 문건이 다수 실려 있다.

<표 4-7> 민주연합당론과 독자정당론 비교

		민주연합정당론	독자정당론
정세관	대립구도	민주 대 반민주	보수 대 진보
	주요모순	민족모순(NL 경향)	계급모순(PD 경향)
	민중역량	취약, 야당과 연합을 통해 극복	역량성숙,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로 극복
전략 전술관	야당관	연합세력	극복세력
	연대범위	민주연합세력(민족민주세력 + 야당)	진보정당 중심의 계급연합세력
	변혁경로	개혁	민주변혁
정당관	정당성격	야당과의 연합으로 역량강화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우선
	민주연합 정부	민주연합정부 수립이 과제	민주연합정부, 민중권력도 가능
	정당위상	반민자 민주세력연합정당	노동자계급중심의 계급연합정당
상대비관	합법공간에 진출함으로써 개방화 민중의 낮은 역량을 과대평가 한 주관주의자, 시기상조론	국민적 명분으로 무장한 프티 부르주아지적 정치운동	

천방식, 야당에 대한 태도 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표 4-7 참조).

두 입장은 활동가들이 상이한 이념적 지평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체적으로 민주연합당론의 입장에서 있었던 정파가 NL이었다면 PD는 민중정당론의 입장에서 있었다. 두 정파는 1987년 대통령 후보 문제를 둘러싸고 이미 뚜렷한 입장 차이를 갖고 있었다. 즉 당시 비판적 지지론은 학생운동의 NL 다수파(NL 우파), 민통련, 민청련 등이었고 후보단일화론은 학생운동의 NL 소수파(NL 좌파),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 등이었다. 그리고 독자후보론은 학생운동의 CA노선, 인노련 등이었는데, 이후 CA는 내부 분화를 거쳐 한쪽 그룹은 NL로, 다른 그룹은 PD로 전환했다. 이후 이들은 정당 건설을 둘러싸고 야권통합 또는 민주대연합론¹⁶¹⁾과 독자적

161)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선언하면서 조직이론적 틀을 형성하게 된 NL은 그 후에도 야권통합과 민주연합당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평민당에 입당한 다수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NL은 재야 민주화운동 세력과 학생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민중당 창당에 대해서는 시기상조

진보정당건설론으로 갈등을 재연했다(박병상, 1997: 126 참조).¹⁶²⁾

우선 민주연합정당론과 민중정당론은 사회구성체 및 정세 판단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상이한 전략 및 전술관을 갖고 있었다. 우선 민주연합정당론은 NL의 입장에서 있는데 그들에 의하면,

현재의 정세는 미-노정권이 국내외적으로 친미파쇼체제의 영구집권 음모를 본격화하고 있는 엄중한 정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족민주 세력의 기본 침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진보-보수’를 한국사회의 기본적 대립구도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반민주’의 대립구도를 중심축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이며 여기에는 한국사회 성격에 대한 견해 차이—즉 한국자본주의가 외세의 영향 없이 독자적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가, 외세지배하에서 왜곡된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는가—가 내포되어 있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 131).

이처럼 민주연합정당론은 한국사회를 외세의 지배에 의한 식민지사회로 보고 있고 현 정권을 미국의 대리통치 세력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계급적 관점보다는 민족적 관점에서 ‘민주대연합’의 전략 및 전술을 고려하고 있다.

식민지사회에서는 단일한 계급적 요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

또는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박병상, 1997: 125~126).

162) 다른 한편, 한국사회 성격을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이해하는 데는 PD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당면 사회변혁의 성격에 대해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BDR)을 주장하며 PD와 견해를 달리하는 민족민주파(ND)도 민중당 창당에는 비판적이었다. 이들은 주로 『노동해방문학』이라는 잡지를 통해 이론적 논의를 진행시키면서 변혁운동진영 내의 정파 형성을 과거에는 NL-CA 구도였지만 현 시기는 NL-PD-ND(CA)라는 3파전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PDR론을 교조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ND는 민중당 창당의 주체세력들에 대해 프티 부르주아 세력이라고 비판하고 합법정당은 민족민주혁명 단계의 ‘전략적 관점’과 ‘정세의 관점’에서 동시에 요구되는 조직으로서 반합법 민중운동단체와 비합법 노동자계급 전위조직과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민중당을 비합법 전위조직에 의해 움직여지는 사실상의 합법정치전술의 공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민중당 창당의 주요 세력들과는 일치될 수 없는 또 하나의 노선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박병상, 1997: 127).

족적 요구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역량을 통일·단결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가 되며... 그 활동방식도 합법에서 비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된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c: 139). 한국사회 민주변혁의 기본 대립전선을 자주·민주·통일 대 예속·파쇼·분단 세력 간의 대치선으로 보고 현 시기 주요한 대립전선은 민자당(반민주연합세력) 대 민주연합세력(민족민주세력+평민·민주당)의 대립전선이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d: 144~145).

여기에서 민주대연합은 핵심적인 사회변혁 또는 개혁의 전략이다. 민주연합의 주체는 “민자당 해체와 노정권 퇴진, 민주정부의 수립”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의 “단일한 투쟁대오”를 의미한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c: 131). 그리고 이 세력 내에서 민중세력은 블록을 형성해야 하는데, 이 민족민주운동 블록의 위상과 성격은 “첫째, 전체 민주연합전선 내에서 반합법전선체(전민련, 국민연합)를 확대·강화시켜 내는 상층 정치연합의 선도체로서, 둘째, 반합법전선체와 기층대중운동역량의 힘에 의지하여 민족민주운동의 대의와 원칙을 제도정치 공간까지 확대·강화시켜 내는 현 시기 민진진영의 합법정치역량의 결집체이고, 셋째, 반합법전선체가 포괄하지 못하는 국민대중을 민진영의 주위에 묶어 세우는 의식화·조직화의 무기이며, 향후 민족민주대중정당 건설의 교두보”로서의 위상을 갖는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d: 145).¹⁶³⁾

한편, 민중정당론자들은 민주연합정당론자들의 민주대연합 전략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민중정당 건설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들은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당을 추구하는데, “민연추가 건설하려는 민중정당은 민중민주주의를 자신의 이념으로 하고 그의 현실을 위하여 투쟁하는 합법

163) 이처럼 민주대연합에서 민중운동진영의 중심으로서 전민련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즉 전민련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는 민족민주운동의 정치부대 역할로 각급 대중조직에서 고립적으로 답아 낼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집중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는 기층민중투쟁을 지지, 엄호하며 민중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셋째는 상층 통일전선을 ‘민주연합’방침을 기본으로 해서 매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주적 대중조직과의 형식적 결합을 앞에 내세워 당면한 사업에 혼란을 초래함이 없이 현재 주어진 임무를 중심으로 자신의 역할을 높여야 할 것이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c: 143).

정당이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 149). 이들은 기존 보수야당이 민주주의의 요구를 실천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이 보기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중정당의 창설을 가능하게 할 만큼 민중의 주체적 역량이 성숙되어 있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 152).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우선 민주연합이 핵심적인 주체로 상정한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한다:

지금 평민당은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법정당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우리의 생각도 그와 같소!라고 외칠 겁니까, 아니면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평민당은 미국을 비판만 하고 반대는 하지 말자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외칠 겁니까? 평민당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외칠 겁니까, 아니면 민중권력을 세워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대답은 자명하며 결론은 명백합니다(유건하, 1990: 217~218).

광주항쟁 10주년에 펼쳐나선 민중에게 비폭력·시위 자제를 설교하고 노태우에게는 12·15 여야 대타협을 상기시키며 지자체 선거의 실시를 촉구하는 김대중의 모습을 보라! 민중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이것이 보수야당의 현실이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 150~151).

한편, 이들은 민주연합론자들의 야권통합운동을 “큰 구상”과 “작은 구상”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비판하고 있다. “큰 구상”은 평민당과 민주당 그리고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민주연합정당” 결성으로서, 지분은 각각 4:4:2를 갖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작은 구상”은 기존 보수야당을 선명야당 또는 참신한 야당으로 바꾸는 것이다. 민중정당론자들에게 있어 민주연합론자들의 이러한 야권통합 구상은 모두 “자신들의 힘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꿈”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우선 야권통합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보수야당인데 그들이 실제로 야권통합을 이를 마음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재야가 이것을 실현시

킬 힘이 있는가? 없다. 통합은 정치적 실체간의 문제인데, 우선 재야의 통합과가 통합의 당사자로 나설 만한 정치적 실체로서 조직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야권통합의 문제로 대중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가? 없다. 그것은 민중의 투쟁을 희석시키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저자 미상, 1990: 157).

따라서 민중정당론자들은 야권통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한다. 즉 “현재의 시점에서는 보수야당이 민중민주주의를 전혀 수용하지 않을뿐더러 민중을 정치의 들러리로 삼고 있으며 기회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이고 결과에 있어서는 반동적이기조차 한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의 정치적 역량이 충분히 조직되지 못하여 보수야당들에 의해 과소 평가되고 심지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세 판단에 따라 민중정당론자들은 결국 야권통합론자들이 뿔뿔이 투항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큰 구상이건 작은 구상이건 간에 이른바 ‘야권통합운동’의 귀결은 평민,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낙착되어 (정치 블록을 형성한다는 명분으로) 제2의 평민연이 되거나 아니면 새 야당운동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위 야권통합운동이 궁극적으로는 ‘정계 진출의 창구’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다(저자 미상, 1990: 159).

민중정당으로 가서 공생하기는 싫고, 좀더 쉽게 의회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분들, 전민련의 일부나 전대협 등의 프티부르주아적 대중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합법정치’에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분들, 그러나 기왕에 ‘민중정당 시기상조론’으로 정당운동을 부정한 바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채워져 버린 족쇄를 풀고 싶어하는 일부의 ‘비관적 지지’파들,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나서기 위한 ‘명분축적용’으로서 야권통합운동이 이용될 수도 있다(저자 미상, 1990: 160).

더 나아가 이들은 야권통합운동이 과거의 후보단일화운동보다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즉 대통령후보 단일화운동이 “그 자체로서 민중의 요구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연합의 주요한 방도”였지만 현재의 야권통합

운동은 “민중운동의 독자성을 애초부터 유린하는 (실제로는 흡수통합론 이므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민중의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자 미상, 1990: 159).

결국 민중정당론자들은 야권통합론자들의 사상성을 의심한다. 즉 이들이 보기에 야권통합운동이 “국민적 명분으로 포장한 프티부르주아적 요구”이며 이런 점에서 “소위 야권통합운동은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에게 봉사하는 프티부르주아 정치운동”이다(저자 미상, 1990: 160).

결국 노동자계급의 관점과 입장에 서느냐, 아니면 프티부르주아적 관점과 입장에서 서느냐, 다시 말해서 프티부르주아적 민주연합정당이나, 노동자적 민중정당이나, 이것이 문제이다(저자 미상, 1990: 161).

하지만 이들은 단일야당으로의 통합 움직임에 외면하지는 않는다. 그 방법은 “우선 민중정당이 민중을 강력하게 조직하고 민중의 투쟁성, 실천성을 이끌어 내는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 “정당의 결성·과정이나 결성된 이후에도 반군부독재 민주연합전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중의 힘을 배가하여 보수야당이 전선에 들어오도록 강제”한다. 따라서 이들이 볼 때 “민중정당의 창당과 야권통합이 전혀 모순적이지 않으며 창당을 통한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가속화와 당면 반군부독재 투쟁속에서 민주연합전선의 형성·강화가 야권통합”의 현실적 방안이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e: 155). 이런 점에서 볼 때 야권통합이 가능한 경우는 “첫째, 민중의 정치적 역량이 강화되어 모든 민주적 야권세력들의 통합을 힘으로써 강제할 수 있을 때, 둘째, 현 정권의 반동화가 더욱 노골화됨에도 보수야당만으로는 이를 저지할 수 없고 이에 보수야당이 민중의 편으로 기울어 연합을 요청해 올 때”이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e: 154~155).

이제 민중정당론자들은 반대파의 자신들에 대한 비판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우선 이들은 ‘민중정당의 건설을 반대하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묻고 이를 ‘비판적 지지파’¹⁶⁴⁾, 무정부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

164) 가장 맹렬한 반대자들로 소위 ‘비판적 지지파’가 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걸고 있으나 결국 평민당에 투항해 있는 소부르주아 우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평민당이야말로 민중정당이 출현하면 정치적 입지와 존립의 명분을 잃게 된다). 그들은 대통령 선거투쟁에서 범한 역사적 과오를 근본적으로 반성하지

람들, 그리고 경제주의적 노동운동가¹⁶⁵⁾ 등 세 가지 부류로 쪼갠다. 그리고 이들의 비판의 논리를 크게 ‘민중정당의 개량주의화를 우려하는 것’과 ‘민중의 낮은 역량’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역비판한다. 우선, 민중정당의 개량주의화 가능성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 우려는 매우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전민련이나 전국노총협, 전노협의 개량주의화에 대해서는 왜 전혀 우려하지 않는지 이상한 일이다. 실상에 있어서 전노협은 말할 것도 없이 전민련이나 전국노총협에도 ‘객관적’ 개량주의자들이 득실대고 있는데도. 그로부터 우리는 그들의 우려가 특별히 심오한 것이 아니고 합법활동과 선거투쟁 등 정치활동의 주요한 영역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김철순, 1989: 135~136).

다음으로 민중의 낮은 역량으로 인해 진보정당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민주연합당론자들에 대해 민중정당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우리는 민중운동의 역량 발전이 낮은 수준에 있음을 그들 못지않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열망하는 민중의 에너지를 조직화하지 못한 데 있다. 어떻게 하면 민중운동의 역량을 최단시간에 강화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대중을 운동에 참여시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민중정당은 “대중의 참여의 길을 열기 위한 조직형태의 하나이다”(김철순, 1989: 136 수록).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새로운 조직형태로서 민중정당의 타당성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지도 않고 시기상조론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낡고 구태의연한 활동방식에 매달려 운동을 여전히 ‘운

않고 지금도 전민련의 상층부 등에서 평민당의 정치적 이익을 열심히 대변해 주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온갖 기기묘묘한 논리는 결국 평민당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김철순, 1989: 134~135).

165) 경제주의적 경향을 가진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노동자의 계급의식이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을 발전시킬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들은 항상 노동조합운동에 대중의 관심을 묶어두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점에서 사실 그들은 민중정당 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민중정당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다(김철순, 1989: 135).

동가'들의 독점물로 남겨 놓고 대중의 참여를 가로막고자 하는 자들이 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활동방식(이른바 반합법적인 활동방식)에 익숙하고 거기에 몸이 젖어 새로운 활동방식을 연구하고 개발하려 하지 않는다”(김철순, 1989: 136~137).

이러한 비판은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간다. 이들은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두 가지 이유, 즉 “노동조합운동의 지도역량도 부족한 판에...”와 “아직 전노협도 꾸리지 못하고 있는데...”라는 이유를 들어 정당 건설을 반대한다고 보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전자는 “지도역량의 부족 문제”이고 후자는 “대중역량 부족의 문제”인데 사실 이미 “노동운동이 현직 노동조합 간부, 지도자들 이외에도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했고, 대중역량 부족의 핵심은 “대중의 잠재역량을 충분히 조직, 동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정당이 오히려 대중정당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철순, 1989: 137). 더 나아가 이상의 대중정당에 대한 비판이 조합주의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과 단련을 위한 훈련소이다. 그러나 훈련소를 거친 사람에게 현장이 없고 전쟁터가 없다면 훈련소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민주정당을 통한 정치활동은 정치투쟁의 한 전선이다. 따라서 전선에서의 실전을 피하고 그것을 유예하면서 노동조합운동만 열심히 하자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조합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김철순, 1989: 137~138).

민주정당론자들은 이상의 인식에 기반하여 민주연합당론을 “프티부르주아 정당운동”으로 규정하고 “야권통합운동의 반민주적 성격을 폭로하고 그 도덕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비판”해서 이를 “과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저자 미상, 1990: 162).

이들은 자신들의 비판의 무기를 보다 세련화하는데, 우선 반민주(민주당) 대 민주(민연추·국민연합/평민·민주)라는 전선관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들이 보기에 현실의 대립구조는 “과시즘적 반민주 집단과 절충적·기회주의적 중도개혁세력과 민중의 3정립구도”이며 “보기에 따라 민주 대 반민주, 민중 대 반민주이라는 대립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전선을 민주 대 반민주라는 대립으로 단순화시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민중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개량화시키고 오히려 반민중적 세력과 야합을 밥먹듯이 하는 보수야당이 항상 무조건적으로 민주의 편에 설 수 없다. 즉 현실의 대립구도를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로 만드는 데는 민중의 강력한 주도하에 중도개혁세력을 민주진영에 확실히 묶어두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 152).

민중정당론자들은 또한 민중정당이 민주연립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고 그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민중정당은 민주연립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하거나 그것의 수단이 아니다. 민중정당은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통해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 153).

더 나아가 민주연립정부의 수립이 민주연합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실사 민주연립정부의 수립을 당면의 또는 특정한 시기의 목표로 한다 할지라도 민주연합당을 통해서만이 민주연립정부가 수립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연립정부는 민중정당이 독자적으로 창당·강화되는 과정에서 구체적 시기에 연합공천을 하든 단일후보를 내든 하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 153). 그리고 독자적인 민중정당의 건설이 지배계급의 거대여당, 지역야당, 군소혁신정당 구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민주연합당론의 비판에 대해, 이것은 “현재의 야권분열의 책임이 민중에게 있다고 보는 반민중적인 태도”이다. 야권분열의 실질적인 책임은 “자신들의 지분확보에만 연연해 하는 그들”에게 있으며 “강력한 야권의 통합은 민중의 정치역량의 강화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대응했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 154).

이상에서 보듯이 민중당은 기존의 정당체제를 보수정당체제로 인식하고, 보수정당체제에 대응하는 진보정당으로서의 민중당을 진출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라는 새로운 정당체제를 형성시키고자 했다. 즉 보수와 진보의 새로운 균열구조는 계급균열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중당은 정치구조를 계급균열구조로 전환시키고자 했다.

민주연합론자들은 이러한 민중정당론에 대해 “정치세력화’라는 과제가

합법 공간, 정당조직 속에서 중심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합법 공간, 자주적 대중조직의 역량 강화에서 그 기초가 형성된다. 특히 외세지배하의 한국사회에서 합법 공간에서의 정당조직은 매우 제한이 많은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체 민민운의 역량 강화의 보조적인 한 축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정치적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최근 민연추의 분열은 정치적 역할에 대한 애매한 이해 속에서의 결합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c: 142).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첫째, 독자정당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민주연합당론을 정당화하고 있다. 즉 “지역적인 정치세력의 고착화로 정당사업 주체와 대중의 운신의 폭이 협소하며, 진보적인 세력에 대한 절대적 지지세력은 10% 내외 정도(선거시기 7~8%)”에 불과한 반면, “민자당에 대한 반대 의지는 60~70%에 이르고 있으며 정세적 조건에 따라 대중의 진출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측면”이 있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d: 144).¹⁶⁶⁾

더 나아가 민주연합당론자들은 민중정당론이 투쟁을 협소화시키고 합법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한국사회를 독자적 발전을 해 나가는 사회로 보는 견해는 한국사회의 대립구도를 협소한 계급적 관점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해방을 당면한 기본과제로 내세우며 이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역량을 배치함으로써 ‘진보-보수’라는 대립구도를 추진한다. 이는 결국 민족민주운동의 동력을 협소화시키는 좌편향 속에서 민족민주운동의 분열·고립을 결과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c: 133). 이처럼 민주연합당론은 보수 대 혁신(진보)의 대립구도가 결국 “지배세력의 보혁구도, 장기집권구도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고 반민자당 연전구축과 대중투쟁의 힘있는 전개를 어렵게 만”들

166) 이에 대해 민중정당론은 다음과 같은 상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는 보수야당들에 환멸을 느끼고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도 다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 수치는 무려 60%를 육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5%가 민중정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것도 대단한 수치라는 사실을 적시하기 바란다. 숫자 그 자체로도 적지 않은 것이지만, 아직 창당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활동도 해본 적이 없는 정당에 대한 지지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민중정당이 창당되어 잘 활동한다면 앞으로 4~5년 내에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게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저자 미상, 1990: 160).

것이라고 주장했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d: 148). 그리고 민주연합당론은 민중당론이 의회진출을 시도함으로써 합법적 정치공간 확보와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사회가 외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자적 발전의 길을 걷고 있으며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되었다는 입장을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것으로서 궁극에는 “투쟁전술의 수정”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저자 미상, 연도 미상c: 139).

이상에서 보듯이 민연추의 조직화로 확연하게 나누어진 민주연합당론과 독자정당론은 진보정당의 형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이 논쟁의 뿌리는 사실상 13대 대통령선거 시기의 대선후보 선정을 둘러싼 비판적 지지파와 독자후보파 논쟁이 발전적으로 재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쟁의 핵심에는 상이한 정세관과 전술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야당과의 관계 설정’ 또는 야당에 대한 태도라는 문제는 양자간의 입장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

2) 혁명적 계급정당론 대 진보적 대중정당론

한편, 민중당의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은 민중당과 한국노동당 창준위의 통합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혁명적 계급정당론 대 진보적 대중정당론” 간의 노선 차이를 드러낸 논쟁이었다. 앞서 보았듯이 민중당이 출범할 때 반합법·비합법 조직체들과 노동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전위정당을 만들거나 민중당을 전술적 단위로 보고 자파 조직원을 통해 지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통합민중당이 형성될 때까지 이들은 민중당에 자파 조직원을 참여시켜 민중당을 조직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들은 14대 총선에서 조직재편을 가시화했고 이의 구체적인 외화물이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한사노 창준위, 1991. 7)였다. 그리고 이들은 민중당과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여 결국 통합민중당을 결성했다. 여기에서는 우선 민중당의 강령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민중당의 성격을 논의하고자 한다.

민중당은 1990년 11월 10일 창당된 이후 내부논쟁과 민중정당 반대론자들과 이념투쟁을 거치면서 이념 및 조직의 위상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민중당의 강령은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었다. 하지만 민중당이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 세력의 입장이 반영되었다기보다는 장기표 등 당지도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박병상, 1997: 121).¹⁶⁷⁾ 계급정당론에서 볼 때 장기표의 의견이 반영된 민중당은 계급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의 위상을 갖는 것처럼 보였다.¹⁶⁸⁾

문제는 동지(장기표-연구자) 자신이 합법적 형태에 개량주의적 내용을 담으려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수야당과 구별되는 민중의 정당, 남한사회의 객관적 조건이 요구하는 민중적 발전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혁명적 민중정당이 아니라 또 하나의 ‘참신한 반정부야당’을 건설하자는 동지의 주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민중주체의 진보적 대중정당’이라는 그럴듯한 명칭을 붙인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유건하, 1990: 214~215).

즉 이들이 보기에 ‘창당선언문’ 등에서는 민중정당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계급정당이나 혁신정당과는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창당 초기에는 오히려 진보정당으로서의 성격도 부정할 만큼 대중성을 강조하였다.

장기표는 전민련을 탈퇴하고 신당창당에 나서면서 당시 가졌던 한 인

167) 한 예로 민중당 강령은 ‘오늘의 세계와 한국사회’라는 제목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 중 네 번째 내용에서 “민중당은... 민중주체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여기서 이른바 ‘민중주체 민주주의’는 사회변혁이론에서의 ‘민중민주주의’와 강제로 구분하기 위해 장기표가 고안한 개념으로서, 그 개념은 실제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또한 해석 방식에 따라 내용을 달리할 수도 있는 애매한 개념이었다. 장기표는 1991년 4월 24일 ‘사회민주주의와 한국사회변혁의 진로’라는 한국정치연구회 월례토론회에서 자신의 노선을 ‘개혁사회주의’라고 규정하고 이것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사민주의도 아니며 이를 ‘민중주체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포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직 구체적 개념정립이 돼 있지 않음을 시인했다(한겨레신문, 1991. 5. 1. 박병상, 1997: 121 재인용).

168) 민중당은 선거 직전에 비합법 계급정당 창당을 시도했던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노정추: 후에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와 통합하면서 당 내에 뚜렷한 양대 계파를 형성한다. 하지만 통합 이전에도 노정추의 핵심세력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조직원들이 상당수 민중당에 참여했기 때문에 민중당은 처음부터 두 대립적인 경향이 공존하고 있었다.

터뷰에서 새롭게 건설될 정당의 성격을 “일부 언론에서 진보정당이나 이념정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성격규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새 정당은 지역당 구조의 극복을 위한 ‘참민주국민정당’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한겨레 신문>, 1989. 10. 1. 박병상, 1997: 122 재인용).

이에 대해 유건하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동지! 민중정당이 아닌 ‘참민주국민정당’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독점자본과 파쇼 일당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이 사회를 뒤집어 엮고 민중이 지배하는 사회,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양 김씨의 부도덕성과 분열의 책임을 물으며 그 틈을 비집고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채우려는 자들, 그러나 양 김씨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민주당(가칭)의 목소리가 아닙니까?”(유건하, 1990: 216~217).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혁신적 또는 혁명적 대중정당이 아닌 ‘진보적 대중정당’이라는 표현이 민중당의 성격을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중’ 개념이다. 민중당이 제시한 민중의 구성원은 국민 대다수를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상상공인까지 민중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중이라는 개념이 갖는 계급성과 투쟁성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민중당은 사민주의적 경향을 나타냈는데, 예를 들어 민중당 강령은 자본주의체제하에서도 자본의 독점적 특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제도개혁을 통해 사회적 개혁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박병상, 1997: 122~124 참조).¹⁶⁹⁾

한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민중당과 혁명적 민중정

169) 민중당의 실무자회의 사건은 민중당의 경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이우재 상임대표, 이재오 사무총장, 장기표 정책위원장 등 민중당 지도부가 1991년 7월 15일 단행한 사건으로서 민중당의 우경화 노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내 이념투쟁과 함께 당권투쟁의 성격까지 포함된 실무자회의 사건은 일단 민중당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에 의해 수습되었지만 제명이란 중징계 조치에 대한 타당성을 포함하여 민중당 지도부의 개량화 경향에 대한 비판은 논란이 되었다(박병상, 1997: 128~129). 따라서 민중당을 민주주의 혁명의 지휘본부와 같은 계급전략적 단위로 이해하는 것은 민중당의 위상을 처음부터 과잉평가하는 것이다(박병상, 1997: 124).

당론자들은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 장기표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의 형태, 민주주의의 목적과 수단을 강조해서 표현한 말이라 할 것이고 민중민주주의는 정치의 주체가 민중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한 말이다”(장기표, 『해방의 논리와 자주사상』, 친구, 237쪽. 유건하, 1990: 211~212 재인용).

이에 대해 계급당론자들은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대립되는 민중민주주의는 “서로 상이한 세력들의 정치적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유건하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동지! 자유민주주의=부르주아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는 한 사물의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사물의 질을 표현하는 개념이고, 이질적인 세력의 정치적 전망입니다. 동지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친다는 것, 우리의 투쟁을 그 수준에서 한정시키는 것은 부르주아계급과 타협하는 것이요 그들의 품안에 들어가 굴욕적인 노예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지! 무엇인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 당의 민중성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민중성 없는 이러한 것들은 양꼬 없는 찌뽕입니다. 독 없는 꽃뱀이요 삼날 없는 포크레인에 불과한 것입니다“(유건하, 1990: 219).¹⁷⁰⁾

이런 맥락에서 비판론자들은 민중당의 태도가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입

170) 동지의 사고들에서는 우리가 보수야당을 대신한다는 말의 의미는 보수야당과 다른 새로운 역사의 길, 민중적 발전의 길을 나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래의 민주화투쟁에서 보수야당이 하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수야당과 그리 다르지 않게, 그러나 약간 철저하게 약간 도덕적으로 보수야당이 하던 역할을 좀더 잘하는 것, 이것이 합법정당의 임무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유건하, 1990: 221~222). 보수야당이 부르주아계급의 한 분파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일로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는 정치적 전망이란 당연하게도 자본주의 사회를 좀더 공평하게 만드는 것,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와 착취의 기초에는 손을 대지 않은 채 분배관계에 약간의 손을 대는 것, 자본주의적 합리성에 기초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 한 개인이나 한 분파가 아니라 부르주아계급의 모든 분파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운상인 각종 모순의 철폐화를 예방하는 것입니다(유건하, 1990: 220).

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했다.¹⁷¹⁾ 이러한 비판은 궁극적으로 민중당의 계급성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제가 보기에 동지의 사고는 주관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편에 서 있는지 몰라도 수없이 많은 부르주아적 영향력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합법정당의 성격, 보수야당에 대한 태도, 단계론 등은 그 몇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좀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동지의 사고는 그 감성적 차원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편에 서 있지만 수많은 부르주아 논리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그 때문에 그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습니다(유건하, 1990: 225). 동지! 진정한 민주주의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프롤레타리아트의 편에 서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학설을 연구하십시오. 그것을 몸에 붙여 그 어떠한 사건, 진천동지할 일이 벌어지더라도 사태를 바로 보십시오. 당신께서 스스로를 부르주아적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시키지 않는 한 민중의 분노는 활화산이 되어 당신을 덮칠지 모릅니다(유건하, 1990: 226).

그렇다면 민중당에 반대하는 계급정당론자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들의 입장은 두 개의 정당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합법정당인 계급의식으로 무장된 민중당과 비합법정당인 전위정당이다. 다음의 언급은 이들이 구상한 합법정당인 민중정당의 위상을 핵심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합법적으로, 공공연하게 활동하는 대중정당인 민중정당은 비합법 전위정당인 사회주의 노동자정당과 함께 노동자와 민중의 해방을 위해 우리가 건설해야 할 두 정당이다. 민중정당에는 보다 많은 노동자가 쉽게 참여하여 정치활동을 하고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민중정당운동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생활은 훨씬 풍부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민중정당활동에 노동자는 주인 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김철순, 1989: 138).

171) 민중적 발전의 길이라는 역사적 과제의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합법정당이 아닌, 또 하나의 '참신한 야당'으로서의 합법정당을 주장하는 동지의 사고 속에는 민주정부를 거쳐 민중민주정부로!라는 단계론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동지는 바로 이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합법정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유건하, 1990: 222).

이러한 입장의 기원은 한국노동당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던 인노련 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1987년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열린 10월의 인노련의 대의원대회에서 인노련은 민중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를 정치적 전위조직으로 규정하는 내부의 결의가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강령개정의 기본방향이 채택되었는데 여기에 반발해서 일부의 민족해방파 대의원들은 탈퇴했다(인노련 편, 1991: 12~13. 박병상, 1997: 126 재인용). 당시 민중당과의 조직적 연계를 밝히고 있는 인노련은 민중당을 비합법 정치세력의 전술단위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민중당을 통한 참여, 즉 간접 참여를 기본전술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영하는 민중당 지구당들의 조직이 선거 참여를 통해 확대, 발전한다면 그 성과는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후일 우리 당이 합법성을 쟁취할 때, 민중당에 심어 놓은 우리의 조직, 또는 민중당의 좌익은 우리의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다”(주대환, 『새로운 출발에 앞서 동지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1994: 16, 22~23. 박병상, 1997: 129 재인용).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민중정당을 과학적 사회주의로 무장된 합법적인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으로 규정한다.

진정한 노동자의 사상은 과학적 사회주의이며 노동자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독자적인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김철순, 1989: 129). 현 상황하에서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은 비밀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크지 않은 역량으로 공개적으로 활동한다면 우리의 핵심역량을 적의 염탐과 변덕스런 공격에 노출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김철순, 1989: 130).… 그러면 완전한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전에는 우리는 오직 비밀활동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되는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대중의 혁명적 에너지, 대중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의 실체로 모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소수의 정예분자로 이루어진, 비밀활동만을 전개하는 비합법 노동자정당은 대중과의 접촉면적이 매우 좁다.… 그러면 어떤 활동과 조직이 이를 보완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의 답으로서 제출된 것이 민중정당이다. 민중정당은 결코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에서 나온 안이 아니다. 그것은 6월투쟁 이후 노동자의 자발성과 정치참여 의욕이 높아진 새로운

상황에서 노동운동으로부터 제안된 새로운 조직형태이다(김철순, 1989: 130~131).

이처럼 이들은 민중정당을 “한국의 역사발전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창조적 조직형태”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민중정당은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신실한 우당(友黨)”이고 공개성과 대중성으로 인해 “우당인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의 활동 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철순, 1989: 131). 하지만 이것은 특정 시기에 존재하는 시간적 제약성을 갖는다. 그리고 민중정당의 위상은 “보다 많은 노동자가 정치적 경험을 쌓고 정치적으로 훈련되는 데 좋은 학교”이며,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주도해야 할 정당으로 보고 있다(김철순, 1989: 133).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민중당은 첫 번째 논쟁을 통해 부르주아지 정당과의 차별성을 드러냈고, 두 번째 논쟁을 통해 사회주의와도 선을 그었다. 이 논쟁을 경유하면서 민중당은 계급연합에 기초하는 사회민주주의적 합법정당으로 자신의 성격을 규정해 나가는 경향을 보였다.

마. 노동운동 위기론

1990년대 초에 노동운동 위기론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고, 전노협이 이념과 실천방식이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따라서 논쟁은 “전노협적인 것”, 즉 전투적 노동조합주의¹⁷²⁾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그렇다면 “전노협적인 것”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될 수 있는데, 첫째 그것은 전노협의 변혁지향성,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지향성과, 둘째 전노협의 실천방식인 비타협적인 전투성이다.

대부분의 논쟁들은 후자, 즉 전노협의 전투성을 문제삼았다. 전투성을

172) 다음의 언급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라는 명명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전노협은 스스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다. 남들이 붙인 말이다. 전노협은 자신의 활동을 민주노조운동, 또는 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이라 했다. ‘전투적 노조주의’라고 성격규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김승호, 2004).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운동의 위기의 주범인가 아니면 민주노조를 이만큼이나마 지속시킨 일등 공신인가? 전투성은 단순히 행동방식을 나타내는 전술적 형태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변혁성을 담고 있는가? 전투성은 새로운 시대에 폐기처분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자본주의시대의 정치전술인가?

노동운동 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하 ‘위기론자’)은 노동운동이 ‘악성 종양’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파악하고 위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¹⁷³⁾ 그렇다면 위기의 핵심적인 주범은 무엇인가? 위기론자들에게 주는 대답은 명쾌했다. 그것은 전노협의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에 있다.

노동조합운동은 위기인가? 물론 그렇다. 그러나 이 위기는 기본적으로 변화된 노사관계의 지형이나 경제적 토대의 구조를 제대로 읽지 못한 잘못된 노동조합운동의 노선 때문이다(박승욱, 1992a: 245).

이처럼 임단투 중심의 전노협과 전국노운협의 전투성이 변화하는 노동운동 침체와 사회적 고립의 주요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현실적 조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1987년 및 1988년과는 현저하게 다른 경제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지형”이라는 “변화된 조건에 기초하여”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정승국, 1992: 291, 293).¹⁷⁴⁾ 그렇다면 위기론자들에게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이 전투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 그대로 ‘전투적’ 태도, 기질을 의미했다.

173) 일선 노동운동 간부, 연구자, 교수뿐만 아니라 노동부나 경단협, 심지어는 외국의 노동관계 전문가들까지 그 원인분석과 처방은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소강상태를 한때 지나가는 독감이 아니라 사망선고 직전의 매우 심각한 악성 종양으로 판정하는 듯하다(박승욱, 1992a: 214). 이에 대한 박승욱의 논거는 폭넓고 체계적이다. 그는 조합수, 조합원수, 쟁의건수, 조직률의 감소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위축 현황, 노동자들의 경제적 조합주의로의 의식변화, 권력관계의 변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및 산업구조조정의 영향, 기업별노조체제의 한계, 이념의 한계 등등을 지적하고 있다(박승욱, 1992a 참조).

174) 이어서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자본의 통제전략의 변모, 노동자 내부구성의 변화, 노조운동을 둘러싼 정치적 세력관계의 변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등에 의해 변화된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운동노선을 단순히 강조하게 될 경우 노조운동의 침체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정승국, 1992: 293).

오늘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특히 파업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와 복면으로 상징되는 군사적인 전투성은 오히려 노동조합운동의 진전에 크나큰 해악만을 끼칠 뿐이다. 지난 1월 현대자동차의 상여금투쟁 당시 차량을 부수고 공장 안에 기름을 부어 넣은 사태가 있었다.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속시원해 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동대중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결코 될 수가 없었으며, 노동계급 이외의 국민대중으로부터는 비판을 자초할 뿐이었다. 노동운동은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운동이지 결코 공장을 때려부수거나 또는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 내거나 하는 운동이 아니다(박승옥, 1992a: 236).

이처럼 위기론자들은 전투성이 행동양식과 방식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박승옥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파업이 마치 민주노조운동의 지표라도 되는 듯한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 일조한 것이 이른바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투쟁관이었다”(박승옥, 1992a: 236).¹⁷⁵⁾ 이러한 투쟁관에 근거하여 결국 전노협은 “투쟁만능주의”(박승옥, 1992a: 239)로 나아갔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이 보기에 이러한 전투성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투성이 비효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투적 경제주의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위기론자들이 보기에 전투성은 임투 승리를 위한 노동조합주의의 전술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위기론자들은 전투성이 결국 “대중성의 상실”과 “노조간의 분열”로 귀결되었다고 주장한다. 박승옥(1992a, 240)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가 “잘못된 엘리트적 대중관을 기초로 노동조합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고 노동자들을 거꾸로 즉자적 의식과 투쟁에 묶어 뭉으로써 이제 노동

175) 김문수의 비판도 동일한 맥락에 서 있다. 그는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 잘 무장된 공권력을 군사적으로 이기기란 불가능한데도 투쟁의 목표가 마치 군사적·물리적 승리인 것처럼 부추겨진 점이 있다. 둘째, 투쟁 그 자체가 목표인 듯이 보인다. 셋째, 패배의 흔적이 오래 가지 않는 학생운동의 투쟁형태와 방식을 노동운동에 연장·적용하기는 어렵다(김문수, 『민족노조운동, 이대로는 안 된다』, 『전망』(창간호), 민중당, 1991: 10. 박승옥, 1992a: 237 재인용).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치위야 할 장애물”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위기론자들은 전노협의 탄생으로까지 소급하여 전투적 노조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전노협의 출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노협의 출범을 조직형식주의의 조급한 발로로, 전노협의 투쟁성과 상징성을 민주노조운동 진전의 부정적 요소로 간주”한다(박승욱, 1992b: 181).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위기론자들과는 달리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전투성이 전술로서 매우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유효한 전술이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투적 노동운동론’은 전투성이 단순히 “화염병을 들고 싸우는” 호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조주의에 대한 거부이고 파쇼적 탄압에 대한 굴복의 거부”이다. 더 나아가 “‘공돌이, 공순이’를 거부하는 노동자의 자부심이고 노사 대립관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박승호, 1992: 90). 그리고 “그동안의 엄청난 총체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전투적 기풍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다(박승호, 1992: 91).¹⁷⁶⁾ 따라서 “전투적 기풍”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민주노조운동의 소중한 기풍이고 전통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도천수, 1994: 233~234).

우리나라 민주노조운동에서 전투성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물론 전투성이란 어떠한 조건에서도 파업이나 가두투쟁을 해야 한다는 천박한 주장이 아니다. 파쇼적 탄압에 대항함은 물론 임금액수 등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단결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의식과 단결력을 높이기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정신인 것이다(최규엽, 1992: 83).

전노협 옹호론자들은 임투를 중심으로 한 전투적 경제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임금투쟁 자체를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176) 전노협의 전투성에 대해서는 당시 대중적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 1987년 이후 ‘석탑’을 중심으로 합법주의적인 한국노총 개혁노선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가면 1987년 대투쟁의 성과와 노동자들의 계급적 진취성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수 없었기에 노자간의 요구와 투쟁에 있어서 비타협적이고 전투적인 투쟁정신과 기풍이 확산되는 것을 토대로 해야 했던 것이다(김승호, 2004).

반발하고 있다.

국가가 경제의 결정적 주체로 등장한 1930년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은 사실 대정부투쟁적·제도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권력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임금투쟁은 대단히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더 임금투쟁의 구조적 함의를 살펴보면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조성할 수 있다 하겠다.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을 동력으로 해서 자본가들의 기술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다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이다(최규엽, 1992: 86).

그리고 위기 돌파를 위해 오히려 전투성이 더욱 견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지금 우리는 총액 5%의 괴물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며 겁먹고 있는, 특히 노조지도자들에게 전투성을 소리 높여 강조할 때”(최규엽, 1992: 86)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운동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즉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자들은 노동운동의 침체의 원인을 “조합원들의 요구와 지향을 담아 낼 수 있는 조직력과 지도력이 취약한 것”에 있다고 보고, 따라서 “지도력을 복원하고 새롭게 형성하는 것”에 문제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보았다(정승국, 1992: 291). 그리고 “1987년 이후 획기적으로 진출한 노동운동은 변혁적이고 목적의식적인 운동 부분이 얼마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느냐 여부에 의하여 그동안의 눈부신 성과를 노동해방과 민족민주변혁의 길로 전진시킬 것인지 현재의 지점에서 정체를 하고 후퇴할 것인지가 판가름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기존 노선을 유지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전국노운협, 1990: 5).

그런데, 사실 전투성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실천방법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이념논쟁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이 논쟁은 “노동조합운동의 이념 정립과 자기점검 없는 조직 재편은 또 다른 차원의 오류를 되풀이할 가능성”(박승욱, 1992b: 184)이라는 언급에서 보듯이 단지 실천방식을 둘러싼 전술 차원의 고민이 아니라 “1987년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총노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운동의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 논쟁은 모든 노동정치 주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임영일, 1998: 180~181).¹⁷⁷⁾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념적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선 위기론자들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가 이념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박승옥(1992a, 238)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가 “무슨 주의라고 이름 붙일 정도의 이념체계나 전망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생디칼리즘 경향과 유사”하다고 평가한다. 한편, 이것은 좌파 그룹의 한 간부의 언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는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를 “이념 없는 전투성”이며 경제주의의 변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조직사건이 매우 많았다. 조직사건이 터지면 전노협은 노동운동세력에 대한 전반적인 탄압이며 전노협의 탄압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사건’이라며 (이런 조직들과) 선을 그어버렸다. 개인적으로 ‘노동계급의 탈계급화’의 직접적 계기는 거기에 있었다고 본다. 그때 (정부는 변혁적 활동가들을) 다 숙아냈다. 정치적 조합주의가 아닌 전투적 조합주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인터뷰 C, 2004. 2. 4).

하지만 이런 언급과 인식은 오히려 이념논쟁을 촉발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제 비판론자들은 새로운 이념을 제시해야 했고,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자들은 자신이 이념지평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둘째, 위기론자들의 노동운동위기론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노동운동에 우호적이고 진보적인 학자진영과 민중당 건설에 합류한 구(舊)운동가들이었다. 민중당 기관지 『전망』은 1991년 내내 전노협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조진영의 노동운동노선을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는 글을 실어 논쟁을 촉발시켰다(김준, 2001: 366~367). 이것은 “노동자정치운동(정당운동)을 지향하고 있었던 조직에서 그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세력들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마지막 공세였던 측면이 있었

177) 예컨대, 이 과정에서 한국노동운동의 급진성을 비판한 한 논자의 글은 언론(신문)에 의해 크게 보도되었고, 자본가단체(경총), 그리고 개별기업주들은 이를 대량으로 복사하여 현장에 살포했다(임영일, 1998: 181).

다”(임영일, 1998: 183).¹⁷⁸⁾ 이상의 언급에서 보듯이 ‘전노협’노선의 폐기 내지는 민주노조운동에서의 전노협 중심성을 해체하고자 하는 내부정치적 목표가 이 논쟁의 배경에 자리잡고 있었다. 즉 ‘ILO공대위’에서 사실상 민주노총준비위원회와 다를 바 없는 ‘전노대’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노조운동의 총노선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참여의 폭을 확대하되 노조운동의 주도권을 상대적으로 온건한 비생산직 노조 쪽으로 이 전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그 배경에 있었다(임영일, 1998: 183).

셋째, 이들의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내세운 제안들은 이 논의가 이념논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운동위기론자들은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취해야 할 총노선으로 우선 전노협 노선과 같은 최대강령주의적-전투적 노선을 폐기할 것을, 그리고 변화하는 정세에 맞는 유연한 계급타협적 노선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임영일, 1998: 182).¹⁷⁹⁾ 이처럼 전투성에는 도식적인 사회변혁의 논리가 내장되어 있다고 보면서 전노협의 변혁적 노동운동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변혁지향성을 민주적 노조운동의 표지로 간주하는 것은 노조운동의 대중성을 스스로 제한하고 노조운동의 분열을 당연시하는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한다(정승국, 1992: 292). 더 나아가 위기론자들은 계급연대에 대해서도 충고한다.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변동으로 인하여 중간계층의 정치적·사회적 역할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현재의 정치적 이데올

178) 이처럼 노동운동위기론의 논쟁 주체를 볼 때 위기론은 헤게모니 다툼을 넘어 이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쟁은 1991년 총파업 투쟁(박창수 장래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91~92년간에 전노협 내에서 이 투쟁의 실패의 책임을 묻는 공세가 조직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NL과 PD가 다시 합작하여 전노협 지도부를, 그리고 노운협 지도부를 타격하고자 했던 것이다. 김○○, 김××, 장×× 등 PD 진영이 총동원되어 이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나섰고, 여기 NL쪽이 결합해서 박××, 정×× 등이 가세했다. 당시 전노협 내부 문건으로 제출된 것(투쟁평가서)을 보고 김○○ 교수도 ‘이건 무슨 공소장 같네’라고 말할 정도였다”(전국노운협 전직간부 면접. 임영일, 1998: 184 재인용).

179) 논자에 따라 신노선의 이름은 다양하게 붙여졌다.··· 각자가 붙인 이름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발전적 노동조합주의(박승욱), 국민적 노동조합주의(박세일), 민주적 노동조합주의(최장집), 신조합주의(임혁백), 사회민주주의(임원진·김병국)(임영일, 1998: 182).

로기 지형에서” “산업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하에서 여타의 계급·계층과 결합하는 ‘동심원적인 계급연대’의 관념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조직화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중간계층과의 결합이 노동운동의 발전에 갖는 적극적인 의의가 인정되어야”한다고 충고한다(정승국, 1992: 293). 결국 이들은 “사회발전적 노동운동”을 통해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저임금·장시간 노동, 곧 노동계급의 변혁성이란 경제주의적 허구에 매달리지 말자는 의견이었다. 노동조합의 소극적 방어적 측면에만 매달리지 말고 적극적·변혁적 측면을 생산적으로 개발해 나가자는 견해였다”(박승욱, 1992b: 179).¹⁸⁰⁾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말하는 적극적·변혁적 노동조합은 사회정책에 개입하는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즉 위기론자들은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정치편향주의, 민주-어용의 도식적 조직노선을 폐기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총액임금 5% 돌파의 요구보다... 사회발전이라는 시각으로 토지문제, 주택문제, 공해문제, 교통문제 등 사회문제의 구체적 해결을 내걸고 조직과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천수, 1994: 233~234).

이에 대해 전노협 설계자들은 전투성이 “노동자계급의 존재조건에서 나오는 생명 같은 계급성”(최규엽, 1992: 86)이라고 주장하면서¹⁸¹⁾ 노동

180) “노동조합은 이제 사회발전이라는 시각을 전제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지 않는 자본·권력의 노동통제전략을 분쇄할 수 없다. 토지·주택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한국사회를 발전시키며 이것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의 개선임을 자각해야 한다. 공해문제, 교통문제·범죄문제, 교육문제, 언론의 관급기사화문제 등등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문제 제기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할 사회적 모순과 비리는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민주변혁의 학교이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운동은 이제 자신이 사회적 조직이라는 시각을 그것도 아주 힘있고 주요한 사회조직이라는 시각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 아직도 한국의 노조는 힘이 남아 있다”(박승욱, 1992a: 246).

181) 노동과 자본의 관계란 본질적으로 적대적인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그 생성과 발달과정 전체가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러한 폭력적 관계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지양하기 위한 노동운동은 투쟁의 내용에서는 본질필연적으로 ‘전투적’일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그 형태에 있어서 파업과 작업장 점거는 ‘살아있는’ 노동의 소유자인 노동자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하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며 유일한 무기이다(강수돌·황기돈, 1992: 75).

위기론의 저의가 이념투쟁에 있다고 보고 있다.

전노협 건설 이전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1990~91년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 전노협 건설과 관련된 수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전투성을 비판한 사람들은 운동내 우파, 개량주의자들이었다. 그 가운데도 주된 흐름은 민중당, 진정추 등의 합법적인 정치를 표방하는 이들이었다. 이 부분도 전노협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한사노당 만들다가 감옥에 가서 피터독재를 포기하고 나온 다음 합법정당주의로 가면서 '전투적 투쟁이 아니라 합법적 정치'를 주장하면서 전투성을 공격했다. 변혁의 전망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김승호, 2004).

그러면서 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성을 “전태일정신”과 “노동해방”에서 찾고 그것을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운동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꼭 ‘○○○ 노동조합주의’라고 명시적으로 제시해야만 운동이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은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운동이념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은 변혁지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박승호, 1992: 92).

이상의 인식에 기반하여 이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론자들은 노동운동 위기론자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비판으로 나아간다. 우선 이들은 노동운동 위기가 계급역관계의 불균형에 따른 것이며 “노동운동 위기 이전에 ‘노동운동론의 위기’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강수돌·황기돈, 1992: 70). 그리고 이들은 은연중에 위기론자들이 조합주의(corporatism)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보기에 조합주의는 3자가 세력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상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상 자본에 의한 사회적 노동의 착취를 눈감아 주며, 나아가 이러한 공범관계의 대가로 자본으로부터 일정한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면서 자본주의, 제국주의적 ‘사회적 관계’를 철폐하기는커녕, 온존·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강수돌·황기돈, 1992: 79). 결국 조합주의는 “근본적으로 혁명적인 노동운동의 존재기반을 약화시키고

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더 이상 ‘노동해방운동’이 아니라 노동‘조합운동’으로 속류화”한다고 보고 있다(강수돌·황기돈, 1992: 80).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운동위기를 둘러싼 논쟁들은 다양한 쟁점을 형성하면서(표 4-8 참조), 1980년대 노동운동의 경향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논쟁이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1980년대 당위적인 수준에서 인정되었던 변혁성과 전투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비판을 함으로써 노동운동이념에 대한 전면적인 토론을 예고했다는 점이다.¹⁸²⁾ 이 논쟁은 “각자의 입장이 개진된 선에서 조기에 막을 내렸지만 이후 학계에서는 여기에서 제기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이어”졌

<표 4-8> 노동운동위기에 대한 쟁점

	위기론자	전노협
현실인식	극소전자기술의 도입에 의한 자동화, 노동자계급 내부구성의 변화, 새로운 노무관리 등	노조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폭력적 탄압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한 시점
근거	최대강령주의와 전투성에 기반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현존사회주의 붕괴, 정부의 탄압
핵심원인	임단투 중심의 전투적 노동운동	조직과 지도력의 취약, 자본과 정권의 공세
전투성	평가: 부적절한 전술 또는 이념 향후: 포기, 유연화로	평가: 유효한 전술,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담보 향후: 보다 강화되어야
영향	사회적 고립, 노동운동의 약화	노동해방, 진태일정신 계승
상호비판	경제결정론	계급타협전술
대안	유연한 계급타협전술, 사회정책적 대안 제시 예: 진보적 노동조합주의, 사회발전적 노동조합주의, 국민적 노동운동	지도력의 복원, 즉 노동조합내 기간부대의 결집, 지역적 차원의 집단적 지도중심의 건설

182) 이런 점에서 “이 소모적이고 자기파괴적인 논쟁은 결과적으로 한국노동운동의 이념적 하향 평준화의 한 계기가 된 셈이 되었다”(임영일, 1998: 184)는 비판은 의문시된다. 이 논쟁은 오히려 활성화되었어야 했다.

고(임영일, 1998: 183), 이후 사회적 조합주의의 토양을 제공했다.

한편, 현장의 조합간부들은 일단 노동운동위기론에 대해 매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동운동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일차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1993년 접어들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많은 일선 노조지도자들이 노동운동위기론자들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에 공감을 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993년 노경총 임금합의 분쇄투쟁을 평가하고, 1994년 임투를 준비하기 위한 전노협 내부의 준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전술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나, 1994년 전노대가 임투와 더불어 5대 사회개혁 요구를 내걸고 사회개혁투쟁을 동시에 전개하기로 한 것 등은 모두 그러한 비판들이 민주노조진영에게 어느 정도 수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준, 2001: 368).

4. 조직과 실천

1980년대의 이념으로 무장한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지도에 따라 노동조합과 정당 건설에 나섰다. 전자는 노동운동단체와 민주노조운동으로 나타났고, 후자는 비합법전위정당 또는 합법정당으로 외화(外華)되었다. 이같은 활동가와 조직의 만남은 1987년을 기점으로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노동운동단체와 노동자들의 만남은 민주노조라는 대중조직의 성장을 통해 외화(外華)되었다. 이것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경계로 두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노동자대투쟁 이전 시기의 조직과 실천으로서, 이 시기에는 학출 지식인들이 야학활동 또는 현장투신을 광범위하게 전개했다. 그 결과 구로연투와 대우자동차 파업 등의 사건들과 전민노련, 노동자복지협의회, 서노련과 인노련 등의 조직들이 만들어졌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민주노조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활동가들의 정치조직인 전국노운협이 만들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전국조직인 전노협이 만들어졌다.

지식인과 정당의 이 만남은 정당의 측면에서 볼 때 첫 번째 시기, 즉 1987년 이전에는 비합법전위조직 건설이 시도되었다면, 두 번째 시기에는 대중정당 건설이 시도되었다. 1987년 이후에 만들어진 민중의당, 한겨레민주당, (통합) 민중당 등은 활동가들에 의해 등장한 대중정당들이었다. 이처럼 1987년 이후 활동가들과 노동조합 또는 정당과의 만남은 전국노동조합이라는 활동가들의 연합조직이 전노협이라는 대중조직을 지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서클 수준에 머물렀던 정치조직이 민중당이라는 대중정당조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1987년 이전과 차별적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80년대의 노동운동은 활동가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이념의 측면과 노동조직의 측면에서 활동가들의 영향력은 상당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조직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것은 첫째 활동가들이 정치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 연대·통합되지 못했고, 둘째 정치조직이 대중조직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우선 노동자대투쟁 이전의 활동가와 노동자 조직의 만남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에 마르크시즘으로 무장한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들과 만나려고 노력한 결과 이들의 영향을 받은 의식적인 노동자와 그 결과물인 민주노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식인들은 야학과 현장노동자로 광범위하게 노동현장에 들어갔고, 1980년대 초반의 “소그룹운동론은 당시의 탄압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일세를 풍미하는 운동론으로 자리를 잡아 나갔다. 특히 자취방 야학과 민중교육교재의 출간 등으로 더욱 성숙해 1982년 하반기에는 지역단위로 묶여 갔고 노조 결성을 위한 조직적 움직임으로까지 발전하였다”(홍승태, 1994: 122). 이 과정에서 민주노조 간부 일부와 학생 출신 활동가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이 만들어졌다. 조직의 설계자들은 1980년도의 노동운동이 경제투쟁에 머물렀고 기업별 노동조합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타 운동과의 연관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평가에 근거하여 이 조직을 만들었고, “변혁적 전망하에서 비밀지하조직을 구심으로 학생운동(전민학련)과 굳건한 연결 위에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어용노조 민주화를 추진, 제2노총을 구성하려고 시도했다. 전민노련의 상황 판단은 파쇼독재체제가 공고화되지 않았고, 경제적 파탄이 계속될 것이며, 민중의 정치적 의

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민중운동이 조만간 전면적 공세기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이를 테면 낙관론에 가까웠다. 따라서 이들은 공격기에 대비한 확고한 중심조직의 건설이 있어야만 1980년대 봄과 같은 고립분산적·자연발생적 운동의 지리멸렬함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았다”(김용기·박승욱, 1989: 15).

하지만 전민노련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지 얼마되지 않아 정부의 탄압을 받기 시작했고 취약한 현장조직과 하향식 조직건설방식 등의 약점으로 인해 조직대표였던 이태복이 검거되자 곧 붕괴되었다. 그러나 전민노련은 광주민주항쟁 이후 변혁 초조증에 걸린 좌익 소아병적인 일부 노동운동의 경향을 극복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을 건설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전민노련 관계자들이 합법적인 노동자용 교양도서를 출판하기 시작하면서 1983년 이후 사회과학서적 출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노동운동 활동가를 양산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는 점도 중요한 기여라고 평가받을 만하다(정경원, 2003: 186).

1984년 상반기에 민주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한국노협)’도 중요한 조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한국노협은 1984년 초 블랙리스트 철폐운동¹⁸³⁾의 과정에서 새로운 운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만들어졌다(홍승태, 1994: 125). 한국노협은 원풍모방, 동일방직, 청계피복, 콘트롤데이터, YH, 반도상사, 서통, 고려피혁, 동남전기 등 “1970년대 민주노조 활동을 통해 형성된 세력들이 노동운동의 전국적 통일적 구심을 형성한다는 목표 아래” “한국노총이라는 제도권 내의 민주화투쟁이나 종교단체 중심의 지원운동을 벗어나 과거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들과 연대투쟁을 전개했다.”(정경원, 2003: 184).

183) 블랙리스트 철폐운동은 1983년 말 이리지역과 인천지역의 해고자들이 전개한 운동이었다. 당시 민주적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는 민주노조 출신 해고노동자들의 재취업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정부는 광주민주항쟁 이후 해고자 천여 명에 대한 명단을 작성해 사업주에게 배포했는데, 이 명단이 1983년 12월에 발견되면서 철폐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자블랙리스트철폐대책위원회’(1984. 1. 19)가 만들어지기도 했다(홍승태, 1994: 124 참조).

또한 이들은 노동운동의 주체성과 통일성, 그리고 연대성을 목표로 『민주노동』을 발간하는 등 선전 및 교육활동에 집중하였고 이후 노동법개정운동¹⁸⁴⁾도 추진하였다. 하지만,

노동자복지협회의 결성도 1970년대 활동역량이 거의 다 괴멸되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뭔가 좀 부족하고 적은 힘이긴 하지만 힘을 합쳐 다시 노동운동을 복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소박한 의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결성 자체의 의미가 대단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노정되었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노동운동의 전체적 과제와 방향 그리고 구체적 조직과의 실천적 결합이라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함으로 인해 애초부터 확고한 지도력을 갖추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김문수 인터뷰. 현장 편집부, 1986: 153 재인용).

이상의 언급처럼, 한국노협은 “당시 정치주의적 경향이 표면화되면서 조직 내부가 분열”하기 시작했고, 이후 “노선논쟁”과 결합되면서 해체되었다(홍승태, 1994: 126). 이처럼 1980년대 중반 이전에 나타났던 조직들은 대중성을 갖지 못했거나 취약한 이념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직들의 한계가 극복될 수 있는 사건이 1980년대 중반의 대우자동차파업투쟁과 구로연대투쟁(구로연투)이었다. 대우자동차의 파업농성(1985. 4. 16~4. 25)의 경우 비록 그 발단이 경제적인 투쟁이었고 민주노조에 의한 조직된 파업은 아니었을지라도¹⁸⁵⁾ 우선, 현장활동가들이 개입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대우사건의 경우, 물론 근본적으로는 저임금이라든가 수당 동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인상률 등으로 근로자들의 불만이 쌓여 있었고, 노조가 조합원들의 요구를 충분히 대변해 오지 못한 점 등에서 분규가 폭발

184) 노동법개정운동은 1980년 개악 노동법에 대한 비판과 개정운동으로서 한국노협이 주도적으로 전개했다. 한국노협은 노동법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노동법개정추구대회를 개최했으며, 노동법개정의 당위성을 담은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홍승태, 1994: 127 참조).

185)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항상 불만으로 느껴 오던 상여금문제, 군복직자 처우문제 등을 매개로 파업에 돌입하여 상여금을 포함하여 18.2% 인상을 쟁취했다(홍승태, 1994: 131 참조).

한 것이지만¹⁸⁶⁾, 이 같은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사람은 다름아닌 대학 출신 기능공들인 송경평, 이용선, 홍영표, 박재석 씨 등이었다. 이들은 이의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노사대립의 과정에서 계속 근로자들을 리드해 왔다(황의봉, 1985: 13).

그리고 둘째, 1970년대 중소기업의 여성노동자들이 주도했던 파업과는 달리 재벌기업 산하의 대기업 사업장 남성노동자들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2천여 명의 생산직 노동자가 참여한 파업은 당시의 노동운동 현실을 감안할 때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우자동차 파업은 효성그룹, 대우어페럴 등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영향을 미쳤다(홍승태, 1994: 130~132 참조). 대기업 남성노동자들이 발견됨으로써 활동가들은 사회주의 이념이 남한땅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념의 측면에서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건은 구로동맹파업이었다.¹⁸⁷⁾ 구로지역 동맹파업은 민주노조들이 연대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히 정치적 요구를 내걸었다는 점에서 한국노동운동사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구로지역 연대투쟁은 투쟁 대상을 정부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정치투쟁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고(구로연투에서 “노동부장관 물러나라”, “노동악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가 제시되었다), 현장에 기반을 둔 동맹파업과 농성, 시위를 통한 연대투쟁이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건과 차별적이었다.

186)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외부 운동단체와 학생들의 지원을 거부했고,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포기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 점에서 학출 지식인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했다. 예를 들어 당시 합의각서에는 “3인의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한편, 대우자동차 파업은 정치투쟁의 과제를 방기한 경제투쟁으로서 ‘경제주의자들의 최후의 발악’이라는 좌파그룹 내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단위사업장에서만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노동운동 상황과 지역적·전국적 전망이 결여된 상태에서 투쟁이 전개되었던 당시 노동운동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홍승태, 1994: 131).

187) 구로지역의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대우어페럴 김준용 노조위원장 구속이 발단이었다. 이에 맞서 대우어페럴노조와 효성물산, 가리봉전자, 선일섬유 등 구로공단 지역 민주노조들이 동맹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노조를 조직화하면서 지역소그룹을 통해 많은 활동가들을 양성했다. 분명히 노동운동의 관점이 달랐고, 구로공단을 정치적(실천적 목표)으로 조직했으며, 실제 조직가들이 있어야 했다. 선동사업이 만들어지는 이런 사업의 배출 속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등 기존의 노조와 달리 거꾸로 실천하였다. 일단 구로공단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한다는 실천적 목표에 매달려서 이를 이념과 전략 속에서 구체화시켰다. 실천적 임무는 ‘공단을 정치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과 그것을 구체화하는 데 5년이 걸리게 된 것이다(인터뷰 B, 2003. 5. 30).

이처럼 구로연투의 설계자들은 “구로공단 노동자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만드느냐는 것이 목표였다. 노동조합은 하위개념이었다”(인터뷰 B, 2003. 5. 30). 이런 점에서 스스로 “구로연대투쟁은 과거의 부정적인 조류, 경제주의적 사고나 준비론적 흐름, 그리고 조합주의적 활동의 한계를 일거에 깨부수고 나온, 노동운동에 획기적인 전기를 제공해 준 의미있는 투쟁이었습니다.··· 그동안 금기시되어 온 노동운동의 정치투쟁적 성격을 최초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자 조직 형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김문수 인터뷰. 현장 편집부, 1986: 154 재인용)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로연투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었다. “투쟁시기 결정과정에서의 조급성과 일방성, 선도투쟁적인 경향의 표출” 등으로 인한 낮은 “조합원의 투쟁참여율”과 “투쟁 이후 다수의 구속자와 해고자의 발생”으로 인한 “민주노조의 파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로연투의 성격과 영향으로 인해 이후 노동운동의 정치이념과 조직노선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즉 경제투쟁을 정치투쟁으로 전화시키는 문제와 정치적 조직 건설문제 등이 표면화되었다(홍승태, 1994: 134 참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우자동차파업과 구로연투는 활동가들에게 남한도 사회주의 이념의 꽃이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 청계피복노조, 노투, 구민련, 노동자연대 투쟁연합(1985. 7. 23) 등의 연합체로서 결성된 서노련과 인노련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이념조직이었다. 서노련과 인노련 이전에는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1985. 2. 3),¹⁸⁸⁾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

회(1985. 4. 10), 구로지역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연합¹⁸⁹⁾ 등의 조직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들 조직들은 뚜렷한 이념적 지향을 갖고 있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1985. 8. 25), 인천지역 노동자연맹(인노련)은 기존의 조직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대중정치조직으로서 자신의 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서노련과 인노련은 첫째, 단위사업장 차원의 소모임이나 노동조합의 틀을 벗어난 지역운동체를 지향하고 있었고, 둘째 변혁지향적 이념을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노련은 “노동자들의 일상적 투쟁을 지원·지도하고 무엇보다도 사회변혁을 목표로 하는 정치선동, 정치투쟁을 통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대중정치조직’으로서 사회구조적 변혁을 전제하지 않는 ‘노동조합주의’ ‘경제주의’를 극복하면서 ‘목적의식적 정치투쟁’으로의 발전을 지향하게 된다. 서노련의 출범은 비록 지식인 출신 활동가들과 일부 선진노동자들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실천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였다”(조희연, 1998: 269~271). 인노련은 “당면한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인천·부천지역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구심이 되며,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발전시키고 여러 형태의 대중조직을 촉진시키며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을 발전시켜 스스로를 정치부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7년 6월 26일에 결성되었다(이진경 외, 1991: 168).

서노련과 인노련이 결성되자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노동운동조직의 건

188)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기노련)은 기성 교회의 노동청년과 산업선교회 회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결성되었고 노동운동의 공개지원단체로 활동했다. 그러나 기노련은 운동이념이 분명치 않았고, 대중투쟁단체나 노동운동의 지도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홍승태, 1994: 135 참조).

189)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노투)는 1985년에 들어서서 노조 결성과 노조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즉 인천지역 해고노동자를 중심으로 구로지역의 협진, 유니진, 동일, 성원제강의 해고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이 경인지역에서 만든 한시적 투쟁위원회였다. 한편 구로지역노조민주화추진연합(구민련)은 민주노조 및 민주노조추진역량을 중심으로 구로지역에서 결성된 조직이었다. 두 조직은 현장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해고자들을 결집해 각종 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 조직들은 분명한 이념을 정립하지 못했으며, 현장 기반을 가지지 못한 활동가들만의 조직이었다는 데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다(홍승태, 1994: 135 참조).

설이 일반적인 과제로 제기되었고, 그 결과 각 지역의 활동가들은 지역투쟁위원회 결성을 추진하였다. ‘안양지역노동3권쟁취위원회, 성남노동자생존권확보투쟁위원회, 인천지역노동3권쟁취투쟁위원회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홍승태, 1994: 138~139 참조). 이처럼 1985년 이후 지식인 출신의 활동가들과 선진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대중정치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도권지역 노동운동단체들은 한편으로는 정치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운동단체간에 연대역량 강화와 함께 개헌투쟁에서 지도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서노련은 1985년 10월 인천지역노동자복지협의회, 안양3권위, 기노련 등과 함께 전국노동자민중민주민족통일헌법쟁취위원회를 결성했고, 학생운동과 같이 IMF, IBRD 반대투쟁을 전개했으며, 전태일 열사 15주기를 전후해서 개헌투쟁을 주도했다. 하지만 조직적 취약성과 전국노동자조직을 둘러싼 내부 이견, 개헌투쟁의 방향을 둘러싼 학생운동과의 견해 차이, 그리고 타계층과의 연대에 대한 협소한 관점 등의 내부 이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었다. 다른 한편, 서노련은 지역 차원에서 공동으로 임금인상투쟁을 조직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서노련과 인노련은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임금인상투쟁위원회’ 결성을 시도하였지만 견해 차이와 서노련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갈등으로 두 개의 조직으로 분화되어 나타났다. 하나는 서노련과 인노련의 ‘생활임금쟁취위원회’(생임쟁)였고, 다른 하나는 남노련 및 경인지역의 여타 그룹과 기노련이 연대한 ‘전국노동자임금인상투쟁위원회’(전임투)였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양자는 모두 임투를 정치투쟁을 위한 계기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생임쟁은 임금인상투쟁의 목표로 생활임금 쟁취를, 전임투는 최저생계비 쟁취를 내건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이들 조직들은 1986년도에 가두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는데, 서노련의 모세미용실 점거 농성(1986. 3. 9), 서노련과 인노련의 전태일 기념관에서 농성투쟁(1986. 3. 22~25), 메이데이 가두투쟁 등이 있었으며, 전임투는 삼반세력(반민족, 반민중, 반민족세력) 타도 가두투쟁(1986. 3. 16. 26)과 메이데이 가두투쟁 등을 벌이면서 ‘반제반파쇼노동자투쟁위원회(반반

노투)'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양자의 분열과 현장과의 유리된 투쟁의 결과, 1986년 임금인상투쟁의 성과는 미미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정치조직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비판의 핵심은 대중을 활동의 대상으로 파악하면서 활동가들의 조직화에만 집중했다는 점에 있었다. 즉 서노련과 인노련은 노동자계급의 기본적인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에 대한 전망이 부재했으며 더 나아가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까지 보인다고 비판받았다. 특히 이러한 비판은 5·3 인천사태¹⁹⁰) 이후 가중되었다. 특히 공식적인 지도부 배후에 비공개 지도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조직내 저항까지 동반되었고 결국 인노련이 먼저 해체되고, 서노련도 정부의 탄압으로 와해되었다(이상 홍승태, 1994: 138~144 참조).

서노련과 인노련의 와해 이후 노동운동은 대중정치조직론과 서노련 및 인노련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조직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것은 세 가지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전위조직 건설, 통일전선 및 대중조직 건설, 그리고 소위 정치적 대중조직론(PMO)이 그것이다. 우선 대중조직 건설을 둘러싸고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방법과 경로에 대한 논쟁(혁명적 노동조합론, 민주노조론, 투쟁위원회론)이 나타났으며, 정치적 대중조직(PMO)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한편, 일부는 비공개 전위조직의 건설을 시도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서클 운동”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 시기에는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노동현장에 진입하면서 노동자와의 결합을 모색하고 나아가 혁명적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모색했다. 하지만 첫째, 대중들과의 결합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둘째 전국적인 조직건설 또는 통합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운동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위조직 건설 시도는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원회’, ‘ML당 사건’, ‘제헌의회그룹 사건’, ‘반제동맹당 사건’ 등 군사독재정

190) 5·3 인천투쟁은 노동운동, 학생운동, 민통련을 중심으로 한 재야운동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채 전개되었는데, 특히 노동운동 내에서는 서노련 및 인노련과 반반노투가 견해를 달리했으며, 학생운동 내에서는 자민투와 민민투가 공동투쟁에 합의하지 못했다. 따라서 투쟁 방향상의 현격한 차이와 혼선이 노정될 수밖에 없었다(홍승태, 1994: 145).

권의 조작극에 이용되기도 했다.

첫 번째 만남과 질적으로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들의 두 번째 만남은 노동자대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새로운 만남의 주체는 전국노운협이라는 활동가들의 통합조직과 전노협이라는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이었다.¹⁹¹⁾ 이 만남으로 인해 변혁적 노동조합주의가 잉태할 수 있었다.

노동자대투쟁! 이것은 남한의 변혁운동에서 가슴 벅찬 사건이자 담론이다. 전평 이후 최고·최대라는 투쟁의 규모와 양상, 민주노조라는 조직의 발견, ‘공돌이’·‘공순이’ 또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라는 정체성의 획득, 국가와 자본과 더불어 자신이 권리의 주체이자 정치의 주체라는 정치의 발견 등은 분명 노동자대투쟁이 내장한 성과물이다(유범상, 2001 참조).

하지만, 노동자대투쟁은 1980년 광주가 발견한 사회주의와 계급에 걸맞는 실천은 아니었다. 우선, 노동자대투쟁의 발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소는 이념으로 무장한 활동가들이 아니라 야만적 노동통제와 노동환경이었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의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인 노무관리와 정부의 반공적·총량적 경제성장에 기반한 억압적 노동통제하에 있었다. 유일한 노동자조직인 한국노총은 협조적 노사관계를 표방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병영적 노동통제구조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조건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민주화라는 정치적 유화국면까지 관리할 수는 없었다. 한편, 변혁운동을 노동운동에 주입하려 했던 활동가들은 1985년 5·3 인천투쟁 이후 노동자들과의 결합을 거의 이루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987년 당시 활동가들이 있었던 사업장에서 오히려 파업이 미미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활동가들도 노동자대투쟁에서 지역적 편재와 대중지도 역량 및 조직적 준비의 부족으로 전국에 걸쳐 전개된 대중투쟁에 올바르게 대처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전후하여 지역

191) 1988년 말에 이르러 민주노동운동의 연대조직은 크게 노동조합 조직인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협의회와 활동가들 중심의 조직인 노동운동단체의 협의체인 전국노운협 두 가지로 대별되었다. 전국노운협은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협의회와 연대해서 활동했으며 민주노조진영의 이념적 지도부로서 분산된 노동조합과 노동조직의 결집을 시도했다.

적·전국적 차원의 조직적인 투쟁을 담보하기 위한 몇 개의 공개·반공개적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자대투쟁을 이념적·조직적으로 지도하기보다는 투쟁의 외곽에서 상담 등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 머물렀다.

둘째, 노동자대투쟁은 인권 또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선언이었지 노동자들의 계급선언이 아니었다. 노동자대투쟁 당시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구호 아래 ‘임금인상, 차별대우 철폐, 민주노조 건설’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전개했다. 즉 노동자대투쟁은 권위주의적 국가정치와 노동정치, 그리고 억압적 작업장 정치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리선언으로서, 이러한 선언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억압적 노무관리 철폐¹⁹²⁾와 생존권적 보장으로서 임금인상,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민주노조 쟁취였다. 하지만 당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계급의식을 인식할 정도로 의식화되어 있지는 못했다.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회사측의 노조활동 개입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었지만, 노조활동에 대한 친노동자측의 ‘제3자개입’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었다.¹⁹³⁾ 더구나 일부 노동자들은 노조의 결성과 활동을 ‘권리’로 이해하기보다는 회사측의 시혜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대체로 노동조합을 ‘인간적인 대우, 과중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구 정도로 이해하고

192) 억압적 노무관리에 대한 저항은 ‘두발 자유화’, ‘생산직과 사무직 간의 작업복, 명찰 등의 차별 철폐’ 등과 같은 권위주의적 노무관리 폐지에 대한 것이었으며, ‘관리직과 동일한 통근버스 이용’, ‘간부식당 폐지’, ‘간이세면대 설치’, ‘체조시간 폐지’ 등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근무형태의 변경(3교대 근무), 연월차 유급휴가, 법정 유급휴가, 생리휴가, 국경일 휴일 인정, 도급제 폐지 등 다양한 요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그동안 일방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반발이자, 높아진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전 노협백서 1, 1997: 162; 한국노총, 1988: 5, 23~24).

193) 앞에서 보았듯이 1987년 8월 19일 현대그룹과 현대중공업의 타협에는 “외부세력의 개입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울산지역 투쟁 현장에서는 농성자들이 한결같이 외부세력과 관련없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애썼다. 또한 8월 18일 현대그룹노조협의회가 주도한 시위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유인물을 배포하던 울산 대학생들을 붙잡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인물을 불살랐다. 그리고 농성노동자들이 경비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외부세력의 침투를 막는다는 것이었다(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7: 79).

있었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의식은 극히 초보적 권리의식과 연대의식을 견지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김동춘, 1995: 105). 또한 노동자들은 노동자대투쟁을 “우리는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생산시설의 파괴 등을 농성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제하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경제적 이익의 차원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회사측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갈망했고 기계에 기름을 치면서 농성을 계속했다(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7: 78).¹⁹⁴⁾ 또한 권리보장의 제도화·구체화·범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를 담보할 권력관계 지형의 변화로 나아가지도 못했다. 이런 점에서 1987년은 정치의 발견, 인권의 발견, 노동자 힘의 발견이 압축적으로 나타났던 ‘역사적 시간’이었다. 그리고 노동정치의 발견과 민주노조의 조직화는 권력관계 변형의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고립 분산된 노동자들의 저항, 기업별 노조에 기반한 투쟁의 조직화,¹⁹⁵⁾ 정부와 기업의 억압적·권위주의적 태도, 노동세력의 균열, 제도화의 부재 등으로 인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만들어 낸 권력관계 변형의 정치적 공간은 일정한 한계를 그 자체 속에 내포하고 있었다. 즉 기업이라는 섬 속에 갇혀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과 단위사업장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노조는, 1987년 이후 발견한 정치적 주체로서 기업별노조의 고립과 분산을 뛰어넘어 조직적으로 확장하고, 법적·제도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에서 권력관계의 변형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유범상, 2001: 150~154 참조).

194) 한편, 노동자들의 노동쟁의 참가율을 볼 때, 쟁의행위를 수반한 총분규의 91.8%인 2,969개의 사업장이 쟁의참가율이 5% 미만, 6~80%는 70건으로서 2.2%, 그리고 81% 이상인 경우는 6.1%인 196개 사업장에 불과했다. 이것은 노동자대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참가율이 지극히 저조했고 노동쟁의를 주도한 노동자들 외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관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나타낸다(노동부, 1988: 37).

195) 노동자대투쟁의 수행 주체는 각 기업별로 분산되어 있었으며 기업 차원을 넘어서 연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조차 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울산 현대그룹 노동자들의 연대투쟁, 마산·창원지역 노동자들의 공동보조, 인천 등 일부에서 보인 부분적인 연대·협조 등이 있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당장의 투쟁을 수행하다 보니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상이 아니었다(김명시, 1989: 49).

셋째, 민주노조는 어용노조에 대한 대립물이었다. 즉 민주노조는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로 무장한 조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당시 노동자대투쟁의 또 다른 주요 요구는 어용노조 퇴진이었는데, 노동자들은 기존 노조 집행부 또는 6·29선언 이후 회사측 지원을 받아 신설된 노조에 대하여 노조집행부 교체, 위원장 직선제, 노조활동 및 조합비 공개 등을 요구했다(전노협백서 1, 1997: 162). 하지만, 민주노조는 억압적 노무관리에 대한 저항으로 자발적으로 노동자들이 조직했는데 이것은 연대투쟁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즉 당시에 지역별·그룹별 연대투쟁은 이후 지역노조협의회, 그룹노조협의회 등으로 조직화되었는데, 당시의 이러한 연대투쟁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높은 산업재해로 인해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었고, 상급단체가 조직력과 투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주가 물리력과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압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무기력과 과업과 협상에서의 미숙함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지역적인 동질성, 독점재벌이라는 자본의 집중화된 형태, 기업간 상호연관성이 노동자의 연대투쟁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유범상, 2001: 144~145). 이처럼 당시의 민주노조는 어용노조에 대한 대립물이었지 계급정치를 지향하는 변혁적 노동조합은 아니었다.

결국 노동자대투쟁으로 외화된 노동정치는 계급정치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사회주의자들이 보기에, 노동자대투쟁은 민주노조가 어용노조에 대한 대립물이라는 점, 노동자의 발견이 계급의 발견으로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 노동정치의 주체가 곧 계급정치의 주체와 동일시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미흡한 것이었다. 하지만, 노동자대투쟁은 계급정치의 가능성과 잠재성이라는 대지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했다. 1987년 이후 전국노운협은 이런 대지 위에 전노협에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사회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정치를 전개했다.

그렇다면 전국노운협이란 어떤 조직인가?¹⁹⁶⁾ 전국노운협은 변혁적 노

196)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경과하면서 활동가 운동은 급속하게 정치운동으로 경도되어 갔다. 이 운동은 크게 네 가지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노동자계급 정

동조합운동을 지향했던 활동가들의 전국적인 연합조직이다. 다시 말해 노동자대투쟁을 겪으면서 목적의식적 활동가들이 계급적 전선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정치적 노선을 떠나서 결성에 모두 동의함으로써 결성되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전국적이며 공개적인 상설공동체, 민주노조운동을 지원·강화하고 민주노조운동보다 한발 앞서가는 자주적 공동체, 노동운동단체의 전국 단일대오의 과도기적인 형태”로 규정했다(김금수, 1995: 54). 이에 따라 자신들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노운협은 PMO 내지는 PO다. 위는 PO이고, 전국노운협을 다 보면 PMO라 볼 수 있다... (노운협은) 노조의 지도조직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인터뷰 A, 2003. 8. 29).

이념의 측면에서 볼 때 전국노운협은 기존의 노동조합주의에 기초한 노사협조주의나 개량주의를 반대하고 변혁지향적인 운동노선을 추구했다. 즉 전국노운협은 “전반적으로는 개량주의적 노동조합주의를 반대하는 점에서 혁명적 조합주의(revolutionary unionism)를, 노동운동이 노동자의 이익실현운동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사회의 총체적 변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 점에서 정치적 조합주의(political unionism) 경향을 견지하고 있었다”(김동춘, 1995: 364).

전국노운협은 이러한 자신들의 이념을 노동조합운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다. 전국노운협은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협의회와 연대해서 활동했으며, 민주노조진영의 이념적 지도부로서 분산된 노동조합과 노동조직의 결집을 시도했다. 그 결과 이들은 전노협을 설계했고 전노협의 산파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후 전노협 실천의 기획자들이었다. 이들은 노동조

당을 지향했던 PD계열그룹, 둘째는 김대중 비판적 지지론을 표방했던 NL계열 그룹, 셋째는 비합법전위조직을 지향했던 사노맹그룹, 마지막으로 노동운동의 대중적 기반과 노동자들의 정치적 계급의식을 주장했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노운협) 그룹이 그것이다. 이들 조직들 중에서 노동조합운동과 적극적인 결합을 시도했던 경향은 두 번째 흐름과 네 번째 흐름이었는데, 전자는 노동조합운동과 관련하여 주로 노동조합 실무와 관련된 교육활동 등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았다면, 후자는 노동조합운동의 대중조직, 특히 전노협과 그 산하 지노협 조직들과 결합하여 조직적·이념적 지도그룹이 되고자 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임영일, 1998: 170~172 참조).

합에서의 주요 실천을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경제투쟁 및 민주적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적극 지원, 노동자의 일반적 요구를 선전하고, 투쟁을 조직, 민중 일반의 생존권 및 정치적 요구를 선전하고, 투쟁을 조직, 민중운동진영의 결속강화” 등으로 잡았다. 이러한 사업방향에 의거하여 전국노운협은 공동선전과 투쟁을 수행하고 타계급, 계층, 정당과의 연대 및 제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즉 전국노운협은 노사관계를 노자관계의 대립과 투쟁으로 파악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정치적 노동운동을 추구했다(유범상, 2001: 188).

한편 전국노운협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여 통일전선에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했고, 정당건설 등의 국가정치적 지향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즉 전국노운협은 노동부 장관 퇴진투쟁, 노동법 개정투쟁, 반민주악법 폐기투쟁, 5공비리 척결투쟁 등의 정치투쟁의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고 노동자정당의 건설 조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995년 11월 3일 검찰은 전국노운협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간부들을 검거, 기소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국노운협은 사실상 조직 마비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국노운협의 위기는 이와는 상관없이 1993년 시작된 것이며 1995년 봄 한국통신노조 파업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이미 전국노운협은 상층간부들의 개인적 지도력에 의존해서 가동되는 취약한 조직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한국통신 위원장과 결합하여 이 파업을 지도한 전국노운협의 상층간부는 파업의 마무리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책임을 떠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임영일, 1998). 이러한 전국노운협의 위기는 보다 근본적으로 전국노운협의 이질적인 구성에서 비롯되었다. 전국노운협에는 조직적 위상과 노선상의 차이가 심한 조직들이 한데 묶여 있었으나 내부적 통합의 길은 처음부터 험난했다. 전위적 지도조직을 자임하는 단체에서부터 상담소에 이르기까지 구성단체가 매우 다양하고 정치적 입장도 상이했다. 따라서 조직적 구조는 단순 협의체를 크게 벗어날 수 없었고 노선과 입장의 차이가 개재되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노동운동의 정치적 성격이 강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구성원간의 의견 대립이 심해지면 언제라도 분열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었다(엄주웅, 1994: 188). 또한 전국노운협은 노동조합의 선진층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다. 1989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강화와 전국노운협의 정치적 분열에 따라 전국노운협의 애매한 위상과 취약한 조직력은 가시화되었고, 1990년 8월 공식적으로 분열되었다.¹⁹⁷⁾ 따라서 정치적으로 분열된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되었고, 1990년대 전노협 결성과 합법정당 논쟁을 경과하면서 전노협과 계급정당 혹은 반합법 전선운동 간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쟁점화되기 시작했다(조호래, 1995: 254).

한편 전노협¹⁹⁸⁾은 제조업의 민주노조들이 주축이 된 지노협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된, 이념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민주노조의 전국적인 협의체였다. 즉 전노협은 첫째 지노협으로 조직화된 제조업 노조들의 연합체였고,¹⁹⁹⁾ 둘째 이념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념성은 정부

197) 분열의 쟁점은 선진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에 있어서 전선 중시의 조직화론과 합법정당을 통한 조직화론의 대립이었다. 다수파는 '선진적 노동자의 전국적 단일 대오의 구축'을 정치적 노동운동의 조직방침으로 정하였고, 전국노운협의 성격을 전선체적 역할을 하는 노동운동단체의 공동투쟁체로 규정하였다. 반면 소수파는 산별노조와 그 전국조직, 노동자정당의 건설을 노동운동의 주된 과제로 파악하여 노동자정당 건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상당수가 민주당에 참여하였다(조호래, 1995: 253).

198) 시기별로 전노협의 주요한 활동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전노협이 6년의 활동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내용이 드러난다. 시기는 크게 ① 1990~91년 10월(ILO공대위 구성) ② 1991~93년 6월(전노대 결성) ③ 1993~94년 11월(민주노총준비위 결성) ④ 1994~95년 12월(민주노총 건설과 전노협 해산) 등 4시기로 나누었다. 시기를 이렇게 나눈 근거는 중앙의 조직형식적 위상 변화를 계기로 전노협의 실질적 기반이었던 지노협의 형태와 활동이 변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노협을 염두에 두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전노협에서부터 민주노총 건설까지를 하나의 연속성으로 파악하고자 하기 위함이다(김혜란, 1995).

199)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크게 세 갈래 흐름으로 발전해 왔는데, 첫째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들이 1987년 대투쟁과 1988년 2월 현대엔진 민주노조사수투쟁과 노조민주화투쟁을 통해 '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1987. 8. 8)를 만들고 키워온 데서 보듯이 재벌그룹 산하 대공장노조들은 그룹별로 단결해 갔다. 둘째, 제조업노조들은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1987. 12. 14)를 시작으로 서울, 인천, 성남, 전북, 진주, 부산, 대구, 경주 등에서 '지역노조협의회(또는 연합)'를 건설해 갔다. 셋째, 사무금융, 연구전문기술, 출판, 병원 등 사무전문직 노동조합들은 '연구전문직 노동조합협의회'(1987. 11. 27)를 시작으로 '업종별 노동조합협의회'로

및 어용노조에 대한 자주성과 비타협적 투쟁성으로 나타났다. 이념성이 자주성과 전투성으로 외화된 것에는 당시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은 기본적으로 과격한 단체는 아니다. 그러나 당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3당 합당을 통하여 일거에 거대여당을 만들어 낸 정부로서는 전노협이 유연한 대중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전노협=과격단체”라는 등식에 사로잡혀 이를 몰아세우기에 급급하였고, 반면 전노협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재야운동도 전노협에 과도한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이 전국적 대중조직으로서 전노협이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였다(신철영, 1995).

이러한 상황에서 전노협은 전노협의 사수와 민주노조의 총단결론을 주장했다. 전노협 사수는 빈번한 총파업 선언과 실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노협은 1990년 하반기 대공장 노동조합 선거에서 민주과가 대거 노조 집행부에 당선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90년 11월 전노협 및 업종회의와 더불어 대공장노조들이 공동 주최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것은 1991년 임투에 대한 공동대응이라는 표면적인 의의를 넘어 ‘민주노조운동’진영 전체가 의식적으로 ‘총단결’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였다. 또한 전노협은 1991년 하반기의 ILO 공대위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주도하였다. 즉 1991년 10월에 들어 한국의 UN 가입에 따라 예상되는 정부의 ILO 가입과 당시 노동부 장관의 노동법 개약 발표를 계기로 노동법 개정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노협, 업종회의, 노동운동단체가 참여하는 ‘ILO 기본협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ILO 공대위)를 구성하였다.

한편, 노동자대투쟁 이후 정당건설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²⁰⁰⁾ 이 시기 활동가들의 정치활동의 특징은 1987년 이전과는 달리 합법정당 건설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활동가들이 이 당시 비합법정당에서 합법정당 건설

전진했다.

200) 정당운동사 부분의 서술은 박병상(1997)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로 전략을 변경한 이유는 첫째,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활동가들은 대중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이다. 즉 투쟁의 성과가 선거 공간을 맞으면서 정당들의 전리품으로 귀속되는 것을 목도한 활동가들은 대중정당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둘째, 활동가들은 노동자대투쟁 이후 합법정당의 성공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열린 공간에서는 비합법정당보다 합법정당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1987년 이후 활동가들에 의해 제일 먼저 합법적인 대중정당으로 등장한 것은 민중의 당과 한겨레민주당이었다. 민중의 당과 한겨레민주당은 민중운동연합진영을 모태로 하면서 이 진영의 분화를 반영하고 있었다.²⁰¹⁾ 즉 12대 대통령 선거에서 비판적 지지파, 후보단일화파, 독자적 후보파 등의 세 가지 갈래로 분열되었던 진보진영은 13대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특히 백기완 후보를 지지했던 독자후보파 중심의 민중정당결성추진위원회(민추위)와 신당추진지역협의회가 통합하여 신당결성전국추진위원회(1988. 1. 250)를 결성했는데, 민중의 당은 이것을 기반으로 창당되었다(1988. 3. 6). 이처럼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지향했던 사람들은 13대 대통령 선거 시기의 독자후보파(민중대표 백기완선

201) 민중운동연합진영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1983. 9. 30) 이후 1980년대 최초의 각 부문운동간 연대조직인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 1984. 6. 29)와 명망가 중심의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 1984. 10. 16)를 구성했다. 민민협과 국민회의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1985. 3. 29)으로 통합되었는데, 이것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대중적 통일전선체의 탄생을 의미했다. 민통련은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위한 통일전선체로서 구로동맹파업 지지, 민주헌법쟁취 개헌헌판식 투쟁, 5·3 인천투쟁 등의 활동을 벌였다. 특히 민통련은 민주헌법 쟁취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군사독재 퇴진 및 민주헌법쟁취위원회(민헌쟁취, 1985. 11. 20)를 별도로 발족하여 향후 투쟁 방침을 개헌투쟁으로 압축하였으며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 1987. 5. 27)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본은 재야와 야당(민주당)이 공동으로 직선제 개헌의 조직적 연대들을 형성한 것으로서 반독재의 민주연합전선이었다. 6·29 선언 이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중운동세력과 야당은 각각 분열하였다. 국본은 야권 단일 후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당과의 분리를 결정하는 등 민주대연합구도를 공식적으로 폐기했다(1987. 11. 5). 특히 민중운동세력은 비판적 지지그룹, 후보단일화그룹, 독자후보그룹의 세 가지로 분열되었다. 한편 민통련은 결국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발표했다.

생 대통령후보 추대위원회)로부터 민중후보 백기완 선거운동 전국본부(백본), 그리고 제13대 대선 이후 민중정당결성 전국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3대 총선에서 민중의 당으로 결집했다.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 독자 후보론을 주장했던 정치세력들에 의해 창당된 '민중의 당'은 민중당 창당의 실질적인 뿌리였다. 민중의 당은 이념적으로는 민중민주주의적 경향을 보였고 조직적으로는 이른바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지향했다. 이런 점에서 민중당 창당의 과정은 곧 민주대연합론을 주장했던 여타 정치세력에 대해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지향했던 정치세력의 오랜 투쟁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물이었다. 한편 야권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예춘호, 이현배, 유인태 등은 야권 통합이 무산되자, 한겨레민주당을 창당하여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13대 총선체제로 들어갔다(1988. 3. 29).

민중의 당과 한겨레민주당은 계급적 기반이 상이했는데, 한겨레민주당이 '양심적인 각계각층의 국민'을 강조하고 있는 데 비해, 민중의 당은 노동자, 농어민, 도시빈민 등 민중에 기반하는 계급성을 강조했다. 정당의 실질적 주체세력에 있어서도 한겨레민주당은 비교적 명망 있는 재야정치인이나 학생운동 출신의 젊은 지식인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한겨레민주당은 기존의 보수정당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평민당과 민주당을 포괄하는 범야권 통합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민중의 당은 비합법 노동운동계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노련)과 제현의회그룹(CA)의 노동자해방투쟁동맹(노해동)이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다.

13대 총선 결과 민중의 당은 16개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켜 정당별 득표율 0.33%를, 한겨레민주당은 전국 65개 지역구에 총선후보를 출마시켜 1.28%라는 득표율을 얻었다. 한겨레민주당의 득표율은 지역구 수를 감안하면 민중의 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중의 당은 13대 총선 이후 민중정당재건추진위원회(재건위)로 재편하고 새로운 조직 통합작업에 나섰다. 재건위는 앞으로 건설될 정당을 민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합법적 대중정당으로 규정하고 그 주체로서 노동자, 농어민, 도시빈민, 소상공인, 진보적 지식인, 청년학생 등 제국주

의적·독점적 지배에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민중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한다고 결의함으로써 정당의 계급적 이념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재건위는 한겨레민주당과의 통합 논의도 본격화하여 통합을 이루어 내는 과정에서 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정치연합(진보련)을 결성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합법정당을 통한 민중진영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노력은 적어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중운동진영 내에서 정당 건설의 모색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것은 13대 대선 이후 민통련의 와해가 가시화되면서 새롭게 발족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1989. 1. 21) 내부에서 발생하였다.²⁰²⁾

영등포을 재선거 이후 전민련은 합법정당에 관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해 토론했다(1989. 9. 25~26). 첫 번째 안은 ‘전민련과 합법정치전술’로서 합법정당 건설이 현시점으로서는 시기상조이며 지금은 오히려 전민련의 조직적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합법정당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안은 ‘현시기 정치정세와 합법정당 결성의 필요성’으로서 새로운 대체세력으로서 합법정당의 결성을 즉각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법정당건설론자들은 민주화운동이 침체에 빠지고 있는 것은 정치적 대체세력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합법정당의 결성을 통해 새로운 대체세력을 제시하는 것은 운동 전체의 발전에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전민련도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합법정당 건설에 대한 안은 부결되었고 이를 추진했던 인사들(이우재, 장기표, 조춘구 등)은 전민련을 탈퇴했다. 이들은 새 정당 창당을 위한 임시연락사무소(1989. 10. 6)를 설치하고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했다.

이들은 독자적 진보정당 건설을 통한 새로운 정치적 대체세력의 창출과 지역균열에 기초한 기존의 보수정당체제의 극복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평민당이나 민주당 등 주요 야당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

202) 전민련은 노동자, 농민 등 8개 전국단위 부문운동단체와 12개의 지역운동연합단체가 모여 결성된 조직체로서, 현대 한국정치사에서 민족민주운동단체의 연합기구로서는 최대의 조직이었다. 전민련에는 민통련과는 달리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등 계급운동 부문까지 참여했다.

다. 그리고 새 정당의 이념을 민중민주주의로 정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목표로 하는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사업을 구체화했다. 특히 합법정당 추진세력들은 ‘진보적’이라는 표현을 통해 ‘혁신’과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새 정당의 기반으로서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중간계계층, 중소기업인, 그리고 청년학생을 포괄함으로써 이념적 급진성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였다. 여기에서 민중민주주의는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사회주의 이행기에 해당하는 일반적 개념이 아니라 ‘민중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표현함으로써 개념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박병상, 1997: 99~100 참조).

한편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에 대한 또 하나의 흐름이 다시 전민련에서 제기되었다. 전민련에서의 합법정당 논의는 전민련에서 합법정당 건설에 관한 안을 부결시킨 지 불과 5개월 만에 제도정치권에서의 3당합당을 계기로 촉발되었다. 즉 1990년 2월 20일에 열린 제20차 중앙집행위원회는 정당활동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문건인 ‘민족민주운동의 정당사업에 관한 전민련의 입장’을 결의안으로 통과시켜 이를 다시 3월 3일 제2기 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안은 부결되었으며, 이에 반발하여 정당활동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부영, 이재오, 여익구 등)이 전민련을 탈퇴했다. 이들은 이우재, 장기표, 조춘구 등의 진보정당 준비모임과 구한겨레민주당의 제정구, 유인태 등과 같이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연추, 1990. 4. 13)를 출범시켰다.

한편 민연추는 야당과의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 논쟁이 재연되었다. 민연추는 1990년 5월 12일 비상시국대강연회를 계기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던 야권통합 논의가 표면화되자 이를 5월 19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논의는 ‘선주체형성 후연합’을 주장하는 다수파와, ‘전면적인 야권통합’을 주장하는 소수파와의 의견 대립만을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야권통합파(이부영, 박계동, 고영구, 제정구 등)는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탈퇴를 공식화했고²⁰³⁾ 독자창당파는 민중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203) 1990년 5월 30일 야권통합론을 주장하며 민연추를 탈퇴한 이부영 등 민주연합정

민중당 창당대회에서는 상임대표위원에 이우재, 대표위원에 김낙중, 강상기 교수를 선출하고 사무총장에 이재오, 정책위원장에 장기표를 선임하였다. 민중당이 조직 확대와 총선 준비에 당력을 쏟고 있을 때 ‘전민련’은 산하에 전노협, 전대협, 전빈련(전국민민운동연합) 등과 함께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와 민중기본권 쟁취 국민연합’을 결성(4. 21)함으로써 전선운동을 새롭게 재편하고자 했다. 한편 재야민주화운동세력은 반민자당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다가오는 제14대 총선정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1991년 4월 26일 시위도중 경찰의 폭력으로 희생된 강경대의 죽음은 재야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제공했다. 재야민주화운동세력은 보수 야당을 포함하여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범국민대책회의, 1991. 4. 27)를 신속하게 결성하여 규탄 시위를 주도하게 되었다. 범국민대책회의는, 국민연합 등 사회단체를 비롯해 전민련과 종교단체, 그리고 야3당 등 성격과 위상이 다른 조직들이 경찰에 의한 명지대 학생 강경대 타살사건을 계기로 한시적 공동투쟁체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전개된 규탄 시위는 5월 18일을 고비로 다시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범국민대책회의라는 한시적 공동투쟁체가 갖는 일관된 투쟁계획의 부재와 조직적 동원의 실패, 그리고 지도부의 의견 대립으로 결국 명동성당에서 수세적인 농성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범국민대책회의의 무기력한 조직역량으로

당추진론자들은 바로 다음날 범민주 수권정당 결성을 위한 통합추진회의(통추회의)*를 결성하여 또다시 야권통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하지만 결국 통추회의는 야권통합이 무산된 후 각각 선호하는 야당을 기준으로 신민주연합과 신민련으로 분리되어 각각 민주당과 평민당으로 흡수되었다.

*) 통추회의는 재야의 원로들과 각 지역 및 부문 대표, 그리고 민연추 탈퇴파들이 연합하여 구성되었다. 6월 27일의 제2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통추회의를 공식화시키고 공동대표와 상임실행위원, 그리고 상임실무간사를 선출했다. 이날 추대된 공동대표와 상임실행위원은 대부분 각계의 명망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부의 결속력은 취약했다. 공동대표로는 기독교(김관석, 박형규), 불교(지선), 여성(이우정, 박순경), 법조계(유현석, 박세경), 학계(장을병), 문화예술(고은, 김규동), 호남(명노근), 영남(최성목) 등 12명이다. 그리고 상임실행위원으로는 오충일, 이부영, 제정구, 이재정, 박종화, 김동완, 여익구, 윤순녀 등 8명이다(박병상, 1997: 112).

인해 재야 민주화운동세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새로운 민중운동연합체 건설이 제기되었고, 논의 결과 전국연합이 출범했다(1991. 12. 1). 전국연합은 1991년 12월 20일 제1기 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4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총선거 대응방침’을 결정하고 총선대책반을 결성하였다. 전국연합이 제의한 공동대책기구에는 전국연합과 업종회의, 그리고 정당으로서는 민중당과 민주당과의 상호결합을 전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국연합이 설정한 정권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세력은 민주당밖에 없었기 때문에²⁰⁴) 이것은 사실상 민주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완곡한 표현이었다. 민주당은 전국연합이 제안한 후보단일화론을 거부했고 전국연합은 독자 출마를 결정하였다. 이것은 전국연합이 민중당과의 연합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연합은 독자 후보를 내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재야 민주화운동세력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분열의 모습을 강화시켰고 민중당의 선거참여 의미와 효과를 반감시키는 데도 역할을 하였다(박병상, 1997: 138~139 참조).

한편, 반합법조직체로서의 전국연합이 추진했던 민주대연합구도와는 달리 노동운동세력이 중심을 이루는 비합법 정치조직체에서도 제14대 총선에 대응하는 조직 재편의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었다. 1990년 5월 당시 국민연합 중심의 반민자당 투쟁노선에 대해 그 계급적 입장과 정치적 전망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하고 단순한 반정부 투쟁만을 계속하는 것은 부르주아 야당이나 도와줄 뿐이라며 혁명적 전망을 가진 독자적 강령으로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의가 노동운동권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었다(인노련, ‘정세분석과 정치투쟁의 지침’(1990. 5. 2). 박병상, 1997: 139 재인용).

이런 맥락에서 인노련은 당시 수도권 지역의 노동현장에 다수의 조직망을 건설하며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 건설론’을 주창하고 있었다. 특히 인노련은 혁명적 노동자 정당 없이는 ‘전략’도 없고 ‘민족민주전선’도

204) 전국연합은 총선 직전에 이른바 ‘전국연합이 지지 지원하는 민주후보’를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서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를 살펴보면 3월 1일 현재 전체 22명의 지원후보 가운데 민주당 14명, 민중당 6명, 민중회의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박병상, 1997: 139).

없다고 강조하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정당 건설을 통해 반프롤레타리아 계급을 결집시키고 다시 이를 기초로 하여 소부르주아지 계급을 견인하면서 전체 민족민주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합법정당에 대한 이러한 방침은 기본적으로 13대 총선 시기에 민중의 당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인노련의 경우, 이 시기에 비합법 노동자정당 중심의 합법정치전술론이 이미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박병상, 1997: 140). 한편 ND도 노동자계급정당의 건설을 주장했다. ND의 핵심세력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²⁰⁵은 민중당이 건설된 1990년 11월의 현시기를 사회주의혁명진영이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감격적인 시기라고 규정하고 혁명적 사회주의세력의 공동투쟁을 촉구했다. 이들은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등의 실질적인 사회주의 권력으로서의 이행을 주장했다(박병상, 1997: 140 참조). 한편 인노련을 비롯한 PD계열의 소수 정파들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었다. 인노련은 노동자계급정당의 건설을 위해 PD의 다른 소수정파들과 조직통합을 서둘렀다. 특히 1989년 5월 서울과 인천, 그리고 성남 등 수도권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하던 노동운동가 일부와 학생운동권 출신의 활동가들이 결합한 ‘노동계급’ 그룹도 반제반독점 민중민주주의 변혁론(ALAMPDR)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노련과 큰 흐름을 같이할 수 있었다. 또한 민족통일 민주주의 노동자동맹(삼민동맹, 1988: 10)도 출범과 함께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당면 변혁의 성격을 민족통일 민주주의 민중혁명으로 규정하고 현실적으로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역량을 집중시켰다. 삼민동맹은 구체적 정세 인식에서는 인노련이나 노동계급과 차이는 있었지만 당면한 변혁의 성격과 과정, 그리고 한국사회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있어서는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계급과

205) 사노맹은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독자파의 한 분파를 형성했던 CA계열의 노해동에 속해 있던 핵심활동가들이 조직이 와해되자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할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목표로 조직분리를 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들은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사노맹 건설을 본격화하고 1989년 11월 12일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전국회의가 주최한 서울대 집회에서 사노맹 출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조직을 공식화하였다(박병상, 1997: 140~141).

삼민동맹은 각각 1990년 1월과 4월에 주요 활동가들이 연행되면서 위축되었다(박병상, 1997: 141~142).

한편, 노동운동 내부에서 합법정당 건설 흐름과 연동되어 1991년에는 투쟁에 대한 책임공세가 계속되었다. 노동단체운동은 소위 선진노동자조직론자들과 민중당 불참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민중당 참여(동조)세력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분리되었다. 전국노운협의 1차 분회는 1991년 합법정당(민중당)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민중당노동위와 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련)으로 분리해 나갔고, 전국노련에서 다시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추진세력이 빠져나왔다.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노운협'은 3월 '전민련'의 합법정당에 관련하여 노선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가 9월에 들어서 내부의 정치·조직노선에 대한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났다. 9월 초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전국노운협'을 단일한 선진노동자조직으로 발전시키자는 '조직강화방안'에 관한 결의가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지려고 하자, 이에 반발하여 10여 명의 중앙위원이 집단적으로 퇴장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초 결의안은 "상급정책단위의 결의를 무시하고" "정치적 방침을 제출하는 것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임집행위 재구성과 강화, 전민련 파견간부의 소환" 등 6가지의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퇴장한 중앙위원 소속단체들은 대체로 독자정당 추진을 지지하는 그룹이었는데, 이들은 그 후 전국노운협을 탈퇴했다. 신철영 의장을 비롯하여 이들 중앙위원들은 11월 "3파연합(선진노동자조직론, 김대중 비판적 지지파, 전노협해소파)과 투쟁하는 중앙위원 일동"이라는 명의로 전국노운협이 분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분리파의 일부는 '전국노동운동단체연합'(전국노련)을 새로 발족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민중당으로 합류하였다.

한편 사노맹은 안기부의 집중적인 탄압으로 무력화되었다. 인민노련은 1991년 7월 노동계급, 삼민동맹 등과 함께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즉 PD계열의 비합법 노동운동 조직체 가운데서 위에서 열거한 세 정파를 중심으로 하여 이른바 3파 연합이 형성되면서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1991. 7)가 결성되었다. 하지만, 인노련은 사회주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노선 전환에 착수했다. 즉 계급정당 건설

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조직 내부에서부터 공유됨에 따라 합법정치기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정당건설노선이 제기되었다. 주대환 한사노창준위 위원장은 ‘노동자정당건설 전략에 대해 재고를 요청함’이라는 문건을 통해 합법정당으로의 불가피성과 민중당과의 통합을 통한 선거전략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른바 ‘신노선’을 제출했다(주대환, ‘노동자정당건설 전략에 대해 재고를 요청함’(1991. 9. 29), 주대환, 1994: 52~71). 즉 민중당과의 결합과 합법적 정치기술론으로 집약되는 ‘신노선’²⁰⁶⁾은 기본적으로 한사노 창준위의 현실적 조건을 반영한 것이지만 조직 내부에서의 치열한 논쟁을 피할 수 없었다. 한사노 창준위의 제1차 중앙위원회의 회의록은 당시의 이러한 입장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주대환, 1994, 『진보정치의 논리』, 현장문학사 참조).

인노련이 노선 전환을 하는 과정 자체가 ‘한국자본주의 진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아래에 깔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결정적인 계기는 첫째, 인민노련의 신지호라는 사람이 ‘고백’²⁰⁷⁾이라는 제목의 전향서를 쓰고 돌아선 것이었다고 생각한다(인터

206) ‘한국 사회주의노동당’의 결성을 추진했던 주체들도 ‘신노선’, 즉 정통적인 사회주의 노선의 폐기 및 마르크스-레닌이즘에 입각한 혁명적 노선을 폐기하는 대신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사회주의 전략을 채택하였다. 합법적인 의회 공간을 활용하는 전략이 진보정치운동의 주요한 목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즉 신노선은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을 포기하는 대신 민중의 중심성에 기반하는 정치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정당들은 민중 주체의 정당, 민중이 주도하는 정당, 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 등의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당시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이 노선을 채택하게 된 동기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패망을 접하면서,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이념적 정치운동을 포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로는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점진적 개혁으로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보장하고, 체제 수준의 갈등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다. 셋째로는 전투적인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은 부르주아 국가의 탄압을 자초하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에 불과하다는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넷째로는 다수자 중심의 정치운동이 아니고서는 사회체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식을 내재하고 있었다. 다섯째로는 노동자 계급운동의 고립화 현상이 다수의 국민대중과 함께하지 않는 노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7) 그는 자신의 글에서 “누군가가 먼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내고 자유로운 토론을 촉구하는 것이 그나마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는 길이라면서 “이 시대에

류 C, 2004. 2. 4).

신노선에 관한 조직 내부 논의와 함께 한사노 창준위는 향후 정당 건설의 경로와 민중당과의 통합문제, 그리고 구체적 대응방침 등을 둘러싼 쟁점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비합법 전위정당 형태의 사회주의노동당 건설 노선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었고 그 대신에 합법적 노동자정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었다. 즉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어 독자적인 합법정당을 건설하고 이러한 합법정당을 통해 의회민주주의의 정치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민주적 계급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노선의 변화에는 궁극적으로 민중당과의 통합과 함께 민중당 내에 포진되어 있는 한사노 창준위 소속의 활동가들을 재조직하여 민중당에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함으로써 개량주의화되고 있는 민중당을 올바르게 견인한다는 관점이 내재해 있었다. 결국 한사노 창준위는 내부의 논의 결과에 따라 합법적 노동자정당 건설로 방향전환을 결의하고 1991년 12월 15일 한국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노정추)를 발족시켰다.

노정추의 신노선은 ND파는 말할 것도 없고, 기타 다양한 좌파의 소규모 노동운동 조직체들로부터 개량주의나 패배주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특히 전국노운협은 노정추의 출범에 대해 대중의 광범위한 투쟁보다는 선거에서의 득표율을 기반으로 정치세력화를 이루려는 ‘민중당의 재탕’이라고 규정하고 그 추진방식에서도 음모적이고 비대중적 활동방식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민족민주운동의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한국노동당, 민중당과 무엇이 다른가』, 『노동운동』, 1992년 1월호, 박병상, 1997. 144 재인용).

이같이 합법정당 건설과 민중당과의 통합문제는 진보진영의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노정추는 주대환 한사노 창준위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12월 21일 인천에서 열린 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강연회 개최를 계기로 전국적인 조직화 사업에 나서게 되었다. 그 결과 1992년 1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본주의 체제 내의 다양한 개혁운동”이라고 고백한다(신지호, 1992: 184).

19일 ‘한국노동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한노당 창준위)가 결성됨으로써 한국노동당 건설은 보다 구체화되었다(박병상, 1997: 144).

한노당 창준위는 계급정당으로서 한국노동당이 합법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노당 창준위의 창당 과정은 이미 예정된 수순을 밟는 정도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실제로 당시 주대환 공동대표는 한국노동당이 창당도 되기 전에 민중당과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창당 과정은 이념문제가 아니라 세력간의 역관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한노당 창준위는 진위정당이나 계급정당을 건설하려는 의지는 충만했지만, 결국 실질적인 정당 자원은 극히 미약한 상태였음이 민중당과의 통합 과정과 그 결과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자파 소속 민중당 활동가들의 독자적 정치활동, 그리고 확고한 당권을 장악하고 있던 민중당 지도부로부터의 견제 등에 의해 오히려 견인되는 상태에 이르렀다(박병상, 1997: 145~146 참조).

우선 양당 통합 과정을 보면, 1991년 12월 23일 민중당은 노정추로부터 양당 통합에 대한 공식적 제안을 접수하고 나서 통합의 원칙과 실무적인 내용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 노정추의 통합조건은 노동자계급에 기초하고 당명은 ‘노동당’으로 하자는 것과,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것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김문수, 1992: 38~43). 노정추는 1992년 1월 6일 당명을 ‘한국노동당’으로 할 것과, 민중당과 노정추, 그리고 민중회의 등을 포함하는 공동대표 제안을 골자로 하는 2차 공문을 민중당에 보내지만, 민중당 내의 반대 의견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었고 노정추 지도부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이 가속되면서 통합 과정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1월 18일 주대환 위원장 등 주요 간부들이 구속되었다.

한노당 창준위는 정당 건설이나 민중당과의 통합논의 등 주요 현안이 주객관적 조건의 어려움으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1월 19일 ‘민중당과 노동당의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제안’이라는 제3차 공문을 보내게 되었다. 여기서는 총선까지 당명은 민중당으로 하고 총선 후 1개월 내에 한국노동당으로 당명 개정을 결의한다는 것과 당지도부 구성은 통합 정신을 반영하되 그 구체적 내용은 통합교섭대표에게 위임한다는 이전보다는 상당

히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결국 한노당 창준위는 민중당과 통합하여 통합민중당을 결성했다. 그리고 14대 총선에서 52명의 후보를 출마시켰지만 의석을 얻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 민중당 지도부가 당 해체를 선언했다. 그러나 당 유지를 주장한 구한국노동당세력은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를 결성했다. 14대 대선에서 ‘진정추’, ‘사회당추진위원회’, ‘민중회의(준)’, ‘전국노련’ 등은 백기완 민중후보 대통령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진보정당의 맥을 이어 나갔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 시기의 정당운동은 첫째,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이들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합법정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주의적 선거전략을 주요한 노선으로 채택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합법정당의 건설을 위한 시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시도되었으나, 이제는 단지 전술적인 과제로서 운동영역을 확장해 들어간다는 의미에서보다는 민민운동진영의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합법정당 건설운동과는 질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변혁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사상적 조류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합법정당 건설운동은 당연히 이념적으로나 실천적 방도에 있어서나 기왕의 민민운동과는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었다. 즉 민족민주변혁운동에 대한 전투적 지향성보다는 합리적 개량과 합법적 수단, 그리고 정책적 대안 등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변혁적 과제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제도정치권 내에 민중진영의 정치적 진출을 가시화하려는 노력 속에 그러한 변혁적 과제를 해소해 버리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전국노운협, 1990: 10~12).

이 시기 정당운동의 두 번째 특징은 대중조직들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전노협은 대중운동에 더 큰 역점을 두고 있었다. 전노협은 1991년 6월 20일 광역의회선거가 기대에 못미치자 14대 총선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즉 전노협의 14대 총선방침은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반민자당 연합전선 구축으로 압축되는 전국연합의 선거방침에 따른다는 것이었다. 전노협은 전국연합의 가맹단체이기 때문에 전국연합의 선거방침에 따른다는 것은 명분으로는 타당한 결정이었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사실상 독자적 진보정당운동을 추구한 민중당에 대한 지지를 거부한 것이며 동시에 전국연합이 추구한 민주

대연합론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4대 총선과 관련해서 볼 때 전 노협과 민중당 사이에는 아무런 공식적인 관계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전 노협 간부들이 민중당 활동과 선거활동에 집중하는 현상에 대해 오히려 전노협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박병상, 1997: 46).

제3절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1. 자유민주주의와 만남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민주노조진영과 사회주의의 만남을 통해 형성 되었는데, 이를 매개한 사건이 1980년의 광주민주항쟁이었다. 한편, 한국 노총과 자유민주주의가 만나 실리적 노동조합주의가 잉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은 1987년의 민주화대투쟁과 노동자대투쟁이었다. 그런데 1980년 광주가 발견한 것이 계급과 사회주의였다면, 1987년 민주화 투쟁이 발견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내에서 경제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였다. 여기에서 특히 지적해야 할 점은 한국노총이 민주화와 노동자대투쟁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기보다는 민주노조운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어쨌든 1980년 광주와 1987년 민주화의 양대 사건은 그 성격을 달리했고 두 사건에 존재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노조진영과 한국노총의 노동운동이념은 다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양자간의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여기에서는 실리적 노동조합주의의 계기를 만들어 준 한국노총과 자유민주주의의 만남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국노총은 1987년 직후까지도 군부독재와 공모관계, 엄밀하게 말하면 종속관계에 있었다. 그것은 나중에 자신들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인정한 1987년 군부독재에 대한 지지, 즉 호헌에 대한 지지에서 나타났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과오는 한국노총이 정치적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987년 민주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호헌조치에 최소한 침묵의 소극적 저항이라도 하지 못한 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한 사실이었다. 이것은 한국노총의 허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이며... 한국노총의 어용성을 다시금 보여주는 더 이상 논박될 수 없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 되어 버렸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90: 229).

당시(1987년-연구자 주)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리 보전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노조결성은 해고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았는가? 분규는 감옥살이로 등식이 되었다. 보통 노조간부는 마음속으로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달리 행동할 수 없었다. 외부의 논란도 있었다. 마지못해 정치적 판단이 나왔다. 그때는 전두환 정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못했다(인터뷰 J, 2003. 7. 23).

하지만 1987년의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의 ‘대사건’을 계기로 군부독재의 이념적 기반이었던 반공주의와 근대화에 기반한 한국적 민주주의 또는 냉전적 자유주의는 더 이상 지적·도덕적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제적 수준에서 1970년대의 데탕트 이후에도 한국사회는 분단이라는 현실로 인해 냉전적 자유주의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했고 이것은 군부독재에 의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기능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냉전적 자유주의는 자신의 존재기반이자 정당화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근대화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 왜냐하면 근대화는 자본주의의 물질 토대를 갖추는 과정에서 중산층이라는 반독재 의식을 갖는 ‘시민’과 억압적 국가권력에 저항적인 시민사회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한편 근대화로 인해 광범위하게 나타난 제조업의 대공장에 모인 동일한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도 성장이데올로기를 비인간적 대우와 억압의 주범으로 점차 지목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배세력은 민간정부 수립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도입을 통해 지배연합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군부독재 시대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더 이상 지배이념으로서 군림할 수 없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동일시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르러 자유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라는 정부의 강변과는 달리 한국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과 대립되고 있다는 것이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롭게 발견된 자유민주주의는 우선 권력의 독주에 대한 견제장치를 갖고 있었고, 작업장에서의 최소한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적 저항은 노동운동 영역에 급속하게 전파되었고 이것은 1987년의 7, 8, 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나타났다. 냉전적 자유주의가 절차적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저항을 흡수했듯이, 한국노총은 협조적 노동조합주의 대신 새로운 노동조합주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저항을 감내하고자 했다. 이처럼 한국노총은 새로운 노동조합주의로 변신하지 않고서는 안 될 상황에 처해졌고 극단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한국노총은 비로소 자신들의 이념과 행위양식의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1987년의 시점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자대투쟁 앞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노동정치 주체 중의 하나였고 정체성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왜냐하면 민주노조 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고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어용노조’ 또는 ‘황색노조’라는 문체의식과 비판이 전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한국노총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신퇴 부분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변신의 몸부림 속에서 내부민주화와 운동방향의 정립”(한국노총, 『사업보고』, 1990: 491)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했다.

국가정치 수준의 민주화 외에도 한국노총이 개혁을 보다 가속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노동정치 내부에 있었다. 그것은 전노협이 결성되면서 한국노총은 상급단체 수준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법의 혜택을 입어 경쟁이 없는 무풍지대에서 안주해 왔던 한국노총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지도력과 정당성을 인정받지 않으면 조직 자체가 위기에 빠질 상황이 되었다. 물론 전노협은 출범 당시의 규모가 전체 노조수의 10%에도 못 미치고, 조합원수도 전체의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전국의 ‘민주노조’를 대표한다는 상징성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어용’이라는 규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노총 으로서는 전노협의 등장 자체가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선명성’ 경쟁에 있어서는 한국노총을 압도하고 있는 전노협의 출범으로 인하여 한국노총은 기존과는 다른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고, 그 결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전노협뿐 아니라 사무전문직노조들의 업종회의로의 결집, 대기업노조의 연대회의로의 결집의 경향 등도 한국노총의 위기감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고조시켰다.

한국노총의 개혁을 추동한 또 하나의 요인은 산하 조직들의 변화였다. 이미 1987~89년의 노동운동의 고양기에 과거 한국노총의 ‘어용성’을 낳았던 수많은 낡은 노조간부층이 노조로부터 밀려났고, 그러한 경향은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한국노총의 주요 조직 근간을 이루고 있던 철도, 자동차, 전력, 부두 등의 산별연맹은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거의 요지부동이었지만, 섬유, 금속, 금융 등 제조업 생산직과 사무직이 주류를 이루는 산별연맹에서는 이미 민주화를 학습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노총 집행부는 이러한 산하 조직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고, 특히 ‘개혁성’과 ‘선명성’을 내세워 한국노총의 지도권을 장악한 박종근 집행부로서는 더 더욱 그랬던 것이다.

결국 한국노총은 저항과 변화에 항복했다. 한국노총의 변화에 대한 전략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변화에 보다 적합한 정파, 즉 반공주의의 혜택을 누리던 보수파가 아닌 개혁파를 통해 난관을 돌파하고자 했다. 박종근 위원장 체제의 등장은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산물이었다. 다음으로, 자신의 이념을 정비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고자 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하의 노동조합주의, 즉 복지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라는 명칭의 실리적 노동조합주의의 채택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980년대의 민주화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한국적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옷을 갈아입을 수밖에 없었으며 한국노총과 자유민주주의의 만남은 자신들의 노동조합주의를 보다 세련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2. 내용과 정의²⁰⁸⁾

한국노총의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는 1987년 도전을 받기까지 큰 난관 없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1987년의 민주화대투쟁은 한국노총의 존재 이유와 행동규범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던졌다. 한국노총의 새로운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모색은 이러한 결정적 위기에 대한 생존권적 항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된 한국노총의 새로운 노동조합주의는 “민주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 즉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1990년에 공식화된 새로운 노동조합주의의 내용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노총이 극복하려 했던 협조적 노동조합주의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노총의 노동조합주의는 노동기본권이 크게 제약된 권위주의적 정치하에서 시도되었다. 따라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까지 존재했던 반공적 또는 협조적 노동조합주의의 시기는 제3장에서 서술되었듯이 엄밀히 말해서 “노동조합은 있었으나 노동조합주의는 존재하지 아니했던 시기”(박세일, 1991: 25) 또는 “노동조합주의에 머물러 있었다기 보다는 노동조합주의조차 제대로 충실하게 해내지 못”했던 시기로 규정될 수 있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90: 231). 이런 점에서 그동안 한국 노동운동에 주어진 정치적 과제는 노동조합주의적 노동운동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즉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확보, 민주주의 확립에 있었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90: 231).

한국노총 박종근 당선자는 이상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는 한국노총의 체질 개선과 한국노총의 제2탄생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설정했다.

첫째, 노동운동에 있어서 자주성과 주체성을 완전히 회복한다. 둘째, 그동안 누려온 법적 특혜에 의한 독점적 지위로부터 스스로 과감하게 벗어난다. 셋째, 노동운동의 현장성을 회복한다. 이를 위해 사무국의 기구와 인원을 확대·강화되고, 업무의 전문화를 제고한다. 넷째, 현재 진

208) 이 부분은 유범상(2001: 195~198) 참조.

행되고 있는 노동운동을 올바르게 지도한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90: 232~234).

앞의 두 가지 언급은 어용적인 협조적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비판, 즉 노동조합 독립성의 지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박종근 위원장이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노총은 기관원의 소굴’이라고 말할 정도로 심한 정부의 개입”을 받고 있었다(이성희, 1993: 153).

70년대, 80년대의 경우 항운노조에서 한국노총 위원장을 많이 했다. 돈줄이 막강하게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노총 위원장은 노동부 노정국과 안기부에서 귀락파라했다. 1983~84년 전두환 시절 들어선 이후에 산별위원장들이 회의를 하다가 농성한다고 결정을 했었다. 우리는 투쟁 준비를 위해 매트를 준비하는 등 신나 있었다. 그런데 당시 노동부 노정국장인 정동우가 나타나서 산별위원장들을 개별 면담한 후 바로 해산했던 사례도 있었다. 노동부와 안기부가 워낙 개인들의 약점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좌지우지했었던 것이다. 산별연맹 선거에도 개입하는 등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인터뷰 D, 2004. 2. 25).

이처럼 박종근 위원장 직전까지만 해도 정부 기관원과 한국노총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박종근 위원장의 개혁 시도 이후 이것은 상당부분 완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종근 위원장 측근과 박종근 위원장 자신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박종근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기관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정부와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냈다”(이성희, 1993: 153).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 말한다면 일차적으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했다는 것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노총은 정부 기관원들이 우글거리면서 노총이 하는 일에 대해 일일이 간섭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내가 위원장이 되면서 일차적으로 한 것은 기관원들을 노총에서 쫓아낸 일이었다”(박종근 인터뷰. 이성희, 1993: 158 재인용). 당시 박종근 위원장 체제에서의 한국노총의 개혁 작업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사람을 정부 쪽과 비위에 안 맞는 사람으로 쫓다. 이○○(복지공단 경인본부장, 구대우자동차금속 출신)이 천○○와 김○○와 해고되었던 사

람을 다시 사무총장으로 데려왔다... 인사개혁과 정치부서를 새롭게 만들고, 대외협력을 대폭 보강을 했다. 가시적으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1988년 11월 9일)했다. 그리고, 우리 노총의 역사 5층과 6층 사이에 쇠창살이 있었다. 우리가 특하면 노총을 점거하니까 밑에서 온다 하면 계단 5층에서 6층을 철거했다. 상징적인 것이다. 그것을 없애고, 정치부 신설, 구체적으로 민주노조한테도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겠다고 선언(1990년부터)한 후, 우리가 1990년부터 노동절 행사를 하고, 정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복구한다고 쫓아다녔다(인터뷰 K, 2003. 8. 14).

박종근 체제의 보다 중요한 업적은 기존의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를 새롭게 단장하려고 했다는 점에 있다. 우선 이때부터 한국노총은 자신들의 존재의 기반이자 탄생의 모태였던 반공주의를 명시적으로도 삭제했다.

(연구자: 1993~94년 박종근 체제하에서 한노총의 강령 중 반공주의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입장 변화가 있었는가?) 특별히 논의된 것은 아니었다. 반공주의 삭제에 대한 논란이 없었다. 실무 차원에서 빼버렸다. 반공주의를 모토로 해서 출발했던 것이고, 어느 순간에... 그 실무 차원에서 뺀 것이다(인터뷰 K, 2003. 8. 14).

이처럼 한국노총은 반공주의를 ‘지양’하고 정치활동 및 정책활동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주의를 추구하고자 했다. 박종근 위원장은 1988년 12월 1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토대로 하여 자본주의 모순을 체제 내에서 극복, 개선, 보완하여 균등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한국노총의 운동 기조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목적사업으로서 근대적 노사관계의 확립,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3권의 확고한 행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정치참여 활동을 주요한 수단으로 삼겠다고 밝혔다(강순희, 1998: 75~76). 이것을 통해 볼 때 한국노총은 분명히 개혁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노동조합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했다. 이것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투쟁을 전개함은 물론 “반공 일변도의 권위주의 체제하의 고식적 보수적인 사고나 시각에서 벗어나 미래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응한 폭넓고 원대한

시아에서 정치지향적 노동운동의 끊임없는 방향 조정”을 천명한 것이었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90: 490). 이처럼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은 경제적 목적과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과 체제내적인 활동, 그리고 합법적인 틀 내에서의 활동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상의 한국노총의 변신 노력과 새로운 인식은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로 정리되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1991년 2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1990년대 노총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운동기조)이라는 강령적 성격의 문건에서 명시화되었다. 운동기조에서 한국노총은 “우리는 임금·근로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 사업장 중심의 경제적 민주주의와 폭력적·체제전복적인 노동운동 이념을 극복하여 노동자 이익실현 과정이 국민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운동영역에 있어서도 정치적 활동까지 확대하는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를 우리의 운동이념으로 하고자 한다”고 선언하였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90: 231). 이것은 자주적·민주적 노동운동의 전개, 노동자와 일반국민의 생존권 보호,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 추진,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정치활동의 전개, 노동조직의 통일과 시민운동과의 연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상의 한국노총의 운동기조는 우선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것과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서, 한국노총이 앞서 천명한 ‘민주복지사회’라는 궁극의 목표와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한편으로 협조적 노동조합주의와 차별적인 것이었다. 즉 한국노총이 표방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의 “자주적·민주적 노동운동이라 함은,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자주적이고 조합원 대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의미했다.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주의는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와도 차별적이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조진영의 소위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급진노동운동이 주장하는 노동자 해방의 이

테올로기가 구현되어 있는 곳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한 노동자의 해방은 도그마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얼마만큼의 물질적·정치적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가에 의해 인식·평가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계급투쟁적 노동해방의 이데올로기는 실로 노동자계급의 이름하에 노동자 자신을 다시 억압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난 사실이다. 오늘날 선진제국의 노동운동은 대체로 자본주의 체제를 전제로 하고 그 모순과 폐해를 시정하며 대등한 노사관계 위에서 대립과 협력을 지향하는 산업민주주의적 노동운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운동이념을 실현해 갈 수 있는 힘을 여하히 빨리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90: 231~232).

그렇다면 한국노총의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를 어떤 점에서 실질적 노동조합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민주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가 경제적 노동조합주의를 충실하게 닦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노동조합주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단체교섭에 집중하고 파업 등의 쟁의행위도 경제투쟁에 국한시키며, 자본주의 체제의 틀 안에서 부분적인 개선을 통해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경제주의적 태도”를 의미한다(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1990: 66).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노총의 노동조합주의는 계급적 노동운동, 즉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와 차별적인 동시에 협조적·반공적 노동조합주의와도 거리를 두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존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노동조합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운동노선은 당시 한국노총 외부, 특히 민주노조진영으로부터 ‘개량주의적’이라거나, ‘경제적 조합주의’로 ‘어용노조의 본질을 감추기 위한 외피’로 비판받았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이러한 운동노선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표방했고 이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반공적·협조적 노동조합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었다는 점은 분명히 새롭게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한국노총이 이러한 자신들의 운동이념과 노선을 얼마만

큼 충실하게 체화하고 실천했느냐, 그 실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데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노총은 조합원 대중의 요구를 정확히 읽어 내고 그에 호응해야 한다는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갖추어야 할 실천의지와 방법에 결함이 있었고, 국가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적이어야 한다는 의지의 천명과는 달리 여전히 종속적인 측면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노총의 개혁적 흐름은 미풍 속에 찻잔일 것이라고 보고, 그 개혁적 흐름의 성과가 있다면 이미 그 세력들은 대부분 민주노총으로 넘어왔다고 본다(인터뷰 D, 2004. 2. 25).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노총은 1988년 박종근 체제의 등장을 통해 기존의 반공주의적·권위주의 협력적 태도를 극복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노총 개혁이 자발적이었다기보다는 민주화와 기층조합원의 반발, 그리고 민주노조진영의 성장으로 인한 외부적·내부적 압력에 강요당했다는 점에서, 박종근 체제가 과반수 지지를 겨우 얻어 집권했을 뿐 아니라 기존 노조집행부가 여전히 한국노총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에서,²⁰⁹⁾ 정부와의 재정적 독립을 시도하지 않고 여전히 의존적이었다는 점에서, 단위노조 조합원들을 이끌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민주노조진영을 흡수병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결국 이후에도 한국노총은 정부 지원에 의한 활동방식을 고수했고, 민주노조진영을 견제하는 활동도 떠나갔다. 한국노총은 6월 정부의 지원으로 전국 18개 지역에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중앙교육원 건립 지원을 정

209) 한국노총 지도부에는 제5공화국하에서 해직된 민주적 노동운동가와 노동일선에서 양식을 갖고 민주노동운동을 추구했던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중요직책을 맡고 개혁을 실천하기에 적합하도록 기존 기구를 3실, 8국, 18개 과로 개편하였지만(한국노총, 『사업보고』, 1995: 135), 한국노총은 1987년 이후 등장한 신노조운동 지도그룹, 특히 중공업 부문 대규모 사업장의 새로운 노조간부들에 의해서 주도되지 못하고 과거의 한국노총 생리와 행동패턴에서 자유롭지 못한 세력으로 채워짐으로써 표방하는 노선과는 무관하게 구체적인 실천 형태는 여전히 과거처럼 정부와 사용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활동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김동춘, 1995: 367).

부에 요구하였다. 한편, 정부도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한국노총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노동통제가 강화된 시점부터였는데, 정부는 한국노총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조합주의적 노동통제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한국노총의 자율성 고양과 역할 강화에 대해 끊임없이 견제하고 노사관계 정책결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배제하는 정책을 취했다(노중기, 1995: 293~294).²¹⁰⁾

3. 조직과 실천

한국노총의 자기반성과 새로운 모색은 1988년에 들어서면서 가시화되었는데, 그것은 1988년 2월 27일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 선언문과 11월의 한국노총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그리고 이 대회에서 선출된 박종근 한국노총 위원장 당선자의 발언 등에서 한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의 민주적 발전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날의 노동운동에 대한 냉철한 자기성찰과 겸허한 자기비판을 통하여 운동 태세를 획기적으로 쇄신하고 전진적이고 창조적인 자기혁신과 발전을 적극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될 중차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처해 있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89: 337).

우리는 지난해 한국노총의 '4·13 호헌지지 선언' 이후 제기되어 온 내외의 가치없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뼈저린 자기반성을 토대로 오늘 민주화를 열망하는 1천만 노동자의 한결같은 요구와 전체 국민의 엄숙한 뜻을 받들어... 오늘 이후 우리는 지난날 국가권력의 부당한 지배와 이와 결탁한 경영자의 횡포로 인한 무사안일과 좌절, 무원칙한 타협과 자기비하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대외적 자주와 대내적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불퇴전의 신념으로 민주노동운동

210) 1989년 이후 확대된 정부 지원의 구체적 사례들로는 노동은행(평화은행)의 설립 허가 및 자금지원, 전국 18개 지역에 걸친 노동교육상담소 설치비용 지원, 중앙노동교육원 건립비용 지원, 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기타 행사자금 지원 확대 등이 있었다.

을 힘차게 전진시켜 갈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대회선언문, 한국노총, 『사업보고』, 1989: 386).²¹¹⁾

오욕과 굴종으로 얼룩진 한국노총 40년사를 청산하고 한국노총이 국가권력의 여하한 형태의 부당한 지배개입도 단호히 거부하며 자주적 민주노동운동의 총본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박종근 인터뷰. 오상석, 1988: 69 재인용).

박종근 위원장은 1988년 11월 9일 김동인 전임 위원장의 13대 총선 출마로 인하여 공석이 된 한국노총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이시우 자동차노련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조직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층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선출되었다. 박종근 후보의 당선은 당시의 민주화의 영향과 한국노총의 자기반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는 위원장에 당선된 후 제일성으로 “노총의 굴종과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개혁을 표방하고 나선 한국노총은 이전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우선 기존의 한국노총에겐 매우 생소한 다양한 옥외 집회를 개최했다.²¹²⁾ 그리

211) 이러한 선언은 철저한 자기비판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국노총의 내부 문건은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 노동운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한국 노동운동은 한 마디로 매우 무기력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여 왔다. 그리고 이것을 좀 과장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노동조합은 있었지만 노동운동은 없었다고 하는 비판도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한편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제약의 틀 속에 스스로 만족하고 이에 체질화되어 그 벽을 감히 깨뜨리고 나오려고 하는 용기와 투지를 스스로 갖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무력을 합리화하거나 또는 어떤 면에서 거기서 얻게 된 기득권을 놓치지 않는 데 더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운동의 리더십이 현장의 근로자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신당해 왔고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노동운동 외곽에서 그들을 지원하여 온 재야 종교인과 학생, 지식인들이 더 크게 갖고 행사했다.”

212) 11월 29일에는 ‘부당노동행위 규탄대회’를 열어 전경련회관과 구로공단에서 시위를 벌였는가 하면, 12월 9일에는 ‘노동악법 개정촉구 및 삼성재벌규탄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삼성그룹 사옥 본관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1989년 초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조치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하여(1.9) 항의했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1980년 노조간부 정화·부당해고·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및 명예회복 활동을 벌였다. 11월 5일에는 옥외집회 형식으로 ‘노동악법 개정 및 경제민주화 촉구 쟁기대회’를 서울

고 한국노총은 1989년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노동절을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 대신에 세계노동자 공통의 노동절인 5월 1일(메이데이)로 바꾸기로 결의하였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결정은 ‘개혁노총’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²¹³⁾: “옛날에는 노총이 메이데이 행사를 하면 ‘혁명’이다라고 했다”(인터뷰 J, 2003. 7. 23). 이처럼 이 당시에 한국노총의 실천은 새로운 변화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정치세력화 추구, 사회정책의 개입 시도, 그리고 임단투 지원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른 한편, 한국노총은 민주노조운동, 특히 진노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조직을 보존하고자 했다. 이러한 한국노총의 당시의 활동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치세력화의 경우 한국노총은 정치활동 전담 기구인 정치위원회를 설치했다(1989. 4). 정치위원회는 중앙정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급 산하 조직에도 설치되었다. 이 시기 한국노총 정치활동은 주로 정치활동의 방향에 대한 조사연구, 노동법 개정 등을 위한 대책 활동, 정당과의 교류 및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활동, 각급 선거에 출마한 노동계 출신 후보자를 지원하는 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정부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선언하고 정치세력화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성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책참가 노선을 표명했는데, 그것은 다양한 정책건의와 함께 정책참가기구인 국민경제사회협의회의 참

보라매공원에서 대규모로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90: 64).

213) 한국노총은 이 결의에 입각하여 『근로자의날제정예관한법률』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청원하고, 여야 각당에 대해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정부는 메이데이가 공산권 국가에서 주로 기념되는 노동절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근로자의 날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5·1 노동절을 강행할 경우 이는 불법이라고 업포를 놓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내 보수파들은 이러한 결정이 한국노총의 전통과 과거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박종근 위원장 체제와의 결별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근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집행부는 예정대로 5·1 노동절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노총이 변화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여로 나타났다. 즉 한국노총은 1989년도 중점활동으로 비민주적인 노동관계법 개정,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및 제정, 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 요구를 결합한 임금인상 투쟁방침을 제시하는가 하면, 주거안정투쟁과 물가안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²¹⁴⁾ 한편 한국노총은 '국민경제사회협의회(이하 경사협)'를 통해 정부정책에 참가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하지만 1990년부터 가동된 경사협은 많은 회의와 정책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1993년과 1994년 경총과의 임금인상안에 대한 합의를 통해 사회정책과 바터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조합원들의 반발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노총의 점진적인 자주성 회복은 임단투에 대한 한국노총 차원의 지원 내용과 양상의 변화에서도 확인되었다. 한국노총은 『1990년도 임금인상 활동지침』을 시달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임금인상투쟁을 정치적 요구와 결합시켜,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투쟁 이외에도 감세투쟁, 물가인상 반대투쟁, 주거안정투쟁 등을 함께 벌여 나가도록 지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임금인상투쟁 일정과 관련하여 2월 말부터 임금교섭을 시작하고, 사업장단위 교섭이 어려울 경우 3월 30일까지 산별연맹 등 상급단체에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고, 4월 9일까지 임금교섭을 모두 끝내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교섭이 결렬될 경우에는 4월 10일부터 사업장별로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내고 20일 이후부터 파업 등 쟁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시달했다(한겨레신문, 1990. 3. 7). 또 정부의 강력한 총액임금제를 통한 임금억제정책이 전개된 1992년에 한국노총은 1월 14일 20개 산별 대표자

214) 한국노총은 집값, 전셋값의 폭등으로 대부분의 노동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거안정투쟁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각 사업장에 노동자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주택복지위원회'를 설치해 조합원의 주거실태 및 주거비 상승 등에 관한 조사연구, 주택용자기금의 조성 및 운영, 주택조합 등 주택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 노동자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한국노총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위노조별로 사용자 쪽과 임금협약 이외에 별도로 '주택협정'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에 대해 물가를 5%선에서 억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물가가 5%를 넘을 경우 노동자의 실질구매력 보전을 위해 하반기에 추가로 임금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및 의장단 정책세미나를 열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정액 74,180원)를 올리는 안을 요구기로 최종 확정하면서 정부정책과 대립했다. 한국노총은 총액임금제 투쟁이 ‘총자본과 총노동의 운명을 건 한 판 승부’라고 규정하고 총액투쟁본부와 상황실을 설치 운용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현장성 있는 투쟁을 전개했다. 한국노총이 이렇듯 보기 드물게 강력히 투쟁에 나선 것은 총액임금제 자체의 문제점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산하 조합들의 강력한 투쟁요구 때문이었다. 이미 전노협 출범 이후 전노협과의 선명성 경쟁에서 밀리면서 사무전문직노조, 대기업노조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조직 이탈이 일어나고 있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한국노총으로서는 산하 조합들의 이러한 요구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²¹⁵⁾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노총은 개혁의 담론에 걸맞는 기존과는 다른 정치적 행보를 하고자 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민주화하려는 의도 외에 민주노조운동의 조직화에 대한 일종의 방어였으며, 한편으로는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비판과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노총의 조직화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조진영의 전노협 결성 움직임에 대해 ‘한국노총과 함께 단결하여 전진하자’는 기조하에 민주노조 움직임을 견제하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12월 17일 ‘전노협건설 준비위원회’가 발족한 것에 대해 제2조직의 결성이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고 전체 노동자의 단결과 전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215) 총액임금제에 대한 산하 조합들의 반발과 한국노총에 대한 요구를 단편적으로나마 잘 보여주는 자료로는, 한국노총이 1992년 4월 8일 제8회 정책강좌로 산하 조합 간부들을 모아놓고 ‘총액임금제 저지 및 1992년도 임투대책’을 논의했던 회의의 결과를 요약해 놓은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산하 조합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금년도에는 지역본부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연투(연대투쟁-인용자)가 가능하도록 지도 바람”, “총액임금제를 수용하는 듯한 발상은 곤란함. 총액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거부되어야 함”, “전노협 등과 연대하여 전 노동계가 공동으로 이를 분쇄하도록 하여야 함”,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노총이 전개하여야 함”, “지역연대 확보를 위한 토론회의 개최 등 계기 마련이 시급함”, “반대투쟁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투쟁 지침이 필요함”, “총액임금제 돌파를 위한 노동조합의 의지가 중요함”, “총과업 등 구체적인 일정의 제시가 필요함”, “노총과 산별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함”, “자리에 연연해서 조합활동을 해서는 안 됨”, “단위노조 차원으로는 총액임금제는 극복이 어려움. 노총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한국노총, 『사업보고』, 1992: 174~176).

하면서(한국노총, 『사업보고』, 1990: 529), “재야 각급 노동조직은 1천만 노동자의 진정한 권익의 쟁취를 위하여 한국노총의 깃발 아래 한데 굳게 뭉쳐 부당한 권력과 자본을 상대로 공동의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고 제안했다(한국노총, 1988: 390). 또한 한국노총은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복수노조금지 조항과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종전대로 존속시키는 내용으로 청원을 제출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민주노조진영에게 통합 또는 협력을 제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으로 흡수될 것을 강요한 것이었다. 즉 “민주노조운동을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한국노총 조직 안으로 민주노조진영이 들어오라는 주장”이었다(엄주웅, 1994: 186).

민주노조운동의 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한국노총의 시도는 조직화에 있었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을 산별산하 지부로 그리고 지역단위 업종별 지부를 조직함으로써 조직역량을 강화”(한국노총 성명서, 1988. 1. 9, 한국노총, 1989: 429)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이처럼 한국노총은 산하 지역협의회의 활동과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에 있어서의 산별간의 조직지원을 위한 연대체제를 형성하고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 노동조합 결성을 촉진시키고자 했다. 한국노총의 지역협의회 조직은 현재 중앙 중심의 산별 연맹의 조직상의 결점을 보완하고 또한 한국노총의 직접적인 지역기구로서의 역할을 행하는 조직으로서 한국 노동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지역협의회는 특히 앞으로의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한국노총의 정치활동 강화방침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90: 234). 이러한 기초하에 1989년에는 지구협의회의 활동이 어느 해보다 활발했다. 1988년 12월 31일 현재 30개였던 지구협의회가 1989년 12월 31일 34개로 증가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지역협의회가 지역간의 연대는 “물론 제도권 내의 짜임새 있는 지역조직으로 모양을 갖추며, 이는 일부 조직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전노협’ 결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조직 지도활동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90: 339). 특히 한국노총은 ‘조직강화를 위한 특별 결의문’(1992년 전국대의원대회)을 통해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산별 체제를 구축해 나가려는 의지를 내보

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노총은 1988년 박종근 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그리고 특히 경쟁조직인 전노협이 출현한 1990년 이래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변화를 시도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노총은 전노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험과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상층 노동정치에서 힘을 발휘하여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선물을 얻어내기도 했고, 그 가운데는 정책, 제도개선 등과 같은 성과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성과들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결집시키는 과정을 생략한 것이었다. 이것은 기존의 노조조직의 관성과 개혁세력의 힘의 한계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다. 즉 조합원들의 의식과 노동조합에 대한 요구가 이미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까지도 노총 산하의 많은 산별연맹과 산하의 단위노조들은 간선제 등의 노조 내의 제도적 장치와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제도적 장치에 편승한 일부 간부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한국노총 중앙조직 의사결정구조의 과두제적 성격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한국노총의 공식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산하 산업연맹 위원장들의 모임인 회원조합대표자회의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였는데 이들은 상당부분 과거의 조합활동의 습관에 보다 근접한 사람들이었다. 박종근 체제의 등장 이후에도 이들이 한국노총 내에서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노총 내 ‘개혁파’가 집행부를 확고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종근 위원장은 1988년 겨우 14표 차이로 당선되었으며, 1990년 선거에서도 이시우 자동차노련 위원장의 재도전을 20표 차로 간신히 뿌리치고 당선되었다. 또한 제2기 집권기 한국노총 산하 산별연맹 위원장 20인 가운데 12인이 반대파였을 정도로 한국노총 내에는 반박종근 세력이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었다(황수경, 1990 참조). 이상의 한국노총의 내부 한계는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도 자체 내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한국노총의 조합원들은 민주노조의 선명성과 개혁성에 대한 갈증과 그리움을 한국노총 내에서 해소할 수 없었고 그것은 1993~95년간에 산하 조직의 대거 이탈로 나타났다.

제4절 경합과 이념지형의 변형

해방 직후 형성된 기형적인 이념지형은 1980년대에 들어서 변형되기 시작했다. 변형의 계기는 민주노조진영의 등장이었다. 민주노조진영이 탄생과 성장, 생존의 방식과 지향 등 모든 측면에서 한국노총과 차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민주노조진영과 한국노총 양자는 생존을 위한 갈등과 대립관계에 있었다. 이것은 이념적으로 볼 때 변혁과 개혁의 대립, 즉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와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간의 경합으로 나타났다. 이 경합은 한국노총의 내적 변화를 강제함으로써 1970년대까지 지속된 이념지형은 서서히 변형되었다. 여기에서는 경합의 내용과 이념지형의 변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경합이란 “맞서 겨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상호 대립적인 경쟁자들과 이들 간의 일정한 권력관계의 균형성을 전제한다. 해방 직후 형성된 기형적인 이념지형은 한국노총의 독주를 의미했고, 승자독식 체제는 1970년대 민주노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1987년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독주 체제하에서는 경쟁자가 허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처럼 존재했더라도 권력관계의 불균형 상태로 인해 정치지형을 바꿀 정도의 유의미한 행위자가 될 수는 없었다. 민주노조진영의 등장과 영향력의 확대는 이러한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민주노조진영은 어떤 힘을 가졌기에 한국노총과 그 후견자인 정부에 대항할 수 있었는가? 우선 민주노조진영은 기존 권력집단에 비해 도덕성과 정당성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노총이 군부독재를 후견인으로 하는 대가로 군부독재에 협조함으로써 민주화에 역행했다는 어용노조의 이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민주노조진영은 병영적 노동통제와 노동자들의 억압에 대해 전면적으로 저항했다는 점을 민주화운동 시기에 노동자들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다. 이처럼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는 민주노조진영의 이러한 저항의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었으며 자신들

의 원천적 권력자원으로 기능했다.

둘째, 민주노조진영은 개별기업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수준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했다. 전노협은 물론 대기업연대회의와 업종별노조협의회의 출현은 한국노총과 정부에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대기업 및 업종회의의 기간산업 노동자들과 전노협 조합원들의 ‘전투성’은 최소한의 권력(negative power)²¹⁶⁾으로서 국가권력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권력자원으로 기능했다.

더 나아가 민주노조진영은 사회주의, 또는 변혁, 개혁 민주주의라는 이념 또는 담론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이처럼 민주노조진영은 민주화와 변혁이라는 화두를 들고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노동정치를 주도해 나갔다.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사회진보의 이념, 즉 당시의 시대적 코드에 부합했다. 이처럼 민주노조진영의 권력자원은 조직화와 세력화뿐만 아니라 정당성과 이념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민주노조진영은 경쟁력 있는 정치적 행위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한국노총의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는 지배자의 논리라는 평가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어용 또는 변혁 대신 개혁담론을 개발하여 조직보존과 기존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 정치상황에 의해 급조된 한국노총의 새로운 이념인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로 표명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는 한국노총이 자신의 개혁적 의지를 담은 응집물로서, 수세적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산물이었다. 이처럼 실리적 노동조합주의하에 시도된 한국노총의 개혁은 조직개편과 인적 청산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의 확보, 사회정책참여를 통한 국민적 지지의 확보, 적극적인 임단투를 통한 조합원들의 이익 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도되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기존의 권력관계, 즉 전통적 세력의 존재와 친정부적인 행태 및 관성 등으

216) 최소한의 권력은 ‘권력관계에서 특정 주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힘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다른 정치주체의 독주를 일정정도 견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반면에 veto power는 소극적 권력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강한 권력을 의미한다(유범상, 2000: 39).

로 인해 한계에 부딪혔고 개혁 시도 또한 이미 민주노조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조합원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한국노총의 노력과 결과는 이미 민주노조진영으로 넘어가는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는 데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처럼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과 권력관계의 변화, 한국노총 자신의 변신노력, 민주화에 따른 국가권력의 후퇴와 이에 따른 새로운 담론과 개혁 또는 이념의 정교화는 기형적인 이념체제의 해체를 보다 분명히 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기형적인 이념지형의 해체는 한국의 이념지형에 새로운 가능성, 즉 우편향된 협소한 이념지형 또는 특정 이념에 의해 지배되는 '불구상태'의 치유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변혁적 세력의 자기조직화와 계급 및 사회주의 담론은 이념지평을 확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넓어진 이념적 스펙트럼은 기존 세력의 자기합리화를 강제함으로써 이념의 자기정제에도 기여했다. 이에 자극받아서 한국노총 또한 자신의 근저적 이념인 한국적 자유민주주의, 즉 반공주의와 성장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를 수정, 보완, 또는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갖게 되었다. 한편 계급 또는 민중정당의 등장은 이념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다양한 정치적 준거점들을 대체할 가능성도 제공했다. 예를 들어 민중당은 "한국정당 체제의 지역적 균열구조를 넘어서 계급균열의 정치적 전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평가받을 가치가 있다(박병상, 1997: 50). 결국 비경쟁적이고 특정이념의 독주로 경화된 기형적인 이념지형은 '적대적' 경쟁자들의 경합 과정에서 급속하게 해체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변형된 이념지형의 궤적은 순탄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명쾌하지가 않다. 우선 이념지형 변형이 민주노조진영의 등장으로 가능했지만 민주노조진영은 국가권력 또는 한국노총에 대항해서 '완벽한' 경쟁자 지위에 오르기에는 역부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진영은 정치세계에서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배제의 정치로 인한 제한된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고립되었으며, 따라서 민주노조진영의 '최소한의 권력'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보다는 생존권적 싸움에 활용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변형된 이념지형은 공적 토론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부여

받지 못했고 정치사회 속으로 공고화되지 못함으로써 임의성과 불확실성의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조진영에게 이념에 대한 성찰과 논쟁을 요구하는 것은 사치였으며, 결국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비타협적인 변혁성보다는 전투적인 행위양식을 강조하는 개념이 되었다. 그리고 정치세력화도 제도정치권으로 진입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새로운 이념적 지평이 자기 자리를 찾아 발전할지도 더욱 불투명해졌다. 특히 진보정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의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논쟁도 내부 활동가들에만 국한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한계를 갖고 있었다. 민주노조진영의 이념 논쟁과 이념의 세례 또한 상층부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처럼 활동가들의 이념토론의 취약성과 이로 인한 이념의 빈곤현상, 조합원과 활동가들 간의 큰 이념적 거리는 이념지평의 확대를 가로막았다.

변혁적 노동운동 역량들은 많은 경우 아직 낮은 이념적 수준에 있으며 또 서클적으로 고립,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각종 개량주의에 쉽게 동요할 뿐 아니라 조직적 무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단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선진노동자의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그것에 의해 노동조합운동이 한계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변혁적 운동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정치적 각성의 수준은 여전히 노동자를 탄압하는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노동운동이 변혁운동으로서의 역량을 힘있게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노운협, 1990: 4, 5, 12).

한편 한국노총의 '자기정제'도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우선 잔존 세력과 기존의 시스템이 여전히 한국노총에 온존하고 있었고, 정부 지원으로부터 운영되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조합주의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의 이념정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것이었다.

이처럼 1980년대 양대 노동운동은 변형된 이념지형에서 헤게모니를 잡은 것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내부정치와 내부이념에서도 성찰적이지 못했

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지형 변형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에도 기인하지만 역사적 시간이 짧은 것에도 원인이 있다. 1980년대의 변화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성의 측면에서도 1987년 이후 불과 몇 년이 경과했을 뿐이었다. 더 큰 문제는 새롭게 등장한 1980년대 이념적 지형이 자기 시간을 갖기도 전에 소련의 붕괴라는 대사건이 한반도를 엄습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한반도 이념지형을 혼란상태로 몰고 갔다.

이상에서 보듯이 1980년대는 기형적인 이념이 변형되는 임계점이었다. 이 시간은 짧았지만 역사적 시간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해방 이후 공고화된 난공불락의 이념적 요새가 밑으로부터 해체되었고 그 해체의 경향은 역전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변형 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명명할 수 있다. 불확실성은, 거대하고 견고한 이념지형이 해체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주체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엮힌 데 덮친 격으로 공론과 성찰의 시간을 갖기도 전에 복합적 사건들이 단기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었다.

제5장

도전과 모색(1990년대 이후)

제1절 이념의 혼란, 혼동, 그리고 분화

1980년의 광주가 발견한 사회주의와 계급은 1980년대 말, 1990년대의 예기치 않은 역습들로 인해 급속히 무대에서 퇴장했다. 대환란을 몰고 온 주역은 소련과 동구의 몰락으로 나타난 사회주의권의 붕괴였다. 이 사건은 사회주의라는 유행과 이것의 주술에 걸려 있던 “1980년대형 인간”(이념적 인간)을 현실과 이론에서 몰아내려 했다. 이로 인해 활동가들은 이념의 ‘혼란’을 느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정체성의 ‘혼동’ 상태에 빠졌다.²¹⁷⁾ 정체성 혼동이 해소될 수 있는 실마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전면화된 신자유주의의 역습에서 발견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이념지형이 분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념적 인간을 다시 정치세계로 불러내는 역할을 담당했다. 여기에서는 두 사건을 이념의 측면에서 해석함으로써 1990년대 이후의 이념의 ‘혼란’과 정체성의

217) 여기에서 이념의 혼란은 특정 이념을 확신하던 상태에서 “나의 이념이 틀린 것은 아닌가, 어떤 이념이 옳은가”라는 이념에 대한 아노미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혼란상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찾기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데 활동가들의 일부는 혼동 상태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즉 이념적 혼동은 자신이 믿고 따른 특정 이념형이 실제로는 자신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념과 다른 착각 상태이다. 본절은 이와 같은 혼란과 혼동의 관점에서 1990년대 노동운동이념 지형을 서술하고자 한다.

‘혼동’, 그리고 이념의 분화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980년대형 이념적 인간”을 살해한 주범은 공산주의권의 붕괴였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와 혁명이라는 진리의 실체와 진리의 이념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더불어 북한의 실체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확신도 사라졌다.

소련의 사회주의가 붕괴될 때 혼란이 가중되었고 스스로 마르크스주의자라는 생각이 무너졌다. 그래서 그 당시 검사와 사회주의 논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회주의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재판투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의가 있었지만 나는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못했다. 후배 네 명과 재판을 받을 때 멤버들과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 무권리한 노동자문제라든가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우리를 변호하자고 했고 검사하고는 사회주의 논쟁을 하지 말자고 멤버들과 합의하게 되었다(인터뷰 G, 2003. 6. 13).

이처럼 절대적 진리가 근본적으로 의심되었기 때문에 ‘혼란’의 파장과 진폭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곧 위기의 실체와 정체성을 찾기 위한 광범위한 논쟁이 유발되었다. 우선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와 더불어 시작된 현존 사회주의의 위기 논쟁이 한국 사회과학계에 직수입되었다. 이 논쟁은 스탈린주의가 갖고 있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편향과 오류를 제거하고 ‘본래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복원시킬 것인가 아니면 마르크스주의에 내재된 근본적 오류를 인정하고 마르크스주의 자체를 폐기할 것인가라는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진행되었다. 폐기의 입장에 선 논자들은 사회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상정했고, 이 과정에서 “사민주의의 ‘인플레’현상”이 나타났다.²¹⁸⁾ 사민주의 논쟁은 대체로, “페레스트로이카는 사민주의를 지향하는가, 서구 사민주의는 성공하였는가, 사민주의는 한국에서 출현하였

218) 대체적으로 1990년 초반에는 사회주의 개혁과 사민주의의 사상성, 사민주의의 재평가, 민주주의 기획의 중요성, 레닌주의적 노선의 부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우리사회의 변혁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사민주의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1991년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한국사회에서의 사민주의의 실현가능성을 논증하는 지점에 머무르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서구 사민주의의 역사와 한국사회에의 적용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있다(윤상철, 연도 미상, 2008).

는가, 사민주의는 우리의 변혁적 대안인가”(윤상철, 연도 미상, 208) 등의 쟁점을 두고 벌여졌다.²¹⁹⁾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이들 논쟁은 활동가들을 성찰과 대안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과 슬픔의 늪으로 남한의 좌파를 밀어내고 있었다. 좌파들은 논쟁 과정에서 혁명의 시대가 가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운동판에서는 사회주의는 좋은 것, 사민주의는 나쁜 것이라고 인식되어 왔었고,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219) 논쟁은 김수길로부터 출발했다. 그는 교조주의적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폐기하고 사민주의적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역시 모순관계 및 노동자계급의 변화에 의해 레닌주의적 혁명의 전망이 무망하다고 평가하고 현단계의 민중운동이 추구해야 할 노선은 장기적 전망을 가진 민주주의적 개혁노선이며 이 과정에서 사민주의적 경험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상철, 연도 미상, 208). 레닌주의적 노선에 대한 자기비판을 하고 있는 김동춘도 이러한 맥락에서 있다. 그는 주체사상과 더불어 1980년대 주도적 변혁노선이었던 레닌주의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것은 변혁이론의 창조적 모색에 있어서 독단의 폐기와 백가제방을 제시했다. 이병천도 현존 사회주의를 몰신승배의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이것의 책임을 스탈린뿐만 아니라 레닌과 마르크스에게 묻고 있다. 그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시대적 한계’에 대한 인정과 자본주의의 ‘새로운 현실’에 맞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비판적 극복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민주주의를 ‘고려할 만한 대상’(김수길), ‘불가피한 대안’(이성형) 또는 ‘적극적 대안’(김윤환) 등으로 사고했다.

이와는 달리 정민재, 이해영, 나자흠, 황진성 등은 ‘소부르주아지와 노동계급의 사상투쟁의 본격화’, ‘사민주의의 창조적 수용은 그것의 완전한 지양으로 대체’, ‘페레스트로이카가 진보적 지식인에게 준 사상적 혼란과 그로 인한 계급적 지향의 분화 과정’ 등으로 규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옹호했다. 이들은 ‘한국자본주의의 빈약한 물질 토대’, ‘부르주아적 정치기제의 미성숙’ 등을 들어 사민주의가 대안이기는커녕 실현될 가능성조차 아예 없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황진성은 서구의 사민주의가 서구의 노동운동사와 독점자본주의의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서 “자본주의에 고유한 사회·정치·경제적 제 모순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극복하려는 노동자계급의 투쟁 속에서 그 기회주의적 경향으로 분화되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제 혁명성을 갖지 못했고 한국의 독점자본은 체제내적 개량을 허용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즉 “한국에서의 노동자계급의 혁명성과 독점부르주아지의 한계”로 인해 사민주의가 정착될 사회·경제적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즉 “실천적 개량은 확보하지 못한 채 다만 공허한 개량주의적 전망만이 난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황진성, 1991: 123~124).

조합원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지향해야 하는 사회에 대해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선호하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온다(인터뷰 D, 2004. 2. 25).

1991년 소련의 붕괴가 닥치면서 운동권은 크게 흔들린다. 드디어 변혁운동은 스탈린주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그와 함께 혁명의 꿈마저 상실한 것이다.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 관념적 인텔리들이 사회주의적 전망을 버렸다. 공공연하게는 아니더라도 사회주의적 전망에 근거해서 역사적 평가를 진행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진취적 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강단에는 좌파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천현장에는 좌파가 없다(김승호, 2004).

이처럼 혁명의 깃발은 내려졌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었다. 하지만, 대안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이를 위한 공론화도 쉽지 않았다. 결국 '무리'들은 단일한 '깃발'을 다시 세울 수 없었다. 이들은 이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정치적인 힘을 추구했던 정치 명망가들에게 '의회'는 그 첫 번째 대상이었다. 일군의 집단들이 김영삼과 김대중의 야당행을 택했으며, '인민노련'은 91년 '삼민동맹'과 '노동계급'을 통합해 진보정당운동으로 나섰다. 우리 사회의 부재하는 시민의식을 본 일군의 학출 노동자들은 '시민'의 권리를 찾아 경실련을 향했다. 여기까지 그것은 여전히 근대적인 '시민'과 근대적 합리성의 구축에서 미래를 보았다. 하지만 그와 정반대로 '모던' 자체를 회의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은 보다 급진적인 형태를 띠면서 근대적 담론과 문화 해체로 나아갔다(박영균, 2003: 90).²²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시민운동과 변혁운동의 분화현

220) 1990년대 진보진영의 이론적·사상적인 흐름은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로부터 촉발되면서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아가는데, 이는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 내지는 태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진보적 이론진영의 분열). 첫 번째는 마르크스주의의 원칙을 계속 견지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전화', '확장' 내지 '재구성'을 추구하는 흐름이다. 두 번째는 현존 사회주의의 붕괴를 마르크스주의 자체의 이론적 과산으로 간주하면서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하고 '포스트마르크스주의'로 전환한 흐름이다. 그리고 문제설정 자체를 근대와 탈근대로 넓혀 이론의 판을 전혀 새롭게 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이다(이성백, 2000).

상이다. 다양한 시민사회론과 시민단체가 등장했고 이것은 기존에 폄하했던 노동운동과 국가이론을 대체했다. 1980년대 이념지형에서 보다 멀리 나온 시민사회론과 시민운동가들은 더 이상 국가이론과 변혁운동가에게 부채의식과 기대를 갖지 않았다. 이들은 변혁운동을 지지하기보다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자 했으며 그 거리들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우월성을 검증받으려고조차 했다.²²¹⁾ 이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다양한 것밭들이 우후죽순처럼 ‘적기’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이즘과 이론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소련과 동구의 붕괴는 한편으로는 마르크스주의의 역레드컴플렉스에 빠져 있던 좌파 지식인들과 실천가들에게 특정한 진리의 이념으로부터의 해방의 계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마르크스주의의 전일적인 균림”의 1980년대는 “매우 다양한 문제영역, 이론, 학파, 이즘 등이 총출연하는 제자백가”의 1990년대에게 자리를 내주었다(이성백, 2000). 예를 들어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은 1980년대 이념적 인간형을 지도했던 이데올로기를 로고스(남근, 진리) 중심주의로 비판했다. 그리고 근대성의 폐해가 이들로부터 연원한다고 지적하고 근대적 진리, 즉 ‘이들(왕)의 목을 자를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마르크스주의를 근대철학의 최고의 실현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칼 끝은 직접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향하고 있었다. 결국 마르크스주의는 근본적으로 의문시되었고 이러한 회의는 지식인들의 역레드컴플렉스를 완화시켜 주는 측면이 있었다.

이념지형의 이와 같은 변화는 조직과 실천의 변화로도 나타났다. 새로운 풍경은 다양한 실천적인 문제 영역의 변화에 있었다. 1980년대에 계급(민중)과 민족 문제가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1990년대에는 이 문제 영역을 넘어서는, 때로는 이들 문제와 단절된 듯이 보이는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되었다. 즉 외부적으로는 환경, 여성, 종교, 인종, 관료제

221)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노동운동진영이 시민운동에 대한 거리둠과 닮아 있다. 노동운동은 다른 이유로 시민운동과 거리를 두었는데, 그것의 핵심적인 이유는 시민운동이 잘해야 급진적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해해 왔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민중’운동이 아니라 ‘시민’운동이라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었다.

등이, 내면적으로는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욕망, 성, 육체의 해방 등이 새로운 문제 영역들로 제기되고, 각 문제에 대한 연구와 실천적 활동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이슈들은 새로운 실천과 조직을 필요로 했고 이것은 운동권의 분화를 촉진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념적 혼란은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었던 신념 체계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은 ‘내부로부터’, ‘시간성과 역사성을 갖고’ 그리고 ‘토론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급격하게’ 그리고 ‘어떤 매개물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었기 때문에 대혼란을 조장했다. 특히 사민주의라는 하나의 대안과 기존 이념이 경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메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혼란은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이념의 혼란은 정체성의 혼동을 수반했다. ‘혼동’의 사전적 정의는 “뒤섞여 보거나 잘못 판단함”이다. 따라서 정체성의 혼동은 자신이 어떤 이념적 지평 또는 실천지형에 있는지에 대한 착각(잘못된 판단)을 의미했고 이것은 행동의 비일관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²²²⁾ 예를 들어 자신을 여전히 마르크스-레닌주의자라고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존재성은 자유민주주의에 뿌리박고 있고 자신의 실천은 사민주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스스로 사민주의자로 자처하는데 실천은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유민주주의에 천착해 있는 경우가 있다:

스스로 자신을 정의할 수 없는 시대, 더욱 엄밀히 말하자면 규정할 주체를 생산해 내지 못한 시대가 1990년대이다. 1990년대는 1980년대에 기대설 수밖에 없는,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불구의 시대였고, 또 스스로 자신을 정의할 수 없는—1980년대에 대한—반동의 시기였다”(이혜영, 1999: 31).

다양하게 존재했던 진보정당의 이념적 기초와 성격을 규명하기에는

222) 혼동은 개념에 대한 상이한 이해 또는 모호한 정의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았던 마르크스즘은 스탈린주의가 아니었던가? 우리가 지향했던 북한은 불량국가에 불과하지 않은가? 우리가 사회주의의 전형으로 동경했던 소련은 국가자본주의가 아니었던가? 사민주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의 과정에서 타자와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혼동이 찾아왔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행위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대부분 정강정책으로 표출되는 ‘말의 정치와 글의 정치’는 진보적인데, 구체적인 정치활동으로 표출되는 ‘행동의 정치’에 있어서는 보수적일 수 있거나,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정치적 아류세력으로 존재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대변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경우가 있었다(김영수, 2002: 3).

이상에서 보듯이 정체성 혼동은 자신이 믿고 있는 이념적 좌표가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이념과 실천이 괴리되어 일관되지 못한 현상, 양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남한 좌파들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동을 생산하고 지속시키는 근원적 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1980년대 인간’이 자신의 이념, 즉 사회주의의 도덕성과 진리성에 대해 강한 확신과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 1980년대는 혁명의 시대였다. 이 시대는 이분법적 진리관에 의해 지배되는 ‘이념형 인간’을 주조했다. 진리와 허위의 이분법적 인식론은 이념적 인간을 지배하는 세계관이었고 이 토대에서 사회주의가 아닌 모든 것은 허위(또는 기회주의, 개량주의)라는 강한 인식, 소위 “역레드콤플렉스”가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이들은 광주라는 ‘피의 대지’ 위에서 군부독재와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증오를 배웠고 사회주의라는 “해방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실천했다. 따라서 이들의 신념은 사회주의 체제의 갑작스런 붕괴와 경제위기로 촉발된 신자유주의 질서의 전면화에도 불구하고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여전히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 향수, 이탈의 두려움 등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것은 자신의 인식론적인 이념 좌표를 사회주의로 고정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신자유주의의 공격으로 인해 이들의 존재, 목표, 개념, 실천, 상황이 자신들의 인식론적 좌표로부터 상당부분 이탈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론과 존재론의 간격이 정체성 혼동의 수준을 결정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들어 각자가 사용하는 용법과 개념의 차이는 혼동을 더욱 깊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즉 활동가들이 사용하는 사회주의라는

담론은 분명 동일한 발음과 표기를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각자가 쓰는 개념은 동어이의적인 경우가 많이 생겼다. 이러한 가운데 개념들은 더욱 '분화'되어서 기존의 내용과 상당히 다른 담론이 되어 갔고, 이것은 더욱 혼동을 깊게 했다.²²³⁾

개념의 변화에 더해서 정치경제적 지형의 변화 또한 혼동의 주요한 원 인인데, 지형의 변화는 머리와 몸의 분리를 가속화했다. 우선 1987년 민주화와 노동자대투쟁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는 눈에 떨 정도로 진전되었다. 이런 점에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근대화가 압축성장을 한 것처럼 1987년 이후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의 민주화도 압축성장을 했다.

사회주의 붕괴가 하나의 중요한 모멘트였지만, 하나는 우리나라의 절 차적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했다. 김영삼 정부가 되니까 논쟁이 있었다. 하나는, “이제 우리는 할일이 없다.” 다른 하나는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뭐가 달라졌나? 칼 선생이나 레닌 선생이나... 그대로다...”라는 것이 있었다. 당시 김영삼 정부가 내용적 민주주의 면에서 많이 부족했다. 국민들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른바 ‘독트린되어 있는 사회주의 대중적·국민적 설득력’이 급속히 감퇴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세계사적 변화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의 실상이 우리한테 보였다(인터뷰 A, 2003. 8. 29).

223) 동어이의적인 이념과 개념의 분화로 인해 발생하는 혼동들은 다음의 진술에서 알 수 있다: “1987년 이전에는 급진주의가 마르크스주의적 혁명주의적인 것과 거의 동일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주의적 공간에서 급진주의 혹은 진보주의는 곧 마르크스주의적 혁명주의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게 되었다. 민주주의적 공간 내에서 온건보수주의, 자유주의적 인식과 실천이 독자적으로 분화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른바 시민운동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NL이나 PD적 혁명주의로 환원되지 않는 생활세계의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급진주의가 출현하게 된다. 물론 1987년 이후에도 여전히 강고하게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반공주의는 이러한 급진주의의 지적·실천적 표출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페미니즘적 급진주의, 생태주의적 급진주의, 자율주의적 급진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비마르크스주의적 혁명주의’가 출현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1987년 이전에는 노동자계급-계급적대-국가 중심형 혁명주의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면, 1987년 이후에는 소수자문제, 환경문제, 여성문제, 인권문제 등을 둘러싸고 비노동자계급-비계급적대-비국가중심형 인식과 실천이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조희연, 2003: 109).

이처럼 김영삼 정부 이후 확보된 절차적 민주주의는 민주화, 근대화, 변혁 등의 거대담론에 관심있는 ‘민중’과 ‘계급’을 일상의 생활세계에 관심있는 ‘시민’과 ‘주민’으로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시민을 여전히 계급으로 이해했으며 경제민주주의를 변혁의 목표로 착각하는 경향이 존재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이 틈새를 좁히려는 노력과 성찰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짧은’ 시간 내에 전투적 이념으로 무장해야 했고 그것보다 ‘더욱 짧은’ 시간 내에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새로운 환경이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인간들은 혼란과 혼동의 원인과 해석에 대한 공적인 토론을 할 시간과 여유를 갖기 힘들었다. 이들은 변화의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새로운 선택을 강요당했다. 그 결과 일부는 일상으로 다른 일부는 정당, 시민운동, 노동운동 등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따라서 자신의 이념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토론 없이 1980년대 인간들은 각자가 서 있는 이념적 지평에서 세상을 상상하고 해석하면서 살았다. 이 과정에서 존재와 인식의 괴리는 더욱 심화되고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정체성 혼동의 시대는 1997년 말 또다시 예기치 않게 찾아온 경제위기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국전쟁 이후의 “제2의 국난” 또는 IMF에 의한 경제식민지화라고도 평가된 경제위기는 좌파 활동가들에게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신자유주의 및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환기시킨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화담론의 부활과 불균형적인 권력관계의 심화를 경험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의 무기력과 비현실성을 확인시키는 이중의 역할을 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 같은 해석의 차이는 이념의 분화를 낳았다.

우선 좌파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할 무기를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찾았다. 이들은 사회주의가 인간해방과 노동해방의 사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전면적 공세에 기죽지 않고 오히려 화려한 부활의 노래를 불렀다.

최근의 분위기는 10여 년 만에 다시 터져나온 사회주의자들의 커밍아웃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것이었다. 그 ‘커밍아웃’의 대표적 사례로는

서준식, 홍세화 선생의 『한겨레 21』 기고문(『나, 사회주의자』와 『사회주의는 사회악?』),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의 『특집-사회주의』, 청년진보당의 당명 개정을 통한 사회당(Socialist Party-직역하면 사회주의자의 당)의 출범, 그리고 김만제 의장의 ‘색깔’ 공세가 극에 달하던 시점에 즈음한 민주노동당, 사회당의 성명 내용 등을 들 수 있다. …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용감무쌍한’ 발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 … 이에 대해 일부 논자들은 “자본의 세계지배와 그 모순의 심화가 계속되는 속에서 자본주의에 더 이상 길이 없고 새로운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라는 ‘묵직한’ 의미를 부여한다(고동우, 2001).

이처럼 좌파들은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의 깃발을 다시 세울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게 되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진리의 인식론을 무력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1980년대 인간형’을 재등장시키는 “우”를 범했다.

한편, 경제위기로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정치경제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반적 삶의 질의 저하, 그리고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 등의 현상을 수반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수준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로 진전시켰다. 즉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 협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노동정치에까지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다 세련화시켰다. 또 한편으로 ‘생산적 복지론’이라는 김대중 정부하의 복지정책도 사회복지학계가 ‘복지국가 논쟁’을 진행할 정도로 기존의 정권에 비해 양적으로 질적으로 매우 진전되었다. 이러한 대지위에서 좌파내 사회민주주의세력이 노사정위 참여를 통한 사회적 조합주의와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을 매개로 한 정치세력화를 조심스럽게 모색하면서 분화되어 나왔다. 사실 이 흐름은 활동가 내부에서 항상적으로 존재했었는데 사회주의권의 붕괴, 신자유주의의 공세,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진전 속에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이념지형은 혼란과 혼동의 시련기를 통해 새로운 세기에 명확한 자기분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가 만든 현상과

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전개되었으며, 크게 두 가지 경향 즉 사회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로 나타나서 현재 좌파그룹 내의 정체성 혼동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었다고 평가된다.

제2절 민주노총의 도전과 모색

1. 조직과 실천: 이견그룹의 등장과 정치적 성장

가.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전노협 중심성의 약화

전노협 이후 조직노동운동은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를 거쳐 민주노총으로 성장해 갔다. 이념의 측면에서 민주노총으로의 성장 과정은 전노협을 계승한 측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노협 중심성을 탈각하는 과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이에 대해서는 제5장 제2절 2. 가. 참조). 여기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노조진영의 조직 성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전노협 중심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노선, 즉 전투성과 이념성을 의미한다(제4장 제2절 3. 마.와 제5장 제2절의 2. 가. 참조).²²⁴⁾ 여기에서 전투성이 파업을 매개로 한 투쟁노

224) 전노협 중심성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전노협의 이념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전노대에 의미를 부여하는 논자들은 전노협 한계론과 민주노총 총단결론을 주장한다. 후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전노대는 그동안의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그대로 반영한 조직이었다. 우선,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전체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포괄되었다는 의미에서 전노대는 하나의 성과였다. 전노대에는 1,046개 노조 39만 7,666명이 참가하였고, 참관 교류 노조까지 포함하여 1,141개 노조 47만 4,636명의 조합원이 참가함으로써 전국의 ‘민주노조’를 최대 포괄한 것이다. 전노대는, 민주노조운동 ‘진영’이 한편으로는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 등으로 병존하면서 조직적 원심력이 계속 증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사업을 설치해서 ‘민주노조운동 총단결’을 도모함으로써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선이라면 이념성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변혁 중심의 혁명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전노협 중심성이 서서히 해체된 이유는 전노협이 서 있었던 지형 때문이었다. 전노협은 출범 이후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기치하에 1990년 전국노동자대회, 1991년 ‘노동자대책위원회’, ‘ILO공대위’, 전국노동자대회, 1992년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개최했다. 하지만 1992년 11월 노동자대회 이후 12월 대통령 선거,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 취임, 그리고 6월 전노대의 출범이라는 기간 동안에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다양한 변화들이 발생했다.

김영삼 대통령 당선을 전후하여 정부는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에 대한 총공세를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합의주의에 입각한 노동운동을 모색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는 출범 직후 노동운동의 유연화 전략을 시도했다. 예를 들어 이인제 노동부 장관은 신노사관계의 천명, 무노동부분임금의 가능성 언급, 해고자 복직 등의 개혁적인 노사관계를 시도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민주노동운동의 합법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었다. 이것은 1993년 김영삼 정부의 등장과 ILO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즉 복수노조금지 철폐, 교사·공무원 단결권 보장, 제3자개입금지 철폐 등의 대내외적 환경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로 병원노련, 전문노련, 건설노련, 사무금융노련, 대학노련 등 5개 연맹에 합법성이 부여되었고(1992. 10), 언론노련도 얼마 지나지 않아 상급단체 가입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합법화되었다(1992. 12. 22). 한편 국제노동기구인 ICFTU가 한국을 방문(1993. 4)하여 복수노조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시기

시도한 것의 소산이다. 이 점은 전노협에 포괄되지 못하고 있었던 전노협 이외의 ‘민주노조’ 조직들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중심성’과 ‘대표성’을 전노협과 공식적으로 공유한 것을 의미하였다. 둘째, 전노대가 결성된 1993년도는 전노협 창립 4년째의 해로서 이미 일부 전노협은 심각한 조직외해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고 대공장특위 사업, 업종회의 산하조직 설명회 혹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조직확대사업을 꾸준히 전개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이런 상태였기에 전노협은 전노대 결성을 통하여 확대된 ‘민주노조운동’을 전노협운동의 연장선에서 발전시켜 나갈 힘이 남아 있지 않았다. … 1992년을 거치면서 업종회의 및 대공장 노조들이 상대적으로 정치적 상승 과정을 걷고 있었던 반면, 전노협의 조직력은 급격히 훼손되었던 상황은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전개를 뒷받침하였다. 그리고 이는 전노대 결성과 함께 전노협에서 전노대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구심의 변동이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하였다(산별노조운동연구팀, 1999).

에 IMF(국제금융노련)도 합법성 쟁취를 도와주겠다고 공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민주노동운동진영은 전노협의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노선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전노협 중심성을 의심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나타났다. 업종회의는 상급단체로서 업종연맹체계를 건설하고자 했다. 결국 업종회의는 1992년 산별노조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던 전국노동자대회 결의를 부인하고 노동조합의 조직발전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조선노협도 업종연맹을 시도하는 가운데 자총련(준)이 출범되었다. 그리고 금속도 업종연맹체계로 발전했다. 이처럼 이 시기에는 산업별노조보다는 업종연맹으로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대기업노조도 업종회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들은 대우자동차 김종렬 위원장 당선을 계기로 대노협과 현총련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재편하고자 했다.

전노대는 이러한 지형 속에서 건설되었다(1993. 6. 1). 전노대 결성 당시 전노협과 업종회의,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가 병존하고 있었다. 이처럼 민주노동운동‘진영’은 1991년부터 ‘공동사업·공동투쟁을 통한 조직 통합’이라는 공감대가 생겨났고, 결국 “기존에 조직된 단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참가조직의 상급조직이 아니라 공동사업 추진체”인 전노대를 만들 것을 결의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1993. 4. 22)²²⁵).

이처럼 전노대는 사실상 전노협을 상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우선, 전노대 건설 과정에서 전노협의 조직 중심성을 부정한 데서 알 수 있다. 전노협은 기존의 전국적 공동투쟁을 확대하여 1992년 10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업종회의, 대공장, 미가입 1,071개 노조, 47개 단체와 함께 ‘민주노조 총단결을 통한 산별노조 건설,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총연합조직 건설’을 결의했다. 그러나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 수련회(1993. 2. 26~27)에서 전노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그 핵심은 전노협 중심성에 대한 부인이었다. 즉 대노협, 현총련, 업종회의 등이 전노

225) 첫째, 공동사업 추진체의 명칭은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로 한다. 둘째, 전노대의 성격을 (가) 전노대는 공동사업 추진체이다. (나) 전노대는 조직의 상급연합조직이 아니다. (다) 전노대의 재정은 의무금 형태가 아닌 사업별 분담금으로 충당한다(전국노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체 위임위원회 합의문, 1993. 4. 23).

협 대표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논란이 되었다.

한편, 전노협의 조직체계도 부정되었다. 우선 당시 전노대 강화와 전노협 강화가 동시적인 과제로 제기되었는데, 두 조직의 위상이 내용상 동일하다는 점에서 모순적인 것이었다. 더 나아가 전노협 조직체계에 대한 청산 흐름도 1993~94년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1995년에 들어와서 지노협 체계가 해체되고 지역본부로 재편했다. 이것은 조직 형태에서도 전노협 중심성이 청산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전노대 건설에서 전노협 중심성을 부인하는 징후는 전국노운협과 전국노련 등의 노동운동단체의 배제에서도 확인되었다.

더구나 노동운동단체는 1993년 전노대가 만들어지면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공식 참가 자격을 잃었다. 노동운동이 전반적으로 개량화되어 나타난 현상이었다. 1988년 노동법 개정투쟁, 1989년 지역·업종별 노동조합전국회의와 전국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투쟁본부, 1991년 박창수 열사 노동자대책위, ILO공대위까지 ‘민주노조총단결 대오’에 하나의 주체로 참여했던 노동운동단체운동이 ‘민주노조총단결 대오’가 확인됨과 동시에 배제되어 버린 것이다(김승호, 2004).

이것은 전노협으로 상징되었던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변혁적 이념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는 협소한 임단투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혹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 사업기조”가 강조되었는데, 이것은 “협소한 임단투보다는 ‘사회개혁투쟁’이라는 것을 크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정서’를 크게 의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이은숙, 2000). 이러한 사회개혁투쟁의 강조는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있었다²²⁶⁾.

226) 전노대의 사업방향은 “① 임금인상, 노동법 개정, 고용안정 확보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 및 기본권 확보를 위한 업종별 통일투쟁(사업), 지역적·전국적 공동투쟁(사업), ② 자본과 정권의 이념공세, 노동운동 탄압 및 각종 노동정책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공동대응 강화 ③ 광범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노조 총단결의 지평확대 ④ 사회·정치·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와 관련된 관심사에도 적극 참여 ⑤ 국제자유노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대활동 강화” 등으로 합의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에서 투쟁의 중심이 지역이

94년 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 준비위 발족식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회개혁투쟁’이 제출되었다. 민주대개혁이 사회개혁으로 바뀐 것이었다.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사회개혁이 사회주의와 비슷하니까 그렇게 이해할지 몰라도 사회개혁은 사회주의적 개혁이 아니라 연금개혁, 의료보험개혁, 교육개혁, 방송개혁 등을 제기하는 것인데, 그 방향이 독점대사업장 노동자들의 금전적 관심을 충족시키고 경제적 실리를 중심으로 한 노선이었다(김승호, 2004).

이처럼 전노협의 중심성이 부인되는 가운데 민주노총건설추진위원회(1994. 11. 13. 이하 민노준)는 전노대를 구성한 4개 조직(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으로 구성되었다. 민노준의 조합원수는 비록 한국노총에 비해 열세였지만, 자동차·조선·공공부문 등 주요 전략사업의 노조들을 다수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중이 거의 한국노총과 대등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의 대거 이탈 또는 맹비납부 거부로 인하여 맹비납부 조합원 기준으로는 약 50만~60만 명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런 점에서 민노준은 부분적으로는 한국노총을 압도하는 조직노동운동의 중심이 되기에 충분했다.

민노준은 1995년 상반기 사업과 관련하여 임금인상투쟁과 더불어 ‘사회개혁 요구’에 최우선적으로 힘을 집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먼저가 아니고 업종이 우선되는데, 이것은 뒤의 투쟁(사업)이란 표현에서 보듯이 노동법 개정에 대한 접근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 전노협의 경우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사고했기 때문에 지역·업종과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②에 대중투쟁의 강화가 아니고 ‘정치적·정책적 공동대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노사정위로 이어지는 노사협조주의적인 참여정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합법정치세력화 노선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때 상담소들이 해산하고 한노사연 등 정책연구소가 설립되는데 이러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투쟁은 노조가 알아서 하고 정책서비스를 하는 것을 자기 역할로 삼게 되는 것이다. ③에서 ‘민주노조 총단결’이란 표현은 반어용전선을 말하는 것으로 어용이 아니면 총결집하자는 것인데, 전노협은 선진적 부분을 중심으로 변혁적 산별노조를 사고했다면, 한국노총이 아닌 부분은 최대한 포괄하자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다. ④에서 보듯이 ‘계급적·민중적 요구’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와 관심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국민과적 발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⑤에서 ‘국제자유노련과의 연대’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개량적이고 자유주의적 노동운동과 연대관계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김승호, 2004).

의 사회개혁 요구는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적용의 확대, 국민연금의 민주적 관리운영, 세제 및 재정개혁, 재벌의 경제력 집중규제 등 4개 항목이었으며, 뒤에 교육개혁이 추가되었다.²²⁷⁾ 민노준은 사회개혁투쟁의 의의를 노동자와 국민생활을 개선하고, 사회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며, 노동자의 단결과 정치의식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는 것에서 찾았다(민주노총준비위원회, 1995: 2)²²⁸⁾. 민노준은 또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른 적극성을 보였다. 민노준의 이러한 적극성은 1992년 대선 이후 노조 정치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민노준 결성으로 인한 자신감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민노준은 이처럼 임단투, 사회개혁투쟁, 정치활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고 1995년 11월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준비를 추진해 나갔다. 민주노총 건설의 경로와 방법에 대한 많은 이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건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 갔다. 민노준은 1995년 10월 18일 제12차 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 강령규약(안)을 확정 짓고, 조합원 1인당 1만 원씩의 민주노총 건설기금을 모으는 한편, 활발

227) 민노준은 이 외에도 토지·주택·교통·환경문제의 개선, 언론개혁, 농축산물·금융·통신·자동차 시장개방 대응 등도 중요하고 따라서 어느 것 하나 경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과제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전국민적 사안인가, 투쟁주체와 동력이 담보되는가, 쟁점화 내지 쟁취 가능성이 있는가 등을 기준으로 위의 과제들을 선정했다(민주노총준비위원회, 1995).

228) 이런 점에서 민노준의 '사회개혁투쟁' 노선은 임단협에 매몰되는 전투적 조합주의가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는 노동운동 내·외부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개혁 요구투쟁이 임금투쟁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87년 이후 운동의 경험에서 나온 임투만으로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인식도 그 기초에 놓여 있었다. 민노준은 사회개혁투쟁의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상층교섭이나 연대투쟁보다는 ① 현장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제도개선으로 발전시킨다, ② 지속적인 투쟁과 조합원 교육 선전에 주력한다, ③ 전국적 대중투쟁과 더불어 범국민적 연대투쟁으로 발전시킨다 등 조합원의 요구와 대중투쟁에 중점을 두었다. 민노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산하 노조들은 임단협시 사회개혁 4대 요구사항과 노동법 개정까지 포함하는 5대 제도개선 요구를 내놓고 1995년 임단투를 전개하였다.

한 정책연구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노총의 건설을 준비하였다. 민노준은 이 시기에 1년 동안 13회의 대표자회의, 16회의 운영위원회, 40회의 집행위원회, 2회의 단위노조 대표자수련대회를 가지면서 민주노총 창립을 착실히 준비해 갔다(이상 김준, 2001: 428~431 참조).

이상에서 보듯이 민주노총건설 과정은 전노협의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와 조직방식이 의심받으면서 약화되는 경로를 밟았고 결국 민주노총은 전노협을 상대화시킨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주의 노선으로 귀결되었다.

나. 민주노총의 소사(小史) (1기에서 4기까지): 이견그룹의 등장

민주노총 제1기부터 4기까지 전개되는 동안에 민주노총 이견 그룹 모두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었다. 즉 민주노총 제1기 집행부(권영길 위원장)는 국민과, 제2기 집행부(이갑용 위원장)는 현장과, 제3기 집행부(단병호 위원장)는 중앙과, 그리고 제4기 집행부(이수호 위원장)는 다시 국민과가 등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집행부 교체와 이들의 민주노총 운영에서 우리는 상이한 이념집단의 특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노사정위 참여문제, 정치세력화 관점, 그리고 조직과 실천론 등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995년 11월 민주노총의 출범과 함께 등장한 국민과의 민주노총 1기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라는 기치 아래 사회개혁투쟁을 ‘참여’와 ‘투쟁’ 전술을 통해 수행하고자 했다. 사회개혁투쟁은 이전과는 달리 정책참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데 이것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참여로 나타났다. 노개위 참여 과정에서 1996년 12월 노동악법이 날치기 통과되자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전개했다. 하지만 총파업 이후로는 ‘유연화 전술’에 더 무게 중심을 두었는데 이는 내부역량의 한계에 따른 측면도 있다.

권영길 위원장의 대선 출마로 직무대행을 맡게 된 배석범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은 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 직후 등장한 김대중 정권이 제안한 노사정위에 참여하였고, 1998년 2월에 정리해고제를 담고 있는 사회협약을 조인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정리해고제 수용은 조합원들의

<표 5-1> 민주노총 임원단

	시기	위원장	사무총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비고
제 1 기	1995년 11월 11일	권영길 업종회의	권영목 현종련	양규현 금속연맹	단병호(금속), 정해숙(전교조), 배석범(건설), 허장(사무), 배범식(자동차), 김영대(서울), 박문진(병원), 허영구(전문)	초대 위원장 추대
	1997년 3월 27일		김영대			사무총장 보궐선거
	1998년 1월 26일	백석범 위원장 직무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규현 수석 사퇴 후 배석범 수석부위원장이 됨. • 대의원대회(9.5) 권영길위원장을 국민후보(대선)로 추대 • 규약에 의해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이 됨.
	1998년 2월 9일	단병호 비대위 위원장			비대위원 연맹대표로 총 9인	노사정협약 부결 입원사퇴
제 2 기	1998년 3월 31일	이갑용	고영주	유덕상	이상춘(병원노련), 허영구, 김영대, 이규재(전일노련), 단병호	정기임원선거
	1999년 9월 17일	단병호	이수호	수석 지명 안함	김영대, 양경규, 배종배(건설노력), 유덕상, 이규재, 이상춘, 허영구	위원장 총장 사퇴로 부위원장 부족인원 보궐선거
제 3 기	2001년 1월 18일	단병호	이홍우	허영구	김태일(공공), 차수련(병원), 배종배, 김예준(공공과기), 박문진(병원), 이규재	정기임원선거
	2001년 8월 2일	허영구 직무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위원장 구속 • 중집(8. 2)에서 허영구 직무대행 결정
	2002년 5월 6일	백순환 비대위 장(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비대위원 연맹별 추천 • 조희주(전교조 부위원장 서리), 정용건(사무금융연맹 증권업종본부장), 황민호(공공연맹 부위원장), 이재웅(서울본부장), 염경석(전북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 파업 책임을 지고 허 직무대행 사퇴(2002년 4월) • 이수호 임시비대위원장 체제 후 비대위 구성
	2002년 8월 27일	단병호	이재웅 (화학섬유연맹) 사무총장 직무대행	유덕상	신승철(금속연맹), 이항원(전교조), 홍준표(공공연맹), 김형탁(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궐선거(위원장 외) • 단 위원장 구속으로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제 4 기	2004년 1월 16일	이수호	이석행 (금속)	강승규	강승규, 오길성(화학), 신승철, 김지예(전교조), 이혜선(공공)	정기임원선거

광범위한 반발을 초래했다.²²⁹⁾ 배석범 직무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곧바로 단병호 금속노련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 위원회가 꾸려졌다. 비대위는 총파업투쟁을 결의했지만 “첫째 경제위기 속에서 총파업은 여론적으로 불리하고, 둘째 조직내 갈등이 증폭되었고, 셋째 투쟁동력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철회했다(민주노총, 1999. 2: 155). 비대위의 파업투쟁 철회는 민주노총 제1기 집행부의 정리해고제 수용에 이어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부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2기 집행부 선거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민주노총의 균열은 제2기 집행부의 구성으로 봉합되었다.²³⁰⁾

이처럼 1998년 민주노총의 제1기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이른바 ‘사회적 조합주의’ 노선에 입각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비록 이후에 ‘전술적 활용론’으로 후퇴하기는 했으나 제1기 집행부의 정책은 한국 노동운동의 전략적 방향을 사회적 조합주의에 두고 그 수단으로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분명했다(김태연,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문제에 대해』, 『기관지 노힘』, 제56호, 2004. 7. 1).

한편, 정치세력화와 관련하여 볼 때 제1기 집행부는 1996년 말 총파업 투쟁의 패배가 의회 내에서 노동자를 지지·지원하는 정치세력의 결여로 인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²³¹⁾ 이에 따라 합법적 진보정당 건설을 노동자

229) 민주노총은 제8차 임시대의원대회(1998. 2. 9)를 개최하여 잠정 합의된 노사정 협약을 놓고 6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기립 표결을 실시했다. 협약안은 찬성 54표, 반대 184표, 기권 34표로 부결되었다. 그 결과 회계감사를 제외한 집행부 임원들이 모두 사퇴했다.

230) 1998년 3월 3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제1기 집행부와 비대위 임원들의 조합원에 대한 사과가 있었으나 공식적인 평가와 책임소재의 확인절차는 없었다(매노, 1998. 3. 4).

231) 한편 총파업과 이로 인한 해석은 민주노총 내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정당 건설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7년 노동법개정 총파업을 하면서(합법)당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총파업이 터지니까 “노동대중이 스스로 자발성을 가지고 전국적 총파업을 하는데,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하겠다는 우리가 대중에 묻어서 머리 쳐박아서 되겠느냐... 이젠 당이 필요한 시기다. 이 정도면 사회주의 정당의 물질 기초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이 나오면서 정당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으로 기초가 다르지만, 총파업을 점으면서 권영길 위원장이 “노동자의 요구를 정책적으로 전환할 국회의원이 없다”는 문제의식을 시발로 정당운동이 시작되었다(인터뷰 C, 2004. 2. 4).

정치세력의 일환으로서 추진했다. ‘국민승리 21’은 이러한 정치방침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며 1997년 12월 권영길 위원장을 후보로 대선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것은 대선 직후 ‘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1998. 1).

이념과 관련하여 볼 때 제1기 집행부는 사민주의적 경향이 전면화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사민주의에 대한 명시적인 논쟁보다는 사회적 조합주의와 합법정당 건설을 둘러싼 논쟁으로 외화되었다. 즉 민주노총 제1기는 사회적 조합주의에 입각하여 실천을 조직했으며 그 구체화된 형태가 노사정위 참여이다. 제1기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치행위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동운동과 질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란 담론을 통해 사회정책을 정당화했으며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제1기 집행부는 합법적 진보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전면적으로 승인했다는 점에서도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승리 21’의 등장과 정치 실험은 민주노총 제1기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로 인해 가능했으며, 이것은 향후 민노당으로 이어지는 정당 정치의 길을 열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민주노총 제1기의 사회적 조합주의와 당 건설 정치방침이 사민주의적 경향으로 경도되었다면, 민주노총 제2기와 제3기는 국민과가 아닌 좌파 집행부가 집권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다. 즉 이들 집행부는 제1기 집행부의 투쟁과 협상의 전술, 노사정위 참여 방침, 합법정당 건설 방침, 그리고 사회개혁투쟁 방침과 차별적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민주노총 제10차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제2기 이갑용 집행부²³²⁾는 ‘투쟁과 혁신’을 내세웠다(1998. 3. 31).²³³⁾ 여기에서 ‘투쟁’은 정리해고제

232) 위원장-사무총장 선출에서 기호 1번 정갑득 위원장 후보와 장문 사무총장 후보는 176표, 기호 2번 이갑용 위원장 후보와 고영주 사무총장 후보는 189표를 획득했다(무효 16표). 따라서 기호 2번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318명 중 찬성 205표, 반대 108표, 무효 10표로 나타났다. 이러한 안정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투표 결과로 볼 때 민주노총 제2기 집행부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도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혁신’은 민주노총이 현장 노동자대중의 요구가 조직 내부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주노총 제2기 집행부는 ‘투쟁’과 ‘혁신’을 통해 대중적 검증을 받겠다는 의도에서 임기 1년과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를 위한 조치로서 ‘임원 선거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노동자의 힘, 2001: 40).

제2기 이갑용 집행부는 중앙위원회(9차, 5. 14)에서 5월 말 파업투쟁(5. 27 총파업)을 조직할 것을 천명하면서 총파업 철회의 전제조건으로 대정부 직접 중앙교섭인 노정협상과 대통령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사정위가 자문위원회적 성격을 갖는 기구이자 실무적 협의기구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우회하고자 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노총은 중앙교섭 5대 요구안²³⁴⁾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정리해고제 철폐와 재벌해체를 담고 있었다. 결국 민주노총은 5월 27일과 28일 총파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제2기는 한편으로는 노정협상을 전개하면서 결국 중앙위원회(6. 5)와 대의원대회(6. 10)를 통해 노정위 참여를 결정했다.²³⁵⁾ 6월 5일 정부와 합의된 노정 협상안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의 전제조건은 민주노총 5대 요구안 대신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의 남용방지대책, 법정근로시간을 업종별·사업장규모별로 2000년부터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 등의 ‘논의’, 노사정위가 실질적 협의기구가

233) 다음의 언급은 현장파와 국민파 간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이갑용(전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 전 현충련 의장)·고영주(전 과기노조 위원장) 후보는 ‘투쟁하는 민주노총’, ‘아래로부터 혁신하는 민주노총’, ‘현장과 함께하는 민주노총’을 슬로건으로,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 ‘중앙위원 3배수, 대의원 5배수 증가’, ‘임기 1년의 과도지도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2기 지도부의 노선과 입장은 구체적인 활동 속에서 다시 검증되어야겠지만, 표방하고 있는 내용만큼은 현재 민주노총의 위기와 과제를 적절히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에 맞서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민주노총, 『그날에서 책읽기』, 제2호(1998. 5)).

234) 중앙교섭 5대 요구안: 첫째,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둘째,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셋째, 고용·실업자 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넷째,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해체·노동삼권 보장·노동자 경영참가, 다섯째, 불평등한 IMF 이행조건 재협상(민주노총, 1998: 6).

235) 노정합의에 대해 6월 10일 402명 중 243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12차 대의원대회에서 찬성 163표, 반대 28표, 기권 32표로 압도적으로 노사정위 참여를 최종 결정했다.

되도록 운영, 2000년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등 애초의 중앙교섭 5대 요구안에 비추어 보아 알맹이 없는 약속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것은 민주노총 제2기 집행부가 노사정위를 '전술적 활용전략'으로 방향 전환을 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²³⁶⁾ 현장과 집행부가 대의원에 대한 장악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전국현장조직 대표자회의는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철회라는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양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 기조를 뒤집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심하게 반발했다(한경, 1998. 6. 9). 이처럼 노사정위 참여로 민주노총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노사정위가 점차 유명무실화되어 가자, 민주노총 제2기는 노사정위에 대한 참여와 탈퇴를 번복했다. 구체적으로, 양대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금융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항의하여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1998. 7. 10).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양대 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원장과의 합의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했다(7. 23). 그러나 이후 민주노총은 일방적인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강행과 교원노조 합법화 등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다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회 앞 단식농성에 돌입했고(12. 8), 결국 노사정위 불참을 다시 선언했다(12. 8). 그리고 산별대표자회의(12. 31)와 대의원대회(1999. 2. 24) 결정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결정했다.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민주노총은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산별교섭체제 확보 등 주요 요구를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대정부·대자본 직접 교섭체에 대한 요구를 지속했다.²³⁷⁾

236)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동조합은 정리해고와 직장폐쇄 그리고 교섭 등과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중앙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결국 이들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의 철폐'문제에 대해 철폐를 재논의로 수정결의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을 드러냈다(한겨레, 1998. 6. 6).

237) 탈퇴 당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리해고제 등은 일주일 만에 처리한 반면 기타 합의사항의 이행은 장기간에 걸쳐 부분적으로 이행되어 나가고 있으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지부진 함. 둘째,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관료 및 정당, 국회의 불이행

한편, 정치세력화 방침의 경우 민주노총 제2기는 현장과 집행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법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한 제1기의 정치세력화 방침을 수용했다. 이것은 제2기 집행부가 민주노총 내부의 정당건설운동 흐름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 공간을 노동자계급 조직화의 전술적 활용 단위로도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제2기 집행부는 혁신의 주요 과제로 제기했던 ‘직선제’를 관철시키지 못했고 다만 대의원 수를 늘리는 정도에서 만족해야 했다. 이처럼 제2기 집행부의 실천은 좌파에 걸맞지 않는 행보를 거듭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렇다면 제2기 집행부가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합법적 진보정당사업을 유지하는 등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과는 다른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적 상황과 조합원들의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민주노총의 위치와 무관하지 않으나, 보다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민주노총 내부의 역학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민주노총의 집행부를 좌파가 장악해도 대중조직, 예를 들면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그리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서 대의원대회(이하 대대)와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중요한데, 특히 임원, 실장, 지역본부장, 산별연맹 위원장 등이 주요 구성원인 중집은 민주노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좌파들은 대체적으로 대대를 확고하게 장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에 대한 대책이 없음. 특히 법률적 구속력도 없고,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그 위상과 역할이 규정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대통령 자문기구일 뿐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명실상부한 법률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지 못함. 셋째, 대량실업, 정리해고를 야기시키는 구조조정정책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공공, 금융 특위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 최소화에 대한 제1기 합의사항조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 넷째, 현재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신자유주의적 유연화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고 있고,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배제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체제가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다섯째, 주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역관계상 6.10 대의원대회에서 전술적 활용론을 선택했던 것은 불가피했음. 그러나 그 후 전술적 활용론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나 대응이 미흡했으며, 결과적으로 힘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를 통한 사회적 쟁점화도 어려웠고, 사회적 교섭구조로 만들어 나가지도 못했음(민주노총, 2004. 5: 54 참조).

중집에서도 힘의 확실한 열세에 있었다. 중집에 참여한 연맹대표자들은 국민과적 성향의 위원들이 대부분이었고 금속연맹과 지역본부 정도에서 현장파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²³⁸⁾ 따라서 제2기 집행부에서 의도한 대대는 빈번하게 무산되었는데, 이것은 이갑용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조직내 역학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²³⁹⁾

238) 참고로 이갑용 집행부 당시 중집 구성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1997. 12 현재): 배종배(건설), 문성현(금속), 송보순(병원), 최충일(사무), 이형모(언론), 조준호(자동차), 이동진(전교조), 양경규(공익), 박희석(민철), 정갑득(현충련), 장운(대학노련), 오길성(화학연맹), 김호선(한국통신), 심일선(금융), 강승규(택시), 윤석수(전강노), 조희만(의보), 이규제(전일노협), 김종인(화물), 임성규(인천경기), 이용길(대전충남), 엄경석(광주전남), 강한규(부산양산), 홍여표(경남), 나현균(해북특위). 이상의 중집 구성에서 현장파 성향의 위원들이 중집의 소수파를 형성한 데 반해 국민과는 다수파를 형성했다. 이에 대해 현 집행부는 규약 개정으로 1999년 3월부터 실차장과 기관장이 중집 성원으로로서 중집회의에 들어가도록 했고 가맹조직과 지역본부 배정도 늘렸다. 그 결과 중집이 24명에서 47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역시 힘관계를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중집 내에서의 힘의 분포도는 이후에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239) 한편 제2기 집행부 시기에 이념과 관련하여 특징있는 두 가지 사건이 존재했다. 그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논쟁과 현장조직운동의 전국적인 부상이었다.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논쟁은 김유선이 제기한 사회적 조합주의로부터 출발했다. 이 논의에 기반하여 국민과는 남아공의 '셍텀버 위원회'와 호주의 '21세기 노동조합운동 발전전략'을 모방한 '21세기 위원회'의 구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좌파진영에서는 노동운동의 계급적·정치적 발전의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비판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 논쟁은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다가 중단됐다. 이 논쟁을 통해 민주노조진영 내에 존재하는 상이한 정파 그룹은 보다 명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념적 지향을 강하게 띤 현장조직도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부상했는데, 전국 현장조직 대표자회의 계열은 1997년 하반기에 선거를 통해 주요 대공장의 집행부에 진입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노총 제1기 지도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과 양보교섭, 그리고 정리해고제 수용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비판적인 지지를 받았던 제2기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자 현장조직운동의 정체성도 위협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 1999년 1월 금속산업연맹의 선거에서 '혁신지도부'를 출마시켜 민주노조운동 내에 전국적인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운동의 비공식적인 부문이었던 현장조직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민주노조운동은 민주노총 상층에서부터 현장조직에 이르기까지 노선적인 분화를 하게

이갑용 집행부가 약속한 대로 임기 1년여를 채우고 물러나자 민주노총은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다. 이때 등장한 단병호 제2기 보궐 지도부는 중앙파로서 제1기와 제2기에 걸친 노선의 분화를 노동조합운동 내부의 분열이라고 주장하면서 통합 지도력을 자임하고 나섰다. 그러나 단병호 집행부는 ‘특정 정파에 소속하지 않겠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우파와 중간파 연합으로 구성하여 좌파를 배제하였으며, 제2기 지도부에서 복원했거나 시도했던 노정협상과 민중연대 등을 활용하면서도 제1기에서의 시민연대와 민주노동당 강화 입장을 지속해 나갔다(노동자의 힘, 2001: 42~43). 하지만 제2기 보궐 집행부는 노선적으로는 제1기와 제2기의 중간에서, 합법화에 걸맞는 노조활동과 김대중 정권에 맞선 대중투쟁의 조직화 사이에서 계속 혼란과 동요를 겪었다. 5월 총파업투쟁에서 8월 공안정국 투쟁, 그리고 10월 ASEM 반대투쟁에 이르기까지 이런 혼란과 동요는 지속됐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대중적 불신이 누적되어 갔다. 이것은 여전히 민주노총 집행부가 서 있었던 정치적 지형 및 힘의 관계와 취약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중앙파 노선의 불분명한 입장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이 보인다.

민주노총 제3기 위원장 선거에는 3개 정파가 모두 후보를 내었고 그 결과 단병호 보궐 집행부 위원장이 재선출됐다(2001. 1. 19).²⁴⁰⁾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1차 투표의 1, 2위가 겨루는 결선투표에서 현장파가 탈락함으로써 국민파와 좌파연합의 대결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병호 후보가 불과 5표 차이로밖에 이기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제3기 집행

되었다. 이로써, ‘정치운동-노동조합의 상층지도부-현장조직’에 이르기까지의 노선적(경향적) 분화는 이후 더욱 확대·지속됐다.

240) 세 후보 진영은 중앙파의 단병호 위원장 후보와 이홍우 사무총장 후보(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현장파의 유덕상 위원장 후보와 윤성근 사무총장 후보(현대차노조 전 위원장), 그리고 국민파의 강승규 위원장 후보(민주택시연맹 위원장)와 이석행 사무총장 후보(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였다. 1차 투표에서 2위를 한 단병호 후보는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역전극을 이루어 내면서 2차 투표에서 강승규 후보를 5표차로 따돌리면서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 냈다. 참고로 전체 846명 중 783명이 투표에 참여했던 1차 투표에서 1위 강승규 후보는 과반수에 60여 표 부족한 332표를 얻은 반면, 2위 단병호 후보는 1위보다 87표나 뒤진 245표를 각각 획득했다. 이것은 제3기 집행부가 제2기 집행부 못지 않게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부 또한 제2기 집행부와 같은 힘의 열세를 안고 출발하게 된 것을 의미했다.

제3기 집행부는 노사정위 참여 문제의 경우 노정, 노자, 노사정 총체적 교섭 방침을 정했다. 즉 이들은 노사정위원회 해체와 사안별 노정교섭·노사정교섭을 제시했다: “총연맹 교섭은 현안 사안별로 총연맹(사안에 따라 한국노총 포함)과 정부의 교섭 또는 총연맹(사안에 따라 한국노총 포함)과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교섭이란 형태로 추진하도록 한다.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지 않고 비상설적으로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당사자가 모여 교섭하는 형식으로 노정교섭, 노사정교섭을 추진한다”(민주노총, 2004. 5). 이처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교섭이 아닌 노정직접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정부와 노정 직접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편, 이 시기에 민노당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민노당은 세 번의 선거(2000년 4.13 총선, 2002년에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물질·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방침의 이면에는 정치세력화에 대한 민주노총의 열망뿐만 아니라 중앙파의 적극적인 의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파는 현장파와는 달리 합법적 대중정당 건설에 가장 적극적인 행위자였고 최고의 공로자로 평가되었다.

우리가 보기에 현재 민주노동당은 중앙파에서 만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후 NL이 많이 들어가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민노당은 중앙파라고 보여진다(인터뷰 C, 2002. 2. 4).

중앙파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방침과 정치세력화 방침에서 국민파와 현장파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노사정위 참여문제는 현장파에 가깝고 합법정당 건설은 국민파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파 노선은 향후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립이 요구될 운명을 갖고 있었다(중앙파 노선에 대해서는 제5장 제2절 3. 참조).

단병호 위원장 구속 이후 허영구 직무대행(2001. 8. 2)을 통해 꾸려 온

제3기 민주노총 집행부의 위기는 발전노조 4·2 총파업 철회로 인한 단병호 위원장을 제외한 지도부의 총사퇴로 나타났다. 즉 공기업의 매각, 민영화, 인원감축, 임금삭감에 따른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대해 철도, 가스, 발전 등 공공부문 3개사 노조가 연대파업(2002. 2. 25)에 돌입했다. 특히 발전노조는 38일간에 걸친 총파업을 단행했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총파업(4. 2 예정)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노정협상을 통해 이를 철회했다. 결국 민주노총의 정부와의 합의안은 부결되었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그리고 2002년 8월 27일 대의원대회에서 단병호 위원장을 제외한 보궐선거를 실시했고 여기에서 선출된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을 직무대리하게 되었다.

이념과 관련하여 단병호 집행부에서 특이할 만한 일은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의 구성과 논의에 있다.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활동가들의 총체적인 노동운동의 상에 대한 갈증과 노동운동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민주노총은 지금 심각한 대중적 불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간부나 현장의 선진활동가들은 노동운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목말라하고 있다(민주노총, 2000. 10).” 이것은 노동운동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와 전망을 제시하겠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은 각 정파들 간의 절충에 불과한 것²⁴¹⁾으로서 원래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은 민주노총 제1기와 제2기의 기초에 대한 원칙 없는 절충이자 봉합이다”(이종탁, 2000): “나도 이 논의 과정에 참여했지만 노력은 사실상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조직 내부에서도 논의의 중요성

241) 초안은 ‘노동운동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2000. 10. 16)에 제출되었다. 이것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민주노총의 현재와 과제, 제2장 민주노총의 이념적 지향과 전략, 제3장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제4장 조직발전전략, 제5장 민주노총의 정치·연대·통일전략”(민주노총, 2000. 10 참조). 목차와 참여인원 및 조직(3개분과: 1분과-이념, 노선, 정치·연대·통일, 2분과-임금, 고용, 경영·정책참가, 경제, 사회복지정책, 3분과-산별노조건설 전략, 조직확대 전략, 조직혁신, 여성노동자 정책, 투쟁교섭전략)으로 볼 때 민주노총이 상당한 야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창한 구상은 대등하게 참여한 3개 정파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거듭했고 결국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이 폭넓게 인정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논의에 참여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밖에서 논의 과정과 결과를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 상호 불신과 의심, 심지어는 비생산적인 비난과 혐의 잡기의 자해행위가 기승을 부렸었다”(임영일, 2004: 16). 결국, 2002년 대의원대회에서 이 안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제4기 집행부 선거는 국민과와 범좌파²⁴²⁾의 경쟁으로 치러졌다. 범좌파를 대표하는 기호 1번 유덕상-전재환 선본은 ‘새로운 10년! 문제는 힘이다. 힘있는 민주노총’을 핵심구호로 뽑았다. ‘새로운 10년’은 앞으로 민주노총의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부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문제는 힘이다’는 현재 민주노총 문제에 대한 진단이다. 따라서 ‘힘있는 민주노총’을 민주노총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과를 대변하는 기호 2번 이수호-이석행 선본은 ‘우리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저지와 분쇄를 넘어 쟁취와 확보로!’가 주요 선거 표어다. 앞부분은 우리(민주노총)를 바꿔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뒷부분은 현 집행부가 ‘저지와 분쇄’에만 매달렸다면, 앞으로 ‘쟁취와 확보’로 나아가겠다는 전망을 담고 있다. 기호 1번 표어 작성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문제는 모두 힘있는 투쟁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안을 제시하든, 성과적 교섭을 하든 힘있는 투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호 2번 선본 관계자는 “민주노총을 바꾸지 못하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242) 여기에서 범좌파란 누구를 지칭하는가?: “범좌파의 주체는 (엄밀히 말하면) 노힘에 있는 노조활동가들을 의미한다. (다른 세력과 구분하기 위해) 달리 표현하기 위해서 범좌파의 주체 중 하나를 노힘이라고 부른 것이다. 또 하나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데이포럼’과도 (인적으로는) 다 겹쳐진다. (중앙과 계열인) 평등회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거 같다. 민주노동당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중앙과는 민노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라는 입장이 분명하다”(인터뷰 E, 2004. 2. 10). 이상의 언급에서 보듯이 범좌파는 조직적으로는 노힘, 메이데이포럼, 그리고 평등연대이다. “평등회의는 속칭 중앙과라 일컬어지는 노동조합운동진영의 한 분파로 금속과 공공의 상층을 중심으로 2003년 하반기에 구성되었다. 단위사업장, 연맹 등에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메이데이포럼은 평등회의보다는 범위가 좀더 넓다. 1990년대 말에 현안문제들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만나자는 취지로, 노힘 구성원들을 포함하여 현장 안팎의 활동가들이 논의 틀로서 구성하여 1년에 두어 차례 토론회 개최 등을 해 오고 있다”(정상철, 『기관지 노힘』, 제47호, 2004. 1. 26) (노동자 힘에 대해서는 이 5장 2절 1. 다. 3) 참조).

며 민주노총을 바꾸기 위해선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혁신’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표어를 더 함축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힘’과 ‘혁신’의 대결이 될 만하다(매노, 2003. 11. 31).

제4기 집행부 선거의 특징은 각 정파의 입장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제4기 집행부 선거는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좌우’라 칭해지는 양 진영이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뿐만 아니라 직능의 성격이 있는 부위원장 후보군까지 포괄하여 진영을 꾸리고 서로 맞붙은 조직 선거”였다(정상철, 『기관지 노힘』, 제47호, 2004. 1. 26). 좌파의 경우 단일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좌파 내부의 토론을 거치면서 입장 차이를 명확히 했다. 반면, 국민파는 범좌파와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노선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었다(본 논문의 제5장의 제2절 3. 참조).

선거 결과(2004. 1. 16)는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이수호와 이석행, 부위원장에 강승규, 신승철, 김지혜, 이혜선 후보가 당선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부위원장이 모두 국민파 성향의 후보들이 당선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던 기존의 부위원장단의 구성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차별적인 결과였다. 특히 중집과 대대의 국민파적 성향을 감안한다면 제4기 집행부는 일관된 자기 정체성과 정책의지 실현의 틀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이것은 선거연합까지 만들어서 국민파에 대응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좌파의 기대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즉 제4기 선거는 좌파의 입장에서 볼 때 “총연맹의 중앙권력이 ‘개량과 투항’세력, 즉 ‘우’에 넘어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선거”였다. 하지만 “노힘의 입장에서는 ‘국 쏘고 살 데는’, 밀지는, 스타일 구기는 장사”였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패배한 선거였다(정상철, 『기관지 노힘』, 제47호, 2004. 1. 26): “대중들이 ‘바뀌 보자’고 생각했던 거 같다. 1998년 이후 제2~3기(집행부)가 6년을 한 것인데, 매년 총파업을 했지만 그걸로 돌파가 안 되었다... 현장이 많이 무너졌다. 60표를 가진 대공장들이 좌파와는 거리가 먼, 어용이라는 비난을 들을 수 있는 표였고 실제 표의 각축이 150여 표 정도였으니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로 인해 심각한 정도로 많이 무너져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인터뷰 E, 2004. 2. 10).

제4기 민주노총 집행부는 선거 결과의 자신감과 자신들의 신념에 근거하여 사회적 조합주의 노선을 명확하게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이수호 당선자는 “새로운 노사정위의 틀을 만드는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사정위 틀이 만들어지면 참가해서 또 저희들의 안을 가지고 가까이 함께 대화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노사정위 틀을 정부와 사용자, 특히 정부와 협의하면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이수호 당선자 인터뷰, 『기관지 노힘』, 제47호, 2004. 1. 26)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것을 보다 구체화시켜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기본방침이다... 2004년 사업계획에서 민주노총은 투쟁계획과 함께 교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였다. 민주노총의 교섭방침은 중층적·총체적 교섭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산별 교섭과 대정부교섭, 그리고 사회적 교섭구조를 만드는 일이 주요한 내용이다”(이상학, 『노동과세계』, 제292호, 2004. 6. 3)라고 언급하면서 민주노총 제4기의 중층적·총체적 교섭전략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3월 2일 개최된 민주노총 1차 중앙위원회는 2004년을 ‘투쟁을 철저히 준비하는 해’로 규정하고 각 부문의 투쟁요구를 나열하며 ‘중층적·총체적 교섭구조 쟁취’라는 목표하에 노사정위원회 참여, 산업별(업종별)교섭 중심의 투쟁계획을 제출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4월 1일 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위 참가문제에 대한 조직 토론을 결정했다.²⁴³⁾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5월 7일 ‘노조의 사회적 대화전략’ 토론회에 이어 올바른 사회적 교섭대책에 대한 조합원토론을 진행했다.

다른 한편, 이수호 위원장의 행보는 기존의 위원장들과 비교하여 과격적이었는데, 청와대를 방문(3. 4)하는가 하면 경총 회장까지도 방문(3. 8)²⁴⁴⁾

243) 주요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교섭에 대한 조직 내의 공론화를 위해서 내부 토론회와 공개 토론회를 추진함.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조직 내의 토론 지침을 작성하여 조직단위의 토론을 충분히 진행함. 조직적인 토론을 취합하여 민주노총 공식 조직의 논의에 착수함. 총선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조직적인 논의는 총선 이후에 시작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결정함”(민주노총, 2004. 5).

244) 경총 이수영 회장과 김영배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수호 위원장은 새로운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앙교섭 제안, 현장방문 제안 등을 제안하면서 “이제 우리 새롭게 노사관계를 만들어 모두가 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자. 우리도 열심히 할 것이다”라는 말로 얘기를 매듭지었다(디지털 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청와대에서 노·사·정 각 계대표와 정부 각료들이 참석한 노사정토론회를 개최했다(5. 31). 또한 양 노총 위원장, 경총·대한상의 회장,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노동부 장관 등 6인이 참가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6. 4)가 개최되었다. 이들은 이 회의체를 일단 8월 말까지 운영하면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향을 논의하기로 하고, 그 밑에 양 노총 사무총장, 경총·대한상의 부회장, 노사정위 상임위원, 노동부 차관 등 6인의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이제 노사정이 한 자리에 앉았다”고 선언했다(김태연, 『기관지 노힘』, 제56호, 2004. 7. 1).

노사정지도자회의에 대해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사정지도자회의를 “노사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5월 31일 노사정 토론회에서는 기존 노사정위원회 밖에서 사회적 교섭틀을 만들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하는 것도 가능하고, 새로운 사회적 교섭틀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이상학, 『노동과 세계』, 제292호, 2004. 6. 3).²⁴⁵⁾

한편 민주노총 제4기는 정치세력화에 있어서도 10명의 민노당 국회의원이 의회에 진출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수호 당선자는 당선 인터뷰에서부터 민노당에 대한 방침을 천명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노동자대표를 국회에 진출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시작되면 민주노동당과 함께 선거체제로 돌입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이며, 또한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

www.digitalmal.com, 2004. 10. 15).

245) 노사정위에 대한 태도는 다음 평가에 반영되어 있다: “현행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① 노동시장 유연화, 정리해고 등의 반노동자적인 정책을 수행 ② 사회적 협약기구로서의 독자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③ 정부 주도의 운영으로 노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④ 합의사항도 노동계에 불리한 부분은 즉각 법제화되고 노동계에 유리한 합의는 이행이 지체되거나 유보되는 등 이행의 담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⑤ 중앙교섭과 더불어 산업·업종별 교섭 및 논의들이 담보되지 않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민주노총, 2004. 5).

입니다(이수호 당선자 인터뷰, 『기관지 노힘』, 제47호, 2004. 1. 26).

총선 결과, 전국 243개 선거구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129곳, 한나라당 100곳, 민주당 5곳, 자민련 4곳, 민주노동당 2곳, 국민통합 21 1곳, 무소속이 2곳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정당별 투표에서는 열린우리당이 38.3%, 한나라당 35.8%, 민노당 13.1%, 민주당 7.1%를 획득함으로써 각 정당은 23석, 21석, 8석, 4석을 배분받았다. 결국 민노당은 지역구 두 곳과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차지함으로써 총 10명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제3당에 올라섰다.²⁴⁶⁾

물론 민주노총 집행부 제4기의 행보는 좌파들의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법무부, 노동부와의 정기적 정책협의회를 추진하며 이 속에서는 ‘현안에 대한 요구와 해결이 아니라 정책협의’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총자본이 말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기조와 흡사하다... 이것이 지도부 출범 2개월 동안 진행된 일들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부에 요구한다, ‘우리가 변했으니 너희들도 변해라’, ‘노사정위원회는 위상만 변화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배제된 일자리협약은 실효성에서 문제다’라며 노사정위원회로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달라고 한다. 3년의 약속, 우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던 이수호 집행부의 변화 내용

246) 한편 국민파에 기반한 제4기 민주노총은 당연히 사회개혁투쟁을 강조했다: “저희들은 사회개혁투쟁을 전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임금투쟁이라든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치중했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부 보수언론들의 과도한 비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민주노총이 사회 전체 문제, 사회개혁과제, 사회공공성 확보, 교육이나 의료 등 우리 국민 전체의 생존 내지는 삶의 질과 관련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더욱더 정책을 만들어 내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속으로 그리고 우리 민중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문제를 더욱더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수호 당선자 인터뷰, 『기관지 노힘』, 제47호, 2004. 1. 26). 이처럼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을 추구할 것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서 사회적 교섭쟁취란 “산별교섭을 교섭의 중심으로 하되 제도개선 및 사회개혁 요구를 관철하고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사회적 교섭틀 확보, 노사관계 환경과 반노동자적인 정부정책 변경으로 실질적인 사회적 교섭여건 조성,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올바르게 개편하고, 새로운 노사정 교섭구조 마련, 사회적 교섭에 대한 대책을 대중적 논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교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정책·제도 개선과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 대정부·대사용자단체를 상대로 하는 사회적 교섭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민주노총, 2004. 5).

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선지현, 『기관지 노힘』, 제51호, 2004. 3. 30). 이 비판은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과의 계급성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간다. 즉 이들은 이수호 위원장의 “우리는 자본주의체제를 인정합니다. 이 체제 아래에서 어떻게 보다 평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라는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이수호 위원장이 3월 30일 개최한 ‘중앙포럼’에서 한 발언이다. 이 발언을 언론매체를 통해 본 순간, 잘못 보지는 않았는지 나의 눈을 의심했다. … 두 가지 판단이 언뜻 스치고 지나갔다. 지금 시기 자본주의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필연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과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큰 투쟁”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하나였고,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뒤흔들 정도의 투쟁을 해야, 그나마 그 체제 아래에서의 평등조차도 조금은 가능할 텐데, 미리 투쟁의 대상을 ‘인정’하고 투쟁의 방향을 ‘한정’해 버리니, 아무리 “준비된” 총파업이라고 해도 이미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그 둘이었다(선지현, 『기관지 노힘』, 제51호, 2004. 3. 30).

결국 이들은 여기에서 노선의 차이를 발견해 낸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혹 ‘냉소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를 되새겨 봤다. 아니었다. 이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뭔가? 사상과 노선의 ‘차이’이다. ‘빈부격차의 심화, 노동자계급 내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심화, 대공장과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의 격차 심화’라는 오늘날 노동자의 현실은 바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산물이고, 이는 현 시기 자본주의의 위기의 결과이자 필연적인 역사적 과정이며, 따라서 자본주의 자체의 극복 없이는 노동자가 처한 이러한 고통의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이 우리의 현실 인식이다. 따라서 ‘철저히 조직을 점검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 요구를 대중적으로 각인시키고 조합원의 요구로 만들어 낼 것, 투쟁의 집중점을 만들어 낼 것’ 이전에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바로 ‘반자본·반세계화·반신자유주의’라는 노동자투쟁의 정치적 방향이다. 이러한 정치적 방향과 결합하지 못한 노동자투쟁은 그것이 아무리 준비된 총파업이

라 해도 세상을 바꾸는 큰 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하지 못한다”(선지현, 『기관지 노힘』, 제51호, 2004. 3. 30).

이상에서 보듯이 제4기 집행부 선거는 민주노총내 좌파와 우파, 보다 엄격하게 이념적인 차이를 구분하자면 사민주의적 경향과 사회주의적 경향 간의 차이를 명확히 가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그 결과가 국민과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고 민노당이 선거에서 약진함으로써 향후 국민과는 노동운동 내 좌파와 대비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좌파의 비판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고 정부와 자본이 신자유주의적인 기조를 민주노총과 타협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과의 실험은 평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정치조직의 출현과 성장

민중당의 해산 이후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 방향은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국민승리 21과 민주노동당으로 또는 청년진보당과 사회당으로 이어지는 합법적 대중정당 흐름이며, 또 다른 하나는 노동자 힘 등의 비합법적 전위(혁명)정치조직의 흐름이다²⁴⁷⁾.

247) 좌파세력은 오늘날 운동단체들로 보면 민주노동당 내부조직으로는 평등연대, 외부 조직으로 노동자의 힘,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현장연대, 노동자평의회를 향한 전국회의, 이윤보다는 인간을, 사회주의정치연합 등에 소속해 있다. 그 외 좌파적 경향의 부문운동 조직들이 존재하며, 특정한 조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좌파 인사들 역시 존재한다. 그리고 좌파 조직들은 노선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의 혁신(평등연대), 민주노동당과 구분되는 합법적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사회당), 비제도적 투쟁정당 건설(노동자의 힘), 변혁적 전위정당 건설(사회주의 정치연합), 당운동과 구분되는 사회운동적 좌파운동 전개(사회진보연대), 노동자평의회 건설(전국회의), 대의제 비판과 비국가적 민주주의 추구(이윤보다 인간을) 등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조직 중에는 좌파연대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조직이 있는 반면, 그 중요성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조직들이 있고, ‘다함께’의 경우에는 자신을 유일한 혁명적 전위정당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차이들이 있다(김세균, 2004. 5). 본 논문에서는 민노당을 중심으로 정당 건설 흐름을 살펴보고 좌파의 두 가지 다른 모습인 사회당과 노동자의 힘의 정치전략을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민주노총 분화의 기초·토양은 (좌우파가)··· 1997년 대선까지 같이 했는데, ‘일어나라 코리아’ 나오면서 지금의 사회당 세력이(국승 21을) 나오게 되었고, 선거평가 후 노힘이 갈라지게 된다(인터뷰 C, 2004. 2. 4).

여기에서 국민승리 21과 민노당이 청년진보당 또는 사회당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결의와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 있다. 또한 이것이 노동자의 힘과 다른 점은 노동자 힘의 비합법적 전위정당 노선과는 달리 합법적 대중정당을 지향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국민승리 21과 민노당의 출현과 성장을 살펴본 다음 사회당과 노동자의 힘을 서술하고자 한다.

1) 국민승리 21

우선 합법적 대중정당인 국민승리 21과 민주노동당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민주노총이 정치세력화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었다.²⁴⁸⁾ 민주노총 이외의 다양한 진보세력이 민주노동당에 참여한 것도 합법적 정당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²⁴⁹⁾: “민주노동당이 기존 진보정당과 결정적으로 차별화되는 점으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과 민주노동당이 1980년대 이후 ‘진보적 민중운동’의 산물인 전국연합의 일부세력 및 기타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안철진, 2002: 2).

248) 사회적 조합주의에 기반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노선을 견지한 제1기 집행부의 국민과 노선은 정당건설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민주노총 건설을 주도했던 국민과 집행부는 적극적인 정책참가와 대중정당 건설 노선을 견지했고, 특히 대중정당 건설은 제2기 집행부를 거쳐 제3기 중앙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됨으로써 현실화되었다.

249) 민주노총과 진보단체들의 지원은 창립뿐만 아니라 존속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12월 대선 패배에도··· 국민승리 21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전과는 달리 강력한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라는 분명한 실체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때 운동방향을 달리했던 여러 진보세력이 선거 과정에서 ‘동상이몽’을 꿈꾸지 않았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그만큼 진보정당 창당에 대한 공감대가 깊고 넓은 셈이다. 선거 이후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을 빼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일부 세력과 진보정치연합 등 선거 과정에서 국민승리 21의 기본 뼈대를 이뤘던 층들은 흩어지지 않았다”(『한겨레 21』, 1998. 12. 17).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1996년 대통령 선거 이후 오랫동안 김대중을 지지하였던 세력 내에서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정책연합이 더 이상 정치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반성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곧 최대의 재야정치조직이면서 김대중에 대한 지지를 견지해 온 전국연합이 199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지지 대신 국민승리 21의 결성과 권영길 후보 지지에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1997년의 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앞두고 진보진영 내에서 오랜 분열의 강력한 요인이 소멸한 것이다”(노회찬, 2000).

민주노총이 정당 건설에 적극적일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해 온 정치활동금지 조항이 1998년 노동법 개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기형적인 이념지형의 변형도 진보세력이 진보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확장했다. 즉 1991년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동북아시아 정세의 변화, 특히 북한의 김일성 주석 사망과 북한의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약화 현상으로 인해 남북 대결의식,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현저히 줄어든 반면, 북한에 대한 체제 우월감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진보진영 내부의 레드콤플렉스까지 약화시키는 자연스런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6·15 남북 정상간의 만남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기존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국민승리 21 이전에 정당 건설을 통한 정치세력화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민주노조진영은 1987년 이래 전노협과 민노준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들에게 노동운동의 전국적 조직화,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환멸, 국가정치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 등의 요인은 민주노조진영이 국가정치로의 진출을 모색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역량의 한계, 내부 분열의 가능성,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실천을 조직할 수 없었다.²⁵⁰⁾ 그러던 중에 민주노총은 1996년 1월의 정기중앙위원회와 2월의 정

250) 전노협 시기의 정치활동은 정부와 집권당에 대해서는 파업 등의 직접 행동방식을, 야당(특히 평민당)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상호 지지·연대하는 방식을, 그리고 한국노동당이나 민중당 또는 재야정치조직(1990년의 국민회의, 1991년 이후

기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과 4·11총선 대응안을 확정하고, 정치위원회가 주관하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선거방침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정영태, 1999b: 261). 이 방침에 따라 1996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3명의 후보(부산 연제의 박순보, 경북 김천의 이병무, 서울 성동을 김명희)를 무소속으로 냈는데,²⁵¹⁾ 이것은 민주노총이 정치세력화를 향한 첫걸음이자 의지를 내보인 징표였다.

민주노총이 합법적 정당정치를 통한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직접적인 계기는 1996년 말을 전후해서 발생한 총파업과 그 과정에서 나타났다. 총파업투쟁 이후 민주노총은 정당정치의 필요성을 절감했는데, 이 당시 민주노총은 대규모 총파업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의 취약성으로 인해 투쟁의 성과가 왜곡되고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이다²⁵²⁾.

-
- 전국연합)에 대해서는 인적 조직적 연계를 맺고 (전국연합에 대해서는) 때로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정영태, 1999b: 256). 전노대 시기에는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활동이 없었으나 민주노총(준) 시기에는 1995년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지방선거 참여방침을 결정하였다... 먼저 1995년 지방선거에서 지역단위에서 무소속 후보 5명과 민주당 공천 후보 2명을 내세웠다. 그러나 후보선정 방식이나 선거운동 방식은 전노협 시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후보를 내세우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주로 전국연합과의 선거연합(공동대책기구)의 틀 내에서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후보 결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은 중앙이 아니라 해당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졌고, 중앙 차원에서의 노동자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 운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득표수 12,920표, 평균득표율 36.1%, 당선자 3명(당선율 42.9%) 등의 성과를 올렸다(정영태, 1999b: 260~261).
- 251) 1996년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적극 참여하고 각계각층의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세력과 함께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선거에 3명의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였다. 1987년 이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온 새로운 노동운동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노회찬, 2000). 그 결과 민주노총의 무소속 3명의 평균득표수는 1만 1천여 표였으며 평균득표율은 12.1%였다. 당선자는 하나도 없었고, 부산의 박순보 후보가 약 26,000표, 25%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2명의 후보는 불과 1,000에서 3,000 미만의 표, 1% 내지 4%의 득표율을 보여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정영태, 1999b: 262).
- 252) 민주노총이 정당 건설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제도권 정치영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제도권 정당이 독자

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우면서부터이다. 즉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조직의 역할과 노동자계급정당 차원에서의 조직의 역할을 구분해서 기능적으로 분화된 노동운동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요구가 형성되면서 노동계급정당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안철진, 2002: 11). 전 세계의 주목을 끌 만큼 위력적으로 전개된 1996년 말 총파업은 민주노총이 주도했으며 한국노총도 투쟁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이 투쟁에서 민주노총은 1987년 이래 거의 처음으로 절대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경험하였다. 이 총파업은 그 위세에 비해 얻은 것이 적었다. 노동법 재개정의 결과는 노동과 자본의 무승부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 총파업은 민주노총에게 두 가지를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총파업을 통해 확인된 자신감과 국회에 자신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반성이었다(노회찬, 2000).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국승 21을 고민한 것은 1996~97 총파업 이후다. “총파업을 했음에도 얻은 게 없다. 국회에 우리 의견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국회로 가야 한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했다(인터뷰 M, 2004. 9).

총파업은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부르주아정치에 대한 각성을 이루어냄으로써 한국에서 노동자운동의 ‘만개’와 노동자계급정당의 출현을 최소한 10년 정도는 촉진시켰으며 노동자계급 자체를 정치적으로 조직화할 긴박한 필요성을 인식시켰다(손호철, 1999: 380~381).

이러한 배경하에 민주노총은 1997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 “1998년 지방선거 참가, 1998~99년 정당 건설, 2000년 국회의원 선거 참가”라는 정치일정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1997. 3. 27)에서 ‘1997년 대선에서 독자적 영역 구축’, ‘1998년 지자체 선거에 대거 진출’, ‘1998~99년 정당 건설’, ‘2000년 총선에서 원내진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화 방침이 재확인되었다.

이후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1997년 대선”이라는 주제로 민주노총 간부토론회(1997. 5. 7)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민족해방계열(NL)과 민중민주계열(PD) 간의 두 가지 이견이 표출되었다. 전자는 민주노총 내의 주류파로서 “국민후보론”을 제안했는데²⁵³⁾, 이들은 한국사회의 대립구도가 여당과 보수야당을 포함하는 보수세력 전체 대 진보세력 간의 대립에 의해 기본적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파악하면서 보수진영에 대항하는 진보진영의 정체를 결속시킬 수 있는 민주개혁을 위한 최저강령을 내세우면서 민주진영 전체를 대변하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후자는 민주노총 내 좌파로서 “민중후보론”을 제안했는데, 이들은 근본적 변혁을 위한 사회 전반의 변혁적 대안이 제출되어야 하고, 단련된 선진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이 정치세력화에 대거 참여해야

253) 이들은 대체적으로 민주노총 내 국민파와 진보정치연합세력, 그리고 전국연합 내의 주류파라고 할 수 있다.

하며, 노동자정치활동이 자본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현장 속에서 분명히 각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철진, 2002: 13~17 참조).

이러한 이견이 확인된 가운데 민주노총 정치위원회(1997. 5. 21)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1997년 대선(초안)”을 만들었고, 민주노총 제8차 중앙위원회(6. 19)는 이것을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사업계획(안)”으로 제출했다. 이 안들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정당 건설을 주도해야 하고, 새롭게 건설되는 정당은 이념정당이나 계급정당이 아니라 ‘개혁적 국민정당’이 되어야 하고, 1997년 대선에서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국민후보 운동’을 전개해야 하고, 국민후보 운동을 지지하는 개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정치조직(가칭 ‘민주개혁연합’)을 각계각층에 제안하여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김세균, 1998: 637~639 참조).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라 민주노총은 제6차 임시대의원대회(1997. 7. 24)에서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1997년 대선에 권영길 위원장을 국민후보로 추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1997. 9. 5)와 국민승리 21 준비위원회(9. 7)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선거대책기구로서의 국승 21은 민주노총과 “다양한 진보적 정파들을 하나의 정치조직으로 묶어주는 첫 매듭”이었는데(안철진, 2002: 8), 과거의 진보정당과는 달리 대중조직 즉 민주노총과 전국연합, 진보정치연합, 정치연대 등 재야정치조직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97년 마포에서 시작한 국민승리 21(민주노동당의 전신, 진보정당)은 이전의 ‘진보정당사’와는 큰 차이점이 있었다. 과거의 진보정당이 기층민중과 괴리된 지식인 중심의 ‘진보정당’이었다면 97년 당시는 노동자운동의 성과로부터 출발했다. 당시 주축이 된 단체도 ‘전국연합’, ‘진보정치연합’, ‘정치연대’, ‘민주노총’ 등 다양한 부문과 현장의 대중운동조직이었다(송태경 민노당 정책국장 인터뷰, 진보누리, 2004. 11. 16).

‘국민승리 21’은 애초에는 15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의 상층간부 및 ‘진보정치연합’이 주축이 되어 조직된 (진보진영 주류파인) 진보진영내 우파의 15대 대선대책기구로 출발했다. 국민승리 21이 추진위의 이름으로 발족할 때까지 그 발족을 가져온 중요한 계기들에는 앞

서 보았듯이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결정과 실천 이외에 전국연합과 진보정치연합의 정당 건설 결정이었다. 전국연합은 제6기 대의원대회(1997. 2. 22)에서 “민주노총 등과 더불어 ‘우리 후보’ 방침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고 결정했고, 이어 전국연합 제6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세력의 공동선거기구 구성과 ‘국민후보’ 추대를 결의했다.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의 결의에 따라 양대 조직과 진보정치연합의 간부 및 기타 인사들이 참여하여 ‘국민후보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모임’이 구성되었다(1997. 6. 14). 그리고 진보정치연합은 제2기 임시대의원대회(7. 6)에서 국민후보운동 전개와 진보적 정치세력화 추진을 결의함으로써 이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렇게 출범한 15대 대선대책기구인 국민승리 21은 민주노총으로부터 조직적·재정적 뒷받침을 받게 됨으로써 커다란 무게가 실린 조직이 되었다(김세균, 1999: 3 참조).²⁵⁴⁾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승리 21 추진위원회’가 발족(1997. 8. 18)되고 곧 이어 ‘국민승리 21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다(9. 7). 여기에서 국민승리 21의 대통령 후보로 권영길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추대되었다.

한편, 노동단체, 연구소, 학술진영, 청년운동, 공개정치조직운동 등에서 좌파적 흐름을 형성해 온 세력들이 1997년 8월 16일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연대’(이하 정치연대)를 결성하였다. 이 정치연대까지 참여하는 진보진영 전체의 공동 대선대책기구인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 21’(이하 ‘국민승리 21’)이 1997년 10월 26일 정식으로 발족되었다.²⁵⁵⁾ 이로써 국민승리 21은 거의 대부분의 진보진영 인사들을 결집시킨

254) 이러한 결정과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민주노총은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조합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와 정치교육 그리고 가두선전 등을 전개하였고, 노조간부는 물론 일반조합원을 포함하는 정치실천단을 구성하여 적극 활용하였으며,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도 했다(안철진, 2002: 17 참조). 이처럼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결합으로 정치세력화 움직임은 대중적이고 물질적인 기반을 가질 수 있었다.

255) 정치연대는 국민승리 21측과 모임을 갖고 (권영길 후보, 정치연대의 오세철, 교수모임의 김상곤, 1997. 10. 9) 다음의 사안에 합의함으로써 국민승리 21에 참여하였다: (1) 대통령 후보는 ‘노동자·민중의 대의와 정치세력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후보’여야 한다. 이것은 국민승리 21측이, 정치연대측이 요구한, 진보진영의 후보가 ‘노동자·민중후보’여야 한다는 점을 완곡한 형태로 받아들인 반

범진보진영의 15대 대선대책기구가 되었다(김세균, 1999: 3; 김석준, 2003 참조).

제15대 대선에서 ‘국민승리 21’은 선거마스터 플랜을 ‘의미있는 득표’로 하고 250만 표(10%)를 목표로 잡았다. 권영길 후보는 IMF 관리체제하에서 예상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힘을 위력적으로 보여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 100만 표(유권자의 4%)를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대선 결과(1997. 12. 17)는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수준인, 14대 대선에서 백기완 후보의 득표보다 겨우 7만 표가 더 많은 30,6026표(득표율 1.2%)를 획득했다. 민주노총과 같은 대중조직이 공식적으로 지원했고, 80여 개 지부, 220개 선거연락사무소, 700여 명의 상근자, 1,500여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 및 4만여 명의 회원을 두었던 국민승리 21의 활동 결과로서는 너무나 비참한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김세균, 2001: 10; 김석준, 2003 참조).

1997년 대선에 대한 평가는 국민승리 21과 민주노총을 한쪽으로 하고 정치연대를 다른 한쪽으로 해서 상이하게 갈렸다. 국민승리 21은 선거 이후의 평가에서 “국민후보”전략은 “노동자(또는 조직대중)+a전략”으로서 이 전략은 여전히 타당했다고 주장했다.

면, 전국연합 등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있었던 ‘후보 사퇴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다. (2) 선거강령에 재벌해체와 독점자본에 대한 민주적·민중적 규제 확대 강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 민중탄압 분쇄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투쟁, 환경, 성, 보건의료, 교육 등 부문과 영역에 대한 민중적 대안 제시와 투쟁, 남북한 평화군축체제 확립과 민주적·민중적 통일방안의 제시를 포함시킨다. (3) 대중투쟁과 결합하는 선거투쟁을 하기 위하여 제 민중세력과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한다. 이 밖에도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승리 21측은 앞으로 ‘국민후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민주진보후보’의 말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승리 21측이 정치연대 등과 더불어 공동선거대책기구를 만드는 데에 동의한 이유로서는 “첫째, 국민후보로 나선 권영길 후보에 대한 현장조합원의 불신과 불만이 예상외로 커 그 불신과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정치연대 등과 함께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점, 둘째, 대선 대책기구의 조직체계가 이미 거의 완비된 상태에서 정치연대가 참여한 들 정치연대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셋째, 정치연대가 공동선거대책기구의 수립을 요구해 온 마당에 진보세력의 대단결이라는 명분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김세균, 1999. 3 참조).

첫째,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노동계급 일반의 정치의식이 대단히 저급하고, 조직화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득표 목표로 설정한 250만 표 내지 100만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외부의 3,500만 유권자 속에서 지지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 둘째, 우리 후보의 경우 지지율과 반대율이 거의 비슷(타후보는 지지율: 반대율이 3:1~2:1)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주로 ‘운동권’ 이미지와 막연한 괴리감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미지 변신을 통한 대중 접근은 선거 과정상 필수적이었다. 또 국민후보론이 가지는 ‘유연성’은 민중후보의 자족적 경직성을 지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론’에 입각한 총파업 승리를 계승하고자 한 것이다(국민승리 21, 1998: 2).

따라서 이들이 보기에 선거의 실패는 권영길 후보를 “명실상부한 ‘국민 후보’로 부각시키지 못”한 데 있었다. 즉 이들은 “우리 후보는 노동자 계급의 대표, 국민적 지도자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의 대표’로서만 인식되었을 뿐”인 데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국민승리 21, 1998: 2). 민주노총도 이와 비슷한 기조에서 선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득표상의 실패로 인하여 “97대선을 통한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적 가능성 확보라는 성과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97대선의 기본목표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인적·조직적·물적 기반 확보에 있다고 했을 때 민주진보진영은 97대선투쟁을 통하여 정치세력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민주노총, 1998: 2).²⁵⁶⁾

결국 양자는 이번의 1997년 대선이 정치세력화의 단초가 되었다는 데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 국민승리 21은 이것을 “유일한 활로, 최선의 선택,

256) 첫째, 민주진보진영이 최초의 단일전술 구사를 통해 정치적 단결을 이룸으로써 향후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진전된 성과를 축적했다. 둘째, 민주진보진영의 현실정치 경험과 이를 통한 전국에 약 70여 개의 지부, 220개의 선거연락사무소, 700여 명의 상근자와 1,500명의 자원봉사단, 약 4만 명의 회원, 후원자 조직 등의 성과를 남김으로써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셋째, 민주노총의 경우 노동자 최초의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통한 정치토론, 조합원교육, 정치위원회 활성화, 정치실천단 구성(약 2만 5천 명), 현장 및 지역에서의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성과를 남겼다. 넷째, 그 결과 부족하나마 최초로 노동자의 정치적 단결을 이루어 냈다(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 확인. 30만 표 중 약 15만 표 민주노총 조합원 표로 분석).(민주노총, 1998: 2).

오류보다는 한계, 정치세력화의 단초”(국민승리 21, 1998: 2)로 압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중장기적 전망과 계획하에 구체적 사업을 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우선적으로 ‘국민승리 21의 성과를 모아 진보정당 건설을 지향하는 정치조직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1998: 2). 결국 국민승리 21은 1998년 2월 21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승리 21을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치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민주노총도 1998년 5월 20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국민승리 21’을 확대 재편하여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승리 21’을 적극 지원 연대한다”는 정치 방침을 통과시켰다.

한편, 정치연대는 국민승리 21의 국민후보는 탈계급적 후보전술로서 “노동해방의 총체적 표현으로서의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단순히 제도권 진출을 위한 세력 과시를 ‘표’로써 보여주기 위해 제도권의 정치일정에 의존하는 오도된 정치세력화 전망”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정치연대, 1998: 2). 이런 맥락에서 “국민승리 21의 주체는 노동자가 아니라 국민, 즉 ‘보통 봉급생활자들과 평범한 납세자’로 설정되었으며, 민중의례는 국민의례로, 작업복은 양복으로, 노동자대표는 국민후보로 바뀌었다. 국민후보가 내건 정책공약은 여론조사를 근거로 내민 ‘사회복지 대혁명’이었으며, 따라서 정리해고, 퇴직금문제 등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대응한 투쟁을 요구하는 노동대중과 함께 호흡하기란 애당초 어려운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정치연대, 1998: 2).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정치연대와의 합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평가에 기반해서 정치연대는 국민승리 21과 민주노총의 선거 평가를 비판하고 있다.

지자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는가’식의 자의적인 선거 평가를 기초로 이번 대선투쟁에서의 실패를 은폐하며,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 이은 민주노총 건설, 작년의 총파업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자대중이 이미 체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망을 오도하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 또다시 노동자 민중이 일부 인사의 제도권 진출을 위해 득표전략으로 고려된 ‘동원 대상’이 되어서

는 안된다(정치연대, 1998: 2).

또한 정치연대는 권영길 후보의 득표전략에서 애초부터 “계급투표 전략, 즉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요구를 기초로 한 투표전략은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추상화된 국민의 하나로 계급성이 탈각된 개별적 존재로서 가두의 인자로만 존재하고, 후보의 이미지나 좌표도 최대한 부드러운 이미지를 전제로 한 합리적인 진보주의자로서 총과업을 지휘하는 노동자계급 대표자의 성격은 상실하였다”고 비판했다(정치연대, 1998: 2). 결론적으로 이들은 국민승리 21과 민주노총과는 다른 정치세력화를 제안하는데,

제도권 정치로의 진출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향후 제도 정치권의 선거 일정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노동자 민중이 사회의 주체로 나서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과제를 위치짓는다면, 98년 상반기 과제는 당면한 대중투쟁을 통한 정치세력화이다...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의 확보와, 독점자본에 대한 민주적 사회적 통제를 통해 노동자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정치연대, 1998: 2).

나아가 정치연대는 국민승리 21의 결정, 즉 “대선의 성과를 계승하여 국민승리 21을 정치조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 결정이 “진보진영의 책임있는 대중적 평가에 기초하여 조직의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참여조직인 “민주노총, 전국연합, 정치연대와 충분한 사전논의와 밑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일이 없이 형식적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정치조직 전환을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⁵⁷⁾ 보다 근본적으로 이들은 국민승리 21의 결정이 “지자체 선거에 집착하면서, 2000년 총선을 바라보면서 선거 일정에

257) 민주노총은 '97대선 활동 평가를 위한 기초토론 자료'가 1998년 1월 17일 임시중앙위원회에 제출되었을 뿐 대선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전국연합은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제7기 정기대의원대회를 1998년 3월 1일에 개최한다는 일정을 올려 놓은 상태에 있었다(김세균, 2001: 10).

맞춰 정당을 결성”하려는 것이라면 “부르주아선거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및 정치조직 건설을 내다보는 시각”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정치연대(준), 1998. 2. 21).

결국 정치연대는 국민승리 21에 불참했다. 이로써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조직으로 전환한 이후 국민승리 21은 조직상으로는 위축되었고, 애초에 조직될 때와 유사하게 권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계 인사들과 진보정치연합계 인사들 및 전국연합에서 탈퇴한 구전국연합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는 조직이 되었다. 하지만 국민승리 21은 실업운동을 조직하고 선거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사업 등을 행하는 동시에 진보정당 건설에 요구되는 제반 준비사업에 힘을 쏟아 왔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는 1998년 5월 20일의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국민승리 21을 확대·개편하여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적극 지원 연대한다”라는 결정을 민주노총으로부터 받아낸 것이었다. 이 결정에 힘입어 국민승리 21은 이후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국민승리 21’은 원래의 방침대로 1998년 6·4 지방선거에 참여하였다. 여기에서 민주노총은 무소속 후보(실제로는 민주노총/국민승리 21 후보)로 자신들의 후보를 대거 출마시켰다.

선거 결과는 민주노총·국민승리 21 공동후보로 모두 49명이 출마하여 23명이 당선됨으로써 46.9%의 당선율을 보였다. 당선자에는 울산의 북구청장과 동구청장, 그리고 경남 남해군수 등 기초단체장 3명, 울산 시의원 등 광역의원 2명, 대전 유성구의원 등 기초의원 17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울산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을 2명이나 당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울산 민주노총이 지지한 송철호 광역단체장 후보가 현대그룹 등 기업측이 지지한 한나라당의 심완구 후보와 막판까지 박빙의 승부를 겨루는 쾌거를 기록하였다(정영태, 1999b 참조).

이러한 지방선거에서의 선전을 통하여 민주노총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민승리 21’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당 건설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김석준, 2003).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승리 21’은 1998년 9월 17일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진보정당 창당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진보세력과 함께 늦어도 1999년 5월까지 진보정당을 창당하며” “진보정당 건설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1998년 말까지 창당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진보정당을 공동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결의했다. 이 결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승리 21은 각계각층의 여러 인사들을 초청해 ‘진보정당 창당 제안을 위한 (제1차) 원탁회의’를 개최하고(1999. 1. 25) 원탁회의의 결의라는 형식을 빌려 향후 1개월 내에 제2차 원탁회의를 소집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한편, 2월 8일에 개최된 전국빈민연합(준) 대표자회의는 진보정당창당추진기구 참여를 결의했고, 3월 9~10일에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기구 구성과 제2차 원탁회의 참여를 결의하고 아울러 제2차 원탁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제 민주사회단체를 결집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이어 3월 14일에 개최된 ‘진보정당 창당 제안 2차 원탁회의’에서는 진보정당 창당추진기구의 명칭을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로 하고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는 4월 중순 이전에 결성한다고 결의했다. 그리고 이 결의에 의거해 4월 18일에는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결성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에서는 진보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공동대표로 권영길 국민승리 21 대표, 양연수 전빈련(준) 의장,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3인을 추대했다. 그리고 6월 13일에 열린 제2차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대회는 김진균 사회진보연대 공동대표를 공동대표로 추가로 추대하고 천영세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가재웅 외 62명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7월 말까지 1만 명의 발기인을 모아서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창당발기인대회(8. 29)에서 ‘민족자주·민주주의·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민중이 주인 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위해 노동자가 앞장서는 민중의 진보정당’ 창당을 목적으로 하는²⁵⁸⁾ (가칭)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민주노동당(준))를 정식으로 발족시키고 여기에서 권영길을 상임대표로,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및 양

258) (가칭)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제2조 참조(홈페이지 <http://kdip.org/>에서).

연수 전빈련(준) 의장을 공동대표로, 그리고 천영세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민주노총 위원장에 단병호가 새로 선출된 후 이갑용을 대신해 단병호가 민주노동당(준)의 공동대표가 되었다. 이후 7차례의 중앙위원회와 24차례의 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창당을 위한 준비를 진행한 끝에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이 창당되었다(김석준, 2003; 김세균, 2001: 10; 전진호 2002 참조).

2) 민주노동당

민노당에는 다양한 정파들이 결집되었는데, “민노당의 창당 과정에는 전국연합 인사들과 전국연합 산하 대중조직 출신의 인사들, 민주노총 인사들, 전국빈민연합, 진보적 지식인, 그리고 기타 진보적인 활동가들”이 참여했다(안철진, 2002: 8). 여기에서 민주노동당 창당에 민주노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1998년 1월 7일 국민승리 21을 정치조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안을 제출하였고 그 정치조직을 기반으로 한 정당건설 투쟁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의지는 1998년 2월 21일에 개최된 국민승리 21의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관철되었다. 민주노총 9차 중앙위원회(1998. 5. 14)에서 국민승리 21을 확대·재편하여 노동자 중심의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임시대의원대회(11차, 5. 20)에서 이 정치방침이 통과되었다(안철진, 2002: 18~19).

민주노동당이라는 당명은 “1999년의 창당준비위원회에서 1,700명의 참석자 전원이 참가하는 투표에서 결정되었다. 당의 중심이 노동자이며 노동자대중의 참여와 주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자당으로 할 경우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결과였다”(노회찬, 2000).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을 위하여 사회주의적 가치(즉 이상과 원칙)를 지향하는 이념정당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대중정당으로 위상지었다.

민주노동당의 창당 정신에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이어져 온 한국 민중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평화통일, 평등사회를 향한 투쟁의 역사가 깊이 새겨져 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농민·빈민·중소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의 정당이다. 우리 당의 주인은 바로 땀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억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다(창당선언문).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진보적인 강령과 정책을 가진 이념정당이고,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민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정당이며,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방면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이다(당헌).

민주노동당은 인간의 물질적 부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며,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생태계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민주노동당 강령).

이상의 민노당의 창당선언문과 강령은 사실 상당한 모호성을 자체 내에 내포하고 있다. 일단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민주의, 자유주의 등 기존에 존재하는 이념들을 각각의 결함을 들어 모두 거부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적' 가치 '만'을 지향한다고 선언하는데, 사회주의의 '적'인 것은 무엇이고 그 중에서도 가치 '만'을 지향한다는 것은 체제, 이념, 실천방식 등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것은 사실 다양한 정파가 모여 존재하는 민노당('정파연합당')의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²⁵⁹⁾.

259)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상임정책위원인 김윤철은 민노당 내 이념·실천적 지형을 4가지로 범주화한다. 이 범주화에 의하면 사회민주주의(한국사회민주당, 민노당 일부), 민족해방계열(전국연합), 민주적 사회주의(민노당 일부), 다양한 급진좌파(노동자의 힘, 사회당 등)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각각 상이한 궁극적 목표와 실천노선 등을 상정하고 있다(김윤철, 2004: 77 참조).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과도강령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과도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노당 내에는 다양한 이견 그룹들이 있고 그런 맹아들을 품고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의 발전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좌담, 2004. 7. 이재영).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창당 과정과 전개 과정 그 자체가 이념과 논쟁의 과정 또는 이것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내부 논쟁은 ‘대안사회 논쟁’과 ‘사회주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²⁶⁰⁾ 이 논쟁들은 집권전략의 이념적 기초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논쟁에 등장하는 다양한 논자들과 다양한 담론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크게 당내 우파들의 정당론에 대해 ‘계급연합당’, 사민주의적 개량주의 정당, 선거주의적-의회주의적 정치노선 등으로 비판하는 계급정당론자들, 즉 사회주의자들과 이에 대해 반비판하는 사민주의적 경향의 정파들 간의 논쟁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영호(2000)는 민노당의 강령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강령에서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양하는 한편 사회주의적 원칙과 정신을 계승발전시킨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회주의적 원칙과 정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그에 의하면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를 개혁하고 개량해서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인가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중앙파도 새롭게 설립하려고 하는데, 민노당이 2017년 집권

260) 대안사회 논쟁은 민노당 이론정책지 『이론과 실천』, 8, 9, 10월호(2002년)에 실려 있다. 참여논자들은 유팔무, 송태경, 이용대, 장상환, 성두현, 이정구, 정종권 등이며 이 논쟁은 ‘당내 논객’들에 의해 주도되고 내용 또한 추상적이어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한편 사회주의 논쟁(이에 대해서는 민노당 홈페이지 <http://www.kdnp.org>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라 있는 2003년 임시당대회 자료집 참조)은 2003년 당시 노무현 정권기 정치활동방안의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했던 ‘당발전특위보고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이 논쟁은 전당적 차원에서 전개되었고 정치활동노선 도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김윤철, 2004: 68 참조).

전략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계획은) 뒤집기(변혁-연구자 주)보다는 집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념적 기반은 거기(사민주의-연구자 주)라고 본다... 민노당은 사민주의 정당이라고 본다(인터뷰 C, 2004. 2. 4).

저는 수권정당에 의한 사회변혁은 근본적으로 현 체제를 승인하고 그 안에서 제도적 규칙을 준수하는 ‘부르주아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노당의 원내진출을 사실은 부르주아 정치세력도 원했던 측면이 있습니다(좌담, 2004. 7. 박영균).

이러한 좌파들의 비판에 대해 민노당 내의 핵심 인사들 중에는 솔직하게 자신들의 이념적 좌표가 사민주의 범주에 있음을 시인한다. 주대환(2002)은 “민주노동당이 행동 실천적인 면에서는 이미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강령에서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양하겠다는 문구를 넣은 것은 하나의 습관”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면 일종의 개량주의라고 보고 매도하는 한국 운동권과 진보진영의 관습 때문에 그러한 문구를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석했다. 즉 그에 의하면 창당선언문에 “민주, 평등, 해방”, “민주주의, 평화통일, 민족해방” 등의 보편적인 가치들을 담고 있고 사회주의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기업인”, “여성, 청년, 학생, 진보적 지식인”의 정당(창당선언문)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국민’적 지지를 목표로 하는 계급연합전략을 추구하는 합법적 대중정당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다음의 대답은 이를 더욱 확증한다:

사회자: 민주노동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유럽식 사민주의’의 완성인가?

노회찬: 정확히 말하면 아니다. 당 강령에는 ‘유럽식 사민주의의 한계를 극복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식 사민주의의 달성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등의 사회복지 제도는 우리의 눈으로는 거의 혁명적인 것이다.

사회자: 사회주의 사상은 포기한 것인가?

노회찬: 아니다. 사회주의는 (당의) 목표다. 포기할 수 없다. 다만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 사회주의는 넓은 개념이다. 소련식의 국가 사회주의나 북한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유럽의 경우, 사회주의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들의 경우 내용적으로 보면 민주노동당의 강령보다도 못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주의의 범주를 그들은 넓게 보고 있는 것이다.

사회자: 지구상에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모델은 실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노회찬: 없다. 굳이 말한다면 브라질 PT당이나 스웨덴 사민당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자: 노 본부장 본인은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한다고 말해 왔는데?

노회찬: 맞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일요신문, 2004. 4. 25).

특히 현재 국민과가 적극적으로 민노당에 참여하고 있고 국민과 집행부가 민주노총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과 또한 민노당의 실질적

<표 5-2> 민주노동당의 선거 참여와 결과

선거 종류와 일시	득표	제도권 진출현황	비고
2000년 총선 (4. 13)	전국평균 득표율 1.2% 출마지역 평균득표율 13.1%	21개 지역 출마, 당선자 없음	민주노총 후보를 민노당 후보로 내세움 정당 해산과 재창당
2002년 지방선거 (6. 13)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지지율 8.1%	기초단체장 2 지역구 광역의원 2 비례대표 광역의원 9 기초의원 32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제3당 지위 확보 국고보조금 확보
2002년 대선 (12)	957,148표, 3.9%		
2004년 총선(4)	2,774,061표, 13%	지역구 2명 비례대표 8명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제3당 지위 확보 국고보조금 확보

인 후견자라는 점에서, 그리고 현장파는 민노당에서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이 최대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향후 더욱더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된다.

선거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제도권으로 보다 긴박되는 현상은 민노당이 시민주의적 경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2>에서 보듯이 민노당이 출범한 이후 4번의 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더 이상 정치권에서의 민노당의 시민권 획득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지만, 스스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우선 2000년 4·13 총선은 민노당의 최초의 선거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선거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민노당은 울산북구와 창원읍에서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출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물심양면으로 선거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17차, 2002. 1. 18)에서 “노동자 밀집지구 등 핵심 전략지구에 간부·조합원을 해당 지역본부와 노조, 연맹의 승인하에 민주노동당의 후보로 출마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노당 후보로 출마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조직의 통제를 받는 동시에 조직의 인적·재정적 지원(정치자금 모금)을 집중시켜 주어야 한다”는 등의 선거 방침을 결정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후보 11명(서울, 울산 각 2명, 인천, 경기, 대전, 충남, 부산, 창원)을 민노당 후보로 내세웠고, 나머지 10명의 민노당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후보로써 지원하였다.

선거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었지만 상당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요소도 있었다. 우선 민노당의 후보들은 전국평균 1.2%의 득표율에 그쳤지만 출마 지역에서 평균 13.1%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민노당은 울산·창원 등 노동자가 밀집해 있고 노동운동이 활발한 공업 지역에서 4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특히 선거 이후 오히려 당원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노총과 민노당은 4·13 총선에서 ‘의미있는 패배’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²⁶¹⁾

261) 이재영 민노당 정책팀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개표 이후 민

그런데 2000년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이 2%에 미달함으로써 민노당은 정당 등록을 취소당하였다. 그런데 정당 등록 취소가 곧 정당의 해산이나 해체로 귀결되었던 이전의 '민중의 당'이나 '민중당'과는 달리 민노당은 곧바로 당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여 다시 정당 등록을 마치고 활동을 재개하였다. 이처럼 민노당이 선거 패배 이후에도 당 체제를 온전히 유지·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²⁶²⁾.

2002년도엔 양대 선거, 즉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민노당은 2002년 양대 선거, 즉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전을 통해 당의 과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2004년까지 150개 이상의 지구당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6·13 지자체 선거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어 민노당의 경우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 2000년 총선 이후 새롭게 정당 등록을 한 민노당은 200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2002년 양대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6월 지방선거에서 민노당은 광역단체장 7명, 기초단체장 12명, 광역의원 91명(비례대표 25명 포함), 기초의원 108명을 출마시켰다. 한편, 민주

주노동당에는 격려와 위로의 전화가 쇄도하고 기존 당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입 당원의 입당이 증가하고 있으며, 패배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을 알게 된 일반 국민의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원내 교두보 확보 실패라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민들은 오히려 선거 결과에서 '현실에서의 가능성'과 '미래의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패인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책을 논박하지 못하고 중앙당의 전략적인 실천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영은 "정당명부제가 있었다면..."이라면서 아쉬워하고 있다(이재영, 2000).

262)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첫째로 노동자의 대중적 결의를 바탕으로 출발하여 대중의 동력과 의지를 중심에 놓고 선거에 접근해 갔으며, 둘째로 노동자 밀집지역에서는 그나마 일정한 수준에서 투쟁과 선거가 결합되는 모습을 만들어 내었으며, 셋째로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계급적 단결을 이루려고 시도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확대해 나갔으며, 넷째로 당선자를 내지는 못했지만 노동자 민중의 계급투표 양상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민주노총은 향후 정치사업의 기초를 '상반기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총선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조직사업과 정치의식화 사업을 강화한다. 아울러 민주노총 정치투쟁의 영역을 확대하고 투쟁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당의 기반을 강화한다'라고 정하고 사업 방향의 하나로 '민주노동당의 기반을 강화하고 노동자 중심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민주노총, 2000b).

노총은 정치위원회(2001. 9. 12)와 200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양대 선거에서의 조직적인 선거 지원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민주노총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광역단체장 3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49명(비례대표 11명 포함), 기초의원 69명을 민노당의 후보로 출마시켰다. 이처럼 민주노총의 후보가 민노당 전체 후보의 절반을 넘었으며 당선자도 과반수 이상이 민주노총 후보였다.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 압승, 민주당 참패, 민노당 약진, 자민련 몰락으로 나타났다. 민노당은 7군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어 전국적으로 4.7%의 지지율을 확보했다. 또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지지율에서 8.1%를 얻어 6.5%의 자민련을 제치고 한나라당, 민주당에 이어 제3당으로 떠올랐다. 그 결과 민노당은 전국적으로 9명의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배출했고, 사상 처음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게 됐다. 이외에도 울산에서 2명의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광역의원 2명,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32명을 당선시켰다. 하지만 민노당은 기대했던 울산시장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절반의 승리에 머무르고 말았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에서 선거전략이나 후보자 선출 과정 및 대중투쟁과의 결합 등의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정에서 민노당이 극복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을 제기하였다.

제16대 대선을 맞아 민노당은 임시당대회(2002. 9. 8)에서 대선 목표로 100만 표 이상의 득표를 내세웠다. 그리고 권영길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대선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민주노총은 중앙위원회(7차 2002. 10. 11)에서 대선 정치방침을 확정하였다. 민주노총은 대선 전략으로 민노당 후보 지지 계급투표 조직, 조합원 1인 1,000원 모금운동, 하반기 대중투쟁과 선거운동 결합 등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11월에 진행된 3대 악법저지 총파업투쟁과 민중연대투쟁으로 민주노총의 본격적인 대선 활동은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이후에야 진행되었다.

결과는 민노당 권영길 후보가 957,148표(3.9%)를 득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된 지지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서 아쉬운 결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가장 낮은 70.8%라는 투표율과 선거 막판에 정몽준

의 노무현 지지 철회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민노당 지지자 상당수가 노무현 지지로 선회한 것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100만 표에 육박하는 표를 획득한 것은 분명 적지 않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6대 대선에서 획득한 100만 표가 대부분 블루칼라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계급과 저소득층, 저학력층의 민중에게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창원(9.2%), 거제(9.3%), 경주(6.3%), 구미(5.7%), 화성(6.1%), 평택(8.1%) 등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고 노동조합 활동이 왕성한 공단 지역에서는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에서 조직노동자들의 계급투표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민노당은 6·13 지방선거에 이어 16대 대선을 거치면서 명실상부한 대중정치세력으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특히 수천만 명이 시청한 방송 합동토론회를 통해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전망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알려냄으로써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 민노당의 현실적 가능성을 확인시켰으며, 2004년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대선을 통해서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적 단결을 위한 노력은 기대만큼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었다. 우선 민노당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범진보진영 주요단체들은 2002년 7월 16일 “2002년 대선 승리와 진보진영의 단일후보 선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2002년 대선 승리와 범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범국민추진기구”(이하 범추)를 8월 말까지 구성하기로 하고, 범추는 “범진보진영 예비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를 선출하며 예비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는 진보정당의 이름으로 출마한다”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민노당은 2002년 7월 26일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범추의 예비경선에 참여할 민노당 후보를 당원 직선으로 늦어도 9월 초까지 선출한다. 예비경선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공동기획단이 안을 제출하되 10월 말까지 범진보진영의 단일후보 선출을 완료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2002년 대선 방침을 확정하고, 2002년 9월 8일 권영길 대표를 범추의 예비경선에 나갈 민노당의 후보로 선출하였다(이상 김석준, 2003; 전진호, 2003; 노회찬, 2000 참조).

2004년 17대 4·15 총선에서 민노당은 지방선거에 이어 원내 제3당으

로 중앙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지역구 총 출마자수는 123명이었으며 당선자는 2명이었다. 지역구 2명은 울산과 창원이었다. 그런데 정당투표에서 총득표수는 2,774,061표로 13%를 획득하였으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8명의 비례대표의원이 배정됨으로써 총 10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되었다. 민노당의 제도권 진입은 한국의 정치사에서 놀라운 사실인 것만은 틀림없다: “2004년 4·15 총선은 한국 의회정치사에서 혁명이었다. 그동안 국회는 극우반공주의자 또는 수구냉전세력이 주류였는데, 4·15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탈냉전적 의회민주주의자 또는 중도적 정치세력이 의회 다수파가 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한국도 이제는 혁명적 사태가 벌어지는 것 없이 혁명적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4·15 총선은 보여주었다”(서중석, 2004: 20, 21).

이처럼 민노당의 원내진입은 한국의 진보정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써 나가야 할 역사적 임무가 부여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민노당이 전국에서 고른 득표를 하였다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롭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 승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선 그 승리 자체가 민노당의 내적인 요인보다도 외적인 원인에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구 당선자가 2명에 불과한데 총 10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당명부제의 위력, 즉 비례대표투표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정당의 실수 때문이었다: “이번의 의회혁명은 투쟁을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었다. 극우수구세력이 유권자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탄핵이라는 의회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듯 우수수 떨어져 버린 것이다”(서중석, 2004: 21).

또한 전체 노동자들 가운데 민노당을 지지한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2004년도 1,460만 피고용자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만 73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27만 표는 매우 저조한 득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불리는 울산지역에서 민노당이 비례대표투표에서 얻은 표는 10만 856표로 총 투표자의 21.9%에 불과했다. 이는 울산지역 노동조합원 수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인데 조합원 가족까지 고려하면 그

리 높은 득표라고 할 수 없다(신광영, 2004: 48~49)²⁶³):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은 일반 국민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자체는 진보적이지만 조합원들의 성향은 그렇지 못합니다. … 민주노총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에 표를 던진 조합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좌담, 2000, 이재영).

한편 민노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내부로부터 제기되는데, 그것은 우선, 민노당의 구성이 블루칼라 노동자에서 점차 당원비율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의 민주노동당의 자체 조사에서 당원비율이 화이트칼라, 사무·전문직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지지도에서도 주부, 학생, 전문직종에서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적 문화변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적·개인주의적인 시민화의 경향이 당 체질에 직접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좌담, 2000. 7. 박영균)²⁶⁴. 또한 “민노당의 원내진출은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정치권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냈다”(신광영, 2004: 53). 따라서 민노당은 자신의 집권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시민사회, 특히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노당은 집권전략을 위해 이제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상황에 처해졌다. 이에 따른 정체성의 혼란도 수반될 전망이다: “민노당은 총선 이후 권영길 대표를 포함하여 각종 경제인들, 자본가들과의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분배를 통한 성장이나 국가경쟁력 강화 같은 논리들을 계속 유포하고 있습니다”(좌담, 2004. 7, 최광은).

이상에서 보듯이 민주노동당은 성공과 동시에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이념적 측면에서 볼 때 사민주의적 경향이 강화됨으로써 이념적 정체성

263)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이 밀받침한다는 이야기에 맹점이 있다. 노조간부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광범위한 노조원들이 따라서 진보정당에 투표하리라고 기대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 당시 권영길 국민승리 21 후보는 민주노총의 조직원 지원을 받았지만 실제 득표는 50여 만 조합원의 수에도 못 미치는 30만 6천 표에 그쳤다(『한겨레 21』, 1999. 9. 19).

264) 창당발기인 2천 명으로 시작된 당은 민주노총이 2000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이룩한다”고 결정하고 2003년 전농이 동참 결정을 내리며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또 각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접한 일반 시민들의 입당도 늘어 5만 당원 시대에 접어들었다(박수경, 2004).

의 확립은 물론 내부 균열의 가능성이 보다 가시화되고 있다. 이처럼 민노당은 의회진입에 성공하면 할 수록 애매한 자신의 당 강령과 모호성이 문제시되는 상황에 빠져 있다.

3) 사회당과 노동자의 힘

사회당과 노동자의 힘은 국민승리 21이나 민주노동당과 차별적인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국민승리 21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연대로부터 분화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6년 말~97년 초 노동자 총파업투쟁의 성과를 계승하여,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의 진전을 위한 한 주체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연대(준)’ (이하 정치연대(준))가 출범했다(1997. 8. 16). 정치연대는 좌파 교수들과 한청련(한국노동청년연대), 전국노련(전국노동단체연합), 노정연(노동정치연대), 노진추(노동자중심의진보정당추진위원회)의 4대 단체와 일부 좌파 학생 그룹들이 참가하여 만들어졌다. 정치연대는 좌파의 대선 방침을 결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였으며, 국승 21측과 협상을 통해 국민승리 21의 참여를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청년연대는 좌파의 합법정당 창설과 독자적 대선 참여를 주장하면서 이에 합류하지 않고 청년진보당(1998. 11)을 만들었다. 다음의 언급은 이들이 국민승리 21에 합류하지 않은 이유를 응집적으로 보여준다:

“생각해 보라. 당시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이 후보를 내서 겨루었다. 그 판에서 어찌 좌파가 ‘국민’승리 21의 조직원으로 ‘국민’ 후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건 못한다. 보라. 결국 ‘일어나라 코리아’라는 전형적인 국민주의 구호까지 나왔다. 2002년 ‘필승 코리아’의 붉은 바다를 위한 전조이거나 했던 것처럼 그 운동은 이미 그때 자기의 정체를 남김없이 폭로했다”(사회당 대통령선거기획위원회, 2002).

한편 이후 정치연대는 국민승리 안에서 의미있는 블록이 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정치연대의 주류세력은 국승 21의 합의 훼손을 이유로 국민승리 21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일어나라 코리아 사건”²⁶⁵⁾이 문제가 될

때쯤 전국노련이 국승 21을 탈퇴했으며 노정연의 일부도 국승 21을 탈퇴했다. 이 세력은 다른 세력과 함께 노동자의 힘을 만들었다. 하지만 일부 세력은 여전히 국승 21에 남기로 결정했다.²⁶⁶⁾ 이처럼 정치연대는 국민후보운동 국민승리 21에 대한 불참과, 참가후 탈퇴과, 잔류과 등의 세 부류로 나누어졌다. 즉 “합법정당으로서 자기 위상을 놓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회당, 노동자계급정당을 표방하는 노동자의 힘, 개혁적 국민정당 노선을 표방하는 (정파연합) 민주노동당”(오세철, 2002: 9) 등,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던 사회주의운동세력은 3자 구도로 정립되었다(사회당 대통령선거기획위원회, 2002; 노동자의 힘 편집실, 2004 참조).

우선 『노동자의 힘』은 지난 1999년 8월 8일 노동현장에서 활동해 온 노조간부, 현장 활동가와 정치연대의 진보적 사회단체, 민중운동 활동가, 진보적 지식인들이 모여 ‘노동자의 힘(준비모임)’을 출범시켰으며, 2001년 10월 13~14일 제7차 총회에서 (준비모임)을 떼고 지금의 ‘노동자의 힘’으로 명칭을 새롭게 정하였다(<http://www.pwc.or.kr/main/info.php>).

노동자의 힘은 기본적으로 정치조직을 지향한다. 즉 이들이 지향하는 정치조직은 “노동운동의 선진부대가 정치적으로 결집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로서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근본적 정치·사회변혁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 노동자계급과 굳건히 연대하는 노동자국제주의를 몸소 실천하고, 노동자계급 중심의 세계변혁을 이루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²⁶⁷⁾(<http://www.pwc.or.kr/main/info.php>).

265) ‘일어나라 코리아’는 권영길 국승 21 대통령 후보의 핵심 선거 모토였다. 이것은 좀더 대중적인 이미지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과 계급적 성격을 분명히 하는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다가, 결국 전자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 이슈로 채택된 것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선거 포스터에는 펄럭이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권영길 후보가 서 있었다.

266) 노진추와 인천 노정연은 국승 21에 남았다. 노진추는 평등연대(평등세상을 위한 노동자실천연대)의 골간을 구성했으며, 축소된 노정연의 인천 팀은 인천 민주노동당을 좌익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했다(사회당 대통령선거기획위원회, 2002).

267)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동자의 힘』은, ‘새로운 정치조직’으로서의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당면 목표·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조직’이라 함은 한국사회를 포함한 세계노동운동 및 노동자 정치운동의 경험과 전통에 기초하면서도 현대의 변화된 정세와 오늘의 국내외 노동자계급이 처한 주체 역량의 상태와 조건에 걸맞는 정치활동을 새롭게 구현하려는 의미와 의지를 표현하는

pwc.or.kr/main/info.php).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노동자의 힘은 2001년 6차 총회에서, 자신을 “자본주의사회의 착취와 억압, 그리고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계급해방과 인간해방을 목표로 하는 노동자계급정당”,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노동자민중의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비제도적 투쟁정당” 건설의 한 주체이자,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노동자·민중의 해방투쟁의 역사를 계승함과 동시에 그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기 위한, 계급적 좌파운동의 혁신과 연대를 실천하는 주체”로 결의한 바 있다(남구현 외, 2004).

이처럼 이들은 “한국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역사적인 단절과 국제적인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역사적인 경험을 계승 발전시키고, 동시에 국제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동자의 힘의 정치적 실천은 노동자계급의 대중적 정치역량의 성장을 의회주의적 정치, 사민주의적 정치, 그리고 민족주의적 정치의 흐름과는 독자적인, 현장 중심의 계급정치로 조직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남구현 외, 2004).

이들은 그동안 조직의 가장 기초 단위인 ‘기본 단위’에 속해 조직·정치 활동을 해왔으며, 민주노조운동을 계급적·민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활동, 노동자 대중투쟁을 지원·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조직활동의 중심으로 삼고 있으며, 전국민중연대(준)에 대응 및 부문활동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재조직화 활동과 강령건설투쟁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동시

것이며, 『노동자계급정당』은 바로 그 ‘새로운 정치조직’의 활동을 담지하기 위한 조직 형태(형식)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노동자계급정당』은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계급적 변혁운동진영 내부에서조차 급속히 번져 나간 탈계급화, 탈이데올로기화 현상, 즉 ‘국민(대중)정당’ 또는 ‘계급연합정당’ 노선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배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 노선과는 상호대립적 개념인데 비해, ‘(비합)전위정당’ 또는 ‘변혁정당’ 노선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는 『노동자계급정당』이 구현해야 할 구체적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들 노선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http://www.pwc.or.kr/main/info.php>).

에 월 2회 『노동자의 힘』이라는 제호의 기관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대중집회나 대중투쟁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유인물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 대중투쟁에도 참여해 왔는데, 예를 들어 ‘한라중공업 투쟁’, ‘대우자동차 투쟁’, ‘비정규직 투쟁’, ‘공공3사 동맹파업 투쟁’ 등이 그것이다(<http://www.pwc.or.kr/main/info.ph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힘에 의한) 좌파진영의 대통합에 의한 계급정당 건설의 모색은 활동가 정치조직 건설의 불발, 대선공투분의 좌절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최근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로 합법정당 외부의 정치적 공간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노동자의 힘의 정치적 지도력과 조직력은 아직도 취약하며, 이는 조직 내부적으로 개인주의, 연방주의, 자치주의 등의 원심적 경향이 존재하고, 그 결과 노동자계급운동과 사회운동의 좌파세력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특히, 계급적 좌파의 정치적 재결집을 전조직으로 시도했던 활동가 정치조직 건설 프로젝트는 각 좌파대오의 미흡한 준비 정도와 정치적 지향의 차이 외에도, 이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노동자의 힘의 부족한 정치사상적 역량 등의 요인으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원영수, 2004. 9)

는 것이 그것이다. 오세철은 이러한 자체 평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자의 힘이 “노동조합의 ‘배후정치’를 활동의 축”으로만 삼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노동자의 힘은 “출범 당시 좌파의 통일과 이후 노동자계급정당을 표방하였으나 과거 노동단체 수준을 벗어난 독자적인 전국적 정치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그늘에서, 배후에서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의 힘은 현장정치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현장정치활동에 관한 입론 수준의 글과 어떻게 현장정치활동을 강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안은 없다. 단지 노동자의 힘 기관지 표지 슬로건에만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되는 ‘현장정치 강화’다. 최근 노동자의 힘은 자신의 목표인 계급정당을 ‘속으로 삼키면서’ 활동가 정치조직 건설을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 활동가 정치조직에 참가한 좌파 노동/사회단체는 당

조직을 거부하고 있어, 그 활동가 (정치)조직은 말 그대로 서로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다. 오직 정치적 ‘책략’만이 있을 뿐이다(오세철, 2002).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자의 힘은 민주노동당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노동자 힘이라는 정치조직과 사회주의세력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의 확립에는 성공한 듯이 보인다. 하지만 향후 어떻게 실질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열세에 있는 현실적인 권력관계 앞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듯이 보인다.

한편, 사회당의 전신은 청년진보당이다. 청년진보당은 1998년 3월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14개 청년단체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6월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8월에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1998년 11월 29일에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청년진보당을 주도했던 세력은 1980년대 중후반과 1990년대 초중반에 변혁적 정치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이다. 이들은 1992년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중후보 운동에 앞장섰다. 한편, 이들은 1992년 대선 이후 노동청년운동을 통해 그 기반을 넓혀 왔는데, 1993년에 결성된 ‘우리청년회’, 1995년에 결성된 ‘함께하는 노동청년회’, 1996년에 결성된 ‘한국노동청년연대’가 주요 세력들이다. 이들은 1997년 대선에서 “몰계급적인 국민후보 운동에 반대하여 민중후보 운동을 주창”하면서 민중후보운동 청년추진위를 결성했고 이것이 청년진보당으로 창당되었다.

이들은 1999년의 구로(을) 보궐선거에서는 4.1%를 득표하며 선전했고, 2000년 4·13 총선에서는 서울 전 지역구와 인천 한 곳, 즉 46개 선거구에 후보를 내어 125,082표를 얻어 득표율 0.65%, 후보 출마 선거구 평균 득표율 3%를 보였다²⁶⁸). 하지만, 총선에서 전국 평균 득표 2%를 넘지 못해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다시 청년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곧바로 재창당한 청년진보당은 그간

268) 청년진보당은 애초부터 원내 진출이 아니라 좌파의 기치를 내건 정치세력이 존재함을 알리기 위해 총선에 참여했다. 전국의 모든 당내 역량을 서울로 모아 선거에 참여했고, 선거운동 방식도 선거구별로 하지 않고 집중적인 집회 방식을 택해 유권자와 접촉하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았다(장상환, 2000: 153).

의 성장을 반영하고, 당의 이념을 더욱 분명히 하고자 2001년 8월 26일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당명을 사회당으로 바꾸었다. 2003년 중반 사회당은 새롭게 체제를 정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이상 사회당 홈페이지 <http://www.sp.or.kr> 참조). 사회당은 강령에서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사회당은 이전까지 하나의 도그마로 고정되어 있었던 현실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설 것이다. 또한 사회당은 자본주의를 불변의 것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의 개량을 추구하는 모든 운동을 경계할 것이다. 사회당은 초국적 자본과 새로운 세계 질서에 맞선 급진적 반자본주의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영토적 차원과 특정한 권력 형태의 차원 모두에서 국가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회주의를 구현할 것이다. 사회당의 사회주의는 또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과 국경을 넘어선 평등한 연대를 추구하고,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서 추구한다(사회당 강령 전문, 2003. 5. 11).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회당이 ‘반자본주의, 반조선노동당’을 기치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반대와 조선노동당 반대라는, 추상 수준이 다른, 소위 ‘수위가 다른’ 기치가 왜 나란히 걸렸는가? 그것은 일종의 중의법이다. 우선 첫 번째 이유, 즉 표면적 이유는 그렇게 수위가 다른 양 상대방이 한국의 정통 이념 운동에 대한 태도에서는 똑같다는 것, 그 점에 대한 인식이다... 두 번째 이유는 2000년대 한국의 운동권을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 정치적 태도에 있다. 그 양대 기치는 통합 좌파를 향한 일종의 ‘서원(誓願)’이다(사회당 대통령선거기획위원회, 2002).

이처럼 사회당은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을 지향하는 반자본주의 노선과 남한 사회변혁운동의 동력이자 질곡으로 작용했던 북한의 존재를 거부하는 노선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특히 후자의 노선은 북한 사회의 비민주주의적 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김

영수, 2004).

사회당의 계급중심적 대중노선은 구체적인 정치활동으로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을 저해하고 노동자계급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전략의 하위동반자로 체제내화하려는 계급 화해주의를 거부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특히 대우캐리어 노동자들의 투쟁,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 등과 긴밀하게 결합”하려는 활동으로 나타났다(김영수, 2004).

하지만 사회당의 “문제는 선거정치에서 드러나는 이념과 비제도적 공간에서 드러나는 이념 간의 간극으로 말미암아, 사회당의 이념적 정체성이 계급연합적 민중에 기반하는 진보정당과 명확하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2000년 총선투쟁과 2001년 10·25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주의적 경향성은 민주노동당이 추구했던 의회주의적 득표 획득전략과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최근 사회당 명의로 6개 단체에 제안한 ‘통합 사회주의정당 건설’ 속에서 통합 사회주의 후보를 내자’라는 통합 제안 공문은 사회당이 얼마나 선거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철저하게 보여준다.··· 선거투쟁 공간에서도 ‘선거운동’에만 필요한 이벤트성 활동만 할 뿐 노동자 민중투쟁을 자신의 선거코드로만 활용한다는 현장노동자의 비판을 듣기 바란다.··· 사회당의 ‘합법주의’ 편향은 투쟁하는 노동자계급대중에게 철저하게 비판 받아야 한다(오세철, 2002).

이처럼 사회당은 “단지 집중적인 선거공약을 부각시켰다는 것, 선거투쟁을 전개하는 방식이 이벤트 형식으로 특별했다는 것, 선거투쟁 이후의 후속작업을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김영수, 2004). 사회당 역시 최근에 당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 힘과 같은 내부의 이념적 혼란과 불균형적인 세력관계에서 오는 현실 대안의 부재라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듯이 보인다.

2. 논쟁과 분화: 사회주의와 사민주주의

민주노총은 특정한 정치적·조직적 결정을 할 때마다 격렬한 내부 토론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다양한 정파의 존재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건설 과정과 전개 과정, 그리고 진보정당의 결성 과정은 논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논쟁은 실천론과 조직론을 둘러싸고 전개되었지만, 그 안에는 상이한 이념적 차이를 내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번의 논쟁은 이념논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표 5-3 참조).

결론적으로 논쟁은 첫째,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의 정치세력이 이념적으로 상당히 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그리고 분화의 논점과 논리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청할 만한 가치와 재미가 있다. 둘째, 논쟁의 마지막에 소개된 노동운동 위기론은 한국의 이념지평이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예고함으로써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지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논쟁은 5가지 범주에서 정리될 수 있는데, 총론적으로 볼 때 이 논쟁들은 노동조합과 정당, 즉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어떤 원칙하에 어떤 조직과 실천을 통해 건설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이 논쟁의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과 사민주의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차이를 확인하고 스스로가 보다 세련화될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그리고 노동운동 위기론에 이르러 이러한 논쟁은 새로운 지형으로 향하는 듯이 보인다. 그것은 이념적 지형이 보다 분화되고 복잡해질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첫 번째 논쟁은 민주노조운동 총단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전노협의 역할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둘러싼 두 번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민주노총 건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전노협에 둘 것인가 아니면 전노대에 둘 것인가로 외화되었는데, 이 논쟁의 이념적 본질은 계급적 성격에 강조점을 두고 민주노총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개혁투쟁 노선에 방점을 두고 민주노총을 만들 것인가에 있었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경향과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이 표면화된 최초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3> 민주노조진영의 내부 논쟁

범주	세부 범주	시기	대립구도	핵심 논점
민주노총건설 논쟁	전노협 1안 대 전노협 2안	민주노총 건설 논쟁(92/94~5)	전노협 1안 대 2안	전노협의 위상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	1. 민주노총 1기 평가	1기 집행부 전 후와 그 이후	국민과 대 현장파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노선에 대한 평가
	2. 노사정위 참여논쟁	1998년 노사정위 등장 이후	국민과 대 현장파	노사정위 참여 평가
	3.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	1996/2004	국민과 대 현장파	사회적 조합주의 전략의 실효성과 이념성
선거연합과 경쟁	1. 좌파블록 내부 논쟁	2004년 민주노총임원선거	좌파 내부(평등회의, 메이데이포럼, 노동자의 힘)	선거 연합 원칙
	2. 좌파블럭 대 국민과		유덕상 후보 진영 대 이수호 후보진영	총과업, 노사정위 참여, 정치세력화, 민주노조 혁신 등
정치세력화 논쟁	.	민주노총 전시기	우파 대 좌파	정치세력화의 원칙, 민노당에 대한 입장
노동운동 위기론	.	2004년	김승욱의 문제제기에 대한 논자들 또는 이견그룹들	위기의 기원과 대안

사회적 조합주의로 범주화된 논쟁은 제1기와 제4기 집행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나타났다. 우선 첫 번째 논쟁에서 좌파는 제1기 집행부를 사회적 조합주의 세력, 더 나아가 사민주의적인 개량주의라면서 이들의 노동운동 노선을 비판했다. 이러한 입장은 노사정위 참여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조합주의 이론 자체의 역사성과 계급성을 문제삼았으면서 둘째, 셋째 논쟁으로 발전한다. 이에 대해 제1기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노선은 제1기 집행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합주의와 노사정위 참여를 정책참가와 사회개혁적 노동운동이라는 입장에서 옹호했다. 이 논의를 거치면서 민주노총 내에 현장파와 국민과 간의 대립점과 정체성이 보다 선명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체성의 대립은 제4기 민주노총 집행부 선거가 범좌파연합 대

국민과 간의 경쟁으로 나타나면서 보다 정교해지고 선명해졌다. 우선 국민파에 대항하기 위해 좌파들은 선거연합을 모색하면서 내부 논쟁을 전개하는데, 여기에는 중앙파인 평등연대와 현장파로 분류되는 메이데이포럼 및 노동자의 힘이 참여한다. 이들 논쟁 과정에서 양자는 이념과 민노당에 대한 방침에서 입장 차이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파라는 공동의 '강적'에 대항하기 위해 최소강령적 수준에서 합의함으로써 범좌파 후보를 내세울 수 있었다. 선거 국면에서의 두 번째 논쟁은 범좌파와 국민파 간에 이루어졌다. 범좌파 후보인 유덕상 후보와 이수호 국민파 후보 진영은 몇 번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 입장 차이를 서로 확인했다. 대체적으로 논쟁은 총파업에 대한 관점, 노사정위 참여, 정치세력화 등에 집중되었는데, 이 논쟁을 통해 양자는 상호 입장 차이가 매우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좌파연합이 철저히 패배한 것으로 나타난 선거 결과는 좌파들이 민주노총 내에서 힘의 열세에 처해 있다는 것도 동시에 드러냈다.

한편, 정치세력화 논쟁은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로 인해 가시화된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원칙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 논쟁은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 묻어서 진행되었지만 정치세력화에 대한 매우 상이한 관점을 가진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우파의 경우 정치세력화를 정당을 통한 제도권 진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좌파는 노동자 영향력의 세력화, 더 나아가 사회주의 정치로의 세력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차별적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의회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자와는 달리 후자는 민주노동당이 부르주아정치의 또 하나의 세력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으며 점차 자신의 조직원을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철수시킴으로써 새로운 정치정당과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 논쟁인 노동운동 위기론은 위의 논쟁들을 총괄하는 동시에 새로운 논쟁의 지평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노동운동이념의 화두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논쟁의 출발은 김승욱의 문제제기에 있었는데, 그는 좌파적 경향의 노동운동론과 실천이 노동운동 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면

서 노동운동이 보다 지평을 넓혀서 생태적 문제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는데, 좌파는 계급성에 대한 확고한 원칙에서 김승옥의 주장을 개량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논지를 폈다. 이에 반해 다른 논자들은 이 논점을 화두로 사회민주주의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데, 이 논쟁은 1992년 위기론 논쟁(제4장 제2절 3. 참조)과 마찬가지로 보다 활성화·심화되지 못하고 너무 빨리 종결된 측면이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가. 민주노총 건설논쟁: 전노협 중심인가 배제인가?

1990년대에 민주노조운동의 시대적 과제이면서 동시에 당위적인 목표는 민주노조운동의 총단결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국적인 수준의 조직화에 있었다. 전노협 내부에서의 두 개의 조직 발전 논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논의는 1992년에, 두 번째 논쟁은 1994~95년에 나타났다. 두 논의는 민주노조 총단결을 위한 조직적 대안으로 민주노총 건설의 상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전노협의 위상을 각기 다르게 설정했다. 여기에서는 민주노총 건설에서 전노협 위상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이 논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조직 발전에 대한 토론은 ‘논쟁’이라기보다는 전노협 내부의 ‘논의’였다. 1992년 4월 29일 열린 전노협 제23차 중앙위원회에서는 조직 발전 소위원회(이하 조발소위)를 구성했다. 조발소위는 두 달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 안을 전노협 지도자수련회(7. 18~20)와 중앙위(7. 20)에서 토론 자료로 제출했고, 지역 등의 논의를 거쳐 제29차 중앙위(11. 18)는 “전노협의 확대 강화와 민주노조 총단결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같은 조직 발전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전노협의 위기에 대응할 필요성과 민주노총 총단결이라는 시대적 당위를 실현해야 한다는 인식에 있었다. 이 당시 전노협은 중소 영세사업장들이 휴폐업 상태로 들어가면서 조직률이 하락하고 있었다. 즉 1990년 전노협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 적지 않은 전노협 산하 노조들이 전노협을 탈퇴하였다. 탈퇴하

지 않은 대부분의 노조들도 조직적 불안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전노협은 1991년 사업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로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대공장 노조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 확대’를 설정하였다. 이 사업의 정책적 토대는 바로 조직 발전 전망과 관련된 사업과 직결되었으며, 전노협이 전개한 대기업특위사업 역시 조직 발전 전망사업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²⁶⁹⁾ 한편, 당시 전노협은 ILO공대위,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 등의 조직화 경험을 경유하면서 1992년에는 민주노조 총단결이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당시 모든 민주노조운동이 공감하고 있었고 사무전문직노동조합도 이에 참여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었다.

물론 업종 쪽은 전체 조합원이 그 절박함을 느낀 것은 아니었고, 지도부가 어찌 하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이었다. 업종회의 쪽에서 민주노조 총단결 논의 흐름으로 제조업과 함께 가는 길을 주도한 사람은 권○○, 허○○ 등이었다. 사무나 병원 쪽에서는 사무노총 등을 건설하자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나 업종쪽 지도부들이 그나마 이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면서 민주노조 총단결 흐름에 결합해 왔다. 물론, 단위노조 조합원을 이 대열로 끌어들이지는 못했다. 업종회의 간부들도 여기에 발이 묶여 활발한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정서의 차이... 당시 공동 사업은 노동자대회 등 집회였는데 그 집회 형식이나 기조와 관련해서 정서의 차이 때문에 사업집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사무전문직 내의 제3노총 흐름을 억제하면서 최대한 전노협과 발을 맞추려고 한 노력은 평가해 줘야 한다(인터뷰 M, 2004. 9).

이러한 배경하에 출발한 전노협 내의 조발소위는 9월 3일 제27차 전노협 중앙위원회 회의에 그간의 논의 과정을 담은 보고서(“사업계획”)를 제

269) 이 시기 조직 발전 논의의 핵심은 민주노조운동에서 대공장노조들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있었다. 1990년 7, 8월에 대부분의 대공장에서 실시된 노조 선거에서 민주파(민주노조)가 당선되었고, 이들은 ‘대기업연대회의’를 결성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으로서 전노협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타났다. 즉 대공장노조의 민주화는 전노협의 입장에서 볼 때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던져주었는데, 하나는 민주노조운동의 세력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전노협중심론’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대공장동력론’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조직 발전 문제가 비로소 ‘논쟁’으로 떠올랐다.

출하고 해체했다. 각 지역에서는 조발소위의 제출안(“사업계획”)을 토론의 자료로 삼아 지노협과 단위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의 조건과 실정에 맞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지역 차원의 논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1992년 10월 28일 열린 전노협 중앙위원 간담회에서 조직발전소위안을 전노협의 조직발전계획으로 결정하였으며, 11월 18일 열린 전노협 제29차 중앙위원회에서 이를 추진 확정하였다(전노협백서 5, 2003: 308~309 참조).

그렇다면 “사업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 한 마디로 이 문건은 민주노조운동의 총단결을 전노협의 조직확대·강화에서 찾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도는 “사업계획”의 목차에서 확인된다: “첫째, 지노협의 강화와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둘째, 업종분과위원회 사업, 셋째, 대공장노조 사업, 넷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다섯째, 중앙지도력 강화를 위하여, 여섯째, 산업별노조 건설의 경로와 전망 및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즉 “사업계획”은 전노협 강화를 위해 우선 지노협 강화 전략과 재정문제 해결은 물론 업종과 대공장노조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사업계획”은 전노협 또는 지노협의 강화 입장에서 업종과 대공장을 아우르는 업종분과위원회와 대공장노조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계획”의 제목과 내용은, 당시 문제의 지점이 전노협 중심이나 새로운 조직 중심을 세울 것인가라는 논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노협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총단결을 만들 것인가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조진영의 전체적인 조직 발전은 전노협이 없이는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오히려 전노협에 의해서 주도되고 주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우리의 인식의 출발점이다... 민주노조진영의 전체적인 조직 발전을 위해 전노협은 보다 확고한 구심력과 관장력으로 민주노조진영 전체의 조직적 발전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수행은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수렴해 내는 가운데 전노협을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조직발전소위, 1992: 662).

이처럼 “사업계획”은 “첫째, 민주노조 총단결은 전노협과 지노협의 강

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²⁷⁰⁾ 둘째, 민주노조진영 전체의 조직 발전은 전노협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전노협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전노협백서 5, 2003: 308).

더 나아가 “사업계획”은 “조직발전의 미래상이 산업별노조 건설과 이에 기초한 노동조합 전국 중앙조직(민주노총)”이며 이것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하나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와 요구에 바탕을 둔 아래로부터의 민주노조 총단결 운동의 축과, 또 다른 하나는 전노협·업종회의 등 각 조직이 1987년 이후 5년여의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해 낸 내부적인 준비과정의 축, 즉 산업별노조 건설을 위한 준비의 축이다”(조직발전소위, 1992: 644). 따라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노동법개정 투쟁, 총액임금제 분쇄투쟁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민주노조 총단결운동’의 내용과 형식”(ILO 공대위, 총액임금 공대위 등)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노협이 중심체계인 전노협과 개별업종별 조직을 바탕으로 한 회의체인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라는 양 조직의 현단계와 결합문제보다는 각 조직이 산업별 노조건설을 위해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준비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조직발전소위, 1992: 664).

후자와 관련하여 전노협은 “지노협의 강화를 바탕으로 업종분과사업을 통해 참관·교류노조와의 사업을 강화하여 전노협 자체를 강화시키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업종분과를 단위노조를 중심으로 한 산업별 노조연맹준비위원회나 산업별노조 연맹조직으로 전화, 발전시킬 것을 모색해 가야 한다. 또 현재 업종회의나 전노협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노동조합 전국조직에 대해 전노협은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전노협에 가입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조직발전소위, 1992: 665).

전노협의 관장과 지도에 의해 이러한 조직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현

270) 소위안은 “지노협이 지역 단위노조의 결집체이며 전노협 사업을 지역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집행하는 주요한 관장단위”로서 “전노협의 조직기반은 바로 지노협”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노협의 조직강화는 지노협의 조직강화”를 통해 가능하며 이것은 곧 “단위사업장의 조직강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보고 있다(조직발전소위, 1992: 662~663).

업종노조회의 조직이 각 연맹별로 내부적으로 강화되고 업종의 지역조직이 구축된다면(이 조직은 우리 지노협과 지역의 공동사업과 투쟁을 위한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정세 조건과 준비 정도에 맞추어 민주노조의 전국중앙조직(민주노총)의 건설이 보다 전향적이고 구체적으로 모색될 수 있다. 전노협이 중심이 되어 구축된 산업별 연맹준비위원회, 산업별 연맹 조직, 산업별 단일노조와 전노협 내에 들어와 함께 조직을 발전시킨 산업별 단일노조 등이 업종회의 내외에 있는 발전된 연맹조직과 함께 민주노총 건설에 힘차게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조직발전소위, 1992: 666).

여기에서 업종분과사업과 대공장노조 대책은 전노협 중심성에 기반하여 제시되고 있다. “사업계획”은 업종분과사업이 “단위노조 차원에서 제기되는 업종별 요구와 참여 의지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을 통해 전노협을 “내부적으로는 조직강화를 이루어 내고 참관·교류노조 등과 결합을 강화해 넘으로써 조직을 확대”해야 하며, 이것이 “업종별 조직으로 발전하는 데 내적 토대”를 만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리고 이 사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산업별 단일노조이며 대략적으로 산업별 연맹준비후원회를 거쳐 산업별 노조연맹 건설로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은 결국 “지노협의 조직강화로 귀결되는 한편 전노협의 조직강화, 확대와도 일치”한다고 “사업계획”은 주장했다(조직발전소위, 1992: 664).

한편, “사업계획”은 전노협 중심성의 입장에서 대공장노조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는데, 즉 대공장노조의 전노협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전노협의 확대·강화와 조직적 발전을 위한 계획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그동안 전노협과 참관 혹은 교류로 관계를 맺어 온 중간노조나 그 밖의 공동사업을 통해 사업의 성과로 집약해 낼 수 있는 대공장노조 등 다수의 노조에 대한 사업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집단적인 가입’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계기를 마련해 내는 것이다.... 조직소위의 고민은 말하자면 대공장 전략노조에 대한 사업의 성격 및 위치 부여와 관련된 것이다. 대공장노조의 중요성

에 정도된 나머지 대공장노조와의 사업을 공유해 온 성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안 된다. 이 그릇은 현재로서는 지노협을 골간으로 하는 전노협일 수밖에 없다(조직발전소위, 1992: 671).

이처럼 “사업계획”은 “대공장들이 그동안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대공장 우월주의나 기업별 조합주의를 확실하게 극복하고, 전국 전선에서 대공장노조에 요구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면서 “대공장노조사업의 조직적 귀결은 전노협 가입”이라고 주장했다(조직발전소위, 1992: 672).

하지만, 조직발전소위에서 마련된 안이 지역과 단위노동조합에서 조직적으로 토론되지 못했고 밑으로부터의 문제의식을 수렴하여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통일시키지도 못하였다. 내용에 있어서도 조직발전의 구체적인 발전 경로와 과정을 추상적으로 밝히는 데 머물렀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사업의 선후와 경중이 고려되지 못했고, 방대한 사업이 병렬적으로 나열·제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전노협백서 5, 2003: 3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발소위 안은 당시 일반적인 당위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되던 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 문제에 대한 전노협의 의견을 밝힌 최초의 자료로서 “조직에 대한 진단과 이후 발전 전망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이후 방향에 대한 통일된 조직적 방침을 마련함으로써 조직 내외에서 무분별하게 제기된 논의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과 조직적 이완을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전노협백서 5, 2003: 309).

이상에서 보듯이, 1단계 조직발전 논의는 대공장 동력론이 주목받던 대기업연대회의가 1991년 초 사실상 와해되고 대부분의 민주노조운동이 전노협 중심론에 동의하면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노조운동 내 전노협 중심성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제기된 ‘전노협 한계론’은 상당부분 대공장 동력론의 문제의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2단계 논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논쟁은 높아진 대공장노조의 위상을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단결로, 특히 이전부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전노협에 어떤 형태로 결합시킬 것인가를 둘러

싼 것으로 상호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었다고 평가된다.

두 번째 조직발전 논쟁이 첫 번째 ‘논의’와 질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두 번째 논쟁에 이르러 민주노총 건설 과정에서 전노협 중심성을 견지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전면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민주집행부가 들어선 대공장노조, 합법성을 쟁취한 업종연맹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높아 갔다. 이에 따라 이후 건설될 민주노총에 이 세 주체가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가가 문제로 대두”되었다(김혜란, 1995). 이런 상황에서 이 당시 대부분의 지노협은 축소되고 있었고, 전노협은 조합원과의 결합도 약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1992년 하반기에 전노협을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로 규정하면서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동운동 위기론 논쟁은 전노협 중심성을 문제삼음으로써 전노협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었다. 다른 한편, 1993년 6월 출범한 전노대도 전노협 중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이 당시에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전노대를 중심으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건설을 향한 발걸음을 막 내디딘 상태였다. 따라서 각 조직마다 조직발전과 전망을 둘러싼 견해와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진통을 겪고 있던 중이었다”(김하경, 1999b: 615).

이러한 상황은 전노협의 중심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전노협 위원장 선거는 이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더욱 증폭시켰다. 단병호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²⁷¹⁾으로 전노협은 1994년 1월 23일 제5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처음으로 자유경선에 의해 전노협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12월 27일 입후보 등록 마감 결과, 기호 1번 김영대 사무총장, 기호 2번 이홍석 마창노련 의장, 기호 3번 양규현 전노협 수석부위원장 등 3명이 등록하였다(김하경, 1999b: 615~616).

후보들 간의 내용적 차이는 선명하게 쟁점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노

271) 12월 3일 전노협 제4기 4차 중앙위원회에서 단병호 전노협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불출마의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수배자로서 전노대 사업추진을 책임있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 간 민주노조 발전전망과 관련해서 전노협과 전노대 사업에서 나타났던 견해상의 차이를 선거를 통해 대중적·민주적으로 검증받고 조직의 입장을 통일시켜 강력한 지도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었다(김하경, 1999b: 615).

협 중심성에 대한 입장은 확실히 달랐다. 김영대 후보는 민주노총이 ‘확대·강화된 전노협’이 아니라 새로운 연대들을 중심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와는 달리 양규현 후보는 전노협의 확대·강화를 통해 민주노조 총단결을 주장했다. 즉 전자가 “전노협 한계론”의 입장에서 있었다면, 후자는 “전노협 중심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선거 결과는 1차에서 양규현 151표(46%) 1위, 이홍석 100표 (31%) 2위, 김영대 73표(23%) 3위로 나타났고, 2차에서는 양규현 후보가 총 322표 중 172표를 얻어 전노협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 선거는 이념의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성과도 있었는데, 선거를 통해 대중적으로 정책 대결, 조직발전에 대한 전면 토론이 되지는 못했지만(이때도 전노협 중심성을 부인할 수 없는 대중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정파 대결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내부 논쟁은 이후 전노협 1안과 전노협 2안으로 만들어져서 업종회의안과 함께 민주노총 건설을 둘러싼 당시 논쟁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토대가 되었다.²⁷²⁾

위원장 선거에서 전노협 중심성을 주장한 후보진영이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진영 내 사업집행 과정에서는 전노협 중심성이 의문시되는 행태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사업은 전노대 성과로 귀결되었고(사업은 전노협 상근자가 하더라도 민주노조 총단결이라는 관점에서 전노대 사업으로 발표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당시 전노대 내 의결구조에서 좌파는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지 못했다. 한편, 이 당시 전노협의 한국노총 탈퇴운동 전개와 함께 제도언론을 매개로 한 ‘제2노총’ 건설에 관한 보도로 민주노조운동의 총단결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노대는 민주노총 건설을 조직적 과제로 제기하면서 각 조직 논의를 추동하기 시작했다.

272) 하지만 최초로 경선을 통한 전노협 위원장 선거는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전노협이 협의체적 성격이란 점에서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방식으로 자율경선이 되지 못한데다가, 더욱이 자율경선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구체적 방침이 없어 지역적으로 출마 원칙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발생(예를 들어 이홍석 후보의 출마 과정, 이에 대해서는 김하경, 1999b: 616~621 참조)해도 이를 해결할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혼란을 막을 수 없었다. 따라서 자율경선을 통한 조직강화라는 선거의 원래 목적은 상당부분 훼손되게 되었다(김하경, 1999b: 620~621).

이러한 배경하에 전노협은 “제5기 제3차 중앙위원회(1994. 4. 20)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조직발전특별위원회’(조발특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민주노총 건설에 따르는 구체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전노협 백서 7, 2003: 197). “조발특위는 1차 회의에서 특위 운영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5월 13일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통칭 전노협조직발전 제 2안(이하 2안)으로 ‘1995년 초 민주노총 건설의 필요성’이 제출되었으며, 5월 19일 3차 회의에서는 전노협 조직발전 제1안(이하 1안)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발전 방향에 대하여’가 제출되었다”(전노협 백서 7, 2003: 199). 이후의 회의에서 1안의 보론인 ‘민주노총은 산업별 조직화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이하 1안 보론)와 2안의 보론인 ‘현 시기 민주노총과 업종(산업)별 연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이하 2안 보론)가 제출되어 논쟁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²⁷³⁾

이 토론에서 현 시기 민주노총 건설의 필요성, 민주노총 건설의 원칙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금속산업의 조직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제5기 5차 중앙위원회(1995. 8. 25)는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거의 모든 중앙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발특위가 제출한 ‘민주노총 건설을 위하여’라는 토론자료에 기초하여 장시간 논의를 전개한 후 만장일치로 전노협의 조직발전안을 확정하였다(전노협 백서 7, 2003: 200).

이제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양자간의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1안과 2안은 민주노총 건설의 필요성, 건설의 원칙, 조직체계, 건설 시기 등의 다양한 쟁점을 두고 대립했지만 핵심적인 쟁점은 산별노조 건설의 방법과 경로에 대한 것이었다. 우선, 조발특위에서 단병호와 문성현이 제출한 1

273) 한편 전노협과 함께 전노대를 구성하고 있던 업종회의,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회도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업종회의의 민주노조 조직발전 전망”(1994. 7. 15), “민주노총 건설에 대한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의 입장”(8. 19), “민주노총 건설에 대한 현충련 중앙위원회의 입장”(9. 12) 등의 문건으로 밝혔다. 여기에서는 전노협 1안과 2안을 중심으로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업종회의 안은 전노협 2안과 거의 동일하며 현충련과 대노협의 안도 2안과 유사하지만 3~4페이지로 매우 짧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듯이 풍부한 논의를 담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이들 문건들을 인용할 것이다.

안은 전노협 제4기 3차 중앙위의 결정, 즉 전노협의 조직발전방침과 사업의 방향을 담은 조직발전소위안(첫번째 조직발전관련 문건인 “사업계획”)을 먼저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논의를 시작한다.

당시 결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전노협은 전노대를 강화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양적 확대와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제조업 내의 산업별 연합단체 조직을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이러한 조직사업의 성과를 종합하고 복수노조금지조항 등 노동법이 개정되는 정세조건을 고려하여 전노협 해소를 전제로 한 민주노총(산업별연맹을 주축으로 하고 지역별협의회를 보조축으로 하는 형태)을 건설해 나간다는 것이었다(단병호·문성현, 1994a: 589)²⁷⁴).

1안은 1992년 조발소위의 “사업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민주노총 건설에 대한 대중적인 요구의 확대,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복수노조금지조항)의 개정 가능성, 전노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조직강화 및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조직발전의 필요성 등을 들어 민주노총 건설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배경은, 정세적 조건의 변화추세와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획기적인 조직확대·강화와 산별노조 건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지금까지의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총결집하여 민주노조진영의 조직적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지도·집행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단병호·문성현, 1994a: 592).

민주노총 건설 시기로는 1995년 상반기가 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건설

274) 1안은 전노협이 이미 조직발전 전망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특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기존의 안에 대한 조직 내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노총 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둘째, 현실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광범위한 의견을 올바르게 반영함으로써 노동대중의 주체적 참여를 높여야 한다. 셋째, 그간 진행된 전노협의 선도적인 활동에 의해 민주노총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는 정세인식이 민주노총 건설의 시급한 착수를 요구하고 있다(단병호·문성현, 1994b: 597 참조).

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즉 민주노조의 이념과 노선을 구체화 하는 가운데 “전노대에 직간접적으로 포괄되어 있는 모든 민주노조 운동 역량을 총결집하여 기존 조직의 발전적 해소 및 재편을 전제로 한 전국중앙조직 건설”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형태로는 “산업별(업종별)연맹조직을 주축으로 하고 지역별·그룹별 조직을 보조축으로 하는 전국중앙조직의 형태”를 제시했다(단병호·문성현, 1994a: 592).

이처럼 1안은 1995년 상반기에 이념과 노선, 즉 계급적 노동운동의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민주노총의 중심축이 기본적으로 산별연맹 형태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조직 형태로서의 제조업 산별노조 건설의 경우 “금속, 섬유, 화학 등을 중심으로 산업별 조직화를 추동하고 그 밖에 준비위 수준으로조차 묶이기 어려운 산업의 경우는 일반노조 연맹으로 포괄하여 조직하면서 이후 사업을 통해 산별연맹 조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산별연맹은 “연맹 내부의 조직구성 및 분포에 따라 업종별협의회, 지역조직을 구성”하고 금속의 경우 “금속연맹으로 조직하되 이와 동시에 금속연맹 내부에 조선, 자동차, 일반금속(기계·금속, 전자·전기)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단병호·문성현, 1994a: 593~594).

이처럼 1안은 “산업별연맹 건설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지역협의회는 “민주노총의 제반사업을 지역적으로 집행함과 동시에 지역 차원의 독자적 사업을 전개하는 단위”로서 “산업(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들을 포괄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룹협의회 경우 “산업별·지역별 조직 건설 이후에도 한국의 재벌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그룹노동조합 내부의 필요 여부에 따라 존속할 수도 있지만 민주노조운동의 전반적 사업을 담당해 왔던 역할은 상당부분 민주노총 골간 조직으로 이전하고 그룹 내부의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한 역할 및 위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단병호·문성현, 1994a: 594 참조).

이에 대해 2안은 1안에 비해 조금 빠른 1995년 2월까지의 민주노총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안은 민주노총이 시급히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를, “민주노총을 건설한 후 1995년 임금인상투쟁을 조직적으로 준비

하고 또 1995년 6월부터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통일적인 방침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김영대, 1994b: 625). 이 밖에도 2안은 민주노총 건설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첫째, "최근에 현총련, 대노협 등 많은 대기업노조가 한국노총 탈퇴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어용노총 해체, 민주노총 건설'이 대중적인 구호로 외쳐지고 있다. 그 결과 민주노총 건설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로 부상"하여 민주노총 건설이 대중적 요구로 자리잡고 있다(김영대, 1994a: 610). 또한 "1994년 하반기에는 블루라운드와 맞물려 복수노조금지조항 등 노동법 개정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수노조금지조항의 개정은 민주노총 건설투쟁을 크게 촉진시킴과 아울러 한국노총으로부터 많은 노조의 이탈을 촉진시킬 것이다. 전노대가 1995년 상반기에 민주노총을 건설하여 이들 조직을 한데 묶어 낸다면 한국노총의 조직위상은 크게 낮아지고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운동의 주축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그러나 1995년 상반기에 민주노총 건설을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외에 또 다른 성격의 노조가 세력화되어 노동조합운동이 분열할 가능성이 높다"(김영대, 1994a: 610~611). 따라서 이들은 화급을 다투어 민주노총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조직 형태와 관련하여 2안은 "전노대로 결집한 민주노조진영을 모태로 하되 자주적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모든 노동조합의 주체적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이 "업종(산업)별연맹을 주축으로 지역협의회와 그룹협의회를 횡축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대, 1994a: 611). 즉 민주노총은 "업종(산업)별연맹을 주축으로, 지역협의회와 그룹협의회를 횡축으로 건설되는 총연합 조직이다. 이때 업종(산업)별연맹은 모든 사업의 중심축이며 의결기구에 참가하고 의무금 납부의 의무를 지는 기본 단위"라고 주장했다(김영대, 1994a: 612).

그렇다면 금속산업을 업종별연맹(협의회)으로 조직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2안은 첫째, "업종별로 조직해야 업종별 동질성과 공동사업을 토대로 한 추진력과 결집력이 생겨나 동종산업, 동종업종 내 노동조합들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93년 10월 전노협 중앙위원회는 금속산업을 자동차, 조선, 기계금속

등 업종별로 조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방침은 그동안 누구에게나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1994년 1월 조선노협이 출범했다. 만약 금속산업연맹으로 한꺼번에 조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면 조선노협이 발족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조선업종노조 상호간에 연대와 교류 또한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것이며, 그렇다고 금속산별연맹 건설이 앞당겨지지도 않았을 것이다(김영대, 1994b: 626).

더 나아가 2안은 “출범 당시 얼마나 많은 노조가 합류하는가는 이후 민주노총 입지를 상당부분 규정하게 되는데, 금속산업을 (1안처럼) 금속산별연맹으로 한꺼번에 조직하면 민주노총의 조직규모가 양적으로 축소된다. 반대로 자동차, 조선,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 업종별로 조직하면 민주노총의 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된다”고 보았다.²⁷⁵⁾ 그리고 2안은 “업종별로 조직해야 ‘기업별노조 체제의 극복과 산업별 단일노조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영대, 1994b: 627~629 참조). 한편 그룹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재벌이 비대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룹협의회가 일정한 필요성에 의해 생겨났기 때문에, 새로이 건설되는 민주노총은 그룹협의회를 조직 체계 속에 포괄해야 한다”고 보았다(김영대, 1994a: 615).

이상의 제2안에 대해 제1안은 ‘제1안 보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보충 설명하면서 제2안을 비판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 안의 업종단위로의 조직화에 있었다. 제1안 보론은 “만약 업종단위로 조직된다면 동종산업 내의 업종간 차별성은 갈수록 넓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천단위가 세분화됨으로써 공동투쟁은 대단히 협소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단병호·문성현, 1994b: 601). 또한 업종별 조직형태로 건설된다면, “업종연맹(협의

275) 대기업노조도 이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데, 대노협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당위와 목표만을 앞세워서는 곤란하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조직방도와 사업방침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낮은 단계에서부터 실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민주노총이 산별연맹을 기초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선포한다면 다수의 노동조합들이 함께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 일단 다수의 노조와 조합원들을 포괄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과 투쟁을 통해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 가면서 산별조직으로의 이행을 준비해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우선 비교적 공통성이나 유대감이 높은 부분부터 업종별 조직을 건설하고 이를 기초로 민주노총이 건설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1994: 653~654).

회) 자체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조선 노협의 중심조직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인데 중심 조직이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을 때 "업종연맹 전체의 공동화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단병호·문성현, 1994b: 605~606). 그리고 1안 보론은 업종별 조직화 이후 "산업별노조로 전환할 때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 때문에 "산업별노조로의 전화는 결코 용이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단병호·문성현, 1994b: 603). 결국 1안이 보기에 2안의 "업종별 조직형태로 독자적인 사업이 일정기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직은 자기관성에 의해 운영될 것이며, 이후에 산업별로 다시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단병호·문성현, 1994b: 604).

더 나아가 1안 보론은 2안의 더 많은 노동조합의 참여를 위한, 즉 최대의 조직화를 위한 방법이 업종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을 건설하려는 오늘의 시점에서 '기왕에 조직화된 노동자를 민주노총으로 얼마만큼 참여시켜 낼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조직노동자뿐만 아니라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사업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도 동시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단병호·문성현, 1994b: 606), 이것은 업종별이 아니라 산업별연맹으로 조직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오직 산업별연맹으로 전국단위가 조직되고 우수한 직업적 조직활동가들이 요소요소에 적절히 배치되어, 그야말로 치밀한 계획과 강력한 조직적 뒷받침이 담보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단병호·문성현, 1994b: 607).

그리고 1안 보론은 자신들에 대한 2안의 비판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에서 반비판하고 있다. 우선 1안 보론은 '1안이 업종의 조직화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것을 오해라고 주장한다. 1안 보론에 의하면, 1안은 "산업별연맹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업종별로 묶는 구체적인 사업을 동시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연맹의 조직 형태를 취하더라도 '향후 동종업종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독자적 사업영역을 보장하고 연맹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단병호·문성현, 1994b: 608).

더 나아가 1안 보론은 2안의 '현실적으로 산업별 조직화의 가능성이 없

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다: “우리가 적극 노력한다면 정말 금속부문의 산업별연맹이 불가능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산업별연맹 건설의 필요성과 이후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 선전, 조직화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전개한다면 대중들의 동의와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단병호·문성현, 1994b: 608~609). 따라서 1안 보론은 1995년 2월에 반드시 민주노총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2안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서 보다 많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안에 대해서는 우선 민주노총 건설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놓고 ‘현실적인 조건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운동이 현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전망에 따른 명확한 목적의식성이 결합되지 못했을 때는 자생적 한계와 과정상의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으며, 운동의 발전 속도를 늦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단병호·문성현, 1994b: 607).

이에 대해 2안도 2안 보론을 통해 반격에 나섰는데 우선 2안 보론은 1안의 “금속산별연맹으로 조직하지는 주장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스스로 물으면서 1안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2안 보론은 민주노총 건설이 업종별에 기반해서 건설되면 조직의 관성 때문에 금속연맹으로 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1안의 비판에 대해 이런 “얘기는 어용노총 소속 산별연맹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언정, 민주노조진영에는 타당하지 않은 불필요한 우려일 뿐이다.” 왜냐하면 “업종별로 결집한 노동조합들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대산별로 결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주저없이 조직체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김영대, 1994b: 632). 그런 다음 2안은 1안의 산별조직화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

자동차, 조선, 기계금속, 전기전자로 세분할 것이 아니라 금속산업 전체를 한꺼번에 묶는 것이 어떠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첫째, 업종별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 실천을 통해 광범한 노조를 묶어 내지 못한 채 자칫 선포식으로만 조직을 건설하게 될 위험이 있고,

둘째 결과적으로 전노협 가입노조를 중심으로 한 재편에 머물기 쉬우며, 셋째 복수노조금지조항이 폐지되면 업종별 분화의 추세가 확산되어 기존 금속노련에서도 자동차, 전기전자 등 별도의 연맹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인바 현실성이 없다(김영대, 1994a: 614~615).

이상에서 보듯이 1안과 2안은 원칙론과 현실론, 대산별과 소산별, 1995년 상반기와 2월 내 건설 등 다양한 쟁점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이견의 함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양자가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1안 보론은 “노자간의 대립전선은 총자본 대 총노동의 구도 속에서 산업별 전선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민주노총이 “계급적 노동운동을 확고히 견지하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단병호·문성현, 1994b: 600~601).

노동조합은 사상과 이념, 출신과 성분, 성별에 관계없이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지위와 이해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조직의 중심부로 갈수록 계급적 지향성은 분명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계급적 통일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기본적 원칙이다(단병호·문성현, 1994b: 601).

이런 맥락에서 전노협 1안은 “조직의 형태”가 “노동자계급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라면서 민주노총의 조직체계는 “자본의 착취로부터 노동자의 해방과 이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규정”하는 데 적합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산업별노조 건설에 있다고 주장했다(단병호·문성현, 1994b: 601).

이런 맥락에서 1안 보론은 “그렇다면 산업별연맹과 업종별연맹은 계급성을 강화하는 데 어떻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묻고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업종별 연맹의 조직화는 동종사업 내의 업종간 이질성을 극도로 심화

시켜, 노동자계급의 계층화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성장산업인 자동차업종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사양산업인 전자·전기업종에 근무하는 노동자 간에 계층적 분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업종별로 조직된다면 제조업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이는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이루는 데 결정적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단병호·문성현, 1994b: 601~602).

더 나아가 1안은 업종별로 조직된다면 동종산업 내에서 업종간의 공동투쟁도 “산업별 내지 업종별로 동일한 노동조합들이 상급조직인 연맹에는 각각 나뉘어서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해대립 현상마저 나타날 수 있다”고 예견했다(단병호·문성현, 1994b: 602).

이와 같이 생생한 현실적 경험을 거치고 있으면서도 업종별 조직 형태를 취한다면, 운동의 목적의식성은 사상되고 현실주의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운동은 기업별노조의 이기주의에서 업종별 이기주의로 빠져들어 노동자의 계급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단병호·문성현, 1994b: 602).

이에 대해 2안의 경우, 민주노총의 성격을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경제·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연대를 지향하는 모든 노동조합들이 결집한 전국중앙조직”으로 보고 있다(김영대, 1994a: 612). 이런 맥락에서 업종안은 “민주노총은 현재의 전노대 노조는 물론 중간 노조나 한국노총 소속 노조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향에서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건설될 민주노총의 이념은 참여하려는 노조들의 대부분이 합의 가능한 최소강령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업종회의, 1994: 642~643).²⁷⁶⁾ 이처럼 2안과 업종안은 계

27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업종안은 다음의 민주노총 건설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업종회의는 금속산업노조가 금속산별이든 업종별이든 올해 11월 이전에 실현 가능한 형태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어떤 형식이 보다 많은 금속산업노조를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제조업 진영의 업종별·산업별 재편 과정을 전노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향이다”(업종회의, 1994: 646).

급성에 대한 강조보다는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민주화” 또는 폭넓은 노조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념의 “최소강령 수준”을 언급하고 있다. 2안은 이런 맥락에서 “사회보장, 토지·주택, 교육·의료, 환경·교통, 재벌·중소기업 등 민주노총에 요구되는 제도정책적 과제와, 반외세 자주화, 반독점 민주화, 조국통일투쟁 등 민주노총에 요구되는 사회·정치적 과제”에 대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김영대, 1994a: 611).

관점과 조직화의 차이는 당연히 참여세력의 포괄 범위에 대한 차이로 귀결된다. 1안은 “민주노총은 전노협의 주도적 역할과 어용조직인 한국노총을 반대하는 노동세력의 총집결이 있을 때만 위력적으로 건설될 수 있다”(단병호·문성현, 1994b: 597)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전노협 중심의 전투적 노동조합 또는 전노대에 결합한 노동조합을 가입대상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2안은 “민주노총이 출범할 때 얼마나 많은 노조를 포괄하느냐가 이후 민주노총의 입지를 상당부분 규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수의 노동조합들을 결집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조합원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나 대정부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한국노총을 능가하는 조직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김영대, 1994b: 619~620)라고 봄으로써, 한국노총 산하 노조들 중에 민주노총 건설에 동조하는 노조들 등을 포함하여 “많은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구조”(업종회의, 1994: 643)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의 전술적 지침에서도 나타났다.

현재의 조건에서 최대한 많은 노조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 산하 조직 가운데 결합 가능성이 높은 보험노련(2만 명), 한국통신(4만 9,000명), 정부투자기관노조연맹, 섬유노련 산하 화학섬유업종, 서울지역 택시노조를 비롯한 택시노련 산하 민주적인 노조들에 대해 시급히 조직화에 착수해야 한다(김영대, 1994b: 619~620).

양자는 민주노총의 결성시기 문제에 있어서도 차이를 드러냈는데, 이것 또한 상이한 관점과 조직체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즉 “상황 인식면에서는 민주노총 건설의 토대가 일정하게 성숙되어 있다는 점과 따라서 민주노총 건설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

하고 있다”(단병호·문성현, 1994b: 598). 하지만 2안과 업종안은 “1995년 이후의 정치일정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민주노총 건설이 더 이상 늦어지면 ‘민주노조운동’ 세력이 분열되는 한편으로 제3의 세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반면 1안은 “민주노조운동의 조직강화와 사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조직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산별노조운동 연구팀, 1999).

새로운 민주노총 건설의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여유를 두고 상반기까지 진행된다면 그것이 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이 1995년 2월에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시기상으로 엄청난 간격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민주노총의 조직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시기에 긴박당하는 논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단병호·문성현, 1994b: 608~609).

이러한 “서로의 차이는, 사실상 민주노총 건설에 대한 문제인식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데서 비롯한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단병호·문성현, 1994b: 599), 이것은 시기보다도 산별 조직화와 계급성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과 지방자치선거의 정치일정과 제3노조 출현이라는 노동운동지형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보다 대중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 차이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상의 논쟁을 통해 볼 때 이들의 이념적 관점을 반영하는 조직상의 핵심적인 대립 지점은 산별노조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있었다. 그런데,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을 건설하자는 1안은 금속을 중심으로 한 산별의 중심이 전노협이라는 점에서 전노협 중심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업종 중심의 2안은 “전노대 구성체계를 그대로 두고 명칭을 개칭하는 형태로 준비위를 구성하자는 것”(단병호·문성현, 1994b: 598)으로서 전노대 중심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의 각각의 진술을 들어보자.

1989년부터 본격화된 권력과 자본의 가혹한 탄압을 전노협이 전면에

서 받아치지 않았다면 민주노조운동의 지평이 과연 지금처럼 확대될 수 있었겠는가? 전노협은 민주노조운동의 촉불로서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며 민주노조운동의 불꽃을 지펴 올렸던 것이다... (지금의 정세에) 이러한 탄압을 헤쳐 나갈 중심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단병호·문성현, 1994b: 604).

이처럼 1안은 전노협을 중심으로 한, 또는 전노협을 ‘닭은’ 새로운 조직을 피하면서 제조업 중심인 금속산별화를 기반으로 민주노총을 건설하자는 입장을 지지한 반면, 2안은 전노협의 그동안의 성과를 상당히 비판하면서 전노협 중심성의 해체에서부터 민주노총 건설의 계기를 찾고 있다.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보면 주요 대공장의 집단 가입을 통해 전노협을 확대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노협이 중심이 되어 산별연맹을 건설한다든지, 전노대는 공동사업 추진체로 그 위상을 한정짓고 민주노총은 이와는 다른 경로로 건설한다든지, 또는 산별노조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을 건설한다든지 하는 주장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실제 그동안 대공장노조들이 전노협에 얼마나 가입했으며 과연 현재의 전노대를 그냥 두고 다른 경로로 민주노총 건설이 가능한지, 그리고 민주노총 건설을 앞둔 지금 당장 산별 단일노조 건설이 가능한지를 자문해 보면 이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김영대, 1994b: 621).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2안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조직발전특위’를 중심으로 시급히 민주노총 건설(안)을 토의 확정하여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발전 논의를 선도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업종(산업)별연맹(협회) 건설, 지역업종조직의 전노대 가입 추진, 실무진 파견 등을 통해 현재의 전노대를 강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에서 보듯이 전노협이 전노대의 강화에 힘써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김영대, 1994a: 618). 이것은 금속 중심의 산별이 노동운동을 보다 왜소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금속연맹이라는 조직체계만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발전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구 내지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을 감

안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동종산업, 동종업종 내에서 공동의 실천과 투쟁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채 전노협과 몇몇 대공장이 중심이 되어 하향식으로 조직하는 금속연맹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금속연맹이 민주노총의 노선을 결정짓고 투쟁을 주도하며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김영대, 1994b: 632).

이상에서 보듯이 양자의 논쟁은 ‘전노대 강화냐, 전노협 강화냐’의 견해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서, 제1안은 전노협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건설을, 제2안은 전노대 강화를 통한 민주노총 건설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지적되어야 할 것은 양자가 대기업노조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1안의 경우 그룹협의회가 금속산별로 해소되어야 하고 그 역할은 그룹 내부의 공동사업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에 2안과 업종회의²⁷⁷⁾, 그리고 특히 현총련안은 그룹협의회 역할보다 강조하고 있다:

현총련 등 대기업노조가 논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채 대상화 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대기업 조직 내부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태 등이 활발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어렵게 한다면 이는 민주노총 건설의 주체 역량에 대한 재평가까지 요구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대기업노조들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논의 참여는 필수적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업종회의, 1994: 648).

지역, 업종, 그룹별 내부 조건의 현실적 차이를 극복하고 단일한 산별 혹은 업종으로 쉽게 조직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때문에 현실의 기업별노조를 산업별 혹은 업종별·지역별로 조직화하되, 참여를 원하는 민주노조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룹별 조직도 같은 비중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1994: 657).

이상에서 보듯이 조직발전의 핵심논쟁인 통칭 제1안의 대산별과 제2안

277) 업종안은 “전노대가 주도하여 민주노총 준비위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업종회의, 1994: 646~650 참조)고 선언함으로써 제2안과 마찬가지로 전노대 중심성을 보다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의 소산별 논쟁²⁷⁸⁾은 다양한 논쟁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념과 전노협 중심성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을 가지고 있다. 즉 1994년 조직발전 논쟁의 핵심은 전노협 중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민주노총 건설의 구심이 전노협인가 전노대인가를 둘러싼 논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안은 ‘사회개혁투쟁 노선’ 또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등으로 보다 정교화되면서 민주노총 건설의 주류가 되었다.

전노협은 이상의 두 개의 안을 중심으로 대중적 조직적 논의에 들어갔으나 1994년 임단투가 본격화되고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8월 25일 중앙위 개최를 앞두고 시간적인 촉박함에 쫓겨 심도있는 논의와 광범위한 조합원들의 결의를 거치지 못했다(김하경, 1999b: 672 참조). 즉 이 시기 논쟁은 “대중에게 상당히 멀게 느껴진다. 실제로 지역이나 단사에서는 그 구체적인 쟁점이나 이견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거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김혜란, 1995).

하지만 8월 25일 전노협 제5기 3차 중앙위원회는 마침내 사안의 중대함에 비추어 거의 모든 중앙위원이 참석하여 장시간 논의 끝에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조직발전 단일안을 확정하였다. 건설 시기는 8월 말~9월 초 민주노총추진위원회 구성, 11월에 준비위원회 구성, 1995년 상반기에 민주노총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금속산업 조직화 방안으로는 업종 단위를 기본축으로 하는 ‘제2안’과 금속산별을 기본축으로 하는 ‘제1안’을 절충적으로 결합하여 결정하였다. 말하자면, ‘업종연맹을 기본 단위로 업종별 조직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업종별 대표를 중심으로 금속산별추진

278) 대산별론의 입장은 전노협 조직의 다수를 이루고 있던 금속산업분야 노조들과 전노협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금속산업의 대공장노조(조선, 자동차 업종)를 모두 하나의 금속산업연맹으로 조직하고 차후에 이를 금속산별노조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전노협 1안). 한편 소산별론 또는 업종산별론이라고 불린 입장은, 대산별론이 서로 조건이 다른 업종들을 성급히 묶을 경우 ‘선포식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비교적 동질성이 높은 업종단위(자동차, 조선,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연맹조직을 먼저 건설하자는 것으로, 이것이 오히려 ‘산업별 단일노조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전노협 2안). (김준, 2001). 즉 두 안은 모두 궁극적으로 금속산별을 지향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큰 틀로 시작해서 작은 틀로 세분화느냐, 아니면 작은 틀로 시작해서 큰 틀로 모으느냐라는 조직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김하경, 1999b: 672 참조).

위원회'를 구성한 뒤 민주노총 건설과 동시에 준비위원회로 전화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전노대의 각 단위급 4개 조직(전노협, 업종회의,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에서 일정수의 비례로 조직하고 단위급 조직 외에 필요조직을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여기서 수비례와 구성수는 전노대에서 결정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전노대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 민주노총 준비위원회에는 업종별(산업별)·지역별·그룹별로 가입하여 구성하되 전노대가 포괄하지 못한 노조도 구성하기로 하였다(김하경, 1999b: 673; 전노협 백서 7, 2003: 200 참조).

나. 사회적 조합주의와 사회민주주의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이념지형은 사민주의를 둘러싼 논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초기 사민주의 논쟁은 학계에서 이론적 차원에서 제기되었지만 노동운동가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사민주의 논쟁은 노동운동 내부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론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조합주의와 노사정위원회의 성격과 참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활동가와 노동자들은 이것이 사민주의 논쟁인지조차도 몰랐거나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사회적 조합주의와 그 실천(노사정위 참여)이 왜 사민주의 논쟁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정파 분화와 정체성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단서는 다음의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운동의 좌파세력들은 노사정위원회를 서구 사민주의의 대표적인 모델인 코프라티즘 기구로 보고 참여를 반대했다. 물론 노동운동이 사민주의로 가느냐 아니냐가 노사정 합의기구에의 참여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투쟁을 더 잘 조직하기 위해 교섭기구로 활용한다는 활용론의 입장은 이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말과 다르다. 서구 사민주의 사회합의 모델하에서도 투쟁과 교섭은 병행된다고 강조되었지만 결과는 체제 내에 무력하게 안주하면서 역동성을 상실한 조직으로 전락한 경우가 태반이다(김태연, 『기관지 노힘』, 제56호, 2004. 7. 1).

이처럼 좌파는 사회적 조합주의와 노사정위 지지를 사민주의자와 동일시했다. 실제로 사회적 조합주의론자들은 그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기치로 정책참여를 통한 사회개혁투쟁과 진보정당을 통한 의회 진출 등 사민주의적 경향을 보여 왔다. 반면 좌파의 주장대로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사회적 조합주의를 사회주의자가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서 이것을 전술 단위에서 배제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한국의 노동정치에서 사회적 조합주의와 노사정위 참여는 사민주의와 사회주의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선으로 기능했다. 이런 점에서 본질에서 다루는 민주노총 제1기 평가 문제, 노사정위 참여 논쟁,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은 기본적으로 노사정위 참여를 둘러싼 상이한 시각이다. 즉 이것들은 상이한 이념적 지형에서 있는 사회적 조합주의의 실천과 이론 논쟁이라는 점에서 사민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 즉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정파인 국민과와 현장파 간의 토론이자 이념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1) 민주노총 제1기 평가

민주노총 제1기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론은 사회개혁투쟁을 강조하는 노선이다. 사회개혁투쟁은 민노준 대표자회의(1995. 1)에서 ‘1995년 임단투와 사회개혁투쟁 기본방침’을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 이것은 임단투와 더불어 사회개혁투쟁을 주요 투쟁으로 새롭게 제기한 것이었다.

민노준이 1995년도 최우선적으로 힘을 집중해야 할 사회개혁 요구는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적용확대, 국민연금의 민주적 관리운영, 세제 및 재정개혁, 재벌 경제력집중 규제 4가지로 정했다(이후 교육문제 관련 추가됨). 산업(업종), 지역, 그룹 조직은 해당 조직과 관련된 사회개혁 요구를 1가지 이상 선정하고 민노준은 각급 조직이 선정한 과제 중 전조직적·전국민적으로 확산 가능한 부분(예: 교육개혁 등)을 이상의 4가지 요구에 추가하여 민노준의 1995년 사회개혁 요구로 최종 정리했다(민노준 3차 대표자회의. 민주노총, 1995: 48~49).

사회개혁투쟁이 나오게 된 배경은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노동운동에 대

한 반성과 비판에 있다.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노동운동이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건 개선투쟁에 집중”한 결과 “대폭적인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조건 개선투쟁은 대부분 노동 과정에서의 문제를 둘러싼 투쟁”인데, 노동자들은 “노동 과정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사회제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개혁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1995: 320). 다른 한편으로 사회개혁투쟁론자들은 사회개혁투쟁이 조직과 조합원들의 요구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개혁투쟁이 나오게 된 것은 조직 내 요구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전노협은 제조업 중소기업 중심으로 임투보다는 노동운동 탄압분쇄투쟁 같은 거였는데, 사회개혁투쟁은 민주노총 뜨기 전에 대공장, 업종회의에서 제기된 주제들이었다. 대표적으로 언론노조에서 언론개혁, 병원노조에서 의료개혁, 전교조에서 교육개혁 등이 제기되었고, 그 당시 현대차 정갑득 위원장 등, 기아 등 대공장노조에 소위 NL계열의 위원장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사회개혁투쟁을 제기하게 되었다. 즉 그 당시에는 조직 내 요구로 올라온 것이었다. 이러한 (부분적인 조직마다의) 요구들을 묶기 위한 것이 ‘사회개혁투쟁’이었다(인터뷰 D, 2004. 2. 25).

이처럼 사회개혁투쟁은 “주택, 교육, 의료, 교통, 언론, 환경 문제 등의 해결”과 “물가, 세제, 재벌, 중소기업 보호 등 경제민주화투쟁” 등을 자기 영역으로 삼고 있다²⁷⁹⁾. 따라서 사회개혁투쟁은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중요한 영역이자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 전체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사회개혁투쟁론자들의 설명이었다(민주노총, 1995: 320). 즉 이들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개혁투쟁은 노동자와 국민

279) 이들은 노동조합운동의 투쟁영역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노동조건 개선투쟁-임금, 노동시간, 고용보장, 산업안전보건, 기타(복지후생, 모성보호 등), 둘째,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노동운동탄압저지, 조합활동권리의 유지 개헌, 노동법 개정 등, 셋째, 사회개혁투쟁-사회보장제도개선, 주택·교육·의료제도 개선, 교통·환경문제 개선 등 경제민주화, 넷째, 자주·민주·통일 투쟁(민주노총, 1995: 321).

생활을 개선하고, 사회를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노동자의 단결과 정치의 식을 강화하며,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었다(민주노총, 1995: 322~323 참조).

사회개혁투쟁 노선은 명확하게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좌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노협의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이라는 담론을 선택했다는 점, 그리고 서구의 노동조합주의 모델을 준거점으로 삼고 있었다²⁸⁰⁾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경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혁명의 교훈에서 사민주의는 워낙 ‘웃기는 놈’이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 보면 레닌의 글이 현실에서 많이 떠 있고 한쪽에 쏠려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오히려 사민주의라고 욕먹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 구체성이 있거나 실천적인 고민들이 보인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지나고 보니 사민주의와 사회적 조합주의가 연결이 되는 거 같다(인터뷰 D, 2004. 2. 25).

이상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노선에 대해 비판자들은 등장 배경에서부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 제1기의 등장 배경을 자본과 정부의 포섭전략에 대한 순응이라고 규정지었다. 즉 “1990년대 초반 이후 한국의 독점자본은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한편으로는 자본의 세계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독점자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위 ‘신경영전략’이라는 ‘노동의 유연화’ 공세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자본축적운동의 과정 속에서 민주노총을 하위 동반자로 삼으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1996년 4월 ‘신노사관계 구상’에 의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설치였고, 유연화 공세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던 시도가 1996년 12월, 노동악법의 날치기 통과였다. 이 시

280) 사회개혁적 투쟁노선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서구의 노조는 기업을 뛰어넘는 연대와 공동체 결사조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회개혁을 추구해 왔다. 따라서 노조의 사회적 위상이 높고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노조는 기업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노조의 사회적 위상도 낮다. 따라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국민적 요구인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민주노총, 1995: 323).

기부터 민주노조운동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노선과 입장을 분명히 정립할 것을 요구받았다. 즉 1990년대 중반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국가경쟁력 강화·생산성 향상 논리에 기초한 자본의 신보수주의적·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동참하면서 그 잉여의 일부를 분배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본국제화 시대에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이념과 노선을 모색할 것인가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었다”(민주노총, 『그날에서 책임기』 제2호(1998년 5월)). 이러한 기로에서 민주노총 건설자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론이라는 총자본진영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민주노총 합법화→정책참여·사회개혁투쟁을 통한 민주노총의 사회적·정치적 위상 강화→시민운동과의 연대→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국민후보론으로 이어지는 민주노조운동 발전전략과 정책을 선택하였다(민주노총, 『그날에서 책임기』 제2호(1998년 5월))

고 주장했다. 따라서 비판자들, 즉 좌파들이 보기에 민주노총 제1기는 “변혁지향성의 포기과 ‘체제 내적 개혁’의 추구, (상위 수준의) 자본이데올로기의 수용과 계급타협주의의 옹호, 시민운동적 성격의 운동 추구²⁸¹⁾”

281) 민주노총 제1기 지도부 노선이 체제 내적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노선이었기 때문에 민주노총 제1기 운동은 체제 내적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체제의 원활한 유지·재생산을 추구하는 (부르주아 인텔리 및 신중간층 중심의) 시민운동의 성격을 다량으로 지닌 운동으로 변질됐다. 이 점은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의 강령이나 이후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제출된 제반 요구들이 실제로 시민운동 수준에서 제기하는 개혁의 요구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확인된다. 실제로 개혁의 요구일지라도 ‘어떤 개혁을 중시할 것인가’와 ‘개혁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시민운동적 관점과 노동자·민중적 관점에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민주노총 제1기가 요구한 개혁의 요구조항과 내용은, 노동조합운동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제외한다면, 시민운동이 제기하고 있는 그것과 큰 차이를 지닌 것이 아니었다. 나아가 이전의 전노협은 변혁지향적 노동단체들과 동지적 관계를 유지했으며, 타계급·계층과의 연대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민중적 연대’의 원칙을 지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건설된 이후 그러한 노동단체들은 민주노총에게 ‘미운 오리새끼’와 같은 존재가 된 반면,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운동단체들은 민주노총이 공을 기울여 협력을 얻어내야 하는, 가장 가까운 우군과 같은 존재로 격상했다. 이러한 과정은 민주노조운동의 시민운동화를 촉진시키는 것이었는데, 민주노조운동이 시민운동화되는 만큼 민주노총 운동은 ‘계급적·민중적 이익’보다 (실제로는 중산층의 계급적 이해의 다른 표현에

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김세균, 1999. 3).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노총 제1기의 개량주의의 기원을 훨씬 위로 올라가서 찾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노동운동 노선이란 권영길 지도부의 출범과 더불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1990년대 초에 전노협운동이 지닌 전투적·변혁지향적 운동을 비판하면서 ‘진보적 노사관계론’이나 ‘민주적 코포라티즘론’ 내지 ‘신코포라티즘론’ 등을 제기한 사람들이 주장한 ‘노동운동 혁신론’을 이어받는 것이었다. 이러한 ‘혁신론 아닌 혁신론’이 민주노총 제1기 노선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간층적 의식을 지닌 부분들이 민주노조진영에 대거 참여하게 된 데에다가 이들의 발언권이 내부적으로 대폭 강화된 데에도 크게 기인한 것이었다”(김세균, 1999. 3).

비판자들이 보기에 민주노총 제1기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은 두 가지 점에서 자신의 한계를 노정했는데, 첫 번째는 노사정위 참여와 제1기 노사정위에서 정리해고제 합의로 나아갔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1기 지도부의 정리해고제 수용은 배석범 직무대행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와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신노사관계가 노동자계급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한, 민주노총 제1기 지도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노선의 최종적인 결과였다”(노동자의 힘, 2001: 39). 이처럼 비판론자들은 이 결과 사회협약이 조합원들에 의해 부결되었고 결국 제2기 좌파 집행부의 등장으로 귀결되었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비판론자들에게 두 번째로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의 개량주의적 노선은 정치세력화의 측면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는데, 즉 “민주노총 제1기 지도부의 이른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 표방했던 이념의 문제는 한국 민주노조운동진영이 가지고 있었던 내재된 변혁지향성을 개량화로 이끌었으며 따라서 체제 내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 있다.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한 호

지나지 않는) ‘국민적 이익’을 앞세우는 운동으로 변했으며, 보수언론에서 말하는 국민여론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는 운동으로 변했다(김세균, 1999. 3).

름으로 세력화되었던 ‘국민승리 21’의 문제가 그 한계를 내포하는 것이었다”(김상곤, 1999. 6: 65).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은 오늘날 사회적 조합주의의 이름으로 되살아나 여전히 민주노조진영 내부의 개량주의적·관료주의적 흐름을 옹호하는 이념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민주노조진영 내부에서 국민승리 21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데에서 드러나고 있다시피, (오늘날에는 스스로 변혁적 계급정당을 지향한다고 자처하기 시작한) 현재의 국민승리 21과 민주노조진영 내부의 개량주의적·관료주의적 세력 간에는 강력한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김세균, 1999. 3).

이상에서 보듯이 민주노총 제1기에 대한 평가 논쟁은 민주노총진영 내에 상이한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으며, 이들간의 실천적·이론적 인식과 지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다음의 평가는 두 세력 간의 입장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은 다른 한편으로 ‘전노협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총단결’이라는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보다 전투적이고 변혁적인 부분의 꿈이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현실적 힘관계에 밀려 좌절당하는, 그리하여 흔히들 ‘전노협 정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전투적이고 변혁적인 흐름이 희석화되고 약화되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민주노총이 우파세력의 헤게모니 아래에서 조직되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운동노선과 활동방식에서는 이전의 전노협의 운동노선이나 활동방식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새로운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김세균, 1999. 3).

이 평가에 의하면 민주노총 제1기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은 전노협의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노선과 대립되었다. 후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비판자들은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의 전방위 대중조직으로서의 자신의 본분(노동자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임금과 고용이다)을 자본의 합리화 계획(재벌개혁) 뒤로 미루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은 “‘국민과 함께’하기 이전에 가장 기초적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조직”인데

민주노총이 “조합원대중의 기본적 요구(임금과 고용)를 ‘협소한’ 이익으로 이해”했다고 비판했다(이은숙, 2000). 결국 ‘노동해방’과 ‘변혁’ 대신 “‘개혁’만을 특권적으로 내세우는 목소리들만이 외쳐지기 시작했다”면서 “민주노총 제1기의 운동이념은 말 그대로 ‘체제 내적 개혁(내지 개량)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은 바로 체제 내적 개혁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념”이라고 평가했다(김세균, 1999. 3).

이상에서 보듯이 민주노총 제1기에 대한 평가는 두 세력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경향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세력인 사민주의적 세력과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계급성을 강조하고 좌파세력인 사회주의세력이 그 주인공들이다. 다시 말해 민주노총 제1기는 “출범부터 전노협 시절에 비해 온건한 입장을 표명했고, 계급적 원칙과 전투성보다는 국민적 지지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지향을 보여 왔다.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압축되었던 민주노총 제1기 노선에 대한 좌파의 비판은 대중투쟁에 기초한 전투성과 계급적 원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대립적이었다(조효래, 2001). 이 논쟁을 통해 볼 때 민주노총 제1기를 경유하면서 노동운동 내부에 이념적 분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음에서 살펴볼 노사정위 참여 논쟁과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을 통해 보다 심화되었다.

2) 노사정위원회 참여 논쟁

노사정위 참여 논쟁은 노개위 이후부터 진전된 정부의 사회적 대화 방침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민주노총 내부의 이견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런데 내부 이견이 단순히 상이한 상황판단에 따른 전술적 차원의 논쟁이 아니라 전노협 이후 보다 선명해지기 시작한 상이한 그룹들간의 이념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쟁점은 제1기 민주노총 이후 지금까지 지속된 가장 격렬하고 선명한 민주노총 내부 정파들간의 논쟁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을 만하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문제가 민주노총 내부에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민주노총 제1기 집행부가 정리해고제가 담겨 있는 사회협약에 동의하면

서부터였다.²⁸²⁾ 사회협약안(1998. 2. 6)은 곧바로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고 그 여파로 국민과 제1기 집행부는 제2기 좌파 집행부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제1기 집행부의 노사정위 참여 입장은 2004년도 임원선거를 통해 재집권한 제4기 국민과 집행부에서 재확인됨으로써 현재 노사정위 참여 문제는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있다.

그렇다면 왜 국민과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전략을 추구하는 것일까? 우선 이들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노선이 사회정책에 대한 개입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즉 이들은 법개정과 사회개혁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통로로서 노사정위 참여를 선택했다.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통로이며, 제도개선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노동운동의 역량이 취약한 현재의 조건에서는 3자기구에의 참여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김유선, 1998).

노사정위 참여 문제는 기업단위에서 노조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기업단위를 뛰어넘는 틀거리를 모색해야 하는 전체 틀을 논의하는 장에 개입될 문제라고 본다(인터뷰 D, 2004. 2. 25).

이처럼 이들은 노사정위를 공장정치를 넘어서서 국가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통로로 이해했다. 하지만 이들이 노사정위를 무조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투쟁과 교섭전략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사정 지도자회의는 진정한 사회적 교섭기구를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올바른 사회적 교섭기구를 만들어 내는 데 가장 결정

282)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것은 노개위 참여가 최초일 것이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사회적 대화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그것은 민주노총 제1기 집행부가 뚜렷한 흐름으로 존재한 반면, 좌파 그룹이 명확한 자기 조직화와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데에 기인했다. 또한 이것은 당시 노동법 개정에서 복수노조 등의 개혁입법이 가능하다는 전망과 아울러 정부내 개혁파(박세일 정책수석과 진념 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가 협상 파트너였다는 점도 일정 정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적인 요인은 민주노총의 투쟁력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회적 교섭들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의 진지한 토론과 힘있는 투쟁만이 명실상부한 사회적 교섭들을 확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상학, 『노동과 세계』, 제292호, 2004. 6. 3).

따라서 핵심적인 것은 노사정위 참여의 전제조건, 즉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의제 설정이나 이런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 산업정책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있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의 정치가 노동정치 주체들을 정치적 인간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중요한 것은 민노총이 참여하는 게 옳다. 당시 참여했던 산별노동자가 “민주노동당이 정권 잡는 것은 정말 수천만 년 걸리겠구나... 아~ 나라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구나... 이것만을 보고도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말을 했다... 정부가 국장, 장관들 회의하는데, “당신 얼굴 보니까 내가 일류 고급공무원으로 할일이 태산인데 무식한 노동자와 이야기해야 돼? 하는 표정이 맞지?” 하고 물었다. 그래도 학습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관료들의 경우 노동자라고 함부로 할 수는 없구나, 책상 줄만 그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인터뷰 A, 2003. 8. 29).

이처럼 노사정위 참여론자들이 노사정위 참여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노사정위 불참론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입론으로부터 자신들의 논지를 전개한다. 우선 이들은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노사정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라는 얼굴을 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하위동반자기구에 불과하다. 노사정위에 들어가는 순간 노조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녀로 전략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박성인 인터뷰, 『말』(1998년 11월호), 125쪽).

‘대화와 타협’을 앞세워도, ‘상생’을 앞세워 대중을 동요시켜도, ‘화해’ 여론을 조성해도 어차피 목적은 분명하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

용한다 해도 그것은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유연화 전략’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일 뿐이다(선지현, 『기관지 노힘』, 제56호, 2004. 7. 1).

이처럼 이들은 한국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노사정위는 그것의 유용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노사정위 참여를 항상 부인하는가? 이들은 사회적 대화가 노동운동 성장의 성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가 된 것은 투쟁의 결과 얻은 시민권의 획득을 의미하며 노사정위 “자체는 분명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이며,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위사업장을 넘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교섭 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고민택, 2001). 따라서 이들이 보기에 노사정위는 활용되어야 할 전술적 기구이다. 이런 점에서 현장과 제2기 집행부의 기본적인 태도는 전술적 활용론의 입장에서 노사정위 참여의 전제조건을 제시했고 현장의 요구에 따라 실제 노사정위에 참여하기로 했다.²⁸³⁾ 하지만 결국 이들은 불참과 탈퇴를 선택했는데, 그것은 현 시기에서는 참여조건이 충족되기가 힘든 구조적 상황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노조는 교섭 자체를 안 할 수 없다... 교섭은 해야 한다. 노사정위도 그런 하나로 보면 되지 않느냐... 민주노총 2기 집행부도 그런 활용론의 길을 걸었었다... 죽어도 노사정위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볼 건 없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형에서 노사정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나”는 것이다... 하지만 노사정위는 출발할 때 정리하고 관철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동안에 (노사정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해온 것은

283)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는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강화하고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적 고리로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해 나간다는 것이었다(고영주, 1998).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공개적으로는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원회로 불러들이는 자본과 정권의 이러한 의도를 부정하지 않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느냐, 산에 가야 범을 잡지”라는 말로 이 우려를 일축하려 한다. 나는 이 속담에 동의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범을 잡으려는 사람은 무장을 하고 산으로 간다.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운동의 투쟁을 위한 교섭수단이라면 민주노총에서는 먼저 ‘준비된 총파업’에 대한 조직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김태연, 『기관지 노힘』, 제56호, 2004. 7. 1).

지금의 정부 정책의 구도가 그런 틀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진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고용을 내놓으라고 했다면, 지금은 임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활용조차 안 되는 것이다(인터뷰 E, 2004. 2. 10).

더 나아가 이들은 노사정위에 들어가는 것이 제도권 내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제도권 내에 들어선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계급성이 탈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참여(교섭) 틀 자체를 목표로 상정할 경우, 직접적인 요구를 정치적 쟁점화하기 쉽지 않고 그런 만큼 투쟁 동력과 주체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대중(계급)과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참여’는 ‘책임’의 짝 이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화된 참여’는 결국 정권과 자본과의 파트너십(동반자적 관계, 협조주의적 관계)을 맺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이 있다(고민택, 2001).

이런 점에서 이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전술적 활용론의 입장에서 참여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제도권 내 포섭의 가능성의 배제, 즉 참여의 제도화를 거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독자적 발전전략(전망)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보다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강조는 일체의 참여(교섭)를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교섭) 틀을 일상화·항상화·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해당 시기, 해당 사안을 둘러싸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요구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인가와 이에 기반한 투쟁 동력을 얼마나 만들 것인가에 달려 있으며, 그 수준에서 참여(교섭) 형식이 거꾸로 결정될 것이다(고민택, 2001).

이상에서 보듯이 노사정위 참여문제는 민주노총 제1기의 평가에서 대립되었던 국민과 좌파 간 입장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즉 노사정위 참여는 좌파에게 상층 수준의 정책참가로 계급성을 탈각한 것으로 비쳐

진 반면, 국민파에게는 국민의 지지와 정책참가를 통한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는 통로로 이해되었다. 결국 “1998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정부측의 태도가 분명해지고 노사정위원회 자체가 무력화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갈등은 사실상 해소되어 갔다”(조호래, 2001).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 차이는 지속되어 이후 보다 세련된 형태로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현재 제4기 국민파 집행부에서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다시 논쟁의 중심에 있다.

3) 사회적 조합주의를 둘러싼 논쟁

앞선 논쟁이 노사정위 참여를 둘러싼 현안의 실천방침과 관련된 논쟁이었다면, 여기에서 다룬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은 사회적 대화 또는 사회적 협의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이론적 차원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논쟁은 노사정위 참여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해서 진행된, 보다 심화된 조직의 이념적 입장을 정리하는 통로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두 개의 논쟁, 즉 1998년 하반기에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에서의 지상 논쟁과, 2004년 상반기의 민주노총 제4기 집행부 등장을 계기로 전면화된 국민파와 좌파블록 간의 논쟁을 통해 전개되었다. 이들 논쟁에서 사회적 조합주의는 단순히 노사정 간의 정책협의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의미의 중립적인 개념이나 정치행위 모델이 아니었다. 이것은 좌파의 사회적 조합주의에 대한 시각에서 나타나는데, 좌파는 사회적 협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회적 협약, 즉 노자대타협은 노동의 전략이 아니라 자본의 전략이었다! 사회적 협약은 노동과 자본 간의 선의에 의한 타협이 아니라,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계급역학의 산물이었을 뿐이다... 즉 자본에게 불리한 역관계에서 자본측이 이를 돌파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 바로 사회적 협약이었다(원영수, 『기관지 노힘』, 제51호, 2004. 3. 30).²⁸⁴⁾

284) 원영수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란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계급타협체제와 그 이데올로기에 다름 아니다. 미국 노조의 노골적인 노자협조주의(business unionism)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는 외양을 갖추고 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세련된 계급타협주의이다(원영수, 『기관지

좌파의 비판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조합주의가 자본주의의 전복, 즉 혁명과 계급을 포기했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조합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궁극적으로는 이념과 연관되어 있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은 공산당 등 좌파를 배제한 사민주의 계열의 노조에 의해 일면 좌파적 또는 진보적 외양과 온건 합리주의를 표명하면서 강조되었다. 특히 노동법 등 제도적 측면과 임금 및 노동조건의 물질적 측면에서 실질적 양보를 통해 다수 조합원을 포섭해 내는 제도와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원영수, 『기관지 노힘』, 제59호, 2004. 8. 19).²⁸⁵⁾

이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운동 상황에서 사회적 조합주의는 이미 좌우를 가르는 바로미터 또는 리트머스 종이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은 노동운동 위기에 대한 인식, 진단, 해석, 그리고 실천방법과 연관되어 있다. 즉 사회적 조합주의는 특정 이념적 지평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위기의 원인에 대한 해석과 위기극복의 대안 및 조직화 방안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논쟁사에서 볼 때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은 1992년 노동운동 위기론 논쟁(제4장 제2절 3. 마. 참조)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다 확장시키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노동운동 위기론 논쟁이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사회적 조합주의론자들(사민주의자)의 비판이었다면,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은 사회적 조합주의론에 대한 좌파(사회주의자)의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의 양상은 다른 한편 주도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전자에서는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세력, 즉 계급론자들이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면, 후자에서는 사회적 합의론, 즉 사민주의 경향의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 논쟁을 거쳐 한국 노동운동진영의 정파들 간의 상이한 이념적 스펙트럼과 이념적 위치가 보다 선명해졌다.

노힘, 제59호, 2004. 8. 19).

285)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사회적 조합주의 체제의 안착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민주의 정치세력(사회당, 노동당, 사민당과 합법주의로 선회한 일부 공산당)이었다(원영수, 『기관지 노힘』, 제51호, 2004. 3. 30).

첫 번째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은 제1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을 역임했던 김유선의 사회적 조합주의 논의로부터 촉발되었다. 즉 이 논쟁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등이 남아공 코사투의 사회적 조합주의를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를 비롯한 좌파의 비판이 제기되고, 민주노총의 기관지인 『노동과 세계』의 지상연재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조효래, 2001: 665).²⁸⁶⁾

김유선의 주장은 한마디로 “한국노동운동의 이념은 ‘사회적 조합주의’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념에 기반하여 노동조합의 “정책참가를 활성화하고 노사정위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었다(김유선, 1998a: 18). 그렇다면 그는 왜 사회적 조합주의가 한국노동운동이념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을까? 그것은 새로운 정치경제적 상황 때문이었다. 그는 IMF 구제금융 이후 30년간의 ‘고성장-저실업’의 시대는 끝나고 ‘저성장-고실업’의 새로운 경제상황이 도래했고 정규직 고용불안은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지불능력과 유동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았다(표 5-4 참조). 그런데 그가 보기에 현재의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노조’와 ‘임금인상 중시형 기업별교섭’의 노동운동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위기에 빠져 있다.

기업별노조 체계와 교섭방식은 노동자들의 의식과 노조활동을 기업의 울타리에 가두고, 노동조합운동을 실리적 조합주의 또는 경제적 조합주의로 이끌고 있다. 실리적 조합주의는 전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치적·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임금인상이나 고용조건과 같이 단기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조합원의 이익 옹호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노동조합운동의 약점은 ‘고성장-저실업’ 시대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가 등장하고

286) 이에 대해 임영일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피력하고 있다: “사회적 조합주의를 주장한 김유선에 대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박성인의 비판, 이에 대한 김유선의 반론, 그리고 다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측의 노중기에 의한 재비판으로 이번 『노동과 세계』의 기획의 세 꼭지가 채워졌다. 이 비생산적인 논쟁에 노회찬이 참여하여 교통정리를 시도했는데 그의 결론은 산별노조와 노동자당 건설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이제 ‘민주노총이 답해야 할 때’라는 것이었다. 너무도 당연한 이 당위적 결론이 이 기획의 결과라 한다면, 우리는 너무 갑갑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 노동운동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임영일, 1998. 12).

‘저성장-고실업’ 시대와 구조조정 국면이 본격화되자, 노동조합운동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기업별 노조로는 더 이상 조직확대를 기대할 수 없고, 기업별 교섭으로는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 정규직의 고용조차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리적 조합주의는 참여와 공동결정에 따른 책임을 두려워한 나머지 책임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생활과 권리를 정부와 사용자에게 내맡김으로써 조합원의 단기적·직접적 이익조차 보호할 수 없게 한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운동은 변화를 거부하며 현상의 유지를 고집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내몰리고 그 영향력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김유선, 1998a: 29~30).

그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된 정세²⁸⁷⁾ 속에서 노동운동은 사회적 조합주의의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이것은 경영참가와 정책참여를 통해 사회개혁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정책참여는 특히 중요한데 그 핵심적인 것은 노사정위 참여이다. 이를 위한 조직적 과제로 김유선은 산별연맹 강화와 산별노조 건설,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조합내 민주주의 실현을 제시하는 한편, 교섭과 투쟁의 과제로 산별교섭 체제 확립, 정책참가 활성화를 제시했다. 김유선은 남아공 코사투의 경험을 사회적 조합주의의 원형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모세 조합주의와 실리적 조합주의의 좌우편향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⁸⁸⁾.

287) 1997년 말 IMF 관리체제가 등장하자 ‘고성장-저실업’ 시대는 끝나고 ‘저성장-고실업’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게 되었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7~8%로 치솟았으며, 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위협하고 있다. 대기업마저 잇따라 부도를 내고 있고, 인수합병·감량경영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업자는 150만 명 선을 넘어섰고, 임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며,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소득분배 구조는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주변 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민주노조운동은 새로운 운동 방향의 정립을 요구받고 있다(김유선, 1998a: 18).

288) “모세 조합주의는 노동자들을 광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노동조합운동이다. 모세 조합주의는 영원한 반대자 입장을 취한다. 모세 조합주의는 매우 전투적인 모습을 취하고, 매우 간단한 사회주의의 메시지를 설교하며, 대중행동으로 모든 장애물을 공격한다. 이런 유형의 노동조합운동은 남아공 사회를 폐허로 이끄는 광야 시나리오에는 적합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코사투가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Pap, vleis and gravy)’이나 ‘현상의 유지(Skorokoro)’를 바란다면, 모

세 조합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모세 조합주의는 이득보다 훨씬 많은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실리적 조합주의는 광범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실리적 조합주의는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요구와 이익을 중시한다. 실리적 조합주의의 주요 무대는 작업현장과 산업에서의 단체교섭이다. 그러나 실리적 조합주의는 노동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쟁점에 관해서는 사용자와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고 투쟁하기도 한다. 실리적 조합주의는 전투적이면서 민주적일 수도 있고, 관료적이면서 기술적일 수도 있다”(김유선, 1998a: 28, 29).

코사투의 경우 사회적 조합주의란 조합원들의 직접적 관심사뿐만 아니라 광범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며, 사회적 조합주의는 변혁을 위한 사회세력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조합주의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이며, 사회적 조합주의의 사회적 영향력은 노동자들의 조직화된 힘, 대중동원능력, 사회경제 강령과 정책, 정치적·사회적 동맹에의 참여에 기초한다(김유선, 1998a: 28~29).

이러한 인식들에 기반하여 김유선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실현해야 할 사회적 조합주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 조합주의는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을 목표로 하며, 그 수단으로 노동자의 조직확대·강화,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세력화를 중시한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재벌체제 개혁, 사회보장제도 확충, 조세제도 개혁, 주택문제 해결, 교육제도 개선, 환경문제 해결 등과 같이 전체 사회의 이익과 국민생활 옹호에 앞장서는 노동조합운동이다. 둘째, 사회적 조합주의는 장기적이고

<표 5-4> 사회적 조합주의 제기배경과 조직 및 교섭 방향

		1987~97년	1998년 이후(IMF 시대)
상황	경제상황	고성장, 저실업	저성장, 고실업
	기업상태	정규직 고용보장 지불능력 충분	정규직 고용불안 지불능력·유동성 부족
조직	조직형태	기업별 노조	산업별 노조
	조직대상	정규직 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
교섭	교섭대상	개별 기업주	정부 및 사용자단체
	교섭방식	기업별 교섭	중앙교섭+산업별 교섭
	교섭요구	임금인상 중시형	고용안정·사회개혁 중시형

자료: 김유선(1998a), 20쪽.

전략적인 노동조합의 정책을 중시하고,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경영방침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참가와 경영참가를 중시한다. 셋째, 사회적 조합주의는 노동자들 상호간에 노동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계층간에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데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연대를 추구한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중소기업체·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약한 사회계층의 생활과 권리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는 노동조합운동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조합주의는 조합원들의 활발한 참여에 근거하는 역동적인 노동조합운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민주주의를 확충하고, 현장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김유선, 1998a: 30~31).

이상의 김유선의 사회적 조합주의론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내세운 민주노총 제1기 집행부의 운동노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정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김유선은 다음과 같이 제1기 민주노총 집행부를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1기 지도부는 ‘사회적 조합주의’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①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국민적 과제에 관심을 갖고 전체 사회의 이익과 국민생활 옹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했고, ②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노총’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개혁을 주요 투쟁과제로 정식화했으며, ③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노사정 3자기구를 통한 정책참가와 경영참가를 중시한 데서도 확인될 수 있다(김유선, 1998a: 31).

그런데 김유선이 보기에 민주노총 제1기 집행부는 “민주노총의 운동이념으로 사회적 조합주의를 정식화하지 못했고 체계적인 교육선전의 부재로 이를 대중화하지 못했으며 IMF 관리체제의 등장 및 구조조정의 본격화와 함께 다가온 조직내 혼란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김유선, 1998a: 31). 이런 점에서 그는 노동운동이 사회적 조합주의 이념을 통해 보다 자기정체성을 찾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좌파적 성향의 논자들은 우선 정세에 대한 인식을 김유선과 공유할 수 없었다. 이들이 보기에 IMF 통치를 불러온 경제위기는 “일차적으로 자본

이 더 많은 이윤 획득과 더 많은 축적을 위해 행한 자신의 운동을 통해 자초한 ‘이윤생산의 위기’ 내지 ‘자본축적의 위기’였다. 이러한 “이윤생산과 자본축적의 위기는 곧바로 자본 지배하에 놓여 있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삶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과잉노동력의 퇴출과 고용노동력의 더 많은 착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본의 운동”에 의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삶의 위기를 더 한층 악화”시킬 것으로 보았다(김세균, 1998. 9: 183~184).

지금 정세 위기는 단순히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수성 때문이 아니다. 세계 자본주의는 1980년대 이후 자본축적운동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IMF 관리체제와 신자유주의적인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에 맞서 자본 관계 지양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노동운동에 임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보장할 수 없고 제반 민주적인 권리도 쟁취할 수 없다(박성인 인터뷰, 『길』(1998년 11월호), 125쪽).

이러한 관점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현재의 위기를 파악하려는 것으로서 계급적인 입장에서 노동운동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이들은 김유선의 주장, 즉 “IMF 체제의 등장으로 조합원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²⁸⁹⁾.

그렇다면 누구와 누가 충돌하는 것인가? 김유선은 그것을 조합원과 사회 전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아는 상식으로 그것은 분명 노동과 자본 간의 충돌이며 자본을 대리하는 국가와 노동 간의 충돌이다... 김

289) 김유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MF 체제 이전에는 이러한 한계가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다. 조합원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괴리되는 일은 극히 드물었고, 조합원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은 대체로 일치했다. 노동조합의 투쟁은 쉽사리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요구를 조금 더 관철하느냐 덜 관철하느냐’라는 매우 단순한 구조에서 교섭하고 투쟁했다. 그러나 IMF 체제의 등장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저성장-고실업’ 시대가 도래하자, 조합원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한계가 결정적인 문제로 전환되었다”(김유선, 1998a: 31).

유선의 상식은 또 하나의 상식을 전제하고 있다. 바로 조합원, 정확하게는 노동자<국민, 노동<사회 혹은 국가라는 상식이다. 바로 소수로서의 노동자는 다수 혹은 전체로서의 국가와 사회의 이익, 목표 같은 것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박재영 외, 1998: 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유선의 사회적 조합주의는 노동조합주의 또는 투항주의에 불과했다. 박성인은 김유선의 노동조합주의를 “자본의 발전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또는 “노동조합에만 의존하는 노동운동”으로 비판하고 있다(박성인, 1998).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사회적 조합주의가 민주노총 제1기 지도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론’에 다름 아니며, 노동자계급의 계급적·정치적 발전보다는 중간층으로부터의 지지 확보를 중시하는 탈계급화되고 탈정치화된 사회개혁투쟁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김세균, 1998. 9: 214). 이것은 노중기에 의해 더욱 혹평받았는데²⁹⁰⁾, 그는 “현실과 괴리된 새로운 운동노선은 1992년 한국노총의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와 마찬가지로 노사협조주의를 결코 넘어서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민주노총 제1기 집행부의 실패 원인이 “사회적 조합주의를 정식화하여 대중화하지 못한 것”에 있지 않고 “대중들의 직접적이고 계급적인 이해와 상충하는 사회적 조합주의를 너무도 적극적으로 실행했던 것”에 있다고 평가했다(노중기, 1998).

비판론자들은 “산별노조의 건설 역시 노동운동을 산별 단위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단일한 대중투쟁전선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세균, 1998. 9: 214). 즉 “산별교섭과 산별노조 건설을 절대화하는 것”은 “생존권 투쟁조차 민주

290) 노중기의 비판은 보다 현실권력관계 속에서 사회적 조합주의는 개량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개월 동안 노사정위 경험을 보면 ‘원칙적’ 참가를 가로막은 것은 ‘구체적 현실’이었다. 지난 10개월간의 참가의 결과는 무엇인가? 제도가 개선된 것은 무엇이고 실질적인 참가는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교섭력과 자주적 계급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국가와 자본이 양보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개혁, 제도개선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그때 합의는 개량도 아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노사협조주의적 담합에 불과하다(노중기, 1998).

노총을 중심으로 한 총노동전선을 필요로 하는 현실에서 노동운동의 계급적·정치적 발전을 방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박성인, 1998). 또한 이들이 보기에 사회적 조합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인 사회개혁과 이를 위한 정책참가 활성화, 특히 노사정위원회 적극 활용론은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한 생존권투쟁과 노동3권 쟁취투쟁이 갖는 계급적·정치적 의의, 노동자의 대중투쟁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김유선이 남아공 코사투에서 주장했던 ‘사회적 조합주의’의 핵심 내용을 오해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위해 코사투 사례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먼저 1997년 9월 남아공의 코사투의 셉템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사회적 조합주의의 목표를 명백히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있고, 또 남아공의 사회발전의 전략적 주체를 노동조합에 한정하지 않고 코사투와 아프리카민족회의(ANC), 그리고 남아공 공산당(SACP)의 삼자동맹으로 상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합주의’ 노선은 수십 년에 걸친 반인종차별투쟁과 노동자계급투쟁 끝에 1994년 ANC 정권이 출범한 이후 변화된 계급역학 속에서 ANC 내의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이행전략으로 제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보기에 김유선의 ‘사회적 조합주의’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으로 대체함으로써 사회적 조합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거세하고 있다(박성인, 1998).

이러한 비판의 토대 위에서 비판론자들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비판론자들은 “이윤생산과 자본축적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자본의 위기가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삶의 위기를 야기하고 악화시키는 현실을 타개하고, ‘자본의 위기’를 오히려 ‘노동의 희망’으로 전환시킬 길은 과연 없는 것인가?”(김세균, 1998. 9: 184)라고 묻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구조의 변혁을 위한 노동정치”와 “노동자 계급정치의 활성화”를 주장한다(박성인, 1998).

이제 노동운동은 자본축적운동의 결과와 그 폐해를 최소화시키는 운동이 아닌, 자본축적운동 그 자체에 대한 투쟁, 자본이 강요하는 시장경쟁원리 그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따라서 사회구조의 변

혁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운동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이게 계급적·정치적 노동운동이다(박성인 인터뷰, 『길』(1998년 11월호), 125쪽).

이처럼 이들은 민주변혁의 핵심적인 경제적 내용은 ‘자본관계의 사회화’와 ‘경제과정 전체에 대한 사회적 내지 민주적·민중적 통제체제의 확립’이어야 한다고 보고, “생존권의 확보를 비롯한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과 민주변혁을 위한 투쟁을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 ‘대중운동과 정치운동의 결합’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 두 운동형태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운동과 정치조직 내지 정당운동의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김세균, 1998. 9: 208~209).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민주노총 제1기 지도부의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노선을 청산하고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유선은 노동조합 내 두 가지 이념경향, 즉 모세 조합주의와 실리적 조합주의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비판론자들로부터 자신을 옹호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민주노총 일각에서는 모세 조합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실리적 조합주의 내지 지그재그 조합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김유선, 1998a: 31). 여기에서 모세 노동조합주의는 영원한 반대자로서 전투적이고 단순한 사회주의를 선전·선동함으로써 노동자들을 광야로 이끈다면,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는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요구와 이익만을 중시한다. 따라서 김유선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세 노동조합주의가 바로 자신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계급적·정치적 노동운동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그는 노동조합의 대중조직 원리를 들어 계급적·정치적 노동운동이 대중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노동운동만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급적·정치적 노동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그런 용어 자체가 편향이라고 본다.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대중성과 계급성의 변증법적 통일과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을 목표로 한다. 계급적·정치적 노동운동은 노동운동의 기본 성격에서 한 측면만을 떼내어 노선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나는 그런 논의를 1980년대 후반에 경험했던 정치서클을 다시 만들자는 얘기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김유선 인터뷰, 『말』(1998년 11월호), 120쪽).

이상의 사회적 조합주의를 둘러싼 격렬했던 이 논쟁은 지상에서만 이루어졌으며 그나마도 지속되지 못하고 곧 정리되었다. 하지만 이 논쟁을 통해 상이한 이념과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논쟁이 수면 아래로 잠겼지만 각 그룹은 이 논쟁을 화두로 자신의 논거를 보다 정교화하고자 했고 그것은 제2라운드 논쟁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의 제2라운드는 제4기 민주노총 집행부 선거와 국민과 집행부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사회적 조합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보다 현실적이고 긴박한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제1라운드 노사정위 불참과 탈퇴상황에서 이론적 수준 또는 관점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제2라운드 논쟁은 사회적 조합주의를 실현하려는 세력의 집권으로 사회적 조합주의의 실천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노총 제4기 집행부는 집권하자마자 노사정위 참여 의도를 본격화하는 등 사회적 조합주의의 전략에 기반하여 노동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용상의 수준에서 볼 때 제2라운드 논쟁은 첫 번째 논쟁의 주체와 진영이 확대되고 논의 내용이 보다 풍부화되었다는 것 외에는 제1라운드 논쟁의 대립구도와 논쟁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라운드 논쟁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두 논쟁을 통해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이 갖는 의미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적 조합주의에 대한 두 대립적인 정파는 제4기 집행부 선거 이후 각각 따로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우선 제4기 집행부를 구성한 국민파는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2004. 5. 7). 토론회의 발제자로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초빙되었는데, 그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견해를 표명해 왔다.²⁹¹⁾ 이 자리에서도 그는 “사회적 대화는 유럽의 산업화 국가들에 있어 자본주의

291) “이병훈 교수의 입장은 노사정위는 노사정위이고 사회적 대화기구인데 노사정위에 너무 낙인을 찍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현장과 학계의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 약간의 개선-보완을 통해서 모양을 바꾸고 본래의 목적인 ‘노조의 실질적인 정책참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병훈 교수를 주말제자로 선정한 것은 민주노총 제4기 지도부 이수호 집행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다”(조문익, 2004: 25).

경제체제 내에 배태되어 있는 노동-자본 간의 계급적 대립을 탈피하여 계급이해의 타협과 조화를 구현해 나가는 사회정치적 관행”으로서(이병훈, 2004: 3)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현안들을 대처-해결하기 위해 노사정간의 이해조정 또는 계급적 타협을 도모하려는 ‘조직화된 자본주의(organized capitalism)’의 행위양식”(이병훈, 2004: 10)이라고 규정했다. 즉 그는 사회적 대화가 “유럽형 이해당사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모델”로서 “사민주의적 노동정치체제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았다(이병훈, 2004: 10). 이처럼 그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계급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사민주의의 실천양식임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그는 “구조적 여건의 척박성으로 인해 민주적 조합주의체제의 구축은 현실적으로 난망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당면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4·15 총선 이후의 정치지형을 고려할 때 노조의 형성전략으로서 사회적 대화의 활용가능성(또는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병훈, 2004: 11)이라고 권고했다. 왜냐하면 “현재 참여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정부가 남겨 놓은 쌍생아적인 이중 덫(dual trap), 즉 신자유주의적 시장규율과 사회분절성 고착 구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은 정부와 노동조합에게 공유될 수 있는 당면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통합적 경제-노동체제의 모색과 생산성연대를 이해타협지점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이병훈, 2004: 11)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는 “민노당의 의정 진출이라는 변화된 정치지형 속에서 국가정치와 노동정치 간에 정책교섭의 연계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조의 사회대화 전략이 적극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병훈, 2004: 11).

한편, 이병훈은 노사정위에 대한 “현장 노동의 거부정서”가 “과잉 조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노사정위에 대한 현장 노동의 비판적 낙인찍기가 엄존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에서의 “합의이행 담보장치의 강화, 참가 주체의 대표성 확대, 기구의 조직·재정적 독립성 확보, 의사결정절차의 개선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이 같은 제약요인을 제거하면 “실질적인 정책참가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이병훈, 2004: 12).

이 토론회의 논평자들도 노중기를 제외하면 노사정위 참여 입장을 피력했는데, 윤진호는 “한국의 노사정위원회가 서구의 사회적 합의기구에 비해 여러 모로 취약성²⁹²⁾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상당 정도 이데올로기적 선입견과 과장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그는 노사정위 참여문제가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의 ‘리트머스 시험지’로서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윤진호, 2004: 35). 즉 그는 “이념을 빼고 본 사회적 합의주의는 그 자체로서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사회적 합의주의가 과연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팔아먹는 노조 지도자들의 배반 행위’인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개입하여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참가 형태’인지의 여부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운영의 결과로서 판단될 일이지 사전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는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자본, 노동운동의 성격, 구조, 세력,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노사정위의 선협적 악의성을 부정했다(윤진호, 2004: 33). 윤진호는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의 과실에 대해 “무임승차”(“과실은 따먹고 비판은 자유롭게 하고”)했던 전력을 인정하고 책임성 있는 노동운동이 될 것을 촉구했다(윤진호, 2004: 38).

한편 이주호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부의 의도와 우려, 위험성에 대해 많은 부분 동의하면서도 현장에서 더 많은 조합원들이 거부보다는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왜 일까?”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해답

292) 윤진호는 한국의 노사정위원회의 취약성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1) 일반적으로 사회적 합의주의의 성공조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①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정당의 존재 ② 강력한 산별노조 ③ 국제적 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 국가 정책이 독립되어 있을 것 등의 조건이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노사관계의 주체들인 국가(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추구), 자본(전근대적이고 노동배제적이며 재벌주도의 노무관리정책), 노동조합(낮은 조직률, 기업별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양분, 강력한 이념적 경향, 계파의 난립 등)의 구조와 전략이 모두 사회적 합의주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3) 과거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시도들(노개위, 제1기 노사정위원회 등)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조합원 대중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는 점”(윤진호, 2004: 35).

으로 “교섭과 투쟁의 병행 없는 장외투쟁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주5일제 법제화투쟁, 노사관계 로드맵 대응,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사회적 보호, 공장 해외이전, 제조업 공동화 문제, 금융 구조조정 등 각종 사회적 의제들이 노동자의 삶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노사정위원회 불참 이외에 정부 정책과 법제도 개선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못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그는 “참여에 따른 우려와 위험성도 있지만 다른 한편 우리들의 주체역량과 대응력에 따라 충분히 활용하고 주도하면서 교섭 국면을 끌고 나갈 자신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거듭해서 그는 “정부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현장성)을 거세하기 위한 노동통제 전략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관철 통로로 노사정위 문제를 접근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거부한다는 것은 또 다른 패배주의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노사정간의 힘의 각축 속에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주호, 2004: 45).

이에 대항해서 좌파들은 또 다른 토론회를 개최했는데²⁹³, “노무현 정권의 사회적 합의 공세와 노동운동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좌파 단체들의 공동토론회였다. 그동안 좌파 그룹의 입장을 대변해 온 김세균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노중기 한신대 교수와 조문익 민주노총 전북본부 부본부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논쟁은 크게 세 가지 영역, 즉 사회적 합의주의의 본질, 노사정위원회 비판, 그리고 민주노총 제4기 집행부 비판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노중기는 우선 노사정위 참여의 관점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노사정위 참여를 단순히 “실익”의 문제나 “정책참가”의 문제로 협소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²⁹⁴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결합”되어 있

293) 이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비판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의 공동토론회(2004. 7. 3)로서, 경기현장연대, 일하는 사람들, 한노정연, 문화연대 등 18개 단체가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230여 명의 활동가가 참석, 열띤 토론을 전개함으로써 사안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김해숙, 2004).

294)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불참 결과, 개입의 여지가 없어 실익에서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서 ‘실익’, ‘참가’의 관점은 그야말로 노사 협조주의와 경제주의, 실리주의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이는 불참 상황에서도 노동정책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실익의 정도를 결정하는 등 정책적 영향력 행사의 주체는 민주노총이었던 현실

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노사정위의 문제는 단순한 선호나 손익계산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사회분절성 고착구조’, ‘사회해체’를 ‘지양하는 사회통합의 기구’인지, ‘신자유주의 수단, 실행 기구’인지는 이론·실천적으로 엄격히 따져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노중기, 2004: 4~5). 그는 사회적 대화전략은 노조에게 필요하나 “문제는 참가의 수준과 내용, 그리고 방식은 무엇인가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노중기, 2004: 6)이라면서 그 조건을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합의 실험은 내외의 독점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란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노중기, 2004: 11) “노무현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한국에 합의의 구조적 조건이 부재하다”(노중기, 2004: 12)고 결론지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동의할 때만 ‘사회적 합의’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신자유주의 대동맹 아래에서는 진정하게 “합의할 내용(지점)이 없다”(노중기, 2004: 12)고 결론을 내렸다. 더 나아가 그는 전략적 선택의 입장에서 볼 때도 노사정위 참여의 6년은 한국적 토양에서 “(참가)전략 선택의 선택지를 매우 협소하게 하였다”는 것을 확증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노중기, 2004: 14).

결국 그는 사이비합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노사정위 참여는 노동의 위기로 연결되었고 향후에도 연결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물론 1987년 체제하의 노동운동전략, 전투적 대중투쟁전략의 합리적 핵심은 보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변화된 노동체제의 구조적 조건에 부응하고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계급적 연대전략, 계급적 단결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보다 새로운 발상, 열린 토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노중기, 2004: 16).

토론회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문익은 노중기와 같은 시각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은 ‘개혁담론’을 무기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이며, 노사정합의체제 구상은 신자유주의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

을 전혀 도외시하는 사고이다(노중기, 2004: 14).

의 핵심과제 중 하나”(조문익, 2004: 22~23)로 보고 있다. 그는 현재의 노동운동의 위기가 “노동계급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이며 그러므로 근본적인 위기”라고 주장했다(조문익, 2004: 34).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이 경험한 지역 노사정협의회²⁹⁵⁾의 현실을 통해 노사정협의체제의 본질과 민주노총 제4기의 중층적 교섭구조의 한계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는 전북노사정협의회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다.

전북노사정협의회는 2001년 7월 구성회의, 12월 다음해 전망회의, 2002년 5월 월드컵관련 회의, 10월 노사정위원장과의 조찬, 2003년 4월 21세기 신노사문화 정착 회의와 1차례의 오찬, 그리고 2004년 3월의 일 자리 창출과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정 사회협약을 위한 회의만이 열렸다.

295) 전라북도는 2001년 4월 20일, 전북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2812호)를 제정하고 그 해 7월 2일, 전북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함. 전북노사정협의회의 사업목적은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및 전라북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정 협력에 관한 증진방안을 강구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위원은 모두 1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연직 위원장은 당시 유종근 도지사가 맡았고, 근로자대표 1명(한국노총의장), 사용자대표 2명(전주상의회장, 전북경협 회장), 공익대표 5명(변호사 J모씨, 원대교수 K모씨, 전북여성노동자회 P모 회장, 여성경제인협의회 N모 회장, 해성공인노무사 L모씨**), 그리고 도의원 1명, 행정 2명(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도 경제통상국장)등으로 구성되었음. 임기는 2년(조문익, 2004: 29).

* 대부분의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04년 현재 전라북도는 강현욱 도지사가, 전주시는 김완주 시장이 각각 전북노사정협의회, 전주시노사정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행정직이 배속되어 실무를 모두 맡고 있다.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협의할 수 있는 권한 이외에는 없고 의제의 조정권 자체가 모두 자치단체 행정담당자에게 있는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어떤 기능을 발휘할지는 보나마나 뻔한 일이다.

** L 노무사(여)는 수억 원의 채당금 횡령사건으로 전주지검에서 2차례에 걸쳐 수사하여 본인 및 직원(남편) 등이 유죄판결이 나왔고 양벌조항에 근거하여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노동부에 진정하여 사상 최초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자격정지 3년의 처벌을 받았다. 2004년 현재 2003년 사법처리로 인하여 다른 노무사로 교체된 상태이며, 이런 인물이 공익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L 노무사는 매우 소규모 노조인 공공연맹 자동차학원노조 동아자동차학원지부 등의 노조인정과 단협투쟁 과정에서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수준 이하의 단협안을 제출하는 등 지역에서 노동탄압 노무사로, 비리노무사로 악명을 떨쳤다.

대부분이 자치단체장의 치적과 홍보와 관련된 것으로 회의다운 회의는 없고 행정의 들러리만 서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회의가 끝난 이후나 전에 보도자료, 또는 기자회견이 따라다니는 것은 필수적이다. 짧은 회의가 끝나면 함께 회의시간 이상의 점심나누기가 이어진다(조문익, 2004: 29).²⁹⁶⁾

조문익은 전북 지역에서 노사정협의체제가 움직여 온 경과를 보면 노사정 협의체제는 적어도 지역 차원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명분을 만들어 주는 들러리 역할과 지역정치인들의 장식품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내가 생각하기에 ‘중층적 교섭구조’ 운운하시는 분들은 지방에서의 노사정협의체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실제 현실을 잘 모르실 것 같다. 만약 현실을 알고도 그런 주장을 하신 것이라면 대단히 섭섭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한다(조문익, 2004).

결국 그에 의하면 현재 민주노조운동진영에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체제”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위한 공동의 실천 조직화와 계급형성’을 이루어 내는 것”에 있다. 즉

296) 2001년 12월 19일,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2001년 노사관계 평가 및 내년 전망, 당면 노사문제 협의 등을 의안으로 하여 1시간 가량 회의를 하고 점심식사를 나누었으며, 다음해 2002년 5월 24일,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한 노사화합방안 및 노동단체 지원 협의를 안건으로 1시간 가량 회의를 하고 점심을 나누었음. 그 뒤 2002년 10월 9일, 신홍 노사정위원장과의 조찬 자리를 갖고 이를 전북지역노사정협의회 정책간담회로 처리함. 다음해인 2003년 4월 8일에 ‘21세기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협의회’가 열려 진라북도가 모범적인 노사화합을 이루어 달라는 강현욱 도지사의 주문을 들은 뒤 1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하고 점심을 나누었고, 4월 14일, 전북노사정협의회 위원 오찬을 다시 나누었음. 2004년 3월 24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북노사정협의회’가 열렸는데 강현욱 도지사가 “경제가 어렵다, 사회협약안이 당초 계획대로 통과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한 가운데, 중앙노사정위원회 조경호 운영국장이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취지를 설명하고 “생활의 근거지이자 고용의 원천인 지역에서 사회협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만들기 노사정이 함께 합니다>라는 소책자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1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원안대로 “일자리 창출과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정사회협약”이 통과되었고 그 후 점심을 나누었음(조문익, 2004. 7).

“노동운동-노조운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동계급 내부의 전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 내외부에서 노사정체제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국면을 돌파하려는 비상한 각오와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조문익, 2004: 37).

이 토론회 참여자들은 이 밖에도 이수호 집행부의 노사정위 참여에 대한 추진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의 추진 전략에 대한 준비 없이 서두르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논의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내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항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까지 포괄하는 ‘경제사회위원회’ 등의 제기는 한국사회의 주도세력이 누구인가와 함께 실제 노동자 서민 대중의 역할과 위상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3개월 동안의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고 하는데, 대공장 노조는 대부분 6월 초부터 임단협 교섭에 들어간 상태고, 교섭이 길어질 경우 7월이나 8월경에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노재열, 『노동과 세계』, 293호, 2004. 6. 10).

이처럼 이들은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의 추진이 현장의 토론과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즉 이들은 “민주노총이 밝힌 대로라면 지금은 대중적 토론의 시기”인데 “현실에서는 현장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실제 각 단위의 토론회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조문익, 2004: 26). 이상의 논의에 기반하여 이들은 결국 민주노총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위기의 핵심에는 민주노총 제4기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념과 정체성의 위기라는 것이었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기존 노동자운동의 통합성을 상실한 정당성의 위기”와 “노동자 내부의 정규직/비정규직, 여성/남성, 이주/내국인의 분할·위계화로 인한 대표성의 위기”로 압축될 수 있고, 더욱 근본적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좌표(이념)적 상실에 기인한다(이종훈, 2004. 7: 55~56).

사회적 합의주의의 멧에 걸린 노동조합운동은 여전히 사회적 협약을

자신의 전략으로 고수하고 있다. 특히 사민당의 급격한 우경화 이후, 노동조합은 사민당·노동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노동조합 관료적 지도부의 혼돈은 노동자계급 전체를 위기의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원영수, 『기관지 노힘』, 제51호, 2004. 3. 30).

이상에서 보듯이 두 정파는 각각의 토론회를 통해 노사정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피력했다. 이 토론들은 분명 앞선 노사정위 참여문제를 보다 폭넓게 조명하고 진전시켰다는 데서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입장이 사회주의와 사민주의를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이 토론회는 단순히 학술적 차원의 토론이 아니라 정파의 입장을 이론화하고 실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양 이견이 한 군데 모여서 논쟁하고 경쟁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공간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그들만의 ‘의식’을 위한 통과의례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상의 두 논쟁간, 즉 1998년 논쟁과 2004년 논쟁 간에는 6년여의 시차가 있다. 그 사이에 논쟁은 두 가지 의미에서 확장되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우선, 각자가 서 있는 이념적 지평이 보다 선명해졌다. 즉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진영이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진영으로 서서히, 하지만 뚜렷하게 분화되었다. 즉 이 논쟁은 각 행위자들이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사회적 조합주의를 사민주의 범주에서 규정하는데 양자 모두는 주저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에서 사회적 조합주의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데 본인은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으로 대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현 시기에 사회주의를 목표로 내걸어야 한다는 얘기’인지 반문하고 싶다. 과거 본인은 남아공 코사투 정책연구소장인 제레미 바스킨에게 “당신들이 얘기하는 사회주의란 무엇이야?”고 물은 적이 있다. 당시 제레미는 “사회주의를 제도로서 존재했던 현실 사회주의로 고정화시켜 바라보는 것은 비변증법적이다. 지금보다 대중의 상태를 한걸음이라도 더 진전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답변했다. 본인은 현 시기 대중의

상태를 한 걸음이라도 더 진전시키는 것은 바로 사회개혁이라고 생각한다(김유선, 1998b).

이상의 언급에서 보듯이 김유선은 1라운드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에서 자신이 사민주의자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주의와 친화성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다만 그는 현 시점에서 사회주의를 목표로 내걸지 않는 이유를 전략·전술의 차원에서 유효하지도 않고 대중조직이라는 조직 위상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좌파들도 이 당시에 김유선과 국민파를 개량주의자로 비판하고는 있지만 명시적으로 사민주의자로 규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2라운드에 이르러 양자는 국민파 노선을 사민주의자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²⁹⁷⁾ 이처럼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은 결국 민주노총의 전략노선을 둘러싸고 상이한 입장을 가진 세력들간의 노선 분화를 촉발하고 공식화한 것”이었다(조효래, 2001: 658).

둘째, 1998년도의 논쟁이 개인적 차원²⁹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2004

297) 민주노총(제4기) 지도부는 왜 이토록 양보와 희생을 제기하며 ‘변화’를 강변하고 있는가? 이는 현 지도부에게 ‘사회적 합의주의체제’를 정착시켜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국가’ 속에 노동자들을 가둔다. 국가를 위해 노동도, 자본도 서로 양보하는 것, 그리고 이를 중재하는 국가를 통해 국가의 성격을 최대한 중립화시킬 수 있다는 발상, 그것은 ‘개량을 통한 사회의 점진적 발전 가능성’이란 낡은 사민주의 노선의 구체적 표현이다(선지현, 『기관지 노힘』, 제51호, 2004. 3. 30).

298) 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논쟁은 논자들이 특정 연구소를 기반으로 하고 했다는 점에서 연구소 차원의 논쟁으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김유선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며 이 연구소의 윤효원(『COSATU의 ‘사회적 조합주의’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비판한다』, 『노동사회』, 1998. 11)도 같은 입장에 있다. 반면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의 김세균, 김영수, 박성인 등은 노동운동의 계급적·정치적 발전을 가로막는 자본 종속적 노동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유선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관지인 『현장에서 미래를』을 통해 김유선과 영남노동문제연구소 등 사회적 조합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논쟁을 계속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안철홍, 1998: 122). 이처럼 이 논쟁은 “형식상 민주노총 밖에 있는 개인이나 연구소 간의 논쟁으로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사연이 얽혀 있다. 김유선은 민주노총 제1기 집행부의 주요 정책을 만든 핵심 간부였으며,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는 제1기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들어선 제2기 집행부의 출범 과정에 상당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안철홍, 1998: 122~123).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논쟁은

년의 논쟁은 조직적 차원으로 논쟁지형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확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제1라운드 논쟁의 촉발자였던 김유선은 자신의 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한 이후 15년이 지났다. 이번에 처음으로 휴식기를 가지면서 지금까지 노동운동의 발자취와 성과, 한계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아직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고 최근 노동운동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개인적으로 정리했을 뿐이다. 그런데 전노협과 민주노총에서 7, 8년 근무하다 보니까 혼자 판단해서 쓴 글인데도 주변에 부담이 되는 것 같다(김유선 인터뷰, 『말』(1998년 11월호), 120쪽).

하지만 제1라운드 논쟁이 제1기 민주노총 집행부와 제2기 민주노총 집행부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라운드 논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특히 현장파로 범주화되는 좌파들은 제2기 민주노총 집행부를 장악하여 제1기 집행부의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부정함으로써 양자간의 대립전선은 보다 명확하게 형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제2기 좌파 집행부가 현실에 밀려 총파업을 철회하고 노사정위에 참여함으로써 논쟁은 잠복기에 들어섰다. 결국 제2라운드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은 제4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국민파와 현장파라는 양대 조직에 의한 조직적 차원의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을 거치면서 양자간의 입장 차이와 상이한 정체성이 보다 명확해졌다. 또한 제1기와 제4기 국민파 집행부는 제2, 3기 집행부와 성격을 달리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이념에 근거하여 구체적 실천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다음에서 살펴볼 민주노총 선거 과정에서의 논쟁은 이제 민주노총 내 이념적 정파들이 보다 명확하게 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립적인 지점도 분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조직간의 보다 깊은 논쟁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제2라운드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으로 나타났다.

다. 민주노총 선거 과정에서의 논쟁

민주노총에는 현재 국민과, 현장과, 중앙과라는 3개의 정파가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정파들은 1980년대 운동노선, 즉 NL과 PD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국민과가 NL의 전통을 잇고 있다면 현장과와 중앙과는 PD의 입장을 자신의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정파의 분화는 이념뿐만 아니라 인맥, 조직, 정서 등 복합적인 변수에 기반하고 있고 개별 정파와 개인들에게 NL과 PD의 구분도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NL과 국민과, PD와 나머지 세력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국민과, 중앙과의 정파적 정체성은 민주노총 제4기까지의 집행부를 통틀어 볼 때 분명한 자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파의 기원과 입장을 우선 살펴보고 나서 선거 과정에서의 차이를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로, 선거는 각 세력이 자신들의 이념적·정책적 내용과 선거전술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어 대중들로부터 검증 받는 가장 격렬한 공적인 전투장이라는 점에서 각 세력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논쟁은 가장 최신의 논쟁 중의 하나이고 3개의 정파가 자기 색깔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1) 정파의 기원과 입장

민주노총 내의 정파는 국민과, 현장과, 그리고 중앙과라는 세 가지 그룹으로 대별된다. 국민과라는 정파명은 민주노총 제1기 집행부가 표방한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리고 중앙과는 그동안 중앙지도부를 구성해 왔고 스스로가 자칭 개량주의와 맹동주의의 중간적 노선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한편, 현장과는 ‘현장의 힘! 혁신의 깃발! 투쟁하는 금속산업노조!’의 제2기 금속산업연맹 선거의 캐치프레이즈에서 보듯이 현장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그 명칭의 기원이 있다.²⁹⁹⁾ 이 구분선은 전통적인 운동노선, 즉

299) 우리가 소위 현장과라고 불리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금속산업연맹 제2대 위원장 선거에서 중앙과 권력하에서 ‘서기’(핵심활동가 또는 지도부를 지원하고 실

NL과 PD와 일정 정도 연관이 있는데, 국민파가 NL노선을 따르는 노선이 있다면 좌파블록, 즉 중앙파와 현장파는 PD노선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세 정파는 각각 현장조직³⁰⁰⁾을 갖고 있으며 단위사업장 또는 산별·연맹별 선거에서 경쟁을 했는데, 그동안 잠재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다가 명확한 형태로 등장한 것은 1999년 2월에 이루어진 제2대 금속산업연맹 집행부 선거³⁰¹⁾에서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998년 초 금속에 속했던 민주진영 내 조직은 조선과 기계금속을 중심으로 한 민주금속연맹, 완성차 6사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자동차연맹, 현대그룹의 현충련 등 3개 조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금속산업의 대통합이 추진되면서 금속산업연맹으로 통합하게 되었는데, 제1대 단병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3개 조직이 골고루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을 나누어 갖는 연합집행부로 있다가 제2대 위원장 선거에서 지금의 3개 세력이 각각 후보를 내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부터 분명하고 공공연한 3개 분파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인터뷰 C, 2004. 2. 4).

무적으로 뒤받침하는 역할을 맡았던 상근자(연구자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장조직의 힘을 모아서 후보를 내자”고 결의하면서 그때부터 현장파로 구분이 되게 된다. 운동 내의 세력으로는 그때부터 나오게 된 것이다(인터뷰 C, 2004. 2. 4).

- 300) 현장조직은 노조 집행부와 구별된다. 이들은 이념서를 또는 독자적인 소단위 실천조직으로 활동하며, 선거 시기에는 단위노조의 노조 선거에서 집행부 후보를 출마시키는 기본 단위가 되기도 한다.
- 301) 17만 5천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최대 산별연맹인 금속산업연맹의 조직화 과정은 민주노총 건설을 앞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민주노총 건설을 앞두고 전체 금속을 하나의 단위로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업종별 단위를 통해 가입하고 이후 산별노조 건설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어쨌든 민주노총 건설 당시는 금속산업이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충련이라는 3개의 조직으로 분립되어 있었다. 민주금속연맹은 자동차 등 전략사업장 노조의 미가입, 자동차연맹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정공의 미가입, 현충련은 재벌그룹노조의 연대체라는 점과 여전히 울산을 축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점 등으로 투쟁과 조직 사업을 완결된 형태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했고, 이러한 어려움은 각 조직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상호보완성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즉 조직통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1997년 상반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3조직 통합이 권고사항으로 채택되면서 통합논의는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1998년 2월 금속산업연맹이 출범하게 되었다.

세 정파의 분리는 이후 모든 선거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금속산업연맹 집행부 선거에는 세 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이들은 각각 상이한 운동노선과 입장을 대표했다. 선거의 주요 쟁점은 산별 중앙교섭에 대한 평가, 노사정위원회에의 참여와 노사정 협상, 정리해고 철폐투쟁의 의미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1998년 동안 금속산업연맹의 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존재했고, 동시에 민주노총 중심의 총 노동전선의 구축과 밑으로부터의 참여를 확대하는 조직혁신을 요구하면서 산별 노조에 대한 개량적 관점을 비판하는 좌파의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조효래, 2001: 660~662 참조).

국민파인 기호 1번 조준호 후보와 중앙파의 기호 2번 문성현 후보는 모두 금속산업연맹 제1기 임원이었지만 각각 금속산업연맹 통합 이전의 자동차연맹과 민주금속의 조직을 대표하여 경쟁하였다. 반면 현장파인 기호 3번인 조돈희 후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현장조직에서 추대한 후보로서 기존의 금속산업연맹 지도부에 대한 좌파의 비판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다.³⁰²⁾ 정기대의원대회(1999. 2. 6)에서는 대의원 288명 중 278명이 참석하여 집행부를 선출했다. 이 중 275명이 1차 투표에 참여해 기호 1번 조준호 후보가 72표(26.18%), 기호 2번 문성현 후보가 120표(43.64%), 기호 3번 조돈희 후보가 81표(29.45%), 무효 1%로 과반수 득표자를 내지 못했다. 2차 투표에서 271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가해 기호 2번이 144표(53.13%), 기호 3번이 124표(45.75%)를 획득함으로써 기호 2번 문성현 위원장, 이홍우 수석부위원장, 전재환 사무처장 후보가 당선되었다(매일노동뉴스, 1999. 2. 9).

이 선거에서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 지도부에 대한 좌파들의 비판과 좌파 활동가들이 제기한 조직혁신에 대한 주장은 이후 민주노총의 조직혁신과 새로운 전략노선에 대한 화두를 제공했다. 특히 금속산업연맹 선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현장조직대표자회 등의 현장조직들의 약진이

302) 출마한 각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다음과 같다: 기호 1번(조준호,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금속산업연맹, 현장의 힘으로 바꿔냅시다! 기호 2번(문성현,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21세기를 열자! 기호 3번(조돈희, 민주노총 전혜투 위원장): 현장의 힘! 혁신의 깃발! 투쟁하는 금속산업연맹!

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 선거를 통해 문제제기 세력에서 책임질 수 있는 주류세력으로 급부상했다.

이제 세 정파의 중앙조직³⁰³⁾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국민과 경우 그 형성은 보다 명확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 국민과의 기원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상이한 전술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과는 대통령 선거 당시 비판적 지지론과 후보단일화론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후 민주연합당론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견지해 나갔고 이 흐름은 노동운동 내에서 국민과 그룹을 형성했다. 이처럼 국민과는 멀게는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비판적 지지론 또는 후보단일화론의 입장을 견지했고, 가깝게는 민중정당 건설 논쟁에서 민주연합당론을 주장했던 NL적 경향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전노협의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대신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주창했으며, 민주노총 제1기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뚜렷한 흐름으로 나타났다.

사회개혁투쟁이 이념적이라기보다는 조직의 요구나 투쟁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민주노총 출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슬로건이 나왔는데, 그 배경은 제1기 대의원대회에서 사업방침에 2개의 슬로건이 나왔는데, 외부적으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노총이었고, 내부에 조합원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민주노총 등 2개였다. 어느 날 보니 삼성동 사무실 밖에 국민과 함께하는 슬로건을 내걸게 되었다. 그 때는 봉고차고 튀고 스티커 등이 다 붙었었다. 그 당시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는 (일부 세력에 대해) 국민과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됐다(인터뷰 D, 2004. 2. 25).

이처럼 국민과는 대중노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노동운동 내에서 온건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스스로는 가장 대중적인 원칙에 입각하며, 투쟁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

303) 각 정파는 제조업 대기업 노조나 대형 공공부문 노조에 각각의 자칭 ‘현장조직’과 직간접적인 연계관계를 갖고 있다. 현장조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로 현장파가 적극 조직하였으나, 이후 국민과도 유사한 현장조직을 꾸렸다. 각 기업 단위 현장조직은 전국적인 연계를 통해 느슨한 전국단위 조직을 꾸리고 있다. 대표적인 현장조직으로는 국민과-민주노동자전국회의, 현장파-현장조직대표자회의를 들 수 있으며, 중앙과는 이렇다 할 현장조직을 갖고 있지 않다.

다. 국민과의 정책기조는 민주노총 제1기 집행부의 사업기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제1기 집행부는 사회개혁투쟁노선, 1996~97년 노동법총과업 시기에 보여준 유연한 투쟁전술 기조, 단위현장조직의 실정에 근거한 사업 방침, 대정부 협의·협상에 적극적인 태도, 통일운동의 중요성 강조, 한국노총과 연대 등을 강조한다.

대체적으로 국민과는 노동운동 내에서 가장 폭넓은 조직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금속과 공공, 그리고 전교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맹 지도부를 포괄하고 있다. 최근 노사관계의 쟁점을 형성한 철도, 화물, 병원 등의 주요 지도부가 모두 국민과로 분류되고 있다. 국민과는 제조업 대공장 현장조직 중 하나인 ‘민주노동자전국회의’를 포괄하고 있는데, 민주노동자전국회의는 내부에 상당한 강경그룹(NL이념서클적 경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교섭·협상에 주력하는 국민과 지도부에 대해 불신을 표방하기도 한다.

한편, 국민과는 정치적으로는 민주노동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 내 온건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 지형에 있어서 시민운동과 의회주의로의 이동이라는 특징을 지닌 ‘사회적 조합주의’(박영균, 2003: 100)의 경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과는 계급이기주의를 넘어선 ‘사회세력화’ 또는 ‘사회적 합의’라는 공통의 지점을 만들어 내면서 진보정당 건설을 통한 의회진출이라는 ‘정치세력화’의 관점에서 탈계급적 연합정당, 또는 중도적 국민통합 정당화의 길을 모색하고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차선을 추구하며 전투적인 노동운동을 배격하고 노사정위 참가를 옹호하고 정책대안제시와 시민들의 공감을 받는 사회개혁투쟁을 주장한다(박영균, 2003: 100~101).

국민과는 다른 정파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가장 일반적인 비판은 실리주의자들 또는 ‘친노무현 그룹’, ‘민주연합론’이다. 이에 대해 국민과는 현장과의 좌익행동주의, 중앙과의 기회주의(말로는 투쟁, 실제로는 거둬들인 타협)를 경계하고, 교섭과 투쟁의 통일을 이루는 대중운동의 기본을 구현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국민과와 이념적·실천적 측면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좌파블록(현장파와 중앙파)은 대체로 PD의 노선에 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하여 노동자계급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제1기 민주노총 집행부에 반발하여 제2~3기 민주노총 집행부에서 ‘개량주의적이고 타협적인’ 국민과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좌파연합(중앙파-현장파 연합)’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민주노총 집행부 구성 및 사업 기조에 관철되었다.

현장파의 경우 스스로를 “노동계급의 중심성과 반의회주의적 경향”을 가지는 있고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과 노동자계급 정치”의 주창세력”으로 규정한다. 즉 현장파는 “대중적인 현장 투쟁에 근거한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생존권의 확보 투쟁, 민주주의의 확대·심화 및 사회화를 위한 투쟁의 결합을 강조하면서 사회변혁과 변혁적인 노동자계급의 정치조직 건설을 통한 ‘노동운동의 계급적·정치적 발전’을 주장”한다(박영균, 2003: 100~101). 이러한 관점에서 현장파는 이념적으로 구좌파(공산주의노선), 신좌파, 무정부주의 등의 복합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조합주의의 외형을 담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신자유주의 관철을 위한 자본-권력의 도구’라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으로부터 권력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장 권력을 강조한다.³⁰⁴⁾ 이들 중의 일부가 민주노동당에 참여해서 좌파블록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민주노동당을 개량화된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장파는 IMF 위기 상황에서 제1기 지도부의 사회협약에 대한 참여를 비판하면서 ‘자본과 권력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을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제2기 임원선거(1998. 3)에서 집권했지만 현재에는 노조 집행부로부터

304) (연구자: 현장에 근거하지 않은 운동세력이라고 할 때, 현장이란 무엇인가?) 포괄적인 표현으로 하면 바닥의 강제력을 받느냐 아니냐에 있다고 본다. (현장에 근거하지 않은 세력이란) 책 몇 권 보고 학생운동 출신의 때 있는 그런 정치운동 조직인데, 그런 세력은 다 날아간다. 그래서 “무식해야 오래 남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웃음) 그래서 존재적 규정력인데, 현장에 오래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의 관계에서 현장과의 긴장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는 것이다(인터뷰 C, 2004. 2. 4).

터 밀려나 소규모 이념서클(메이데이포럼)이나 현장조직(‘노동자의 힘’ 등), 외곽연구그룹(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기연, 사회진보연대 등) 등을 통해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금속, 공공, 전교조, 화학 등 주요 연맹에서 일정한 세력(10~30%)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좌파블록의 주요한 또 다른 정파인 중앙파는 자신들을 국민파의 개량주의와 현장파의 맹동주의를 극복하려는 중도노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교섭과 투쟁의 병행을 강조한다. 중앙파는 전노협 시기부터 오랫동안 민주노동운동의 중앙집행부를 담당해 왔다. 그리고 금속, 공공, 전교조 등 민주노총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3연맹의 현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세력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데, 과거(1990년대 후반까지) 대기업 제조업 노조 집행부의 대부분을 포괄하였으나, 민간 대기업노조의 무력화(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 경향 때문에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앙파는 1990년대 초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민주노동당의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현재 민주노동당 내에 주요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파는 이념적인 실체가 의심받고 있으며 투쟁과 교섭의 원칙에 입각한 민주노총 사업 집행도 의심받고 있다.

이상의 정파 분석은 상당부분 단순화한 것이며, 실제로는 민주노총의 간부나 대의원을 위의 분석틀에 담을 수 없다. 각 계파의 포괄세력 범위가 겹치고, 현장 간부들의 경우 다양한 주장에 모두 동의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 정파간의 구분과 세력관계는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좌파블록간의 차이는 더욱 불명확해 보인다. 이것은 많은 경우 이념적 구분선이 결정적이라기보다는 조직, 인맥, 정세에 따른 정책에 따라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논쟁 1: 좌파블록 내 논쟁과 수렴³⁰⁵⁾

여기에서 말하는 범좌파연대 또는 좌파블록은 스스로 밝혔듯이 주체뿐만 아니라 개념도 정형화하기 어렵다. 제4기 집행부 선거 과정에서 범

305) 이 부분은 범좌파 내부 문건(2003)에 의존하고 있다.

좌파의 논의 주체는 민주노총 제3기 집행부 구성 이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3개의 논의 단위, 즉 중앙파로 분류되는 평등회의, 노동자 힘 등 노동조합 내 좌파와 메이데이포럼을 통해 활동해 온 현장파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범좌파연대 시도는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모색되어 왔다. 즉 노사협조주의와 투항주의에 대한 공동대응과 반정부·반자본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속에서 최근 몇 년간 범좌파의 연대가 진전되었다. 민주노총 제3기 집행부 구성 이후 민주노조운동 상층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현장파와 중앙파의 ‘제한적’ 연대를 통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저지투쟁,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투쟁, 최근의 대정부 총파업 투쟁 등을 전개해 왔다³⁰⁶⁾.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좌파블록은 민주노총 제4기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연대를 통한 집권을 모색하였다. 이것은 좌파블록이 당시 처해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는데, 좌파 각각은 단독으로 국민파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힘, 평등회의(중앙파), 메이데이포럼 등 3단위는 제4기 민주노총 선거 대응을 위해 소위 말하는 범좌파 연합을 진행하였다. 우리가 선거 연합을 추진하게 된 일차적 이유는 우리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힘이 독자적으로 선거대응을 할 경우 힘 있는 민주노총을 건설하기는 요원하다는 뼈아픈 현실 판단이 있었다(함소희, 『기관지 노힘』, 제48호, 2004. 2. 10).

이들이 좌파블록으로 뭉친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는 국민파의 노선에 대한 비판적 인식 때문이었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노사협조주의가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선동하여 총 노동전선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

306) 그러나 이 연대는 민주노총 집행부를 중심으로 일부 연맹 상층에 국한된 것이었고 운동방향, 실천과제, 실천방식 등에 대한 연대로 진전되지 못하여 그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처럼 범좌파의 제한적 상층연대는 연맹, 지역, 현장까지 확대되지 못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분열과 대립은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양자간의 핵심적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

왔다. 이들은 노사협조주의를 “신자유주의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노동운동 내부에서는 정리해고 잠정합의로 대표되는 노사협조주의, 투항주의 준동”으로 규정했다. 즉 좌파블록은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 투쟁전선과 반노사협조주의의 투쟁전선의 강화를 위해 범좌파연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연합의 원칙은 최소 강령³⁰⁷⁾으로 잡았는데, 그것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태도의 문제”였다.

노무현 정권을 반노동자적 정권이라고 규정하는지, 대화와 타협의 세력으로 규정하는지에 대한 태도 문제로 연합의 대상을 고려하였고, 그 결과 위의 3단위의 연합이 성사되었다. 노무현 정권의 대노동정책은 노사정위를 축으로 해서 타협적 노사관계 구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노사정위를 주축으로 하는 자본의 미끼는 노동운동에 대한 자본의 재편기획이며, 노동운동을 노동조합주의로 한정하면서, 체제내화시켜 자본의 하위파트너로 삼겠다는 야심 찬 기획의 하나이다. 이러하기에 이번 민주노총 선거는 노동진영만이 아닌 자본측에서도 중요한 결절점이었으며, 노동운동의 변혁성을 거세하려는 노무현 정권과의 대립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함소희, 『기관지 노힘』, 제48호, 2004. 2. 10).

특히, 이들은 민주노총 제4기 집행부 선거를 지금까지의 운동을 평가하고 향후 노동운동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정치투쟁의 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민주노총 제4기 집행부 선거를 중심으로 한 범좌파연대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좌파연대가 단순히 ‘후보조정’을 위한 연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2003년 7월경에 선거연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12월 초에 3명씩

307) 좌파블록 내에서는 다음의 언급에서 보듯이 이념적 거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최소강령 수준의 선거연합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범좌파 연합 논의 과정에서 선거투쟁 내내 몸통은 없고 머리만의 범좌파 연합에 대해 썩 내키지는 않았다. “선거 승리라는 목적으로 범좌파라는 틀 속에 묶여 있는 서로 너무도 다른 이념과 노선들의 연대가 상충을 넘어 현장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판단과 함께, 현장에서는 소위 중앙파라 칭해지는 쪽의 노사협조주의에 대한 ‘투항과 변절’이 더 현실적 문제이고 투쟁의 대상이기 때문이었다(신태호, 『기관지 노힘』, 제48호, 2004. 2. 10).

논의 단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좌파연대가 논의되었다. 논의 내용은 민주노총 제4기 집행부 구성과 향후 범좌파 연대강화 방안이었다. 구체적으로 노동운동의 노선, 정치세력화, 투쟁·조직과제 등의 영역에서 각 정파간의 상호 차이점과 동일성을 확인했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12월 중순경에 범좌파 후보추대대회 및 선대본이 출범하였다.

연대를 위한 토론은 우선 이념적 지향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되었다. 그 결과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노동운동이 이념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타파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치점을 찾았다. 하지만 평등회의와 기타 조직간에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현장과 경향을 갖고 있는 메이데이포럼과 노동자의 힘의 경우, 자본주의체제의 근본모순을 타파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대안적인 사회를 사회주의로 명확히 상정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서유럽 사민주의 노선과 명확한 차이를 공공연하게 선포했다. 반면, 중앙과 계열의 평등회의는 “궁극적인 목표로서 사회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발전시키고 현실의 투쟁을 통해 이를 구체화·풍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즉 평등회의는 사회주의적 가치와 이상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는 현장과와 미묘한 차이점을 보였다.

<표 5-5> 좌파블록 비교

쟁 점	중앙과		
	평등회의	현장과	
		노동자의 힘	메이데이
이념	자본주의 근본 모순 타파와 사회주의(또는 사회주의 가치) 지향		
반제·통일운동	남한 노동자 변혁운동의 중심성을 기반으로 한 통일운동		
의회주의노선	의회주의 검토 요구	의회전술 유효	의회전술 유효
민노당에 대한 입장	배타적 지지 방침 철회에 대한 내부 논란	결정 유보 또는 재검토	배타적 지지 방침의 철회
산별노조 건설	선차적 과제, 산별노조 건설 전략 수립		
투쟁방향	준비된 실질적인 대정부 총파업 투쟁 전개		
노사정위 참여	반대		

통일과 반제 문제의 경우 양자는 보다 의견이 접근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세 조직은 남한 노동자 변혁운동의 중심성을 확고히 하는 통일운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민족 모순과 반제 과제를 우선시하는 NL적 경향과는 차별적이다. 즉 이들은 계급 문제를 민족 문제에 복속시키는 북한 추종적 통일운동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현재의 통일운동의 경향이 남한자본 주도로 가고 있다고 보면서 반자본운동의 관점에서 남북 노동자연대를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통일 과정에서 사회주의체제 담지자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이념에서의 미묘한 차이와 비교해 볼 때 세 주체들간의 거리는 의회주의 노선³⁰⁸⁾과 민노당에 대한 입장에서 보다 확대되었다. 평등연대는 대중정당 형태의 노동자정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 즉 이들은 대중정당이 ‘의회전술의 딜레마’에 경도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자정당이 민주주의의 발전, 사회의 다양화 등 한국사회의 변화에 조응하는 대중정당의 형태라고 규정했다. 평등연대는 전위정당 형태의 노동자정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전위정당이 대중의 민주적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평등연대는 민주노총이 채택한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원칙을 존중하며 민주노동당의 강화발전을 요구했다. 즉 이들은 민주노동당을 완성된 변혁운동의 중심체로 보지는 않으나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개혁함으로써 어느 정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해 나머지 두 조직은 노동자정당이 ‘의회전술’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언급했다. 메이데이포럼의 경우 대중정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전술’과 사회운동 네트워크(‘전선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투쟁으로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힘(노힘)은 이러한 입장을 보다 강력하게 견지했는데, 이들은 의회주의 노선이 자본주의

308) 이들은 의회주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개념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선거에 의한 의회 다수당으로서의 집권전략을 의미한다. 의회주의 노선도 대중투쟁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대중투쟁을 보조적인 것으로 놓는다. 따라서 대중투쟁에 대한 신중론, 대중투쟁의 결과를 의회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범좌파연대, 2003).

근본 모순 타개에 근접하는 수준의 정치변혁조치 이루어 낸 예가 거의 없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대중투쟁의 우선성을 강조하면서 ‘의회전술’과 ‘의회주의’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메이데이포럼은 중앙파에 보다 근접한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정치세력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을 계급적으로 강화하고 노동계급운동의 통일을 위해 여타의 정치조직과 연대연합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노힘은 민주노동당을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들에 의하면 민주노동당은 대중의 정치투쟁 역량을 의회주의 투표행위로 왜곡시키고 있고,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등으로 변혁적 정치세력을 배타적으로 보고 심지어 폄박함으로써 그 역량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 조건하에서 민주노동당의 확대 강화는 의회주의노선의 확대 강화와 함께 변혁적 노동자 정치운동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민주노동당이 의회전술의 단위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 노동자들에게 변혁의 길이 의회주의가 아니라 변혁적 정치운동의 발전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앙파와 현장파는 의회전술에 대해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고, 각 조직들은 이것에 대해 ‘기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다. 즉 평등연대는 상대적으로 의회전술 유의미성을 강조하는 반면, 나머지 양자는 대중투쟁노선을 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상의 이념과 의회에 대한 미묘한 차이는 연대 논의가 정치사상적 통일을 당면의 과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정한 선에서 봉합되었다. 특히 민주노동당에 대한 태도는 각 조직 내부에서조차 상이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여 세 조직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³⁰⁹⁾

309) 조직간 차이 이외에도 조직 내부 차이도 존재했다. 메이데이포럼의 경우 민노당에 대한 논의를 4월 총선 이후로 유보하자는 입장과 정치방침을 재검토하자는 입장이 함께 제출되었다. 그리고 배타적 지지방침을 철회하면 좌파는 총선에서 민노당을 의회전술 단위로 인정하고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조직(사회당 등)을 중심으로 의회전술을 구사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에 비해 노힘은 비교적 내부 논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그들은 ‘정치사상의 자유보장 및 당과 노동조합의 독립’이라는 일반적 원칙에서도 배타적 지지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배타적 지지

한편, 세 조직은 조직론으로서의 산별노조 건설과 실천론으로서 투쟁 방향 및 노사정위 참여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산별노조 건설의 경우 이들은 기존의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동의했다. 즉 이들은 비정규, 중소기업의 노동자, 이주노동자를 광범위하게 조직하기 위한 산별노조 건설운동을 선차적 과제로 설정하는 데는 동의했다.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 계급적 투쟁과 결합된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미약했음을 지적하고 산업별 공동투쟁을 형식적 수준으로 방기한 채 반복된 조직형태 변경의 결의에 의한 산별노조 건설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산별노조는 일부 세력이 방관 또는 방해하는 가운데 일부 세력의 운동으로 격하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이 근거하여 투쟁에 의해 산별노조 건설운동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투쟁방향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했는데, 이들은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현장의 실정을 무시하는 과도한 투쟁의 설정이라는 비판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사회공공성강화 문제, 사용자대항권저지 문제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준비된 대정부 총파업투쟁을 전개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노사정위 참여 문제에 대해서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참여 반대”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즉 이들은 교섭 자체(총체적 교섭방침)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요구를 쟁점화하고 투쟁을 조직화하기 위한 대책하에서 교섭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이들은 제3기 지도부의 총체적 교섭방침이 여전히 유효하며 지금의 조건하에서 범좌파는 반조합주의 선거연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노사정위 참여를 “교섭을 빙자한 사회적 조합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전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이념과 민노당에 대한 태도 등에서 평등연대가 메이데이포럼보다, 메이데이포럼이 노힘보다 온건한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의 논쟁은 몇 가지 점에

방침이 주객관적인 조건에 따른 다양한 결정을 원칙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아쉬움이 남는데, 첫째, 이들간의 논쟁이 내부로부터 조직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우리 조직 내에서의 선거참여 및 연합에 대한 토론과 결정이 결의된 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상층(?)에서 변경되면서 선거는 ‘조직이, 그리고 아래로부터 움직이는 선거’가 되지 못했다고 본다. 아울러, 노힘 내의 조직적 논의 과정이 공식적인 총회나 과반수 이상의 성원이 참여하는 의결 단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자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정상철, 『기관지 노힘』, 제47호, 2004. 1. 26).

둘째, 이념 논쟁이 일정한 차이를 확인하는 순간 봉합되어 버림으로써 풍부한 논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즉 명확한 입장 차이를 논쟁하지 못함으로써 좌파블록의 연대에 대한 논의가 이념, 조직, 실천의 토론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좌파블록은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논쟁을 종결지었다. 논쟁이 차이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차이의 발견은 중요한 자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의 확인이 반드시 이후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좌파연대에 대한 회의가 각 그룹 내부에 드리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연합과 결과를 두고 ‘소주와 사이다를 섞어, 먹기는 좋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정말 골 때리는 꼴’이었다고 하면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 기질상 섞는 것보다는 그냥 먹는 술꾼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조직 아닌가 한다(정상철, 『기관지 노힘』, 제47호, 2004. 1. 26).

더 나아가 이들은 상층부만의 좌파블록 연대가 선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범좌파 연합은 환상이었는지도 모른다... 억지로 끼워 맞춘 느슨한 연대는 표로 연결되지 못했다... 결국 몸통 없는 머리만의 선거는 범좌파 진영의 완패로 끝이 났다”(신태호, 『기관지 노힘』, 제48호, 2004. 2. 10).

이상의 논쟁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째, 범좌파 연대가 급조된 측면이 있었으며 따라서 “면밀한 준비와 치열한 토론과 합의를 거치지 않아 그 연합 과정이 결코 세력을 확산하는 과정이 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좌파연대가 “범좌파 대통합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민주노총 중앙권력 쟁탈을 위한 3조직의 ‘한시적 연합,’ 즉 선거연합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정상철, 『기관지 노힘』, 제47호, 2004. 1. 26).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토론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봉합될 수 있었던 것은 급박한 선거 일정과 좌파들의 선거 패배의 불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자유주의와 개량주의자들이라는 공통의 적 또한 이들의 균열을 봉합하도록 만들었다.

3) 논쟁 2: 국민파와 좌파블록

민주노총 제4기 집행부 선거에서 나타난 좌파블록과 국민파 간의 논쟁은 이념과 조직 논쟁보다는 기존의 실천에 대한 평가와 현안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선거 과정에서 양자간의 가장 중요한 논쟁은 투쟁전략과 교섭방식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이 쟁점을 중심으로 양자간의 상이한 인식과 방침을 보여주고자 한다.

좌파연대의 유덕상·전재환 후보는 자신들을 “계급적·변혁적 노동운동진영”으로서 신자유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³¹⁰⁾ “위력적인 총파업을 펼칠 힘”을 기반으로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익을 추구할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총연맹-연맹-지역-단위노조를 관통하고 지도부와 조합원이 일체가 되는 투쟁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이 힘으로 최소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는 총파업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 2004)³¹¹⁾.

310) 우리 1번 후보, 즉 범좌파진영은 상호간 여러 차이가 있지만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투쟁하고자 하는 세력들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자 했던 사람들이다. 이에 비해 2번 쪽은 그동안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해 당위적으로는 투쟁이 옳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이 투쟁에 나설 준비가 안 됐다는 등의 이유로 투쟁에 소극적인 면들이 있었다. 선거 과정에서 다시 투쟁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투쟁에 소극적이었던 자세에 대한 자기 반성 없이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노동과 세계』, 제273호).

311) 유덕상-전재환 선분은 ‘새로운 10년! 문제는 힘이다. 힘 있는 민주노총’을 핵심 구호로 뽑았다. ‘새로운 10년’은 앞으로 민주노총의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 부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문제는 힘이다’는 현재 민주노총 문제에 대한 진단이다. 따라서 ‘힘 있는 민주노총’을 민주노총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매일노동뉴스, 12. 31).

<표 5-6> 국민파와 좌파블록 비교

쟁 점	국민파 (이수호, 이석행 후보)	좌파블록 (유덕상, 전재환 후보)
총파업과 투쟁전략	준비된 총파업	힘에 기반한 총파업
조직화와 연대전략	조직혁신: “우리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사회진보운동과 폭넓은 연 대활동 강조	조직확대 강화전략: 10년 내 300만 유일노총 건설, 비정 규직 노동자 조직화, 산별체 제 전환
노사정위 참여와 교섭전략	노사정위의 투쟁적 교섭 중층적·총체적 교섭	노사정위 불참 산업별 및 노정 직접교섭
민주노동당 방침	대중적 진보정당	민노당의 강화와 변혁적 정 치역량 강화

문제는 힘이다. 10만 내외의 총파업투쟁으로는 신자유주의 분쇄도, 공세적 요구 쟁취도 공염불이다.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맞서 투쟁했던 세력들이 힘을 모아 힘찬 투쟁을 만들어 보겠다고 의기투합했다. 우리는 범좌파세력을 결집해 그 힘으로 투쟁을 주저하는 동지들은 설득하고, 앞장서 투쟁함으로써 힘 있는 민주노총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노동과 세계』, 제273호).

이처럼 좌파블록은 신자유주의 분쇄를 제4기 지도부가 담당해야 할 일차적 과제로 보고 힘에 기반하여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3권 강화 등을 중심으로 1,400만 노동자의 대공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동과 세계』, 제273호).

이에 대해 기호 2번 이수호·이석행 후보진영은 좌파블록의 힘에 기반한 총파업론에 대해 회의적·비판적이었다. 우선 이들은 총파업만이 투쟁이 아니라면서 투쟁방법의 다양성을 제시했다. 국민파의 이석행 부위원장 후보는 “과연 총파업만이 투쟁전술이냐는 것이다. 모든 조합원이 머리를 하룻동안 묶는 것도 하나의 투쟁일 수 있다. 투쟁은 다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좌파가 “총파업이 아니면 투쟁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노동과 세계』, 제273호). 더 나아가 이들은 그간의 좌파블록 집행부의 총파업이 조합원들을

대상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사안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지금처럼 총파업을 때리겠다는 말씀이신데, 좋습니다.··· 경제특구 법안 통과할 때,··· 어떻게 투쟁했는지 기억하시죠. 그게 총파업이었습니까? 도대체 서울로 올라온 사람이 경제특구가 뭔지도 모르고, 노동관계법 개약건으로 금속노동자들은 총파업 투쟁차 올라왔다가 경제특구법 하니까, 이런 싸움 왜 하나며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뭘 싸움인지도 모르고 올라왔던 것이죠. 그런 것을 제대로 하자는 거지, 누가 언제 싸움을 하지 말자고 그래요? (이수호, 한겨레, 2004. 1. 13).

이들이 보기에 민주노총은 한편으로는 “그동안 총파업을 남발하며 조합원들을 계속 대상화”해 왔고(이석행, 『노동과 세계』, 제273호)³¹²⁾, 다른 한편으로는 총파업 계획만 남발함으로써 “양치기 소년”이 되었다(이수호, 『노동과 세계』, 제273호). 그 결과 1996년 총파업 이후 조합원들은 총파업에 대한 패배감에 빠져 있으며, 민주노총을 불신하게 되었다. 더욱 큰 문제는 민주노총이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이처럼 국민과는 기존 민주노총 집행부의 총파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촉구하고 향후 “준비된 총파업” 또는 “제대로 된 싸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준비된 총파업은 무엇인가? 우선 그것은 “제대로 된 투쟁”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투쟁은 노조운동의 생명입니다. 투쟁 없이 뭘 합니까? 투쟁을 투쟁답게 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어떤 집행부가 맡았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 투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소외당하고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제대로 된 투쟁을 한 번 하자는 겁니다(이수호, 한겨레, 2004. 1. 13).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투쟁 또는 총파업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참

312) 이수호 후보는 “금속, 대공장 중심으로 무리하게 총파업을 이끌면서 현장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가장 큰 문제는 민주노총 지도력의 위기”라고 진단했다(매일노동뉴스, 2003. 12. 29).

여하고, 전 산업이 골고루 참여하고, 사회적 문제로 모든 노동자가 함께 하는 요구를 가지고 이뤄지는 것,” 즉 “정치총파업”이며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한판 큰 투쟁”을 말한다(이수호, 한겨레, 2004. 1. 13). 따라서 이러한 총파업 외에 총파업이라는 단어는 남발되어서는 안 되는데, 향후 모든 파업을 총파업이라고 하지 말고 “금속에서 하면 금속 총파업, 지역에서 하면 지역 총파업,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이수호, 한겨레, 2004. 1. 13).

그렇다면 이러한 제대로 된 총파업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어느 정도 싸움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역량”, 즉 철저한 준비상태에 달려 있다.

민족의 성웅으로 추앙받는 이순신 장군은 도주하는 왜선을 쫓아가 섬멸하라는 선조의 말을 거역합니다... 승리에 대한 비책이 준비되지 않았던 이순신에게 아무리 임금의 명령일지라도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고 목숨을 건 전투를 통해 왜선 300선을 격퇴하며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대승을 거둡니다... 민주노총의 오늘을 생각할 때 파업이 선언에 그치고 패배가 습관이 되고 있는 현실을 혁파하지 않는 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파업으로 승리하는 투쟁을 이끌어야 할 참다운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 2004).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조건과 역량이 준비된 총파업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선, “현장조합원의 힘과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진보세력과 광범위하게 연대해 전산업적·전계급적·전국민적 사회개혁 투쟁을 대대적으로 펼치며 현장조합원과 국민들에게 희망과 대안”을 제시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이들은 우선 기존의 좌파 지도부가 아닌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사업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보았다. 즉 “현장을 중시하고 조합원들을 아래로부터 조직하고 조합원과 현장간부들이 주인답게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수호, 『노동과 세계』, 제273호).

결국 준비된 총파업은 철저한 조직화 과정을 거쳐 조합원과 함께하는 총력투쟁의 전개와 민주노총과 연맹 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하에 보다 내

실 있는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범사회적 연대와 국민신뢰에 기반해서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적어도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거나 조합원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고 “사회의 큰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힘으로 고쳐야 할 문제를 의제로 삼아 충분히 교육하고 준비”한 투쟁을 의미한다(이수호, 한겨레, 2004. 1. 13).

이에 대해 좌파블록은 국민과의 기존의 총파업에 대한 비판, 즉 “준비되지 않은” 총파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대안 없는 총파업을 남발해 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교섭력도 없이 반대만 외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항거한 동지들의 절규가 노사정위원회에서 풀릴 수 있었습니까? 사실 민주노총은 어려운 여건에도 총리도 만나고, 장관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민주노총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대통령의 오기뿐이었습니다. 총파업 말고 민주노총에게 다른 선택이 있었습니까? 다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투쟁을 조직했습니다... 그 결과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총 죽이기’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총파업 남발’을 비판하기 전에 얼마나 성심을 다해 투쟁을 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 2004).

즉 이들은 우선 총파업과 다른 방식, 즉 대정부교섭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기존의 총파업 현장에서 국민파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고 있다: “그러면 조직에서 결정된 총파업투쟁을 성실히 한 사람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싸운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유덕상, 한겨레, 2004. 1. 13)³¹³). 그러면서 기존의 총파업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2003년은 열사정국이라고 할 정도로 7명의 동지가 죽어갔다. 총파업이 불가피한 정국이였다. 2번쪽 주장대로라면 이 투쟁은 준비된 투쟁 아니기 때문에 해선 안 된다는 말인가”(유덕상, 『노동과 세계』 제273호).

313) 유덕상 후보는 상대진영을 겨냥해 “투쟁하지 않은 사람들이 ‘총파업 남발’이라고 비판한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노사협조주의가 기승을 부리지만 투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매일노동뉴스, 2003. 12. 29).

좌파블록은 이처럼 총파업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총파업에 대한 비판자들의 “저의”와 이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러한 비판이 가져올 정치적 효과를 문제삼는다.

우리가 얼마나 보수언론한테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까? 민주노총은 사회에서 거의 고립됐습니다.… 대통령이 민주노총에 적대적으로 발언했죠.… 수구보수언론도 그랬죠. 그런데 같이 활동하는 동지들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니 저희들은 노이로제 걸린 상태에서 그런 주장을 들으니까, 그러면 총파업투쟁을 한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죠(이수호, 한겨레, 2004. 1. 13)³¹⁴).

결국 좌파블록은 국민과의 준비된 총파업론은 총파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3만 명이든 4만 명이든, 이런 총파업들, 큰 투쟁은 작은 투쟁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준비해서 총파업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올해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 이것의 핵심이 세 가지인데 정리해고, 파업권 제약,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겠다는 거죠. 정부가 올해 관철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후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2006년에 준비된 파업을 하시겠습니까? 투쟁을 하지 않고… (유덕상, 한겨레, 2004. 1. 13); 민주노총 모든 연맹과 전민중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2006년에 하겠다는 것은 총파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유덕상, 『노동과 세계』, 제273호).

이상에서 보듯이 양자는 “힘에 기반한 총파업”(좌파블록)과 “준비된 총파업”(국민파)을 주장하고 있다. 힘에 기반한 총파업론이 교섭보다는 투쟁위주의 전략이라면, 준비된 총파업론은 투쟁에 강조점을 두면서도 대

314) 파업권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런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정부와 수구언론이 파업을 막고 왜곡한다고 생각합니다.… 5월에 투쟁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보도했죠. 국민들은 그대로 믿어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이 투자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복핵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투명성이 나쁘다는 겁니다. 수구언론은 이런 부분을 은폐해 버리고 마치 노동자의 파업으로 투자를 기피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호도했다고 봅니다(한겨레, 2004. 1. 13).

정부교섭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전략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양자는 파업을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이익 관철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실천전략에 있어서 차별적이다. 하지만 양자 모두 힘에 기반한 노동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좌파블록은 힘을 키우는 방법으로 현장에 기반한 조직강화사업, 제도혁신을 통한 조합민주주의의 강화, 비정규직·영세·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의 요구를 수렴하고 조직하는 산별노조 건설, 조합원의 확장을 통한 제1노총으로 성장, 국제노동자연대투쟁 강화, 노동자정치세력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공세로의 전환은 전향적 요구만 나열한다고 해서 이뤄지지는 않는다. 요구를 쟁취할 수 있는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힘있는 투쟁을 만들 수 있는 조직발전과 내부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비정규직 중심의 산별노조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이다”(유덕상, 『노동과 세계』, 제273호). 구체적으로 좌파블록은 산별노조체제에 기반한 ‘3년내 100만 제1노총, 10년내 300만 유일노총’을 조직목표로 제시했다:

우리는 임기 내에 1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은 70만 명이다.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미조직노동자 30만 명 조직화를 핵심사업으로 펼치겠다는 것이다. 그 조직적 틀은 다른 아닌 산별체제 전환이다. 자본은 ‘1국 2노총’인 조건을 이용해 ‘분할과 배제전략’을 쓰고 있다. 이를 끊기 위해서도 3년 내 100만 제1노총 시대, 향후 10년 이내에 1국 1노총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산별노조와 비정규직 조직화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산별노조를 지역체제 중심으로 재편해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이 산별노조의 지역본부(지부)에 직가입하는 형태를 구축하면 임기 내에 30만 비정규직 조직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유덕상, 『노동과 세계』 제 273호).

한편, 국민과는 준비된 총파업을 위해 조직혁신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혁신전략의 핵심은 ‘우리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³¹⁵⁾라는 선거 캐

315) 이들은 노동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금 노사관계의 문제다. 누가 변해야

치프레이즈³¹⁶)에서 보듯이 민주노총을 내부로부터 제대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들이 보기에 한국 사회는 눈 깜짝할 새 변하고 있으나 민주노총의 변화는 답보상태이다: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다. 총연맹과 연맹, 지역본부의 관계 설정도 확실하지 않다. 조직 내에서도 임원과 특별위원장, 실·국장 등의 관계 설정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 나아가 조직의 생명은 의무금이다. 내가 사무총장을 지내던 당시 의무금 납부율을 80% 가까이 끌어올렸다. 그런데 지금은 62~63%에 머물고 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확실히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바뀌려는 피나는 노력이 없는데 과연 누구에게 변화를 요구할 것인가. 나 자신부터 반성하는 자세로 국민과 조합원 앞에 서겠다”(이수호 인터뷰, 『노동과 세계』, 제273호). 특히 국민파는 사회진보운동과 “폭넓은 연대”를 통한 “덧셈의 연대” 활동을 강조하고 노동조합이 연대의 구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진영은 교섭전략, 특히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도 대립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선 좌파블록은 한국 노동정치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노사정위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으로 노사정위를 개편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자간의 힘의 역관계가 지금처럼 불균형한 상태에서 노·사·정 사이의 협약은 사실상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정부의 노동정책이 친자본 일변도로 흐르는 속에서 노사정 사이의 협약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산별교섭 구조도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취약한 교섭 토대에서 노사정위는 제

하는가? 노동계가 변해야 한다. 노동계가 변해서 기업의 후퇴도 박살내고, 정부의 무능도...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신자유주의였다. 하나는 IMF의 상황과 김대중 정부의 계급적 토대가 있었다. 노무현 정권은 젊고, 정책 결정자들이 보수적이지 않다. 예컨대, 김유배, 이기호 등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이수호 인터뷰, 『노동과 세계』, 2004).

316) 이수호-이석행 선본은 ‘우리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저지와 분쇄를 넘어 쟁취와 확보로!’가 주요 선거표어다. 앞부분은 우리(민주노총)를 바꿔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뒷부분은 현 집행부가 ‘저지와 분쇄’에만 매달렸다면, 앞으로 ‘쟁취와 확보’로 나아가겠다는 전망을 담고 있다(매일노동뉴스, 2003. 12. 31).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조건에서는 노사정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유덕상, 한겨레, 2004. 1. 13).

이처럼 취약한 힘의 상태에서 노사정위의 참여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즉 국민과의 주장처럼 “노사정위의 형태만 바꾼다고 해서, 공익위원을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로 채운다고 해서 노사정위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문제는 힘의 불균형에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한국노총이 최근 손배가압류 노사정협약을 추진하다 결국 ‘불법파업 중단 선언’에 그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 2004).

좌파블럭은 이 같은 자신들의 노사정위 불참전략에 대해 “사실상 교섭 전략이 비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좌파블럭은,

우리는 사회협약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 문제는 노사정위의 한계입니다. 그곳에서 합의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경부가, 기획예산처가, 건교부가, 산자부가 거부하면 그것은 그만입니다(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 2004). 노사정위의 위상을 살펴보면, 심지어 노동부 국장급 인사들도 노사정위를 우습게 알고 있을 정도다. 과연 이 상태에서 뭐가 되겠는가(유덕상, 한겨레 2004. 1. 13)

라면서 노사정위를 통한 교섭전략을 비판하면서 민주노총의 교섭전략은 “기업별 교섭을 넘어 산별교섭, 대정부교섭, 사회적 교섭 등 중층적·총체적 교섭”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산별교섭의 경우 산별교섭 제도화를 통한 노동법개정 투쟁, 산별협약안 준비와 산별교섭 결과가 동일산업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법개정투쟁 전개 등을 주장하고, 대정부교섭의 경우 공식적인 대정부 교섭틀의 확보 및 정부 차원의 단일 교섭 창구 요구, 정부의 각종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 쟁취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사회적 교섭의 경우 제도개선 및 사회개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회적 교섭틀의 확보, 기존 노사정위를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노사정 교섭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저는 총체적 교섭체계를 지향해 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친자본 일변도인 정부 정책이 바뀌고, 노-정간의 상호신뢰가 구축되어

야 합니다. 또 교섭구조가 다양한 방식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별교섭 구조가 정착된다면 노사정 교섭들에 대해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해서 태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유덕상, 한겨레, 2004. 1. 13).

이처럼 좌파블록은 “노사정위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고 “노사, 노정, 노사정, 이렇게 중층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에 앞서 노정간의 신뢰회복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유덕상, 한겨레, 2004. 1. 13).

한편 국민과는 교섭구조, 특히 노사정위원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제는 투쟁과 저지의 네거티브전략이 아닌 확보와 쟁취의 포지티브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들은 교섭을 바라보는 문제부터 좌파블록과 일정한 차이를 나타냈다.

우리는 언제나 자본·정권과 노조의 기본관계가 갈등관계라고 본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적극적인 ‘투쟁적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싸움이 정부와 자본에 맞서 저지·분쇄하기 위한 목표를 많이 내걸었다. 때론 저지하고 분쇄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저지와 분쇄로 끝나는가. 투쟁을 토대로 확보하고 쟁취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대로 싸우면서 저지와 분쇄를 뛰어넘어 조그만 것이라도 확보하고 쟁취해서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이수호 인터뷰, 『노동과 세계』, 2004).

국민과는 노사정위 참여의 불가피성을 현실적인 요인, 즉 산별구조의 취약성과 현장의 요구에서 찾고 있다:

“노사정 세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 제조업을 어떻게 살리고 산업구조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지금 노조 형태나 여러 관계에서 보면 산별노조, 산별구조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이뤄진 다음에 다시 노사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요구가 조합원들한테 있는데, 그냥 묶인 상태로 두고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수호 인터뷰, 『노동과 세계』, 2004).

하지만 국민과도 현재의 노사정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노동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에는 좌파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사정위의 전면적 개편을 통한 참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현재의 노사정위의 틀을 조금 변화시키자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지금의 노사정위가 잘못됐다는 데는 공통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제대로 된 노사정 협의틀을 만들자는 거예요.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만들고 나면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자꾸 현재의 노사정위를 대충 개편해서 들어간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다 모여, 거기서 타협하고 해답을 찾아서 해결할 것이거든요. 그런 틀이 필요하죠.

이상에서 보듯이 노사정위 참여와 위상에 대해 좌파와 국민과는 인식을 달리했다. 좌파는 현 정부의 성격과 현재의 조건과 정세 속에서, 그리고 노사정위의 역사성을 볼 때 노사정위는 총체적인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섭의 틀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투쟁을 통한 중층적·총체적 교섭구조 재취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국민과는 노사정위의 실효성과 불가피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노사정위 개편을 통한 사회협약의 체결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두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민노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가 큰 접점을 형성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두 진영 모두 민주노동당 강화와 노동자 후보의 의회진출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양자는 미묘한 차이를 토론회 중간중간에 내비쳤는데, 그것은 민주노동당의 위상에 관한 것이었다. 국민과의 경우, “우리는 민주노동당을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보면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정치세력화하고 정치풍토를 바꾸겠다는 의지 외에 다른 것 없다”(이수호 인터뷰, 『노동과 세계』, 2004)고 주장하는 데서 보듯이 민주노동당의 강화를 통한 정치세력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즉 국민과는 진보정당에 대해 전 조합원 5% 당원 가입운동으로 10만 당원 시대를 개척하여 노동자 중심성의 강화를 주장하고 당의 외연확대를 통한 명실상부한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좌파는 우선 국민과의 정치적 성향을 노무현 정부의 비판적 지지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좌파는 국민과가 부르주아 정당들 중의 하나를 지향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이들의 선거 전단의 문구, 즉 “노무현이나 노동자나”에서 그 일단을 내비치고 있었다.³¹⁷⁾ 이런 맥락에서 좌파블록은 민주노동당을 의회전술을 위한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국민과가 민주노동당을 의회주의에 기반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좌파블록은 민주노동당을 통한 변혁적 정치역량의 강화와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를 하는 기구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이룩하고, 민주노동당을 확대·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방침에 충실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 의회주의 투쟁만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우리는 의회주의 투쟁과 대중정치투쟁이 결합될 때만이 우리 사회를 바꿔 낼 수 있다고 본다. 의회주의에만 매몰돼선 사회변혁이 어렵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제도정치권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중심성을 더욱 강화하며 조합원 대중과 함께 투쟁하는 정당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평등세상의 전망을 열어갈 변혁적 정치역량의 강화에 주력해야 합니다(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 2004).

이상에서 보듯이 민주노동당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좌파블록과 국민과는 대립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좌파블록의 경우 노동자계급의 중심성과 투쟁성을 강조하면서 노동자계급투표의 조직화, 변혁적 정치역량의 강화, 그리고 민노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모색을 구상

317) 이 문구는 ‘노무현=국민과(이수호 후보진영), 노동자=범좌파(유덕상 후보진영)’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수호 후보는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냥 넘어가려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여기 유 후보 쪽 홍보물에서 노무현이나 노동자나 이랬는데, 마치 우리 진영이 노무현 패거리인 것처럼 유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제 얘기가 지난해 노무현이 한 얘기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비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노무현하고 비슷하다는 문제제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선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다 분열시켜서 뭘 하자는 것인지 답답합니다”(이수호, 한겨레, 2004. 1. 13).

했다. 반면 국민파는 민주노동당을 진보정당으로 규정짓고 노동자들의 의회진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총 제4기 집행부 선거는 민주노총의 이념적 분화와 그 세력을 드러냈다. 이념의 수준에서 볼 때 민주노총은 크게 범좌파 대 국민파로 분화되어 있고 다시 범좌파는 현장파와 중앙파라는 정파로 존재한다. 논쟁 과정에서 중앙파의 모호한 입장과 위치가 확인되는데, 선거의 쟁점이 노사정위 참여와 민주노동당에 대한 평가라고 했을 때 현장파와 국민파는 명확한 쟁점을 형성하고 있으나, 중앙파는 범좌파의 내부 논쟁에서부터 모호성을 드러냈고 이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양자의 경계선에서 중앙파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대중선거의 특성을 감안할지라도 두 후보간의 선거 공간에서의 대립과 논쟁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쟁점과 깊이를 가진 논쟁을 전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즉 기존의 논쟁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양자간의 토론도 보다 심화되기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이념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쟁이 조합원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되었고 그것이 득표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토론은 일반 조합원들의 무관심 속에 지면을 통한 상층 간부들과의 토론이었고 토론회가 개최되었을지라도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 정치세력화 논쟁

민주노조운동은 조직화된 이후 정치세력화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지고 다양한 실천을 해왔지만, 정치세력화에 대한 개념, 방법, 그리고 실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여기에서는 두 정치세력, 즉 좌파 내 우파적인 견해(대체로 민주노총 내 국민파도 여기에 속함)와 현장파 또는 노동자의 힘으로 대변되는 좌파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정치세력화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정치세력화에 대한 각자의 개념을 논의한 후, 정치세력화의 목표, 정치세력화의 주체, 정당의 성격, 의회전략, 그리고

정당과 노조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상이한 평가를 중심으로 정치세력화 논쟁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김금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노동자계급이 정치 영역에서 역량을 형성하여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조가 추진하는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독자적인 정당을 건설하고 각급 선거에 참여하여 국가정책결정기구로 진출하거나 국가권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금수, 1999: 13).

김금수의 정의는 두 가지 점에서 특징적인데, 첫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국가정치 수준의 정당 건설과 이를 통한 실천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정치세력화가 “정당 건설과 정당 조직을 통한 정치활동”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김금수, 1999: 14). 그리고 그에 있어 “정당은 주로 정치 영역에서 국가권력의 획득을 종국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선거정치의 논리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김금수, 1999: 14). 둘째, 그는 노동자 정치활동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김금수에게 있어 노동자 정치활동 개념은 정치세력화에 비해 외연이 넓은 개념이다. 그는 노조의 ‘정치활동’은 “선거정치나 혁명적 정치와 같은 국가권력 획득과 직접 관련된 활동만이 아니라 제도와 국가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과 같이 국가권력 행사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 건설과 선거정치를 통한 정권 접근과 정권 장악,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투쟁과 활동, 정치적 연합전술 또는 통일전선 전술, 총파업투쟁을 비롯한 농성이나 집회 등을 통한 압력행사 방식, 무정부주의적 생디칼리즘을 채택한 노조들이 정치적 총파업 등에 의한 직접 행동을 통해 정당이 아니라 노조가 직접 국가권력 해체를 추구하는 방식 등도 포함된다”(김금수, 1999: 12~13). 이처럼 노동자의 정치활동이 노동자계급의 사회세력화³¹⁸를 포함하는 개념인 데 반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정당

318) 여기서 말하는 사회세력화는 노동운동의 발전을 비롯하여 계급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장악력 확보, 그리고 다른 민중운동 및 사회세력과의 정치적 연대와 동맹강화 등을 의미한다(김금수, 1999: 13).

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그는 “정당의 조직화는 노동자 계급의 사회세력화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김금수, 1999: 13).

김금수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입장은 노동운동 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전형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은 정치투쟁 영역은 정당이,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투쟁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각각 상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론 양날개론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민주노총 내 국민과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국민과의 제1기 권영길 집행부와 제4기 이수호 집행부는 정치세력화를 정당 건설을 통한 집권전략으로 상정해 왔다.³¹⁹⁾

이상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개념과 실천에 대해 좌파들은 매우 단호하게 비판한다. 김세균은 “오늘날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정치세력화를 단지 제도정치 속으로의 진출을 위한 정당 건설의 문제로 축약시켜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중정치 내지 운동정치를 제도정치에 종속시키는 정치조직이란 노동자·민중 자신이 정치의 진정한 주역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해하고 노동자·민중의 체제로의 통합을 촉진시킴으로써 노동자·민중의 해방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해방의 질곡으로 변하게 됨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김세균, 1995: 9). 이런 맥락에서 노동자의 힘 대표인 박장근은,

정치세력화를 대리정치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치조직은 정치투쟁을, 노동조합은 경제투쟁을 하는 것으로 분담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정치조직은 노동자계급의 일부분이어야 하며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위한 모든 투쟁의 한복판에 있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정치조직만이 하는 정치란 노동자의 정치가 아니라 아마 자본의 정치에 그 친화성을 갖는 정치일 것입니다. 선거정치를 중심적 정치활동으로 생각하

319) 물론 국민과는 정치세력화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표명해 오지는 않았다. 특히 정당운동의 경우에도 최근에서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노사정위 참여를 통한 정책 참가 노선이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노선은 이상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일정한 경향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는 경향이 그것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박장근, 1999: 9)

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이 보기에 정치세력화란, 일단 “민주변혁을 위한 운동정치를 중심에 놓고 참여민주를 위한 대의정치” 또는 “가진 자들에게 일방적인 게임인 선거정치”를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지위”에 놓는 것으로서 “노동자 대중의 직접적 실천에 의한 정치”를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정치를 의미한다(박장근, 1999: 9).

우리는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한 대정부투쟁 내지 정치적 대중투쟁을 조직해 대중정치, 운동정치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대중조직이 책임져야 할 제1의 정치적 임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김세균, 1999: 10).

서민 혹은 민중의 일부이지만, 서민 혹은 민중으로 해소되지 않는 노동자계급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적 전망, 즉 노동자계급해방과 인간해방을 전망하고 또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 노동자계급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당’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이다(남구현 외, 2004: 9).

정치세력화에 대한 입장은 물론 이상의 두 입장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양자 사이의 어느 지점에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양자의 입장 차이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정치세력화의 목표(이념)와 정치세력화의 방법 및 경로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우선 이념의 경우 노동자 정치운동의 근본적인 쟁점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³²⁰⁾

320) 진보정당 창당준비위 출범을 앞두고 진보정당의 이념과 명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하자는 견해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의 경제적 해방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주장하는 견해(송태경)에서부터, 이념적 지향점은 자본주의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모순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주체역량의 수준(노동자들의 의식수준)을 감안하여 진보정당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운동방식, 정당활동 방식을 강조하는 견해(정영태), 시장을 활용하면서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다양화 등을 기초로 경제적 효율과 계급적 분배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노선인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견해(장상환), 사회주의에 대

이러한 이념 논쟁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한다면, 하나는 기존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신뢰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비판적 수용 또는 이탈의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후자의 입장은 기존 사회주의와 사민주의를 넘어 새로운 이념을 한국의 현실에서 찾거나 현실론에 근거하여 현단계의 목표를 적시하는 경향이 있다. 노회찬은 진보정당이 추구할 이념은 “기본적으로 탈(脫)자본주의, 즉 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재론하는 것은 시간낭비”라면서도 “문제는 추상적인 논쟁이 아니라 진보정당이 자신의 이념을 구체적인 활동과 정책 속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표현해 내는가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노회찬의 사회주의는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념이란 마치 연(鸞)처럼 항상 지상의 현실보다 높이 떠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념이 뜬구름과 다른 것은 연줄을 통해 지상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고, 그 높이와 방향이 조절될 수 있다... 사회주의 이념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념에 ‘기성복’은 없다는 사실이다. 기성의 이념 속에서 정답 찾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정답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노회찬, 1999: 10).

이런 점에서 그는 ‘기성복’이 아닌 현실에 맞는, 즉 대중들의 수준과 현재적 과제에 맞는 이념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민주노총의 강령이 열린 이념적 지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노동자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대안적 체제로 제시하고 이를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노동자의 해방을 목표로 하였던 사회주의적 이념과 전통을 계승하되, 역사적으로

한 대중적 이해가 낮고 서유럽식 사민주의에 대한 명시적 반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민주적 사회주의를 쉽게 풀어 표현’하자는 견해(노회찬), 노동자·민중뿐만 아니라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시민까지 포괄해 내는 정치를 위해 ‘녹색사회 민주주의’를 표방해야 한다는 견해(유팔무), 그리고 자본주의체제의 온전한 유지도 아닐뿐더러 전통적 의미의 사회주의도 아니고 나아가 의회를 통한 노동세력의 권력 획득 구상은 현실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사회주의도 아닌 그 무엇을 주장하는 견해(김금수)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에서의 견해가 제출되고 있다(박성인, 1999: 83~84).

현존하였던 사회주의가 지녔던 비민주성과 관료적 억압 그리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체제'라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이 강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20세기의 정식화된 이념체계 중 어느 것도 채택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이념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광의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첫째, 이념적 다원주의에 대한 인정이다... 둘째, 역사적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난 소련 등의 국가사회주의,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이다(노회찬, 2000).

하지만 그는 현실적으로 진보정당의 이념이 결국 “표현의 문제”로서 “민주적 사회주의로 모아지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적 이해가 낮고, 서유럽식 사민주의에 대한 명시적 반대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민주적 사회주의를 쉽게 풀어 표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노회찬, 1999: 14). 이것은 김금수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서 추구될 전략적 목표는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일 것”이지만, “현재의 한국사회 상황”에서는 “정치세력화의 전략적 목표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한 실질적 민주화 또는 민주변혁일 것”이라는 진단과 유사하다(김금수, 1999: 26~27).

이상의 논의들에서 보듯이 하나의 경향은 이념이 선형적으로 정해진 기성복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한 반면, 또 다른 경향은 노동자의 힘 등의 좌파로서 이들은 사회주의를 자신의 이념적 좌표로 확고하게 삼고 있다. 이들은 우선 앞선 논자들의 정당건설운동과 논의들을 사민주의 또는 개량주의로 비판한다.

국민승리 21세력의 정치노선은 ‘사민주의적 개량주의’에 의해 대변되는 바, 그러한 정치노선은 노동자 정치운동을 ‘피착취-피억압계급으로서의 노동자계급의 해방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상품 판매자로서의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운동’으로 한정시킨다(김세균, 1999: 10).

이들은 노동자계급의 이념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총자본의 이데올로

기(이들이 보기에, 노사협조주의, 국민화합주의, 부르주아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에 맞서는 대항 이념으로서 자본주의체제의 혁명적 변혁을 통한 사회주의를 자신들의 목표로 지향하고 있다(김석준, 2003 참조).

우리의 조직발전 전망은 이제 막 현실정치지형에서 시험대에 오른 사민주의 정치, 민족주의 정치의 한계와 오류를 대중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회주의 정치’, ‘계급 정치’를 우리 자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구현해 나갈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프로젝트여야 한다...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아닌 어떤 정치적 대안도 현대 자본주의 모순 해결의 지체와 연장을 의미할 뿐이다. ... 노동자의 힘이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과 함께 건설하고자 하는 노동자계급정당은 ‘사회주의당’이다(남구현 외, 2004: 9).

이상의 정치세력화 개념과 이념에 대한 양자의 차이는 정치세력화의 주체를 다르게 상정하도록 만들었다. 우선 김금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가 “노동자계급과 노조 그리고 노동운동조직” 즉 정당이라면서도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노동자계급의 배타적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노동자계급을 주축으로”하되 “민중세력과 민족민주운동진영을 주도세력으로 하여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주체 역량을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한다(김금수, 1999: 26).

민주노동당의 경우 전체 발기인의 90% 이상이 노동자란 점에서 이당은 ‘노동자 중심의 당’ 또는 ‘노동자당’이라 부를 수 있다. 동시에 여러 계급계층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계급연합당’이라 부를 수도 있다(노회찬, 1999: 10).

이에 대해 좌파세력은 이러한 연대가 계급연합 또는 계급타협체제에 불과하다면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또는 좌파블록에 의한 정치세력화를 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세균은 범진보세력에서 변혁적 좌파세력을 추출해 내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범진보세력은 오늘날 크게 보아 ‘반제 민족주

의세력'과 '계급적 진보세력'으로 구분되며, 계급적 진보세력은 다시 크게 보아 '사민주의세력' 중심의 '계급적 우파세력'과 '변혁적 좌파세력'으로 불릴 수 있는 '계급적 좌파세력'('좌파의 좌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좌파란 넓은 의미에서는 '범진보세력'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중범위 수준에서는 '계급적 진보세력' 전체를, 좁게는 '변혁적 좌파세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 변혁적 좌파세력만을 좌파세력으로 지칭하는 이유는 이 세력만이 '자본주의의 극복'을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좌파세력이기 때문이다 (김세균, 2004: 5).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좌파들'에 의한 정치세력화를 함에 있어 건설될 "변혁적 계급정당은 민주노조 내부의 선진적인 지도적 정치역량, 노동자 현장조직의 선진적 부분, 변혁지향적 노동단체와 정치단체들의 요원 및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진보적 인텔리들의 단결과 결합에 기초하여 건설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김세균, 2004: 5). 결국 좌파들은 정치세력의 주체를 "계급적 좌파의 총결집과 유기적으로 결합³²¹⁾할 때에만 계급정당의 건설"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수준의 좌파연대와 통합을 전조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원영수, 2004: 9).

이념과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것을 담은 그릇인 정당도 당연히 양자에게 다르게 상정된다. 즉 양자가 생각하는 정당의 성격, 의회전술, 그리고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상이하다. 우선 우파적 경향은,

정당의 성격은 노동자 주축의 정당, 사회개혁적 진보정당, 대중투쟁을

321) 좌파운동의 단일의 조직적 구심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좌파운동의 조직적 통합을 위한 그간의 실패에 비춰 보아 좌파운동의 조직적 구심을 건설하기 위한 운동은 좌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처음부터 조직적 통합 그 자체를 목표로 해 추진하기보다는 조직 소속 등을 넘어 좌파연대의 결박성을 인정하고 좌파연대를 위해 적극 활동할 결의를 지닌 개인들이 연대체를 형성하는 형태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 연대체는 애초에는 낮은 수준의 연대체로 출발하겠지만 참여하는 개인들이 연대체에 부여하는 의의가 커질수록 협의체적 조직에서 높은 수준의 정치적 조직체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대체는 좌파단체들간의 공동투쟁을 촉진시키고 좌파연대를 위한 다른 제반사업들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좌파운동의 조직적 구심의 건설에 기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김세균, 2004: 5).

지원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또 노동자정당은 합법적 정당이고 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정당이며,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벌이는 정당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정당은 다른 민중 운동과 사회운동, 민족민주운동, 시민운동, 여타 동조 세력과의 정치연대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정당은 노동자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통해 그 성장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대중노선을 철저히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자기 위상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김금수, 1999: 27~28)

라고 정당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진보정당은 다양한 계급연대에 기반해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정치주체로서 특히 첫째, 전위정당 또는 엘리트 정당이라기보다는 대중정당이어야 한다: “진보정당이 대중정당의 성격을 갖는 것은 지지기반의 특성이나 당 운영원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절대 다수의 대중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와 정치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은 일정 수의, 아니 상당수의 대중을 정당 내부로 조직하고, 교육·훈련·토론 등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식으로 무장하게 할 때만이 의미있는 정치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노회찬, 1999: 10). 이러한 진보정당의 대중정당적 성격은 단순히 다수를 포괄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 활동에 대중 참여와 대중 주체의 원칙이 실현”될 때 획득될 수 있다(노회찬, 1999: 10). 그리고 둘째, 이들이 추구하는 진보정당은 노동자 중심성과 지도성의 당이 아니라 ‘근로대중’의 당을 의미한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진보정당의 주체는 전체 당원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지식인, 청년, 학생, 자영업자, 양심적 중소기업인 등 모두가 대등한 당의 주체이다. 물론 당의 주체인 당원의 구성은 당의 발전과 함께 변화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창당에 참여한 발기인을 기준으로 할 때, 당원의 99.9%가 근로대중이다. 그리고 전체 당원의 90%가 노동자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전체 당원 중 50% 남짓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민주노동당은 근로대중의 당이며, 노동자는 당의 주도세력임이 분명하다(노회찬, 1999: 10).

이처럼 노회찬은 “노동자계급의 내부 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근로대

중 내부에서 노동자계급과 비노동자계급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점차 의의를 잃어 가고 있다”(노회찬, 1999: 10)는 관점에서 노동자 중심성과 지도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노동자 중심성과 지도성은 선협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와 경쟁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³²²⁾ 결국 그는 진보정당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진보정당의 발전전략이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대중 일반의 동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대중 일반의 지지와 참여를 고르게 획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곧 노동자계급의 지지와 참여를 확대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노회찬, 1999: 10).

노회찬은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노동당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데, 민주노동당의 경우 현실적으로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체 근로계층의 당으로 성장하는 발전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내부의 지지를 확대 강화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 성과에 바탕해서 외연을 확장해 가는 것”으로서 “첫 단계의 발전전략이 성과를 거둘 때 비로소 진보적 시민운동과의 연대문제, 적녹동맹 등 외연을 확장하는 두 번째

322) 민주노동당의 발기인대회를 앞두고, ‘노동자 중심성’을 규약에 명기된 조직의 성격으로 표기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었지만 이론적으로 별 의미 없는 논쟁에 불과했다. 만일 ‘노동자 중심성’이 당내 헤게모니를 가리키는 뜻이라면 이를 규약이나 당헌에 명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는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것도 아니며, 세습되는 것도 아니다. 당내 헤게모니는 적극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경쟁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는 속에서 획득되는 것이다. 여성할당제와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에게 30%의 할당제가 실시된 것은 아직 당 내의 노동자가 자력으로 헤게모니를 갖기 힘들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한편 ‘노동자 중심성’이 ‘지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다. 북한, 중국,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은 이들 나라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는 노동동맹에 기초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도성’ 역시 ‘중심성’과 마찬가지로 선협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 분명한 것은 노동자계급의 발달이 아직 여타 계급계층으로부터 지도성을 인정받지 못한 단계라는 것이며, 동시에 한국의 노동자계급에게는 동맹의 상대가 될 유력하고 신실한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노회찬, 1999: 10).

단계 전략의 생산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노회찬, 1999: 10).

이에 대해 좌파들은 앞선 논의들을 “제도권 정치’를 정치의 본령으로 간주하는 선거주의적-의회주의적 정치노선”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노선이 “대중정치-운동정치를 가로막고 노동자정치를 부르주아정치에 종속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비판한다(김세균, 1995: 9). 이런 관점에서 “정당을 의회주의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변혁적 투쟁정당으로 만들 것인가는 한 정당 내에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노선이 아니라, 서로 분리되어야 할 두 개의 정당노선에 속한다”면서(김세균, 1995: 9)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당은 좌파연합(활동가 정치조직) 중심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노동자계급정당으로서 변혁적인 비제도적 투쟁정당, 즉 “노동자계급정당이자 활동가정치조직으로서의 비제도적 투쟁정당”(원영수, 2004: 9)이라고 성격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당’은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전면화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며, 조직화 기획이다. ‘사회주의당’은 사회주의적 실천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주체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연대체라는 점에서 활동가 정치조직이다. ‘사회주의당’은 전체 노동자계급 대중의 일부이고 대중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대중 자신을 사회주의정치의 주체로 세워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노동자계급의 대중정당으로의 발전을 지향한다(남구현 외, 2004: 9).

제도정치에 적극 대응하고 의회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하지만 그러한 대응과 진출을 우선시하는 ‘제도정당’ 내지 ‘의회주의 정당’이 아니라 ‘운동정치’ 내지 ‘대중정치’의 성장·발전에 복무하는 ‘비제도적 투쟁정당’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녀야 한다(김세균, 1995: 9).

이처럼 이들이 보기에 “현장 활동가조직과 노동자 정치조직의 정치적 재조직화를 통해서 건설되는 노동자계급정당”은 “노동자·민중의 선진역량을 주축으로 삼음으로써” 그 자체가 전위정당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에 대해서도 지도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김세균, 2004: 5). 그리고 노동자계급정당 건설투쟁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모든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혁신과 연대

를 통한 정치적 재조직화”과정이어야 한다(남구현 외, 2004. 9).

이를 위한 과제로 노동자의 힘은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에 2005년 하반기에 ‘좌파연대체(Socialist Alliance)’를 건설하고, ‘좌파연대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의 기획과 실천을 통해 2007년에 ‘노동자계급정당’을 함께 건설할 것”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한다(남구현 외, 2004. 9)

첫째, ‘비제도 영역’에서 정치-사회운동의 ‘정치적-조직적 구심’을 건설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이 운동체가 중심적 역할로 삼아 나가야 하는 것은 ‘제도정치’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는 영역에서의 ‘대중의 정치’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사회의 이행의 과정이 ‘권력 장악’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조건으로 ‘권력의 대체’로 이어지는 과정이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대중 권력’ 형성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민중연대투쟁’을 강화하고 민중연대전선을 재편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셋째,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계급적·민주적 강화와 더불어 ‘정치적-계급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대중적 정치행동을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강동진, 2003: 1).

한편, 양자는 정치세력화의 의회에 대한 방침이 ‘의회주의인가 또는 의회전술인가’를 둘러싸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파 경향의 경우 브라질의 PT당이나 서구의 시민당을 모델로 해서 권력의 장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부르주아 대의체제하의 모든 정당들은 선거를 통해 평가받고 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력의 증대와 쇠퇴를 겪게 된다. 정당인 한 이것은 피할 수도 거역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선거를 치르면서 반성했고 선거를 통해 성장했다는 것은 지난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진보정당으로 성장한 브라질 노동자당의 자기 고백이다. 100년을 넘어서는 유럽 진보정당의 역사는 자신들이 취한 정책의 변천과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의 변화를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기술하고 있다(노회찬, 1999: 10).

따라서 우파적 경향이 비록 의회를 통해 모든 개혁과 변혁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의회 진출을 중요시 여기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에 대해, 좌파들은 의회주의 정당, 합법적 정당, 제도권 정당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사회 내의 정당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선거주의 혹은 의회주의 정당은... 다른 어떠한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마디로 물계급적인 유권자들의 지지표를 획득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노동자·민중세력이 단 한 석이라도 의회에 진출하기만 한다면, 부르주아 지배세력 전체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4·13총선에 임하고 있다(김영수, 2004: 4).

따라서 좌파세력들은 권력의 장악이 아니라 권력의 대체를, 의회주의가 아니라 변혁의 전술로서 의회를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은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로 확장될 정치적 쟁점에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개입을 해 나가야 한다.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민중진영의 요구와 주장을 대변하면서 의회 공간에서 투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독자적인 실체로 대중에게 다가가야 한다”(남구현 외, 2004: 9).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전술을 밝히는데, 이에 의하면 “민주노동당에 결합해서 좌파 블록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영향력과 좌파블록의 사회주의에 대한 상과 조직이 통일되었을 때로 국한해야 하며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혁신과 연대를 통한 정치적 재조직화’ 시도에 걸림돌”이 된다고 반대한다(남구현 외, 2004: 9).

이상에서 보듯이 이념, 정치세력화의 개념, 그리고 정당에 대한 성격 규정 등의 차이는 정당과 노조관계³²³⁾의 차이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323)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제조건이 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정당 간의 관계는 대체로 세 가지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당이 노동조합의 우위에 서서 이를 지도하고 통제하는 경우이다. 러시아 혁명기 레닌의 볼셰비키 정당이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정당(국가)과 노동조합 간의 관계가 그러했으며, 유사한 노선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공산당들(예: 프랑스 공산당 등)도 그런 입장을 고수해 왔다. 둘째는 양

데, 일단 우파경향의 주장들은 민주노총이 정당 건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회찬은 한국의 경우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가 “당-노조 동시건설, 성장형”이라면서³²⁴⁾ 민노당이 “민주노총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과 노조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까지 민주노총의 역할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조직적 결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정당 가입을 ‘권장’하는 수준이다. 대의원대회 등의 결의를 통한 정치적 지지를 넘어서서 집단가입(혹은 조직가입)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자가 긴밀한 조직적 연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영국, 스웨덴, 독일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노동자정당은 대부분 사회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셋째는 프랑스나 이탈리아형이다. 이 경우에는 조직노선이나 추구하는 이념이 상이한 복수의 이념 정당과 복수의 산별노조가 존재하면서 사안에 따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럽에서의 경험과는 달리 노동자 정치세력화 문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하고 있는 사례로 브라질과 남아공화국을 들 수 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2002년 말 대선에서 풀라가 세 번의 좌절 이후 네 번째 도전에서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노동자당(PT당)은 집권당이 되었다. 노동자당(PT당)은 1979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정당으로 브라질 금속노조 등을 포함한 브라질민주노총(CUT)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남아공의 경우에도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는 정치조직인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와 남아공공산당(SACP)과 함께 3자 연대의 한 축을 형성하여, 만델라 정권의 창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만델라 정권 출범 이후에도 정부기관 등에 다양하게 참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조직으로서 정부에 대해 비판과 견제를 하는 역할도 수행해 왔다. 만델라를 계승한 음베키 정권에서도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브라질이나 남아공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의 인적 물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규모로 통일 단결하여 투쟁할 수 있는 산별노조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석준, 2003).

- 324) 창당을 준비하는 지금 단계에서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제대로 된 민주노총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창당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는 당과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당이 먼저 건설되고 당이 노동조합운동을 주도했던 독일, 스웨덴 형과 다르며 영국, 프랑스 등의 선노조 후정당형과도 다르다. 민주노총이 여전히 산별노조를 만들어 가는 건설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경로는 당-노조 동시 건설, 성장형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독일, 스웨덴의 선정당형의 경우처럼 당의 정치적 구심력이 보장받는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영국의 선 노조형처럼 노조가 당을 사실상 책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노회찬, 1999. 6: 15).

‘민주노총당’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창당 초기 조합원의 진보정당 가입률은 10%선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 TUC 조합원의 60%가 노동당에, 스웨덴 LO 조합원의 75%가 사민당에 가입해 있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노회찬, 1999. 6: 15).

이에 대해 김세균은 “민주노총과 같은 대중조직이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주체로 직접 나서지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이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서로 구분되는 고유의 과제를 지니고 있는바, 정치조직의 건설은 노조간부가 아니라 정치조직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어야 한다. 둘째로 그간의 노동운동의 역사가 보여주다시피 노동운동 내부에는 항상 ‘개량적 흐름’과 ‘변혁적 흐름’이 존재해 왔는데, 정치조직은 이 양자의 흐름을 명백히 구분하는 선상에서 조직되어야 하는 반면 대중조직은 양 흐름을 노동자들이 직면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 속으로 통합해 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김세균, 1999, 10).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민주노총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현장조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조직이 노동자와 점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현재와 같이 민주노동당만을 패권적으로 엄호하는 정치방침을 유지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장정치활동의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걸림돌이 될 뿐이다. 민주노동당도 다양한 정치조직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정치방침을 통한 강제는 오히려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과 주체 형성, 조직화를 제약할 뿐이다”라고 주장한다(고민택, 2001).³²⁵⁾

325)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특정 정당에 가입 결의하는 하는 것은 대중조직과 진보정당의 상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민주노총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민주성, 자주성, 통일성, 계급적 단결의 원칙, 대중성 등)에 기초하여 정당으로부터는 조직적으로 독립한 상태에서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진보정당과 여타 노동자 정치조직과 상호 지원·연대, 혹은 비판·견제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한다. 물론 이는 노동조합이 정치적 문제에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좌파세력들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은 좌파와 우파 간의 입장 차이를 보다 잘 드러낼 것이다. 좌파는 민노당을 계급연합당으로서 사민주의적 개량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국민승리 21부터 그 기원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보기에 15대 대선에서 ‘국민후보운동’을 전개토록 만든 국민승리 21의 ‘개혁적 국민정당 노선’은 “탈계급적-탈민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³²⁶⁾ 따라서 “민주노총이 그간 추진해 온 정치세력화란 그 첫 순간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었고, 정치세력화를 열망하는 노동자대중의 열망을 옳곧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김세균, 1999. 10). 따라서 이들은 민주노총의 “새로운 진보정당은 기껏해야 민주노조 외부의 개량주의적-의회주의적 정치세력과 민주노조 내부의 관료주의적 상층간부층 간의 강고한 동맹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김세균, 1999. 10). 결국 이들이 보기에 그 예상은 적중했는데,

첫째, 민주노동당은 계급적 우파세력 주도하에 계급적 우파세력과 중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으로서의 자신의 원칙에 입각해서 특정 정당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대중조직은 그 소속 조합원에게 정당 혹은 정치조직의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거꾸로 진보정당의 경우에도 더 이상 대중조직의 결의에 입각해서 정당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벗어나 자신의 정치사업을 통해 대중조직 내부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조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박성인, 1999: 85~86).

- 326) 김세균은 국승 21의 경우 “변혁성의 탈각”이 나타났다면 세 가지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우선 국민승리 21이라는 명칭과 좌파블록의 대선대책기구에서의 배제이다. 명칭의 경우 그는 “왜 하필이면 대선대책기구의 이름을(예를 들어 ‘노동자·민중승리 21’ 등이 아니라) ‘국민승리 21’로, 그리고 진보진영의 후보 명칭을 ‘노동자(민중)후보’가 아니라 ‘국민후보’로 정”했는가 라고 물으면서, 이유를 국민과 집행부인 민주노총 제1기에서 찾고 있다. 둘째, 국승 21 결성 과정에 “민중후보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때로는 ‘철없는 관념적 과격파’로, ‘정치의 ABC도 제대로 모르는 아마추어 활동가로 매도’하면서 “국민후보”를 채택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설플 민족주의에 호소-일어나라 코리아” 사건인데, 이 슬로건을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대위 위원장은 그 문제를 선대위에 다시 안건으로 부침이 없이 위임된 사항으로 간주, 위임받은 모임의 논의를 거쳐 원래의 안대로 제작토록 결정”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 예를 들어 ‘민중의례’ 대신 ‘국민의례’를 행한 것 등에서 이미 드러난 - 국민후보론적인 정치관에 내재해 있는 이념적 성향이 IMF사태를 만나 집약적으로 표출되어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김세균, 1999. 3).

간파 및 민족주의세력과 계급적 좌파세력의 연합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민주노총과 전농과 같은 대중조직에 의해 조직적으로 뒷받침 받고 있다. 셋째, 민주노동당이 계급적 우파세력 주도하에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노선은 기본적으로 사민주의, 의회주의노선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민주노동당의 성공적인 의회 진출 등에 힘입어 당 내부에서 우파 헤게모니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밑으로부터의 요구와 당내 좌파세력의 활동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성격이 운동정당, 변혁정당으로 바뀔 가능성은 적으며, 이 점은 설령 좌파세력 전체가 민주노동당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세균, 2004).

이런 점에서 이들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주노동당식 경로는 설령 성공(집권)한다 해도 그것이 노동해방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은 그것이나마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주장은, 그조차 꿈 같은 현실 때문에 진보적인 듯이 보이지만, 대안이 될 수 없는 전망을 붙잡고 늘어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패배주의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한다(고민택, 2001).³²⁷⁾ 즉 이들이 보기에, “민중운동의 정치적 수렴이 진보정당운동으로 수렴되는 것이 ‘민중연대투쟁의 정치적 확대-대중운동의 강화’라는 선순환을 이루지 못하고 ‘민중연대투쟁의 경제적 이해(실리주의)로의 종속-대중운동의 약화’라는 악순환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진보정당으로 인한 “대중운동의 실리주의화·진보정당운동의 탈현장화는 결국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새로운 질로 전환시키는 기체로서 작동하기보다는 불안정한 정치적 지배체제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대중의 ‘탈정치화’는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한다(강동진, 2003). 따라서 이들은 “민노당에 대한 전략적 개입은 현단계에서 불필요하며, 민

327)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에서 ‘연대와 비판’의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연대는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비판’은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사민주의 경향 및 민주노동당이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에게 견인당하는 현상 등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좌파세력의 일부를 민주노동당 내부에 파견하는 일을 저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파견은 어디까지나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김세균, 2004).

노당의 민족민주정당·사민주의정당으로의 전략을 막는 가장 효과적 수단
 은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압력”에 있다고 본다(원영수, 2004). 이런 맥락
 에서 이들은 “좌파운동의 조직적 구심은 민주노동당과는 별개의 조직체
 로 민주노동당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세
 균, 2004).

이상에서 보듯이 정치세력화의 정의, 목표, 방법, 경로 등 노동자의 정
 치방침에 대한 상이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점은 매우 흥미
 롭다. 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논쟁이 특히 진보진영 내에 사회주의 세
 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의 입장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잣대가 되었다는 점
 에 있다.

다. 노동운동 위기론(II)

2004년 노동운동 위기 논쟁은 박승옥의 글(『한국 노동운동, 종말인가
 재생인가』, 『당대비평』, 2004년 가을호)³²⁸⁾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글이 파
 장이 큰 것은 그가 전태일노동자료연구실 대표를 지내는 등 오랜 기간 노
 동운동에 깊게 관여해 온 노동운동 내부 인사라는 점과, 노동운동 ‘위기’
 의 1차적 원인을 노동운동 내부에서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판의 칼
 끝과 대안이 본질적인 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현재 운동
 진영이 신자유주의의 대공세 앞에 자신의 ‘지도’를 찾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그의 글은 주목받기에 충분했다. 여기에서는 박승옥의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먼저 살펴보고, 박승옥을 지지하는 관점을 서술
 한 다음 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우선 박승옥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현재 “정당성의 위기와 존재의 위
 기”에 처해 있으며 이것은 “때 늦은 개화, 때 이른 조락”을 경험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고 선언한다. 그렇다면 존재의 위기를 불러올 정도의 정당성
 의 위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운동이 기득권을 가진 비도덕적 소수자

328) 이하 박승옥 관련 인용은 박승옥의 글(『한국노동운동, 종말인가 재생인가』)에서
 추출되었다.

의 운동이 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한국의 민주노동운동은 ‘가진 소수의 비도덕성’을 질타하며 일어섰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다수의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위기를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 어느새 ‘또 다른 가진 소수’의 운동으로 바뀌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남성노동자 중심의 민주노총은 오히려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되기도 하고 이에 대해 동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더구나 노동운동은 ‘왕자병 환자’로 치부되는 경향 아래 자신을 옹호해 주는 어떠한 사회세력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갇혀 있는 실정이다.³²⁹⁾

박승욱이 보기에 “이제 노동자들의 요구는 어느 정도 관철되었고 최소한 조직노동자들은 그 투쟁의 과실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한다.³³⁰⁾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조직노동자들이 소수(“전체 노동자의 12%”)라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의 도구, 이른바 ‘자판기 노조’로 변질”되었다는 데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999년을 기점으로 50%를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방치되고 있다. 결국 박승욱은 대기업 남성 조직노동자들이 “중소영세기

329) 박승욱은 소수의 비도덕성이 이 같은 가치분배의 측면에서만 아니라 행태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노동운동의 비도덕성을 질타한다: 조주은 : 나는 대기업 정규직 남성 중심의 현재 노동운동은 ‘썩었다’고 생각한다. 파업을 하면서도 ‘빼빼아줌마’를 불러서 같이 놀고(...) 노사가 상견례를 핑계로 룬살롱을 같이 가는 경우도 있다. 사용자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아가씨들 끼고 양주 마시면서 놀고, 사용자가 용돈을 쓰라고 주머니에 돈을 찢러 주면서 미끼를 던지면 일부 노동운동가들은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망을 가지고 진보가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자괴감이 든다(『우리는 왜 그렇게 혁명을 갈구했나: 전순옥 대 조주은』, 프레시안, 2004. 5. 16).

330) 이와 관련하여 그는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고 있다: 지금은 마치 임금인상이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됐다(...) 대기업 노동자들 중에서는 연봉 4~5천만 원, 심지어 6천만 원을 받는 곳도 있다. 강연을 하러 가면 아예 노조에서 그런다. 강연 듣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정말로 자본가들이 바라는 그런 노동운동이 지금 한국 노동운동의 모습이다(전순옥 발언, 『우리는 왜 그렇게 혁명을 갈구했나: 전순옥 대 조주은』, 프레시안, 2004. 5. 16).

업 비정규,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꼴이 되어 버리는 현재의 노동운동 관행”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그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어느새 아제국주의(亞帝國主義) 국가의 노동자로서 몰신주의와 소비증독의 그늘 아래 사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의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는 정당성의 위기의 원인이 “단순히 자본측과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나 “국가와 자본의 탄압” 때문이 아니라 “노동운동 자체의 내부 요인”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선 그는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실질적인 효율성을 상실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에서 찾고 있다.

노동조합이 임단협 위주의 ‘전투적 투쟁’을 해마다 되풀이해 오며 그 성과를 누리고 있는 동안 이를 무로 돌려버리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의 역설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것은 임단협 이외의 노동자 생활조건,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대안의 정책 부재가 낳은 필연의 결과였다. 취약한 사회복지의 현실에서 노동소득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교육비와 보건의료비, 교통비, 주거비, 불합리한 조세 등은 인상된 임금을 도로 가져가 버리곤 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에는 시장이라는 유령의 손에 의해 일자리마저 박탈당하는 구조조정을 일상으로 강요당해야 했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은 더욱 가열찬 총파업투쟁과 ‘총력집중투쟁’, 심지어는 ‘양치기 소년의 늑대’와도 같은 총파업선언의 빈번한 반복이었다.

그가 보기에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한국판 생디칼리즘”으로서 “노동계급 이외의 어떠한 사회세력과도 협력하지 않고 오로지 노동계급 독자주의의 폭력 총파업과 직접 전투를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 공격과 해체”를 꿈꾸는 생디칼리스트에 불과하다.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노동운동을 거꾸로 군사화시켜 노동조합을 전투부대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보루 역할에서도 빠르게 밀려나 버리게 만들었다. 끝없이 반복되는 ‘전투’는 노동운동을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납득할 수 없는 정당성의 혼란에 지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민주주의와 평화세력

이 아닌 무책임한 싸움꾼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의 위력을 과시하는 상습의 저항집단으로 인식되게끔 했을 뿐이다. 우리 사회의 허다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갈 능력과 철학이 있는 대안세력의 행위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특히 전투적 노동조합주의가 “갈수록 떨어져 가는 투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력한 탈출구를 산별로의 전환”에서 찾고 있는데, 그는 이것도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규직 노조 테두리 안에서 헤쳐모여 식으로 산별로 전환하는 것은 정규직 노조의 교섭력을 높이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언정 현재의 노동운동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별 기여를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별노조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 산별 전환도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의 이득에 복무할 뿐이라고 보았다.

박승욱은 또한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도 현재 노동운동 위기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재 노동운동이 그만한 능력을 가지지도 못했지만 가졌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한국사회가 더 나아진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면서 현재의 위기는 “성장과 분배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모델이 성장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의 노동운동”이라고 비판한다.

더 많은 임금, 더 많은 여가, 더 많은 권력을 지향하는 ‘성장의 노동운동’은 결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안이 될 수도 없다. 이제 노동운동은 삶의 양을 따지는 욕망의 운동에서 삶의 질을 따지는 운동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의 노동하는 삶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노동의 개념을 자본주의의 임노동으로 한정하는 경직된 인식을 이제는 버려야만 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노동은 분명히 상품이며 이윤의 원천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동안에는 인간임을 느끼지 못하고 노동이 끝나고 임금을 소비할 때

비로소 인간으로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박승옥은 자신의 대안을 언급하기에 앞서 그동안 존재했던 몇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강화”, “정치참여를 통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영향력-정치화 모델로의 전환” 등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과 집행부인 제4기 민주노총에 대해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준다: “2004년 민주노총의 집행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이전 집행부와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긴 하다. 2004년 임금인상 요구에서도 특별요구로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임금’을 추진하고 있고 새롭게 정책연구원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또 민주노총을 주요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 처음으로 진출하여 이전과는 다른 정치지형을 만들어 내며 새로운 ‘진보정치’의 실험을 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이러한 행보는 노동운동의 근본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이 시각들도 큰 범주에서 볼 때 여전히 생산력주의, 성장 모델, 발전중독증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박승옥은 “근본적인 대담한 발상의 전환”과 “치열한 자기 성찰”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운동철학과 방식을 아예 전면 혁신하는 일대 전환을 모색하지 않는 어떤 새로움도 결국은 인물의 새로움으로 끝나고 말 공산이 크기 때문”일 정도로 그 위기의 정도가 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박승옥은 ‘생소한’³³¹⁾ 대안을 제출한다. 이 대안은 한편으로는 성장모델에 대한 비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태일 정신³³²⁾에 기반하

331) 생소한 이유는 그도 언급하고 있듯이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에서 노동조합이 생태적 대안을 자신의 의제로 삼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태적 대안은 한편으로는 신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답론일 수 있다.

332) 박승옥에 있어 전태일 정신의 현재적 부활이란, “자식들과 함께 자살이라는 극단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국민의 노동자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3등 시민으로 전락한 중소기업 하청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을 조직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길”에 있다.

고 있는 것으로서 “생태주의” 또는 “생태공동체”로 표명된다.

문제는 생태주의로의 인식 전환이고, 그 인식 전환을 위한 민주주의의 대화와 설득력과,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다. 극도의 배금주의, 극도로 파편화된 개인주의를 벗어나 자율 자치의 교육과 학습 공동체, ‘보다 더 많이’가 아니라 ‘보다 더 적게’ 소비하고, ‘보다 더 가까운’ 대안사회의 전망은 이 같은 노력으로부터 비롯될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생태적 전환이 사회 전체의 변화”라고 주장하면서³³³⁾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대안들을 “성찰적 전환”의 관점이라면서 제시한다. 우선, 그는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한국 민주화운동이 저항의 민주화운동에서 1990년대 시민단체의 등장과 더불어 참여의 민주화운동으로 전환했다면 이제 민주화운동은 성찰의 민주화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노동운동이 이제야 뒤늦게 민주노동당을 통한 참여의 운동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참여와 함께 성찰의 운동으로 곧바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³³⁴⁾

이제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등 주변부노동자를 조직하는 풀뿌리 노동운동으로의 전환과 함께 생태적 전환의 녹색운동으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생산협동조합, 소비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운동을 비롯한 공제조합과 생활공동체운동 등 모든 조직 형태를 창조와 도전 정신으로 폭넓게 모색하면서 정책과 일상생활의 실천까

333) 그는 생태적 전환은 또한 “수많은 일자리의 창출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태양력, 풍력, 수력, 조력, 바이오매스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시스템과 생태건축, 자연 유기농업부터가 그렇다. 월드워치연구소는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화석 연료보다 5배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고 계산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태양에너지로의 전환으로만 110만 개, 생태적 교통정책으로 100만 개, 물보호 기술과 물 절약 기술의 발달로 25만 개, 생태적 세제 개혁으로 1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프란츠 알트, 『생태적 경제기적』, 2004) 이미 유럽의 노동조합은 제한적이지만 환경보호조치가 일자리 파괴(jobkiller)의 측면보다 새로운 고용창출의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34) 이런 관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전교조의 ‘참교육운동’은 어디로 갔는가. 병원노조의 ‘참의료’는 어디로 갔는가. 자치와 자율의 민주주의를 이루고 인간관계의 근본을 바꾸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던 노동운동의 수많은 의제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지 생태적 전환이라는 시각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제 참다운 노동 해방과 인간다운 삶은 단순히 자본의 억압 착취를 제거한다고 얻을 수 없으며, 양극화와 차별을 철폐하는 노동운동의 건강성은 사람과 사회가 자연의 일부임을 겸허히 인식하는 생태공동체의 전망 속에서 비로소 뜻있는 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박승옥은 노동운동이 “우물 안 개구리 식의 낡은 노동자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민권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시민운동으로부터 배울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그는 시민운동이 “1980년대 말부터 일반시민을 사회운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 “환경문제, 여성문제, 보건의료문제, 부패문제, 법률문제, 조세문제, 소수자문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낡은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일상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노동운동은 은연중 이런 시민운동을 부르조아지의 배부른 운동으로 폄하하고 적대시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운동에게 한계와 고립만 자초할 뿐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박승옥은 노동자들이 더 많은 시민운동에 참여해야 하고 노동운동은 시민운동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운동방식도 바뀔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는 운동방식 변화의 사례로서 삼보일배를 들면서 “생태주의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은 당연히 운동방식도 생태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노동운동은 당연히 단체행동의 방식부터 기존의 부정과 투쟁의 관행을 넘어서서 이를 포섭하는 긍정과 설득, 성찰과 포용과 절약의 새로운 방식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³⁵⁾.

대화와 설득, 자치와 자결의 민주주의가 생태적 대안모색의 운동방식이다. 노동운동은 노동자 전체가 생태적 전환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

335) 그는 파업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춘계투쟁, 하계투쟁의 파업에 대해서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파업은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투쟁 형태이며 이것이 남발된다는 것은 하지하의 전략일 수 있다. 더구나 아직도 시위 때 등장하는 쇠파이프는 이제 버려야 한다. 그로 인해 다치는 것은 노동자와, 그리고 노동자와 하등 다를 바 없는, 국방의 의무 때문에 거기 서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뿐이다.

도록 하는 과감하고도 광범위한 공론화의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자고 제안하는 데 진실의 언어와 성찰의 삼보일배보다 더 위력 있는 것은 없다. 이제 우리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반성을 통해, 거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변화와 전환을 모색해야만 한다.

박승옥의 생태주의는 노동운동의 ‘동네’에서 매우 생소한 담론이다. 그동안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담론에 익숙한 활동가와 학자들에게 인식 주체를 이성, 계급 또는 인간 중심에서 자연 또는 생태 중심의 사유로 바꿀 것을 주장하는 논의는 매우 생소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생태주의 자체가 좌우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매우 다양하게 걸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박승옥의 생태적 대안의 이념적 위치가 논의되어야 한다. 그의 이념적 위치와 관련하여 볼 때, 사회주의와 계급 개념에 대한 그의 비판이 두드러져 보인다. 우선 그는 사회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는 노동운동의 대안 이념이 될 수 없음이 이미 현실에서 입증되었다. 사회주의는 성장과 발전 이념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쌍둥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개인 소유를 제한한다고 해서 생태적 위기가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³³⁶⁾

박승옥의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은 계급 적대에 대한 부정에 기반하고 있다. 그는 계급 대신 시민 개념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마르크스주의 계급 개념과 결합되어 있는 과거의 노동자 개념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배타성을 갖고 있다. 계급의식과 적대감을 지나치게 고취시키는 계급 개념은 노동운동의 능동적 전환에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계급과 계급의식, 그리고 계급형성은 일정한 괴리가 있다. 노동시장의 단절과 대응하여 노동자들 또한 매우 파편화된 상태로 분절되어

336) 이제 우리는 소비되어 없어지는 것을 ‘생산’이라고 규정하고 소비와 낭비를 ‘성장’이라고 부추기는 눈먼 쓰레기 같은 경제학의 신화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자연을 고려하지 않기는 근대 경제학이나 마르크스 경제학이나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아니면 다른 어떤 사회체제건 지구자원의 도둑질을 통한 말 그대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이란 이제 불가능하다.

있는 게 현실이다. 오늘날은 특히 경제 체질의 변화와 더불어 잡계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급의 분류가 애매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 또한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계급의식으로 나아가면 더욱 그렇다. 계급형성에 초점을 맞춘 노동운동과 조직화 전략은 어찌 보면 폭이 좁은 일정 한계 내의 낡은 운동만을 상징하는 것이며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무능력의 소치일 수 있다. 진정한 대안모색운동이라면 기존의 계급운동 시각을 과감히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배타적 계급운동은 설혹 가능하더라도 사회를 근본에서부터 바꾸는 데 폭넓은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통합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그는 노동운동이 “이제 시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에 대해 회의하는데, 그에 의하면 “마르크스주의에는 이윤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배제하는 자본의 배타성과 마찬가지로 부정의 배타성이 곳곳에 기저로 깔려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노동운동은 시민이란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제 노동운동은 “시민은 ‘서울 시민’이라는 말처럼 일반 국민을 지칭하는 용어이지 결코 부르주아지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승옥의 주장에 대해 대표적인 비판은 마르크스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논자들에 의해 행해졌다. 전지윤(반전반자본주의 노동자운동단체 ‘다함께’ 기자)은 우선 박승옥이 “이미 1992년 ‘나라경제를 살리는 것이 곧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길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사회발전적 노동운동론’을 주장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의 논리가 “의도와 상관없이 지배자들의 노동운동 공격에 이용됐다”고 비판한다(전지윤, 2004. 이하 전지윤 관련 인용은 이 글 참조).³³⁷⁾ 그러면서 전지윤은 사실 그의 “노동운동 비판 논리가 노무현과 지배자들의 노동운동 공격 논리와 맞닿아

337) <매일경제신문>은 “현재의 노동운동이 이미 배가 불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변모했다”(9월 5일자 사설 ‘선배 노동운동가 충고 경청해야’)며 노동운동을 비난했다. SBS는 9월 3일 뉴스에서 “(노동운동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며 박승옥의 글을 언급했다.

있기 때문”이고 “노무현과 조·중·동의 ‘노동귀족론’”과 유사하다고 비판한다.³³⁸⁾ 이와는 달리 전지윤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주장면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근로조건과 임금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투쟁³³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회의 진정한 불평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 사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있지 않다. 진정한 불평등은 노동자 전체와 소수 특권 지배자들 간에 있다. 이 불평등한 구조에 맞서는 투쟁에서 가장 선봉에선 노동자들을 매도해서 나머지 노동자들과 이간질시키고,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노동귀족론’의 본질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지윤은 중심부 노동자들의 전투성을 공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은 것으로 “진정한 문제는 ‘조합주의’”에 있다고 주장한다³⁴⁰⁾: “박승욱이 제시한 ‘시장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338) 이런 주장은 평범한 노동자들과 수십·수백 배나 차이가 나는 진정한 ‘가진 소수’들(국내 1백대 기업 임원들의 2002년 평균연봉은 2억 8천4백13만 원이고 10대 기업 임원의 평균연봉은 13억 1천5백84만 원이다)을 우선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뿐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을 과장한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노동귀족’(?)인 현대자동차 노동자들도 기본급은 1백30여 만 원에 불과하다. 휴일도 없이 잔업, 철야, 특근까지 하루 14시간씩 일해야 연봉 5천만 원이 가능하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월급 평균은 2백12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4인 가족 기준 표준생계비 3백60여 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 즉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만’ 나은 것이다.

339) 하부영(2004, 9.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전 부위원장)은 대공장노조 책임론은 착시 현상에 불과하면서 1987년 이후 노동자들의 생활향상은 특히 “대공장노조의 ‘선도투쟁’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대공장노조가 양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소기업 비정규 미조직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효과로 나타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대공장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는 자본의 배만 더 불릴 것이고 상대적 비교치가 낮아진 중소기업 비정규 미조직노동자들의 임금은 더욱 정체되거나 삭감될 뿐이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대공장노조가 투쟁이라는 무기를 놓는 순간 한국의 노동운동은 일제히 멈춰 서고 노동자들은 암흑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340) 이 같은 맥락에서 이광일(2004, 9)도 박승욱이 지적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의 노동운동이 ‘위기’라고 한다면, 그 가장 큰 원인은 여전히 이 땅의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세계관과 강력한 정치적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한다. 이광일은 더 나아가 박승욱이 진정한 노동운동 위기의 “뿌리”에 대해 말하고

제도적 참여의 대장정”은 노동자 대중을 상층지도부와 정부의 협상을 바라보는 수동적 구경꾼으로 만들 것이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노동 귀족론’과 경찰력을 양손에 휘두르며 노동자 투쟁을 파괴하고, 민주노총 지도부를 구슬러 ‘노사정 대타협’에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승옥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보다 대화에 중심을 두며 이런 시도에 말려드는 것을 “이전 집행부와는 사뭇 다른 행보”라며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지윤은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라 독 자체를 바꾸는 투쟁으로, 즉 ‘임금인상’이 아니라 ‘임금노예제 철폐’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 투쟁에서 혁명적 정치와 조직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전지윤은 생태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대립시킨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의 세우는데, 그에 의하면 마르크스주의야말로 생태주의의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에서 환경 파괴가 이윤을 위한 경쟁적 축적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으며 “즉각적인 이윤을 위해 생산과 교환에 참여하는, 개별 자본가들은 가장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들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윤을 위한 환경 파괴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엥겔스의 말을 빌려 주장한다. 따라서 “생산수단을 사회화하여 경쟁적 축적의 노예인 개별 자본가들의 통제권을 뺏은 것은 생태적 위기가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전제”라고 주장한다:

소수에게 집중된 부와 권력을 다수 대중의 수중에 돌려서 인간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 사회는 반드시 저소비 사회일 이유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돈이 없어 제대로 먹고

있지 않다면서 “글로벌 신자유주의”가 근본 원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신자유주의시대 ‘두 개의 국민프로젝트’가 의미하는 것, 즉 한 국가 내에 부자와 가난한 자, 그 속에서 온갖 권리를 누리는 자와 그로부터 배제된 자들이 기름과 물처럼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진정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노정하는 한계가 무엇인지 그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너무 전투적이어서 문제인가. 아니다. 그것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과거 전노협 건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활동가들이 수많은 논쟁을 통해 확인해 주었듯이,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였듯이, 치열한 투쟁은 하였으며 자기 운동의 전망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바로 그 점에 있다”(이광일, 2004. 9).

입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회가 될 것이다.

전지윤은 이 밖에 계급투쟁과 자본주의하에서의 폭력을 옹호하고 전태일 정신이 비타협적·혁명적 사상에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전태일 정신의 계승은 노동운동이 전투성과 계급성을 더욱 고양시키며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혁을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노동운동은 전태일 열사가 ‘생애 다 못 굴린 덩이들’ 목적지인 ‘노동해방 세상’까지 굴려야 한다.”

박승옥의 문제제기에 대해 전지윤과 같은 비판적 입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최병천(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은 “박승옥의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대안적 해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최병천, 2004. 이하 최병천 관련 인용은 이 글 참조). 최병천의 논지는 노동운동이 낮은 조직률로 인해 제한된 계급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고 기업별노조의 뒷에 걸려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계급적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핵심이며 그 대안은 거시적 코포라티즘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거시적 코포라티즘이 “노동계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조직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미시적 코포라티즘에 비해서 ‘포괄적인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시적 코포라티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거시적 코포라티즘(사회적 조합주의)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약 기구의 ‘위상’을 올바르게 확립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기업별 협상(미시적 코포라티즘)에서 그렇듯이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총파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협상의 파트너가 꼴통 같은 짓을 할 때 일시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거시적 코포라티즘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은 본의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이해관계를 외면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는 거시적 코포라티즘이 진보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제설정 전략, 조직동원 전략, 시민사회와의 연대전략 등을 포괄”하는 어젠다 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노총 제1기 집행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³⁴¹⁾

이에 대해 ‘하이에나새끼’(2004)는 최병천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는 최병천의 “거시적 코포타리즘이 노동운동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하향조정하는 결과만을 불러올 것이라 판단하며 그가 제시한 네덜란드와 스웨덴 모델을 통해 그러한 ‘합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하려고 한다”는 자신의 글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그는 스웨덴과 네덜란드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며 신자유주의하에서 “그가 제시하는 스웨덴식, 혹은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모델의 핵심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양보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복지정책의 향상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환상으로 바라보는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상황은 ‘모든 노동자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그러면서 그는 보다 근본적으로 사민주의의 한계를 지적한다.

최병천 씨는 노동운동진영 내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배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1998년 노사정 대타협의 패배에 대한 경험적 학습효과’인 것처럼 말하면서, 사회적 합의주의가 마치 대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사회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고 있는 서유럽의 사민주의 국가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복지체제는 국제적 경기의 호황 또는 불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사정에 따라 그동안 얻어낸 양보도 도로 빼앗기기 마련이며 그것은 사민주의의 근본적 모순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는 최병천이 결국 박승옥과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체제와 권력에 도전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에 의존하는 그런 식의 해법은 결과적으로 박승옥 씨의 해법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대안은 “노동자가 중심”이 된 “자본주의체제의 완전한 대체밖에 없음”이라고 단정한다.

341) 최병천은 “노동운동의 위기를 전략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어젠다 전략의 수립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노동 ‘내부의’ 평등, 산별노조로의 ‘이행전략’,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등을 거론”했는데 이것을 장문의 글을 통해 “네덜란드 모델과 스웨덴 모델에서의 시사점”에서 도출하고 있다.

한편 황광우(2004)는 “지금의 노동조합운동은 그 시야의 협애함과 계획의 근시안, 오만과 자폐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양상을 노정하고 있음이 사실”이라면서 박승옥의 비판으로부터 “폭력에 대한 근본적 성찰”,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비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관심”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박승옥의 글이 가져올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우려한다.

‘왕자병에 걸린 노동운동’이라. 이게 뭐가? 나는 한참 동안 당혹하였다. 박승옥 씨가, 노동운동을 고립시키지 못하여 안달하는 노무현 정권의 나팔수라도 된 것인가? 지난 13년 전 ‘죽음의 고통을 집어치워라’며 후배들의 분신 항거를 ‘또 다른 파쇼’로 비난하였던 김지하 선배가 그러하였듯이, 자신의 글이, 그 진정성을 떠나, 누구의 노리개감이 되는지 글 쓰는 이들은 조심하여야 한다. ... 그런 류의 타이틀은 평소 진보진영에 냉소적이고, 특히나 노동운동을 씹어 먹지 못하여 분해하는 조중동의 언어이다. 황제병이나 왕자병은 노무현이나 유시민의 행태 분석에 적합한 언어가 아닌가?³⁴²⁾

황광우는 이어 박승옥의 생태주의가 “밑 안 새는 독”이 아니라 “밑 없는 독”이라고 비판한다: “그것은 무소유로 살아가는 법정 스님에게나 어울리는, 아직은 우리 서민에게 어울리지 않는 ‘꿈속의 독’일 따름이다.” 더 나아가 그는 “생태주의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은 좋으나, 생태주의를 위하여 노동운동을 성장주의 운동이라 낙인 찍는 것, 그것은 또 하나의 흑백논리이다.” 황광우는 박승옥의 “조직률 타령”에 대해서도 전경련의 조직률이 “국민의 0.1%”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비판한다. 그리고 “70만 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힘을 정당하게 이끌어 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한다.

342) “누군가가 지적하였듯이 노동운동에 대한 진한 애정이 오히려 노동운동에 대한 쓰라린 비난으로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안타깝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12년 전처럼 되풀이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외부에서만 ‘불났다’고 외쳐 왔는데 이제는 내부에 눈 밝은 사람이 있어 ‘불났다’고 외쳐 주니 외부에서 부채질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노동운동에 대한 애정이 때로는 이처럼 뒤틀려 전달되는 수도 있구나, 느낄 뿐이다”(박태주, 2004).

류동기(중학교 교사, 2004)는 박승옥에 대한 ‘존중’을 표한 다음 황광우의 비판이 “다소 감정적”이라면서 비판을 시작한다. 그는 우선 황광우가 박승옥을 “조중동의 언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중요 논점을 비껴가고 상대의 허점이 될 만한 것을 비난하는 조중동의 언어를 몸소 실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민주노총의 조직물을 전경련에 빗대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노조의 모습이 전경련의 모습과 같다고 시인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노총이 전경련과 닮았다고 비판한다.

아직 풀지 못한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해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자신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자본가가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외국인노동자의 고혈 짜낸 돈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주기 때문입니다. 즉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노동자와 중소기업가 희생으로 배가 불러가는 전경련처럼, 상대적 약자의 고혈이 민주노총의 배를 불린다는 사실입니다.³⁴³⁾

결국 류동기는 민주노총이 “현재 노동운동의 모습은 70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벌이는 것이지 다수의 노동자를 위해 파업을 벌이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황광우가 주장한 “노동현장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70만의 힘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무능만을 고민하는 것은 배부른 노동자의 자기 기만”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황광우가 “폐기되어야 할” 사회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결국 자본가의 권력을 자신들이 대신 차지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의

343) 류동기는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박승옥과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참된 노동운동의 목표는 노동해방이지 임금투쟁이 아닙니다. 노동해방을 노동을 하지 않고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노동해방인데, 현대인들은 여가를 통해 자신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본말이 전도된 노동 현실입니다. 결국 현재의 대안으로는 아무리 투쟁을 하고 자본가와 싸우더라도 결국에는 노동해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여유를 가지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니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폭력적 투쟁 내지는 다른 정규직, 외국인노동자 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착취에 해당하는 폭력으로 돈을 얻어내는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노동과 노동운동의 모습입니다.”

‘특유한’ 노동해방관을 제시한다.³⁴⁴⁾

자본가의 기업과 노동자의 기업이 정당한 경쟁을 통해 노동자의 자본을 축적해야 합니다. 자본이 악이라고 하여 자본을 버리는 것은 자본과 자본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자본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고 존재해야만 합니다. 자본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노동해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자본을 모으고 그 자본을 자연과 인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낭비를 위한 자본의 활용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자본의 활용이어야 합니다. 자본가를 적으로 상정하는 이분법이 아니라 자본가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여 노동해방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논쟁은 지속될 것이지만, 노동운동위기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나올 수 있는 비판과 논쟁의 지점이 대체적으로 짚어졌기 때문이다.

2004년 위기 논쟁의 풍경화는 보다 풍부하고 흥미롭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우선 다양한 사람들이 논쟁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 인용된 논자들만 하더라도 중학교 교사, 익명의 논자(‘하이에나새끼’), 다양한 단체의 활동가, 기자, 그리고 학자 등 예상치 않은 논자들이 논쟁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인터넷 지면의 자유로움에도 기인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논쟁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논쟁에 등장한 담론과 사회과학적 상상력이 매우 풍부해졌다는 점이다. 생태주의, 생디칼리즘, 조합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의 단어는 매우 빈도가 높은 담론들이었다.

이념지형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구분선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박승옥의 생태주의를 사민주의로 규정

344)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까지 류동기는 비교적 장문의 글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는 “1만 불인 사람들이 2만 불의 복지를 실행”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인지, 복지와 관련된 민주노동당의 비현실적 인식이라든지, 고물가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부유세로 인해 자본의 철수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등의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하거나 부르주아지 이론으로 간주하고 사회주의의 입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비판이 이루어졌다. 특히 박승옥을 옹호하는 논의는 사회적 조합주의의 입장 또는 자유주의적 경향의 논의들이었는데, 이것 또한 이념적 구분선을 명확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논쟁은 이념적 경향을 띠고 전개되었고 노동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의 계기를 던지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법이나 기술의 문제만이 아닌 노동운동의 방향성 정립일 것이다. 기업별 노조주의나 정규직 노조만의 노동조건 개선을 벗어난 노동운동의 사회운동성이나 연대성 회복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언론의 공세나 노동자간 분열이 성공하게 된 것은 민주노총이 내세웠던 비정규직 차별철폐나 연대임금정책 등 사회운동적 방향이 보다 철저히 조합원이나 투쟁 속에 각인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는 개별 노동조합에게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운동 전체의 혁신도 더불어 필요한 때이다”(김태현, 2004).

하지만 노동운동 위기 논쟁은 여전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그것은 논쟁이 여전히 도식적이고 강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다. 예를 들어 강양구(2004)는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처음에 제기된 중요한 쟁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라면서 노동운동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생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과연 ‘배부른 소리’일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라면서 생태주의적 논점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일 사람들이 축독새의 아름다운 울음소리나, 밤의 연못가에서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위하는 소박한 삶이 아니라, 바로 생존을 위해 ‘생태적 대안’을 치열하게 모색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노동운동이 ‘뚝구름 잡는 소리’로 폄하한다면, 감히 말하건대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다.” 하지만 그의 이런 절규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 물론 이것은 박승옥의 주장이 이론적이고 체계적이기보다는 통찰적이고 비판적이라는 점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념을 화두로 삼기에는 현실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심각한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우리의 이념적 수준이 여전히 빈곤한 것에 원인이 있는 듯이 보인다.

3. 분화와 경쟁: 사회주의 혹은 시민주의?

앞에서 보듯이 앞선 논쟁들은 이념지형을 분화시켰다. 아니 이미 존재했던 내부 분화가 논쟁을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났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이 논쟁의 과정에서 각 진영은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공고화하는 측면도 있었다. 논쟁의 쟁점은 첫째, 노사정위 참여문제, 즉 사회적 조합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둘째 정치세력화 문제, 즉 민노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셋째 어떻게 노동조합을 조직화할 것인가 등의 세 가지 축에서 전개되었다.

논쟁은 주로 사회주의에 기반한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와 시민주의에 기반한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의 두 입장으로 나뉘어서 전개되었다. 여기에서 국민파는 사회적 조합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사회적 협의에 참여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이들은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주장했다. 2004년 총선에서 10석을 얻음으로써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한편, 현장파는 국민파와 가장 대립적인 정치적 세력으로서, 그들은 현장권력 강화를 통한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노동자의 힘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추구했다. 즉 민노당을 통한 의회 진출이 의회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정당정치는 의회전술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조합주의 전략에 대해 현장파는 이것이 자본의 전략에 밀려든 것이라며 구조변혁을 위한 노동정치를 강조했다.

이런 논쟁에서 민주노총 내에 하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중앙파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즉 그들은 범좌파에 묶이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사회적 조합주의에 있어서 현장파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민노당에 대한 태도에서는 국민파와 입장을 같이함으로써 중앙파의 이념적·정치적 자리는 애매한 듯이 보인다: “중앙파가 좌파연합이 가능한 이유는 사상적 성향은 좌파일 수 있지만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인터뷰 P, 2003. 8. 18). 이 언급처럼 중앙파는 현장파와 마찬가지로 이념적으로

는 스스로의 언급처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통을 견지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특히 민노당에 대한 태도에서 국민과의 정치노선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이 시기의 논쟁은 국민과의 현장파라는 대립적인 두 개의 경향을 만들면서 동시에 중앙파의 이념적 위치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념적 지형과 세력을 보다 분명히 했다.

이 시기의 논쟁은 토론의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 1980년대의 논쟁을 보다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 1980년대의 논쟁이 조직론에 집중해서 민주노총과 정당의 건설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면, 이 시기의 논쟁은 사회적 조합주의가 전면에 등장하여 사민주의 이념과 세력이 보다 표면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논쟁이 전략과 전술의 측면에서 보다 풍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시기의 논쟁이 현장파와 국민파, 그리고 중앙파로 상이한 이념적 지평과 현실 개입의 전략을 가진 정치행위자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1980년대에 비해 보다 세련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논쟁이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볼 때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즉 1980년대 논쟁들이 소수의 활동가들 사이에서 골방에서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면, 이 시기의 논쟁은 신문과 기관지 등의 대중적 지면을 통해, 또는 공개토론을 통해 공공연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념 논쟁이 보다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이런 대중적 논쟁과 자신의 이념에 기반한 상이한 정치적 실천은 각 진영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확실히 하는 데 기여했다.

이 시기의 논쟁이 이상의 적극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대부분의 논쟁들이 항상 '1라운드'에서 끝났다는 점이다. 이것은 각 세력이 자신의 입장을 한 번 발표하고 공표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고 상대방의 입장과 비판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정책과 연결지어 보다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시기의 논쟁 역시 여전히 총론적 수준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한 '홍보'와 '전시'가 이루어짐으로써 토론과 자기 정정을 통한 논쟁이 본격화되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의 논쟁의 주체가 현장파, 국민파, 중앙파 등으로 명확하게 존재했을지라도 이들이 이념적 지평과 자기 정체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거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자각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논쟁 주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앙파는 사민주의적 경향에서 자신들의 다양한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지향”, “사회주의 가치의 지향” 등으로 애매한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취했다. 더 나아가, 논쟁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념 논쟁은 조합원 대중들의 것이 되지 않는 듯한 듯이 보인다. 이것은 대부분의 토론이 여전히 활동가들에게 존재했고 이념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방침을 정할 때조차 현장 토론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에서 보듯이 노동조합 내부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다른 한편 이것은 노동조합 지도부가 현장의 노동자들을 견인해 낼 지적·이념적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이념 논쟁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념적 경향과 정치행위자를 선별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민파의 사민주의에 입각한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와 현장파의 사회주의에 기반한 변혁적 노동조합주의가 이념과 세력으로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로선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것은 이념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실리주의적 경향에 경도되면서 사회주의적 정향과 이미 확실하게 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파가 자기의 내용을 가지고 대중조직에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범좌파가 선거연대를 통해 총력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완패당했고 중앙파가 언제까지 범좌파의 연대의 틀에 머물러 있을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주의의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세력은 현실권력으로 민주노총과 단위 사업장의 현장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은 국민파와 현장파, 즉 사민주의와 사회주의 또는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와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의 경합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1990년대 이후의 논쟁도 1980년대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노동운동 위기 논쟁으로 끝났다는 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위기 논쟁은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를 이념과 연관지어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 및 정치노선은 물론 이념 논쟁을 촉발했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 논쟁들은 노동조합의 위기의 본질이 이념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있다. 더 나아가 이 논쟁들은 이념 논쟁의 지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적이다. 즉 첫 번째 논쟁이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즉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에 비해 두 번째 논쟁이 생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모색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논쟁지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제3절 한국노총의 도전과 모색

1990년대 초 박종근 체제하에서 개혁을 시도했던 한국노총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다. 도전은 노동운동 내부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민주노조운동이 민주노총이라는 전국조직을 만든 가운데 복수노조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이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조직화에 대한 법적 제재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한국노총 내부 조합원들과 조직들의 동요와 민주노총으로의 이탈은 한국노총이 새로운 비전과 실천을 모색하도록 강제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대응은 두 가지 나타났다. 첫째는 박인상 집행부를 통한 한국노총의 전면적 개혁 시도 및 노동운동노선의 확립 시도와 총파업의 참가였고, 둘째는 정치세력화 방침과 이에 따른 정당정치의 건설이었다. 본절에서는 우선 박인상 체제의 개혁과 한국노총의 총파업 참여, 그리고 새로운 운동노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의 정당 건설 시도와 좌절 과정, 그리고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새로운 실천과 노동운동노선의 점검

가. 박인상 체제와 한국노총의 개혁

앞에서 보았듯이 박종근 체제는 1987년 민주화 투쟁과 노동자대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노총이 생존할 수 있는 방향과 이념을 모색했고 이를 통해 민주화의 거대한 충격과 외부적 저항을 어느 정도 흡수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전노협이 임금인상투쟁을 전개하는 사이 정부 후견하에 경총과 임금인상률에 2년 동안(1993, 1994) 서명함으로써 전노협의 비판과 내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결국 1995년 말 박종근 위원장은 스스로 사퇴함과 동시에 여당인 신한국당에 입당함으로써 한국노총의 개혁에 대한 본질과 내용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었다. 한편, 1990년 출범한 전노협은 민주노조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투쟁한 결과, 사회적 동의와 조직적 성장이라는 과실을 취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1995년도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적 결실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등장은 한국노총의 위기감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1996년 초반 한국노총의 선거는 이상의 두 가지 지형, 즉 가시화된 존재론적인 위기감 속에서 치러졌다. “선거 결과 박인상 전국금속노련 위원장이 제16대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1996년 3월 6일 속개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2차 결선투표 결과, 박인상 후보는 투표 참가 대의원 507명 중 313표를 획득하여, 임기 3년의 새로운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박인상 후보는 1959년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한 이후 35년간 노동운동에 투신하면서 합리적 개혁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1969년 조선공사 파업 당시 노동쟁의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던 현장노동자 출신으로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개혁과 통합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하는 강한 노총을 건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한국노총, 1997: 650. 조효래, 2001 재인용).

이처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박인상 위원장을 선택한 것은 한국노총 내부 개혁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따른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박인상 집행부가

내부 개혁과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에 긴박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했다. 이에 대해 박인상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노동운동, 조합원 중심의 노동운동’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한국노총의 조직적 한계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한국노총, 1997: 45~46). 한편, 이 날 대의원대회 회의 대회사에는 “1996년이 한국노총의 국민적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을 강조하며, 특히 한국노총의 개혁 및 조직의 통합과 관련하여, “한국노총을 비롯한 산하 각급 조직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을 더욱 굳건히 하고 운영의 민주성과 도덕성을 견지해야 하며, 아울러 조직적 이기주의와 분파주의로 나뉘어 있는 조직을 통합하는 데 노력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조건 없는 통합”을 제의했다(한국노총, 1997: 676~677. 조효래, 2001 재인용).³⁴⁵⁾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노총의 개혁과 노선 전환은 일차적으로 자주적 노동운동을 강화하고, 투쟁전략을 개발하며, 조직적으로 미조직 분야의 조직화, 산별체제의 강화, 노학연대의 강화, 노동계 통합의 지속적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화’라는 항목이며, 여기에는 정부의 보조금을 거부하고 정치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새로운 대정부 관계의 수립, 사회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대국민 속에서 민주노총과의 차별화 등이 포함된다. 투쟁전략에 있어서도 임·단협 교섭지침을 하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중앙단위 차원의 전국적인 집중적

345) 또한 이 날의 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노동운동 발전과 조직 강화를 위한 결의문』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서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도약을 추진해야 하며, 과감한 체질개선과 노동운동의 분열을 극복하고 산별노조를 건설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노총을 건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결의문은 ① 노총의 이념인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를 강력히 실천할 것, ② 자주적 산별체제의 건설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③ 지속적인 노총의 개혁만이 노동운동 발전을 촉진할 유일한 첩경이며, 재정 확충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 ④ 노동자의 힘의 원천이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조직역량에 있으며, 조합간부의 자질 향상과 조합원의 의식계발에 주력할 것, ⑤ 기업별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노총을 중심으로 전체 노동자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노동현장의 광범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시행함으로써 조합원과 함께하는 진정한 개혁 노총을 건설할 것, ⑥ 노동계의 통합만이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계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를 위해 노동자 대동단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운동의 통합 대열에 즉각 참여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97: 678~679).

투쟁을 전개하며, 노동법 개악 저지에 있어 한국노총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투쟁현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의 노동계 분할지배 전략을 극복하고 노동운동전선의 대통합을 위해, 민주노총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상호신뢰 회복, 사안에 따른 공동사업 추진, 구체적 통합 추진이라는 3단계 점진적 통합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이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98: 735~736, 조효래, 2001 재인용).

이러한 선언은 실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지켜졌다. 우선 박인상 집행부는 운동노선의 측면에서는 박종근 체제의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노선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동노선에 어느 정도 현장성을 가미했다.

박인상이 새로운 걸 해야 하니까, 현장노동운동을 강화 현장성 강화를 하자고 했는데, 그때 구미의 화학공장의 분신사태가 있었다. 그럴 때 민주노총에서 달려들고 그랬다. 우리에게 같이 달려들려 했고, ... 신속성이 떨어졌던 것을 박인상이 들어오면서 신속하게 했을 뿐 운동노선의 차이라든지 특별한 것은 없었다(인터뷰 K, 2003. 8. 14).

현장지향적 노선을 표명한 한국노총의 방침은 총파업에 참가함으로써 보다 극적으로 실천되었다. 1996년 말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노동법을 개정할 때 정부·여당의 셈법은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것은 두 가지 근거에서 기반했는데, 하나는 정부와 한국노총과의 역사성이다. 한국노총은 전통적으로 여당과 ‘공모’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 과정에서 체질적으로 한국노총의 총파업 능력이 거세되었다고 평가되었다. 두 번째는 노동법의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날치기 법에서 복수노조금지 조항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민주노조의 합법화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 한국노총의 은근한 바람이었다.³⁴⁶⁾ 하지만 정부·여당이 전술적 판단의 오류를 범한 지점은 이미

346) 한국노총은 외형상 상급단체와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의 전면적 허용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상급단체만을 주장했던 민주노총에 비해서도 진일보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두 가지 전략적 판단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이대로 법개정이 된다면 기업별 수준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은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한국노총 내부의 강력한 저항, 박인상 개혁집행부의 등장, 그리고 민주노총의 등장으로 인한 한국노총의 존재론적 위기감이라는 새로운 노동정치 상황에 한국노총이 노출되어 있는 점에 대해 과소평가한 것이었다.

총파업 당시 민주노총이 파업하니까 우리가 안 갈 수가 없었다. 정부에서 권영길과 차별짓고 노총을 살려준다고 했었는데,··· 박인상이 손들었다(총파업 참가를 선언했다-연구자 주)(인터뷰 K, 2003. 8. 14).

한편, 박인상 집행부는 비로소 민주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도 평가받을 만하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1996년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여 복수노조 조항의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한국노총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외에도 국민여론과 조합원의 압력으로부터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박인상 집행부는 정치활동에 있어서도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책연합을 여당이 아닌 야당과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총파업 참가의 경험³⁴⁷⁾

한국노총과 집권세력 간의 협조주의적 노사관계는 1996년 말 변칙처리된 통과된 노동법을 계기로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같이 변칙처리된 노동법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한 삼자협의로 노동정치를 운영하려던 계획을 심각하게 퇴색시킨 것은 물론 내용면에서도 공익위원안은 물론이고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도 더욱 ‘개악’됐다는 것이 노동계와 관련 학계의 일반적 평가였다. 복수노조와 함께 정리해고 조항도 수정됐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 해고 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노동계에 유리한 것이었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있는 대공장에서 한국노총이 경쟁할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복수노조의 전면개정 요구는 정부 여당을 압박함으로써 오히려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다.

347) 이 부분은 조효래(2001); 유범상(2000) 참조.

경영악화, 기술혁신, 업종전환 등의 해고요건이 첨가된 것은 세계의 희망 사항이었다. 게다가 거론되지도 않던 기업 양도·합병·인수를 해고의 요건으로 추가해 세계에 ‘기대하지 않던 선물’까지 안겨줬다. 이는 유니언 쉘 기업의 파업 때 외부인력 대체를 허용한 것과 직권중재 대상 공익사업에 정기노선 여객운수노선 운수업, 은행, 병원 등을 포함시킨 것과 함께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논의를 벗어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신한국당이 이처럼 무리수를 쓰면서도 노동법을 단독으로 날치기처리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한국노총에 대한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다. 즉 이들은 한국노총이 총파업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한국노총만을 유일한 전국조직으로 인정하는 복수노조금지 조항이 변칙처리법에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청원 원내총무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조강지처나 마찬가지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당이 수정하면서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을 3년 유예시킨 것은 한국노총의 위상을 고려”했기 때문이다(1997. 1. 3). 이러한 인식은 여당이 “규모면에서 한국노총이 민주노총보다 더 크고 성향을 보더라도 민주노총이 정부·여당 쪽으로 기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문화일보, 1996. 12. 27) 여당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여당의 믿음을 저버렸다. 즉 여당이 노동법 날치기안을 통과시키자 50년 만에 최초로 조직적인 총파업을 단행했다. 사실 당시 한국노총은 총파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 한국노총에게 있어 총파업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내부로부터의 강력한 요구를 거부할 힘은 더더욱 없었고, 날치기 노동법 개정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피해 갈 다른 수단도 없었다. 이런 점에서 총파업은 한국노총에게 생존을 위해 걸어가야만 될 새로운 운명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법 날치기 직후인 12월 26일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는 즉각적인 총파업을 결의하였으며, 긴급 산별연맹 대표자회의는 27일 오후 1시부터 28일 정오까지 5,500개(120만 명) 단위 노조가 참가하는 1단계 총파업을 결행하기로 하고, 2단계 총파업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법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고 선언하면서 총파업투쟁 지침을 시달렸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553개 노조 16만여 명이 참가하는 1단계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파업 첫날인 12월 27일 486개 노조 15만 6,800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가하였고, 이튿날인 28일에는 더욱 확산되어 60개 노조 2만 명이 추가로 참가하였다. 12월 30일과 31일 양일간 15개 지역에서 집회가 이루어졌으며, 1997년 1월 4~5일 전국 8개 지역에서 집회가 개최되었다.

12월 30일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는 1997년 1월중 1단계 파업에 불참했던 공공부문 사업장도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세부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였다. 박인상 위원장은 12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제조업체 중심의 총파업투쟁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고, 향후 보다 강도 높은 2단계 파업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어 그는 2단계 총파업의 4대 기본원칙으로 “① 공공부문 및 공익부문 주도의 전국 총파업, ② 임단투 및 정책·정치투쟁과의 결합, ③ 민주노총을 포함한 국내외 여러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 ④ 야권과의 공조체제 구축 및 대선투쟁과의 결합”을 제시하였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98: 57).³⁴⁸⁾

이러한 투쟁원칙에 따라, 1997년 1월 4일로 예정되었던 금융노련 및 도시철도, 관광노련 등의 파업투쟁은 추후 한국노총의 2단계 총파업 돌입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하였고, 한국노총 의장단은 신한국당 및 노동부 장관을 항의 방문했다. 1997년 1월 4일 인천지역본부가 1만 명이 참가한 지역노동자 투쟁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날치기를 규탄하는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1월 7일 김영삼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법 재개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따라 1월 9일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는 1월 14일 04시부터 1월 15일 19시까지 2단계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348) 총파업투쟁 방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단계 총파업투쟁을 철도, 전력, 체신, 도시철도, 담배인삼, 통신, 자동차, 택시, 금융 주도하에 추진하며, 2단계 총파업투쟁은 파업투쟁 냉각기간이 지난 1997년 1월 11일 이후 단행한다. 2단계 투쟁을 추진함에 있어 1단계 투쟁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였던 여러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을 한 차원 높임으로써 준비단계에서부터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해 나간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97: 224~225).

1월 14일에는 32개 은행을 비롯해 대구지역 택시노조, 주한미군노조, 조선폰텔노조, 순천향병원노조 등 1,648개 노조 42만 2,000명이 참가하는 한국노총 사상 최대의 총파업이 전개되었고, 15일에는 1,510개 노조 37만 8,000명이 참가했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98: 58~59). 총파업 첫날에는 전국 25개 지역 동시집회에 25만 명이 참가했고, 1월 15일에는 ‘날치기 노동악법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7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동시에 전국 15개 지역본부 동시집회에 20만 명이 참가했다. 1월 14일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①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안기부법을 무효화하고 재개정을 촉구한다. ② 위 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한다. ③ 이 투쟁은 대선투쟁으로 이어진다. ④ 빠른 시일 내 양 지도부의 협의 아래 전국노동자 공동집회를 개최한다. ⑤ 투쟁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협조를 호소한다”는 노동계 연대투쟁방안 5대 원칙에 합의했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97: 335).

한국노총은 1월 18일 민주노총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공동투쟁 방침을 발표했다. 1월 21일 영수회담에 앞서 대타협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 쟁점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현 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노동법의 효력을 6월까지 정지시키고 이 기간 동안 노개위를 복원시켜 노동계의 단일안을 기초로 한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며, 총파업으로 인한 사법처리 및 공권력 투입 중지 등을 제시했다. 1월 25일에는 양 노총이 공동으로 전국에서 조합원 및 가족 5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양 노총이 공동 개최하는 이날 집회는 수도권과 중부권이 참여하는 중앙대회와 10여 개의 각 지역별 대회로 나뉘어 동시에 열리며, 중앙대회 20만 명 등 전국에서 50만 명이 참가하는 노동계 최초의 연대집회였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97: 212~217).

한국노총의 입장에서 총파업투쟁은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대응이었다. 한국노총 역사상 최초의 총파업은 변칙처리 노동법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에 대한 부정

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며 한국노총 개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효과를 얻었다. 정부의 입장에서 민주노총의 반발은 예상한 것이었지만 한국노총의 파업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특히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었다. 결국 정부는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노동법 재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노총의 총파업은 역사상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국노총 개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고,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더 이상 순응하는 어린양이 아님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었다. 한국노총은 총파업을 통해 “노총의 취약부분이라 할 수 있는 조직력, 투쟁력, 실천력을 인정”받았다고 자체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50년 한국노총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성 총파업을 단행하고 최대 규모의 집회를 개최”했으며, “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민주적으로 성장하고 정치의식화”되었으며, “속보 발행, 대중집회, 총파업투쟁 등 다양한 투쟁 경험을 하고 조직적으로 훈련”되었다는 것을 총파업의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했다(한국노총, 『한국노총중간평가서』, 1997. 2. 13). 박인상 위원장은 “저는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참으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자신감입니다”라고 언급했다(박인상, 『노총위원장 대회사』(“날치기 노동악법 무효화와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1997. 1. 26). 하지만 한국노총은 총파업 과정에서 여전히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었다. 우선 총파업 자체가 “산하 조직의 요구에 밀려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고, “일부 산별이 총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등 전 조직과 함께하는 투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한국노총, 『한국노총중간평가서』, 1997. 2. 13).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기업별 노조의 분산성과 이기주의라는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하였으며,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통한 조직적 단결과 지도력의 확보가 노동운동 발전의 조직적 과제로 제기되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노총은 “노동법 재개정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노동운동의 정치적 역량의 강화가 경제투쟁의 성과물을 지키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98: 255).

다. “힘, 연대, 정책, 희망”의 노동운동노선

1991년 2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1990년대 한국노총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운동이념을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로 설정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것을 경제적 조합주의와 정치적 조합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노동자의 주체적 역량강화와 국민적 연대 속에서 통일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한국노총, 2002: 789 참조). 이후 한국노총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은 1995년 2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논의되는데, 여기에서 한국노총은 “2000년대를 대비한 노총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을 채택했다.

첫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둘째, 혁명적 계급 투쟁을 배격하고 편협한 경제주의를 극복한다. 셋째, 임금·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 넷째, 노동자와 일반국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그 이해를 조화시킨다. 다섯째, 한국자본주의를 구조적으로 개혁해 나간다. 여섯째, 기업과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일곱째,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간다. 여덟째, 노동조직을 통일하고 시민운동 등 민주적 타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아홉째, 민족통일과 세계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한국노총, 2002: 797).

이 문건은 ‘민주복지사회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를 노동운동의 기조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이념의 기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이 문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다시 강조되고 있는 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대한 강조이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강령(1995)”의 첫 번째, 즉 “우리는 조합민주주의를 관철하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견지한다”, 그리고 강령의 다섯 번째인 “우리는 자율·대등·참여에 입각한 생산민주화와 산업민주화를 실현한다”는 민주주의를 강조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내적 민주주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전제로 하여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존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은 외부의 지배개입도 배제함으로써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자주성을 확보하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결집된 의사에 기초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한국노총, 2002: 790).

또한 이 문건은 객관적인 정세가 “개별기업 차원의 임금인상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 기조나 현실을 무시한 전투적·혁명적 노동운동 모두에 대한 심각한 재고를 요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경제적 조합주의와 혁명적 노동운동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즉 “우리는 체제변혁을 추구하는 혁명적 계급투쟁을 배격하며, 개별사업장 중심의 노동조건 개선만을 추구하는 경제적 조합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이익추구를 국민적 이해와 일치시키고 노동운동의 영역을 광범한 정치·경제·사회적인 활동가까지 확장하여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이 문건은 기록하고 있다(한국노총, 2002: 790).

이상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 속에서 1990년대를 보낸 한국노총은 1998년부터 다가오는 세기를 맞이하여 한국노총의 새로운 이념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1세기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출된 문건이 “힘·연대·정책·희망”(2001. 2)이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와 변화가 전망되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21세기 노동운동의 목표와 전략을 대중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은 노동운동의 당연한 목표이다. 21세기라 하지만 21세기 수십 년간을 규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시장경제 체제가 지배하는 시기를 주대상으로 하고자 한다(한국노총, 2001. 2: 7).

이처럼 이 문건에 의하면 한국노총은 기존과는 다른 정치경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데, 즉 현재의 새로운 도전으로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이로 인한 “노동 및 노동운동에 대한 세계적 위협”이고 이로부터 노동운동의 방향이 재조망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1991년 노동운동의 좌표 설정과 관련해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를 제시한 바 있다. 또 1995년에도 같은 기조의 운동기조와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물론 당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한국노총, 2001. 2: 7).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의 인간의 종속, 시장논리에의 여타 모든 가치의 종속을 본질로 하며,
그 결과 노동자의 소외, 인간적 가치의 무력화, 환경의 파괴 등이 초래
된다(한국노총, 2001. 2: 10).

이처럼 이 문건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있
고 그 결과 자본간, 국가간, 개인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그런 환경 속
에서 인간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시장경제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고 자원
의 과대활용으로 인간과 환경이 파괴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한국노총,
2001. 2: 8).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이념이 인본주의가 되어야 한
다고 보고 있다:

본 제안서에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고 반신자유
주의적 연대를 전략개념으로 하는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신자
유주의의 시장제일주의에 대해 인본주의를 대치시키고 이를 이념 중심
으로 정치적·사회적 힘을 결집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바꿀 정
치적 역량을 형성하자는 사고인 것이다(한국노총, 2001. 2: 7). 신자유주
의의 피해자는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인류 자체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서 시장제일주의로부터 인류
와 인간적 가치를 지켜 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인본주의는
신자유주의가 격화시키는 자본주의 모순구조와 직결되는 개념으로 연
대의 범위를 규정하게 된다(한국노총, 2001. 2: 10).

이 문건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전략은 바로 신자유주의가 초래하
는 자본주의의 객관적 모순구조로부터 나온다”고 보면서 “노동운동 및
진보적 사회운동은 목적의식적으로 일국적 및 초국적으로 사회적·정
치적 연대를 형성”해 나가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반신자유주의 연대형
성이야말로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전략개념”이라고 주장한다(한국노총,
2001. 2: 10).

반신자유주의의 기치 밑에 가장 결집이 용이한 사회적 약자들은 물론
노동자, 룸펜, 실업자, 양심적 지식인 등이다. 이들 중 노동자나 실업자
는 사회적으로 가장 거대한 상설적 투쟁조직인 노동조합을 발전시켜 나

가야 한다. 따라서 노동운동진영이 반신자유주의의 가치를 들고 사회운동의 중심에 서서 노동자와 실업자를 조직하고, 나아가 저소득 자영자, 다수의 비경제활동인구, 양심적 지식인 등을 조직하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반신자유주의적 세력이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국제적 전선을 펴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시장제일주의에 대한 인본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고 연대를 전략 개념으로 하여 일국적·세계적 반신자유주의전선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21세기 노동운동의 일차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한국노총, 2001. 2: 35~36).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힘, 연대, 정책”을 제시한다. 즉 우선 “주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체적 역량이란 “힘을 극대화하고 그 힘에 올바른 방향성을 부여하는 능력”으로서 “자체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능력, 여타 사회세력과 연대하는 능력, 전략전술 및 정책을 형성하는 능력”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한국노총, 2001. 2: 36). 구체적으로 주체역량 강화의 핵심요소는 기업별체제의 산별체제로의 전환, 노동계의 통일, 조직률의 제고, 정책형성 능력의 제고, 효과적 투쟁수단 개발능력, 교육, 전산화, 재정자립이고 이러한 제반요소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직의 민주성과 도덕성, 대내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자기혁신이다(한국노총, 2001. 2: 36~37). 그리고 여기에서 연대는 “시민세력과 외국노동조직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중요하며, “노동자 이익에 중심을 두고 출발하되, 노동자 의식의 발전과 함께 외연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국민의 보편적 이익과 국민의 보편적 가치, 즉 민주와 민족의 가치를 선봉에 서서 지켜내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한국노총, 2001. 2: 39). 여기에서 특히 국제적 연대도 강조되는데, 이 문건은 “현재 반신자유주의의 연대가 NGO, NPO 그룹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노동운동진영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상태”라면서 “노동운동의 국제연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국제기구와 초국적 자본에 대한 투쟁원칙을 분명히 해야”하고 “NGO, NPO 그룹들과의 연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한국노총, 2001. 2: 40~41).

이상의 새로운 정치환경과 과제를 주장한 이 문건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문건의 내

용이라기보다는 이 문건이 한국노총의 이념적 논의의 화두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즉 문건은 인본주의 등의 다양한 논쟁거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회람되거나 토론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노동이 자신들의 이념논의를 공론장에 올릴 ‘힘’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정치세력화의 도전과 좌절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은 전통적으로 정책건의나 청원활동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신들의 이익을 정치권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여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그 대가를 보상받거나, 한국노총 출신의 국회의원을 매개로 자신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한국노총의 대선전략은 ‘승자편승전략(bandwagon strategy)’으로 평가될 수 있다. 대선에서 집권당을 지지하는 대가로 한국노총은 노동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국가조합주의적 노조-정당 관계를 맺어 왔던 것이다.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은 소극적인 정책건의 및 청원활동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박동, 2002).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정치활동전략은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노총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천명하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정부가 한국노총의 전적인 후견자가 될 수 없는 정치적 상황과 정부 후견을 받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내부정치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첫째 정부·여당으로부터 독자적 정치활동을 구상하려 했고, 각 선거에서 노동계 후보나 친노동자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노동악법의 철폐 및 정치적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단기적 성과를 토대로 노동자정당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계획은 보다 구체화되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1997년 대선에서는 친노동자적 후보와의 정책 연합을 실현하고, 2000년 총선에서 노동계 및

친노동계 의원을 원내 교섭단체 규모인 20명 정도 확보하며, 2002년 대선에서는 친노동자정당과의 제휴를 통해 정권에 참여하고, 2004년 총선에서는 그때까지 축적된 노동계 정치인과 국가관리능력을 바탕으로 ‘노동자와 국민대중의 독자정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상층 간부를 중심으로 민주사회당을 결성했고 이것은 곧 사회민주당, 녹색사민당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총선에서 득표율이 0.5%에 그침으로써 자진 해산하는 비운을 맞게 되면서 그들만의 정치세력화의 원대한 구상은 막을 내렸다.

여기에서는 이상의 한국노총의 정치세력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만든 정당, 즉 민사당과 녹색사민당에서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정치활동 방침과 정책연합: 1997년 대통령 선거 참가

1) 정치활동참여 방침의 확립과 실천

한국노총이 독자적인 정치활동과 선거참여를 모색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1988년 11월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자주적 민주노동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노조의 정치활동 강화를 선언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정치역량을 배양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위원회를 설치했다(조효래, 2001). 이런 맥락에서 한국노총은 1990년 다음해 3월로 예정된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정치참여 방침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다: “민주발전 기여와 원칙, 전조직원이 참여하는 조직운동의 원칙, 노조 정치활동 발전의 원칙, 국민적 이해 공유의 원칙, 제 민주적 사회운동단체와 연대의 원칙, 민주개혁 정책기조의 원칙.” 그리고 한국노총은 이와 같은 원칙하에 당면한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네 가지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제시하였다: “노조출신 후보의 지방의회 진출 방안, 전국민의 염원인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전조직의 감시·감독 활동,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민주화에 역행하는 인사의 지방의회 진출 반대활동, 경제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입후보자와의 정책토론회 개최”(한국노총, 2002: 863).

이러한 정치활동 방침은 이후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한국노총은 1991년 2월에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1990년대 한국노총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을 채택하였다. 한국노총은 이 문건에 담긴 정치활동 방침이 “과거의 선언적 의미의 활동이나 결의문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춘 정치방침”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이 밝힌 정치활동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노총을 비롯한 각급 조직의 정치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정치활동기금을 조성한다. 둘째, 지방자치제 선거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동자 출신의 정치 진출을 주도 또는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독자적 정당의 결성을 추진한다. 셋째, 기존 정당의 노동정책과 정치인의 활동 내용을 분석 및 평가, 발표하여 반노동자적인 정책과 활동을 시정케 한다. 넷째, 민주적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반민주적·권위주의적 정치질서를 척결한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① 각급 위원회 활동: 중앙정치위원회 활성화, 각급 조직 정치위원회 활성화, 정치실무위원회 설치 ② 노동조합 정치활동금지 조항 삭제 ③ 선거활동: 1991년 지방의회 선거, 199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992년 총선, 1993년 대통령 선거 ④ 제 사회단체와 연대 강화 ⑤ 입법활동” 등이 설정되었다(이상 조효래, 2003 참조).

이러한 한국노총의 정치활동 방침은 한국노총이 1995년 2월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00년대를 대비한 ‘노총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을 채택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기본방향’에서는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정치교육을 일상적으로 실시하며 일상활동을 통한 정치활동을 강화한다”와 “환경·교통문제 등 지역의 공통문제를 중심으로 지역과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 ‘추진계획’에서는 “노동자 정치의식 고양을 위한 정치교육을 강화한다”와 “노동자 정치활동에 관한 선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한국노총, 2002: 863).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은 1997년 대선 이전까지 이러한 기조에 따라 이루어져 왔고, 특히 각급 선거에서 노동계 출신 후보에 대한 지지, 지원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노동법 개정 이전인 1996년 15대 총선에 대한 지침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독자정당의 건설

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되, 현재의 보수정당 위주의 정치현실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가로막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2조를 비롯한 노동악법의 철폐 및 과도기적으로 정치적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정치활동의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15대 총선에서는 노조 출신 후보 및 친노동계 후보의 의회 진출 지원활동,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전조직의 감시·감독 활동 전개, 경제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정책요구 활동 및 정책토론회 개최, 노동자 투표 참여활동의 전개 등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였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97: 833~835). 그 결과 1992년과 1996년 총선에서는 각 정당에 소속된 노동계 후보를 각각 4명씩 당선시켰으나, 모두 기존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었다는 점에서 한국노총 정치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정영태, 1999b: 253. 조호래, 2001 재인용).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노총이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고 각종 정치활동 방침을 통해 그 내용이 진일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국노총의 정치활동 입장과 크게 다르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우선 이것은 계획에 따른 구체적 실천과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고, 조합원들로부터 동의 및 지지와 무관한, 즉 무관심 속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한국노총 상층부의 ‘선언’적 수준의 구호에 불과했다. 또한 의회에 진출한 노동계 출신 정부여당 의원들의 어떤 독자적인 정치활동도 가시화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6·29선언으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본격화하면서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이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는 6명의 노총 출신 후보가 의회에 진출하고, 1992년과 1996년 총선에서는 각각 5명이 당선되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입장에서 볼 때 노총의 정치활동은 주로 개인적인 의회 진출과 정책건의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박동, 2002).

하지만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노총은 스스로 ‘정치세력화의 원년’으로 표현할 정도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1996년 말 여당의 변칙 처리된 노동법 개정에 대해 총파업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신감, 1980년대 후반 이후 내부 민주화와 그에 따른 일정한 변화, 그리고 민주노총과의 경쟁관계가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³⁴⁹⁾ 이것은 새로운 문건으로 나타났는데, 즉 한국노총은 1997년 6월에 ‘지역할거주의 정치 타파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원년’을 목표로 내건 문건, 즉 ‘희망의 21세기를 한국노총과 더불어’라는 정치활동 계획과 대통령 선거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정치활동의 목표를 “노동자와 국민대중이 정치의 주역으로 참여하는 정치활동, 한국노총의 운동방향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정치활동, 한국노총의 조직적 단결을 강화시키는 정치활동” 등으로 설정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치활동의 목표가 “국민적 조합주의와 참여·협력의 정신을 적극적인 정치활동으로 구현”하고 “정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대중의 제 권익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른 한국노총의 ‘21세기 정치활동 플랜(plan)’은 다음과 같은 야심 찬 계획을 담고 있었다.

- 1997년 대통령 선거: 정책연합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친노동자 후보 지지
- 2000년 총선: 노동계 및 친노동계 후보 20석 의석 확보
- 2002년 대통령 선거: 정당과의 제휴를 통한 정권 참여
- 2004년 총선: 노동자와 국민대중의 독자정당 건설(원내교섭단체 구성)
- 2007년 대통령 선거: 독자후보 추대를 통한 수권 가능 세력으로 부상
- 2008년 총선: 제1야당의 지위 확보
- 2012년 대통령 선거: 노동자 중심의 독자정당 집권

349) 한국노총은 1997년의 대통령 선거를 민주노총과의 경쟁구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대응하였다. 따라서 권영길 민노당 후보를 노동자 후보로 함께 지지하는 것은 한국노총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때 한국노총의 명분은 권영길의 경우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한국노총의 조합원들은 야당과의 정책연합 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례대로 대부분 출신지역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보수정치인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권영길 후보를 지지한 한국노총 조합원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 결과 김대중이 당선됨으로써 한국노총은 ‘승리’를 선언하였다(노회찬, 2000).

- 지자제 선거: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지속적인 노동계 후보 추대를 통하여 2012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진출 등(한국노총, 2002: 860~862).

이처럼 한국노총은 기존 정당과의 정책연합을 통한 지지후보를 당선시킨 이후에 기존 정당과의 제휴를 통해 정권 참여를 경험하고, 그런 다음 독자정당 건설과 독자후보 추대를 통한 수권정당 반열에 올라서는 정치세력화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상의 '이상적' 프로그램은 현실에서 실현과정에 있는가? 이를 위해 1991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선거활동을 펼쳐 온 한국노총의 정치세력화 활동을 선거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노총은 199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조 출신 후보의 지방의회 선거 참가방안'을 결정했다. 그 결과 한국노총 집계에 의하면 1991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에 출마한 한국노총 출신 후보는 64명이었고 그 가운데 26명이 당선되었다. 광역의회의 경우는 38명이 입후보하였는데 입후보 행태를 보면 무소속 17명, 민자당 2명, 신민당 6명, 민주당 13명이었다. 이 중 노조 후보자 가운데 3명이 당선되었는데, 당선자 가운데 2명이 정당 공천을 받았고 1명이 무소속이었다.

한국노총은 199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등 3당의 대선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을 뿐 별도의 후보 전술을 구사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해에 치러진 14대 총선에서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과 연대활동을 하는 등 선거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노동계 후보를 자신들의 후보로 지명하는 정치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전국구 후보 5명(민자당 1명, 민주당 1명, 국민당 3명)과 지역구 후보 16명(민자당 6명, 민주당 2명, 신정당 1명, 국민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4명) 등 총 21명을 '노동계 후보'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당선자는 4명으로 지역구 2명, 전국구 2명이었다. 이들 당선자는 모두 기존 제도권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었다.

한국노총은 1995년 지방자치제 선거에서는 4대 지방자치 선거와 관련하여 노조 출신 후보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진출 확대, 공명선거 감시활동, 노동자 후보의 정책개발 지원 및 선거전략 개발, 노동자 투표참가 운

등을 정치활동의 주요 내용으로 정하고 선거활동을 추진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 후보로 기초의회 78명, 광역의회 22명(비례대표 포함 31명), 기초단체장 4명(무소속 1명, 민자당 1명, 자민련 2명)을 지지·지원했다. 이 가운데 당선자는 기초의회 의원 28명, 광역의회 의원 16명(지역구 9명, 비례대표 7명)이었다. 기초단체장은 당선자가 없었다. 광역의회 의원 당선자 16명의 소속 정당을 보면 민자당 8명(비례대표 7명 포함), 민주당 6명, 자민련 2명이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한국노총은 1992년에 결정한 ‘원칙’에 따라 전국구 후보 2명(신한국당, 국민회의 각각 1명)과 지역구 후보 16명(신한국당 3명, 국민회의 2명, 자민련 3명, 민주 5명, 무당파연합 1명, 무소속 2명) 등 총 18명을 노동계 후보로 결정한 뒤 이들에 대한 지지·지원 운동을 전개했다. 당선자는 4명으로 전국구 1명(방용석, 새정치국민회의)과 지역구 3명(새정치국민회의 조성준, 신한국당 김문수, 이강희) 등이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3명의 지역구 후보 당선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제약 및 열악한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14대 국회와 비교해 볼 때 노동조합 정치세력화를 위한 교두보 확보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이상의 정치활동이 한국노총이 자신의 출신 후보를 정당에 관계없이 ‘지명’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지원 또는 선언에 불과했다면, 다음에서 살펴볼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책연합은 여당 후보가 아닌 야당 후보와 정책연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에서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한편, 1998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은 중앙정치위원회(5. 15)를 열고 지자체 후보단 발대식을 갖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여기에서 한국노총은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회 35명, 기초의회 42명 등 모두 79명의 노동계 후보를 지지·지원했다. 또한 한국노총 내에 ‘지자체선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한국노총 지자체 후보단 공동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기초단체장 1명(김윤주 군포시장 후보 당선), 광역의회 의원 17명(지역구 7명, 비례대표 10명), 기초의회 의원 23명이 당선되었다. 이전의 지방선거 결과에 비해서는 당선자수와 당선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었다. 선거 결과

에 대하여 한국노총은 지자체선거 후보단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은 한국노총의 독자성을 확보한 측면에서는 성과이나 출마 과정에서 정당 공천 문제가 부각되어 당초의 원칙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1999년에는 2000년 4월 총선에 대비하여 ‘한국노총 21세기 정치활동계획’을 실천하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노총 내에 총선전략기획팀을 구성하여 가동하였다. 한국노총은 회원조합 대표자회의(5. 15)에서 ‘한국노총 총선전략 2000-정당제휴 20의석 확보’를 결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한국노총은 조직 및 정치역량을 고려하고, 나아가 『한국노총 21세기 정치활동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2000년 총선을 위한 정당 제휴를 모색했는데, 제휴정당은 한국노총의 정치개혁안을 수용하고, 나아가 국정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하고자 했다.³⁵⁰⁾ 실제 2000년 4월 총선에서 한국노총은 위원장 출신 등 전직 간부들이 정책연합이라는 명목 아래 여·야 각 정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하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3인(전국구 1, 지역구 2)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노총 출신의 원내 진출은 개인적인 정치적 성공일 수는 있더라도 이들이 이념과 무관하게 여·야 정치권에 포진했다는 점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이상 한국노총, 『2000년 총선전략』, 2000. 1, <http://www.fktu.or.kr> 참조).

2) 야당과의 정책연합

1997년 야당과의 정책연합 ‘시도’와 ‘부분적 성공’은 한국노총이 ‘21세기 정치활동 플랜’에 따른 것이자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에 대한 변화 가능성과 어려움을 동시에 드러내 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350) 제휴정당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노총 후보 및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 - 원내 20석 이상(지역구 및 비례대표 포함)의 의석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 2. 한국노총의 정치개혁안을 수용하고, 입법화할 수 있는 정당. 3.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한국노총의 정책과제를 포함하여 노동자 및 서민대중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당. 4. 제휴 정당의 범위: ① 기존의 제도권 정당, ② 개혁적 신당, ③ 한국노총을 포함한 범개혁세력의 창당(한국노총, 2000. 1).

서는 이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노총은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책연합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노동자당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정책과 요구를 수용하는 정당과 연합하여 대선 후보자를 지지, 지원하는 정치활동이다.” 이에 덧붙여 한국노총은 정책연합의 필요성의 논거도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독자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가장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당선 가능한 후보를 적극 돕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노총은 정책연합의 기준과 원칙을 매우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첫째, 정책연합은 300대 정책요구를 기초로 하고 정치, 사회, 노동, 복지 등 4대 분야 1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둘째, 여기에는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물가, 환경, 교통 등 국민대중의 생활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다. 셋째, 노동자들의 핵심적 요구로는 정리해고제 규제, 파견법 도입 저지, 퇴직금 완전 확보, 노조전임자 임금보장,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그리고 주 40시간 노동제의 실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기타 주요한 정책 요구로는 물가 3% 내 안정과 이를 위한 통화증가율 11%대 유지,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연평균 6.5~7%대 경제성장,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개혁, 부가가치세율 5%로 인하 등 세제개혁, 금융자유화와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한국노총은 각 대선 후보와의 진지한 대화와 토론회, 대선 공약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정책연합을 추진한다”(한국노총, 1998: 608). 한국노총은 이러한 정책연합 방침의 기초하에 선거참여운동, 공명선거운동, 망국적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운동 또한 주요 정치방침으로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노총은 전국노조대표자대회(12. 4)에서 김대중 후보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를 표시했고,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인 명의로 김대중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12. 9).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는 다음의 진술이 잘 보여주고 있다:

꾸준하게 후보들의 노동자성을 비교했다. 발표는 못했는데, 점수를 매

겨 DJ가 압도적이었다.³⁵¹⁾ DJ를 지지하기 위해 학생체육관에 갔는데 한 나라당 뛰다 하다 보니까 현장 사람들이 점거를 해버렸다. 산별 위원장이 아우성치니까, 선언을 못했다. 폭력사태가 이뤄져 상층부가 도망갔다. 나도 욱하면서 돌아왔다... 지역지부장들이 노총을 점거했다. 박인상 위원장이 도망갔다... 박인상 개인으로 선언했다. DJ를 선언하고 지방으로 갔다. 그 당시에 복잡했다(인터뷰 K, 2003. 8. 14).

한국노총이 내부 합의를 획득하지 못하고 조직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성과였지만 야당인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것은 한국노총의 ‘위험한’ 정치적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 결과 “한국노총은 차기 집권당과의 정책연합이라는 유력한 배경을 확보하였고, ‘정확한’ 선택을 한 한국노총 지도부의 위상은 제고되었다”(노회찬, 2000).

이처럼 이 같은 한국노총의 부분적인 성과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 우선 “한국노총의 정책연합 방침은 한국노총 역사상 최초로 야당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과거와의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한국노총이 집권당과 정부의 외곽부대로서 여당 편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기존과는 달리 야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은 한국노총이 과거 어용의 역사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연합의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지시와 관료적 결정이 아니라 조합원 여론조사와 후보 초청토론회 등 장기간의 준비와 토론, 밑으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포함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한국노총 개혁의 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노총은 “정책연합을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정치적 목표를 달성했다. 즉 김대중 정권의 성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대정부 관계에서 유리한 입지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 후보를 통해 정치적 좌절을 맞본 민주노총에 비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351) 정책연합대상 선정 평가표에 따르면 “김대중 후보가 500점을 얻어 이인제 후보(246.3)와 이회창 후보(240.4)를 크게 앞섰다. 김 후보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6개월간 임금동결과 함께 정리해고를 2년간 유예하는 계획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사실상 정리해고제를 뜻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주장했다”(『한겨레 21』, 1997: 12, 18).

도움이 되었다”(조효래, 2003 참조). 더 나아가 1997년 정책연합은 민주노총 출범 이후 체계화된 노동운동의 양분과 경쟁이 정치활동 영역에서도 명확히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여기까지 볼 때 한국노총의 ‘21세기 정치활동 플랜’은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플랜에 따르면 1997년 대선에서 친노동자 후보와 정책연합을 하여 이를 당선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첫째, 김대중 후보가 친노동계 후보인가, 둘째, 한국노총의 기여를 김대중 후보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연합의 부분적인 성공이 과연 향후 한국노총이 자신만의 진보정당을 만들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궁극증보다도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한국노총의 연합전술을 ‘부분적인 성공’이라고 표현했듯이 한국노총은 조합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이 전술을 구사했는가 하는 점이다. 내부 그룹과 조합원들의 반발 때문에 공식적인 선언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노총 내부는 상이한 의견을 가진 지도부들과 조합원들이 존재했다. 특히 조합원들과 토론을 통해 공문을 조직하고 합의점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도 가시적인 성과 외에 한국노총 정치활동의 커다란 약점으로 남았다. 즉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이 밑으로부터 대중동원의 압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와 같이 노동자들의 핵심적 이익과 관련된 쟁점에서 대중동원의 기반 없이 상층 수준의 정책연합만으로 한국노총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조효래, 2003). 한편, “이후 IMF 위기극복 과정에서 DJ정부의 노동정책이 신자유주의로 경도되면서 정책연합은 실패했고, 이에 따라 한국노총의 정치적 위상도 대폭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한국노총은 국가조합주의에서 정책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활동방식을 시도해 왔으나 조합원들의 정치세력화 요구를 수렴하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정당과의 정책연합이나 지분확보 방식은 한국노총 전체의 정치세력화 또는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하의 정치진출을 보장하지 못했다. 이상과 같은 한국노총의 정치활동 관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각 지역본부별 여야 지역정당 편향의 정치활동으로 일관된 정치노선을 견지하지 못했다. 둘째, 중앙수준

에서 통합적 정치방침을 수립하지 못함으로써 한국노총 중앙의 정치리더십이 약화되었다. 셋째, 독자정당을 창당하려 노력하기보다 기존 정당 의존적, 비례대표 획득 중심의 정치활동에 머무름으로써 조합원들을 정치활동의 객체로 전락시켰다. 넷째, 조합원들의 적극성을 이끌어 내지 못함으로써 한국노총의 정치적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박동, 2002 참조).

나. 정당의 건설과 좌절

야당과의 정책연합이 한국노총 정치세력화의 첫 번째 신대륙이었다면 두 번째는 독자적인 정당 건설에 있었다. 후자는 2000년대 한국노총 정치세력화의 최대 화두였다. 여기에서는 한국노총의 정당 건설 시도와 실패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노총 정치국은 정치개혁을 위한 활동과 정치권과의 정책교섭 외에 200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내부의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했다. 2001년 봄 전국순회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정치활동 방향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2001년 8월). 이 워크숍에서 ‘21세기 한국노총 정치활동 계획’을 재검토해 중장기 정치활동 방향 및 원칙, 2002년 양대 선거 기본계획, 독자정당 창당을 통한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토론하였고, ‘2002년 한국노총 정치활동 방향(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기존 정치권 중심의 정치활동을 탈피하고 노동 및 시민단체 정치세력화 구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한국노총, 2002: 54).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02년은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에 있어 특별한 해였다. 한국노총이 이 해 11월에 민주사회당을 창당했기 때문이다. 우선 6월 13일 지방선거는 1998년 4월 노동조합의 선거참여가 합법화된 이후 두 번째 치러진 선거였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최대 다수의 최대 진출’을 목표로 선거에 참여하여 경기 군포시장, 전남 화순 군수, 서울 마포구청장 등 3명의 단체장과 16명의 광역시의원(지역구 9명, 비례대표 7명), 그리고 기초의원 19명이 당선되는 성과를 올렸다. 총 79명이

출마하여 42명이 당선되어 53.2%의 당선율을 기록한 199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당선자가 38명(48.1%)으로 다소 줄었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2명 증가했고 광역의원 중에는 지역구 의원이 늘어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노총 자신의 정당이 아니라 기존 보수정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만들어 낸 성과였기 때문에 다른 조직들의 주목을 받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즉 한국노총 후보단의 당선자 중 단체장은 민주당 1명(경기 군포시장), 광역의원의 경우 민주당 비례대표 4명, 한나라당 비례대표 3명, 민주당 지역구 2명, 한나라당 지역구 6명, 무소속 지역구 1명으로 역시 압도적으로 기존 정당에 의존하였다.³⁵²⁾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사회의 권력의 이동과 향후 5년간의 노정교섭의 틀을 다시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일정이었다. 한국노총은 16대 대선 정치활동을 준비하면서 28개 산별연맹 위원장과 16개 광역시도 지역본부 의장, 그리고 한국노총 임원 4명 등 총 49명으로 구성된 실질적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정치위원회(제11차, 2002. 5. 7)에서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 방침』을 확정하였고, 제12차 및 제13차 중앙정치위원회를 거쳐 제14차 중앙정치위원회(9. 11)에는 한국노총 독자정당으로 (가칭)민주사회당 창당을 확정하여 창당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1997년 한국노총 대선방침이었던 정책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2000년 4월 제16대 총선, 그리고 2002년 6월 지방선거를 함께 조망하고 평가하면서 내린 결론이었다. 이 당시 창당의 경로는 크게 세 가지가 상정되었다: 첫째, 한국노총만의 독자적 정체성 확립으로 독자정당을 유지하는 방안, 둘째 제도권내 개혁세력과 연대하여 개혁적 국민정당을 창당하는 방안, 셋째 민주노동당과 노동계 단일정당을 창당하고 외연을 확대하는 방안.³⁵³⁾

352)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단은 대단히 적절하다: “한국노총 출신 상당수 인사들은 집권여당 후보로 공천받아 정치권에 나가 있다. 하지만 이들을 한국노총 후보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들에 대한 통제는 한국노총이 아닌 집권여당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한겨레 21』, 1998. 12: 17).

353)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노총만의 독자정당을 유지하는 방안은 지속가능한 정당으로 성장하는 데 따른 막대한 비용소요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한국노총의 정치력을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우선 조합원들 내에서 한국노총만의 독자정당 지지도는 10% 정도에 불과. 또한 조직률이 12%에 불과한 상태에서 동일한 노동계의 기반을 민주노동당과 나누어 가져야 하고,

한국노총의 창당을 주도한 주요한 기구는 7월 11일 구성된 대선기획팀이었다. 이 기구는 지방선거 직후부터 구체적인 독자정당 창당안을 수립하는 데 나섰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도 8월 8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창당 방침을 적극 설득하고 나섰다. 이들은 창당을 한다면 정치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대선 이전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매일노동뉴스, 2002. 12. 4 참조). 그리고 한국노총은 창당도 사회의 제 개혁세력들의 연대에 의한 국민정당 창당이며, 따라서 제도정치권 내 개혁세력 또는 민주노동당과의 공동창당 또는 합당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³⁵⁴⁾

결과적으로 노동계의 정치적 분열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더구나 한국노총이 추구하는 개혁적 국민정당은 한국사회의 중간계층 이하 모든 계급·계층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정당(catch-all party)’이 되어야 함. 둘째, 제도권 내 개혁세력과의 연대방안은 한국노총 내부의 정치적 정체성과 조직적 단결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한국노총 내에는 기존 정당 지지흐름이 매우 강력하게 존재. 따라서 기존 정당의 일부와 동맹할 경우 이에서 배제된 세력의 조직적 반발과 분열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음. 또한 제도권 내 개혁세력의 경우 한국노총을 지지세력 이상의 동맹세력으로 상정하지도 않는 상태임. 개혁세력의 총결집을 이루어 별 리더십 구축이 가능한가도 관건. 셋째, 민주노동당과의 연대를 통해 노동계 단일정당을 창당하는 방안은 현재의 단계에서 실현가능한 가장 용이한 방안임. 2001년 8월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 대선방침과 관련, 한국노총 조합원의 10.4%가 한국노총만의 독자정당을 선호하는 데 반해 41.8%는 노동자·시민의 독자정당 창당을 선호. 부산지역본부의 설문조사에서도 지지정당은 기존 정당이 아직도 우세하지만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는 민주노동당 선호가 매우 큰 폭으로 확대. 한국노총이 추진하는 정당과 민주노동당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므로 시너지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문제는 노총 내의 제도권 정당 지지흐름을 여하히 차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가장 큰 관건임. 또한 민주노동당 내의 좌파세력과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 내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박동, 2002; 한국노총 2002: 467 참조).

354) 대선기획팀의 팀장이었던 박동은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한국노총 독자정당 창당 이후 발전경로는 창당과 동시에 개혁적이고 신뢰할 만한 세력과 공동창당 또는 합당 수순을 밟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민주노동당과의 결합은 노동계 단일정당 창당이라는 당위에 부합하다. 노동계 반쪽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 농민, 학생,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한 개혁적 국민정당으로의 외연확대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노총 내에 기존 정당 지지흐름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민노당과의 공동창당 문제 협의주체는 앞으로 창당될 정당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박동, 2002).

이렇게 창당이 결정되고 가속화된 것은 6월 지방선거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민주노동당의 약진³⁵⁵⁾, 기존 각 제도권 정당의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 광범하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였던 국민참여경선제 등의 급격한 정치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한국노총, 2003: 54~55). 이러한 한국노총 정치활동의 평가에 덧붙여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대선에서 선택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도 한국노총의 독자창당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1997년 대선에서는 양당 구도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었고, IMF위기를 초래한 집권당의 심판이라는 명분까지 가세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선택이 용이했다. 그러나 2002년 대선에서는 정치지형이 급변하여 후보 구도조차 정립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배가되면서 더 이상 왔다갔다하는 등거리 정치행태를 반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박동, 2002).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필요성과 동시에 유혹을 느끼고 있었다. 유혹의 한 요소는 정당명부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민당은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지난번 선거부터 밑에서 공천하고 올라오는 정치질서가 변화되면서 교섭이 어려워지자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당을 만들어 보자라는 말이 나왔다. 정당명부제로 하면 사람과 당에 찍는 것 중 사민당에 찍을 때, 조합원들이 사민당을 찍을 것이기에 배분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인터뷰 J, 2003. 7. 23).³⁵⁶⁾

한편, 한국노총의 독자창당 결의 및 창당 추진은 한국노총의 자기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이남순 위원장은 산별대표자회

355) '한국노총 후보'들은 2002년 지방선거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통해 79명이 출마했으나, 38명이 당선, 지난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이 일정한 성과를 이룬 것과 비교되면서 한국노총에게 '정치적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일부 지역본부와 연맹 간에 불협화음도 끊이지 않았던 터였다(매일노동뉴스, 2002. 12. 4).

356)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전략적으로 국회의원 후보는 다른 정당을 찍으려면 찍되 지지정당은 녹색사민당을 찍을 것을 조합원들에게 주문하기도 하였다.

의(2002. 8. 7)에서 “기득권이 있다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것이며, 기존 정당 지지흐름과의 갈등은 언젠가는 반드시 거쳐야만 할 문제”라며 독자 창당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박동, 2002).

한국노총은 5월 7일 제11차 중앙정치위원회의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 결정부터 10월 10일 개혁적 국민정당으로서 민주사회당(이하 민사당) 창당을 위한 전국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거쳐, 2002년 11월 3일 민주사회당 창당에 성공하였다. 초대 당대표는 이남순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이 맡았다.

민주사회당의 창당 과정에 대해 한국노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현장으로부터 의견수렴이 다소 미약했고, 대선 공간에서 급박하게 추진되었다는 점, 그리고 한국노총 전 조직의 참여가 미약했으며, 당의 외연확대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당과 한국노총 조직의 상호 독자성이 분리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당 건설 주체 중의 주체인 중앙정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역시 결정사항들이 책임성 있게 집행되지 못했다는 점도 2000년 총선 등 여러 번의 정치활동 평가와 같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한국노총, 2003: 56). 이런 한계들 중에서 특히 “독자창당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상층부만의 논의에 그쳤다”는 점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평가되었다. 예를 들어 정당 건설에 대해 “현장조합원들은 ‘썰렁한’ 반응”을 보였다. 사무총국 간부들조차 “급박하게 창당을 추진하는 것은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런 당시 사정과 관련, 한국노총 관계자는 “창당에 회의적이던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창당이 확정된 뒤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이들 대부분이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매일노동뉴스, 2002. 12. 4).

민사당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는 못했다. 민사당은 민주노동당과의 ‘협상’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지지후보도 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한국노총 조직 내에서 기존 정당 후보 지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제15차 중앙정치위원회 소집 요구와 함께 중앙정치위원회에서 당선 가능

성이 높은 기존 정당 지지 방침을 논의하자는 주장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제15차 중앙정치위원회에서는 한국노총 제13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인 ‘한국노총의 모든 정치활동은 민주사회당을 통한다’는 방침을 살리고 기존 정당 후보지지가 가져올 수 있는 한국노총 조직의 분열과 위기를 막기 위해서 기존 정당 후보지지 방침을 부결시켰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한국노총 일부 조직의 대표자들이 기존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³⁵⁷⁾ 대부분 각 조직의 불가피한 이해관계와 후보의 몇몇 공약 중 이들과 친화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한국노총 중앙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행위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노총의 조직적 정체성과 민주사회당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초래되었다.

2003년 한국노총 정치활동과 관련된 화두는 2002년 창당한 민사당의 존립 여부 및 이에 따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법은 무엇인지, 즉 한국노총의 정치활동 방침을 정할 것인지에 있었다. 결국 한국노총은 정당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민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활동 방침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1월 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의 정치활동과 관련, 한국노총 사상 유례없는 결단”을 내리면서 정치세력화 의지를 천명했다. 즉 그는 “4·15 총선에서 정당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2%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의석 한 자리도 얻지 못해 사민당이 강제해산당하는 비운을 맞게 된다면 한국노총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한국노총, 2004: 13~14). 이러한 결정에 따라 한국노총은 민사당의 당명을 한국사회민주당으로 변경하여 재창당하였다. 하지만 이상의 결의와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여전히 사민당을 지원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고, 결국 이것은 덕양갑 재선거 이후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357) 중앙정치위원회(12. 3)에서 지지후보 결정방침 철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16개 산별연맹 위원장과 5개 지역본부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이는 ‘독자창당’한 상황에서 “정치세력화를 더욱 후퇴시켰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회창 후보 지지선언 논란과 관련해 민사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권오만 택시노련 위원장이 사퇴한 가운데 민사당의 진로는 매우 불투명했다(매일노동뉴스, 2002. 12. 4).

이처럼 전당대회(2003. 3. 27) 이후 민사당은 “한국사회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당의 지지도와 인지도 제고를 통해 2004년 총선 약진이라는 목표 아래 덕양갑 재선거(2003. 4. 24)에서 후보를 출마시키고 총력을 다해 지원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기존 정치권의 두꺼운 벽에 부딪혀 목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한국노총의 새로운 정치방침에 대한 수정과 재논의 요구로 혼선이 뒤따랐다. 이러한 조직적 혼선과 갈등은 사민당의 새로운 출발을 막는 장애물이었으며, 이후 몇 개월의 시간을 정치방침에 대한 논란과 당위성을 확인하느라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한국노총, 2004: 52 참조).

지지부진하던 사민당의 새로운 계기는 2004년 2월에 녹색사민당을 출범시킴으로써 만들어졌다. 녹색사민당은 “한국노총이 만든 사민당과 환경시민단체가 만든 녹색평화당이 2월 5일 통합을 선언하고 2월 22일 통합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부패정치 청산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등장”을 기치로 내걸고 탄생했다(한국노총, 2004).³⁵⁸⁾ 녹색사민당은 이렇게 진용을 정비해서 17대 총선에 임했다. 하지만 4·15 총선결과 지역구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고사하고 정당 득표율이 0.5%(104,129표)에 그쳐 정당은 해산되었고 한국노총 지도부는 총사퇴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정당 건설을 통한 정치세력화에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민주노동당의 성공에 비추어 한국노총은 심각한 위기의식과 거센 개혁요구에 노출되었다.

한국노총 직원노조는 이번 4·15 총선 결과는 노총의 단순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가 아니라 조직에 대한 조합원들의 극심한 불신과 조

358) 녹색사민당은 스스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노총이 만든 사민당과 환경시민단체가 만든 녹색평화당은 그동안 정치개혁, 실업극복, 사회복지, 환경보전 등 각 분야에서 정책적 전문성과 선도적인 문제제기를 주도해 온 정당이다. 사회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온 사민당과 환경보전과 세계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녹색평화당의 통합은 정치개혁과 환경보전, 반전평화와 국민복지의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정치세력의 출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노동자와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한 녹색평화당과 통합함으로써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해 온 노동운동에 대한 집단이기주의 비판을 불식시키면서 전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한국노총, 2004: 16).

직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을 깊이 각인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한국노총 국장들이 현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도부와 함께 동반사퇴를 결의한 것처럼, 우리 직원들도 총사퇴할 것임을 밝힙니다.··· 늦었지만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국장들에 이어 직원들까지 총사퇴를 결의하게 된 것은 금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노총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한국노총직원노동조합, “한국노총 전면개혁을 위한 직원노조 입장”, 2004. 4. 7, <http://www.fktu.or.kr>).

한국노총이 독자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음이 확인된 것은 이남순 위원장의 사퇴 이후 새로 등장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한국노총의 정당 창당이 근본적인 실패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내가 원래 민노당 창당멤버다. 그런데 이후에 사민당을 별도로 창당했던 건 노총 중앙의 엄청난 판단 실수였다. 민주노동당이 이미 농민, 서민, 노동자 등 진보진영 모두를 아우른 대중정당이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시장논리로 본다면, 뒤늦게 사민당이 시장에 뛰어들어 썸이다. 현장의 요구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노총 중앙의 판단이었다. 아무 차별성도 없으니 당연히 실패했다. 앞으로 그런 전철은 절대 밟지 않을 것이다(이용득 위원장 인터뷰, 월간, 『말』, 8월호, 2004).

이처럼 이용득 위원장은 한국노총 상층부의 판단에 따른 정당 건설의 오류와 민주노동당의 존재에 대한 불인정을 비판하면서, 이런 기조 위에서 그는 향후 정치세력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의 일단을 다음과 같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대해 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다면, 지금 10석 진출을 가지고 상당히 고무돼서 좀더 큰 걸 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지지자 확보를 위해선 한국노총 조합원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닌가. 한국노총 내엔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을 선택한 이들도 있다. 이들을 아울러서 한국노총이 조직적 차원으로 민주노동당에 결합할 수 있다면 큰일 아니겠나. 그래서 내가 민노당의 몇몇 지도부들에게 한국노총을 한 번 방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나더러 요청을 하라고 하더라. 우리는 정

치적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조직이다. 자기들이 스스로 여길 방문해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현장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으로 가자고 요구할 텐데, 자만에 빠진 건 아닌가. 나중에 조합원들이 다른 정당 가자고 하면 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라면 과연 기존의 보수 정당과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양대 노총을 적자와 서자의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닌가(이용득 위원장 인터뷰, 월간 『말』, 8월호, 2004).

이것은 한국노총이 정당 건설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며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시도할 수도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용득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충의를 물어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겠다”며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2004. 7. 24)에 참석하여, “지금까지 한국노총은 지도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독자적 정치활동을 해왔다”며 “그러나 현장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프레스리안, 2004. 7. 26).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노총은 분명 기존의 정치세력화 방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치방침과 실천을 2000년대의 몇 년 동안 실험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실험은 한국노총의 취약성과 한계를 드러내면서 상당한 실패로 끝났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신생 정당에 대한 선거환경 열악, 지역구도 잔존, 당과 노총과의 실질적인 연계 미흡, 현장조직의 신뢰 부재, 각급 조직의 결의 미이행, 조합원 참여 미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한국노총 정책본부, 『한국노총 2004년도 사업계획』, 2004). 앞의 두 가지 평가는 민주노총과 이와 관련된 정당인 민노당의 성공을 볼 때 정당한 평가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머지 후자, 즉 한국노총과 녹색사민당의 관계 및 한국노총 지도부와 조합원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다음의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원래 당을 반대한 사람이다. 시기가 아니라, 현장성이 떨어지는 한국노총 조직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 성립 의도를 나쁘게 갖고 있었다. 한국노총의 상층부가 정치적 진출을 위해 뽀뽀로 쓴다는 이야기

도 있었다. 이를 불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와 조합원들과 충분한 대화가 없었기에 대중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선 때 일단 만들어 버렸다. 만들지 않았으면, 노무현, 이회창... 어떻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인터뷰 K, 2003. 8. 14).

이처럼 녹색사민당의 문제점은 정치환경과 짧은 준비 등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취약한 지지, 즉 현장성의 취약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녹색사민당의 정당명부제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무용지물로 만든 핵심 원인이었다. 이러한 조직 내부의 한계는 녹색사민당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나타났고, 그 결과 녹색사민당 ‘호’는 얼마 가지도 못해서 침몰의 비운을 맞이했다.

다. 새로운 상품: 사회민주주의

한국노총은 앞에서 보았듯이 경제위기 이후 운동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 온 것은, 박동에 의하면, “민주주의, 복지사회, 인간 중심의 3대 이념”이었다. “서구 선진국에서 이 같은 이념은 사회민주주의의 표상”되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스펙트럼상 민주당 좌측, 민주노동당 우측의 중도노선에 해당”된다(박동, 2002).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노총은 사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1990년대 들어 표방한 한국노총의 ‘민주사회복지를 위한 노동조합주의’도 이런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사민주의라는 구체적인 담론으로 제시된 것은 녹색사민당이 당명과 당의 이념을 명시적으로 선포하면서부터였다. 즉 ‘민주사회당’, ‘한국사회민주당’, 그리고 ‘녹색사민당’이라는 당명은 명시적으로 사민주의와 한국노총이 연관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민당과 녹색사민당의 대표를 지낸 장기표는 “노동운동의 이념을 사회민주주의로 할 필요가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본래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념인데다 사회보장제도를 핵심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서민대중의 지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시대상황에 꼭 필요한 이념이기 때문에 국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대중의 이익과 일치하는 점이 많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장기표, 2003).³⁵⁹⁾ 이처럼 그는 한국노총과 사회민주주의가 친화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념과 정책 위주의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과 우월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민주노동당은 이념이 모호하고 사회당은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을 뿐”이다(장기표, 2003). 더 나아가 그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강령에는 사회주의를 계승발전시킨다고 하고 있으나 과연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사회민주주의를 배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함으로써 노동자계급 정당과 사회주의 정당의 이미지를 준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가 낮은 것은 물론 진보적 지식인이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것은 “민주노총에 종속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런 맥락에서 “민주노총에 기반한 노동자정당이 있는데도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서민대중의 권익까지 대변하는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기표, 2003).

이러한 장기표의 관점은 사실 녹색사민당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 동일하다. 녹색사민당은 한국 내에서 사회민주주의 이론과 정책의 실현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강령과 정책을 만들었다. 녹색사민당 강령

359) 장기표 대표의 사민주의에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들어 있다: “중국과 우리의 경쟁하는데, 쌀값을 계산하는 데 중국 규모와 비교규모의 경제가 되면 안 된다. 사회보장제도가 중국은 잘 되어 있기에, 고등교육 대학교육도 다른 돈 필요치 않다. 우리가 중국에 비해 월급을 더 받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 아니다. 중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에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물가도 낮추고 임금도 낮추는 것이다. 자본은 시장 밖으로 나가고, 노동력은 들어오고, 우리는 얼마 못 간다. 우리가 IT가 경쟁력이 없기에, 사민주의밖에는 안 된다”(인터뷰 K, 2003. 8. 14).

전문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인간 존엄,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공존하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민주사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사회이다. 공동체 의식, 연대, 책임 있는 자유 등의 가치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사회 보장과 역동적 사회발전을 동시에 엮어 내는 초석이 될 것이다(녹색사민당 강령 전문).

강령은 강령 전문에서 “녹색사민당은 민주주의의 이상에 기초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와 생명의 가치,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녹색사민당이 추구하는 사회는 자유, 평등, 복지, 생명, 평화의 다섯 기둥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강령은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는데, “자유와 평등은 동전의 양면이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평등해야 하며, 평등이 없는 자유는 방종에 불과하다. 평등이란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에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가꾸고 사회에 영향을 주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와 평등은 개인적 권리인 동시에 모두에게 가장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집단적 해법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협조할 때 자신의 삶을 더 원숙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협조는 공공선이다”라고 주장한다(녹색사민당 강령 전문). 특히 강령은 “녹색사민당은 노동자·농민·여성·서민층·지식인·중소기업가 등 진보세력을 하나의 연대로 조직하는 때 역할을 하여 생명 존중에 바탕을 둔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녹색사민당 강령 전문).

이러한 총론에 이어 각론으로 녹색사민당은 복지정책에 대한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녹색사민당의 복지정책은 “자유·평등·연대의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단지 저소득층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구성원 모두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달리 표현하면, 이는 모든 국민들이 연대정신하에 서로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모든 국민들이 복지에 필요한 재정에 다 함께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녹색사민당 100대 정책).

녹색사민당은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녹색사민당은 민주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동의 권리가 보호되는 가운데 노동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주목한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 등 기업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소비자 등 기업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당사자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기업수준과 전국수준 모두에서 노동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즉 국가적 수준과 기업수준 모두에서 노동의 참여확대를 통해 산업평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녹색사민당 세부강령)³⁶⁰⁾

이런 맥락에서 노사정위의 참여와 노사정위의 기능을 확대 재편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노사정위원회가 안정화되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를 단순히 노동정책만이 아니라 경제정책, 조세정책, 사회정책, 교육정책 등 정부정책 전반에 걸친 노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구로 그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녹색사민당은 노사정위원회를 명실공히 참여민주주의의 전당으로 만들 것이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모든 산업과 부문의 발전 전망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고 협상하는 노사정의 토론민주주의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녹색사민당 100대 정책).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노총의 다양한 이념적 언설들, 예를 들면, “인본

360) 녹색사민당은 서구 노동정치 경험에 주목한다. 오늘날 많은 선진국에서는 소모적인 노사대립을 종식시키고 노사의 신뢰형성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지속해 왔다. 여기에는 ‘민주적 코포라티즘’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이 포함된다. ‘민주적 코포라티즘’은 북구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때 높은 조직률과 포괄성을 갖는 강력한 조직노동과 함께 사회민주당과 같은 친노동자 정당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즉 사민당이나 노동당 등이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은 중앙집권화된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억제를 수용하는 대신에 완전고용을 보장받는 정치적 교환을 수용한 바 있다. 녹색사민당은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유형을 참조하기란 어렵다고 판단한다. 한국은 북구국가들과 달리 조직노동의 비중이 매우 낮고, 노조지도부가 허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노조가 ‘대표 독점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들도 아직 특정 정당과 정체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구의 경험을 한국사회에 도입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 녹색사민당은 대안으로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추구한다(녹색사민당 100대 정책).

주의”, “통일민족복지국가”, “민주복지사회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 등은 정당 쪽으로 넘어오면서 사회민주주의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기존과 다른 경향이 한국노총 내부에 하나의 담론으로 존재하다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이러한 경향과 언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데, 첫째, 사민주의 이념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급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즉 사민주의는 선거전술용으로서 “선거상품”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사민주의 옷을 입은 것은 정치적 영향력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었다. 노동자정당이기에 때문에 공산주의체제의 결합을 느끼는 가운데서 좌파적인 것들 중에서 사민주의가 맞다고 느꼈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 의식과 국민들 의식으로 봤을 때, 노총이 당을 만든다면 우파보다 좌파적인 당을 만든 것이 일반적이지 않는가? 즉 정치적 계산하의 판단이었다(인터뷰 J, 2003. 7. 23).

이것은 16대 대선에서 신한국당의 지지에서 보듯이 한국노총 내부에 상당한 박정희식의 “한국적 민주주의”에 의해 세례받은 세력부터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경향이 여전히 혼재되어 상존했다는 점에서, 사민주의가 특정한 세력으로 실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상이한 세력들이 논쟁을 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민주의가 한국노총의 기본적 이념으로 정립되지 않고 선거전술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노총 안에서는… (이념 분포가-연구자 주) 광범위하다. 사민당을 만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익당을 만들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뿐이다”(인터뷰 J, 2003. 7. 23).

둘째, 이런 논의들이 내부 논쟁이나 토론을 통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부 상층 간부들이나 이론가들에게 통용되었다는 점이다. 상층 간부들에서 이 이념이 선거전략으로 채택될 때조차 이들은 논쟁에 열려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에는 당을 하면서 이념적으로 극좌부터 극우까지 다 들어가 있었다. 위원장의 뜻으로 가자고 결론을 내렸다. 의사결정 구조로 봐서

민노총은 불가능했다. 당도 그러기 때문에 이념적 갈등은 없었다(인터뷰 K, 2003. 8. 14).

이상의 측면에서 녹색사민당의 사민주의는 한국노총을 자신의 모태로 했다기보다는 일부 명망가들의 주장과 선거용 상품으로서 한국노총 내부의 묵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한국노총 내 사민주의는 녹색사민당의 몰락과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3. 분화와 경쟁: 자유주의 혹은 시민주의?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한국노총도 분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분화는 일차적으로 상이한 현장조직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 제조업 그리고 제조업 이외 운수, 공공부문, 정부정책을 통해서 근로조건 향상시키는 데에는 정부와 친밀하게 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다. 운수랄지... 그러나 공공부문은 투쟁하려고 하니... 다르다. 금융·공공부문은 상당히 전투적이고 향후 방향은 지켜봐야 한다. 운수는 정부와 로비를 잘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식이다... 제조업은 정부와 관계가 없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이념적으로 노동자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회의원,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신경 안 쓴다. 제조업은 사민당 관심 없다. 금융이나 공공부문의 대졸자들은 관심이 있으나 제조업 관심 없다. 제조업이 활발하고 개혁적이었으나, IMF 이후 경제도 어렵게 되자, 노총운동이 구조조정의 동력(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력-연구자주) 가지고 움직였다(인터뷰 J, 2003. 7. 23).

이러한 분화는 단위노조는 물론이고 상층 수준에서도 공론화나 토론이 거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정 이념적 정파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념에 따른 차이라기보다는 조직적 성향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민주항쟁과 이에 따른 한국노총의 내부 개혁 과정에서 경향적으로 차이나는 그룹이 존재하는 듯이 보이는데, 이는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하는 사회개혁적 노동

조합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하는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로 범주화될 수 있다.

비록 정당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사회민주주의라는 담론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을 기조로 하는 새로운 운동노선을 정립하려는 노력은 한국노총 내부에 사회민주주의가 하나의 경향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기표 대표가 울산에 가서 한 시간 반 정도 놓고 연설을 했다. 다 뿔났다. 사민주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가 서유럽에 대표자를 보내자. 직접 가서 보자!... 갔다와서 사민주의의 우월성을 진파하려고 한다. 사민주의에 대한 불을 조성하려고 한다. 일반조합원들은 잘 모른다. 사회보장제도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인터뷰 K, 2003. 8. 14).

이런 점에서 한국노총은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가 비록 상층 수준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논의되긴 했지만 하나의 경향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운동노선을 정립할 때마다 공공연하게 실리적 노동조합주의와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정책 개입을 통해 조합원들과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운동노선을 표방해 왔다.

한편, 한국노총 내부에 한국적 민주주의, 즉 자유주의 세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도 부인하기 힘들다. 이들은 반공적·협조적 노동조합주의에서 실리적·경제적 노동조합주의로 점진적인 진화를 해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사회개혁적 또는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50년사를 훑어봤는데, 잘못 쓴 부분이 있다. 한국노총은 나쁘고 전평이 울게끔 써 왔다. 자격 없는 놈이 노총 50년사를 썼다. 집안 역사를 쓰더라도 거짓말을 해서 덧붙여 쓰면 안 되지만, 노총보다 공산당의 전위조직을 울게 표현했다. 일반 역사학자가 볼 때도 이진 말이 되지 않는다. 공산당의 노동조합은 직업동맹(공산당 노조)이지 노조가 아니고 공산당의 혁명노선을 보좌하는 것이다(인터뷰 I, 2003. 7. 2).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노총은 개혁적 세력, 즉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

의를 표방하는 세력과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세력, 즉 경제적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으로 점차 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솔직히 어느 쪽이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또는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인지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실리적 조합주의 경향을 보이는 입장도 때론 사민주의에 찬성하기도 하고³⁶¹⁾ 사회민주주의 입장의 경향도 강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의 분화는 경향적일 뿐이고 혼재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노총 내부에 이념 논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녹색사민당이 사회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을 때조차 한국노총은 이념 논쟁의 무풍지대였을 정도였다.

특히 현실적으로 한국노총 토양 위에서 사민주의 세력이 성장하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첫째, 녹색사민당의 패배로 인해 사회민주주의라는 담론은 더 이상 매력적인 상품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좌절된 정당 건설 시도는 향후 한국노총을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로 급속하게 향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유주의 세력의 광범위한 존재와 신자유주의에 의해 발생한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조합원들의 실리주의 경향은 향후 한국노총이 보다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경향을 강화할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민주노총과의 차별성을 통해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를 자신들의 정체성의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361) 반공주의에 기반해서 노동운동을 해왔고 현재에도 이러한 입장에서 있는 한 번 접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난 민주사회주의자다. 우리는 사회주의도 알아야 한다. 사회주의에도 서구 스타일의 사회주의, 스탈린 사회주의가 있다. 서구식의 사회주의는 인권, 자유의 다 보장이 있지만, 지금의 스탈린의 사회주의는 김정일만 남아 있다. 옛날 스탈린식 사회주의 스타일은 결사 반대한다. 한편으로는, 만민이 균등하게 살기 위해서 민주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노동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인터뷰 I, 2003. 7. 2).

제4절 이념분화와 정체성의 딜레마

이상에서 보듯이 1990년대를 거쳐 오면서 남한의 정치행위자들은 이념의 혼란, 혼동, 그리고 분화를 경험했다. 한편, 노동운동은 이념분화 과정에서 또 다른 난제를 만나 주춤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념의 딜레마이다. 즉 현재 노동운동은 이념의 딜레마라는 늪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서 이념적 딜레마란 노동운동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데 따른 딜레마이고, 둘째는 자신의 입장과 이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라도 불균형적인 세력관계의 힘의 부족으로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딜레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들의 요구와 이념적 집단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이다.

우선 이념의 딜레마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민주의적 경향, 즉 사회적 조합주의를 주창하는 세력이 노동운동의 주류를 형성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민주의 이데올로기가 노동운동의 주요 담론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이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자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의 언급은 그 이유의 일단을 보여준다.

(활동가들이) 서구의 사민주의를 거치면서 그 결과를 봐 왔기 때문에 (사민주의를 우리) 사회 지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딱지가 붙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신을 사민주의라고 선언하지 않으나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심지어 강력한 세력으로 존재한다. 앞으로라도 사민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노총이 사민주의 딱지를 가져갔기 때문에, 민주노총 내에서는 그 용어가 복권되기는 어려울 거 같다(인터뷰 E, 2004. 2. 10).

이것은 그동안 극단의 이분법의 시대 속에서 사민주의가 회색주의와 개량주의로 낙인 찍혀 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이념에 대한 논쟁을 방해함으로써 이념을 모호하게 만든다. 한편, 좌파의 경우도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천명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수준의 레드콤플렉스와 전략 또는 대중적 수준과 같이해야 하는 정치적 전술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실리적 조합주의의 경향에 있는 세력은 자신있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한국노총이 녹색사민당을 통해 자신을 사회민주주의자로 선언한 데서 알 수 있듯, 가장 자유민주주의를 닮았다고 자처하는 한국노총이 정당의 명칭에서 보듯이 명시적으로는 사민주의자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신에게 이름 붙이기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위치의 불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현실은 노동운동이념이 처한 딜레마를 현주소를 보여준다.

이처럼 자신을 숨기거나, 때론 부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가지게 된 각 세력들의 '지도'는 자신의 이념에 따르는 구체적인 실천과제, 즉 정책을 제시하는 데도 모호한 경향이 있다. 즉 상이한 이념들이 동일한 정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민주의가 자유주의의 정책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런 혼동보다도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이념과 연관된 정책 논의의 수준이 낮다는 데 있다. 즉 정치 과정과 논쟁을 통해 이념분화가 많이 진전되었지만 이 논쟁은 구체적인 정책과 연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정책과 밀착되지 않는 이념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체들의 능력과 그들이 서 있는 현실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한의 좌파는 “정책결정 과정의 현장”에 있었다기보다는 “거리”와 “공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거부해 왔다. 정책으로부터의 소외는 정책생산의 능력을 거세당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현실 개입에 있어서 노동운동의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즉 참여하자니 개입의 구체적 자료와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런 불참의 수모를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딜레마 상황!

한편, 참여방법에 있어서도 노동운동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 국민과의 주장대로 노사정위 틀에 들어가자니 실익 없이 포섭전략에 말려들 수 있고, 그렇다고 좌파처럼 물리적 압력을 통한 정책의 관철 또는 생산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정책의 개입은 조합원의 지지를 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왜소한 자신들의 정책능력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의 딜레마는 불균형적인 권력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보다 심화된다. 사민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조합주의는 정책참가 전략에서 과연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 현재까지 분명 이것은 실패해 왔다.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노사정위는 그동안 ‘저신뢰의 제도화’를 생산했다.³⁶²⁾ 그리고 민주노총 내부의 특정 정파는 노사정위 참여를 원칙적으로 표방하면서도 불균형적인 권력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신들의 사회적 조합주의 전략을 의심하고 있다. 즉 국민과 집행부는 노사정위에 참여를 하자니 얻을 것이 없고 그렇다고 불참하자니 자신들의 이념적 입장과 배치되는 난감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그럼 사회주의에 기반한 좌파의 투쟁전략은 이것보다 유효한 전략인가? 이것 역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좌파들은 “노동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대안은 자본이 단호하게 거부”한다면서 “노동자계급의 관점과 세계관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하는데(원영수, 『기관지 노힘』, 제51호, 2004. 3. 30), 문제는 이러한 입장을 노동자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다음은 그 고민의 일단을 보여준다.

(현장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 정리해고에 대해 수용 여부라면 좌파가 간다면 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참 어려운 문제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정리해고 반대가 아니라)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계열사 취직’ 등을 목표로 해야 맞아떨어지는 것인데, (좌파로서는) 그렇게 다가갈 수는 없을 것이다(인터뷰 E, 2004. 2. 10).

이처럼 좌파는 상당히 선명한 깃발을 산 정상에 꽂았으나 그 깃발을 따라 더 이상 그들의 ‘노동자들’이 모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고립과 고

362) 저신뢰의 제도화란 노사정위가 지속될수록 노동정치 주체들 간의 불신이 구조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노사정위 밖에 있는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를 한편으로 하고 안에 있는 한국노총과 정부의 관계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노정간의 이중의 전략관계가 형성되고, 그 결과 노사정위는 생존은 하나 생산은 하지 않는 식물인간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 결과 원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노사정위는 불신의 제도화 기구로 전략하는 기묘한 위치에 처해졌다(유범상, 2003 참조).

독 속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것은 노동운동 전체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즉 신자유주의가 국가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조합원들은 이념보다도 밥을 요구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개혁투쟁도 외환위기 전까지 민주노총의 재벌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실제 재벌개혁이 가시화되면 대공장노조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도 그 당시에 조직 내부적으로 안티가 없었다. 오히려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재벌개혁 요구로 압박함으로써)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에... 명분 없는 내용들이 꽤 있었다. 이후 재벌 구조조정과 일부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오기도 했다. 조합원의 층이 다양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관계도 그렇다... 외환위기 이후 실질적 이해관계와 괴리되면서 조직은 훨씬 복잡해졌다고 본다(인터뷰 D, 2004. 2. 25).

이상에서 보듯이 현재 노동운동은 복합적인 차원의 딜레마에 처해 있는 중이다.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이념 역사를 통해 노동운동은 경합, 진화, 그리고 분화라는 경향적 발전을 해오는 가운데 도달한 지점이 딜레마 함정이라는 사실은 상당히 노동운동을 당황스럽게 한다. 그리고 이 딜레마는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의 정치라는 정치경제적 상황과,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임금인상의 정치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분단상태에 봉착되어 있는 노동운동의 현 상태를 감안하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최근에 민노당의 약진은 이런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안인가? 이에 대해 좌파들은 자본주의에 투항하는 “탈계급적인 정체성의 정치,” “국민의 일반이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김영수, 1999), 선거정당, 의회주의 등으로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좌파는 이러한 경향을 역전시킬 마땅한 묘책이 없음을 인정한다: “민주노동당의 성공적인 의회 진출 등에 힘입어 당 내부에서 우파 헤게모니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밑으로부터의 요구와 당내 좌파세력의 활동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성격이 운동정당, 변혁정당으로 바뀔 가능성은 적으며, 이 점은 설령 좌파세력 전체가 민주노동당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세균, 2004). 한편, 사회적 조합주의자들의 딜레마는 다른 데 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의 집권전략을 제시하면서 집권 일정을 가시화하고자 하지만 금방 민주노동당이 제도권의 현실적인 벽 앞에서 겨우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보수정당에 길들여진 국민들과 10석의 국회의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을 이들은 학습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노동당의 한 의원은 최근에 ‘너무 빨리 삼패인을 터뜨렸다’고 자조하고 있다.

세 번째 딜레마는 대중들과 이념집단의 상이한 호흡에서 발생한다. IMF 이후 대중들이 요구하는 것은 고용안정과 임금과 연관된 ‘밥’ 문제의 해결이다. 특히, 기업별노조가 정착되면서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은 이들과,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이들과, 실업자들은 이들과 각기 자신들의 살 길에 몰입하면서 이들은 어떤 경향과 범주로 묶이기 어려운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개인들로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상층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노동운동의 위기를 취약한 이념적 자기 정립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정체성의 정립에 점차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조합원과 지도부 간의 상이한 경향은 노동운동이 처한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즉 지도부가 이념적 지향을 분명히 할수록 조합원들이 지도부로부터 친근감을 덜 느끼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분명 노동운동이 처한 딜레마이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경향을 따르거나 방치하자니 노동운동의 위기 또한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6장

평가와 전망

제1절 경합, 진화, 분화, 그리고 딜레마

해방 직후 3년 동안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와 반공적 노동조합주의가 경합했다. 이 당시 이데올로기 지형은 사회주의와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각축장이었으며, 양 이데올로기의 생존게임 결과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러한 승자독식 방식의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일방적인 승리는 레드콤플렉스에 기반한 기형적인 이데올로기 지형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기형적인 이데올로기 지형은 노동조합운동이념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전평 주도의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와 대한노총 주도의 반공적 노동조합주의가 경합했고, 그 결과 대한노총이 일방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승자독식의 원칙에 의해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세력이 무대에서 완전히 추방되었다. 결국 노동운동이념도 기형적인 이념지형을 자신의 특징으로 했다. 따라서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지형의 변형과 발전은 기형적인 이념지형의 변형, 즉 민주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1970년대 근대화 시기에는 인간적 노동조합주의와 협조적 노동조합주의가 대립했다. 이 당시 국가 수준의 이데올로기는 한국적 민주주의로 보다 세련되게 정립되었는데, 이것은 반공주의에다가 근대화, 즉 경제성장 이데올로기가 첨가된 독재정권의 개발모델로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표 6-1> 노동운동이념 요약

	노동조합주의 대립구도	행위자	이념지형의 특징
해방 8년	혁명적 노조주의 대 반공적 노조주의	전평 대 대한노총	기형적인 이념지형의 형성
1970년대	인간적 노조주의 대 협조적 노조주의	민주노조 대 한국노총	한국노총의 독주와 이에 대한 저항
1980년대	변혁적 노조주의 대 실리적 노조주의	민주노조(전노협, 민주노총) 대 한국노총	양대노총의 경합과 이념지형의 변형
1990년대 이후	변혁적 노조주의 대 사회개혁적 노조주의 대 실리적 노조주의	민주노총(현장파, 국민파, 중앙파), 한국노총(개혁파, 보수파)	이념의 분화와 정체성의 혼동

비교하여 독특한 내용을 담보하고 있었다. 노동운동진영은 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받았는데,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는 어용적 노동조합을 이끌면서 국가 코포라티즘적 성격의 노동체제의 형성과 유지에 공헌했다. 즉 이들은 권위주의적 국가에 협조하고 종속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고자 했다. 한편, 민주노동운동은 기독교 휴머니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를 발전시켰다. 민주노조운동은 정부의 병영적 노동통제 속에 신음하는 일반노동자를 외면한 어용적 노조에 대항하여 작업장에서 인간을 발견할 것을 외쳤는데, 이것은 기독교 휴머니즘과 이들 세력에 영향을 받은 바가 컸다. 민주노조운동은 기형적인 이념지형에 새로운 이데올로기, 즉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를 가지고 밑으로부터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노동운동이념의 역사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노동자 중심의 소수의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자기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인간적 노조주의를 가지고 공고화된 기존의 이념지형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이념지형은 변형의 계기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광주민주항쟁에서의 계급과 사회주의의 발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로 외화된 전노협의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광주’와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흡수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지평을 보다

세련화·과학화시켰다. 한편, 한국노총은 반공적·협조적 노동조합주의에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로 자기 변신을 모색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민주노조의 조직화와 세력화에 대한 강제된 자기 진화에 따른 것이었다.

1990년대를 경유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의 조직과 헤게모니 경쟁은 강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의 양대 진영은 혼란과 혼동, 그리고 분화와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다. 혼란은 소련과 동구 등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었다. 자신들의 이념에 대한 진위와 실효성이 의심되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시작되고, 혼란은 곧바로 노동조합운동을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착각의 상태, 즉 혼동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는 노동운동진영의 이런 혼란과 혼동을 자유주의는 물론 사회주의와 사민주의의 구분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노동운동이념은 대체적으로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그리고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로 정착되고 현재 경합하고 있는 중이다.

이상의 노동운동이념사를 통해 볼 때 한국의 노동운동 좌우파는 모두 풍부한 이념 논쟁과 자기 정체성을 갖는 데 실패한 듯이 보인다. 좌파는 정부와 자본의 탄압하에 일관되게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추구해 왔지만, 이념에 대한 내부 논쟁과 자기 성찰이 부족했다. 또한 군부독재와 후발자본주의라는 정치경제적 상황과 기업별 노조에 기반한 조직형태는 이념에 대한 논의와 이에 기반한 실천보다는 임금인상 정치와 고용을 위한 생존의 정치를 전개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이 기업별 노동조합 시스템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 과실이 이들에게 보다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은 특정 이익집단으로, 그리고 이기주의자로 비난을 받고 있다. 결국 1980년대 깃발이었던 “좌파,” “진보” 또는 “사회주의”라는 담론은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 변혁성과 내용성을 상실한 하나의 상품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한편, 우파에게 이념은 거주장스럽거나 사치스러운 것에 불과했다. 우파에게 이념은 좌파와 구별하기 위해, 또는 좌파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했을 뿐 자신들의 입장과 지향을 정교화하거나 비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 이념 또한 이들 스스로에 의한 생산물이었다기보

다는 위로부터 주어진 장식물에 불과했다.

본 논문은 이상의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의 역사를 경합, 진화, 분화, 그리고 딜레마라는 네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전체적으로 친정부적이고 실리적 경향을 갖는 노동조합운동인 한국노총과 정부에 저항적이고 변혁적 경향을 갖는 노동조합운동인 민주노조 흐름 간의 경합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각각의 내부에서 상이한 흐름들이 경합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합의 과정에서 노동운동이념은 진화해 왔다. 조악한 형태의 반공적 노동조합주의가 실리적·경제적 노동조합주의로 진화해 왔다면,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변혁이론과 만나면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또는 변혁적·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로 진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특히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그리고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로 분화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노동조합주의 각각은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입장이 현실의 상황에서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의 경우 점차 조합원들과 사회로부터 고립화되는 경향이 있다면,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흐름의 경우 불균형적인 권력관계로 인해 자신들의 실천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한 한국노총의 경우 조직에 대한 불신과 이탈, 그리고 정당정치에 대한 실패와 혼란으로 비전과 이념 정립에 있어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각 이념이 자신을 명확히 하면 할수록 현실의 대지 위에서 생존이 불명확해지는 상황, 그렇다고 자신을 실용주의나 대중들의 요구 뒤로 숨기면 노동운동 정체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상의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노동운동이념은 각 시대마다 경합상태에 있었다. 행위자의 측면에서 볼 때 우선 한국노총과 민주노조진영의 대립이다. 이것은 이념의 측면에서 볼 때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와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간의 대립을 의미한다. 한편, 민주노조운동진영 내에 사민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이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노선 대 변혁적 노동운동노선 간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도 이러한 좌우파간의 대립이 있는데, 이것은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경향 대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경향 간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가 경향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고 각 세력의 수렴점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현상은 사민주의가 이념 또는 세력으로서 하나의 커다란 경향으로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그룹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합은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은 이념이 합리적이고 치열한 논쟁에 사용되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보다는 세력 싸움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각 세력들이 이념 논쟁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조직했다기보다는 세력 싸움의 도구와 지표로 이념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경합이 대중조직과 조합원들 간의 이해와 동의를 통해 전개되었다기보다는 서클 수준의 정파와 일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조합원들은 경제적 실리주의에 머물렀고 계급성이 거세된 '근로자'로 방치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해방기 이후 현재까지 노동운동이념은 진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한국노총과 민주노조진영은 자신들의 이념을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각각 진화해 왔다. 우선 운동이념 전반이 보다 세력화되었고 다양한 종류의 이념들이 새롭게 표방되고 제시되어 왔다. 예를 들어 반공적 노동조합주의는 근대화에 기반한 협조적 노동조합주의, 더 나아가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로 나간 반면,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계급과 사회주의가 첨가되면서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로 자기 발전을 해 나갔다. 이러한 각 진영의 노동조합주의는 부분적으로는 논의의 단절이 존재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지속되었다. 결국 노동운동은 제도권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기성 제도권과는 다른 이념정당을 만들었고, 사회주의와 사민주의라는 이념과 접점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진화 과정도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데, 우선 진화가 현실의 도전과 이에 대한 응전 과정에서 논쟁과 근본적 성찰 없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전체적으로 볼 때 경향적으로 연속이 존재했는지

라도 각 주체들은 끊임없이 기존의 이념을 단절하고 부정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평, 전태일 정신, 1980년대의 운동 등은 경향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각 세력에 의해 표방되긴 했지만, 이에 대한 토론과 연구의 성과에서 볼 때 그 함의가 깊이 있게 논의되고 계승되었다기보다는 편의에 따라 각 세력들에 의해 이용된 측면이 존재했다. 더 나아가 이념의 진화가 위로는 다양한 이데올로기, 즉 사회주의, 사민주의, 자유주의, 생디칼리즘 등과 깊이 있게 연결되지 못했고 밑으로는 구체적인 정책과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이념의 진화 또한 한계를 갖고 있다.

노동운동이념사의 세 번째 특징은 노동운동이념이 분화되면서 일정한 지형을 형성해 왔다는 점이다. 그 지형의 핵심은 사민주의가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나머지 세력들, 즉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비판과 비교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다. 이러한 분화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긴 했지만 민주노총의 경우 분화를 나타내는 특징적인 논쟁은 1992년 노동운동 위기론과 1998년과 2004년의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제4장 제2절 3. 마.; 제5장 제2절 2. 나. 참조). 결국 노동운동 위기 논쟁과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 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가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민주의 세력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등으로 하나의 실체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노동정치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하나의 경향으로서 매우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자신을 사민주의로 규정하거나 표방하는데 매우 인색해 왔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의 경우 민주노조진영에 비해 이러한 분화는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조직간의 차이에 따라 일정한 경향적 차이가 나타나는 수준에서 사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분화가 감지될 뿐이다. 하지만 정당 건설 과정에서 녹색사민당이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했다는 점은 그것이 비록 선거상품으로서 전략전술일지라도 내부 분화가 잠정적인 수준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분화에 있어 문제점은 첫째, 자신의 변화를 보다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변화와 입장에 대해 매우 냉소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로 분화가 풍부한 논쟁을 통해 확산되기보다는 개인 또는 정파 내

부의 결단과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많다는 점이다. 즉 논쟁은 지면과 토론을 통해 사회적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결국 현재의 분화는 지적 전통과 상호간의 논쟁, 그리고 이질적인 집단간의 소통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 그 한계가 있다.

마지막 특징은 노동운동이념이 현재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정체성의 딜레마는 민주노총 내 좌우파 각각에게 있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딜레마는 좌파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 할수록 점점 사회와 자신들의 조합원들로부터 고립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노동자의 힘’을 비롯한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대중적 고립’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전망의 부재로 인한 ‘정치적 무력함’이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현실에 무거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남구현 외, 2004).

좌파에게 있어 이러한 딜레마는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즉 경제위기를 매개로 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조합원들의 실리적 경향의 심화, 이에 따른 민주노조운동의 급속한 우경화, 그리고 민노당의 의회 진출에 따른 체제내화 가능성의 증대 등은 바로 좌파의 딜레마가 심화되는 객관적 조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결국 민주노총의 좌파는 자신의 색깔과 실천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로부터 제기되었던 노동운동의 위기를 심화시킨 주범이라는 내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민주노총 내 우파의 경우는 사회적 조합주의 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의 현실성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 사회민주주의적 전략, 즉 사회적 조합주의와 이에 의한 노사정위 참여는 계급타협을 전제로 하는데, 현재와 같은 불균형적인 권력관계, 즉 자본과 국가의 힘의 우위 상황은 국가와 자본을 실질적 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불러내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론자들은 이들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으며 다시 좌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이

리한 딜레마는 정당정치에 가서는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날 전망이다:

‘보수주의적 정치권력 구조가 응고화되어 있는 제도권 내에서의 진보 정치의 어려움’과 ‘선거정치의 딜레마’, 즉 득표확대전략의 차원에서 혹은 권력분점전략의 차원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체성을 포기해야만 하는 의회주의에 경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계급적 정체성의 정치를 제도적 수준에서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탈계급적인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 혹은 국민적인 일반이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에 불과하다(김영수, 1999).

이처럼 사회적 조합주의론자들은 현재와 같은 힘의 관계와 정부와 자본의 비협조적 태도하에서 정당정치가 가시화될수록, 그리고 노사정위원회가 활성화될수록, 오히려 현실과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계급타협 전략의 성과 사이에 차이를 더욱 크게 느낄 것이고 이에 따라 이들의 이념과 전략은 의심을 받을 것이다. 현실과의 괴리 이외에도 이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와 지향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의 딜레마는 이들에게 있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딜레마가 민주노총 내부의 이념 그룹에 관한 논의라면 한국노총 내 이념적 딜레마는 민주노총과 차원이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애초부터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그 내용은 한국적 민주주의에 종속된 반북주의의 반공적 이념과 성장제일주의의 근대화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것이었고 이 속에서 결국 협조적 노동조합주의의 길을 따라 정부로부터 수혜를 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겨왔다. 따라서 한국노총의 이념사는 어떻게 반공주의와 근대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적 민주주의와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를 탈피할 것인가에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민주화 이후 자기 반성을 갖고 내부 논쟁을 전개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기도 전에 위기에 빠져 생존권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내부 개혁을 통해 내세운 실리적 노동조합주의의 진정성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거나 이것을 통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 있다. 즉, 반대진영과 조합원들은 한국노총의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를 어용적 노동

조합주의와 동일시하고 있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고용위기 속에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는 너무나 불안하고 성난 조합원들에게 무기력한 대안으로 비춰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정부와 자본 또한 한국노총의 실리적 조합주의를 이용하려고 하지 파트너로 생각하여 도움을 주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노총은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듯이 보인다.

이상의 노동운동이념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볼 때,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경합하면서 진화했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현재 일정하게 분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1980년대부터 새로운 노동운동 이념지형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각 조직과 정파들은 상당한 산고의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 모두가 정체성의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따라 상당부분 이념지형의 성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이념빈곤의 기원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이데올로기와 이념은 좋은 지도를 만들지도 못했고 지도에 따라 세상을 그리려는 시도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결과 이념은 정치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지평을 넓히는 데 실패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양적 측면에서 이념의 과잉 현상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 이념의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정치세계는 이념과 밀접하게 연관해서 작동하기보다는 전쟁의 승자와 지역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좌우되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정치는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정책과 연관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로부터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사회의 이념빈곤은 어디로부터 기원하는가? 그동안 한국사회가 좋은 지도(이념) 작성에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성도 없었다는 점에서 그 핵심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해방 직후

냉전과 좌우간의 사활을 건 싸움 속에서 이념은 정치세계의 유의미한 요소가 될 수 없었다. 남한의 정치행위자들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위로부터 선형적으로 주어진 이데올로기를 ‘신성시’하기만 하면 되었다. 따라서 ‘한국적’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의심하는 것은 불경죄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단죄받았다. 이것은 사회주의 또는 주체사상을 절대 진리로 숭배했던 좌파들에게 있어서도 크게 틀리지 않았다. 특히, 경제성장 제일주의 담론과 군부독재라는 정치지형은 세련된 이데올로기와 이것을 기초로 한 공동체 건설의 구체적인 설계도 또는 정밀 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들의 관심은 사회주의 세력 또는 민주화 세력을 억압하고 정치 세계에서 추방함으로써 달성되는 차이의 소멸 또는 적대의 소멸에 있었다. 좌파 또한 이념을 세련화할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작업장조차 가질 수 없었다. 이러한 사이 한국의 정치는 이데올로기와 이념에 따라 정파를 나누고 정치세력을 조형하기보다는 지역주의나 학연, 혈연 등의 가치들을 가지고 정치세계를 관리 또는 지배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정치세계, 다시 말해 공적 공간에서 토론과 논쟁을 생략한 채 선형적으로 주어진 이념선과 ‘아’와 ‘적’을 구분하는 데 동원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조된 정치세계는 정파의 발아를 억제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세계 속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의 역기능성은 국민들은 물론 정치가나 활동가들조차 이데올로기 및 이념에 대한 무관심 또는 냉소주의를 갖도록 이끌었다.

노동운동이념도 이러한 이데올로기 정치지형 위에서 존재했다. 우선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레드콤플렉스와 반공주의를 체득한 ‘국민’들이었다. 한편 활동가들은 이념적 논의를 위한 일체의 공적 공간을 군사정부로부터 차압당했다. 따라서 활동가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떨어져서 군사독재에 맞설 강고한 이념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생존을 위한 전투에 무기로 사용된 이념은 토론, 논쟁, 성찰의 계기를 가질 여유 없이, 그리고 정책과 국민과 연계될 없이 활동가들에 의해 급조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이념에 대한 조합원 또는 활동가들의 무관심 또는 노동운동의 이념빈곤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정치경제적 상황에 기인한다. 즉 한국

의 정치 주체는 냉전적 구조와 미국 헤게모니하에서 이념의 다양성과 토론을 통한 자기 성장이 거세되고 과대성장된 국가의 감시와 지휘하에 기형적인 이념적·정치적 지형을 만들었다. 이처럼 이념적 균열에 근거하지 않는 제도정치권과 지체되고 왜곡된 계급형성은 한국노동운동이념 빈곤의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였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 국가정치는 노동정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간섭해 왔고, 그 결과 노동정치의 왜곡과 성장이 국가정치와 깊은 함수관계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노동운동이념의 빈곤을 노동운동 내부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상황적·구조적 원인만으로 노동운동이념 빈곤현상 모두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고,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성장 이후에는 노동운동 내부의 원인도 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내부 비판이 노동운동의 실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여기에서는 노동운동이념 빈곤의 현상 또는 원인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의 노동운동이 제도권의 정치세력과는 달리 이념에 근거해서 자신을 조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노동운동 조직이 한국정치의 '나쁜'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한국의 노동운동도 정서, 사업작풍, 인맥 등에 따라 정파운동이 전개된 현상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이런 차이들이 바로 조직의 균열로 귀결된 측면이 있다.

정파 난립이 심했었다. 1985년에 서노련에서 집회를 하는데 심지어 전태일 어머님보고도 이년 저년 하는 분위기였었다. 지금은 (노조) 외곽 정파조직은 큰 조직이 별로 없다. 노조운동내 인맥이나 성향 등으로 grouping이 되고 있다. 일정하게 지향성이 없으면 분파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인터뷰 D, 2004. 2. 25).

당시의 수많은 소그룹이나 서클들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했던 것도 토론과 논쟁을 통한 상호극복이 아니라 입장 차이를 분열로 직결시켰기 때문이다(조희연, 1989: 256).

둘째, 노동운동이 자기 이념을 만드는 데 미숙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이것은 과대성장된 권위주의 국가 또는 병영적 노사관계 등의 구조적 조건으로 인해 이념형성의 작업장을 가질 수 없었다는 사실 이외에 노동운동 내부의 문화나 이념에 대한 태도로부터 기인한다. 이념은 토론의 과정에서 차이를 확인하고 경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경우 각각의 정파는 여타 정파와 토론없이 대부분 자신들의 특정 이념만을 논의했고 따라서 각각의 이념은 특정 서클을 넘어서서 토론되지 못했다. 그 결과 각 이념들은 특정 서클 내에서만 머물다가 금방 시드는 경향이 많았다. 때론 활동가들이 이러한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위로부터 이념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리고 정파간의 토론이 되었을 경우에도 토론과 이념은 입장 차이를 확인하거나 분열의 골을 깊이 하는 데 이용당했다.

80년대 후반 학출들의 폐해가 대중운동에서 이념 논란 때문에 운동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인터뷰 D, 2004. 2. 25).

당시의 수많은 소그룹이나 서클들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했던 것도 토론과 논쟁을 통한 상호극복이 아니라 입장 차이를 분열로 직결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논쟁이 지나쳐서 당면의 실천을 방기하는 경우도 많았다(홍승태, 1994: 153).

이처럼 이념의 폐해 때문에 활동가들조차 이념을 경원시했고, 그 결과 노동운동이념이 보편성을 획득하거나 대중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서클 내에서 전략 또는 전술적 지침으로만 해독되고 이것이 활동가들 수준에서 회람됨으로써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풍부화의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한국 노동운동이념의 빈곤은 낮은 수준의 소통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지적되어야 할 점은 민주노조진영과 한국노총 간에는 극단적인 소통의 단절현상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두 진영은 논쟁하거나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제거하는 데 모든 시간을 소비했다. 즉 양자는 변변한 이념적 소통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하고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투쟁전술 수립에 골몰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이념지형에

서 레드콤플렉스와 역레드콤플렉스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치했다. 이러한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이념논의의 편향도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는 한국노총이 이 담론을 선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의 원래적 의미가 토론되기도 전에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지형에서 천덕꾸러기로 치부되었다.

셋째, 특히 대중으로부터 이념이 소외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이념 또한 대중을 소외시켰다는 점에서 한국노동운동이념의 빈곤 현상이 나타난다. 기형적인 이념지형 속에서 각 이념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을 보여주고 실천을 강제하는 데 실패했다. 실제 대중에게 현실의 이념은 경외와 공포의 대상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중은 레드콤플렉스와 생존의 문제로 인해 감히 이념과 가까이 하려는 용기를 낼 수 없었다. 한편, 좌파 진영의 활동가들은 급박하게 전개되는 생존을 위한 정치적·이념적 ‘전쟁터’에 있었고 역레드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적 방식으로 이념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노동운동의 이념빈곤은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일반노동자들도 이념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즉 한국의 이념지형은 활동가들에게는 역레드콤플렉스를, 대중들에게는 레드콤플렉스를 강요하고, 이들이 이념 논의와 비판을 통해 보다 풍부한 이념 지평과 자기 이념을 갖는 것을 방해했다³⁶³. 다시 말해 이념 논쟁이 공론화되거나 대중조직 수준에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반공국가의 ‘국민’으로서 여전히 반공주의와 레드콤플렉스에 머물고 있는 반면, 활동가들은 사회주의자 또는 진보주의자로 스스로를 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의 레드콤플렉스, 즉 ‘역레드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이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의 상이한 이념적 위치는 이들 사이에 심연의 강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운동이 마치 도서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363) “하나는 대중조직이 이념 논쟁을 피해 온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식적인 것도 있고, 분단 상황에서 레드콤플렉스도 있었다고 본다. 외부를 의식해서 말 한 마디라도 조심해야 했었고, 또 내부적인 분란을 할 필요 없다는 이유도 있었다 (인터뷰 D, 2004. 2. 25).

정도로 과도하게 이론을 강조함으로 인해 실제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어렵고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때문에 몇 번 학습 모임에 참가하다가 노동운동 자체를 중도 포기한 노동자들이 적지 않았다(조희연, 1989: 256).

대중운동 조직이 이념과 지향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뜻을 같이할 때 다 모이라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정치조직에서의 불필요한 논란 때문에 대중조직이 피해를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념적 논쟁을 의식적으로 피해 왔다. 그러다 보니 오는 폐해도 있는 거 같다. 예컨대 역레드 콤플렉스가 그대로 자리잡고 있다거나 조직 내에서 썸 목소리만 내면 되는 것으로 된다가나 이를 방치한 결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고 본다(인터뷰 D, 2004. 2. 25).

넷째, 이념을 정책과 연결지으려는 노력이 미약하거나 이것이 시도되었을지라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빈곤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념은 세계관이면서 동시에 현실 개입의 실천적인 지침이다. 그러나 이념과 이념집단이 정책과 괴리되면서 이념은 현실의 무기가 되지 못했다. 그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념을 보다 현실화하는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책과 상관없이 이념 분화를 만들어 온 측면이 있다.

세 파(연구자 주: 민주노총 내의 현장파, 국민파, 중앙파)라고 하지만 실제 정서로 갈리는 것이지 정책적 차이는 별로 없을 수 있다... 과연 3개 정파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다(인터뷰 D, 2004. 2. 25).

이는 그동안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던 정치상황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정책을 관철할 통로의 부재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어떤 이유이든간에 노동운동은 그동안 정책형성 능력과 관철 능력에 있어서 무능성을 드러내 왔다.

마지막으로 노동운동이념 빈곤은 서술의 빈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동안 학계나 활동가들 또는 각 노동운동조직이 자신의 이념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거나 기술하는 데 매우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³⁶⁴⁾ 이처럼

이념과 관련된 참고서나 교과서의 부재는 이념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연구를 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경향이 있다. 특히, 1차 자료의 부족은 이념 연구를 하는 데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활동가들이 문건을 만들지 않았거나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보관하지 않았던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상당한 규모 조직을 했었는데 문건이 하나도 없었다. 예를 들어, 중앙정보부가 따라다녀도 아무것도 걸릴 게 없었다. 실제로 조직 내의 사람에게 애인이 있어도 1년 내내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그리고 실타래가 풀리지 못하게 했다. 지식인들 모아 토론하고 하는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인터뷰 D, 2004. 8. 26).

서술 부재 현상이 발생한 또 다른 원인은 한국의 노동운동과 그 이념이 짧은 시간 동안에 ‘압축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객관화를 힘들게 했다. 특히 당시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동 시대에 여전히 특정한 입장을 갖고 현실 노동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현실은 노동운동에 대한 이념 서술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빈곤은 구조적 수준의 원인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의 활동조건과 조직방식, 그리고 토론문화와 기록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서 기원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본 논문은 내부요인인 이념집단간 소통, 이념과 정책과의 소통, 그리고 이념과 대중(조합원 또는 국민)과의 소통 등의 소통의 빈곤현상에 주목했다. 이것은 소통의 빈곤이 한국노동운동 이념 빈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뿐 아니라 대안을 모색하는 데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통의 결핍 현상은 이념을 동의와 설득의 기제, 실천의 구체적 지침서, 조직과 공동체의 비전 제시 등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과도한 분과활동을 양산하고 실천을 제약하는 천덕꾸러기로 취급받게 했다.

이데올로기와 이념이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이에 한국정치 또한 빈곤한 상태에 처해졌다.³⁶⁴⁾ 왜냐하면 이데올로기와 이념이 장기적인 비

364) “대중조직 차원에서 이념부문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표출된 것은 없었다”(인터뷰 D, 2004. 2. 25).

365) 최근에 정치권에서 제기된 국가의 정체성 논쟁의 근본적인 기원은 여당과 최대 야당인 한나라당 간의 상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을 ‘좌파정권’으로 규정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친일파와 군부쿠데타 세력에 젖줄을 대고 있는 ‘꼴통’ 보수세력의 집합체로 인식한다. 이 논쟁이 본격화된 것은 박근혜 대표가 공개적으로 여당의 정체성을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이에 기반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부터이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보수세력의 정형화된 색깔론으로 맞대응하면서 논쟁은 가열되었다. 이처럼 한국정치에서 정체성 논쟁은 색깔론이라는 이분법적인 진리관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색깔론으로 표현된 이분법의 진리관 뒤에는 각자의 천박한 정치적 셈법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를 ‘악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을 ‘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알팍한 정치전략이다.

그렇다면 정체성 논쟁의 고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헛팅턴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언급은 시사적이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거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통점과 독자성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논의하고, 재규정해 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리,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아시아에 속하는지, 아니면 경제, 정치, 현대적 측면에서 서구에 속하는지 고민한다”(Huntington, 2004: 29). 이상의 언급에서 보듯이 정체성 논쟁의 핵심은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행위에 대한 물음과 비판이다. 이러한 성찰적 비판과 물음은 끊임없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공적인 정치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체성의 정치는 ‘정치적 소통’의 지원을 받아야만 정체성과 이념의 본래적 자기 모습에 가장 근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체성의 정치는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성찰과 자기정정을 해 나가야 한다. 정체성의 정치가 소통에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정체성의 정치는 이념논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념은 정체성 논쟁과 마찬가지로 정치행위자들의 철학, 정책,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상의 정치생활뿐만이 아니라 정책의 형성단계와 국가의 정책결정과정 및 집행과정에서 항상적으로 제기되고 논쟁되어야 하는 역사적·정치적 담론이자 실천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체성 논쟁은 자신의 뜻은 물론 싹을 틔우기도 전에 항상 ‘색깔론’에 의해 추방당한다. 이와 같이 색깔론과 이분법에 의해 제기된 정체성 논쟁의 가장 큰 정치적·역사적 죄악은 정체성 논쟁의 무의미성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만든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이념으로부터 소외되면서 국민들은 또한 이념을 소외시킨다. 즉 정체성과 이념은 국민적 동의와 토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무의미한 저들만의 전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한국정치는 이념의 무용성, 논쟁의 무가치성,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념논쟁은 항상 잠복되어 있다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색깔논쟁, 정체성 논쟁,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제기되었다. 즉 그동안 정치행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이념의 깃발을 이용해 왔다. 특히,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보수세력의 이념적 공세가 지속되었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좌파정권 논쟁으로 가시화되었다.

전을 담고 있는 구체적인 실천적 지도라는 점에서 부실한 지도 또는 반공주의와 이분법적인 시각에 의해 지배된 정치관은 정치집단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도록 만들거나 정책에 기반하지 않는 생존게임에 몰입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이 이념은 자기 자리를 지역주의 등의 다른 이데올로기에 내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주의는 반공주의 및 근대화와 결합하여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기괴한 괴물을 탄생시켰고, 사회주의는 북한의 현실권력과 연관된 주체사상이나 소련의 현실정치 통치 이데올로기인 스탈린주의에 의해 변질되었다. 근대화와 민주화라는 한강의 기적³⁶⁶⁾ 이후에도 이러한 모습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정치는 기형적인 이념 속에서 극도로 왜소화되었고, 이러한 이념은 현실의 지도라기보다는 권력투쟁의 무기로 기능하였다. 이념적 불구 위에서 이룩된 한강의 기적은 1990년대 하반기의 경제위기를

하지만 국가정치의 이념논쟁은 ‘색깔논쟁’으로 지칭되듯이 정책과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갱이나 아니냐, 친북이나 반북이나 수준에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처럼 이들 논의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북’이라는 담론이 여전히 정치지형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원로의원들 모이면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당히 위기다. 국가안보 문제도 바깥 얘기वाद 다르다. 김정일이 가만 안 있겠다고 하는 것도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 서울이다. 12,000문 화포가 서울을 향해 배치되어 있다. 결국은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은 한국이다. 김정일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걱정 많이 된다”(인터뷰 I, 2003. 7. 2). 따라서 한국정치의 이념논쟁에 정책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또한 ‘정치꾼’들은 이념의 이름으로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신들의 천박한 행동을 이해받고자 했다. 이들이 서로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들에게 이분법적인 시각은 매우 유효한 실천관이다. 왜냐하면 이분법적 시각은 선한 자신과 악한 적을 구분하는 데 명확한 논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정치의 풍경은 이분법적이고 적대적인 이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모습으로 존재했다.

366) 흔히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을 경제적 측면에서 짧은 기간의 압축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정치적 압축성장 또한 경제적 압축 성장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1987년 이후 불과 10여 년 사이에 군부의 정치로부터의 퇴진, 대통령 직선제, 지방자치제, 여야정권교체(1997) 등 형식적 민주주의의 요소가 급속히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한강의 기적은 정치와 경제의 압축성장을 동시에 이룬 한국적 현상을 의미하고 압축성장 과정에서 두 영역 모두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견회 삼성 회장의 “경제가 일류인 반면 정치가 삼류”라는 발언은 틀린 견해를 일만 아니라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맞으면서 그 취약성을 드러냈고, 이를 둘러싼 논쟁의 과정에서 이제 근본적인 성찰, 즉 이념의 정립과 이에 기반한 새로운 한국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제3절 소통의 풍요와 정체성의 정치를 향하여

한국 노동운동이념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념들이 과도할 정도로 만발했던 상태를 자기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이념들 간의 소통, 이념과 정책 간의 소통, 그리고 이념과 대중들 간의 소통의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양적 과잉이 질적 풍요로 연결되지 못한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이념 원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즉 이념은 내적인 자기 진통을 갖지 못했고 현실성찰과 실천의 철학이 되지 못했다. 이념은 소모품처럼 조직의 소멸과 함께 사라졌으며 전투의 일선에서 무기의 철학이 되는 데 만족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이념의 원래 역할과 각 정파들이 자신의 이념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해결 불가능할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우리는 모순이 매우 중첩되어 있는데, 설계도가 없으니 각 지역마다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어 단지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적과의 투쟁보다는 내부 투쟁이 더 센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정돈해야 한다(인터뷰 E, 2004. 2. 10).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빈곤의 책임이 시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치적 소통’의 빈곤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소통의 빈곤상태에 있는 다양한 이념들은 정책 및 실천과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했다. 이것은 이념이 대중들과 호흡하기보다는 소수 활동가들과 이론가들의 노리

개에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이 한국사회는 이념의 빈곤, 정치의 빈곤, 상상력의 빈곤에 빠져 버렸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념에 있어서 소통은 여러 가지 차원을 갖고 있는데, 우선 상이한 이념들과 논쟁하는 차원, 구체적인 정책과 소통하는 차원,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과 대화해야 하는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은 한 이념을 다른 이념들과 구분짓고 정책을 통해 자기의 상을 현실화시키는 한편 내부 구성원들에게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정체성의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제1장의 1~3. 참조). 따라서 이념 빈곤의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체성의 정치’를 통해 인식론적이고 실천적인 지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체성 정치의 전략은 첫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정치세계에서 자기 정체성은 이념적 스펙트럼상의 자기 위치를 의미하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는 이념의 정체성보다는 전술 또는 인맥의 정체성에 갇혀 지내온 측면이 존재했다.

민주노총 내의 분파(는)… 불건전한 세력구도라 본다. 불건전한 세력구도라고 보는 것은 이념 정리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보면, 상당히 문제 있는 상황이다… 더 저급한 현실의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고 변명할 수는 있지만… 지금 보면 거의 인맥구조의 재생산 문제가 가장 불건전하다고 본다(인터뷰 H, 2003. 7. 18).³⁶⁷⁾

(국민과의) 내부적인 정체성은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현장파와 중앙파도 내부적으로는 증폭이 심할 것이라고 본다. 중앙파도 내세우는 내용은 국민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이념이나 노선보다는 그동안 함께하던 경향성과 더불어 노동운동이 10년이 넘다 보니 뻥이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 내부의 인맥관계나 정서가 일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실천 영역으로 가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른바 좌파라는 세력이 실천에 있어서 더 우경화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인터뷰 D, 2004. 2. 25).

367) “이념 분화는 그다지 크지 않다. 전략과 전술의 차이이다. 이념적 차이로 먹살 잡곤 하지는 않는다. 사실은 지금 이념을 갖고 싸울 일이 없다. 좌파라는 것은 있을 것이다. 15년 정도 관계가 있고, 기득권이 있다”(인터뷰 D, 2004. 8. 26).

이러한 인맥의 정치 또는 정체성은 진보세력의 정당정치에도 그대로 전이된 듯이 보인다. “인맥관계로 진정추(진보정당추진위원회),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출신들은 한때의 같은 소중한 경험을 했고… 11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중요 쟁점에도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차이가 크게 나도 결국 인맥으로 잘 지낸다. 재편성되어야 한다. 옛날에 같이 했다고 해서 (같이 모이면-연구자 주) 이 당 정말 망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은 인맥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노당이 분화가 덜 되어 있는 상태고, 밖에서 민노당의 옛날 소속이 어디(NL, PD 등)였느냐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향후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한 정파 구조로 가야 한다. 1980년대 것으로 가게 되면 동창회 조직이 된다”(인터뷰 H, 2003. 7. 18).

이상의 언급에서 보듯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맥과 지역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념의 정체성을 문제삼아야 한다. 여기에서 이념의 정체성을 위한 전략은 우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타자의 ‘인정’ 자체가 상대방의 이념과 입장에 대한 ‘동의’와 다르다는 점이다. 인정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이념과 그것에 대한 그들의 옹호가 그들 자신의 고민과 확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즉 정체성의 정치 전략은 우선 차이의 정치에 기반해서 타자에 대한 지배와 소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인정하고 타자와의 토론의 과정에서 타자와의 차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전략이다. 이것은 자신만이 진리의 담지체이고 타자는 허위라는 “진리의 정치” 또는 우열의 정치와 대별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타자와의 소통과 인정은 반드시 공적 토론을 통한 과정이어야 하고 타자와 이루어지는 토론 과정에서 ‘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이처럼 타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이를 통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타자에 대한 인정은 타자에 대한 동의와 다른 것으로서, 정치세계의 다양성을 인정한 토대 속에서 소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풍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체성의 정치전략이 상대를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와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호 차이를 명확히 하는 과정은 다른 한편 정치세계에서 공적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상대의 입장과 대비하여 관철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공적 공간에서 다양한 이념 간의 소통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다른 이념과 경쟁함으로써 자신을 풍부화하는 정체성의 정치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

둘째, 이념은 정책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 현재 제도권 정당에서처럼 정체성 논쟁이 정책과 연결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그것은 이념을 사상검열 또는 상대방 흠집내기에 이용하는 아주 저열할 차원의 권력정치 또는 술수의 정치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노동운동 또한 정책 고민을 소홀히 하거나 임기응변적인 수준에서 정체되지 않은 정책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념적 지형에 따라 정책이 만들어지기보다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이념에 따라 정책이 다르다기보다는 1990년대 초까지는 임금정책에 방점이 있었고, 1990년대는 사회개혁, 지금은 고용정책 등 시점에 따라 정책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 이념적 차이이라면 이런 각 정책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념적 차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중요점의 차이라고 본다(인터뷰 D, 2004. 2. 25).

그게 가장 핵심적인 고민이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대안이 안 나온다. 농민은 정부에서 10년간 110조 원 정도 푼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빈민부문은 절대빈곤이 800~900만 명에 이르는 등 계급지형이 달라졌는데 (운동세력의)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노·농·빈 전선이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자본의 계급관리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즉 국보법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으로 바뀌는 식이다. '아름다운재단' 등 권리가 아닌 은혜를 주는 식인데 그런데 이쪽에서는 빈곤 등 자본 논리에 대응하는 대안이 없다. 적어도 운동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안이 없다.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인터뷰 C, 2004. 2. 4).

이상의 언급에서 보듯이 한국노동운동은 정책 능력의 취약성 외에 정책과 이념의 연계를 소홀히 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정책과 이념의 연계를 통해 정책으로 형성화된 이념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자

신의 이념에 기반한 연금정책, 임금정책, 산재정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책의 차이가 이념의 차이와 일치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정체성 정치는 현장의 토론에 기반해서 지도부의 정체성이 아니라 조직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토론이 이론가들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현장조합원들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은 현장토론에 대한 중요성은 과도하게 강조되었으나 실제 현장토론을 통한 노동조합 민주주의는 극히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념적 발전, 분화 속도가 대중운동의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 같다. 지금 NL, PD의 낡은 구도를 가지고 현재의 복잡한 구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의 발전에 비해 활동가들의 대응이 더디다는 것이다.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에서 진보와 보수의 구도로 (전환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진보의 내용이 무엇이나를 얘기하는 그 발전이 더디다는 것이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터뷰 E, 2004. 2. 10).

민주노총은 투쟁 시기인 5월 말 토론지침을 내려보내고, 조직내 공론화를 시작하였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현장이 임단투중인 관계로 상황 공유조차 안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과 집중이 전무하기에 그냥 있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나 '지도부가 알아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장(활동가, 조직)부터 내부 토론회, 학습모임을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조직의 이름으로 선전,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조문익, 2004. 7).

이상에서 보듯이 그동안 한국노동운동은 현장토론이 없는 이념 형성과정에서 지도부의 이념적 정체성은 확립되었을지 몰라도 조직의 정체성은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조직의 정체성은 조합원들이 조직의 이념과 자기의 정체성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단한 현장의 토론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정치를 위해서는 솔직하고 용기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신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대담하게 묻고 그리고 토론의 과정과 결과를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수용하려고 할 때 소통의 진정성과 풍요가 보장될 수 있다. 다음의 어떤 활동가의 고백은 이런 점에서 시사적이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 앞으로 선택해야 할 사회가 어떤 사회냐에 있어서 사회주의를 뛰어넘는 다른 어떤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회주의로 가야 하는데,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졌고, 사회주의를 이전의 국유화 등으로 상상하게 접근할 것인가 등 이리로 가기 위해서 지금의 정책과 과제와 이를 만들기 위한 조직 등에 대한 설계도는 있어야 한다. 이 정도의 설계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한다. 좌우의 설계도가 있으면 다행인데, 이 완성도도 매우 떨어진다(인터뷰 E, 2004. 2. 10).

이런 점에서 볼 때 예를 들어 사민주의, 자유주의 또는 사회주의에 대해 좀더 솔직한 태도를 취하고 그것의 함의에 대해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민주의가 노동운동 내부와 사회단체에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잡은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이를 인정하고 토론하려는 데는 매우 인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자유주의의 경우 고용 위기를 수반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함께 급격히 유입됨으로써 모든 '악의 원흉'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사회주의 또한 엄격한 이론적·실천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선형적으로 '지고지선' 또는 '악마의 유혹'으로 규정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적 토론과 엄밀한 분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직관과 때로는 정치적 필요에 따른 '딱지 붙이기' 일때도 있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노동운동 조직간, 정파간 생존을 위한 경합의 과정에서 각각 진화했다. 진화하는 과정에서 맞게 된 공산권의 몰락은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이념과 그 진영을 분화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혼동상태로 노동운동 진영을 이끌었다. IMF 이후 노동운동지형이 보다 선명해지고 각 정파의 입장이 보다 명확해질 즈음에 노동운동은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점차 느끼고 있는 중이다. 민주노총 내 좌파는 사회주의에 기반한 자신의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와 이념이 선명해지면 질수록 대중들과 괴리되고 이념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 의심받는다. 한편, 사민주의 경향의 사회적 조합주의론자들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는 자신의 사회적 협의 전략을 명확히 하려고 해도 불균형적인 권력관계와 정부와 자본의 무관심과 냉소가 자신들의 이념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론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실천이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협소화되면서 조합원들의 이탈과 노동운동의 본래적 의미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이상의 노동운동의 이념 위기와 딜레마가 소통의 빈곤에서부터 기인하고 그 대안을 정체성의 정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다. 즉 소통의 빈곤은 이념빈곤의 주범이기 때문에 소통의 풍요를 통한 이념의 자기 모색과 이를 통한 노동정치의 활성화가 현재의 노동운동 위기의 대안이다. 소통은 우선 내부 위기와 타자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전제한 가운데서 진지한 공적 토론을 통한 이념들 간의 차이의 발견과 공적 경쟁, 이념을 구체적인 정책과 연결시킴으로써 정책을 통한 이념의 자기 현시, 그리고 내부 민주주의에 기반한 이념과 대중과의 소통과정에서 이념에 기반한 조합원과 조직의 재조직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이념과 각 집단이 소통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정체성에 기반하여 차이와 경쟁을 내용으로 하는 정체성의 정치로 정치세계가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노동운동은 이념과 정책을 매개로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정체성의 정치에서 그 근본적인 노동운동 위기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정체성의 정치는 두 가지 점에서 현재의 노동운동이념 지형에 시사적이다. 우선, 이것은 이념 일반을 버릴 것이 아니라, ‘무기의 이념’ 또는 ‘빈곤의 이념’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즉 정체성의 정치는 상대방을 낙인찍고 검열하는 무기로 사용해 온 그런 이념과 다른 이념과 논쟁·경쟁하지 않고 정책과 소통하지 않는, 그리고 더욱이 특정 분파와 그 활동가만의 정체성으로 기능해온 빈곤의 이념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릴 것을 요구한다. 그 대신에 정체성의 정치는 소통에 자기 존재기반을 두고 정립된 이념, 즉 현실의 이해지평과 이 지평을 관

철하는 실천이 담긴, 그리고 이것이 대중적 토론과 동의를 통해 조직의 정체성으로 기능하는 그런 이념을 각 정파와 노동운동이 정치세계에 불러낼 것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정체성의 정치는 이념논쟁을 소모적인 것으로 보고 실용주의나 냉소주의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이제 소통적 태도에 기반한 각자의 이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념논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권유한다. 즉 각 정파의 현실세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지도가 다른 조직의 그것과 논쟁하고 경쟁할 것을 주문한다. 다시 말해 정체성의 정치에 따르면 각 정파는 자기 이념을 공적 공간에서 상호 토론과 경쟁을 통해 검증받고 수정함으로써 정치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실천의 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진(2003), 『좌파여! 새로운 정치운동을 조직하자!: 대선 이후 노동자민중 진영의 변화와 대응방향』, 『기관지 노힘』, 제22호.
- 강명구·박상훈(1997),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신한국'에서 '세계화'까지』, 『한국사회학』, 제31집.
- 강상호(1988), 『복수노조 무엇이 문제인가』, 김용기·박승옥 엮음(1989), 『한국노동운동논쟁사』, 현장문학사.
- 강수돌·황기돈(1992), 『노동운동의 위기인가 노동운동론의 위기인가』, 『사회평론』, 9·10월호.
- 강순희(1998), 『한국의 노동운동: 1987년 이후 10년간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강양구(2004), 『생태적 대안은 노동생존권의 문제』, 『노동사회』, 10(통권 제92호).
- 강정구(2002), 『한국보수지배체제 확립의 역사적 기원』, 『진보평론』, 제11호(2002년 봄).
- 고동우(2001), 『사회주의자들의 '커밍아웃'에 대한 단상』, 『말』, 2001년 11월호.
- 고민택(2001), 『민주노조운동 노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현장에서 미래를』, 62호(2001년 1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_____ (2002), 『계급대중을 '대선투쟁'과 결합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향해 나아가자』, 『현장에서 미래를』, 제81호(2002. 11),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구해근(2001),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 국민승리 21(1998), 『15대 대통령 선거 평가(안)』, 『현장에서 미래를』, 제29호(1998년 1/2월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권미정(2001), 『울산지역 노동운동 내부의 균열구조 연구: 민주노동당 울산

- 북구의 제16대 총선을 사례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 권진관(2003), "1970년 산업선교지도자들의 입장과 활동의 특징들에 대한 연구", 『1960~70년대 산업화와 노동자의 정체성, 그리고 노동현실』,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연구.
- 김금수(1995), 『한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과학과 사상.
- _____ (1999), 『한국노동자정치세력화의 전략목표』, 김금수·정영태·오삼교·이민영,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단과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낙중(1982), 『한국노동운동사: 해방후편』, 청사.
- 김남식(1984), 『남로당 연구』, 돌베개.
- 김동춘(1990), 『레닌주의와 1980년대 한국의 변혁운동』, 『역사비평』, 겨울호.
- _____ (1995), 『한국사회노동자연구』, 역사비평사.
- 김득중 외(2001), 『좌담: 한국사회주의 운동사,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평론』, 제9호(2001년 가을).
- 김명시(1989), 『전노협 건설과 노동조합 운동의 현단계』, 백산서당.
- 김무용(2001), 『한국의 사회주의운동: 해방후 조선공산당의 혁명론과 국가구상, 그리고 노동운동』, 『진보평론』, 제7호(2001 봄).
- 김문수(1992), 『민중당과 한국노동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의 통합교섭과 경과』, 민중당, 『전환기의 전망』, 1992년 3월호.
- _____ (연도 미상), 『노동운동은 정치투쟁이 그 본령이다』, 김용기·박승욱 엮음(1989), 『한국노동운동논쟁사』, 현장문학사.
- 김석준(2003),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진전』, <http://www.ohmybusan.com/>.
- 김성훈(연도 미상), 『1985년 노동운동에 관한 두 개의 평가』, 김용기·박승욱 엮음(1989), 『한국노동운동논쟁사』, 현장문학사.
- _____ (1995. 9), 『노동운동의 정치적 진로』, 『노동운동과 정당』 세미나 자료(노동자신문 4백호 기념토론회 발표문, 1995. 9. 5).
- 김세균(1995. 10),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이념정립을 위하여』,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 _____ (1998), 『한국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정치』, 현장에서 미래를.
- _____ (1998. 9),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한노정연 창립 3

- 주년 심포지엄(1998. 9. 19).
- _____(1999),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한국노동이론정책 연구소 편,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현장에서 미래를.
- _____(1999. 3), 『국민승리 21 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장에서 미래를』, 제41호(1999. 2/3월호).
- _____(1999. 10), 『민주노총은 자신의 노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현장에서 미래를』, 1999년 10월호.
- _____(2001), 『한국에서 진보정당의 창설 및 의회진출 가능성에 대한 연구』 (1998~99년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지원논문), www.assembly.re.kr/html/98-99kims.htm.
- _____(2004), 『좌파운동의 과제와 전망』, 오세철 교수 명예퇴임 기념토론회 (2004).
- 김수길(1990), 『사회민주주의의 재평가와 민주적 대안』, 『사상문예운동』, 여름호.
- 김승호(2004), 『한국 당대 노동운동의 평가와 과제』 (사회진보연대 진보강좌 4강).
- 김영대(1994a), 『1995년 초 민주노총건설의 필요성』,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발간위원회(2003b),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1994)』, 논장.
- _____(1994b), 『현시기 민주노총과 업종(산업)별 연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발간위원회(2003b),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1994)』, 논장.
- 김영명(2003), 『한국 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 김영수(1999),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 건설 논의, 퇴보인가, 정체인가, 진보인가』, 『현장에서 미래를』, 제43호(1999년 5월호).
- _____(2001), 『현단계 한국 노동자 정치운동과 계급정치: 민주노동당(가칭)과 노동자의 힘(준)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제43차 콜로키움 발표문, www.Kilsp.jinbo.net/colloquium/col43.html.
- _____(2002), 『한국의 진보정당운동: 이념적 기초와 성격에 대한 역사적 고찰』, 『현장에서 미래를』, 제75호(2002년 3월호).

- _____ (2004),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의 4·13총선』, 『현장에서 미래를』, 제54호(2000년 4월호).
- 김용기(1989), 『최근변혁운동 논쟁의 주요쟁점에 대하여』,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엮음(1989), 『한국사회변혁운동과 노동운동』, 정암문화사.
- 김유선(1998a),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제언』, 『노동사회』(1998년 9월호).
- _____ (1998b), 『현 시기 민주노총 목표로 사회주의 내걸어야 하나』, 『노동과 세계』, 37호.
- 김윤철(2004), 『민주노동당의 집권전략 논쟁: 이념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2004년 가을).
- 김익진(1985), 『운동노선을 통해 본 한국의 노동운동』, 김금수 외, 『한국노동운동론 1』, 미래사.
- 김인걸 외(2003),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 김종오(1988), 『1980년대 노동운동론 전개과정의 이해를 위하여』, 『한국노동운동의 이념』, 정암사.
- 김 준(2001), 『노동운동의 성장과 좌절』, 최영기 외,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 김진균(2003), 『5·18 민중항쟁과 국민국가: 정체성과 일체성의 차원에서』, 김진균 편저,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문화과학사.
- 김철순(1989), 『민중정당과 노동자』, 김철순 엮음, 『사회주의자의 실천 1: 사상투쟁의 발자취』, 일빛.
- 김태현(2004), 『최근 노동자투쟁과 언론의 노동귀족 이데올로기 - 언론 대응도 중요하지만 연대성 회복이 시급』, 『진보정치』, 190호.
- 김하경(1999a), 『내사랑 마창노련』(상), 갈무리.
- _____ (1999b), 『내사랑 마창노련』(하), 갈무리.
- 김해숙(2004), 『노무현정권과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 추진 저지해야』, 진보넷 참세상 방송국.
- 김현상(1987), 『현단계 노동운동론: 자주적 노동조합 건설운동』, 백산서당.
- 김혜란(1995), 『전노협, 그 현재적 의미』, 『현장에서 미래를』, 제5호(1995. 12월호).

- 김홍우(1997), 『정치란 무엇인가』, 『대화』, 크리스찬 아카데미 소식, 25호.
- _____ (1999), 『현상학과 정치학, 그리고 한국정치』, 『현상학과 정치철학』, 문학과 지성사.
- _____ (2004), 『민주정치에서의 ‘공적 토론’의 의의』, <문화일보>, 2004. 4. 26.
- 남구현·박성인·이종회(2004),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혁신과 연대를 통한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 위해(안)』, 『기관지 노힘』 제 60/61호.
- 노동과 세계(2004), 『위원장·총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지상중계』(2004. 1. 15).
- 노동부(1988), 『1987년 여름의 노사분규평가보고서』.
-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연대(준), 『97 대선투쟁 평가』.
- 노동자의 힘(200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김대중 정권에 맞설 대중투쟁지도부 건설을!』, 노동자의 힘(준비모임).
- _____ (2001.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김대중 정권에 맞설 대중투쟁지도부 건설을!』,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에 대해.
- _____ (2004), 『노동자의 힘의 역사와 활동 평가』, 『기관지 노힘』, 제60/61호.
- 노동자의 힘 녹취록(2004), 『노무현 정권과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 추진 저지해야』, 토론회 녹취록.
- 노중기(1998), 『현실과 원칙의 혼동을 경계하며』, 『노동과 세계』, 제38호.
- _____ (2004), 『사회적 합의주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토론회(2004. 7. 3).
- 노회찬(1999), 『진보정당 건설의 전략과 전망』, 『노동사회』, 제37호(1999년 10월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_____ (2000), 『한국에서의 노동정치: 지난 10년간의 진보정당운동과 새로운 도전』, 성공회대 사회교육원 노동자와 정치 특강 5, 사이버NGO자료관.
- _____ (2000. 6), “현 시기 진보정당 건설의 의의와 전망”, 학술단체협의회 정책토론회, 『진보정당건설, 그 가능성을 진단한다』, 1999. 6. 5.
- 녹색사민당(2004a), 『녹색사민당 강령, 녹색사민당 당헌』.
- _____ (2004b), 『17대 총선 공약 해설』.
- _____ (2004c), 『100대 정책』, <http://www.sdpk.or.kr>.

- 단병호·문성현(1994a),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발전방향에 대하여』,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발간위원회(2003b),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1994)』, 논장.
- _____ (1994b), 『민주노총은 산업별 조직화를 원칙으로해야 한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발간위원회(2003b),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1994)』, 논장.
-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1994), 『민주노총건설에 대한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입장』,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발간위원회(2003b),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1994)』, 논장.
- 도천수(1994), 『민주노조운동의 결집과 조직적 전진』,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위음,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 라승준(2003),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사관계학과 석사논문.
- 류동기(2004), 『정말 박승욱님 주장을 ‘저주의 굿판’으로 보십니까』,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2004. 9. 7.
- 민주노동당(2002), 『민주노동당 2002년 대선평가 자료집』.
-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2004), 『위원장·사무총장·부위원장 후보 선거 홍보물』.
- 민주노총 준비위원회(1995), 『'95 임단투와 사회개혁투쟁 지침』.
- 민주노총(1995), 『민주노총: 창립까지의 사업보고·자료모음』.
- _____ (1998. 2), 『97대선활동 평가를 위한 기초토론 자료』, 『현장에서 미래를』, 제29호(1998년 1/2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_____ (1998. 6),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요구안 정책해설』.
- _____ (1999. 2), 『99 정기대의원대회 (14차) 회의자료』.
- _____ (2003), 『사회보장투쟁과 노동운동: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문제점, 개혁 방안』, 정책보고서 2003-01.
- 매일노동뉴스(2004. 1. 13), 『민주노총임원후보들 토론회』.
- 민중석(1989), 『남한노동운동사 1』, 들불.
- 박 동(2000), “한국 노동체제의 변화와 사회협약의 정치에 관한 연구: 1987~98”,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 _____ (2002), 『한국노총 독자정당 창당의 조건과 전망』, 한국노총, 『2002년 대선, 한국노동자의 선택과 개혁적 국민정당』, 한국노총 대선선택을 위한 심포지엄(2002. 9. 5).
- 박병상(1997), “한국의 진보정당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 박성인(1995),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1995년 민주노총 출범까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1995. 10),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이념정립을 위하여』 (한노정연 창립기념토론회).
- _____ (1998), 『계급적·정치적 노동운동으로의 진전을 위하여: 김유선 부소장의 ‘사회적 조합주의’를 비판한다』, 『노동과 세계』, 제36호.
- _____ (1999), 『현시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진보정당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4권 제2호.
- 박세현(1996), “한국기독교 노동교육기관의 노동교육에 관한 연구”, 한신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수경(2004), 『민주노동당 의회 입성까지: 대중투쟁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길』, 『노동과 세계』, 제285호.
- 박승옥(1990), 『7, 8월 노동자 대투쟁을 다시 생각한다』, 『창작과 비평』(1990년 여름).
- _____ (1992a), 『한국노동운동 과연 위기인가』, 『창작과 비평』, 제20권 제2호.
- _____ (1992b), 『‘사회발전적 노동운동’ 비판에 대한 답변』, 『사회평론』(1992년 11·12월호).
- _____ (2004), 『‘왕자병’ 걸린 노동운동, 이대로 가면 죽는다』,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2004. 9. 2.
- 박승호(1992), 『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의 조합주의적 한계를 시급히 극복하자』, 전국노동운동협의회, 『노동운동』.
- 박승희(1992), 『신조합주의의 현실성에 대하여』, 『경제와 사회』, 제15호(1992 가을).
- 박영균(2003), 『한국 진보주의의 최근 논의와 방향: 노동자계급 정치운동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학단협, 『민주주의는 종료된 프로젝트인가』.
- 박영호(2000), 『민주노동당은 왜 패배했는가?』, 『동향과 전망』, 제45호.

- 박장근(1999), 『노동자의 힘(준) 건설의 의미와 전망』, 『현장에서 미래를』, 제47호(1999년 9월호).
- 박재영·평화인권연대 노동소모임(1998), 『이른바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박정희(1962), 『국가와 혁명과 나』, 지구촌.
- 박태주(2004), 『동전의 다른 한 면은 노동운동의 미래를 가리킨다 - 박승옥씨의 ‘노동운동 위기론’에 대한 단상』, 『노사저널』, 제675호(2004. 9. 20).
- 박한용(2000), 『한국의 사회주의(운동편): 1930년대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진보평론』, 제5호(2000년 가을호).
- 범좌파연대(2003), 『변혁적 노동운동발전을 위한 범좌파 연대강화를 제안한다』(내부문건).
- 부천상공회의소 편(1987), 『불순노동운동: 수도권지역 활동상과 실체』.
- 사회당 대통령선거기획위원회(2002), 『통일좌파』, www.sp.or.kr
- 산별노조운동연구팀(1999),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 조직발전 논쟁의 역사와 오늘』, 『현장에서 미래를』, 제44호(1999년 6월호).
- 서중석(2004), 『민주노동당은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역사비평』 (2004년 가을).
- 손호철(1999),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 _____ (2003), 『현대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1945~2003』, 사회평론.
- 송석현(2004), 『6·10항쟁의 현재적 의미: 지배권력의 새로운 이름, ‘민주’와 ‘개혁’을 낳다!』, 『기관지 노힘』, 제55호.
- 신광영(2004), 『한국 진보정치의 존재조건』, 『역사비평』 (2004년 가을).
- 신금호(1987), 『7·8월 노동투쟁』, 김용기·박승옥 엮음(1989), 『한국노동운동 논쟁사: 1980년대를 중심으로』, 현장문학사.
- 신지호(1992), 『고백』, 『사회평론』(1992년 8월호).
- 신철영(1995), 『‘전노협’을 돌아본다』, 『현장에서 미래를』 (1995년 12월호).
- 안승천(2002), 『한국노동자운동, 투쟁의 기록: 전태일에서 민주노총까지』, 박중철출판사.
- 안철진(2002), “민주노동당의 정치역학구도와 선거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외

- 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 안철홍(1998), 『사회적 조합주의인가, 계급적 노동운동인가』, 『말』 (1998년 11월호).
- 안태정(2002), 『한국의 사회주의운동: 미군정기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노동자』, 『진보평론』, 제6권(2002년 가을).
- 안태정(연도 미상), 『미군정기 전평의 계급정치』, <http://blog.naver.com/smallnews/6931543>.
- 양승조(1991),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평가와 교훈』, 전태일기념사업회 편, 『한국 노동운동 20년의 결산과 전망』, 세계.
- 엄주웅(1994), 『노동운동의 폭발적 고양과 민주노조운동의 구축』,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위음,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 업종회의(1994), 『업종회의의 민주노조 조직발전 전망』,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발간위원회(2003b),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1994)』, 논장.
- 오상석(1991), 『노동계 판도 변화와 올 임투의 향방』, 『월간중앙』, 제181호(2월호).
- 원영수(2004),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조직발전전략 결의(안)』, 『기관지 노힘』, 제60/61호(2004년 9월호).
- 유건하(1990), 『장기표 동지에게 드리는 글』, 김철순 편저(1991), 『사회주의자의 실천 1』, 일빛.
- 유범상(2000), “한국의 노동정치와 공론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논문.
- _____ (2001),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새로운 노동운동 지형의 형성(1987~89)』, 최영기 외,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3), 『외환위기 이후 노동정치와 사회적 대화: 등장, 전개, 해석』, 『동향과 전망』 (2003년 봄).
- _____ (2003), 『한국노동정치와 사회복지의 만남: 의미, 전략, 구조』, 『상황과 복지』, 제14호.
- _____ (2005), 『한국 노동운동 이념의 풍경화: 이념의 빈곤과 정체성의 딜레마』, 『동향과 전망』 (2005년 봄호).
- 유범상·김영란·윤조덕·정호근·임영·박정란(2001), 『진폐근로자 재활프

- 로그랩 개발: 질병의 치료와 빈곤의 해결, 한국노동연구원.
- 유석춘·박병영(2002), 『한국 학생운동의 구조와 기능』, 유석춘 편저, 『한국의 사회발전: 변혁운동과 지역주의』, 전통과 현대.
- 유홍림(2002), 『한국정치이념의 역사와 과제』, 『한국정치연구』 (제11집 제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윤상철(연도 미상), 『사회민주주의 논쟁』.
- 윤진호(2004), 『한국 노사관계지형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전략에 대한 논평』, 민주노총 정책토론회(2004. 5. 7).
- 은수미(2003), 『의식화조직, 사회운동, 그리고 대항이데올로기: 1970·80년대 학생운동의 속규모 ‘의식화 조직’을 중심으로』, 김진균 편저,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문화과학사.
- 이광일(2004). 『‘왕자병론’의 외피를 쓰고 재생된 ‘종양론’이라는 유령-박승욱 씨 글에 대한 짧은 소회』,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2004. 9. 8.
- 이근원(2004), 『진보정당의 역사와 노동자의 과제』, 민주노총 노동대학 강의 교재(제30강).
- 이목희(1988), 『복수노조 제2노총 민주노동운동의 확고한 토대를』, 김용기·박승욱 엮음(1989), 『한국노동운동논쟁사』, 1989.
- _____ (1989), 『현실과 괴리되었던 노동자조직건설노선들』, 『1980년대 사회운동논쟁』 (월간 『사회와 사상』 특별기획), 한길사.
- 이병훈(2004), 『한국의 노사관계현황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전략』,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자료(2004. 5. 7).
- 이성백(2000), 『1990년대 진보적 사회이론의 상황』, 『진보평론』, 제3호(2000년 봄).
- 이성화(2003), 『정체성의 정치: 한국정치 ‘담론’의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적 소통』, 『동양정치사상사』, 제2권 제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이윤섭(1993), 『제임스·리가 본 산업현장: 실천적 노사관계에 대하여』, 모아.
- 이은숙(2000), 『제2기 민주노총의 과제와 전망』, <http://kilsp.jinbo.net/>.
- 이일재(연도 미상), 『현재의 시점에서 본 전평운동』, 『현장에서 미래를』, 제43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이재영(2000), 『민주노동당 총선평가와 향후과제』, 『노동사회』 (2000년 5월호).
- 이재현(1992), 『진정추의 신노선과 상처, 희망』, 『길』 (1992. 7).
- 이재화(1986), 『한국근대민족해방운동사 1』, 백산서당.
- 이종탁(2000),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와 그 초안에 대하여』, 『현장에서 미래를』, 제61호(2000년 12월호).
- 이주호(2004), 『한국 노사관계지형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전략에 대한 논평』, 민주노총 정책토론회(2004. 5. 7).
- 이진경·김진국·김학원·노회찬 외(1987),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향한 민중민주주의 진영의 사상과 실천』, 소나무.
- 이해영(1990), 『사회민주주의는 우리의 대안일 수 있는가』, 『말』, 10월호.
-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1988), 『복수노조금지조항은 철폐되어야 한다』, 김용기·박승옥 엮음, 『한국노동운동논쟁사』, 현장문학사.
- 일송정 편집부(1988), 『팜플렛 조직노선』, 일송정.
- 일송정 편집부(1990), 『조직노선 3』, 일송정.
- 임삼진(1988), 『시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김용기·박승옥 엮음(1989), 『한국노동운동논쟁사』, 현장문학사.
- 임영일(1989), 『해설』, 김용기·박승옥 엮음, 『한국노동운동논쟁사』, 현장문학사.
- _____ (1992), 『정세변화와 노동운동의 과제』, 『경제와 사회』, 제15호(1992 가을).
- _____ (1998),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 1987~95: 변화를 위한 투쟁, 협상을 위한 투쟁』, 경남대 출판부.
- _____ (1998. 12), 『산별노조 건설이 위기극복의 첫단계』, 『노동과 세계』, 제41호.
- _____ (1999), 『한국의 경제위기와 노동운동: 위기와 과제』, 『사회연구』, 제12집, 경남대 사회학과.
- _____ (2004), 『한국의 노동운동, 변화를 위한 자기 혁신의 과제』, 『아웃사이더』, 제17호.
- 임현진·김병국(1991), 『노동의 좌절, 배반된 민주화』, 『계간 사상』 (1991년

봄).

장기표(2003), 『정치환경의 변화와 사회민주주의 정당건설의 당위성』, 『민주사회당 활성화를 위한 정치워크숍』 (2003. 3. 19~20).

장명국(1985), 『해방후 한국노동운동의 발자취』, 김금수 외, 『한국노동운동론 1』, 미래사.

장상환(2000), 『진보정당운동을 둘러싼 쟁점과 반론』, 『동향과 전망』 (봄).

장홍근(1999), “한국 노동체제의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 1987~97”,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저자 미상(2004), 『민주노총내 소위 ‘계파’ 구도 이해』 (내부문건).

_____ (2004. 5), 『제안서』 (내부문건).

_____ (1986), 『현 정세와 제 임무』, 일송정 편집부 엮음, 『팜플렛 조직노선』, 일송정.

_____ (1990), 『이른바 야권통합운동에 대하여』, 일송정 편집부(1990), 『조직노선 3』, 일송정.

_____ (연도 미상a), 『의의와 과제』, 김용기·박승옥 엮음(1989), 『한국노동운동논쟁사』, 현장문학사.

_____ (연도 미상b), 『정치적 노동운동의 정립을 위하여』, 김용기·박승옥 엮음(1989), 『한국노동운동논쟁사』, 현장문학사.

_____ (연도 미상c), 『현 시기 민주대연합의 전술의 정치조직적 의의』, 일송정 편집부, 1990, 『조직노선 3』, 일송정.

_____ (연도 미상d), 『민주연합론에 대하여』, 일송정 편집부(1990), 『조직노선 3』, 일송정.

_____ (연도 미상e), 『야권통합에 대한 민연추의 올바른 입장: 민주연합당론 비판』, 일송정 편집부(1990), 『조직노선 3』, 일송정.

전국노동단체연합 정책실(연도 미상),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조직과 활동노선』.

전국노동조합단체협의회(1990), 『91 노동운동방향정립을 위한 전국노동자전진대회(자료집)』.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발간위원회(1997), 『전노협 백서』, 제1권~제13권.

_____ (2003a), 『지역과 업종을 넘어(1992)』, 논장.

- _____ (2003b),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1994)』, 논장.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조직발전소위원회(1992), 『전노협의 확대 강화와 민주노조 총단결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발간위원회(2003a), 『지역과 업종을 넘어(1992)』, 논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0), 『노동운동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2000. 10. 16).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선거관리위원회(2004), 『위원장·사무총장·부위원장 후보 선거홍보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1995), 『'95 입단투와 사회개혁투쟁 지침』.
-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1998), 『전국현장조직운동 현황 조사보고서』, 현장에서 미래를.
- 전명혁(1999), 『한국의 사회주의(운동편): 사회주의 사상의 도입과 조선공산당 재건』, 『진보평론』, 제2호(1999 겨울).
- 전순옥(2003),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1970년대 한국여성노동운동에 대한 새로운 자리매김』, 한겨레신문사.
- 전지운(2004), 『노동운동의 ‘진투성’과 ‘계급성’을 방어하며』,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2004. 9. 10.
- 전진호(2002), “지역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민주노동당 창원을 지구당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학과 석사논문.
- 정경원(2003), 『노동운동에 나선 사람들-전노협의 상근활동가』, 김진균 편저,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문화과학사.
- 정범구(1991),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경제와 사회』, 가을호.
- 정승국(1992),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자들의 현실인식 비판』, 『사회평론』, 3월호.
- 정연순(1998), “1970년대 노동교육사례연구: 크리스찬 아카데미 산업사회 중간집단 교육”, 서울대 교육학 석사논문.
- 정영태(1999a), 『진보정당운동의 성과와 한계』, 김금수·정영태·오삼교·이민영,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단과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_____ (1999b), 『한국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와 선거참여』, 김금수·정영태·

- 오삼교·이민영,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단과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_____ (2000), 『진보정치운동의 현재와 미래』, 『황해문화』, 2000년 겨울호.
- 정치연대(1998), 『97대선투쟁 평가』, 『현장에서 미래를』, 제29호(1998년 1/2월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정치연대(준)(1998), 『국민승리 21은 선거일정에 맞춘 조급한 정치조직 전환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중적 평가에 기초하여 이후 진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 21 중앙위원회에 드리는 글』, 2. 21.
- 조문익(2004),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체제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토론회 (2004. 7. 3).
- 조순경·이숙진(1995), 『냉전체제와 생산의 정치: 미군정기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조효래(1995), “민주화와 노동정치: 한국, 브라질, 스페인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 _____ (2001), 『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새로운 모색(1966~99)』, 최영기 외,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 조희연(1989), 『해설』, 김용기·박승욱 엮음(1989), 『한국노동운동논쟁사』, 현장문학사.
- _____ (1998),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비판·실천담론의 복원과 재구성을 위하여』, 당대.
- _____ (2003), 『저항론의 변화와 분화에 관한 연구: 변혁론을 중심으로』, 김진균 편저,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문화과학사.
- 좌담(2000a), 『4·13 총선 어떻게 볼 것인가(2)』, 『노동사회』(2000년 5월호).
- _____ (2004. 7), 『민주노동당 의회진출과 좌파정치의 방향』, 『진보평론』, 제20호(2004년 봄).
- 주대환(2002), 『민주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인가?』, 『세계화와 사회민주주의』,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 채만수(1990), 『장기표와 박노해의 합법정당 건설론을 비판한다』, 『사회와 사상』 (1990년 1월호).

- 최규엽(1990), 『1980년대 노동조합운동과 전노협』, 『역사비평』, 겨울호, 역사비평사.
- _____ (1992). 『사회발전적 노동운동론을 비판한다』, 전국노동운동협의회, 『노동운동』.
- 최병천(2004), 『노동운동, ‘네덜란드-스웨덴 모델’에서 대안 찾자』,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2004. 9. 16.
- 최영기·유범상(2001), 『사회협약시스템과 노사관계의 갈등조정: 한국에서의 사회적 협의경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9권 제4호, 한국행정연구원.
- 최장집(200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 최정운(1999),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 하부영(2004), 『“왕자병” 걸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 - 대기업 노조의 자기성찰과 새로운 모색』, 『노동사회』, 10(통권 제92호).
- 하이에나새끼(2004. 9), 『사회적 코포타리즘?』, 진보넷 블로그, <http://blog.naver.com/duck5284/100005462865>.
- 한겨레신문, 『노사정협의할 새틀 만들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테마대담), 2004. 1. 13.
- 한국경영자총연합회(1990), 『한국경총 20년사』.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원 엮음(1987), 『7~8월 노동자 대중투쟁』.
-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엮음(1989), 『한국사회변혁운동과 노동운동』, 정암문화사.
-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편(1990), 『최근 노동운동의 동향과 노사관계의 과제』, 정암출판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1984), 『노동현장과 증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특별시 지역본부(1998), 『한국노총 서울본부 30년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업보고』, 각년도.
- 한국노총(1990), 『한국노동조합의 정치활동』.
- _____ (2000. 1), 『2000년 총선전략』, <http://www.fktu.or.kr>

- _____ (2001. 2), 『힘·연대·정책·희망』.
- _____ (2002), 『한국노총 50년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_____ (2004), 『노동자가 세상을 바꾼다: 4·15총선 정당투표는 녹색사민당에!』.
- 한국사회민주당(2003), 『2003년 정기전당대회』(2003. 3. 27).
- 한종구(1989), 『노동조합법 3조 5항과 노동민주화』, 김용기·박승욱 엮음 (1989), 『한국노동운동논쟁사』, 현장문화사.
- 한지수(1989), 『반공이데올로기와 정치폭력』, 『실천문학』(1989 가을호).
- 허미화 역(1994). 『질적 사례연구법』, 양서원.
- 허상수(1989), 『최근사회변혁운동과 노동운동: 노동조합운동의 전개양상과 그 전망』,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엮음(1989), 『한국사회변혁운동과 노동운동』, 정암문화사.
-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1994), 『민주노총 건설에 대한 현총련 중앙위원회의 입장』 (9. 12).
- 현장 편집부(1986), 『어느 실천적 지식인의 자기 반성: 노동현장 속의 지식인 : 김문수』, 『노동의 현실과 노동운동』 6, 현장.
- 홍승태(1994). 『광주민중항쟁의 좌절과 진보적 노동운동의 모색』,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엮음,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 황광우(1992), 『지금은 고백을 할 때가 아니다』, 『길』 (1992. 7).
- _____ (2004). 『지금은 '70만 힘'을 이끌지 못하는 무능력을 고민할 때』,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2004. 9. 6.
- 황수경(1990), 『한국노총 어디로 가나』, 『말』, 제48호(6월호).
- 황의봉(1985), 『노동현장의 지식인들』, 『르뽀시대』 2.
- 황진성(1991), 『과학적 사회주의의 왜곡: 사회민주주의』, 『고대문화』 (제34집).
- 노동자의 힘 기관지, 『기관지 노동자의 힘』.
- 민주노동당 기관지, 『이론과 실천』.
-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
- 사회당 홈페이지, <http://www.sp.or.kr/>

영남노동운동연구소 기관지 『연대와 실천』 <http://www.ynlabor.co.kr/menu.html>.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기관지, 『현장에서 미래를』.

Alfusser(1997),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 『레닌과 철학』, 이진수 역, 백의.

Feuerbach(1992), 『기독교의 본질』, 강대성 역, 까치.

Foucault(1984),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New York: Pantheon Book.

Huntington(2004), 『미국』, 형선호 역, 김영사.

Jessop(2000),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국가의 제자리 찾기』, 유범상·김문귀 역, 한울.

Katsiaficas(2000), 『정치의 전복: 1986 이후의 자율적 사회운동』, 윤수중 역, 이후.

Macdonell, Diane(1992), 『담론이란 무엇인가』, 임상훈 역, 한울.

Marx(1989),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하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 남상일 역, 백산서당.

Poulantzas(1994), 『국가, 권력, 사회주의』, 박병영 역, 백의.